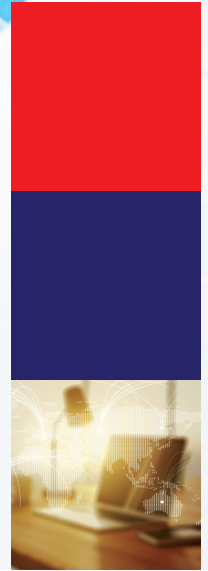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25-24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구경현
이상훈
한형민
예상준
홍성우
김남석
정재완
김혁황
이재호
윤지현
정민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구경현 · 이상훈 · 한형민 · 예상준 · 홍성우 · 김남석 ·
정재완 · 김혁황 · 이재호 · 윤지현 · 정민철

연구보고서 25-24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인 쇄 2026년 2월 20일
발 행 2026년 2월 27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름(02-2273-7012)

©20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20,000원
ISBN 978-89-322-1954-7 94320
978-89-322-1072-8(세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ESG 경영' 방침에 따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할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

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상·고위·실무·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체제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속런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간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페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

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0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32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37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38
가. 주요 산업별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의 변화	38
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소싱의 상관관계 분석	86
다. 소결	93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95
가.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 변화	95
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분석	113
다. 소결	120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122
가. 연구 배경 및 개요	122
나. 분석 자료	123
다. 산업별 · 해외투자 이력별 기업 특징	128
라. 실증적 추정 모형	133
마. 실증적 추정 결과	135
바. 소결	139

제3장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41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142

 가. 미중 전략경쟁의 추이 142

 나. 자국중심주의적 글로벌 통상 기조의 강화 186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193

 가. 개요 193

 나. 분석 자료 195

 다. 분석 결과 197

 라. 소결 285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286

 가. 개요 286

 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288

 다. 분석 결과 291

 라. 소결 317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321

 1. 기본 정책 방향 322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29

 가. 미국 329

 나. 중국 335

 다. 소결 341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344
가. 개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요성	344
나. 인도	347
다. 베트남	379
라. 인도네시아	416
마. 멕시코	444
바. 브라질	472
사. 소결	500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509

1. 산업정책	515
가.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515
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520
다.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	523
2. 대외·통상 정책	526
가.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526
나.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529
3. 국제개발협력 정책	532
가.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 ..	532
나.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	536
4. 소결	542

참고문헌 545

부록 569

Executive Summary 587



표 차례

표 2-1. 투입산출표 총산출액 상위 10개 부문	42
표 2-2. 투입산출표 수출액 상위 10개 부문	43
표 2-3. 통관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 부문	45
표 2-4.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기준 상위 30개국의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액	88
표 2-5.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국내 투입 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91
표 2-6.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국내 투입 간 산업 및 국가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92
표 2-7.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변화 결과 요약	94
표 2-8. 해외 진출 기업의 2023년 매입액 상위 10개 투자상대국 및 매입 비중	98
표 2-9. 해외 진출 기업의 2023년 매출액 상위 10개 투자상대국 및 매출 비중	99
표 2-10. 해외 진출 기업이 속한 2023년 매입액 상위 10개 제조업 및 매입 비중	106
표 2-11. 해외 진출 기업이 속한 2023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조업 및 매출 비중	107
표 2-12.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기준 상위 30개국에 대한 수출액 ·	115
표 2-13. 해외직접투자-수출액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118
표 2-14.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 국가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	119
표 2-15. 주요 제조업별 투자 총계 및 1위, 2위 대상국(2006~22년) ·	130
표 2-16. 2006~22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2022년 기준 특성	131

표 2-17. 2006~22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2022년 기준 성과	132
표 2-18.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성과: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	137
표 2-19. 기업의 규모, 해외직접투자 성과: 교차항을 도입한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	138
표 3-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 내용	151
표 3-2.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152
표 3-3. 바이든 행정부의 301조 관세 인상 대상 품목, 관세율 및 적용 시기	154
표 3-4. 2025년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	158
표 3-5. 중국의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161
표 3-6. OBBBA 제정에 따라 정의된 ‘금지된 외국 기관’의 범위 ...	164
표 3-7. 미중 산업 및 기술 전략 비교	165
표 3-8.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171
표 3-9. 미국의 행정명령(EO 14105)에 따른 대중국 투자 규제의 주요 내용	175
표 3-10. ‘미국 우선 투자정책(AFIP)’ 각서의 주요 내용	176
표 3-11. 미국의 대중국 리스트 기반 규제	183
표 3-12. 중국의 리스트 기반 규제 조치 및 특징	185
표 3-13.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산업정책 비교	189
표 3-14. 주요국별 대미 무역합의의 주요 내용	191
표 3-15.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유출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동차 산업(2013~24년)	222
표 3-16.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동차 산업(2013~24년)	224

표 3-17.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가전(2013~24년)	233
표 3-18.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가전(2013~24년)	234
표 3-19.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반도체(2013~24년)	242
표 3-20.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반도체(2013~24년)	244
표 3-21.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철강·금속(2013~24년)	252
표 3-22.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철강·금속(2013~24년)	254
표 3-23.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조선(2013~24년)	262
표 3-24.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조선(2013~24년)	263
표 3-25.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석유·화학(2013~24년)	269
표 3-26.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석유·화학(2013~24년)	270
표 3-27.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바이오, 의약품(2013~24년)	277
표 3-28.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진수 추이: 바이오·의약품(2013~24년)	279
표 3-29.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90

표 4-1. 인도의 산업별 GDP 비중	350
표 4-2. 인도의 산업별 고용 비중	351
표 4-3. 인도의 기본 인프라 국제경쟁력 순위: 인도 vs. 한국	353
표 4-4. 인도의 상위 수출 품목	354
표 4-5. 인도의 상위 수입 품목	355
표 4-6. 인도의 상위 수출 대상국	356
표 4-7. 인도의 상위 수입 대상국	357
표 4-8. 인도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358
표 4-9.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359
표 4-10.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360
표 4-11. 인도의 PLI 예산 배정액	364
표 4-12. 인도 부처별 예산 배정액	367
표 4-13.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인도 ...	378
표 4-14. 베트남의 산업별 GDP 비중	383
표 4-15.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비중	384
표 4-16. 베트남의 제조업 세부 분야별 고용 비중	385
표 4-17. WEF 인프라 분야 비교: 베트남, 동아시아 주요국 (2019년 기준)	386
표 4-18. 베트남의 상위 수출 품목	388
표 4-19. 베트남의 상위 수입 품목	389
표 4-20.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	390
표 4-21.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	390
표 4-22. 베트남의 최상위 4대 수출입 대상국별 수출입 품목 및 비중 추이	392

표 4-23. 베트남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393
표 4-24.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394
표 4-25.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396
표 4-26. 미중 통상마찰 이후 베트남으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 및 중국 기업(2016~24년)	397
표 4-27. 삼성과 LG의 탈중국 · 베트남으로의 생산라인 이관 사례 ..	398
표 4-28. 미국과 EU 주요 제조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 (2020~24년)	399
표 4-29.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 로드맵	402
표 4-30. 베트남의 환경 규제 주요 내용(2024년 기준)	405
표 4-31.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베트남 ..	411
표 4-32.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GDP 비중	419
표 4-33.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 GDP 비중	420
표 4-34.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고용 비중	421
표 4-35. 기본 인프라 국제경쟁력 순위: 인도네시아 vs. 한국	422
표 4-36. 인도네시아의 상위 수출 품목	423
표 4-37. 인도네시아의 상위 수입 품목	423
표 4-38.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425
표 4-39.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	426
표 4-40. 인도네시아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426
표 4-41.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428
표 4-42.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429
표 4-43. Making Indonesia 4.0의 7대 전략 산업별 주요 정책 내용	432

표 4-44.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인도네시아	444
표 4-45. 멕시코의 산업별 GDP 비중	448
표 4-46. 멕시코의 산업별 고용 비중	449
표 4-47. 기본 인프라 관련 국제경쟁력 순위: 멕시코 vs. 한국	450
표 4-48. 멕시코의 상위 수출 품목	451
표 4-49. 멕시코의 상위 수입 품목	452
표 4-50. 멕시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	453
표 4-51. 멕시코의 주요 수입 대상국	453
표 4-52. 멕시코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455
표 4-53.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456
표 4-54.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457
표 4-55.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세부 제조업별	458
표 4-56. 중국기업의 대멕시코 투자	459
표 4-57. 플랜 멕시코: 주요 전략 산업별 내용	461
표 4-58.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멕시코 ..	471
표 4-59. 브라질의 산업별 GDP 비중	475
표 4-60. 브라질의 산업별 고용 비중	476
표 4-61. 기본 인프라 관련 국제경쟁력 순위: 브라질 vs. 한국	477
표 4-62. 브라질의 상위 수출 품목	478
표 4-63. 브라질의 상위 수입 품목	479
표 4-64. 브라질의 주요 수출 대상국	480
표 4-65. 브라질의 주요 수입 대상국	481
표 4-66. 브라질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482
표 4-67.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483

표 4-68.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484
표 4-69. 브라질의 소버린 계획	487
표 4-70. 브라질 신산업정책 미션과 목표	488
표 4-71.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브라질	499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의 주요 산업 선정	46
그림 2-2. 반도체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48
그림 2-3. 반도체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49
그림 2-4.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50
그림 2-5. 반도체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51
그림 2-6. 통신기기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53
그림 2-7. 통신기기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54
그림 2-8. 통신기기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55
그림 2-9. 통신기기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56
그림 2-10.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57
그림 2-11.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59
그림 2-12. 자동차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60
그림 2-13. 자동차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61
그림 2-14. 자동차부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62
그림 2-15. 자동차부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63
그림 2-16. 자동차부품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64
그림 2-17. 자동차부품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65
그림 2-18. 석유정제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66
그림 2-19. 석유정제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67
그림 2-20. 석유정제품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70

그림 2-21. 석유정제품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71
그림 2-22. 화학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72
그림 2-23. 화학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73
그림 2-24. 화학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74
그림 2-25. 화학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75
그림 2-26. 1차철강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76
그림 2-27. 1차철강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78
그림 2-28. 1차철강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79
그림 2-29. 1차철강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80
그림 2-30. 선박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81
그림 2-31. 선박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83
그림 2-32. 선박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84
그림 2-33. 선박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85
그림 2-34.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해외 중간재 투입액 간의 산점도	90
그림 2-35.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의 국가별 매입 및 매출 비중 구조 ..	102
그림 2-36. 한국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산업별 매입 및 매출 비중 구조	110
그림 2-37.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수출액 간의 산점도	117
그림 2-38. 기업활동조사 설문 내 연도별 해외투자 기업 수 (2006~22년)	125
그림 2-39. 기업활동조사 설문 내 상위 5개 산업별 · 연도별 해외투자 기업 수(2006~22년)	126

그림 2-40. 기업활동조사 설문 내 상위 5개국별 · 연도별 투자 기업 수 추이(2006~22년)	127
그림 3-1.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율과 대세계 관세율의 추이	156
그림 3-2. 산업정책 도입 건수 추이(2009~23년)	187
그림 3-3. 정책 유형별 산업정책 도입 건수 추이(2017~23년)	188
그림 3-4.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추이(2010~24년)	198
그림 3-5.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2010~24년)	198
그림 3-6. 투자 유형별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사업 건수 추이 (2010~24년)	199
그림 3-7. 투자 유형별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 (2010~24년)	199
그림 3-8.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202
그림 3-9. 지역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추이 (2010~24년)	203
그림 3-10. 지역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 (2010~24년)	204
그림 3-11.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추이 (2010~24년)	206
그림 3-12. 한국의 지역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2013~20년) ..	207
그림 3-13. 한국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국가 및 지역 (2021~24년)	208
그림 3-14. 한국의 지역별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3~20년)	209
그림 3-15.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국가 및 지역 (2021~24년)	210

그림 3-16. 한국의 지역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211
그림 3-17.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	213
그림 3-18.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	214
그림 3-1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	215
그림 3-20. 한국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2013~16년)	216
그림 3-21. 한국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2017~20년)	217
그림 3-22. 한국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2021~24년)	218
그림 3-23. 자동차 산업의 그린필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220
그림 3-24.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자동차	226
그림 3-25.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자동차	227
그림 3-26.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유출 추이 (2017~24): 자동차	228
그림 3-27. 가전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 (2010~24년)	231
그림 3-28.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가전	235
그림 3-2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가전	236

그림 3-30.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7~24년): 가전	238
그림 3-31.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 (2010~24년)	240
그림 3-32.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반도체	245
그림 3-33.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반도체	246
그림 3-34.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7~24년): 반도체	248
그림 3-35. 철강·금속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251
그림 3-36.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철강·금속	255
그림 3-37.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철강·금속	256
그림 3-38.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2017~24년): 철강·금속	257
그림 3-39. 조선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 (2010~24년)	260
그림 3-40.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조선	264
그림 3-41.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조선	265

그림 3-42.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조선	266
그림 3-43.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267
그림 3-44.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석유·화학	271
그림 3-45.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석유·화학	272
그림 3-46.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0~24년): 석유·화학	273
그림 3-47.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276
그림 3-48.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바이오·의약품	280
그림 3-4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바이오·의약품	281
그림 3-50.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 (2010~24년): 바이오·의약품	284
그림 3-5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	292
그림 3-52.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1순위)	294
그림 3-5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2순위)	295
그림 3-54. 트럼프 등장 이전과 이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이 달라졌는가	296

그림 3-55. 과거(트럼프 이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1순위)	298
그림 3-56. 과거(트럼프 이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2순위)	299
그림 3-57.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1순위)	301
그림 3-58.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2순위)	302
그림 3-59. 현재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기회 요인(1순위)	305
그림 3-60. 현재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기회 요인(2순위)	306
그림 3-6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 중요 지역 · 국가	307
그림 3-62.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확대 우선순위 국가 및 선정 이유 ·	310
그림 3-6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	316
그림 4-1. 인도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2년 기준)	372
그림 4-2. 베트남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3년 기준)	408
그림 4-3.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409
그림 4-4.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427
그림 4-5.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기본 개념도	431
그림 4-6.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3년 기준) ·	437
그림 4-7. FTA TBT 종합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개요	443
그림 4-8.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대멕시코 수입액 및 무역수지 ·	445
그림 4-9. 멕시코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3년 기준)	465
그림 5-1. 멕시코의 중국산 상품 수입 변화	527
그림 5-2.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내 정책 방향 ·	543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현대 자동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 사례	230
글상자 3-2. 삼성의 멕시코 내 가전제품 생산시설 설립 사례	238
글상자 3-3.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 사례	248
글상자 3-4. 세아 CSS의 미국 내 철강 생산시설 설립 사례	259
글상자 3-5. LG 화학의 중국 내 라텍스 생산시설 설립 사례	275
글상자 3-6. Matica Bio의 미국 내 라텍스 생산시설 설립 사례	283
글상자 4-1. 플랜 멕시코의 주요 목표	46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등장은 세계통상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America First!”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인상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에 맺었던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개정을 주도하고 WTO를 강하게 비판하며 WTO 기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하고 과격한 조치가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왔던 세계 자유무역질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온전히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2017년 이후 세계통상질서는 분명히 상당한 방향 전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중심주의적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접근 방식은 바뀌었을지언정 여전히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트럼프 집권 시기 부과되었던 대중국 관세가 지속되었고, 가치 동맹 강화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골자로 하는 대중국 견제 및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은 더 정교하게 심화·발전되었다. 2025년 시작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 1기 시절 대외통상정책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하며 중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를 무기 삼아 전례 없는 형태의 양자적 통상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적인 대외통상정책 기조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와의 갈등과 긴장을 촉발했고 자국중심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산업통상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즉 1995년 WTO 출범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었던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화 기조는 2017년 이후 노골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그로부터 파생된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적인 산업통상정책의 확대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는 자유무역 질서하에서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며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시켜왔던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다가왔다. 특히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이 변곡점이 단순한 조정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협에 빠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를 고조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 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통상 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앞서 밝힌 4개의 세부 연구 목적에 대응하여 본 연구의 본문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별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

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이해한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총론을 제시하고, 제시된 총론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각론을 모색한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등장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글로벌 공급망 관련 연구의 흐름과 관련이 깊다.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국가 간 네트워크라고 폭넓게 정의한다면,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혹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성 및 회복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Baldwin, Freeman, and Theodorakopoulos(2023)은 OECD의 ICIO(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을 이용하여 미국의 17개 제조 부문에 대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해외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95년 대비 2018년 미국 제조업의 해외 제조업 의존도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설명됨을 보여 주면서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이 내포하는 위험성을 시사했다. Alfaro and Chor(2023) 또한 5년(2017~22년) 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중국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이후 미국 내 중국제품의 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베트남과 멕시코 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보였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점유율은 줄었지만, 베트남과 멕시코에서의 중국 제품 수입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IMF(2023)은 러-우 전쟁 및 지정학적 긴장의 악화가 원자재 시장의 파편화를 야기할 가능성을 분석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분절화는 원자재 가격의 고변동성으로 이어져 특히 저소득 국가에 높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아울러 에너지 전환 비용을 높임으로써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WTO(2023)은 다양한 실증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는 경제안보와 안정성을 해치며 특히 가난한 나라의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친환경 기술 확산 등을 방해함을 보였다. 따라서 더 깊은 수준의 탈집중화되고 다각화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통한 맞춤형 재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앞선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인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 각 개별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통상 정책,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본 절에서는 한국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가 2000년대 이후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해외 소싱 구조 형성에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얼마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분석한다. 이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의 기여를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수급 구조 효율화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주요 산업별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의 변화

1) 주요 산업 선정

본 항에서는 한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상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재화가 어느 국가 및 산업으로부터 유입되었는지를 연도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기업의 매입 자료, 중간재 수출입, 국제산업연관표(MRIO: Multi-Regional Input Output) 등을 이용하여 일국의 해외 소싱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이수영 외(2018)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기업활동조사의 원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인소싱(Global Insourcing)과 해외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 금액을 추계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매입 자료는 어느 국가로부터 어떤 품목을 매입하였는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해외 소싱 금액을 국가별 및 산업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한국은행(2023)은 기업자료인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무역통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의 생산

현황 및 교역 흐름을 정리하였으나 해외 소싱 구조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김영귀 외(2011)은 가공 단계별 분류코드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이용하여 한국의 중간재 교역액을 국가별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있다. 이 중 수입된 중간재는 국내 생산에 사용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해외 소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수입된 중간재 모두가 국내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해외 소싱을 과대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Miroudot, Lanz, and Ragoussis(2009)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즉 상기 연구는 국가별 투입산출표를 통해 계산한 투입 비율과 국가 간 중간재 수입액을 이용하여 일국의 해외 소싱 구조를 파악하였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에도 중간재에 포함된 부가가치가 이중계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Wang, Wei, and Zhu(2013)이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일국의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를 국가별 및 산업별로 분해함에 따라 수출품에 이용된 해외 소싱 구조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정민현 외(2024)는 Wang, Wei, and Zhu(2013)의 방법으로 Eora의 MRIO를 분해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수출에 포함된 국가별 및 산업별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물론 Wang, Wei, and Zhu(2013)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제산업연관표 내 중간투입 행렬을 이용하여 일국이 국내 생산을 위해 사용한 국가별 및 산업별 투입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Hasebe and Shrestha(2005)와 이흥식, 강준구(2010) 역시 상기 방법을 이용하여 일국의 해외 소싱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가 중복으로 계산된다는 문제와 국제산업연관표의 산업이 대분류로 구분되어 있어 세부 산업에 대한 생산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첫째 문제는 Wang, Wei, and Zhu(2013)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둘째 문제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이상 여전히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서 작성·발표하는 MRIO는 제3.1차 국제표준산업 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 3.1)를 이용하여 산업을 총 3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14개 산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 ADB MRIO를 이용하여 자동차 산업(D3410)의 생산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D34)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D35)이 모두 포함된 운송장비(C15) 산업을 이용해야 한다.¹⁾ 즉 ADB MRIO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확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Eora의 MRIO(총 26개 산업) 및 OECD의 ICIO (Inter-Country Input-Output, 총 45개 산업) 등 다른 MRIO를 이용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발표하는 2005년(403부문), 2010년(384부문), 2015년(381부문), 2020년(380부문)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한국의 국가별·품목별 수입 자료를 연계하여 국내에서 상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수입재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Miroudot, Lanz, and Ragoussis(2009)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항에서는 국내에서 상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수입재 투입 단위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 투입산출표 내 총거래표, 수입거래표, 국산거래표 등을 모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한편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투입산출표는 실지조사를 통해 작성된 실측표로, 이를 바탕으로 내생 부문을 연장하는 간접 추정 방식을 활용한 이외 연도의 연장표²⁾보다 산업 구조 변화를 잘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본 항에서는 부문 간 의존관계를 분석할 것이므로 생산자가 상품을 출하하는 가격으로 작성된 생산자가격 기준 투입산출표를 이용한다.³⁾

1) 괄호 안은 ISIC Rev. 3.1 및 ADB MRIO의 산업 구분 코드이다.

2) 한국은행(2014a), p. 29.

3) 위의 자료, pp. 19~20.

앞에서 설명한 한국은행의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는 연도마다 부문 분류가 다르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준연도별 「부문 분류 비교표」를 이용하여 부문을 통합하였다.⁴⁾ 부문 통합 결과 농림업 3개, 수산업 2개, 광업 6개, 제조업 63개, 서비스업 47개로 총 121개 부문으로 통합되었다. 본 항에서는 교역되는 상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을 제외한 74개 부문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도출하기로 한다.⁵⁾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의 총거래표에 기록된 총산출액(=총투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점별로 생산이 많은 부문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상위 10개 부문이 상품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049) 부문은 2010년 이후 전체 상품 생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활발한 부문이다. 자동차(067) 부문은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068) 부문은 자동차 부문의 활발한 생산에 따라 생산이 많은 상위 부문에 꾸준히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제품(033) 및 화학(034) 부문은 생산이 많은 상위 산업에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1차철강(044) 부문은 2005년에 생산이 가장 많은 부문이었으나 최근에는 5위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통신기기(051) 부문은 과거에는 생산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생산이 많은 상위 부문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달리 플라스틱(039) 부문은 최근 생산이 많은 상위 부문으로 이동하였다.

총거래표에 기록된 수출액을 이용하여 시점별로 수출이 많은 상위 10개 부문을 살펴보았다.⁶⁾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부문은 총산출액에서 살펴본 상위 10개 부문과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수출액 기준에서도 시점별로 수출이 많은

4) 2005~10년 부문 분류 비교표는 한국은행(2014b)에 포함된 CD-ROM에서, 2010~15년 부문 분류 비교표는 한국은행(2019)에 포함된 CD-ROM에서, 2015~20년 부문 분류 비교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검색일: 2025. 6. 5.)에서 구하였다.

5) 서비스업의 경우 국가별·부문별 수입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수입재의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국산거래표에도 수출액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국산품의 수출액으로, 이후 비교할 통관 기준 수출액과 정의가 달라 총거래표에 기록된 수출액을 이용하였다.

표 2-1. 투입산출표 총산출액 상위 10개 부문

(단위: 조 원, %)

순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부문	생산액	비율	부문	생산액	비율	부문	생산액	비율	부문	생산액	비율
1	1차철강	97	9.6	반도체	184	11.2	반도체	170	9.9	반도체	206	11.2
2	반도체	85	8.5	1차철강	162	9.9	자동차	114	6.7	자동차	114	6.2
3	석유정제품	74	7.4	석유정제품	128	7.6	석유정제품	110	6.4	화학	111	6.1
4	화학	68	6.8	화학	119	7.2	화학	107	6.2	석유정제품	97	5.3
5	자동차	58	5.7	자동차	85	5.2	1차철강	84	4.9	1차철강	89	4.8
6	자동차부품	48	4.8	자동차부품	66	4.0	자동차부품	83	4.8	자동차부품	80	4.4
7	통신기기	41	4.1	기타금속	58	3.5	기타금속	73	4.3	기타금속	78	4.3
8	기타금속	36	3.5	선박	57	3.5	일반기계	63	3.7	일반기계	72	3.9
9	일반기계	32	3.2	일반기계	56	3.4	플라스틱	63	3.7	플라스틱	70	3.8
10	기타식품	31	3.1	통신기기	55	3.4	통신기기	60	3.5	기타식품	66	3.6
	소계	570	56.8		970	58.9		926	54.1		981	53.6
	상품 계	1,004	100.0		1,501	100.0		1,711	100.0		1,829	100.0

주: 1) 음영은 시점별 상위 10개 부문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부문임.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기타식품**은 정곡(0831), 제분(0832), 원당(0841), 정제당(0842), 전분 및 당류(0843), 떡, 빵 및 과자류(0851), 면류(0852),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0861), 커피 및 차류(0872),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0873), 기타 식료품(0879), 사료(0880)로, **석유정제품**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용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제품(1639)으로, **화학**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합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1차제품(231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2391), 포장용 플라스틱제품(2392), 운송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2393), 기타 플라스틱제품(2399)으로,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기타금속**은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3021), 금속압형제품(3022), 금속처리(3031), 금속처리 가공품(3032), 가정용 금속제품(3091), 부착용 금속제품(3092), 공구류(3093), 나사 및 철선제품(3094), 금속포장용기(3095), 기타 금속제품(309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로, **반도체**는 개별소자(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통신기기**는 유선통신기기(3511), 이동전화기(3512),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3519)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작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자동차**는 승용차(4011), 전기승용차(4012), 버스(4013), 트럭(4014), 자동차용 엔진(4031)으로, **자동차부품**은 특장차(4021),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4022), 자동차 부분품(4032)으로, **선박**은 강철제 선박(4101), 기타 선박(4102), 선박 수리 및 부분품(4103)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2-2. 투입산출표 수출액 상위 10개 부문

(단위: 조 원, %)

순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부문	수출액	비율	부문	수출액	비율	부문	수출액	비율	부문	수출액	비율
1	반도체	62	21.2	반도체	120	22.2	반도체	121	19.9	반도체	131	22.4
2	자동차	30	10.4	선박	51	9.4	자동차	57	9.4	화학	52	8.9
3	통신기기	27	9.4	화학	46	8.5	화학	50	8.2	자동차	49	8.3
4	화학	23	7.9	자동차	41	7.6	선박	46	7.5	석유정제품	33	5.6
5	선박	20	6.8	석유정제품	41	7.5	석유정제품	40	6.6	선박	26	4.5
6	석유정제품	19	6.4	통신기기	32	6.0	통신기기	34	5.6	1차철강	26	4.4
7	1차철강	14	5.0	1차철강	28	5.2	1차철강	26	4.3	일반기계	26	4.4
8	자동차부품	8	2.8	자동차부품	21	3.9	자동차부품	24	3.9	통신기기	24	4.1
9	일반기계	7	2.5	일반기계	17	3.2	일반기계	23	3.8	특수기계	21	3.6
10	특수기계	6	2.1	1차비철	13	2.5	특수기계	17	2.9	기타화학	16	2.8
	소계	216	74.4		412	75.9		439	72.1		405	69.0
	상품 계	290	100.0		543	100.0		609	100.0		587	100.0

주: 1) 음영은 시점별 상위 10개 부문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부문임.

-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석유정제품**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물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품(1639)으로, **화학**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합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기타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2102), 도료(2211), 잉크(2212), 비누, 세제 및 치약(2221), 화장품(2222), 접착제 및 젤라틴(22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2292), 기타 화학제품(2299)으로,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1차비철**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3), 금은괴(281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동 1차제품(2821), 알루미늄 1차제품(2822),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2829)으로, **반도체**는 개별소자(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통신기기**는 유선통신기기(3511), 이동전화기(3512),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3519)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특수기계**는 농업용 기계(3911),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3912), 금형 및 주형(3930), 반도체 제조용 기계(394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3942), 음식료품 가공기계(3991), 섬유 및 의복가공 기계(3992), 산업용 로봇(3993), 제지 및 인쇄기계(399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3995)로, **자동차**는 승용차(4011), 전기승용차(4012), 버스(4013), 트럭(4014), 자동차용 엔진(4031)으로, **자동차부품**은 특장차(4021),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4022), 자동차 부품품(4032)으로, **선박**은 강철제 선박(4101), 기타 선박(4102), 선박 수리 및 부분품(4103)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상위 10개 부문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수출이 가장 많은 부문은 반도체(049) 부문이다. 반도체는 전체 상품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이 많은 부문이다. 석유정제품(033) 부문과 화학(034) 부문은 최근으로 올수록 수출 순위가 상승하는 주요 수출 부문이다. 자동차(067) 부문 역시 수출이 활발한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1차철강(044) 부문은 총산출액에서와 같이 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위 수출 부문으로 나타났다. 통신기기(051) 부문의 경우 순위가 하락하는 양상은 총산출액에서와 동일하나 2020년에도 주요 수출 산업에 포함된 것이 다른 점이다. 한편 수출에서는 자동차부품(068) 부문이 최근 상위 수출 부문에서 제외되었으며, 선박(069) 부문은 모든 시점에서 상위 수출 부문에 포함된 것이 총산출액에서와 다른 점이다.

투입산출표의 수출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계상되는 데 반해, 통관 기준 수출은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계상되므로 소유권 변동 없이 본국에서 제품으로 가공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과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등이 존재함에 따라 두 기준의 수출액이 차이 날 수 있다.⁷⁾ 이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IO-HS 품목분류 비교표」를 이용하여 부문별로 통관 기준 수출액을 구하였다.⁸⁾

통관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 부문은 투입산출표 수출액 상위 10개 부문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049) 부문이 수출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석유정제품(033)과 화학(034) 부문은 최근으로 올수록 수출 순위가 상승하는 수출 부문이다. 자동차(067), 자동차부품(068), 선박(069) 부문 모두 수출 상위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1차철강(044) 및 통신기기(051) 부문 역시 수출 상위 10개 부문에 포함되었다.

7) 한국은행(2024), pp. 170~173.

8) IO-HS 품목분류 비교표는 한국은행(2009)에 포함된 CD-ROM에서, 통관기준 수출액은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에서 구하였다.

표 2-3. 통관 기준 수출액 상위 10개 부문

(단위: 억 달러, %)

순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부문	수출액	비율	부문	수출액	비율	부문	수출액	비율	부문	수출액	비율
1	반도체	475	16.7	반도체	873	18.7	반도체	914	17.4	반도체	1,180	23.0
2	자동차	288	10.1	선박	468	10.0	자동차	448	8.5	화학	451	8.8
3	통신기기	286	10.1	화학	412	8.8	화학	447	8.5	자동차	377	7.4
4	화학	233	8.2	자동차	347	7.4	선박	385	7.3	석유정제품	249	4.9
5	선박	172	6.1	석유정제품	320	6.9	통신기기	351	6.7	통신기기	227	4.4
6	영상음향	167	5.9	통신기기	319	6.8	석유정제품	325	6.2	자동차부품	222	4.3
7	석유정제품	156	5.5	1차철강	244	5.2	자동차부품	298	5.7	1차철강	222	4.3
8	1차철강	143	5.0	자동차부품	216	4.6	1차철강	233	4.4	선박	187	3.7
9	자동차부품	96	3.4	1차비철	117	2.5	일반기계	157	3.0	일반기계	163	3.2
10	특수기계	67	2.3	특수기계	117	2.5	특수기계	118	2.2	기타화학	150	2.9
	소계	2,084	73.3		3,434	73.6		3,676	69.8		3,429	66.9
	상품계	2,844	100.0		4,664	100.0		5,268	100.0		5,1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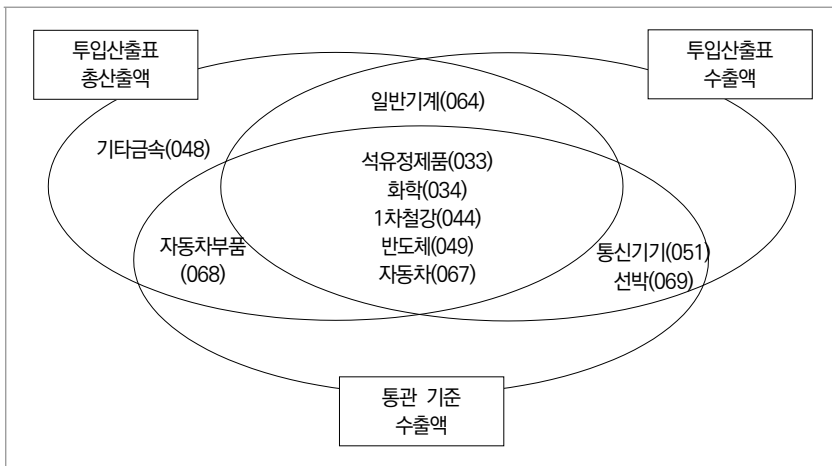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시점별 상위 10개 부문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부문임.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석유정제품**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용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품(1639)으로, **화학**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합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기타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2102), 도로(2211), 잉크(2212), 비누, 세제 및 치약(2221), 화장품(2222), 접착제 및 젤라틴(22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2292), 기타 화학제품(2299)으로,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1차비철**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3), 금은괴(281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동 1차제품(2821), 알루미늄 1차제품(2822),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2829)으로, **반도체**는 개별소자(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통신기기**는 유선통신기기(3511), 이동전화기(3512),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3519)로, **영상음향**은 TV(3521), 영상기기(3522), 오디오 및 음향기기(3523)으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특수기계**는 농업용 기계(3911),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3912), 금형 및 주형(3930), 반도체 제조용 기계(394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3942), 음식료품 가공기계(3991), 섬유 및 의복가공 기계(3992), 산업용 로봇(3993), 제지 및 인쇄기계(3994),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계(3995)로, **자동차**는 승용차(4011), 전기승용차(4012), 버스(4013), 트럭(4014), 자동차용 엔진(4031)으로, **자동차부품**은 특장차(4021),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4022), 자동차 부분품(4032)으로, **선박**은 강철제 선박(4101), 기타 선박(4102), 선박 수리 및 부분품(4103)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9)에 포함된 CD-ROM;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에서 살펴본 각 지표별 상위 10개 부문을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다. 이 중 두 개 지표 이상에서 상위 10개 부문에 포함된 산업 부문은 총 8개이다. 이를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5개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반도체(049)와 통신기기(051) 부문이 포함된 전기·전자 산업, 자동차(067)와 자동차부품(068) 부문이 포함된 자동차 산업, 석유정제품(033)과 화

그림 2-1. 한국의 주요 산업 선정



- 주: 1) 분석 시점 모두에서 상위 10개 부문에 모두 포함된 부문을 이용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석유정제품(033)**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용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제품(1639)으로, **화학(034)**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합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1차철강(044)**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제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 제품(2799)으로, **기타금속(048)**은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3021), 금속압형제품(3022), 금속처리(3031), 금속처리 가공품(3032), 가정용 금속제품(3091), 부착용 금속제품(3092), 공구류(3093), 나사 및 철선제품(3094), 금속포장 용기(3095), 기타 금속제품(309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3999)로, **반도체(049)**는 개별소재(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통신기기(051)**은 유선통신기기(3511), 이동전화기(3512),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3519)로, **일반기계(064)**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자동차(067)**는 승용차(4011), 전기승용차(4012), 버스(4013), 트럭(4014), 자동차용 엔진(4031)으로, **자동차부품(068)**은 특장차(4021),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4022), 자동차 부분품(4032)으로, **선박(069)**은 강철제 선박(4101), 기타 선박(4102), 선박 수리 및 부분품(4103)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표 2-1], [표 2-2], [표 2-3]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학(034) 부문이 포함된 석유화학 산업, 1차철강(044) 부문에 해당하는 철강 산업, 선박(069) 부문에 해당하는 조선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되었다.

본 항의 이하 절에서는 상기 5개 한국의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수입거래표와 UN Comtrade 수입액을 이용하여 국내 생산을 위해 어느 국가 및 산업의 재화를 많이 이용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전기·전자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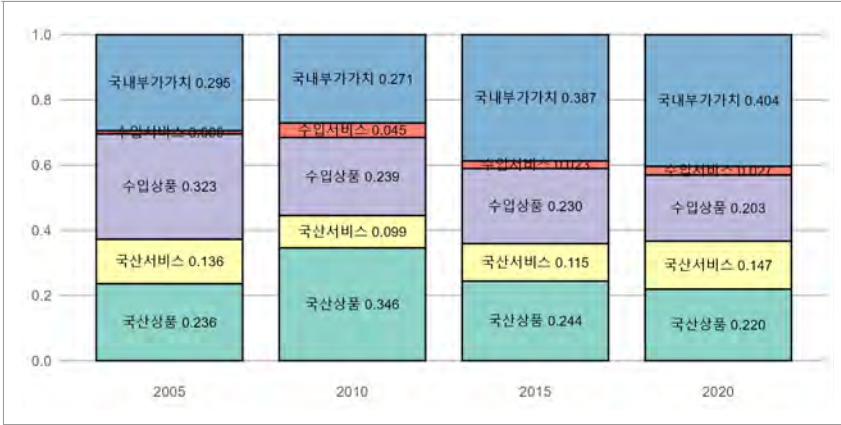
반도체 부문은 최근으로 올수록 국산재 및 수입재 상품의 투입 단위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5년에는 반도체 1단위 생산을 위해 국산재 상품 0.236단위, 수입재 상품 0.323단위가 필요했으나 2020년에는 국산재 상품 0.220단위, 수입재 상품 0.203단위로 투입 단위가 감소하였다. 특히 수입재 상품 투입은 동 기간 0.120단위 감소하여 국산재 상품(-0.017단위)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⁹⁾

반도체 1단위 생산을 위해 국산재 서비스 역시 많이 투입되고 있다. 2005년 0.136단위가 투입되었던 국산 서비스 재화는 2020년 0.147단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입 서비스 재화의 투입은 미미하다.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근으로 올수록 고부가가치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는 반도체 1단위 생산으로 0.295단위의 부가가치가 생산되었다면 2020년에는 0.404 단위의 부가가치가 생산되고 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꾸준히 투자한 영향으로 보인다.

9) 본문에 기술한 투입 단위의 증감은 반올림의 차이로 본문에 명시한 값의 증감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2-2. 반도체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반도체 부문 생산을 위해 어떤 수입재 상품을 많이 이용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2-3]에 의하면 2010년을 제외하고 자기 부문인 반도체 부문의 투입이 총수입재 상품 투입의 60%를 초과하며 가장 많았다.¹⁰⁾ 다만 반도체 부문 투입 단위는 2005년 0.209단위에서 2020년 0.127단위로 0.082단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기타화학과 플라스틱 부문의 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재 투입 상품이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지를 살펴본 [그림 2-4]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 부문 생산에 사용된 수입재 상품의 국가별 비율을 살펴본 [그림 2-5]의 1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2005년에는 반도체 생산을 위해 사용된 총수입재 상품의 15.4%가 중

10) [그림 2-2]에 의하면 반도체 1단위 생산을 위한 수입재 상품 투입은 2005년 0.323단위이며, [그림 2-3]에 의하면 이 중 0.209단위가 반도체 부문의 투입이므로 $\frac{0.209}{0.323} (=64.6\%)$ 만큼이 반도체의 비율이 된다. 반도체 부문의 비율은 2010년 49.2%, 2015년 61.9%, 2020년 6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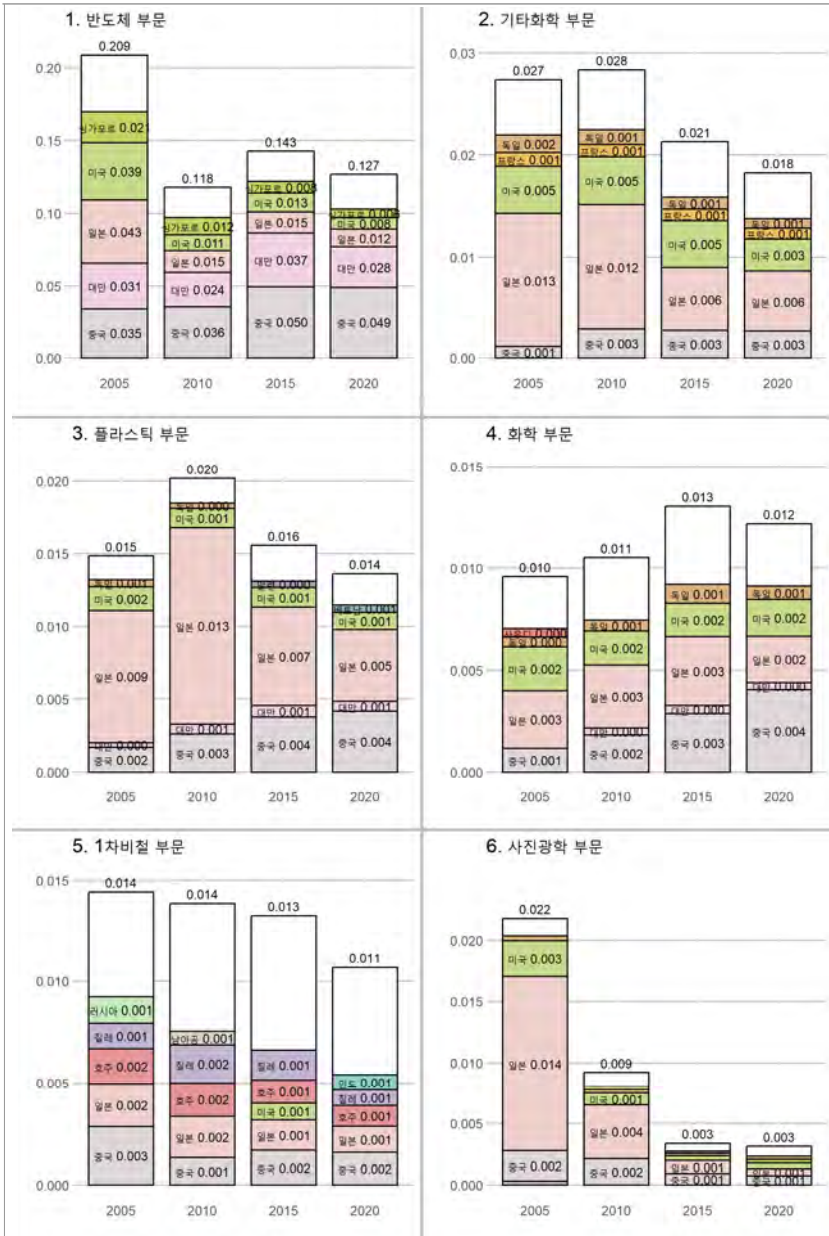
그림 2-3. 반도체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화학**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학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학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기타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2102), 도료(2211), 잉크(2212), 비누, 세제 및 치약(2221), 화장품(2222), 접착제 및 젤라틴(22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2292), 기타 화학제품(2299)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1차제품(231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2391), 포장용 플라스틱제품(2392), 운송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2393), 기타 플라스틱제품(2399)으로, **유리**는 판유리 및 1차 유리제품(2501), 전자기기용 유리제품(2502), 산업용 유리제품(전자기기용 제외)(2503), 기타 유리제품(2509)으로, **1차비철**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3), 금은과(281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동 1차제품(2821), 알루미늄 1차제품(2822),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2829)으로, **반도체**는 개별소자(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교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사진광학**은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3691)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4.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5. 반도체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이 비율은 2020년 33.9%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본 비율은 동 기간 29.2%에서 15.0%로, 미국 비율은 16.9%에서 8.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¹¹⁾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에서는 2006년부터 D램을, 충칭 공장에서는 2014년부터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낸드플래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¹²⁾

반도체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국 모두에서 반도체 부문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반도체 부문이 60%를 초과할 정도로 많았다(그림 2-5 참고). 이외에 일본으로부터는 기타화학과 플라스틱 부문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는 기타화학과 화학 부문의 수입이 활발하였다.

통신기기는 최근으로 올수록 국산재 상품을 수입재 상품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기기 1단위 생산을 위해 사용한 국산재 상품 투입은 2005년 0.339단위에서 2020년 0.197단위로 감소한 반면 수입재 상품 투입은 동 기간 0.311단위에서 0.400단위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국산재 및 수입재 서비스와 국내부가가치는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가진다.

[그림 2-7]에 의하면 통신기기 생산을 위한 수입재 상품의 투입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통신기기의 투입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수입재 상품 투입 중 반도체 투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수의 분석 연도에서 50%를 초과할 정도로 활발하다.¹³⁾ 수입재 통신기기 투입은 2005년 0.046단위, 2010년 0.053단위에서 2015년 0.121단위, 2020년

11)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본격 가동」(2014. 5. 9.)(검색일: 2025. 11. 17.) 참고.

12)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확장팩(C2F) 준공」(2019. 4. 18.); 「SK하이닉스, 중국 충칭 후공정 생산법인 준공」(2014. 9. 2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1. 17.) 참고.

13) [그림 2-6] 및 [그림 2-7]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반도체 비율은 2005년 72.7%, 2010년 61.1%, 2015년 48.6%, 2020년 50.4%로 나타났다.

그림 2-6. 통신기기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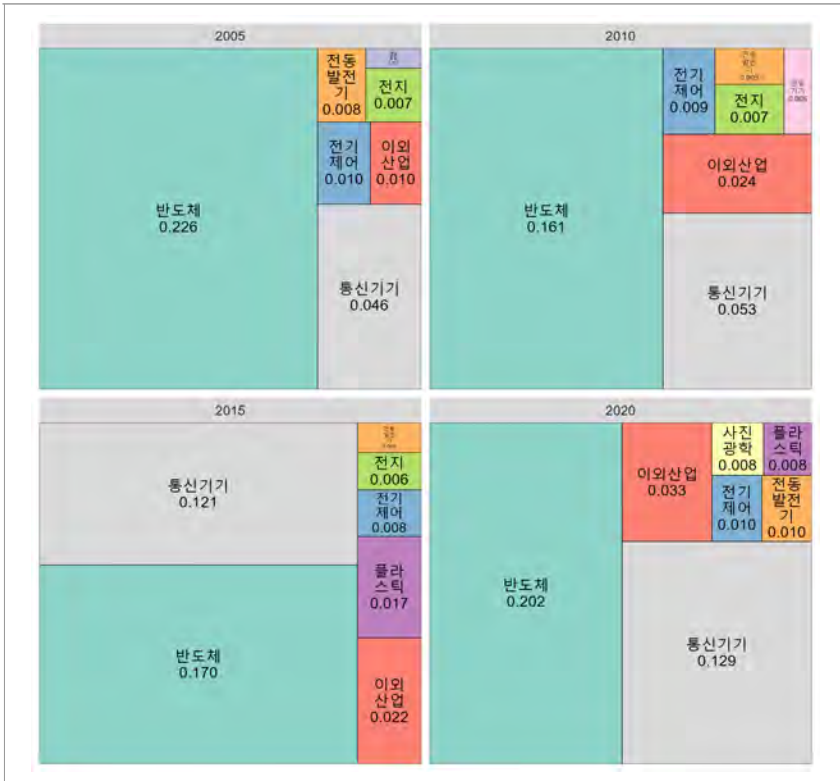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0.129단위로 변화해 2015년 통신기기 투입은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통신기기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수입재는 [그림 2-8]과 같이 중국, 미국,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일부 부문에서는 대만, 베트남, 독일이 주요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부문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입은 증가하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투입은 감소하였다. 가장 많이 투입되는 수입재 상품인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기제어, 전동발전기, 사진광학, 플라스틱 등에서 중국의 투입 단위는 대체로 증가하고, 일본과 미국의 투입 단위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9]의 1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투입 비율은 2020년 41.7%까지 증가한 반면 일본과 미국의 비율은 각각 8.6%와 5.8%로 감소하였다. 통신기기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재 통신기기가 최근 베트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수입재 상품 중 베트남의 비율이 2020년 13.4%로 증가하였다. 이

그림 2-7. 통신기기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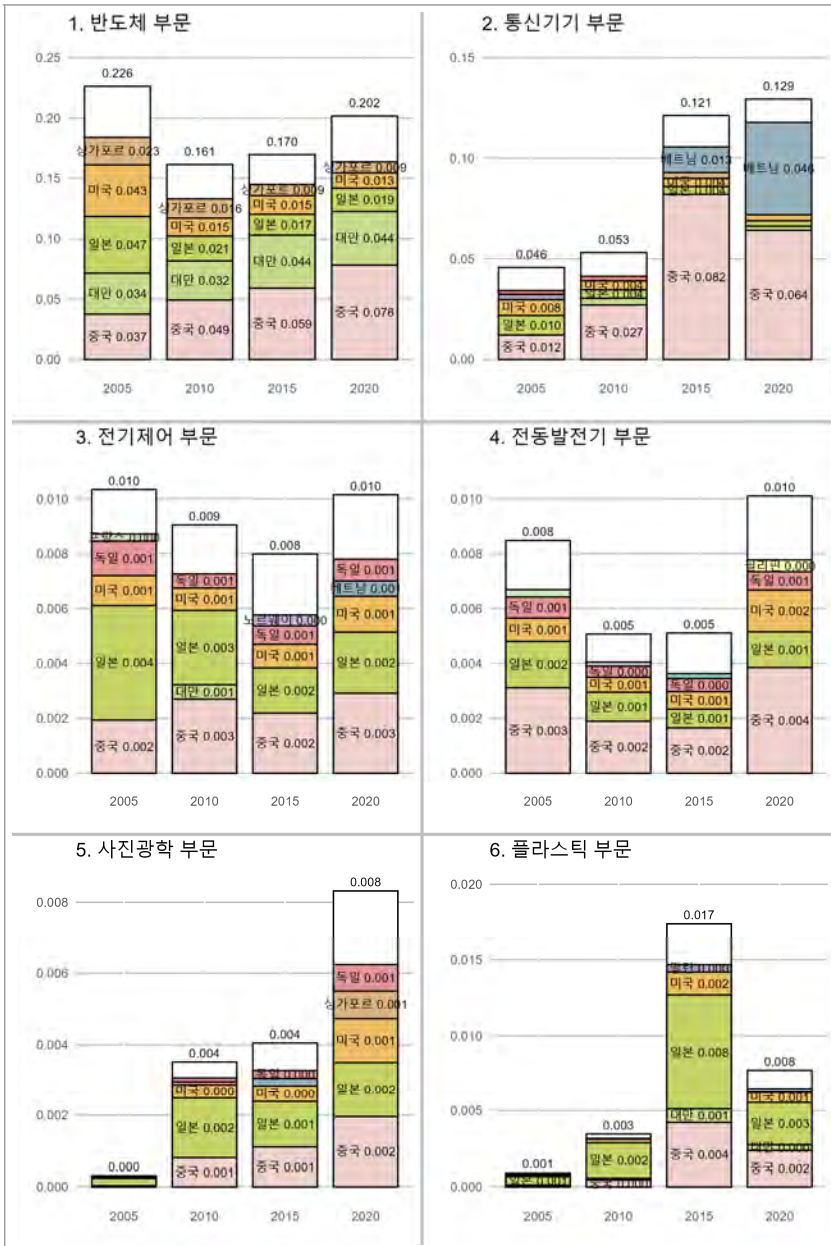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1차제품(231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2391), 포장용 플라스틱제품(2392), 운송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2393), 기타 플라스틱제품(2399)으로, **반도체**는 개별소자(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통신기기**는 유선통신기기(3511), 이동전화기(3512), 기타 무선통신장비 및 방송장비(3519)로, **영상음향**은 TV(3521), 영상기기(3522), 오디오 및 음향기기(3523)로, **정밀기기**는 측정 및 분석기기(3612),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3613)로, **사진광학**은 사진장비 및 광학기(3691)로, **전동발전기**는 발전기 및 전동기(3710), 변압기(3721), 전기변환장치(3722)로, **전기제어**는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37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3724)으로, **전자**는 전자(3730)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8. 통신기기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9. 통신기기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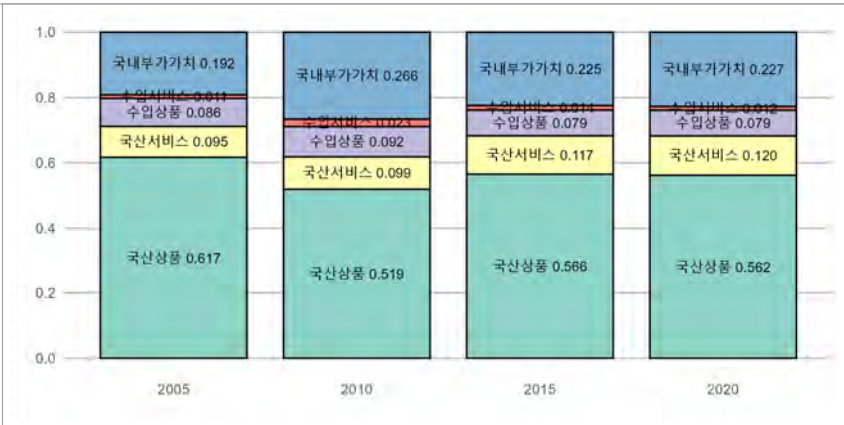
는 삼성전자가 2008년 베트남의 박닌에 휴대폰 공장을 설립하고, 2014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을 생산하는 타이응웬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¹⁴⁾

한편 통신기기를 주로 공급하는 베트남을 제외하면, 통신기기 생산에 반도체 부문이 가장 많이 투입됨에 따라 주요 수입국 다수에서 반도체 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문은 국산재 상품 투입이 많은 산업으로 수입재 상품 투입 단위가 작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미미하기는 하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 시 국산재 상품 0.562단위, 수입재 상품 0.079단위가 투입될 정도로 수입재 상품 투입은 적다.

그림 2-10.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4) 지 혜, 김경돈, 유하영(2025), p. 52 참고.

수입재 상품은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투입이 가장 많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자동차 부문의 투입은 증가하였다. [그림 2-11]에 의하면 2005년과 2010년 0.040단위 수준이던 수입재 자동차부품 투입은 2015년과 2020년에 0.020단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수입재 자동차 투입은 동 기간 0.005단위 수준에서 0.011단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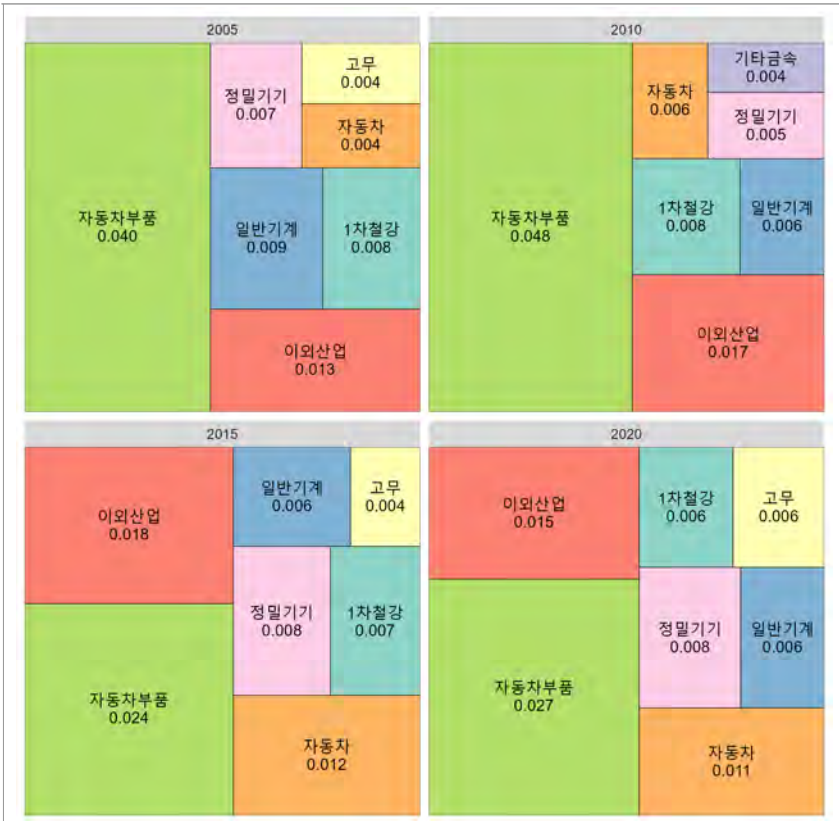
[그림 2-12]에 의하면 자동차부품의 투입 단위는 중국에서 주로 증가하였으며, 일본, 독일, 미국에서 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의 투입 단위는 독일과 미국에서 증가가 관측되었다. 이외에 정밀기기, 일반기계, 1차철강, 고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중국의 투입 단위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일본의 투입 단위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3]의 1에 의하면 중국의 비율은 2005년 10.4%에서 2020년 27.0%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비율은 동 기간 32.2%에서 15.3%로 크게 감소하였다. 독일과 미국의 비율 역시 동 기간 각각 16.4%에서 13.9%, 14.0%에서 10.9%로 감소하였으나 감소 폭은 일본보다 크지 않으며, 2010년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그림 2-12]의 1과 2 및 [그림 2-13]의 4와 5에서와 같이 독일과 미국의 경우 자동차부품 투입 감소에서 나타난 영향이 자동차 투입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 부문 역시 자동차 부문과 유사하게 자동차부품 생산에 국산재 상품을 많이 사용하고 수입재 상품을 적게 사용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2020년 국산재 상품 투입은 0.563단위로 2005년(0.629단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산재 서비스 투입(0.079단위 → 0.140단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부품의 수입재 상품 투입은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5]에 의하면 자동차부품 수입재 상품 투입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1차비철 등이 주요 투입 부문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각 부문의 투입 단위는 이외 산업의 투입 단위보다 작다.

그림 2-11. 자동차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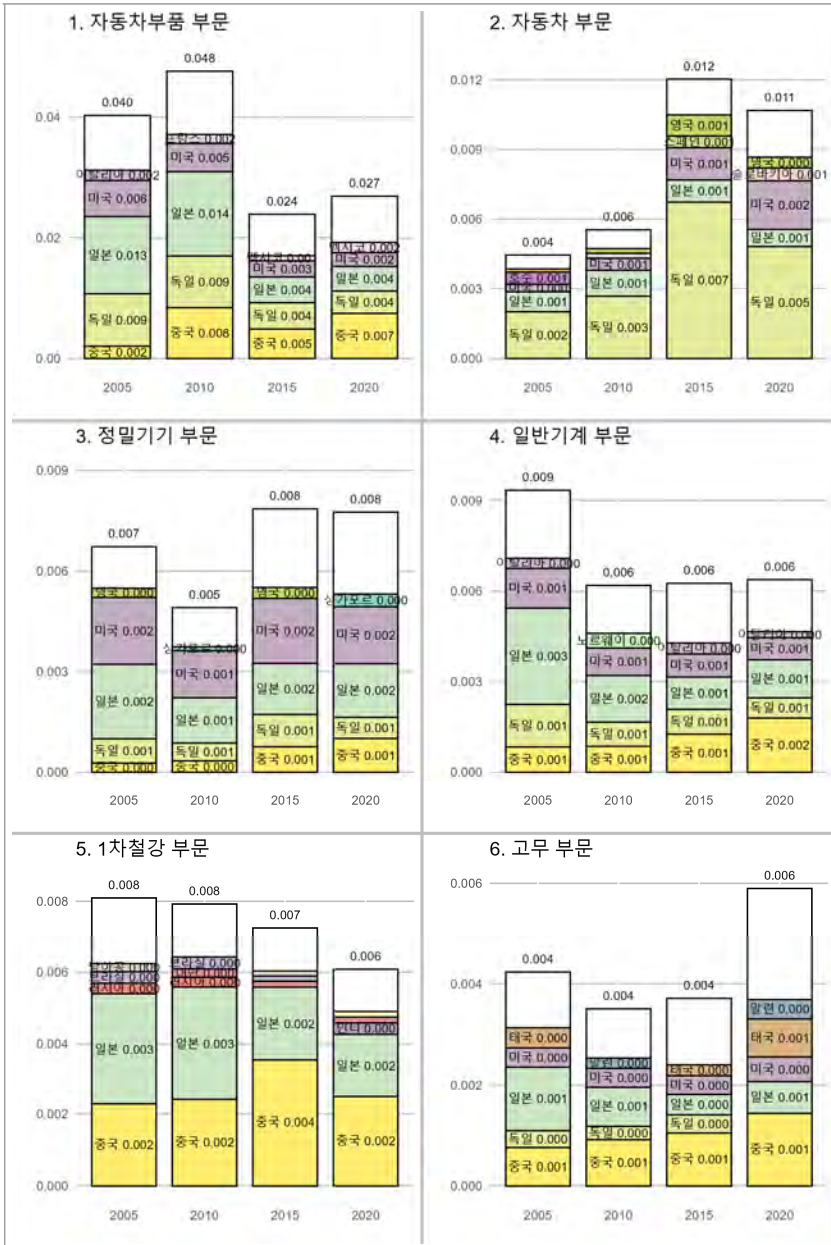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고무**는 타이어 및 튜브(2410), 산업용 고무제품(2491), 기타 고무제품(2499)으로,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기타금속**은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3021), 금속압형제품(3022), 금속처리(3031), 금속처리 가공품(3032), 가정용 금속제품(3091), 부착용 금속제품(3092), 공구류(3093), 나사 및 철선제품(3094), 금속포장용기(3095), 기타 금속제품(309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로, **정밀기기**는 측정 및 분석기기(3612),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3613)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자동차**는 승용차(4011), 전기승용차(4012), 버스(4013), 트럭(4014), 자동차용 엔진(4031)으로, **자동차부품**은 특장차(4021),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4022), 자동차 부품품(4032)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2. 자동차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3. 자동차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 수입재 투입 중 자동차부품, 반도체, 일반기계, 전기제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중국의 투입 단위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투입 단위는 자동차부품, 반도체, 일반기계, 1차철강 등 다수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2-17]의 1에서와 같이 총수입재 상품에서 한국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다. 중국의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20년 32.4%로 증가한 반면 일본의 비율은 동 기간 28.4%에서 15.5%로 감소했다.

대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생산에서의 투입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05년 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1단위 생산을 위해 0.001단위 사용되었으나 2020년에는 0.003단위로 투입 단위가 증가하였다.¹⁵⁾ 이러한 현상은 [그림 2-17]의 6에서 보듯이 대만 수입재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 기간 60.7%에서 73.6%로 상승한 것으로도 확인 가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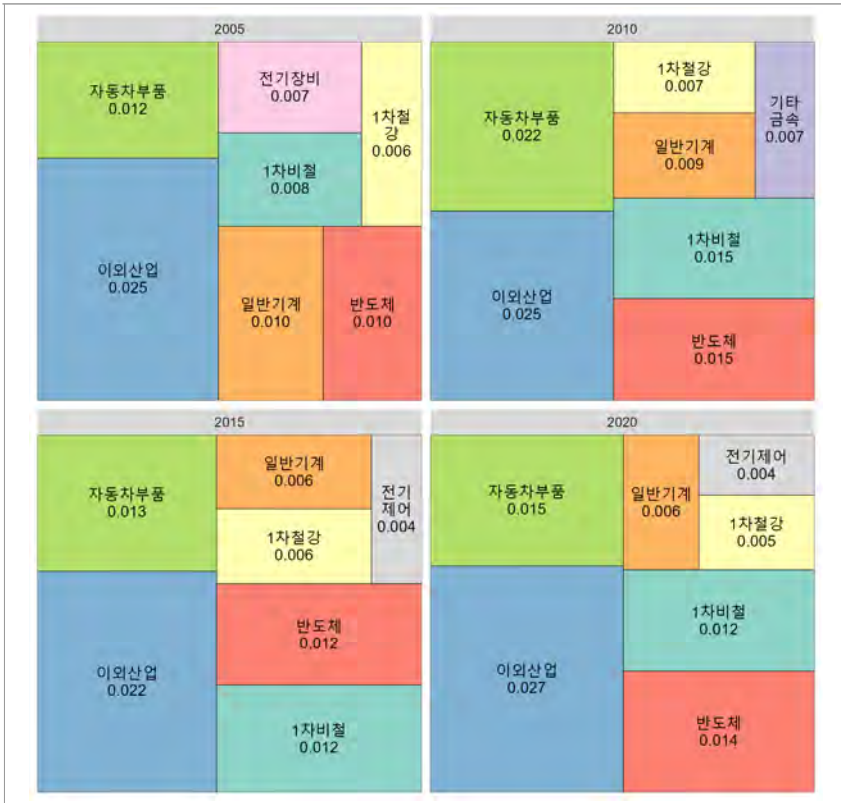
그림 2-14. 자동차부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5) 전체 투입재에서 대만 반도체 투입 증가분은 크지 않으나 수입재 상품 투입이 2005년 0.078단위에서 2020년 0.084단위로 0.006단위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동 기간 대만 반도체 투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15. 자동차부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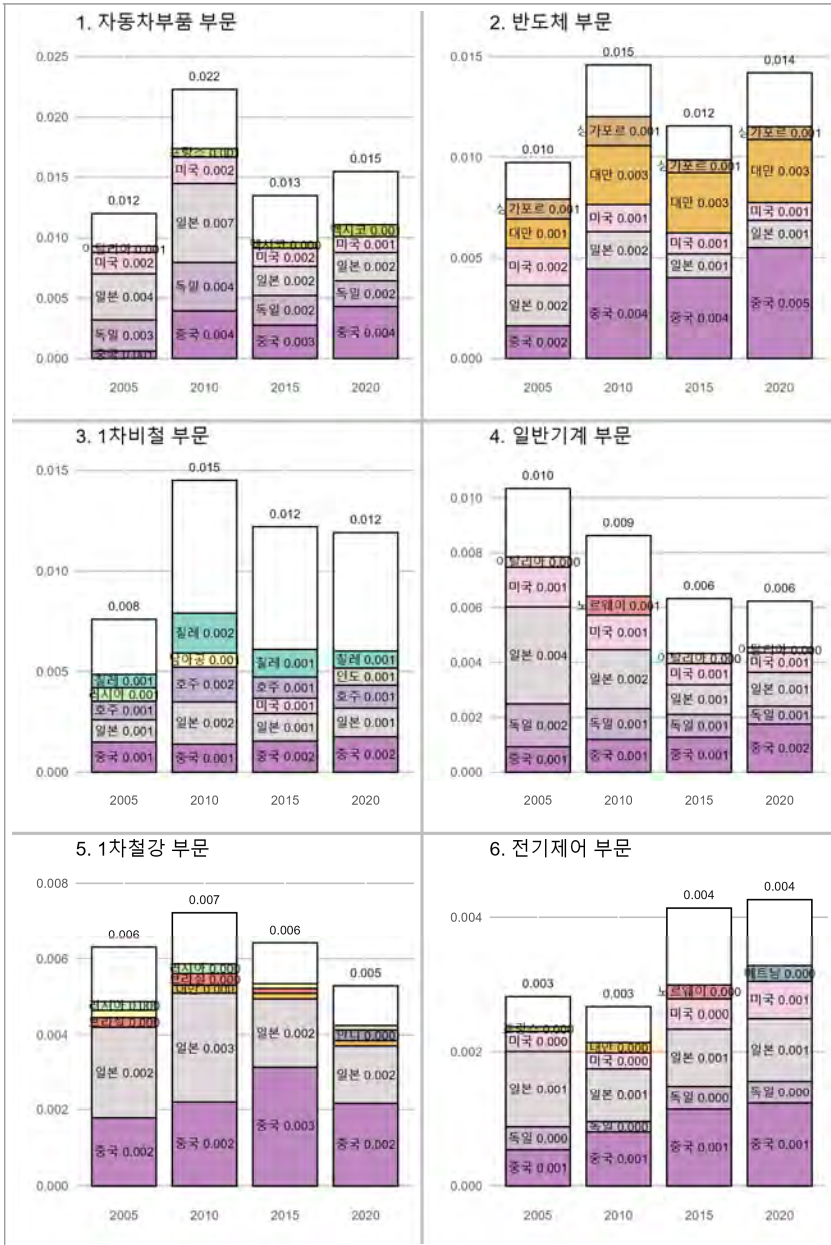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 2) 각 부문은 2020년 기준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1차비철**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3), 금은과(281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동 1차제품(2821), 알루미늄 1차제품(2822),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2829)으로, **기타 금속**은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3021), 금속압형제품(3022), 금속처리(3031), 금속처리 가공품(3032), 가정용 금속제품(3091), 부착용 금속제품(3092), 공구류(3093), 나사 및 철선제품(3094), 금속포장용기(3095), 기타 금속제품(309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로, **반도체**는 개별소자(3101), 집적회로(3102), LCD 평판 디스플레이(3201), 기타 전자표시장치(3209), 인쇄회로기판 및 실장기판(3310), 축전기, 저항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3391), 기타 전자부품(3399)으로, 전기제어는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37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3724)으로, **전기장비**는 기타 전기장비(3799)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자동차부품**은 특장차(4021),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4022), 자동차 부분품(4032)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6. 자동차부품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7. 자동차부품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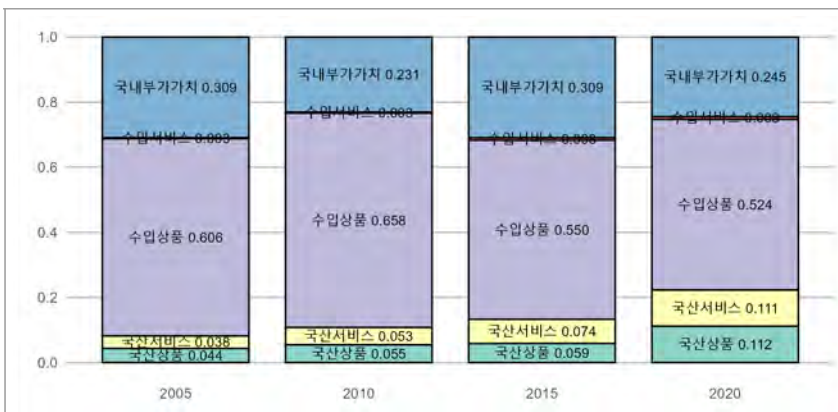
다. 이를 바탕으로 총수입재 상품 투입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에서 5.1%로 상승하였다. 한편 독일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투입 비율이 높다.

4) 석유화학

석유정제품은 [그림 2-19]와 같이 원유를 다수 투입하여 생산하는 산업으로 수입재 상품 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에서와 같이 최근 들어 국산재 상품 및 서비스 투입 단위가 증가하여 수입재 상품 투입 단위는 2005년 0.606단위에서 2020년 0.524단위로 감소하였다. 원유와 같이 국산재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에서 수입재가 점차 국산재로 대체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석유정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총수입재 상품 중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95%에 달한다.¹⁶⁾ 이로 인해 원유 다음으로 많이 투입되는 석유정제

그림 2-18. 석유정제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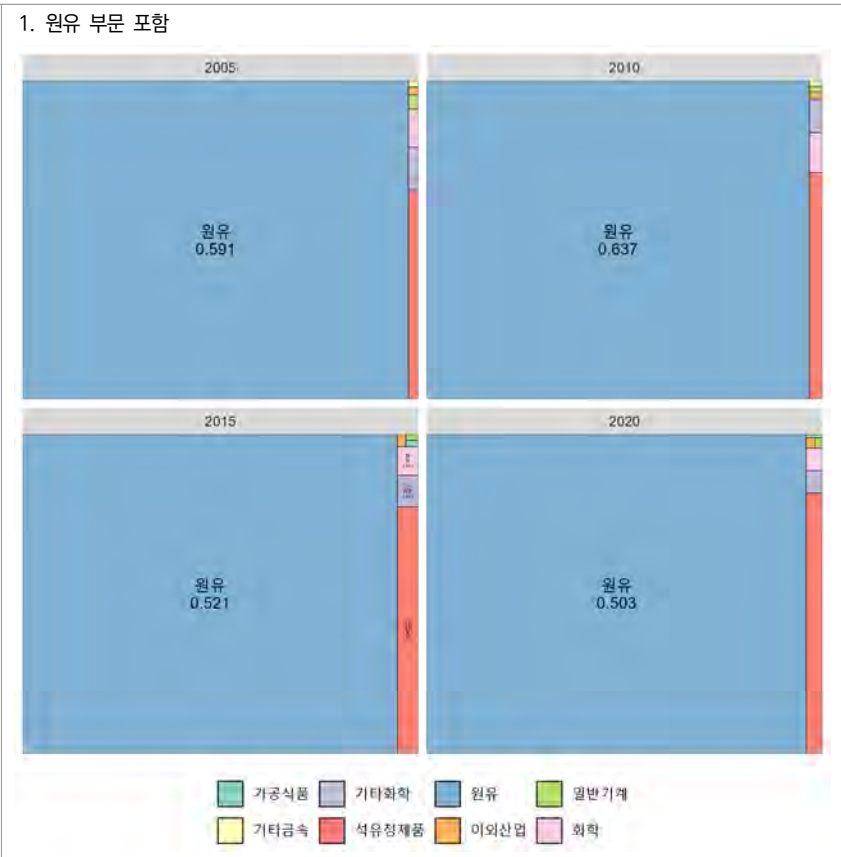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6) [그림 2-18] 및 [그림 2-19]를 이용하면 원유 비율은 2005년 97.6%, 2010년 96.8%, 2015년 94.8%, 2020년 95.9%에 달한다.

품, 기타화학, 화학 부문의 투입은 주요 수입재 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입 단위가 낮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셰일가스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고 한국도 에너지 공급선 다원화,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협력관계 증진 등을 위해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면서¹⁷⁾ 2020년 들어 원유의 주요 수입국에 미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1]의 3과 같이 과거에는 석유정제품 생

그림 2-19. 석유정제품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17) 양의석, 김아름, 김비아(2017) 참고.

그림 2-19. 계속

2. 원유 부문 제외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원유**는 원유(0621), 천연가스(LNG)(0622)로, **기공식품**은 도축육(0811), 가공육(0812), 육가공품(0813), 수산물 가공품(0821), 수산물물 저장품(0822), 유지(0862), 과일 및 채소 가공품(0871)으로, **석유정제품**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용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품(1639)으로, **화학**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합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기타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2102), 도료(2211), 잉크(2212), 비누, 세제 및 치약(2221), 화장품(2222), 접착제 및 젤라틴(22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2292), 기타 화학제품(2299)으로, **기타금속**은 금속 단조 및 야금제품(3021), 금속압형제품(3022), 금속처리(3031), 금속처리 가공품(3032), 가정용 금속제품(3091), 부착용 금속제품(3092), 공구류(3093), 나사 및 철선제품(3094), 금속포장용기(3095), 기타 금속제품(309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화학, 기타화학, 석유정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투입이 이뤄졌으나 2020년 들어서는 다른 주요국과 동일하게 원유와 석유정제품을 중심으로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총수입재 상품 투입에서 미국 상품 투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9%로 사우디아라비아(23.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2-21의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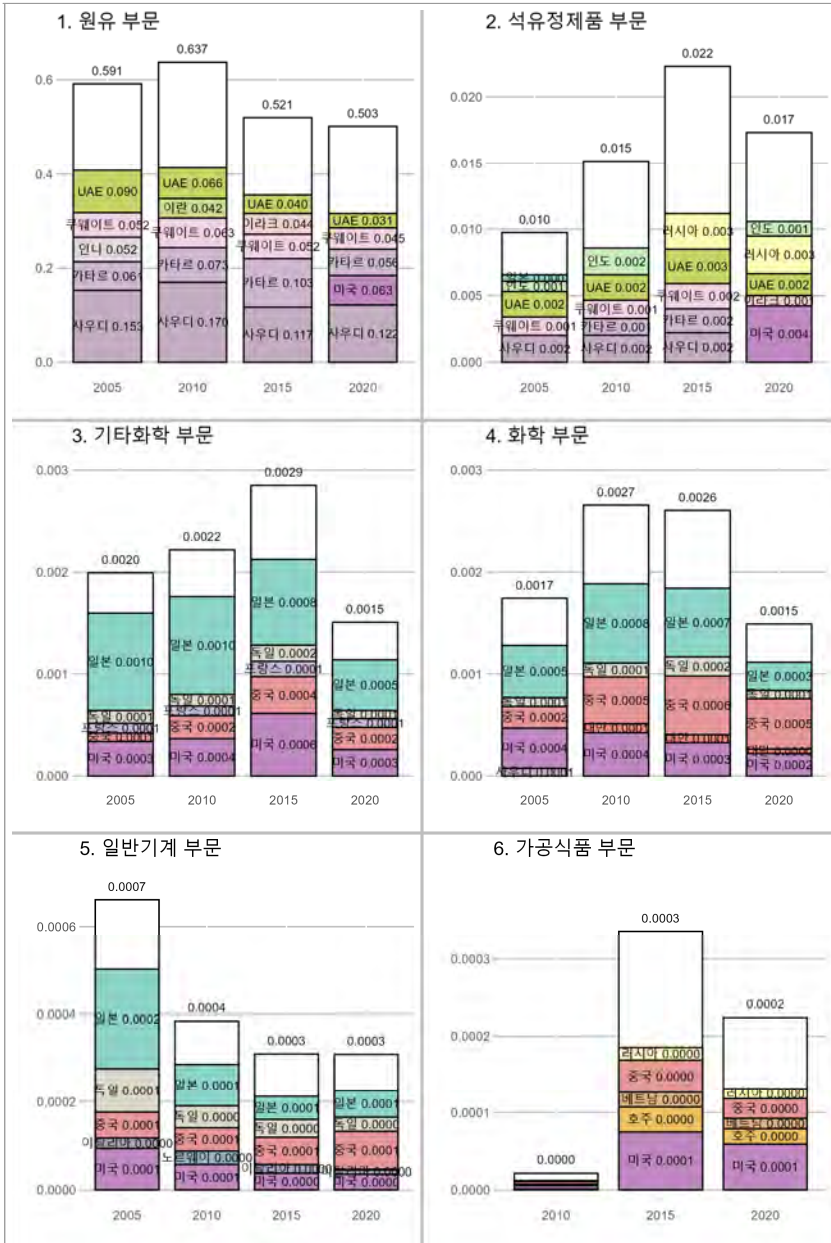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의 등장은 기존에 원유 투입 비중이 높았던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의 투입 단위 및 비율을 모두 감소시켰다. [그림 2-20]의 1에 의하면 석유정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아랍에미리트의 원유는 2005년 0.090단위에서 2020년 0.031단위로 감소하였고, [그림 2-21]의 1에 의하면 총수입재 상품 투입 중 아랍에미리트 비율은 2005년 15.2%에서 2020년 6.1%로 감소한다. 카타르의 경우 원유 투입이 2015년 0.103단위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0.056단위로 2005년(0.061단위)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 총수입재 상품 투입 중 카타르의 비율 역시 10.8%로 2005년(10.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화학 부문은 석유정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재 상품 투입이 많지 않다. 다만 2005년과 2010년 각각 0.483단위와 0.457단위가 투입되었던 국산재 상품이 2010년 0.301단위, 2020년 0.288단위로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국산재 서비스, 수입재 상품, 국내부가가치 등은 최근 상승하였다.

[그림 2-23]과 같이 화학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재 상품은 주로 화학과 석유정제품이며, 일부 원유가 투입되고 있다. 화학 부문의 투입이 2005년 0.124단위에서 2020년 0.114단위로 감소한 것과 달리 동 기간 석유정제품(0.098단위 → 0.117단위)과 원유(0.000단위 → 0.038단위)의 투입은 증가하였다.¹⁸⁾

18) 2015년부터 산업연관표 작성지침이 개정되어 자가공정 산출물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원재료를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한국은행 2019, p. 42), 원재료인 원유가 2015년부터 주요 수입 투입 부문에 포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0. 석유정제품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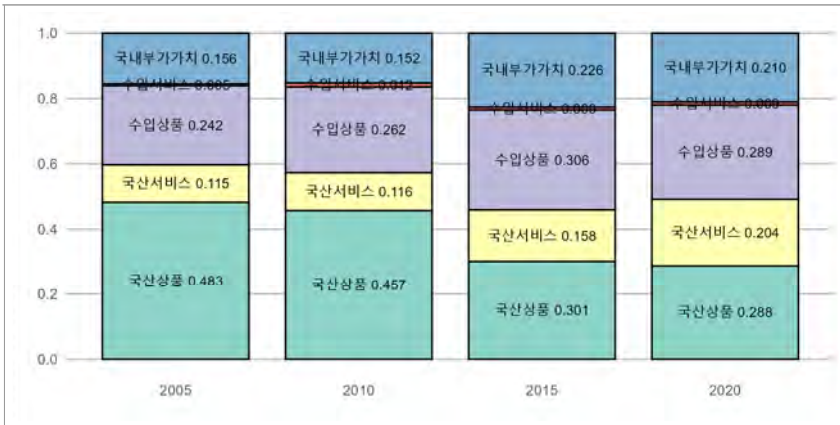
그림 2-21. 석유정제품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2. 화학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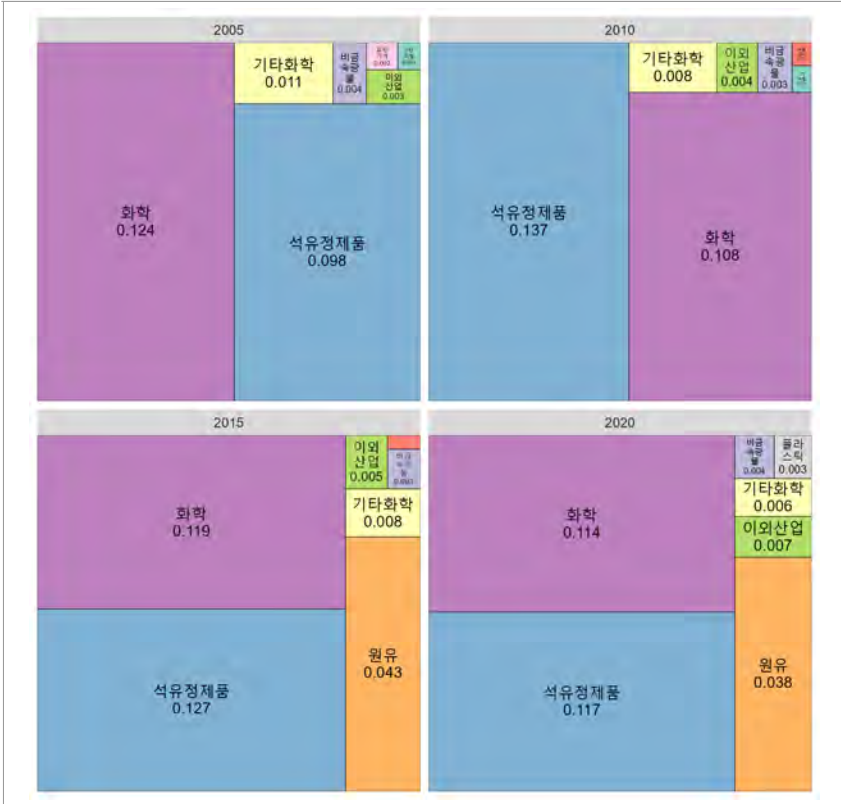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5]의 1과 같이 화학 부문 생산에 사용된 총수입재 중 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증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2-24]와 같이 석유정제품은 201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로부터 많이 수입되었으나 2015년에는 러시아가, 2020년에는 미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 현재에는 미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많다. 그리고 화학 부문의 투입은 과거 일본 상품이 가장 많았으나 일본 상품 투입은 점차 감소하고 중국 상품 투입이 증가하였고, 이 같은 일본 상품 투입 감소는 기타화학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석유정제품을 중심으로 나타난 미국과 러시아 상품 투입 증가와 사우디아라비아 상품 투입 감소, 그리고 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국 상품 투입 증가 등은 [그림 2-25]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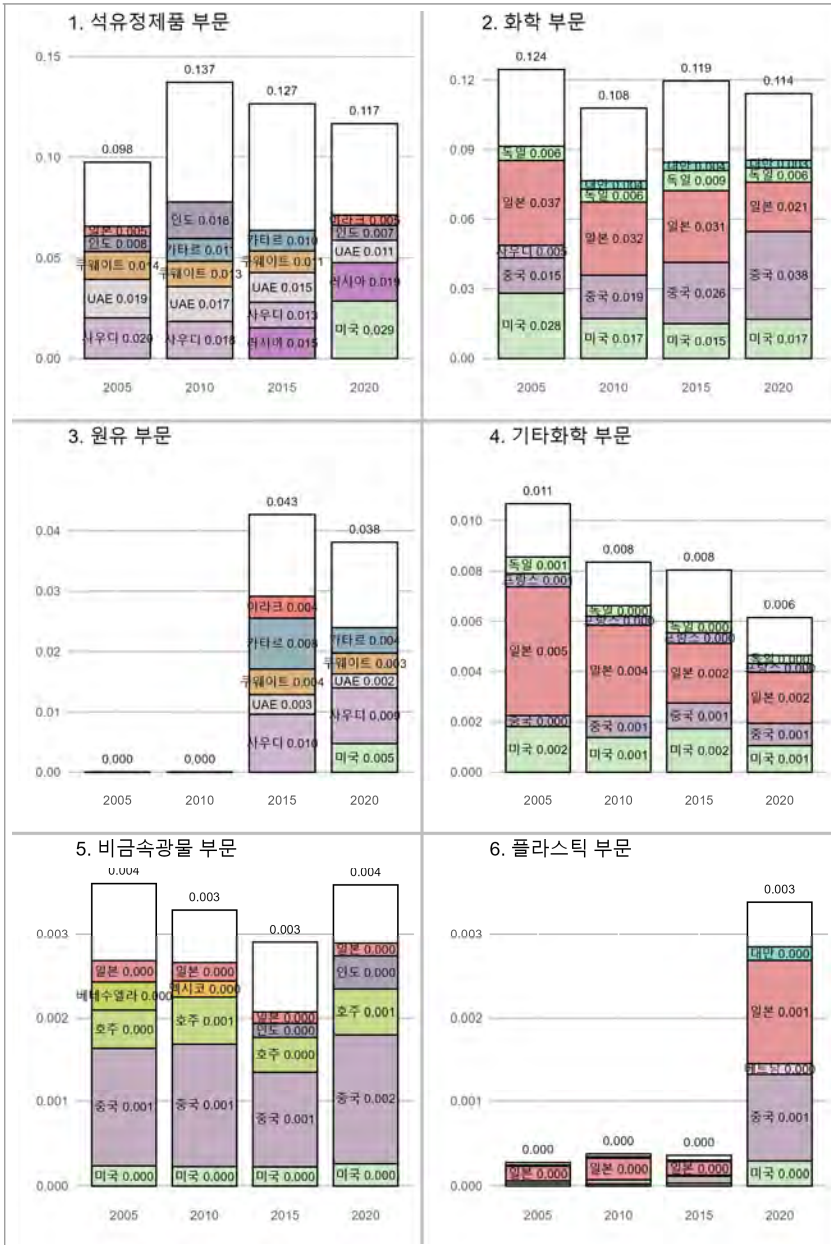
국가별로 투입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는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러시아로부터는 석유정제품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는 과거 화학 부문을 주로 수입하였으나 최근 화학 부문 비율은 감소하고 석유

그림 2-23. 화학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원유**는 원유(0621), 천연가스(LNG)(0622)로, **비철광석**은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으로, **비금속광물**은 기타 비금속광물(0729)로, **석유정제품**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유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제품(1639)으로, **화학**은 지방족 기초유분(1711), 방향족 기초유분(1712), 석유화학중간제품(1713), 기타 기초유기화합물(1719), 산업용 가스(1721), 기초무기화합물(1722), 염료, 안료 및 유연제(1723), 합성수지(1801), 합성고무(1802), 비료 및 질소화합물(2101)로, **기타화학**은 살충제 및 농약(2102), 도료(2211), 잉크(2212), 비누, 세제 및 치약(2221), 화장품(2222), 접착제 및 젤라틴(22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2292), 기타 화학제품(2299)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1차제품(2310), 건축용 플라스틱제품(2391), 포장용 플라스틱제품(2392), 운송장비 및 조립용 플라스틱제품(2393), 기타 플라스틱제품(2399)으로, **1차비철**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3), 금은과(281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동 1차제품(2821), 알루미늄 1차제품(2822),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2829)으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4. 화학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5. 화학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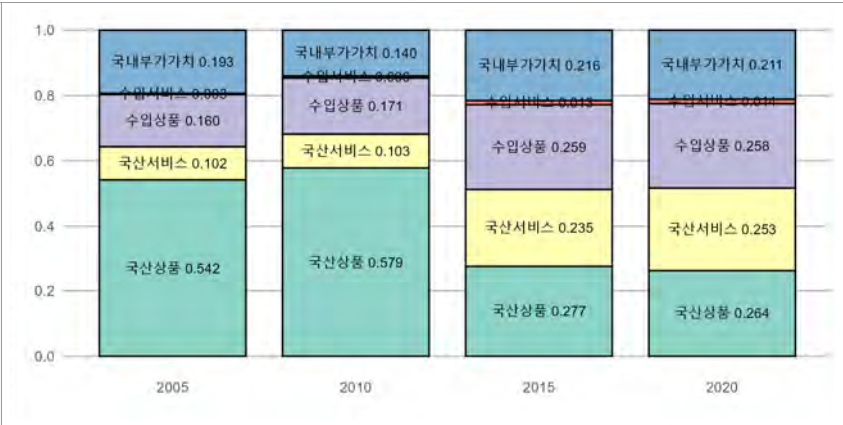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정제품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은 미국과 달리 석유정제품 비율은 감소하고 원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5) 철강

1차철강 부문에서는 국산재 상품 투입이 2015년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국산재 서비스 투입 및 수입재 상품 투입이 증가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여 2015년 국산재 상품 투입은 52.0%(0.301단위) 감소하였으나 수입재 상품 투입은 51.2%(0.088단위)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나타난 수입재 상품 투입의 증가는 현대제철이 2010년 11월 제2고로와 2013년 9월 제3고로를 가동하면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¹⁹⁾

그림 2-26. 1차철강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 현대제철 역사관(검색일: 2025. 11. 4.) 참고.

1차철강 생산에 많이 사용되는 수입재 상품은 1차철강, 철광석, 석탄 등이며, 1차철강 투입은 2020년 들어 감소하였으나 철광석과 석탄 투입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림 2-27]에 의하면 1차철강 부문 생산을 위해 수입재 상품 중 자기 부문인 1차철강을 가장 많이 투입하며, 최근에는 철광석과 석탄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다만 1차철강 투입은 2005년 0.121단위에서 2020년 0.094단위로 감소한 반면 동 기간 철광석 투입은 0.020단위에서 0.092단위로, 석탄 투입은 0.004단위에서 0.048단위로 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로를 통한 철강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입재 상품은 최근으로 올수록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2-28]에서와 같이 주요 수입재 상품인 1차철강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은 호주로부터 많이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29]와 같이 1차철강 생산을 위한 총수입재 수입은 호주, 중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다. 그리고 호주의 철광석과 석탄 투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의 1차철강 투입은 감소함에 따라 호주의 비율이 2005년 9.6%에서 2020년 34.0%로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비율은 동 기간 30.8%에서 11.6%로 감소하였다.

수입재 상품의 주요 수입국 중 중국과 일본으로부터는 대부분 1차철강을, 브라질로부터는 철광석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부터는 과거에는 석탄, 1차철강, 비철광석을 약 30%씩 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석탄과 1차철강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그림 2-27. 1차철강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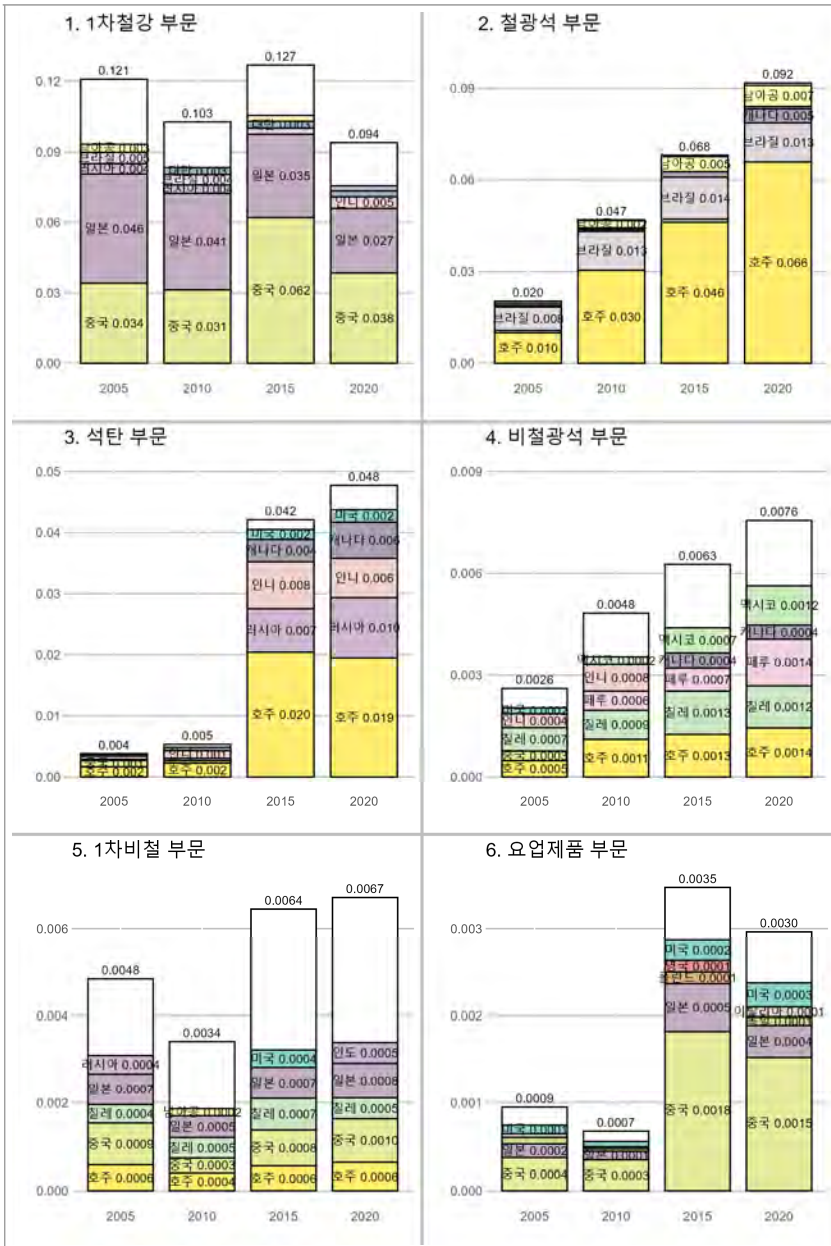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석탄**은 무연탄(0611), 유연탄(0612)으로, **철광석**은 철광석(0711)으로, **비철광석**은 기타 비철금속광석(0719)으로, **석유정제품**은 나프타(1621), 휘발유(1622), 제트유(1623), 등유(1624), 경유(1625), 중유(1626), 액화석유가스(1627), 정제혼합용 원료유(1628), 윤활유 및 그리스(1631), 기타 석유정제제품(1639)으로, **요업제품**은 가정용 도자기(2611), 산업용 도자기(2612), 내화요업제품(2613), 건설용 비내화요업제품(2614)으로,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1차비철**은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3), 금은파(2814),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2819), 동 1차제품(2821), 알루미늄 1차제품(2822), 기타 비철금속 1차제품(2829)으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8. 1차철강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9. 1차철강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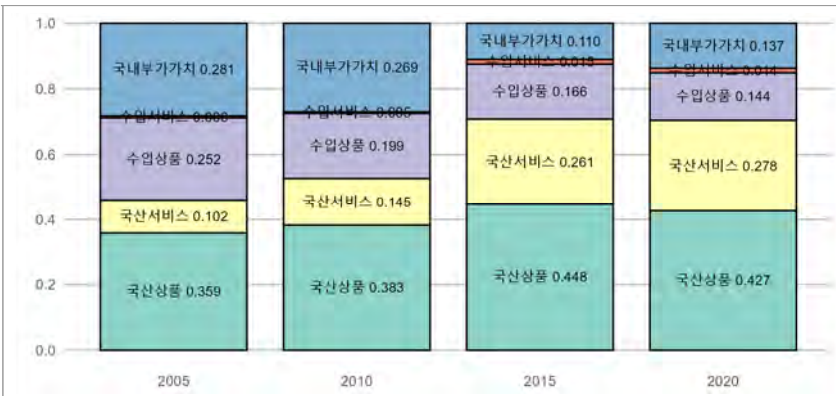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조선

선박 부문은 [그림 2-30]과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국산재 상품 및 서비스 투입이 증가하는 추이를, 수입재 상품과 국내부가가치 부문은 감소하는 추이를 가진다. 국산재 상품 투입은 증가하고 수입재 상품 투입은 감소하고 있어 수입재 상품이 국산재 상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부가가치 부문이 2005년 0.281단위에서 2020년 0.137단위로 51.1%(0.144단위)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따른 부실과 고강도 구조조정, 2014년 유가 급락에 따른 상선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²⁰⁾

이와 달리 국산재 서비스 투입은 2005년 0.102단위에서 2020년 0.278단위로 171.7%(0.176단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조선업이 원하청 생산 방식으로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있어,²¹⁾ 하청에 해당하는 임가공서비스 및 인력알선업의 투입이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²²⁾

그림 2-30. 선박 1단위 생산을 위한 국산재 및 수입재 투입 변화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 이은창 외(2019), pp. 149~150 참고.

21) 관계부처 합동(2022), pp. 2~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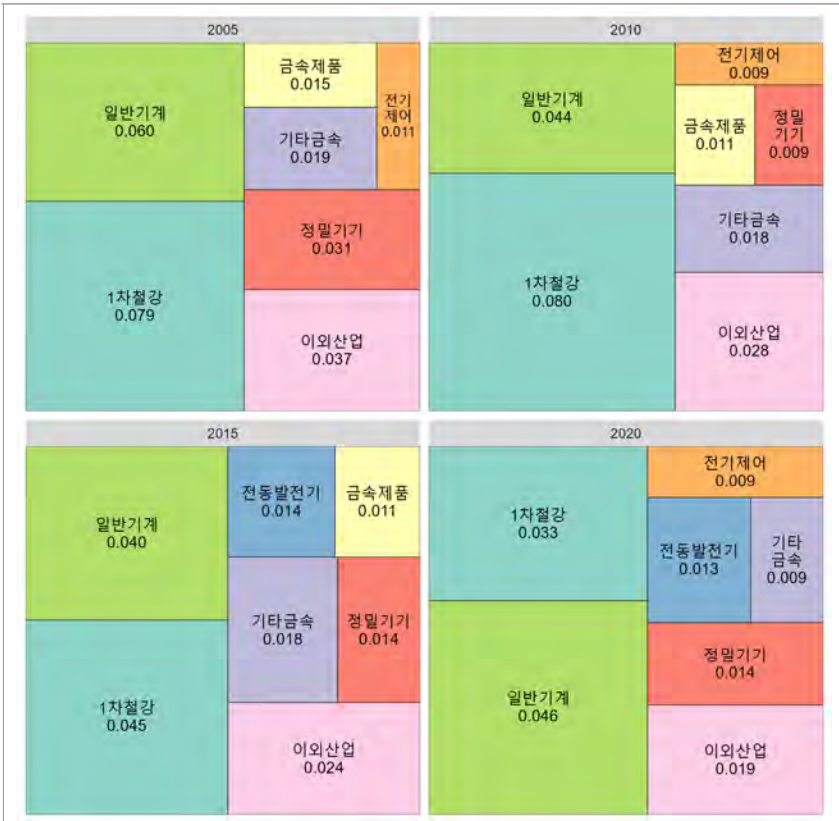
22) 본 항에서 이용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임가공 투입은 2005년 0.007에서 2020년 0.092로, 인력알선업 투입은 동 기간 0.003에서 0.043으로 증가하였다.

수입재 상품 투입은 [그림 2-31]과 같이 1차철강과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밀기기, 기타금속, 전동발전기 부문에 대한 투입도 활발하다. 다만 1차철강의 투입은 2015년까지 일반기계 투입보다 많았으나 2020년 들어 일반기계 투입이 1차철강 투입을 앞지르고 있다.

[그림 2-32]에 의하면 주요 수입재 상품 투입은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의 투입 단위는 증가하고 이외 국가의 투입 단위는 감소한다. [그림 2-32]의 1과 같이 일반기계 부문 투입은 2005년 일본, 독일, 미국, 중국 순으로 활발하였으나 2020년에는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순으로 주요 투입국의 순위가 변화하였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투입만 2005년 0.005단위에서 2020년 0.013단위로 증가하였으며, 이외 일본, 독일, 미국으로부터의 투입은 모두 감소하였다. 정밀기기, 전동발전기, 기타금속, 전기제어 등 모든 부문에서 중국의 투입 단위는 증가하고 이외 국가의 투입 단위는 감소하였다. 다만 [그림 2-32]의 2와 같이 1차철강 부문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주로 수입되었으나, 1차철강 부문의 투입 단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투입 단위 역시 모두 감소하고 있다. 1차철강과 같이 전반적으로 투입 단위가 감소한 부문인 정밀기기와 기타금속 역시 일본과 미국의 투입이 많이 감소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입 증가는 [그림 2-33]의 1에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총 수입재 상품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8.9%에서 2020년 33.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 기간 일본(34.8% → 20.6%), 미국(11.9% → 10.1%), 독일(7.9% → 6.5%)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입은 2005년에는 1차철강에 집중되었으나 2020년에는 1차철강(28.3%)과 일반기계(27.0%)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1. 선박 부문 1단위 생산을 위한 주요 수입 투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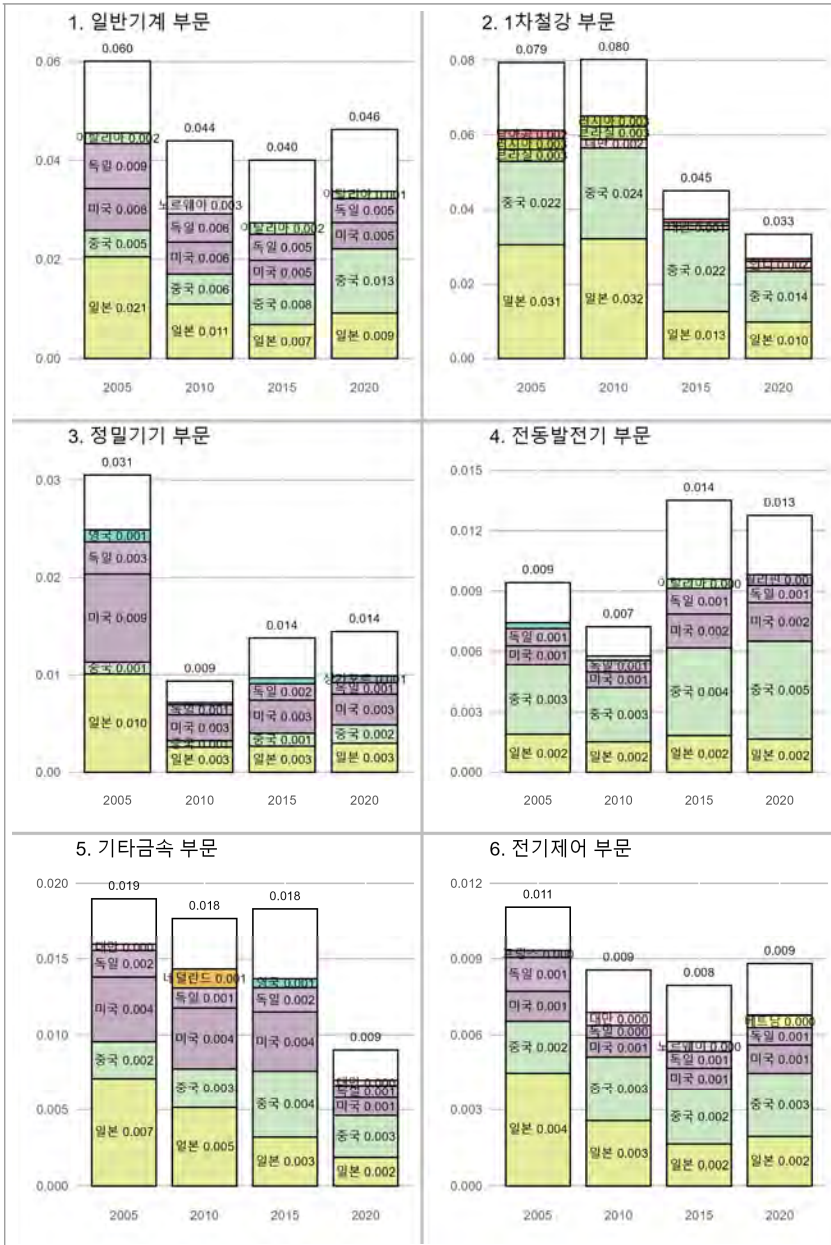


주: 1) 시점별로 자기 부문을 제외한 상위 5개 산업만 표시함.

2) 각 부문은 2020년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다음과 같이 연계함: **1차철강**은 선철(2711), 합금철(2712), 조강(2713), 철근 및 봉강(2721), 형강(2722), 선재 및 궤조(2723), 중후판(두께 3mm 이상)(2724), 열연강판(2725), 강선(2726), 철강관(2727), 냉간압연강재(2730), 표면처리강재(2791), 기타 철강1차제품(2799)으로, **금속제품**은 건축용 금속제품(3011), 구조물용 금속제품(3012), 금속제 탱크 및 압력용기(3013), 산업용 보일러 및 증기발생기(3014)로, **기타금속**은 금속 단조 및 아급제품(3021), 금속압형제품(3022), 금속처리(3031), 금속처리 가공품(3032), 가정용 금속제품(3091), 부착용 금속제품(3092), 공공류(3093), 나사 및 철선제품(3094), 금속포장용기(3095), 기타 금속제품(3099), 기타 특수목적용기계(3999)로, **정밀기기**는 측정 및 분석기기(3612),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3613)로, **전동발전기**는 발전기 및 전동기(3710), 변압기(3721), 전기변환장치(3722)로, **전기제어**는 전기회로 개폐 및 접속장치(37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3724)으로, **일반기계**는 내연기관 및 터빈(3810), 펌프 및 압축기(3820), 밸브(3831),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3832), 산업용 운반기계(3840),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3851), 공기 및 액체 여과기(3852),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3899)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2. 선박 부문에 투입되는 주요 수입재의 주요 수입국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3. 선박 부문 수입재 투입의 국가별, 부문별 비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2008, 2014b, 2019)에 포함된 CD-ROM;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2025. 6. 5.); UN Comtrade API(검색일: 2025. 4. 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소싱의 상관관계 분석

1) 분석 배경 및 목적

본 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중간재 투입 구조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로 형성된 해외 생산 혹은 조달 기지가 국내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 구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5~20년 기간에 전 세계 국가별 74개 비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OFDI 증가 정도가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으로부터 국내 주요 8개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 증가 경향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상대국-상대국 산업-한국 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 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조건부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한국 산업 더미 및 상대국 더미를 활용한 교차항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주요 산업별, 상대국별 OFDI-해외중간재투입 간 상관관계 차이를 식별한다.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항의 분석을 위해 이전 항에서 구축한 국내 주요 산업의 상대국-산업별 중간재 투입액 자료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상대국-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상대국은 총 242개국이고, 상대국 제조업 산업은 총 74개로 분류하였으며 한국 주요 산업은 이전 항과 같이 총 8개로 구분하였다. 분석 기간 역시 이전 항과 동일하게 총 4개 연도(2005, 2010, 2015, 2020)이다.

구체적인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Input_{cijt} = \beta OFDI_{cit} + \mu_{cij} + \eta_t + \epsilon_{cijt} \quad [\text{식 2-1}]$$

종속변수 $Input_{cijt}$ 은 c 국가의 i 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j 산업으로의 t 연도 중간재 투입액(달러) 혹은 그 자연로그 값을 의미한다. 설명변수 $OFDI_{cit}$ 은 t 연도 기준 c 국가 i 산업으로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누적 잔액(달러) 혹은 그 자연로그 값을 가리킨다. 그 밖에 통제 변수로 상대국-상대국 산업-한국 산업 고정효과(μ_{cij})와 연도 고정효과(η_t)를 추가하였다. 이 회귀분석의 $OFDI_{cit}$ 의 계수 추정치는 c 국가 i 산업에 대한 누적 해외직접투자 증가 시 c 국가 i 산업으로부터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관한 경향성을 나타내며, 상대국-상대국 산업-한국 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와 영향을 통제한 일종의 조건부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3) 기초 통계 및 산점도

[표 2-4]는 2020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기준 상위 30개국으로부터 연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공급받는 중간재 투입액을 보여준다. 2005~20년 기간에 이 국가들로의 OFDI 누적잔액은 164.2%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이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공급받은 중간재 투입액은 평균 68.5% 증가하였다.

[그림 2-34]는 특정 연도 특정 국가에 투입된 OFDI 누적금액의 자연로그 값과 해당 연도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어 주요 8개 산업에 투입된 중간재 금액 자연로그 값의 산점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액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을 보이고 있다.

상대국-상대국 산업별 OFDI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액 간의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 부분에서 이어진다.

표 2-4.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기준 상위 30개국의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상대국	항목	2005	2010	2015	2020	2005~2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1	중국	중간재 투입	15,547	32,957	41,166	43,602	28,055	94.9
		누적 OFDI	88,041	193,016	298,959	433,286	345,245	132.4
2	미국	중간재 투입	13,289	12,643	13,288	20,634	7,345	43.3
		누적 OFDI	51,338	93,233	164,865	224,623	173,285	125.6
3	베트남	중간재 투입	74	889	2,824	6,942	6,868	195.8
		누적 OFDI	10,171	35,958	71,697	139,126	128,954	172.7
4	호주	중간재 투입	3,820	8,649	6,785	9,380	5,560	84.2
		누적 OFDI	3,976	14,952	73,651	87,747	83,771	182.7
5	캐나다	중간재 투입	555	777	983	1,202	647	73.7
		누적 OFDI	3,604	32,866	60,694	62,163	58,559	178.1
6	인도네시아	중간재 투입	4,461	5,523	3,016	2,224	-2,237	-66.9
		누적 OFDI	9,861	22,685	43,551	55,243	45,383	139.4
7	홍콩	중간재 투입	1,118	922	789	729	-389	-42.1
		누적 OFDI	4,173	22,187	33,027	48,811	44,638	168.5
8	브라질	중간재 투입	1,484	2,637	1,351	1,728	244	15.2
		누적 OFDI	3,413	19,381	35,451	44,207	40,793	171.3
9	네덜란드	중간재 투입	1,022	1,277	976	1,189	167	15.1
		누적 OFDI	14,189	25,299	48,067	42,128	27,939	99.2
10	인도	중간재 투입	964	2,508	1,500	1,816	852	61.3
		누적 OFDI	5,032	13,067	24,514	41,936	36,904	157.1
11	영국	중간재 투입	1,275	1,116	2,887	1,600	324	22.6
		누적 OFDI	-539	24,855	34,697	33,899	34,437	206.5
12	말레이시아	중간재 투입	3,655	5,651	4,716	4,648	993	23.9
		누적 OFDI	3,224	18,352	28,376	33,188	29,964	164.6
13	멕시코	중간재 투입	199	571	1,545	3,047	2,848	175.5
		누적 OFDI	1,521	4,293	20,093	30,472	28,951	181.0
14	폴란드	중간재 투입	57	113	203	180	122	103.1
		누적 OFDI	4,274	8,205	9,102	26,732	22,458	144.9
15	싱가포르	중간재 투입	3,402	4,855	4,198	3,705	303	8.5
		누적 OFDI	1,357	3,247	13,904	24,014	22,657	178.6
16	케이만군도	중간재 투입	0	0	0	1	1	200.0
		누적 OFDI	166	1,463	3,225	23,597	23,431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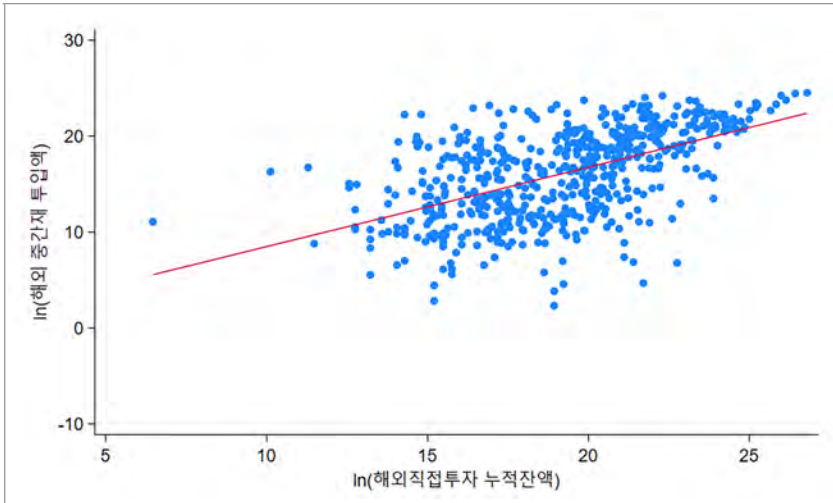
표 2-4.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상대국	항목	2005	2010	2015	2020	2005~2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17	미얀마	중간재 투입	19	2	7	6	-13	-102.1
		누적 OFDI	231	4,516	16,476	23,570	23,339	196.1
18	필리핀	중간재 투입	1,239	1,899	1,378	1,320	80	6.3
		누적 OFDI	3,490	5,630	17,177	22,863	19,373	147.0
19	페루	중간재 투입	44	129	130	664	620	175.2
		누적 OFDI	3,260	5,702	11,980	20,998	17,738	146.2
20	마다가스카르	중간재 투입	0	0	17	10	10	198.7
		누적 OFDI	22	6,521	13,808	19,786	19,763	199.6
21	독일	중간재 투입	4,973	6,839	10,984	9,773	4,800	65.1
		누적 OFDI	1,121	2,426	7,662	15,629	14,508	173.2
22	러시아	중간재 투입	1,378	5,542	5,804	5,194	3,817	116.1
		누적 OFDI	1,267	10,447	13,118	15,268	14,001	169.3
23	일본	중간재 투입	26,740	31,986	20,296	18,421	-8,319	-36.8
		누적 OFDI	2,804	4,820	11,168	13,695	10,891	132.0
24	태국	중간재 투입	1,047	1,578	1,480	1,475	428	34.0
		누적 OFDI	3,043	5,237	11,097	12,617	9,574	122.3
25	헝가리	중간재 투입	62	181	375	293	231	130.0
		누적 OFDI	860	1,356	1,680	12,447	11,587	174.1
26	체코	중간재 투입	77	163	194	308	231	119.8
		누적 OFDI	233	7,457	8,381	11,582	11,349	192.1
27	룩셈부르크	중간재 투입	38	13	16	16	-23	-83.5
		누적 OFDI	47	196	4,257	10,060	10,013	198.1
28	오스트리아	중간재 투입	212	408	461	729	516	109.8
		누적 OFDI	-327	-301	2	9,936	10,263	213.6
29	슬로바키아	중간재 투입	18	63	120	682	664	189.9
		누적 OFDI	2,542	7,067	8,526	9,058	6,516	112.3
30	튀르키예	중간재 투입	36	252	173	157	121	125.5
		누적 OFDI	1,220	4,236	6,905	8,493	7,273	149.8
30개국 평균		중간재 투입	2,894	4,338	4,255	4,723	1,829	68.5
		누적 OFDI	7,454	19,946	36,537	51,906	44,452	164.2

자료: 2025, 2010, 2015, 2020년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Ncomtrade의 품목별 무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 투자 자료(검색일: 2025. 6. 5.) 등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4.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해외 중간재 투입액 간의 산점도



주: 각 점은 2005, 2010, 2015, 2020년의 4개년 중 한 연도의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자연로그 값과 해당 연도에 해당 국가로부터 한국의 8개 주요 산업이 공급받은 해외 중간재 투입액 자연로그 값을 의미함. 자료: 2025, 2010, 2015, 2020년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Ncomtrade의 품목별 무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자료(검색일: 2025. 6. 5.) 등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4)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표 2-5]는 앞서 소개한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상대국-상대국 산업-한국 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국가-산업에 대한 한국의 OFDI가 늘어날수록 해당 국가-산업으로부터 국내 주요 산업이 공급받는 중간재 투입량이 증가하는 양(+)의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견된다.

[표 2-5]의 (1)열과 (2)열의 결과는 OFDI 누적잔액과 해외 중간재 투입액이 모두 0보다 큰 관측치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으로 일종의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 효과만을 살펴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자면 특정 국가-산업으로의 OFDI가 1%(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산업으로부터 국내 주요 산업에 공급되는 연간 중간재 투입액이 0.08%

(0.08달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열의 결과는 OFDI 누적잔액이나 해외 중간재 투입액이 0인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 효과까지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면 특정 국가-산업으로의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산업으로부터 국내 주요 산업에 공급되는 연간 중간재 투입액이 0.05달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6]은 산업 및 상대국 더미를 활용한 교차항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산업별 상관관계의 정도 차이를 알 수 있는 (1)열의 결과를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국내 투입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통신기기, 화학, 자동차부품, 자동차 산업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석유정제품, 철강, 선박 산업에서

표 2-5.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국내 투입 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분석 대상 기간: 2005, 2010, 2015, 2020		
	ln(해외 중간재 투입액) (1)	해외 중간재 투입액 (2)	해외 중간재 투입액 (3)
ln(OFDI 누적잔액)	0.0779*** (0.0120)		
OFDI 누적잔액		0.0846** (0.0394)	0.0524** (0.0227)
상대국-상대국 산업 -한국 산업 고정효과	0	0	0
연도 고정효과	0	0	0
분석 대상	해외 중간재 투입액 > 0 &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 0	해외 중간재 투입액 > 0 &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 0	전체 국가
총관측치	35,122	35,122	573,056
R-squared	0.929	0.838	0.864

주: 괄호 안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p<0.01, ** p<0.05, * p<0.1).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열에서는 상대 국가별 상관관계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국내 투입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 멕시코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6.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국내 투입 간 산업 및 국가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국내 산업 교차항	해외 중간재 투입액 (1)	상대국 교차항	해외 중간재 투입액 (2)
OFDI 누적잔액	0.0325	OFDI 누적잔액	0.0878**
x 석유정제품	(0.0379)	x 중국	(0.0425)
OFDI 누적잔액	0.0155*	OFDI 누적잔액	0.0408
x 화학	(0.00833)	x 미국	(0.0382)
OFDI 누적잔액	0.00977	OFDI 누적잔액	0.0418**
x 철강	(0.00873)	x 베트남	(0.0184)
OFDI 누적잔액	0.248**	OFDI 누적잔액	0.0351**
x 반도체	(0.109)	x 멕시코	(0.0141)
OFDI 누적잔액	0.0820***	OFDI 누적잔액	0.00394
x 통신기기	(0.0317)	x 인도	(0.00290)
OFDI 누적잔액	0.0136*	OFDI 누적잔액	0.0173
x 자동차	(0.00730)	x 인도네시아	(0.0220)
OFDI 누적잔액	0.0163***	OFDI 누적잔액	-0.00387
x 자동차부품	(0.00472)	x 브라질	(0.0177)
OFDI 누적잔액	0.000803	OFDI 누적잔액	0.00301
x 선박	(0.00153)	x 동유럽	(0.00195)
		OFDI 누적잔액	0.00527
		x 기타	(0.00539)
상대국-상대국 산업 -한국 산업 고정효과	O	상대국-상대국 산업 -한국 산업 고정효과	O
연도 고정효과	O	연도 고정효과	O
분석 대상	전체 국가	분석 대상	전체 국가
총관측치	573,056	총관측치	573,056
R-squared	0.873	R-squared	0.868

주: 괄호 안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p<0.01, ** p<0.05, * p<0.1).

다. 반면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 소결

본 절에서는 먼저 한국의 기본 부문 투입산출표와 한국의 국가별·품목별 수입 자료를 연계하여, 국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수입 구조 변화, 즉 해외 소싱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주요 산업으로 도출된 전기·전자 산업(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산업(석유정제품, 화학), 철강 산업, 조선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산업별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산업 간 이질성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 가운데 산업에 크게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일본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해온 동시에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가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어지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주요 산업 해외 소싱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가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2005~20년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특정 국가 및 산업으로 OFDI가 1달러 증가하면 해당 국가 및 산업으로부터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수입 중간재 투입액이 0.05달러 증가하는 강한 양(+)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대국이 중국이나 베트남일수록, 그리고 국내 반도체나 통신기기, 화학,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중간재 수입일수록 더 강한 양(+)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7.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변화 결과 요약

산업 및 부문		주요 수입재 부문	주요 수입국	특징
전기	반도체	반도체, 기타화학, 사진광학 → 반도체, 기타화학, 플라스틱	일본, 미국, 중국 → 중국, 일본, 대만	반도체 부문의 고부가가치화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일본 투입 감소, 중국 투입 증가 일본과 미국은 반도체 이외 투입 부문도 투입이 활발, 이외 주요국은 반도체 투입에 집중
	전자	반도체, 통신기기, 전기제어	일본, 중국, 미국 → 중국, 베트남, 대만	국산재 상품을 수입재 상품으로 대체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일본, 미국 투입 감소, 중국 투입 증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통신기기 투입 증가, 이외 주요국은 반도체 투입 비율 높음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1차철강 → 자동차부품, 자동차, 정밀기기	일본, 독일, 미국 → 중국, 일본, 독일	국산재 상품 투입이 많고 수입재 상품 투입 감소 자동차부품 투입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미국에서 모두 감소 자동차 투입은 독일을 중심으로 증가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반도체 → 자동차부품, 반도체, 1차비철	일본, 중국, 미국 → 중국, 일본, 미국	국산재 상품 투입이 많고 수입재 상품은 다양한 부문에서 투입이 이뤄짐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일본 투입 감소, 중국 투입 증가, 대만은 반도체 투입 증가
석유 화학	석유정제품	원유, 석유정제품, 기타화학	사우디, UAE, 카타르 → 사우디, 미국, 카타르	원유 투입이 필요하여 수입재 상품 투입이 많으며, 이를 제외하면 국산재로 대체 중 원유 투입이 총수입재 상품 투입의 95%에 달하며, 최근 대미국 원유 수입이 빠르게 증가
	화학	화학, 석유정제품, 기타화학 → 석유정제품, 화학, 원유	일본, 미국, 사우디 → 미국, 중국, 일본	국산재 상품 투입이 감소하고 이외 부문 투입 단위 모두 증가 미국은 석유정제품을, 중국은 화학을 중심으로 투입 증가 일본 투입은 화학과 기타화학에서 감소, 사우디 투입은 석유정제품에서 원유로 변경
철강	1차철강	1차철강, 철광석, 1차비철 → 1차철강, 철광석, 석탄	일본, 중국, 호주 → 호주, 중국, 일본	국산재 상품 투입 크게 감소, 국산재 서비스 및 수입재 상품 투입 증가 호주를 중심으로 철광석과 석탄 투입 크게 증가 중국 및 일본은 1차철강 투입에 집중하며, 일본 투입은 감소
조선	선박	1차철강, 일반기계, 정밀기기 → 일반기계, 1차철강, 정밀기기	일본, 중국, 미국 → 중국, 일본, 미국	국산재 상품으로 대체, 저부가가치화 주요 수입재 상품 다수에서 중국(일반기계 중심) 투입 증가, 이외 주요국 투입 감소 1차철강 투입은 일본과 중국에서, 정밀기기 및 기타금속 투입은 일본과 미국에서 크게 감소

주: 주요 수입재 부문과 주요 수입국은 2005년과 2020년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즉 앞서 관찰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는 우리 기업의 주도적인 해외직접투자의 결과로부터 일부 영향 받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가성비 높은 중간재의 해외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 중간재를 역수입함으로써 국내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의 토대로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기능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해외 현지 진출 법인의 매입(매출)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매입 비중을 상대국 및 산업별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서 해외 진출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 수출의 증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기여를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통로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해외 현지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 변화

해외 현지에 진출한 기업(현지법인)의 매입(매출) 구조는 한국에 대한 매입(매출), 현지 국가에 대한 매입(매출) 그리고 한국과 현지 모두 아닌 제3국에 대해 발생하는 매입(매출)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매입(한국 매입)'은 현지법인이 한국으로부터 제품(또는 서비스)을 구입한 매입액이 집계되는 경우로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이 된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경로가 되며, 이러한 투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수직적 투자

(예: 모회사-자회사)로 많이 나타나는 만큼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전환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 매출’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한국으로 판매한 매출액이 집계된 경우로,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수입(역수출)이 된다. 이와 같이 매입과 매출이 서로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와 함께 매출 구조의 변화 역시 양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현지 매입’의 경우 필요한 생산 요소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현지와의 생산 네트워크 연계성을 보여준다. 반면 ‘현지 매출’은 현지법인이 해당 시장에 직접 판매한 경우로 시장지향형 투자의 직접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지 거래의 경우 ‘관계사’와의 거래와 ‘비관계사(기타)’와의 거래 성격이 크게 다를 수 있는데, 전자(관계사)가 기업 내 분업 구조와 내부 공급망 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후자(기타)의 경우 매입은 생산 단계에서 현지화의 중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고 매출은 시장지향형 투자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국 매입’은 현지법인이 본국도 현지국도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 매입한 경우로, 세계 혹은 주변국과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제3국 매출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플랫폼형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례로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투자잔액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법인 7,610개사 중 5,449개사에 대하여 매입(매출)을 포함한 경영 현황 및 투자 성과와 관련한 5개년(2018~23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 2014년, 2019년, 2023년 자료의 매입(매출) 비중을

각각 조사하여 비교하였다.²³⁾ 아래에서는 먼저 주요 해외 진출 국가별 매입(매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주요 제조업의 산업별 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1) 국가별 매입 구조

2023년 기준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매입(한국에서의 수출)이 40.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반면 매출에서 한국 매출의 비중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수출입 유발효과가 단순하게는 수출(한국 매입)이 수입(한국 매출)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현지 매입의 비중은 42.2%로 현지 매출(65.8%)에 비하면 낮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3국 매입의 비중은 17.1%로 제3국 매출(19.9%)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액 기준 주요 투자 상대국은 미국(28.5%)과 중국(18.8%)이며, 싱가포르(7.2%), 베트남(6.7%)을 포함한 ASEAN이 18.7%, 독일(4.8%), 폴란드(2.9%), 체코(2.3%)를 포함한 유럽 역시 18.7%를 차지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한국 매입(59.0%)의 비중이 높고, 중국의 경우 현지 매입(68.5%)의 비중이 높아 다소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고, 제3국 매입의 비중 역시 26.2%와 21.1%로 비교적 높다. 유럽의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 현지 매입 비중이 낮고 한국 매입(독일 52.7%) 또는 제3국 매입(폴란드 48.0%)의 비중이 높은데, 반면 체코의 경우 현지 매입(70.1%)의 비중이 크게 높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제3국 매입의 비중이 각각 8.9%와 7.0%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

23) 2014년 통계 경우(2018 회계연도 자료 활용) 조사 대상 현지법인의 기준이 투자 잔액 200만 달러 초과로 2019년 및 2023년 매입/매출의 경우(300만 달러 초과, 2023 회계연도 자료 활용)와 다르다. 그러나 두 기준의 집계가 각각 적용된 바 있는 2017~18년의 매입/매출 금액을 살펴보면(2018 및 2021 회계연도 자료) 차이가 미미한 만큼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 편이며, 마찬가지로 인도 역시 제3국 매입의 비중이 6.0%로 크게 낮다.

한편 매출 기준 주요국 역시 미국(26.9%), 중국(20.0%), ASEAN(20.3%), 유럽(16.7%) 등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현지 매출의 비중이 87.1%로 크게 높은 반면, 한국 매출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하게 인도(84.4%)와 브라질(96.9%) 역시 현지 매출의 비중이 높다. 반면 한국 매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중국(30.1%)과 베트남(46.7%)이 있고, 제3국 매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싱가포르(32.9%), 독일(50.4%), 폴란드(54.7%) 등이 있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별²⁴⁾ 2014~23년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49.6%에서 2023년

표 2-8. 해외 진출 기업의 2023년 매입액 상위 10개 투자상대국 및 매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비중)	매입	한국 매입 (비중)	현지 매입 (비중)	제3국 매입 (비중)		
미국 (28.5)	177,740	104,829 (59.0)	57,074 (32.1)	15,837 (8.9)		
중국 (18.8)	117,181	28,652 (24.5)	80,317 (68.5)	8,213 (7.0)		
싱가포르 (7.2)	45,155	19,090 (42.3)	14,235 (31.5)	11,830 (26.2)		
베트남 (6.7)	42,087	17,775 (42.2)	15,429 (36.7)	8,884 (21.1)		
독일 (4.8)	30,182	15,893 (52.7)	4,440 (14.7)	9,849 (32.6)		
인도 (3.7)	23,232	5,272 (22.7)	16,563 (71.3)	1,397 (6.0)		
폴란드 (2.9)	17,856	6,001 (33.6)	3,292 (18.4)	8,563 (48.0)		
멕시코 (2.6)	16,189	6,406 (39.6)	7,685 (47.5)	2,098 (13.0)		
인도네시아 (2.4)	14,982	2,572 (17.2)	8,452 (56.4)	3,957 (26.4)		
체코 (2.3)	14,482	3,223 (22.3)	10,151 (70.1)	1,108 (7.7)		
전체	624,666	254,100 (40.7)	263,507 (42.2)	107,060 (17.1)		

주: 국가의 비중은 전체 매입 대비 해당 투자상대국에서의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4) 국가별 분석의 주요국은 2023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는 미국(1위), 중국(2위), 인도(6위), 베트남(4위), 인도네시아(7위), 멕시코(9위), 브라질(10위), 그리고 상기 국가들을 제외한 기타 ASEAN 및 기타 중남미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에서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선정된 국가로 제4장에서 다루는 국가들과 동일하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5위) 등을 포함한 유럽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유럽의 한국 매입 비중은 2014년 33.5%에서 2023년 31.3%로 소폭 감소).

표 2-9. 해외 진출 기업의 2023년 매출액 상위 10개 투자상대국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비중)	매출	한국 매출 (비중)	현지 매출 (비중)	제3국 매출 (비중)
미국 (26.9)	222,629	4,763 (2.1)	193,873 (87.1)	23,992 (10.8)
중국 (20.0)	165,426	49,744 (30.1)	97,318 (58.8)	18,363 (11.1)
싱가포르 (7.3)	60,124	14,966 (24.9)	25,347 (42.2)	19,810 (32.9)
베트남 (7.2)	59,697	27,894 (46.7)	25,691 (43.0)	6,112 (10.2)
독일 (4.0)	33,269	299 (0.9)	16,197 (48.7)	16,774 (50.4)
인도 (3.6)	29,501	970 (3.3)	24,911 (84.4)	3,620 (12.3)
인도네시아 (3.2)	26,656	6,884 (25.8)	16,503 (61.9)	3,270 (12.3)
폴란드 (2.5)	21,015	2,265 (10.8)	7,265 (34.6)	11,485 (54.7)
멕시코 (2.5)	20,659	319 (1.5)	15,531 (75.2)	4,809 (23.3)
브라질 (2.0)	16,650	40 (0.2)	16,134 (96.9)	476 (2.9)
전체	826,976	118,766 (14.4)	543,911 (65.8)	164,300 (19.9)

주: 국가의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해당 투자상대국에서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59.0%로 증가해 한국의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지 매입(42.9%→32.1%)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현지관계사매입(22.5%→9.1%)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매출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에 대한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자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관계사에 대한 판매가 아닌 현지기타매출(76.3%→84.3%)이 더욱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28.3%에서 2019년 34.6%로 커졌으나 2023년 24.5%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현지 매입 비중이 2014년 60.6%에서 2023년 68.5%로 커졌으며, 세부적으로는 현지관계사매입(27.0%→18.9%)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관계사(33.7%→49.6%)의 매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매출의 경우 한국 매출의 비중이 2019년(37.7%) 높아진 바 있으나 2023년(30.1%) 다시 낮아졌다.

현지 매출의 비중 역시 2014년 64.9%에서 2023년 58.8%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제3국 매출(5.9%→11.1%)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인도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29.3%→22.7%)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반면 현지 매입(63.9%→71.3%)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는 현지기타매입(62.5%→58.9%)이 소폭 감소한 반면, 현지관계사매입(1.4%→12.4%)은 크게 증가했다. 매출의 경우 현지 매출의 비중이 2023년 84.4%로 가장 높은데, 세부적으로는 현지기타매출(83.2%→68.2%)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를 현지관계사매출(4.2%→16.2%)의 증가로 상당 부분 상쇄하였다.

베트남 진출 기업의 경우 2023년 기준 한국 매입의 비중이 42.2%, 현지 매입이 36.7%, 제3국 매입이 21.1%를 차지하며, 2014년(한국 매입 43.3%)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2019년(한국 매입 47.1%)과 비교할 때 오히려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2020년대 들어서도 일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매출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매출의 비중이 2014년 36.5%(2019년 32.3%)에서 2023년 46.7%로 증가해 최근 들어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증가를 상당 부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매입의 비중이 2014년 59.0% 및 2023년 5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상대적으로 한국 매입(8.2%→17.2%)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지 매입의 경우 현지기타매입(26.1%→44.3%)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현지관계사매입(32.9%→12.1%)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다. 또한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경우 제3국 매입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이 특징인데, 다만 2014년 32.9%에서 2023년 26.4%로 다소 감소하였다. 매출의 경우도 역시 현지 매출의 비중이 2014년과 2023년 모두 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같은 기간 한국 매출(15.3%→25.8%)의 비중은 증가하고, 제3국 매출(22.8%→12.3%)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상기 2개국을 제외하고 싱가포르를 포함한 ASEAN 8개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43.4% 및 2023년 41.5%로 가장 높다. 한편 현지관계사매입(1.7%→1.5%)의 비중이 미미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 매입과 더불어 현지기타매입(33.0%→30.7%)과 제3국 매입(21.9%→26.3%)을 통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출의 경우 현지 매출이 2023년 47.9%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양상이다. 다만 여기서도 현지관계사매출의 비중은 1.0%로 미미하다.

멕시코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51.7%에서 2023년 39.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현지 매입의 비중이 30.1%에서 47.5%로 증가했는데, 특히 현지기타매입(17.4%→30.7%)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현지의 생산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매출의 경우 현지 매출의 비중이 2014년 94.1%에 달했으나 2023년 75.2%로 감소했으며, 반면 제3국 매출(5.9%→23.3%)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브라질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50.3%에서 2023년 20.6%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비관계사(기타)를 중심으로 현지 매입(27.6%→56.3%)이 크게 증가하면서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매출의 경우 현지 매출에 크게 집중된 구조를 보이며(2014년 99.2% 및 2023년 96.9%), 세부적으로는 현지관계사매출(7.1%→26.5%)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상기 2개국을 제외한 중남미 지역 진출 기업의 매입구조는 대체로 브라질과 비슷한 양상으로, 한국 매입의 비중은 2014년 52.3%(2019년 54.9%)에서 2023년 34.0%로 감소하였다. 반면 현지 매입(20.7%→46.0%)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다만 현지관계사매입은 2023년 기준 전무한 만큼 모두 현지기타매입으로 이루어진다. 매출의 경우 한국 매출(8.2%→7.7%)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제3국 매출(36.0%→47.5%)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반면 현지 매출(55.8%→44.7%)은 현지관계사매출(15.1%→4.2%)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그림 2-35.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의 국가별 매입 및 매출 비중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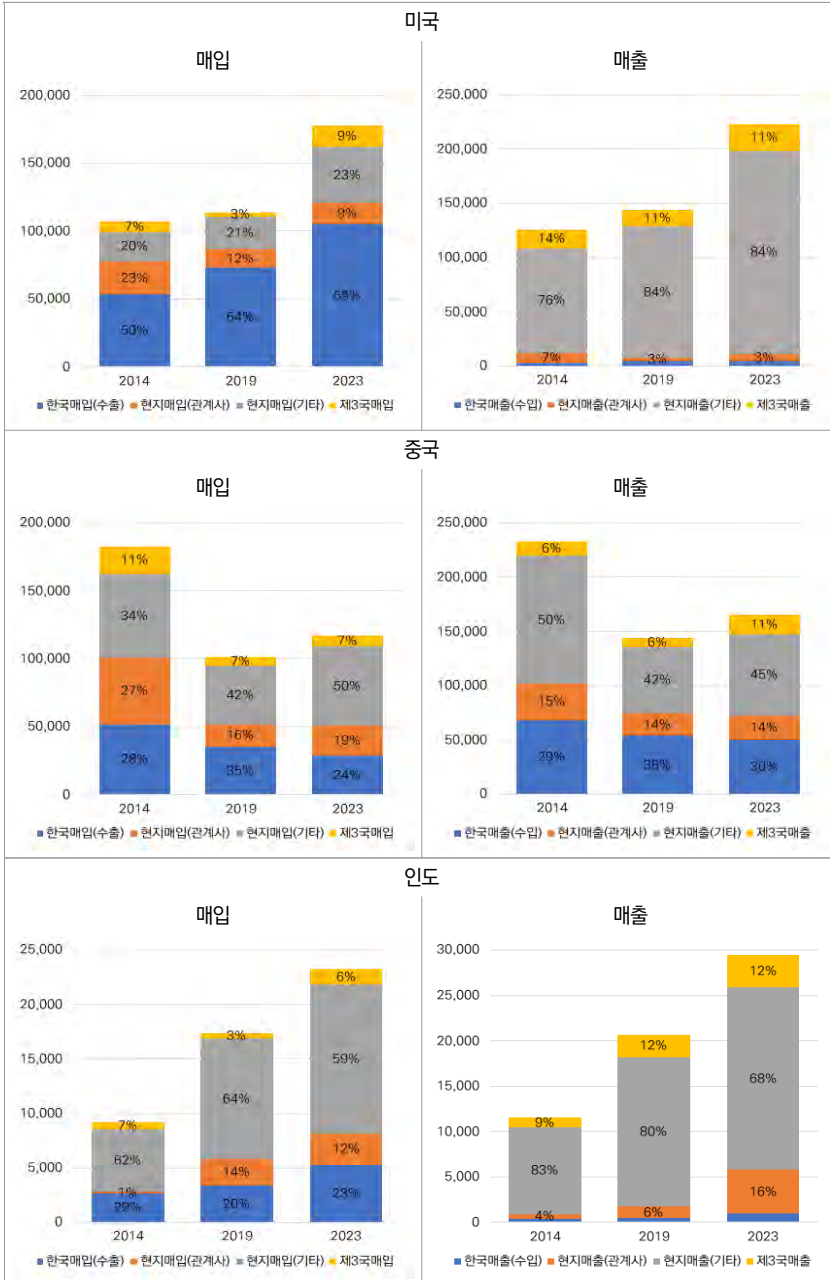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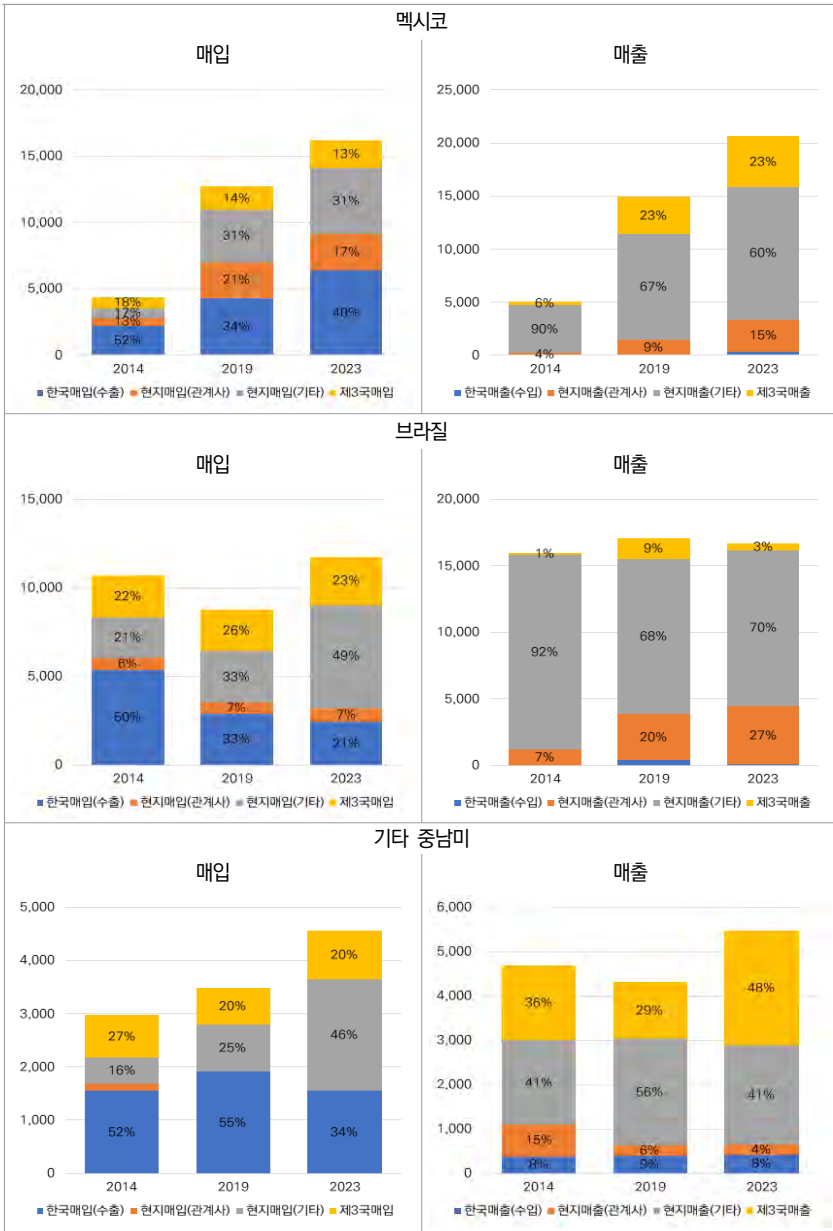
그림 2-3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그림 2-3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 투자 경영분석」.

2) 산업별 매입 구조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이 속한 산업²⁵⁾이 제조업인 경우, 전체 매입액에서 한국 매입(한국에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3.3%로 비제조업에 비해 낮은 편이며, 반면 현지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비교적 높다. 주요 제조업은 2023년 기준 자동차(37.9%), 전자(22.5%), 전기장비(13.1%), 화학(7.2%) 등이다. 주요 산업 중 한국 매입의 비중이 특히 두드러지는 산업은 없으나, 전체 한국 매입의 약 2/3를 차지하는 자동차(35.6%)와 전자(41.4%)를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한국 매입의 비중이 30%대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기타제조업과 식료품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낮은 반면 제3국 매입(기타 제조업)과 현지 매입(식료품)의 비중이 높다. 이외에도 화학과 기계는 현지 매입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은데, 특히 화학은 한국 매입의 비중이 13.6%로 낮다.

한편 제조업에 속한 해외 진출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한국 매출(한국에서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9.2%로 비제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요 제조업은 2023년 매출액 기준 자동차(36.2%), 전자(22.0%), 전기장비(12.6%), 화학(7.6%) 등 전반적으로 매입액 기준 주요 산업과 유사하며, 특히 한국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전자와 기타제조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는 자동차, 화학, 1차금속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한국 매출 비중이 낮다. 제3국 매출의 경우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으나 1차금속, 기계, 기타제조업 등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속한 산업별로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과거 2014년 대비 2023년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가별 구조의 경우 정책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해당 국가

25)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각 현지법인은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단일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각각의 산업으로 세분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표 2-10. 해외 진출 기업이 속한 2023년 매입액 상위 10개 제조업 및 매입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비중)	매입	한국 매입 (비중)	현지 매입 (비중)	제3국 매입 (비중)
자동차 (37.9)	138,852	49,450 (35.6)	74,422 (53.6)	14,979 (10.8)
전자 (22.5)	82,429	34,101 (41.4)	34,948 (42.4)	13,380 (16.2)
전기장비 (13.1)	47,871	16,365 (34.2)	19,814 (41.4)	11,693 (24.4)
화학 (7.2)	26,210	3,575 (13.6)	17,117 (65.3)	5,519 (21.1)
1차금속 (5.7)	21,062	7,782 (36.9)	11,208 (53.2)	2,073 (9.8)
기계 (2.3)	8,474	2,744 (32.4)	5,158 (60.9)	571 (6.7)
금속가공 (2.2)	7,953	2,220 (27.9)	4,410 (55.5)	1,323 (16.6)
기타제조업 (1.6)	5,807	395 (6.8)	1,545 (26.6)	3,868 (66.6)
식료품 (1.4)	5,207	327 (6.3)	3,739 (71.8)	1,141 (21.9)
고무 · 플라스틱 (1.2)	4,266	1,444 (33.8)	2,317 (54.3)	505 (11.8)
제조업 (58.8)	366,445	122,164 (33.3)	185,235 (50.5)	59,046 (16.1)
전체	624,666	254,100 (40.7)	263,507 (42.2)	107,060 (17.1)

주: 1) 산업의 비중은 제조업 매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단 제조업의 비중은 전체 매입 대비 비중임.
 2) 기타제조업은 상기 9개 산업 외에도 의복 · 모피, 석유정제품, 섬유,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가죽 · 가방 · 신발,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운송장비, 펄프 · 종이, 음료, 의약품, 가구, 담배, 인쇄 · 기록매체, 목재 · 나무 등을 제외한 기타의 제조업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의 산업 구조 자체가 변모하면서 이로 인해 매입(매출) 구조 역시 변화하는 반면, 각 산업의 공급망 및 판매망 네트워크는 해당 산업 고유의 특성에 따라 상당 부분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의 제조업 매입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매입의 비중은 2014년 32.4%에서 2023년 33.3%로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현지 매입(51.1%→50.5%)과 제3국 매입(16.5%→16.1%)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가 미미하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차원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먼저 전자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45.0%에서 2023년 41.4%로 감소했지만 비중 자체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현지 매입(30.6%→42.4%)의 비중이 증가하고, 제3국 매입(24.5%→16.2%)은 감소하였다. 매

표 2-11. 해외 진출 기업이 속한 2023년 매출액 상위 10개 제조업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비중)	매출	한국 매출 (비중)	현지 매출 (비중)	제3국 매출 (비중)
자동차 (36.2)	175,079	5,242 (3.0)	134,272 (76.7)	35,565 (20.3)
전자 (22.0)	106,313	44,265 (41.6)	42,835 (40.3)	19,214 (18.1)
전기장비 (12.6)	61,148	17,724 (29.0)	26,155 (42.8)	17,270 (28.2)
화학 (7.6)	36,933	1,095 (3.0)	28,957 (78.4)	6,880 (18.6)
1차금속 (5.5)	26,407	1,655 (6.3)	22,488 (85.2)	2,264 (8.6)
금속가공 (2.5)	11,887	2,335 (19.6)	7,872 (66.2)	1,679 (14.1)
기계 (2.4)	11,581	2,299 (19.9)	8,422 (72.7)	859 (7.4)
고무 · 플라스틱 (1.7)	8,367	661 (7.9)	6,016 (71.9)	1,689 (20.2)
식품류 (1.7)	8,161	1,029 (12.6)	6,329 (77.6)	802 (9.8)
기타제조업 (1.7)	8,098	5,093 (62.9)	2,313 (28.6)	691 (8.5)
제조업 (58.5)	483,514	92,841 (19.2)	298,199 (61.7)	92,474 (19.1)
전체	826,976	118,766 (14.4)	543,911 (65.8)	164,300 (19.9)

주: 1) 산업의 비중은 제조업 매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단 제조업의 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비중임.

2) 기타제조업은 상기 9개 산업 외에도 가죽 · 가방 · 신발, 의복 · 모피, 섬유,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석유정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운송장비, 음료, 의약품, 펄프 · 종이, 가구, 담배, 인쇄 · 기록매체, 목재 · 나무 등을 제외한 기타의 제조업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출의 경우도 비슷하게 한국 매출(46.5%→41.6)의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 비하면 여전히 한국 매출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기장비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29.8%→34.2%)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이 외에는 현지관계사매입(5.1%→9.5%)의 비중이 증가하고 현지기타매입(40.2%→31.9%)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제3국 매입(24.9%→24.4%)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기장비의 경우 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매입과 매출의 비중이 모두 높은 편이며, 더불어 다른 산업에 비하면 제3국 매입과 매출의 비중도 모두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매출의 경우 한국 매출(23.5%→29.0%)과 제3국 매출(17.9%→28.2%)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앞의 산업들과는 정반대로 매입 구조와 매출 구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매입의 경우 한국 매입(22.1%→35.6%)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이다. 반면 현지 매입(72.3%→53.6%)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현지관계사 매입(28.2%→16.0%)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매출의 경우 한국 매출(1.7%→3.0%)의 비중은 소폭 증가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현지 매출(83.2%→76.7%)의 비중은 비록 감소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현지 판매 진출의 성과를 보여주는 현지기타매출(66.4%→63.4%)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23.5%→13.6%)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제3국 매입(12.9%→21.1%)의 비중이 증가했다. 다만 비율적으로는 여전히 현지 매입(63.6%→6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현지관계사매입(21.4%→33.2%)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주요 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지 매입에서 관계사(33.2%)와의 거래가 비관계사(32.1%)와의 거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매출의 경우 한국 매출(3.0%)의 비중은 크지 않으며, 현지 매출(79.9%→78.4%)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지기타매출(59.8%→52.8%)의 비중이 크지만, 과거에 비하면 현지관계사매출(20.0%→25.6%)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고무·플라스틱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27.6%에서 2023년 33.8%로 증가하였다. 반면 제3국 매입(38.6%→11.8%)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현지 매입(33.8%→54.3%)은 관계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의 경우 제3국 매출의 비중이 2014년 31.7%로 주요 산업 중 가장 높았으나, 2023년 20.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 매출(8.3%→7.9%)은 낮은 비중이 유지되었으며, 반면 현지기타매출(39.1%→49.5%)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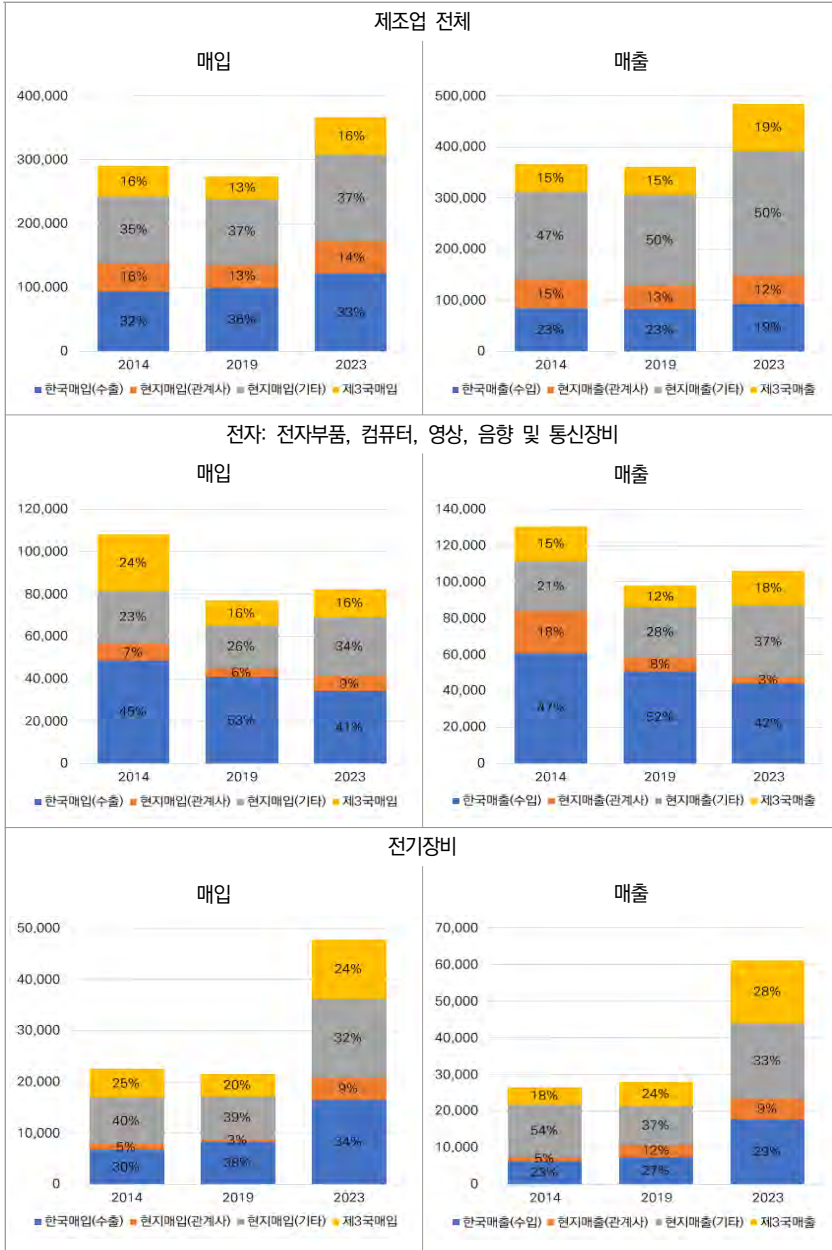
1차 금속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33.3%→36.9%)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지 매입(53.7%→53.2%)의 경우 변화가 미미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현지관계사매입(23.6%→17.6%)의 비중이 감소하고, 현지기타매입(30.1%→35.7%)이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현지 매입의 비중이 높고, 제3국 매입(13.0%→9.8%)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매출의 경우 현지 매출(84.7%→85.2%)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금속가공제품 산업의 매입 구조는 1차금속과 유사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 매입(28.9%→27.9%)의 비중이 조금 낮고, 제3국 매입(14.4%→16.6%)의 비중이 큰 편이다. 또한 현지 매입의 경우 현지관계사매입(15.2%→3.4%)에 비해 현지기타매입(41.5%→52.1%)의 비중이 매우 크다. 매출 구조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현지기타매출(67.0%→62.0%)의 비중이 높고, 현지관계사매출(3.4%→4.3%)의 비중은 낮다.

기계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25.9%→32.4%)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지관계사매입(14.8%→6.9%)의 비중이 감소해, 현지 진출보다는 한국에서 직접 공급하는 네트워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지기타매입(52.2%→53.9%)의 비중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크고, 제3국 매입(7.2%→6.7%)의 비중이 작아 생산 네트워크의 현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매출의 경우도 앞의 금속 관련 산업들과 유사하며 그간 구조적인 변화도 크지 않았다. 다만 현지 매출(76.2%→72.7%), 그중에서도 현지기타매출(59.2%→68.5%)의 비중이 높고 제3국 매출(5.8%→7.4%)의 비중이 낮아 마찬가지로 현지 시장에서의 성과가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그림 2-36. 한국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산업별 매입 및 매출 비중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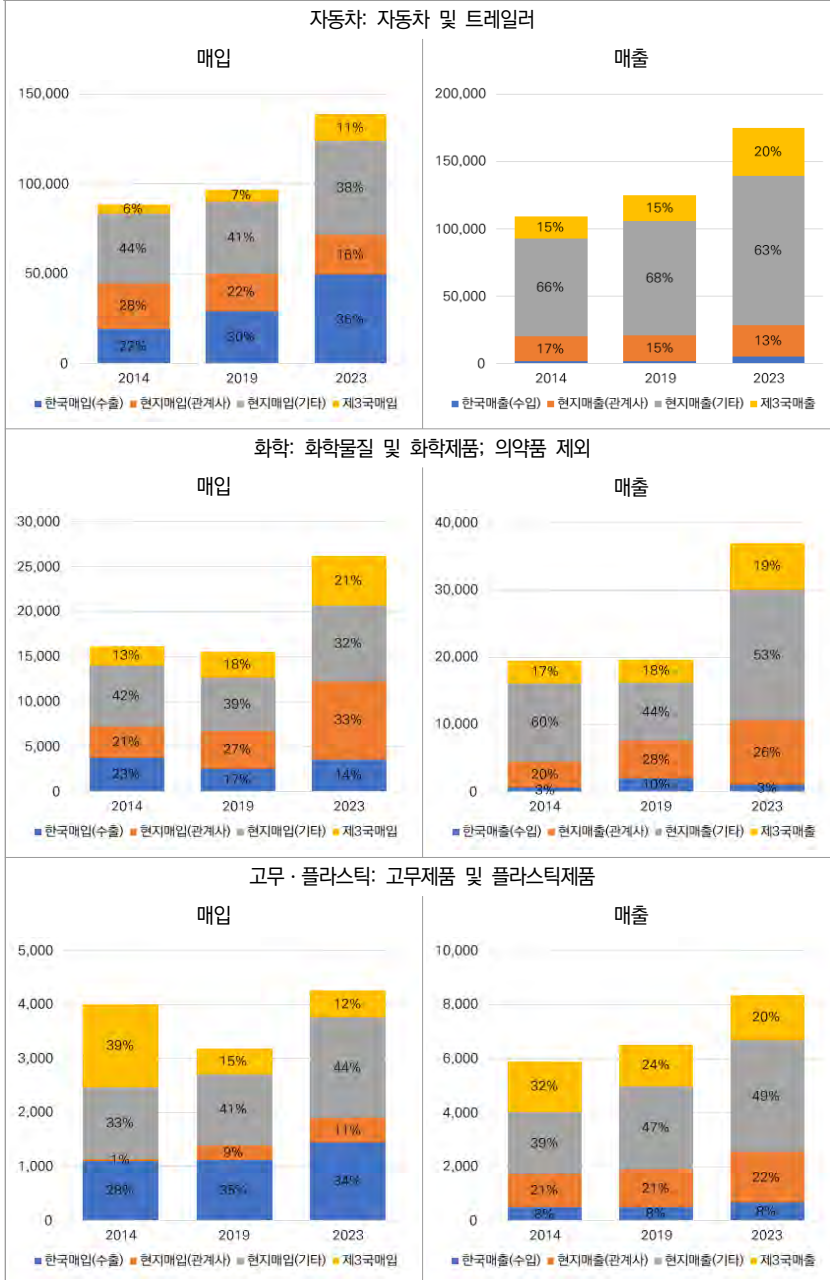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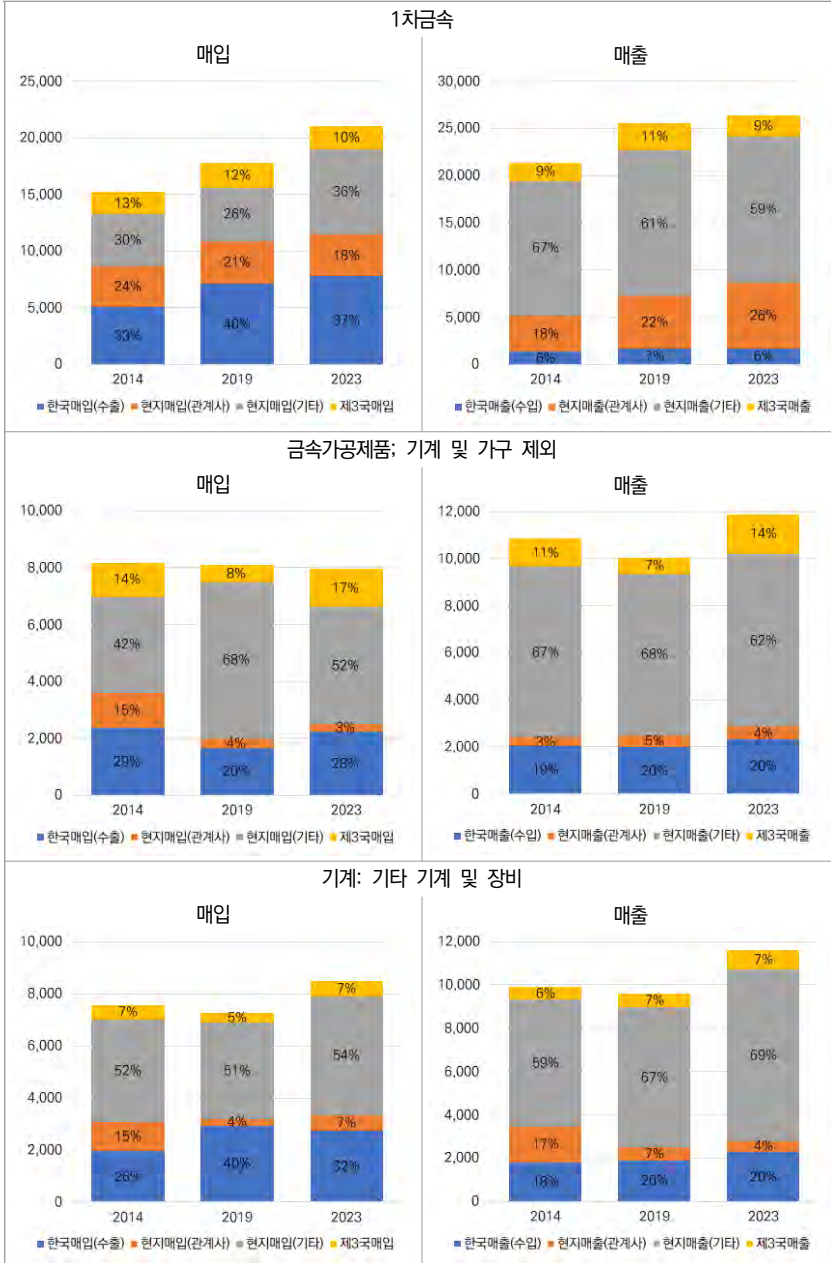


그림 2-36.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 분석

1) 분석 배경 및 목적

앞선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지 진출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본 항에서는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수출 증가와 직접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2005~20년 기간에 전 세계 국가별 74개 비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OFDI 증가 정도가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산업 관련 상품의 (중간재) 수출 증가 정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된 해외 생산 네트워크가 현지 생산 및 판매, 제3국 수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수출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²⁶⁾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앞선 제2장 1절 나항의 상관관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상대국-상대국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UNcomtrade 자료로부터 상대국-상대국 산업별 (중간재) 수출액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총 242개 국가 및 74개 산업을 대상으로 총 4개 연도(2005, 2010, 2015, 2020)로 이루어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6) 우리나라의 OFDI가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흥식 외(2020), 김혁황, 현해정(2011) 등이 있다. 분석 대상 기간, 분석 자료, 분석 방법에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 증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했다. 제2장 1절 나항에서 사용했던 회귀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종속변수로 상대국(c)-상대국 산업(i)-한국 산업(j)별 수입중간재 투입액 혹은 그 자연로그 값($Import_{cijt}$)이 아닌 상대국(c)-상대국 산업(i) 관련 상품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액 혹은 그 자연로그 값($Export_{cit}$)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Export_{cit} = \beta OFDI_{cit} + \mu_{ci} + \eta_t + \epsilon_{cit} \quad [\text{식 2-2}]$$

$OFDI_{cit}$ 는 제2장 1절 나항 회귀식과 마찬가지로 t 연도 기준 c 국가 i 산업으로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달러) 혹은 그 자연로그 값을 의미하며 μ_{ci} 와 η_t 는 각각 상대국-상대국 산업-한국 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가리킨다. $OFDI_{cit}$ 의 계수 추정치는 c 국가 i 산업에 대한 누적 해외직접투자 증가 시 c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i 산업 관련 상품 수출액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관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즉 상대국-상대국 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Export_{cit}$ 와 $OFDI_{cit}$ 사이의 일종의 조건부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초 통계 및 산점도

[표 2-12]는 2020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기준 상위 30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을 보여준다. 2005~20년 기간에 이 30개국에 대한 OFDI 누적잔액은 평균 164.2%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평균 59.9% 증가하였다.

표 2-12.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기준 상위 30개국에 대한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상대국	항목	2005	2010	2015	2020	2005~2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1	중국	수출액	61,556	116,287	136,711	131,234	69,678	72.3
		누적 OFDI	88,041	193,016	298,959	433,286	345,245	132.4
2	미국	수출액	41,241	49,698	69,795	71,862	30,621	54.1
		누적 OFDI	51,338	93,233	164,865	224,623	173,285	125.6
3	베트남	수출액	3,422	9,615	27,738	48,436	45,014	173.6
		누적 OFDI	10,171	35,958	71,697	139,126	128,954	172.7
4	호주	수출액	3,803	6,631	10,817	6,142	2,339	47.0
		누적 OFDI	3,976	14,952	73,651	87,747	83,771	182.7
5	캐나다	수출액	3,438	4,086	4,607	5,377	1,939	44.0
		누적 OFDI	3,604	32,866	60,694	62,163	58,559	178.1
6	인도네시아	수출액	5,037	8,873	7,852	6,208	1,171	20.8
		누적 OFDI	9,861	22,685	43,551	55,243	45,383	139.4
7	홍콩	수출액	15,449	25,091	30,254	30,023	14,574	64.1
		누적 OFDI	4,173	22,187	33,027	48,811	44,638	168.5
8	브라질	수출액	2,409	7,745	5,485	3,877	1,468	46.7
		누적 OFDI	3,413	19,381	35,451	44,207	40,793	171.3
9	네덜란드	수출액	3,607	5,273	4,014	3,861	254	6.8
		누적 OFDI	14,189	25,299	48,067	42,128	27,939	99.2
10	인도	수출액	4,578	11,330	11,894	11,695	7,117	87.5
		누적 OFDI	5,032	13,067	24,514	41,936	36,904	157.1
11	영국	수출액	5,325	5,505	7,816	4,454	-871	-17.8
		누적 OFDI	-539	24,855	34,697	33,899	34,437	206.5
12	말레이시아	수출액	4,578	6,093	7,682	8,963	4,385	64.8
		누적 OFDI	3,224	18,352	28,376	33,188	29,964	164.6
13	멕시코	수출액	3,776	8,828	10,877	8,060	4,284	72.4
		누적 OFDI	1,521	4,293	20,093	30,472	28,951	181.0
14	폴란드	수출액	1,175	4,380	2,807	5,540	4,365	130.0
		누적 OFDI	4,274	8,205	9,102	26,732	22,458	144.9
15	싱가포르	수출액	7,384	15,186	14,945	9,637	2,253	26.5
		누적 OFDI	1,357	3,247	13,904	24,014	22,657	178.6
16	케이만군도	수출액	37	2,076	542	39	2	4.2
		누적 OFDI	166	1,463	3,225	23,597	23,431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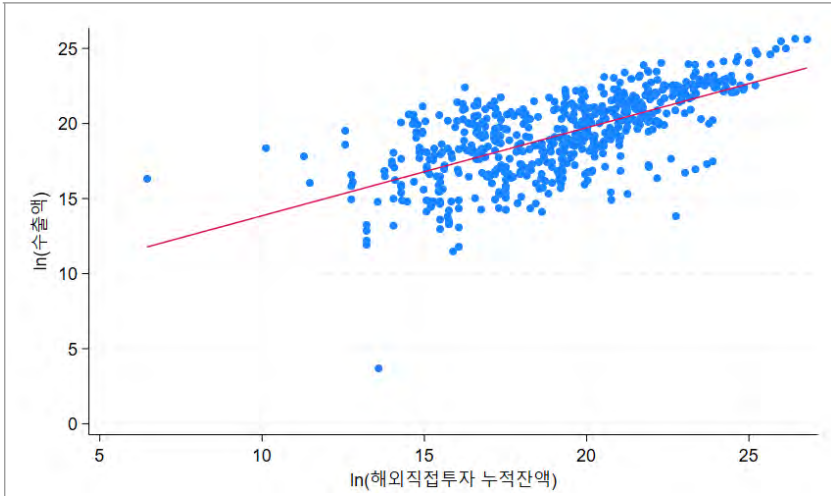
표 2-12. 계속

(단위: 백만 달러, %)

	상대국	항목	2005	2010	2015	2020	2005~20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가율
17	미얀마	수출액	120	475	658	606	486	134.0
		누적 OFDI	231	4,516	16,476	23,570	23,339	196.1
18	필리핀	수출액	3,206	5,814	8,229	7,048	3,842	74.9
		누적 OFDI	3,490	5,630	17,177	22,863	19,373	147.0
19	페루	수출액	282	944	1,216	480	198	52.0
		누적 OFDI	3,260	5,702	11,980	20,998	17,738	146.2
20	마다가스카르	수출액	14	47	23	32	18	78.1
		누적 OFDI	22	6,521	13,808	19,786	19,763	199.6
21	독일	수출액	10,098	10,658	6,179	9,237	-860	-8.9
		누적 OFDI	1,121	2,426	7,662	15,629	14,508	173.2
22	러시아	수출액	3,839	7,751	4,680	6,839	3,001	56.2
		누적 OFDI	1,267	10,447	13,118	15,268	14,001	169.3
23	일본	수출액	23,705	27,595	25,201	24,496	791	3.3
		누적 OFDI	2,804	4,820	11,168	13,695	10,891	132.0
24	태국	수출액	3,370	6,302	6,328	6,660	3,289	65.6
		누적 OFDI	3,043	5,237	11,097	12,617	9,574	122.3
25	헝가리	수출액	1,099	2,377	1,016	2,862	1,763	89.0
		누적 OFDI	860	1,356	1,680	12,447	11,587	174.1
26	체코	수출액	339	1,163	2,039	2,571	2,232	153.4
		누적 OFDI	233	7,457	8,381	11,582	11,349	192.1
27	룩셈부르크	수출액	13	21	13	18	5	34.4
		누적 OFDI	47	196	4,257	10,060	10,013	198.1
28	오스트리아	수출액	970	951	880	958	-12	-1.2
		누적 OFDI	-327	-301	2	9,936	10,263	213.6
29	슬로바키아	수출액	691	4,422	3,538	2,209	1,517	104.6
		누적 OFDI	2,542	7,067	8,526	9,058	6,516	112.3
30	튀르키예	수출액	2,779	3,743	6,246	5,512	2,733	65.9
		누적 OFDI	1,220	4,236	6,905	8,493	7,273	149.8
30개국 평균		수출액	7,245	11,965	14,003	14,165	6,720	59.9
		누적 OFDI	7,454	19,946	36,537	51,906	44,452	164.2

자료: 2005, 2010, 2015, 2020년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Ncomtrade의 품목별 무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 투자 자료(검색일: 2025. 6. 5.) 등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7.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과 수출액 간의 산점도



주: 각 점은 2005, 2010, 2015, 2020년 4개 연도 중 한 연도의 특정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자연로그 값과 해당 연도에 해당 국가에 대한 한국 수출액의 자연로그 값을 의미함.

자료: 2005, 2010, 2015, 2020년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Ncomtrade의 품목별 무역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자료(검색일: 2025. 6. 5.) 등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이어지는 [그림 2-37]은 2005~20년 기간 중 특정 연도의 특정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총 OFDI 누적잔액 자연로그 값과 우리나라의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액 자연로그 값의 산점도를 보여준다. 한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이 많을수록 그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도 많은 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지는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에서 더 많은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한국의 특정 국가에 대한 OFDI와 수출액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4)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표 2-13]은 앞서 소개한 회귀분석 식을 활용해 상대국-상대국 산업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OFDI-(중간재)수출액 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1)~(3)열의 결과는 특정 국가-산업에 대한 한국의 OFDI가 늘어날수록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산업 관련 상품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양(+)의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견됨을 보여준다. 수출액과 OFDI 누적잔액이 0보다 큰 관측치만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나 전체 관측치를 모두 사용했을 때 모두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관측치를 대상으로 한 (3)열의 분석 결과를 예로 들면 특정 국가-산업으로의 우리나라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산업 관련 상품 수출이 0.96달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 상관관계가 앞서 살펴본 해외직접투자-해외 중간재 투입액의 상관관계보다 양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13. 해외직접투자-수출액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분석 대상 기간: 2005, 2010, 2015, 2020					
	ln(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ln(중간재 수출액)	중간재 수출액	중간재 수출액
	(1)	(2)	(3)	(1)	(2)	(3)
ln(OFDI 누적잔액)	0.158*** (0.0173)			0.178*** (0.0230)		
OFDI 누적잔액		1.595*** (0.485)	0.964** (0.379)		1.485*** (0.167)	0.888*** (0.284)
상대국-상대국 산업 고정효과	0	0	0	0	0	0
연도 고정효과	0	0	0	0	0	0
분석 대상	수출액 > 0, OFDI 누적잔액 > 0	수출액 > 0, OFDI 누적잔액 > 0	전체 국가	중간재 수출액 > 0, OFDI 누적잔액 > 0	중간재 수출액 > 0, OFDI 누적잔액 > 0	전체 국가
총관측치	6,433	6,433	71,632	5,980	5,980	71,632
R-squared	0.922	0.913	0.891	0.915	0.926	0.893

주: 괄호 안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p<0.01, ** p<0.05, * p<0.1).

[표 2-13]의 (4)~(6)열은 OFDI와 중간재 수출액에 대한 상관관계 추가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1)~(3)열의 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의 절대적 크기 측면에서도 (1)~(3)열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수출액 상승 경향성은 대부분 중간재 수출액 상승 효과로 설명 가능함을 시사한다.

표 2-14.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 국가별 조건부 상관관계 분석

상대국 교차항	수출액 (1)	중간재 수출액 (2)
OFDI 누적잔액	1.573***	1.521***
x 중국	(0.543)	(0.153)
OFDI 누적잔액	0.361	0.121
x 미국	(0.231)	(0.0758)
OFDI 누적잔액	3.087***	2.470**
x 베트남	(1.159)	(1.062)
OFDI 누적잔액	0.551**	0.528***
x 멕시코	(0.215)	(0.197)
OFDI 누적잔액	0.471*	0.472*
x 인도	(0.250)	(0.252)
OFDI 누적잔액	0.124*	0.121*
x 인도네시아	(0.0719)	(0.0714)
OFDI 누적잔액	0.0697	0.0947
x 브라질	(0.104)	(0.107)
OFDI 누적잔액	0.180**	0.162**
x 동유럽	(0.0894)	(0.0713)
OFDI 누적잔액	0.0912	0.0778
x 기타	(0.0618)	(0.0552)
상대국-상대국 산업 고정효과	O	O
연도 고정효과	O	O
분석 대상	전체 국가	전체 국가
총 관측치	71,632	71,632
R-squared	0.910	0.927

주: 괄호 안 숫자는 강건 표준오차를 나타냄(*** p<0.01, ** p<0.05, * p<0.1).

[표 2-14]는 국가 더미 교차항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 상관관계가 상대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1)열과 (2)열은 각각 종속변수로 수출액과 중간재 수출액을 사용하였다. 두 열의 결과가 질적으로 서로 유사한 것은 역시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 상관관계의 상당 부분을 중간재 수출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멕시코, 인도, 동유럽, 인도네시아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 멕시코를 중심으로 OFDI를 통한 해외 생산 기지 건설 → 국내 중간재 수출 증가라는 공식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반면 미국, 브라질 등에서는 해외직접투자-수출액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 소결

본 절에서는 먼저 2014년과 2023년 한국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 구조 변화를 국가별·산업별(제조업)로 비교하고 매출 구조와 대조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현지 진출 기업의 한국 매입은 한국의 수출 유발 지표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 수출로 볼 수 있는 한국 매입의 비중이 2014년 50%에서 2023년 59%로 더욱 높아졌다. 더불어 현지기타(비관제사)매출(76%→84%)의 비중이 더욱 증가해 시장지향적 투자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중국 진출 기업의 한국 매입은 2014년 28%에서 2019년 35%로 증가했으나 2024년 24%로 다시 감소해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했다. 반대로 현지기타매입(34%→50%)의 비

중이 증가하면서 현지 생산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진출 기업 역시 한국 매입(29%→23%)의 비중이 다소 감소했는데, 다만 현지 관세사에 대한 매입/매출의 증가로 상쇄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매입(43%→42%)의 큰 비중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 입장에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한국 매출(36%→47%)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경우 한국 매입(8%→17%)의 비중이 크지 않으나 과거에 비하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멕시코·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한국 매입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해외 진출 기업의 한국 매입(한국 입장에서 수출)은 2014년 32%에서 2023년 33%로 변화가 미미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반면 한국 매출(수입)은 23%에서 19%로 감소하였다. 또한 전자(45%→41%)와 전기장비(30%→34%)는 과거부터 한국 매입의 비중이 높은 산업 중 하나였으며, 더불어 한국 매출의 비중이 2023년 기준 각각 40.3%와 42.8%로 가장 높은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 매입(22%→36%)의 비중이 지난 10여 년간 가장 크게 증가해 한국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킨 경로 중 하나임을 보였다. 이를 포함해 고무·플라스틱(28%→34%), 1차금속(33%→37%), 기계(26%→32%) 등 여러 산업에서 한국 매입의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이어지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특정 국가-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OFDI의 증가분이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산업 관련 상품 수출 증가분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5~20년 기간에 특정 국가-산업으로 우리나라의 OFDI가 1달러 증가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산업 관련 상품 수출이 0.96달러(중간재의 경우 0.89달러) 증가하는 강한 양(+)의 조건부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베트남, 중국,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 해당 상관관계가 더 큰 양(+)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베트남과 중국, 멕시코를 중심으로 OFDI를 통한 해외 생산 기지 건설→국내 중간재 수출 증가라는 공식이 주효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앞선 해외 진출 현지 법인의 매입 구조 분석 결과와 이어지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유효한 채널로 활용되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가. 연구 배경 및 개요

한국은 해외 생산거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왔으며, 이를 통해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한 단계씩 고도화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왔고, 이러한 성과가 확인되었기에 해외 생산거점 확대가 지속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외직접투자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가 수출 경쟁력과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한편 한국처럼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해외 진출이 국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 결과 특히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수준의 매출 실적과 수출 실적, 그리고 국내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연구에 기반한 실증 분석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다음 소절들에서는 이번 연구가 활용하는 기업 단위 자료인 기업활동조사를 소개한다. 집단 간 평균 비교만으로도 위의 문제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해외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기업 특성 및 실적 차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산업군별로는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논한다. 평균 분석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인과 관계에 접근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이 도입한 도구변수 추정법을 활용한다. 실증 추정 모형을 상세히 논의한 후에 추정 결과를 해석한다.

나. 분석 자료

1) 기업활동조사

이번 연구가 시도하는 가설 검정은 한국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활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 단위 미시자료(firm-level microdata)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기업별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대외투자를 연도별로 추적 가능한 자료에 접근해야 이번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전국 단위 공식 통계들 중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활동조사이다. 기업활동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된 기업 단위 설문자료로, 두 개의 조사표(조사표 1, 조사표 2) 중 조사표 2의 관계회사 조사에서 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 대상국, 산업분류(ksic 기준 2-digit 단위), 액수 등을 명시한다.

기업활동조사에서 설문 대상이 되는 ‘기업’이란 법인을 의미한다. 즉, 기업활동조사가 도모하는 기업 단위(firm-level) 조사는 사업체 단위(plant-level, 혹은 establishment-level) 조사와는 구분된다. 가령 한 대기업 법인이 전국에 여러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체 단위 조사에서는 각 사업체가 별

개의 관측치로 식별되지만, 기업 단위 조사인 기업활동조사에서는 법인 단위의 집계치가 식별된다.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고 집계되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활동은 사업체 단위 설문 통계가 아닌 기업 단위 설문 통계에서 파악된다. 주 사업 분야, 해외투자 대상국, 투자 규모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정보가 통계 이용자들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명이나 등록번호는 철저히 익명화되어 제공된다. 익명화된 각 기업의 연도별 활동을 패널 자료로 전체 표본에 대해 분석하려면 통계청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기업활동조사의 조사 대상은 조사 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기업으로, 기본적으로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단,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활동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물론 기업체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내 모든 기업체다. 하지만 모든 설문조사가 그렇듯 50인 이상 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모집 대상은 일정 부분 표본 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유발하는 강한 제약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연구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조사를 통하여 다른 주제를 분석하는 연구들보다는 표본 선택 편의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소절에서도 소개하듯이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외 직접투자 경험이 없는 기업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고용 규모나 자산 규모, 자본 규모가 크다. 실제로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산업별, 투자 대상국별 투자 흐름을 집계하여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면, 국내 기관들이 집계해온 해외직접투자 총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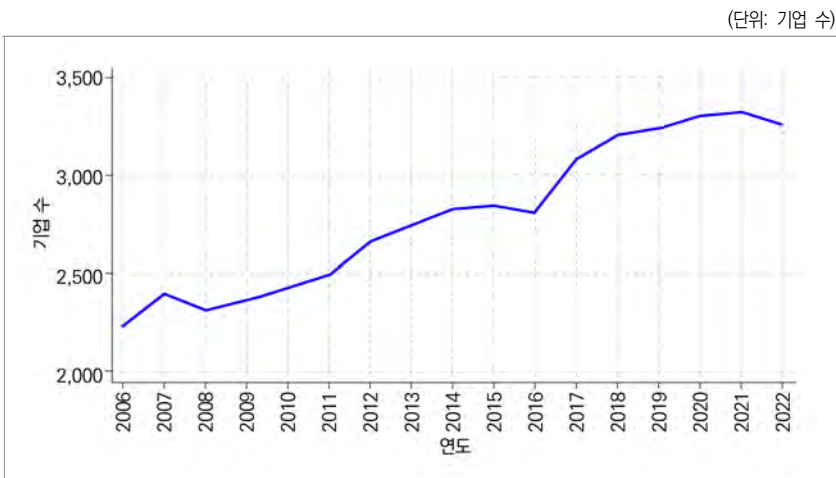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기업활동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 특성(업력, 산업 구분, 고용 규모 등), 재무 정보(자산), 성과 정보(수출, 수익 등)를 해외직접

투자액 정보와 함께 결합하여 실증적 추정을 실시한다. 순환 패널 구조 (rotating panel structure)를 갖는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연도들에 대하여 각 기업들이 모두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불균형 패널 자료 (unbalanced panel data)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별 고정효과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

2) 집계 추이

이번 연구는 기업활동조사가 실시된 최초 연도인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정보인 설문 대상 기업의 연도별 해외투자 정보는 누적 개념이 아닌 연도별 흐름(flow) 개념으로 데이터상에 수록된다. 즉, 각 연도에 특정 해외 국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유량 개념으로 데이터상의 수치를 해석해야 한다. [그림 2-38]에 따르면, 2006년 이래 2022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그림 2-38. 기업활동조사 설문 내 연도별 해외투자 기업 수(2006~22년)



주: 연도별로 해외투자 액수가 관찰되는 기업 수를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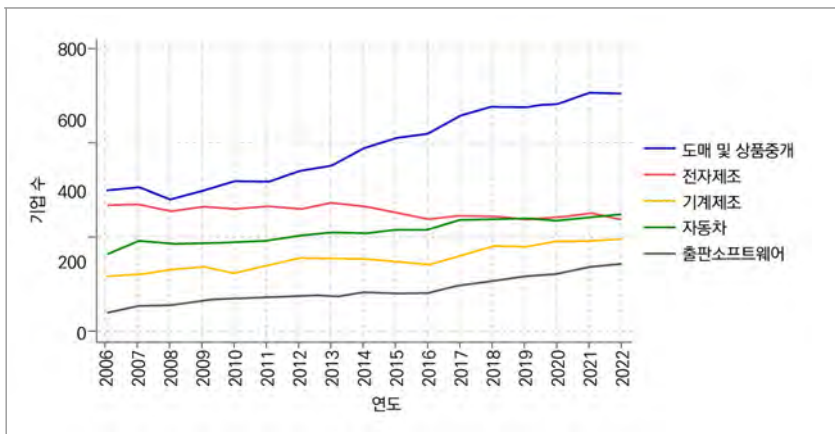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2 SDC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기업의 수는 꾸준히 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증가세가 한 번 꺾인 것을 알 수 있으며, 2010년대 초반에 둔화되던 성장세가 2016년에는 역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던 추세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다시 성장세 둔화를 겪는다. 2022년 기준, 전체 설문 대상 기업 중 약 3,200개가량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했다.

[그림 2-39]는 KSIC 2-digit 산업분류 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 실시 기업 수 기준 2022년 상위 5개 산업을 선정하여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다. 해외직접투자 실시 기업 수 기준으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자제조, 기계제조, 자동차, 출판소프트웨어 분야의 해외 진출이 2022년 가장 두드러졌다. 이 다섯 개 산업 분야 중 전자제조 분야는 해외투자 기업 수가 2006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나머지 네 개 산업 분야는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급격한 증가세에 비해 나머지 산업 분야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 분야의

그림 2-39. 기업활동조사 설문 내 상위 5개 산업별 · 연도별 해외투자 기업 수(2006~22년)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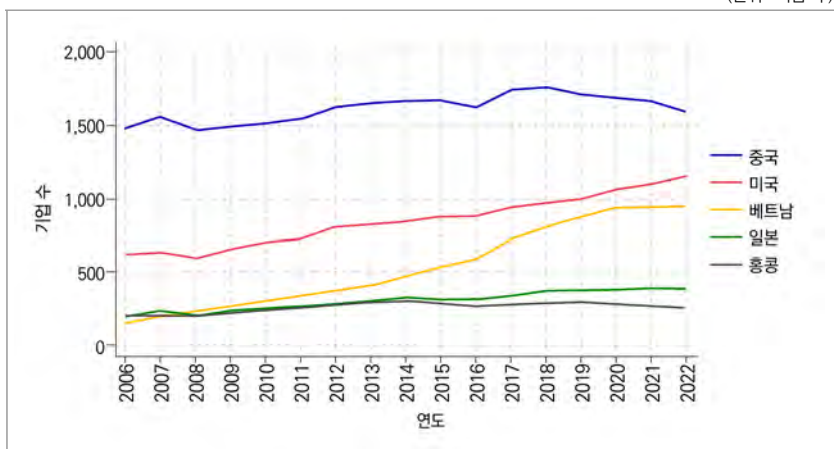
주: 연도별로 상위 5개 산업군(2-digit)에 대하여 투자 기업 수를 집계함.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2 SDC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경우, 최근 5년간은 해외직접투자 실시 기업 수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40]은 기업활동조사의 설문 대상 기업들이 실시한 해외직접투자가 투자 대상국별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2022년 기준 상위 5대 목적지인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에 대한 진출 기업 수 추이를 연도별로 도시했다. 조사기간 내내 설문 대상 기업 중 1,500개 기업 이상이 중국으로 직접투자를 실시하며 압도적인 1위 대상국 지위가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7년을 전후하여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실시 기업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2위 미국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미국과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베트남 진출은 2016년 이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다. 일본에 대한 증가세는 아주 미세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2017년을 전후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이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림 2-40. 기업활동조사 설문 내 상위 5개국별 · 연도별 투자 기업 수 추이(2006~22년)

(단위: 기업 수)



주: 한국의 주요 투자처 5개국에 대하여, 연도별로 해외투자 액수가 관찰되는 기업 수를 집계함.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2 SDC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다. 산업별·해외투자 이력별 기업 특징

이번 장의 연구는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경영 실적 및 국내 일자리 창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회귀분석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이전에, 요약 통계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유의미한 특징 및 실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표 2-15]는 주요 제조업 분야별로 기업당 평균 몇 개국에 투자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했는지를 요약한 표다. 그리고 산업별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1위, 2위 투자 대상국을 명시했다. 2006~22년간의 모든 건수를 대상으로 평균값과 국가별 비중을 계산했다. 그리고 2006~22년간의 기업별 해외직접투자를 누적하여 수치를 도출했다.

먼저 모든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당 해외투자 대상국은 1.5개국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활동조사가 중소 및 중견기업을 다수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를 실시할 여력이 있는 기업의 수가 표본에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에서만 평균 1.5개국을 기록했고, 나머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모두 1.5개국 미만의 평균 투자 대상국을 가졌다. 연도별 투자 건들의 평균 투자 금액은 산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알 수 있는데, 평균치가 200억을 상회하는 기업군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건당 100억 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주요 제조업 산업군에서는 건당 100억 원 이하의 투자가 평균적으로 관찰된다.

주요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제외하면, [표 2-15]

상의 다른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었다. 비중 면에서도 매우 압도적인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이다. 2위 대상국으로는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관찰되며 그중 베트남이 가장 많이 2위 대상국으로 식별되었다. 이 외에도 필리핀(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호주(1차 금속 제조업), 말레이시아(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인도네시아(금속가공제품 제조업)가 중국의 뒤를 잇는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처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처이고, 전기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중국의 뒤를 잇는 2위 투자처다.

[표 2-16]의 경우, 2022년에 설문 대상에 오른 기업들을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기업별 특징(고용 규모, 업력, 자산)을 파악한 자료다. 해외직접투자 경험은 기업활동조사가 실시된 2006~22년을 기준으로 판별했으며, 사실상 2006년부터 단 한 번도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그 이전에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표 2-16]의 수치들은 모평균과 매우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표 2-16]을 관통하는 통찰은 다음과 같다.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정규직 고용을 실시하여 인적 규모가 크고, 자산 규모가 더 크며, 그리고 업력이 더 높다. 일견 아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는 산업조직 관련 실증 연구들이 오랫동안 확인해온 바를 한국의 기업 단위 데이터에서도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일종의 높은 진입장벽이 요구되는 경영 행위로, 자금 조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영업 경험, 재무 역력이 건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표 2-15. 주요 제조업별 투자 총계 및 1위, 2위 대상국(2006-22년)

산업 코드	산업명	투자 실시 기업 수(개)	기업별 평균 투자국 수(개국)	투자국당 평균 투자 금액(백만 원)	산업 집계 투자액 내 중국 비중(%)	1위 대상국	2위 대상국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4	1.46	20,240.48	38.72	중국	말레이시아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3	1.5	11,544.14	27.39	미국	중국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4	1.42	9,273.312	52.86	중국	베트남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9	1.26	6,426.768	70.27	중국	베트남
24	1차 금속 제조업	148	1.24	25,201.71	26.55	중국	호주
25	금속기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22	1.38	11,641.41	31.79	중국	인도네시아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08	1.41	26,852.05	63.68	중국	베트남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0	1.46	4,853.638	55.51	중국	베트남
28	전기장비 제조업	295	1.33	20,032.03	38.2	중국	미국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35	1.37	8,733.821	43.12	중국	미국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2	1.5	19,408.67	44.62	중국	인도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0	1.11	23,754.71	47.87	중국	필리핀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2 SDC 자료를 통해 자차 계산

표 2-16. 2006~22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경험에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2022년 기준 특성

산업 코드	산업명	해외투자 경험 유 기업 수(개)	해외투자 경험 無 기업 수(개)	해외투자 경험 유 평균_정규직 고용 규모	해외투자 경험 無 평균_정규직 고용 규모(명)	해외투자 경험 유 평균 자산	해외투자 경험 無 평균 자산	해외투자 경험 유 평균 임력(년)	해외투자 경험 無 평균 임력(년)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7	231	496.21	154.13	877,713.8	178,573	29.65	28.33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1	134	644.25	222.28	643,635.6	138,181	32.75	29.11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5	211	315.81	122.21	215,060.6	50,247.1	29.19	23.8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	105	429.34	153.83	539,561.8	153,835.7	34.6	27.69
24	1차 금속 제조업	136	196	522.08	129.91	1,074,862	113,966.2	32.8	28.7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9	243	250.99	111.82	277,791	54,364.3	30.22	22.2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71	282	864.09	215.04	1,428,434	91,691.5	25.08	20.3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3	110	274.59	126.81	197,585.2	51,647.6	21.8	21.93
28	전기장비 제조업	174	206	680.97	147.99	776,061.5	82,738.4	28.59	23.0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6	418	231.2	147.4	190,685.1	68,653.9	26.25	23.52
30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339	365	685.07	157.64	754,109.4	73,076.2	29.56	22.98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	79	1,486.91	161.03	2,065,312	112,151.2	27.02	21.24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2 SDC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표 2-17. 2006~22년 동안 해외직접투자 경험에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2022년 기준 성과

산업 코드	산업명	해외투자 경험 有 기업 수	해외투자 경험 無 기업 수	해외투자 경험 有 평균 매출(백만 원)	해외투자 경험 無 평균 매출(백만 원)	해외투자 경험 有 평균 비용(백만 원)	해외투자 경험 無 평균 비용(백만 원)	해외투자 경험 有 평균 수출액 (백만 원)	해외투자 경험 無 평균 수출액 (백만 원)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7	231	755,837	215,297.3	719,550.2	200,112.7	288,670.3	50,881.8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1	134	327,231.9	90,738	285,017.9	84,169	79,680.4	4,453.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5	211	188,320.5	52,555.9	183,556.4	50,483.2	59,402.4	7,505.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	105	326,802.8	114,372.7	306,441.9	109,660.8	92,829.7	11,270.7
24	1차 금속 제조업	136	196	1,017,739	161,765.1	960,596.9	154,364.6	216,372.3	35,501.5
25	금속기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9	243	166,458.1	52,062.3	160,167.6	50,186.7	31,998.5	6,914.4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71	282	1,045,512	100,292	934,155.5	93,771.8	574,916.1	131,317.2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3	110	134,656.4	47,527.5	114,956.3	42,990.4	57,733.8	14,088.4
28	전기장비 제조업	174	206	633,911.4	94,894.4	621,695.7	90,457.7	244,976.1	15,326.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6	418	1.57E+05	74,413.7	146,218.3	69,630.2	58,368.4	21,218.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6	365	726,168.5	94,332.9	698,058.2	91,655.4	279,475.1	16,351.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4	79	107,004.3	62,571.5	114,591.9	63,808.9	735,310.2	18,087.7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2 SDC 자료를 통해 저자 계산.

[표 2-17]은 앞의 [표 2-16]과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 기업 성과 및 지출 내역(매출, 수출, 비용)을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명시했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매출과 수출 실적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비용 지출 역시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고용 실적에 더해, [표 2-17]에 나타난 매출 실적과 수출 실적은 이후에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인과 관계를 엄밀히 평가한다. 요약통계표에서는 해외직접투자 경험과 고용 실적, 매출 실적, 수출 실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 실증적 추정 모형

기업활동조사에서 파악 가능한 각 기업의 2006~23년까지의 연도별 누적 해외투자액이 각 기업의 국내 정규직 고용 창출, 매출 실적, 그리고 수출 실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이 사용해온 실증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²⁷⁾ 해외투자 이력이 실제 기업들의 경영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내 산업 일자의 해외 유출 우려가 실제 통계학적으로는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해외투자 실적과 고용 및 경영 실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개념 간의 내생성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변수가 필요한데, 도구변수 구축은 Desai, Foley, and Hines Jr.(2009) 등 기업 단위 분석 문헌들의 방법을 따른다. 일단 기본적인 기준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아래첨자 i 는 각 기업을, c 는 KSIC-2digit 단위의 산업 소속을, t 는 연도를 나타낸다.

²⁷⁾ 기업활동조사에서 2023년 자료가 아직 가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서 앞선 요약 통계량 분석에서는 2006~22년 자료만 사용했지만 이후 계량분석에서는 표본 수 확보를 위해 2023년 관측치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관측치를 분석에 포함시킴.

$$DepVar_{ict} = \beta_0 + \beta_1 CInv_{ict} + \beta_2 Age_{ict} + \beta_3 Age_{ict}^2 + \beta_4 Asset_{ict} + \beta_5 RnD_{ict} + \mu_i + \lambda_t + \epsilon_{ict} \quad [\text{식 2-3}]$$

$DepVar_{ict}$ 는 종속변수로서 국내 정규직 고용 규모(Lab_{ict} , 명 단위), 매출 실적($sales_{ict}$, 백만 원 단위), 수출액 실적($export_{ict}$, 백만 원 단위)으로 이루어진다. $CInv_{ict}$ 는 각 기업의 각 연도 t 까지의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을 백만 원 단위로 나타낸 변수로서, 이번 분석의 핵심 설명변수다. 업력을 나타내는 Age_{ict} 변수는 선형항과 비선형항이 함께 포함되어 비선형적인 업력 효과를 통제한다. 기업활동조사에 2006년 이전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 $CInv_{ict}$ 변수는 2006년 이전의 기업 해외투자 이력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축적해왔을 자산 규모인 $Asset_{ict}$ (백만 원 단위)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2006년 이전의 경영 활동을 통해 쌓은 기업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기업 실적 및 생산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활동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개발 지출의 매출액 대비 상대적 규모인 RnD_{ict} 를 도입한다. μ_i 는 기업 단위 고정효과, λ_t 는 연도별 고정효과, 그리고 ϵ_{ict} 는 고전적 오차항을 의미한다.

잠재적 내생성을 완화한 인과적 추론을 시행하기 위해 Desai, Foley, and Hines Jr.(2009)가 고안한 도구변수를 준용한 추정 역시 실시한다. 이들의 연구는 기업의 국내 경제 활동 및 성과와 해외직접투자 간의 내생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 기업의 투자 목적지들의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 기준)을 투자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이에 착안하여 본 보고서도 각 연도 t 에 각 기업들이 투자한 대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도입한다. 투자 대상국 경제성장률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도구변수는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 활동과는 밀접

한 연관이 있으나, 종속변수인 국내 정규직 고용, 매출 실적, 수출 실적과는 $CInv_{ict}$ 를 통한 채널 이외의 채널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직관을 뒷받침하듯이, 이번 연구에서도 1단계 F 추정량 등의 통계량들이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지지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구변수를 도입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도구변수가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구변수 추정 모형 표본은 2006년 이후 해외투자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한국의 50인 이상 기업만을 포함한다.

Desai, Foley, and Hines Jr.(2009) 등의 기업 단위 분석 문헌에서는, 많은 국가들에서 기업 단위 해외직접투자 자료가 연도별로 제공되지 않고 4년 정도의 주기별로 제공되는 점에 착안하여 차분 추정(differenced estimation)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번 연구가 사용하는 기업활동조사의 경우 연도별로 각 기업의 투자 활동이 식별되므로, 차분 추정을 도입한다면 불필요하게 연도별 변동(variation)을 잃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절의 분석은 앞의 식에서처럼 연도별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기업활동조사 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마. 실증적 추정 결과

[표 2-18]은 각각 국내 정규직 고용 규모(Lab_{ict}), 매출액 실적($sales_{ict}$), 수출액 실적($export_{ict}$)을 누적 해외직접투자액($CInv_{ict}$)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도구변수 추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제1~3열은 단순히 누적 해외직접투자액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했다. 제4~6열은 업력과 업력의 비선형 항(제곱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했다. 제7~9열은 기업의 자산 규모와 연구개발 지출 규모를 설명변수로 더 추가했다. 이러한 단계적인 설명변수 추가를 통해 분석 결과가 설명변수의 도입 양상을 달리함에 따라 강건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앞의 소절에서 정의한 도구변수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1st Stage F-stat을 표 하단에 보고했다. 모든 항에서 임계치를 넘으며 도구변수가 내생성을 성공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2-18]의 모든 추정 결과를 관통하는 통찰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누적 해외투자액이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국내 기업의 정규직 고용 규모는 늘어나고, 매출액은 늘어났다. 수출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²⁸⁾ 이 추정 결과를 보면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고용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해외직접투자액이 많이 누적될수록 해당 기업의 국내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더 많이 창출되었고, 국내 매출액 역시 개선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업력의 비선형성은 제4열에서부터 제9열까지 일관적으로 확인된다. 즉 선형 항은 양의 한계효과를 갖지만 비선형 제공항은 음의 한계효과를 갖는다. 창업 초기에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고용, 수출 실적, 매출 실적 모두 증가하지만, 그 증가 폭은 업력이 누적될수록 줄어든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기업별 자산 규모와 연구개발 지출 규모는 해외직접투자, 업력, 그리고 고정효과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내지 못했다.

[표 2-19]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교차항을 도입한 결과다. 더미 변수 $s100_{ict}$ 는 산업 c 에 속하는 기업 i 가 연도 t 에 정규직 근로자가 100명 미만이면 1의 값을 갖고, 100명 이상이면 0을 갖는 변수다. 즉 100명을 기준으로 기업 크기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규모 기업 그룹에 속하는 경우

28) 이 결과는 앞선 제2장에서 국가·산업별 해외직접투자자와 수출 간에 강한 양(+)의 조건부 상관관계가 추정된 것과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제2장은 산업 수준의 도착국별 데이터를 활용한 반면, 본 절은 기업 수준의 총액 데이터를 활용했으므로 두 분석의 환경(setting)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2-18.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성과: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

Variable	(1) Lab_{itd}	(2) $export_{itd}$	(3) $sales_{itd}$	(4) Lab_{itd}	(5) $export_{itd}$	(6) $sales_{itd}$	(7) Lab_{itd}	(8) $export_{itd}$	(9) $sales_{itd}$
Chw_{itd}	0.000218*** (0.0000666)	0.0928 (0.0684)	0.627*** (0.138)	0.000231*** (0.0000720)	0.0945 (0.0708)	0.651*** (0.149)	0.000323* (0.000175)	0.0587 (0.121)	0.699** (0.318)
Age_{itd}				21.28*** (5.737)	4265.4 (6216.5)	29633.1** (11893.5)	15.00*** (3.813)	6185.1* (3168.3)	23649.0*** (6927.4)
Age_{itd}^2				-0.301*** (0.0823)	-55.77 (88.73)	-538.2*** (170.6)	-0.149*** (0.0258)	-104.7*** (24.72)	-397.8*** (46.89)
$Asset_{itd}$							-0.0000435 (0.0000346)	0.0280 (0.0432)	-0.0290 (0.0629)
RmD_{itd}							-0.375 (1.509)	-63.77 (1309.3)	-204.8 (2741.5)
Constant	614.4*** (22.06)	142618.9** (21,534.6)	432984.4** (45,689.8)	384.9*** (48.70)	94694.1* (55,201.2)	161987.7 (100,959.7)	464.5*** (30.89)	60768.9* (28,009.7)	222708.0** (56,116.9)
Year Dummi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Firm-level F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1st Stage F-Stat	47.33	11.17	16.56	44.39	11.26	15.08	32.09	13.29	10.53
Observations	46,656	41,221	46,655	46,653	41,219	46,652	45,264	40,270	45,264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3 SDC 자료를 통한 자자의 실증적 추정.

표 2-19. 기업의 규모, 해외직접투자 성과: 교차항을 도입한 고정효과 도구변수 모형

Variable	(1) $Lab_{i,t}$	(2) $export_{i,t}$	(3) $sales_{i,t}$
$Chnv_{i,t}$	0.000416 (0.000263)	0.0686 (0.137)	0.767* (0.414)
$Chnv_{i,t} \times s100_{i,t}$	-0.00183*** (0.000693)	-0.246 (0.402)	-1.111 (1.093)
$Age_{i,t}$	16.33** (5.400)	6.351.3* (3,411.0)	24,593.8*** (8,522.4)
$Age_{i,t}^2$	-0.141*** (24.39)	-104.2*** (50.98)	-392.1*** (0.0282)
$Asset_{i,t}$	-0.0000623 (0.0000521)	0.0244 (0.0491)	-0.0426 (0.0823)
$RnD_{i,t}$	-0.459 (1.731)	-85.40 (1229.3)	-311.4 (2,731.5)
Constant	452.4*** (38.35)	59,490.9** (27,567.5)	214,836.5** (60,515.1)
Year Dummies	Yes	Yes	Yes
Firm-level FE	Yes	Yes	Yes
1st Stage F-Stat	19.88	13.10	8.64
Observations	46,032	40,927	46,032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 $p < 0.05$, *** $p < 0.01$.
자료: 기업활동조사 2006~2023 SDC 자료를 통한 자자의 실증적 추정.

1의 값을 갖는다. 핵심 독립변수인 $CInv_{ict}$ 와의 교차항을 배치하였으며, 기업별 고정효과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s100_{ict}$ 을 단독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표 2-19]의 결과를 살펴보면 $CInv_{ict}$ 의 교차항은 고용 규모인 Lab_{ict} 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한계효과를 가진다. 이는 한국의 기업별 자료를 활용했던 기존 선행연구에서 아직 밝히지 못했던 사항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가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즉 앞서 발견했던 해외직접투자자 인한 양(+)¹의 국내 고용효과는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 소결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기업 규모(고용 규모 기준)가 크고, 자산 규모가 크며, 업력이 더 길다는 점은 표본평균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인과관계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도구변수 추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도입하여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국내 정규직 고용, 수출 실적, 매출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확대는 평균적으로 국내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매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 실적의 경우도 양(+)²의 관계가 추정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기업 규모(정규직 근로자 100인 고용 기준)에 따른 더미변수와의 교차항 분석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위의 효과가 이질적으로 관찰되는지도 확인했다.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 규모가 100인 미만일 경우,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에 따른 양(+)³의 정규직 고용 효과가 상당히 감소했다. 즉 해외투자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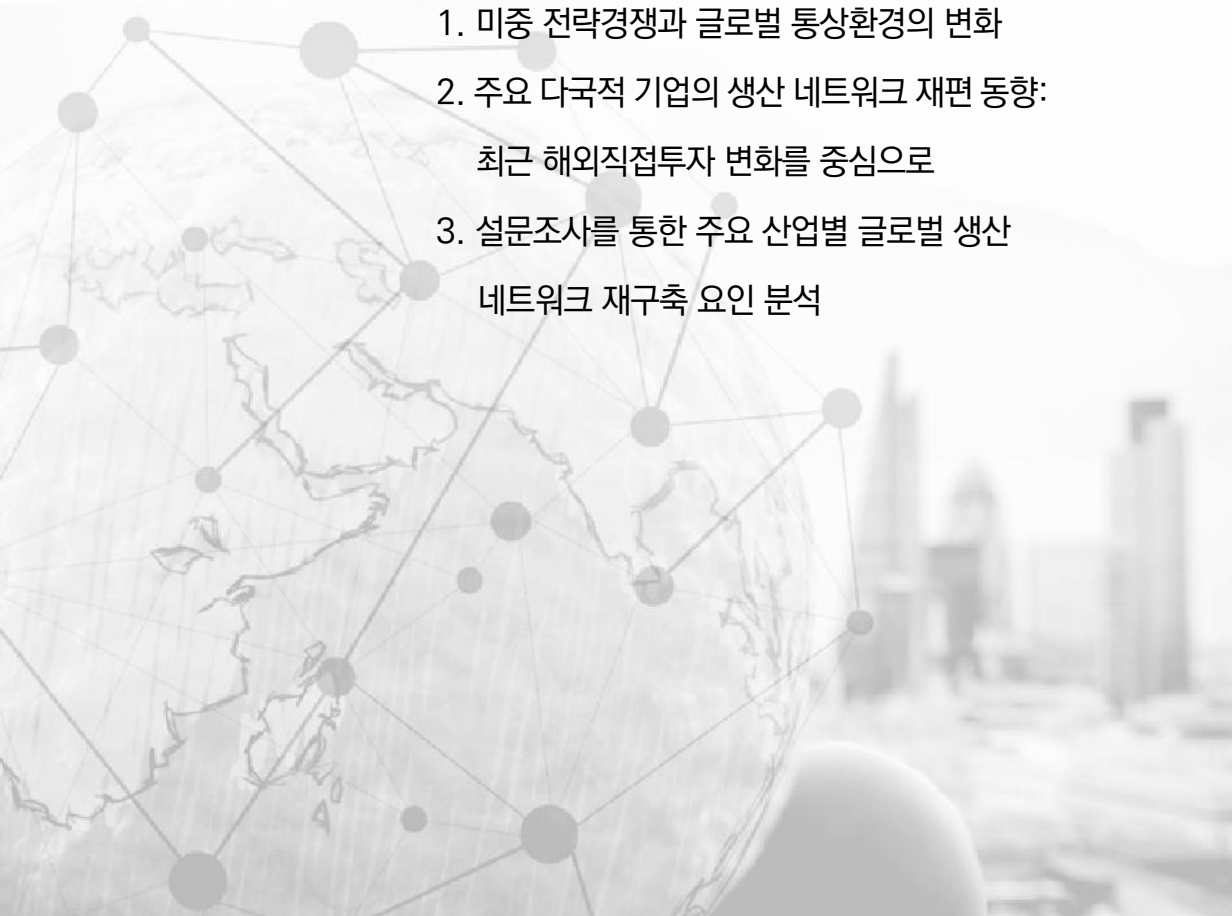
가 매출 실적 개선과 맞물려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은 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대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했다기보다는 시장 확대 및 생산망 효율화 등을 통해 매출과 고용 향상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추후 더 면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매출 및 고용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 압력 속에서 우리 주요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과거 성공 공식이 직면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3장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가. 미중 전략경쟁의 추이

1) 미중 전략경쟁의 배경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협력적 관여(engagement)에서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경쟁으로 전환된 것은 21세기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이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중국을 국제 체제에 편입시키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면, 중국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자유화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여 정책’의 핵심 전제는 경제적 현대화가 필연적으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했다.²⁹⁾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국제 경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을 유지하며 정치 체제의 변화를 거부했다.³⁰⁾ 오히려 중국은 증대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자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자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³¹⁾

이러한 미국의 대중 인식 전환은 미중 관계를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경

29) Zhao, Zhao, and Zhang(2021), “US-China Rivalr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ost-Pandemic World”(검색일: 2025. 7. 8.).

30) National Security Council(2020. 5. 26.),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 7. 22.).

31) Zhao, Zhao, and Zhang(2021), “US-China Rivalr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ost-Pandemic World”(검색일: 2025. 7. 8.).

제, 기술, 안보, 그리고 이데올로기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전략경쟁 구도로 이끌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전략경쟁의 배경을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미국의 시각에서 본 미중 전략경쟁

미국이 40년 이상 유지해온 대중국 관여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적 접근법을 채택한 것은 단일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만, 기술적 위협 인식, 그리고 이념적 가치의 대립이라는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미국은 중국이 개방된 무역체제와 시장을 이용하여 부상한 뒤, 오히려 그 힘으로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자유무역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³²⁾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핵심 동인이 되었다.

(1)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 관행

미국이 중국의 경제 모델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은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있다. 미국은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침해, 차별적인 특허 제한 조치, 행정적인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이익 부여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자국 기업에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³³⁾ 이러한 중국의 관행은 WTO가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 규칙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³⁴⁾

이러한 경제적 불만은 소위 ‘차이나 쇼크(China Shock)’ 현상으로 인해 미

32) *Ibid.*

33)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2018),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 26.

국 내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미국 내 제조업, 특히 가구, 섬유, 전자제품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³⁵⁾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제조업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깊은 정치적 불만을 야기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대중 강경 노선의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중 간 구조적인 전략경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2) 기술 패권에 대한 도전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중국이 ‘자국이 지배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의 목표 목록(target list of technology sectors it seeks to dominate)’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³⁶⁾ 즉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차세대 IT, 항공우주, 바이오, 신소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게 되었다.³⁷⁾ 5G 통신 분야에서 화웨이(Huawei)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동맹국들에게 동참을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며,³⁸⁾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미국은 반도체, AI 등 민감

35) Autor *et al.*(2020), “Import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Rising Trade Exposure”(검색일: 2025. 8. 20.).

36)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2018),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3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p. 564~565.

38) The MITRE center for Technology & National Security(2019), “5G and The Front Lines of the U.S.-China Great Power Competition,” p. 3.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를 추진하며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대립

미국은 미중 경쟁을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이념적 구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 분야의 위협 인식과도 깊이 연관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 모델’이 단순히 기술 패권에 대한 도전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믿음(*bedrock American belief in the unalienable right of every person*)”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³⁹⁾

미국정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CCP)이 개인의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국의 권위주의 통치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설득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아닌, 정보 조작과 압력을 통한 강압적 ‘샤프 파워(*Sharp Power*)’로 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⁴¹⁾ 이는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을 비판하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핵심적인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 전반에 걸쳐 중국을 ‘수정주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압박을 가하자, 중국은 이를 자국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국가 비전과 체제적 자신감에 기반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39) National Security Council(2020. 5. 26.),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 7. 22.).

40) *Ibid.*

41) 김원식(2023),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의 양상과 쟁점: 규범 경쟁을 중심으로」, p. 54.

나) 중국의 시각에서 본 미중 전략경쟁

중국은 미국의 경쟁적 접근을 자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패권적 시도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현재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며, 자국의 발전 경로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1)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몽(中国梦)’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위대한 국가 비전을 집약한 개념으로,⁴²⁾ 2012년 개최된 18차 당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1949년까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넘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는 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을 건설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성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⁴³⁾

이러한 국가적 장기 비전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양극화 같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과 대비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확신은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조용히 힘을 기른다)’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발유위(奮發有爲)’의 외교로 전환되는 배경이 되었다.⁴⁴⁾

42) Lucas(2020. 12. 7.), “A China Strategy”(검색일: 2025. 5. 20.).

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 63.

44) 위의 자료.

(2) 미국의 ‘억제’ 전략에 대한 반발

미국의 관세 부과, 기술 통제, 외교적 수단을 통한 압박 등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미국과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이 자국의 조치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수호’와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으로 규정하는 반면,⁴⁵⁾ 중국은 이를 자국의 정당한 국가 발전과 부흥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억제(containment)’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가 “현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 수 없으며, 실패할 운명”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⁴⁶⁾

중국정부는 미국의 압박이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대만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 고유의 발전 경로와 체제, 발전할 권리 등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레드 라인’으로 설정했다.⁴⁷⁾ 이러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과 견제가 강해질수록 중국도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체제 자신감과 기술 자립

중국은 미중 경쟁을 체제 경쟁으로 인식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지닌 우월성(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优势)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⁴⁸⁾ 중국은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사회적 양극화, 낮은 정책 효율성 등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비판하며,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달성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이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⁹⁾

45) Wikipedia(2025), “China-United States trade war”(검색일: 2025. 8. 20.).

46) Havrén(2025. 1. 27.), “China’s Xi is Seizing the Moment while the US is in Transition”(검색일: 2025. 9. 26.).

47) *Ibid.*

48)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2025. 10. 23.), “Recommendation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for Formulating the 15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검색일: 2025. 10. 31.).

49) 김원식(2023),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의 양상과 쟁점: 규범 경쟁을 중심으로」, p. 36.

특히 미국의 기술 압박은 중국으로 하여금 ‘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국가의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게 만들었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가 자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하여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내재화를 구축하는 데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⁵⁰⁾ 중국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로 인해 무역, 기술, 지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다) 전략경쟁의 주요 분야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충돌적인 국가 비전과 전략적 목표는 무역, 기술, 지정학, 국제 규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경쟁으로 표출되고 있다.

(1) 무역 분야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여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오랜 관여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 자체를 압박하여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⁵¹⁾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자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⁵²⁾

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p. 130~131.

51) Wikipedia(2025), "China-United States trade war"(검색일: 2025. 8. 20.).

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 125.

(2) 기술 분야

미국은 반도체, AI, 5G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Huawei), SMIC 등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등재하고, 동맹국들과 공조하여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하는 ‘기술 동맹’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이 첨단 AI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술 및 장비와 관련한 수출통제 조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제재에 맞서 중국은 ‘기술 자립’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하여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미국의 기술 공급망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기술 분야의 고립과 분절화를 가속하는 전형적인 ‘행동-반응’의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와 서방 중심의 기술 생태계가 분리되는 ‘두 개의 인터넷’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⁵³⁾

(3) 지정학 및 글로벌 영향력 분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축으로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예: Quad)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지정학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⁵⁴⁾

중국은 ‘일대일로(BRI)’ 구상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거대

53) The MITRE center for Technology & National Security(2019), “5G and The Front Lines of the U.S.-China Great Power Competition,” p. 4.

54) National Security Council(2020. 5. 26.),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검색일: 2025. 7. 22.).

경제 벨트를 구축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대안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⁵⁵⁾

2)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시기인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양국 간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략경쟁이 나타난 주요 분야를 무역과 관세, 산업 및 과학기술 혁신 정책, 수출통제, 투자 규제, 리스트 기반 규제, 기타 분야로 구분해서 주요 경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가) 무역 및 관세

(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공세와 관세 전쟁의 발발(2018~2020년)

이 시기는 미국이 기존의 다자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조치를 단행하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시기이다. 미국의 이러한 공세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전략적 조치였다. 이는 WTO 중심의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받으며, 양국 간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관세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와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와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가 가장 대표적이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중국을

55) Havrén(2025. 1. 27.), "China's Xi is Seizing the Moment while the US is in Transition"(검색일: 2025. 9. 26.).

직접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미중 갈등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후 2018년 7월~2019년 9월에는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 이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4차에 걸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1차(2018년 7월) 관세 부과는 연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주로 ‘중국제조 2025’ 전략과 관련된 기계, 전자제품 등이 대상이었다. 2차(2018년 8월)는 160억 달러 규모의 화학, 기계 등 279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어서 3차(2018년 9월)에서는 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로 5,745개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미중 협상이 결렬되자 2019년 5월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대상 품목은 소비재를 포함한 화학, 농업, 섬유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했다. 4차(2019년 9월)에서는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회되고 관세율이 7.5%로 조정되었다.

표 3-1.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301조 관세 부과 내용

	품목 범위 및 규모	관세율(시기)
1차	기계, 전자제품 등 818개 품목 (연간 326억 달러 규모)	25%(2018. 7.)
2차	화학, 기계 등 279개 품목 (연간 136억 달러 규모)	25%(2018. 8.)
3차	화학, 농업, 섬유 등 5,745개 품목 (연간 1,905억 달러 규모)	10%(2018. 9.) → 25%(2019. 5.)
4차	4-1단계에서 농업, 섬유, 광물 등 3,250개 품목(1,120억 달러) 4-2단계에서 2,500억 달러 4-2단계 555개 품목(1,600억 달러)	15%(2019. 9.) 25% → 30%(2019. 10.) 15%(2019. 12.)

자료: 양평섭 외(2019),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p. 4.

미국의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맞서 상응하는 수준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대응하는 대칭적 전략을 구사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WTO 규범을 위반하는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중국은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301조 관세 부과 규모에 맞춰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공식 백서 등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고 비판하며, 자국의 대응이 정당한 주권 수호 조치임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를 향해 미국의 조치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1월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를 이루면서 잠시 휴전에 들어갔다. 1단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020~21년 대미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분야 수입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하거나 기존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로 미국이 2019년 12월 발효 예정이었던 4-2단계의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대중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4-1단계(2019. 9.)에 부과된 1,1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대중 추

표 3-2.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

	품목 범위 및 규모	관세율(시기)
1차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 (연간 338억 달러 규모)	25%(2018. 7.)
2차	에너지 산업 333개 품목 (연간 141억 달러 규모)	25%(2018. 8.)
3차	미국산 수입품 5,140개 품목 (연간 534억 달러 규모)	5%, 10%(2018. 9.) → 5%, 10%, 20%, 25%(2019. 5.)
4차	4-1단계에서 1,717개 품목(255억 달러) 4-2단계에서 3,361개 품목	5%, 10%(2019. 9.) 5%, 10%, 25%(2019. 12.)

자료: 양평섭 외(2019),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p. 4.

가관세는 15%에서 7.5%로 인하되었다. 무역합의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유예하거나 기존 관세를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9년 12월 발효 예정이었던 3,361개 품목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 부과가 보류되었으며,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무역합의 이후 조정된 수입관세율은 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소폭 인하되는 수준이었는데, 무역합의 후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관세 전쟁 이전 3.1%에서 합의 후 17.8%로 인상되었으며, 중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이전의 7.5%에서 합의 후 31.1%로 인상되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계승과 질적 심화(2021~24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대부분 계승했으나, 접근 방식은 질적으로 심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하고 거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전략적 경쟁'이라는 명확한 틀을 설정하고, 동맹과의 '연대(Align)'를 통해 대중국 압박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갈등의 초점이 단순한 무역적자 해소에서 벗어나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의 미래 전략 산업을 견제하고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패권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관세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압박의 강도를 선별적으로 높이는 한편,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했다. 우선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301조 관세 조치를 재검토한 후에 미국의 미래 산업을 겨냥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301조 조사에 따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180억 달러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였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인상되었으며, 배터리(7.5%→25%), 반도체(25%→50%)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관

세 장벽도 한층 높아졌다. 이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 품목의 수입액은 규모가 180억 달러로, 2023년 대중 수입액의 4.2%에 불과해 수입을 축소하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또한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 보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대부분 중국산 미래 첨단산업 제품과 주요 광물에 집중되어 있어 미래 첨단제품이나 기술 관련 공급망의 내재화 및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외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 우선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을 제정하였는데,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의 특정 공급망(특히 태양광, 면화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또한 바이

표 3-3. 바이든 행정부의 301조 관세 인상 대상 품목, 관세율 및 적용 시기

품목		관세 인상률(%)	적용 시기
철강 및 알루미늄		0~7.5 → 25	2024
반도체		25 → 50	2025
전기자동차		25 → 100	2024
배터리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 → 25	2024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7.5 → 25	2026
	비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7.5 → 25	2024
주요 핵심광물		0 → 25	2024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		0 → 25	2026
태양광 셀		25 → 50	2024
STS 항만 크레인		0 → 25	2024
의료제품	주사기 및 비늘	0 → 50	2024
	마스크 및 개인보호장비	0~7.5 → 25	2024
	의료용 장갑	7.5 → 25	2026

자료: PwC(2024),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tariff hikes on Chinese imports”(검색일: 2025. 7. 23.).

든 행정부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제를 가했는데, 이는 중국 등 ‘외국 적성국’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산 기술 및 서비스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 중국정부의 대응 역시 단순한 대칭적 보복 관세를 넘어 한층 정교하고 고도화되었다. 중국은 자체적인 법적, 제도적 수단을 구축하며 비대칭적 보복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인데, 중국정부는 「수출통제법」, 「반외국제재법」 등을 제정하여 미국의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겨냥한 비대칭적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하여, 이를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또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에 대해 사이버보안 심사를 진행하고, 핵심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제품 구매를 금지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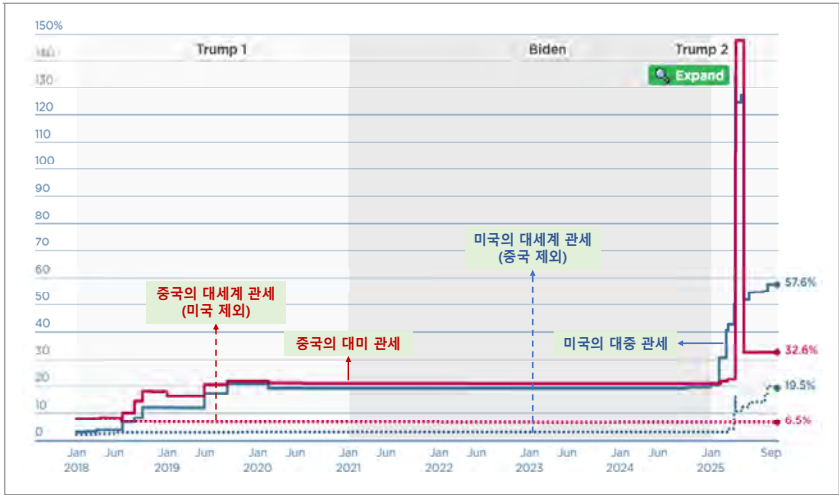
(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면적 압박과 갈등의 격화(2025년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며 기존의 무역 분쟁을 경제 전반에 걸친 전방위적 압박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미국의 조치들은 전통적인 무역법의 범위를 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더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으며, 이는 기존 국제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파급 효과를 낳았다. 중국 역시 이에 맞서 핵심광물 통제와 독자적인 제재 목록을 총동원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301조 관세에 더해 새로운 법적 근거와 논리를 동원한 관세 정책을 연이어 도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즉각적으로 발동했다. 이를 통해 불법 마약(펜타닐) 및 이민 문제를 명분 삼아 중국산 제품 전반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교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특히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인 고율 관세의 근거가 되었다.

그림 3-1.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율과 대세계 관세율의 추이

(단위: %)



주: 2025년 9월 25일까지 반영된 관세율임.
 자료: Bown(2025. 9. 25.),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검색일: 2025. 11. 15.).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즉각적으로 취한 대응도 관세 조치였다. 미국이 4월 2일 중국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복 조치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희토류 광물 수출 제한까지 포함했다. 이러한 대응으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즉각적으로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상의 상호 무역 금지 조치는 한 달 만에 종료되었는데, 이는 양측 모두 장기적인 교착 상태보다는 일시적인 휴전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네바(5월 10~11일), 런던(6월 9~10일), 스톡홀름(7월 28~29일)에서 진행된 3차 협상을 통해 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과 중국의 보복 조치를 11월 10일까지 중단하는 휴전에 합의했다. 2025년 9월 25일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57.6%, 관세 대상 상품은 100%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32.6%이며, 관세 대상 상품은 100%이다.⁵⁶⁾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관세율은 36.8%p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관세율은 11.4%p 상승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는 2025년 5월 초 127.2%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하되었다.

미중 간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부분적인 합의, 이른바 ‘스몰딜(Small Deal)’에 도달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이 아닌, 상호 출혈을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합의로 평가된다.

56) Bown(2025. 9. 25.),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검색일: 2025. 11. 15.).

표 3-4. 2025년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

분야	미국 측 양보/조치	중국 측 양보/조치
관세	- 대중 관세 일부 인하 : 대중 관세 중 펜타닐 관세 10%p 인하(20%→10%), 대중 평균 관세율 57% → 47% - 추가적인 고율 관세(100% 추가 관세) 부과 철회	-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펜타닐 전구 물질 등 차단 협력
무역		- 미국산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즉시 재개 약속
수출통제	- Entity List 확대 조치 1년 유예	-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 - 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지
해운/조선	- 301조 해운/조선업 조치 1년 유예	- 관련 보복 조치 철회

자료: 「미중 무역전쟁 9개월 만에, 한국서 '휴전' 합의」(2025. 10. 31.); 「트럼프 '무역협상 연내 타결'...시진핑 "보복 약속한 안돼"」(2025. 10. 31.)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1. 25.).

나) 산업 및 과학기술 혁신 정책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양국의 국가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권 경쟁으로 심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China Dream)’은 각각 자국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며, 이 두 거대 서사의 충돌은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경쟁의 핵심 전장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할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이다. 본 절은 바로 이 기술 패권 경쟁의 전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중국의 기술굴기 선언: ‘중국제조 2025’와 미국의 초기 인식

미중 기술 경쟁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 미국의 경계심을 어떻게 촉발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중국이 제시한 국가 차원의 청사진은 미국의 기술 우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제조업 육성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지배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핵심 산업을 지정하여 2025년까지 핵심 부품 및 소재의 자급률을 70~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명시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막대한 국가 자원을 동원했다. 2009년부터 2022년 사이 약 5,400건에 달하는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G20 선진국 전체가 시행한 보조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 방식 또한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라 저리 융자,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등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⁵⁷⁾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당-국가 자본주의(party-state capitalism)’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불공정 경쟁 행위이자, 자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정책이 글로벌 시장을 왜곡하고 자국 기업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⁵⁸⁾ 결론적으로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술굴기 야심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경고등을 켜고, 이는 미국의 본격적인 공세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미국의 공세 본격화: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제기

중국의 산업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규정한 미국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체계적인 조사와 압박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세는 중국의 기술 확보 메커니즘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양국 간 기술 경쟁을 본격적인 분쟁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5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 26.

58) Naughton(2021), *The Rise of China's Industrial Policy: 1978 to 2020* (검색일: 2025. 7. 5.).

미국 공세의 핵심 근거는 2018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Section 301 조사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기업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한 4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지적했는데,⁵⁹⁾ 첫째, 합작투자(Joint Venture) 요건(자동차, 통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조건으로 중국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 이전을 압박), 둘째, 차별적 기술 라이선싱(외국 기업에 불리한 기술 라이선스 조건을 부과), 셋째, 정부 주도 해외 기업 인수(정부 자금을 동원하여 해외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지시하고 지원), 넷째, 사이버 해킹(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을 통해 상업 기밀 및 기술 정보를 불법적으로 절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 보호를 넘어선 국가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경우, 이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미국의 강경 대응 기조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중국 또한 자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3) 중국의 전략적 전환: ‘자립자강’과 ‘쌍순환’으로의 집중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한 중국은 방어적 입장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재정립했다. 이는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전략적 전환이었다. 중국의 핵심 대응 전략은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強)’과 ‘쌍순환(雙循環)’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에서의 자립자강이다. 미국의 기술 통제와 공급망 배제 시도에 대응하여 반도체와 같은 핵심·원천

5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검색일: 2025. 8. 25.).

기술을 내재화하고, 외부 기술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국가적 목표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로 격상되었다. 둘째,

표 3-5. 중국의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구분	20차 당대회	15차 5개년 계획 건의
산업 정책	- 고품질 발전을 통한 현대화 국가 건설,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측 구조 개혁의 심화 -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건설: 실물 경제 발전 중시, 신형 공업화 추진, 제조강국/품질강국/우주강국/교통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중국 건설 가속화, 전정특신의 강소기업 발전 지원 · 8대 전략적 신흥산업(14.5 계획): 차세대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차, 녹색환경보호, 항공우주, 해양장비 · 8대 미래산업(14.5 계획): 뇌 기반 인공지능, 양자정보, 유전기술, 미래 네트워크, 심해·우주 개발,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 고품질 발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 달성 : 총요소 생산성의 안정적인 향상 -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업, 화학, 경공업, 방직, 기계, 조선, 건설 - 신흥산업의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우주, 저고도 경제 등 - 신성장 산업 육성: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및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체화 지능, 6세대 이동통신
과학 기술 정책	- 과학 및 교육에 기초한 국가부흥전략, 인재강국 전략,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교육강국/과학기술강국/인재강국 건설 가속화 -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완비: 당 중앙의 과학기술 업무 영도체제 완비, 신형거국체제 완비 -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가속화: 글로벌 첨단 과학기술, 경제, 국가의 중요한 필요성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 재정의 과학기술 분야 투입 메커니즘 개혁,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및 산업화 수준 제고 · 7대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 육성(14.5 계획): 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항공우주·심해·극지 탐사	-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의 대대적 제고 및 국가 혁신시스템의 전반적 향상 -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 역량 증강 -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 돌파: 집적회로, 산업용 공작기계, 첨단 기기, 기초 소프트웨어, 첨단 소재, 바이오 제조 분야 핵심기술에서의 결정적 돌파 -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 지역 혁신 체계의 완비, 지역 과학기술 혁신센터와 산업 과학기술 혁신 허브 설립,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인재 양성 - ‘디지털 중국 건설’ 추진 강화: 국가 통합 데이터 시장 구축, 데이터 자원의 개발 및 활용 심화, 인공지능+ 행동의 전면적 실시, 인공지능 거버넌스 강화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4), 「习近平：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202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 pp. 133~134,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쌍순환 전략의 수립이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 순환을 강화하는 ‘국내 대순환’을 주축으로 삼는 동시에, 선택적인 대외 개방을 통해 세계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되 중국의 대외 의존도는 낮추는 ‘국제 대순환’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은 공식 정책 문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0차 당대회(2022년)’ 보고서와 ‘15차 5개년 계획 건의(2025년)’에서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과 높은 수준의 고품질 발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향후 정책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3월에 확정되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자립 강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강화가 국가 발전의 핵심 목표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전환에 대응하여, 미국 또한 개별 기술 통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경쟁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4) 미국의 전략 진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과 동맹 연대

미중 경쟁은 개별 기업 제재나 기술 통제를 넘어, 미국 주도로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려는 구조적 경쟁으로 진화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정교한 산업정책을 구사하며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투자, 연대, 경쟁’이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산업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투자(Invest)의 경우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규모 산업정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대(Align)의 경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력체를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및 파트너국과 정책 공조를 이루고자 하였다. 셋째, 경쟁(Compete)의 경우 ‘좁은 마당과 높은 장벽(Small Yard, High Fence)’ 전략에 따라 동맹과 함께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⁶⁰⁾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핵심적인 산업정책 수단은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이 법안들은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중국 견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반도체와 과학법」은 가드레일 조항을 두고 동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으로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이 중국 등 ‘해외우려집단(FEOC)’에서 조달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급망에서 중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통합예산법안(OBBBA)」을 통해 산업정책 측면에서 대중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FEOC보다 더 포괄적인 ‘금지된 외국 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청정에너지 관련 다수의 세액공제 혜택에서 중국 관련 기업의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 58.

표 3-6. OBBBA 제정에 따라 정의된 ‘금지된 외국 기관’의 범위

요건	특정 외국 기관(specified foreign entity)
(i) 「2021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9901조에 따른 정의	· 국무부로부터 해외테러단체로 지정된 자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 리스트에 등재된 자 · 특정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로부터 소유, 통제, 지시받는 자 · 미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간첩법(Espionage Act)」,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alleged) 자 · 상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및 정보장과 논의해 미국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자.
(ii) 1260H 리스트 등재자	·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 List)에 등재된 기업을 지칭
(iii)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블랙리스트(UFLPA Entity List) 등재 기업	· 위구르 강제노동법 제2(d)(2)(B)조의 (i), (ii), (iv), (v)에 따라 UFLPA Entity List에 등록된 기업들⁶¹⁾
(iv) 특정 배터리 기업 (「2024 국방수권법」)	· CATL, BYD, Envision Energy, EVE Energy, Gotion, Hithium 및 이에 대한 후계 기업(successor)를 의미함
(v) 해외로부터 통제받는 단체 (foreign-controlled entity)	· 특정 국가*의 정부 · *특정 국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 특정 국가 정부의 산하 기구(instrumentality)나 청(agency) · 미국 국민(national), 시민(citizen),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특정 국가의 시민 혹은 국민인 자 · 특정 국가의 법으로 조직되었거나 특정 국가에서 주요 사업을 하는 단체(entity)나 적격 사업체(qualified business) ·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단체의 계열사(subsidiary)를 비롯해 해당 단체로부터 통제받는 자
요건	해외로부터 영향받은 기관(foreign-influenced entity)
(I) 거버넌스 관계	· 위에서 정의된 “특정 외국 기관”이 “특정 기업인(specified officer: 이사진, 감사, 임원진 등)”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 · 하나의 특정 외국 기관이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한 개 이상의 특정 외국 기관이 합쳐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 · 15% 이상의 채무(debt)가 한 개 이상의 특정 외국 기관으로부터 발행됨
(II) 협력 관계	계약, 협약 등을 통해 특정 외국 기관이 · 특정 시설(48E, 45Y 세액공제 대상)이나 에너지 저장 기술(48E 수혜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실행하거나 · 특정 부분품(45X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

자료: 강구상 외(2025), 「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24,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제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p. 91~92.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미중 산업·과학기술 정책 경쟁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실시하면서 촉발되어 미국의 체계적인 공세와 중국의 ‘자립자강’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경쟁 단계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양국의 전략이 상호작용하며 경쟁의 강도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온 결과이다.

양국의 전략은 현재까지 엇갈린 중간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일부 신흥 산업에서 세계적 선두 주자로 부상하며⁶²⁾ 서방 세계가 오히려 중국에 의존하는 ‘역(逆)의존성’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 상업용 항공기, 고급 공작기계 등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다.⁶³⁾

표 3-7. 미중 산업 및 기술 전략 비교

구분	미국(주도권 확보 및 중국 배제)	중국(기술 자립자강)
상대국 인식	기술 권위주의 모델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	미국의 압박은 패권적 행태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발전권) 침해로 인식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AI, 양자, 반도체)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접근 차단	기술 자립을 통한 내재적 역량 강화 및 대체 공급망 구축
주요 수단	보조금 지급(CHIPS, IRA), 정부 조달 규제, 관세를 통한 공급망 통제	‘신경 거국체제’를 통한 막대한 자원 투자, 쌍순환 전략 추진
AI 전략의 특징	혁신(innovation) 중심	확산(diffusion, AI+) 중심

자료: 저자 작성.

61) 해당 리스트는 U.S. Department Homeland Security, “UFLPA Entity List”(검색일: 2025. 7. 7.)에서 확인할 수 있음.
62) Sutter(2024. 12. 12.), “Made in China 2025 and Industrial Policie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검색일: 2025. 8. 18.).
63) Boullenois, Black, and Rosen(2025. 5. 5.), “Was Made in China 2025 Successful?”(검색일: 2025. 7. 30.).

향후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감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표준의 양극화, 공급망의 블록화, 그리고 기술 인재와 자본 흐름의 분절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통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전선으로 부상했다. 과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전통적 수출통제는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y)’의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자국의 ‘핵심 이익’이자 양도할 수 없는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을 침해하는 패권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수출통제는 양국의 기술굴기와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수출통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전선이며,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양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여지가 가장 적은 분야이기도 하다.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을 불법 취득해왔다고 비난하며, 이중용도 기술(AI, 양자) 탈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술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은 핵심광물을 무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 중국의 기술굴기 저지를 위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의 진화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핵무기 개발 연루 의혹과 같은 특정 목적에 국한된 제한적 조치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기점으로 수출통제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 무기로 전면 부상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통제 방식은 특정 기업을 넘어 중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 전반을 겨냥하는 광역적 형태로 진화하였고,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중국 슈퍼컴퓨터 센터들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엔티티 리스트(EL: Entity List)에 등재한 것은 비교적 제한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수출통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 전략의 핵심은 화웨이, SMIC 등 중국의 특정 ‘기술 챔피언’ 기업을 정밀 타격하여 기술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표적 제재였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D램 제조 기업인 푸젠진화를 EL에 추가(2018년 10월)하여 미국기업이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했다. 둘째, 중국 통신장비 및 반도체 설계의 선두주자인 화웨이를 EL에 등재(2019년 5월)했다. 이로써 화웨이가 미국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5월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Direct Product Rule)’을 적용하여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해외 기업들도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했다. 셋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비롯한 59개 중국 기업 및 연구소를 EL에 등재(2020년 12월)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표적 전략이 화웨이와 같은 특정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 발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나자,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켰다. 특정 기업을 넘어

중국의 첨단 기술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키는 광범위 통제, 즉 ‘초크포인트(chokepoint)’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시한 ‘좁은 마당과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여기서 ‘좁은 마당’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이나 AI 칩 설계와 같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핵심 기반 기술을 의미하며, ‘높은 울타리’는 FDPR과 같은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이 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전체를 통제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낸드플래시 128단 이상, D램 18nm 이하, 로직 반도체 16/14nm 이하를 생산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장비 및 기술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고성능 AI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분야에도 FDPR을 적용하여 중국의 첨단 컴퓨팅 능력 발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미국의 통제에 대응해 엔비디아는 성능을 낮춘 중국 시장용 A800 칩을 출시하는 등 우회로를 모색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0월, 통제 대상 AI 반도체의 성능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통제 폭을 넓히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나아가 2024년 12월에는 통제 범위를 레거시 공정 장비 일부로까지 확대하고,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통제를 신설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전반에 FDPR을 적용함으로써 2차 제재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통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특유의 ‘거래적(transactional)’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맹국의 이익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시도에서 드러난다. 첫째, 동맹국 압박 강화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공조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지위를 2025년 8월 철회했다. 이는 동맹국 기업이라도 중국 내 사업 운영에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미국의 통제 체계에 완전히 따르도록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 거래를 통한 규제 완화이다. 2025년 4월,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H20 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H20 칩 매출액의 15%를 정부가 받는 조건으로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국가안보라는 논리 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적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2) 중국의 기술자립과 전략자원 무기화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를 자국의 '핵심이익'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일방주의적 패권 행위로 규정하고,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적·전략적 반격 수단을 구축했다. 중국의 다각적인 대응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맞불 조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자국의 영향력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強)'을 달성하려는 장기적 목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법적 기반 마련은 전략자원 무기화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으며, 비관세 보복 조치들은 미국의 산업 재편을 늦추고 자국산 기술 대체재의 시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반격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정비했다. 첫째, 수출통제법의 제정(2020년 10월)이다. 이 법은 중국의 대응 전략에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수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특히 이 법은 중국이 최초로 '영토 외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명시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

략적 의미를 지닌다. 즉 미국의 FDPR에 대응하는 대칭적 법률 도구를 확보함으로써 제3국을 통한 압박에도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둘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제도의 도입 및 「반외국제재법」의 제정이다. 미국의 엔터티 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 수단으로 중국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不可靠实体清单)’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을 목록에 올려 무역 및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또한 2021년 제정된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은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중국은 이 법들을 근거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의 방산기업을 제재하며 실행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국은 세계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핵심 광물을 전략적 무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첫째, 2023년 12월 중국정부는 희토류 자체보다 가공 기술 및 장비 수출을 먼저 금지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이 추진하는 ‘탈중국’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초기 단계부터 견제했다. 둘째, 2024년 12월 중국정부는 반도체, 통신장비의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초경질 재료(superhard materials)’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셋째, 2025년 2월 중국정부는 방위 및 청정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텅스텐(Tungsten), 인듐(Indium), 비스무트(Bismuth), 텔루륨(Tellurium), 몰리브덴(Molybdenum) 등 5개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가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넷째, 2025년 4월 최종적으로 희토류 자체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했다.

중국은 핵심광물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미국기업을 압박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표 3-8. 미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시기	미국의 주요 조치	중국의 주요 조치
2018. 10.	반도체 장비: 푸젠진화를 EL(Entity List)에 추가	
2019. 5.	반도체 설계 및 통신장비: 화웨이를 EL에 추가	
2019. 6.	슈퍼컴퓨터 관련 EL 확장 (설계 및 제조 기업 직접 통제 시작)	
2020. 10.		수출통제법 제정 및 발효 (자국의 전략 자원 무기화 및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법률적 근거 마련)
2023. 10.	AI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통제 대상 범위 대폭 확대	
2023. 10.	[규제 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VEU(Verified End-User) 지위 부여로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2024. 10.		중국 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 발표 및 미국의 Entity List와 유사한 통제 목록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不可靠实体清单)] 제정
2025. 1.		리튬-철 인산(LFP) 배터리 핵심 투입재를 수출 제한 대상 기술 목록에 추가
2025. 2.		텅스텐,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몰리브덴 등 5가지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 발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 즉시 발효)
2025. 4. 4.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7가지 희토류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 시행 또한 16개 미국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목
2025. 4. 10.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추가 조치로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
2025. 10.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등에 대한 VEU 지위 철회 결정	
2025. 10. 30.	Entity List 확대 조치 1년 유예	희토류 및 관련 품목 수출통제 조치 1년 유예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모든 대응 조치는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強)과 내수 중심의 쌍순환(雙循環) 전략이라는 장기 목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역설적으로 중국 정부와 기업이 반도체 국산화,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인 공급망과 기술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라) 투자 규제

미중 전략경쟁은 전통적인 무역 분쟁의 영역을 넘어 기술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자본의 흐름, 즉 투자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과거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투자는 이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경로로 인식되며, 상대국의 기술 발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다.

(1)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강화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 부상이 자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 규제라는 정책 도구를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거래를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 첨단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전통적인 외국인투자 심사기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중국의 군산복합체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

고, 마침내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투자 규제는 지난 몇 년간 뚜렷한 진화 과정을 밟아왔다.

㉔ 인바운드 투자 통제: CFIUS의 강화

미국의 전통적인 투자 규제 수단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를 통한 인바운드 투자 심사였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CFIUS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변화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제정된 「해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었다. 이 법안은 기존에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지배적 투자’에 한정되었던 CFIUS의 심사 권한을 미국의 핵심 기술, 인프라, 민감 데이터 관련 기업에 대한 ‘비지배적 소수지분 투자’와 특정 군사시설 인근의 ‘부동산 투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는 중국 자본이 합작투자나 소수지분 확보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CFIUS의 심사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었다. 2022년 9월에 발표된 행정명령(EO 14083)은 CFIUS가 국가안보 위협을 심사할 때 특정 거래가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보건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분야에 대한 누적된 투자의 안보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투자 심사가 단순히 개별 거래의 안보 위협을 넘어, 산업 공급망 전체와 누적된 위협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화된 CFIUS는 미국 내 기술과 자산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접근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미국 자본이 해외, 특히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전략적 공백은 이후 금융 및 아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라는 새로운 규제 수단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④ 금융 투자 제한: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 제재

미국은 자국 자본시장을 통해 중국의 군산복합체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 제재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욱 정교화되었다.

첫 단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EO 13959)이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공산당 군사기업(CCMC: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의 증권에 대해 미국인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1월, 행정명령(EO 13974)을 통해 규제는 한층 강화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증권의 보유까지 금지하고 매각을 의무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EO 14032)을 통해 이 제재를 더욱 체계화하고 확대했다. 기존 국방부가 관리하던 CCMC 리스트를 재무부가 관리하는 비특별지정 제재 대상 중국 군산복합기업(NS-CMIC: No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mpanies) 리스트로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재 대상을 단순히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는 중국기업들이 복잡한 자회사 구조를 통해 제재를 우회하던 허점을 차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㉔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은 자국 자본의 해외투자를 통제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의 도입이었다. 이는 방어적 성격의 인바운드 규제를 넘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공격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023년 8월,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EO 14105)

표 3-9. 미국의 행정명령(EO 14105)에 따른 대중국 투자 규제의 주요 내용

분야	규제 수준	세부 기준
반도체 및 마이크로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금지	- 첨단 패키징 또는 IC의 전자 설계 자동화 S/W 개발/생산 - IC 대량생산을 위해 설계된 프론트엔드 반도체 제조장비, 대량 첨단 패키징 장비, 또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제조 장비용 부품/소재/S/W 개발/생산 - 미 상무부 수출통제 목록상 통제번호(ECCN) 3A090.a 기준 이상 IC 또는 4.5켈빈 이하 작동 IC 설계 -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IC 제조: ①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 또는 16/14nm 이하 로직 IC, ② 128단 이상 NAND, ③ 18nm 이하 DRAM, ④ 갈륨계 화합물 반도체로 제조된 IC, ⑤ 그래핀 트랜지스터 또는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한 IC, ⑥ 4.5켈빈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IC - 첨단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IC 패키징
	신고	- 상기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IC의 설계, 제조, 패키징
양자정보기술	금지	- 41,600입방피트 이하의 영역 내에서 100 이상의 배정밀도(64bit) 페타플롭 또는 200 이상의 단정밀도(32bit) 페타플롭의 이론적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첨단 IC 기반 슈퍼컴퓨터 개발/설치/판매/생산 - 양자컴퓨터 및 핵심 부품 개발 - 군사, 정보 수집, 대규모 감시용 양자 센싱 플랫폼 개발/생산 - 특정 용도의 양자 네트워크 또는 통신 시스템 개발/생산
AI 시스템	금지	- 군사 최종용도, 정부 정보 수집 및 대규모 감시용으로 독점 설계된 AI 시스템 개발 - 특정 컴퓨팅 성능(10^{25} 연산 이상)을 사용해 훈련된 AI 시스템 개발
	신고	- 군사, 정보 수집, 감시용으로 설계되었으나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AI 시스템 개발 - 사이버 보안, 디지털 포렌식 도구, 침투 테스트 도구, 로봇 시스템 통제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AI 시스템 개발 - 특정 컴퓨팅 성능(10^{23} 연산 이상)을 사용해 훈련된 AI 시스템 개발

자료: 홍연서(2024), 「미, 첨단반도체, 양자, AI 분야의 해외투자 제한」.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규제」를 발표하며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강화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합작투자, 전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중국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대 첨단 분야에 투자되는 것을 제한하였다. 규제는 사안의 민감도에 따라 금지(Prohibition)와 신고(Notification)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의 군사, 정보,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자본 통제를 넘어 기술 경쟁의 판도를 바꾸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투자 규제 강화 기조는 향후 더욱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 우선 투자정책(AFIP: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각서는 기존의 투자 규제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양쪽에서 모두 대폭 강화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인바운드 투자 규제(CFIUS 심사)는 기존의 기술 분야에 더해 보건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략 분야까지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자본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직접 건설하는 그린필드 투자까지 심사 권한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표 3-10. ‘미국 우선 투자정책(AFIP)’ 각서의 주요 내용

구분	규제 확대 내용
인바운드 투자 (CFIUS 심사 강화)	- 기술/분야 확대: 기존 분야 +보건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 분야 추가 - 거래 유형 확대: 의회와 협의하여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심사 권한 강화
아웃바운드 투자 (대중 투자 제한)	- 기술/분야 확대: 기존 3대 분야(반도체, AI, 양자) +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 추가 - 거래 유형 확대: 직접 지분 투자 외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금펀드, 대학 기금 등까지 포괄

자료: 저자 작성.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는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3대 분야(반도체, AI, 양자)를 넘어 생명공학, 극초음속,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연계된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직접적인 자본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금펀드, 대학 기금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자본 흐름을 포괄적으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중국의 대응

미국의 투자 규제 강화에 맞서 중국은 단기적인 보복 조치와 장기적인 체질 개선 전략을 병행하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자국이 보유한 거대한 시장과 규제 권한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여 미국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맞대응을 넘어, 글로벌 투자 및 공급망 질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을 담고 있다.

(가) 외국인 투자 심사권 활용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자국의 심사권을 미국의 기술 압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 심사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M&A 거래의 승인권을 전략적으로 행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미국 쉘컴의 네덜란드 NXP 반도체 인수 시도였다. 440억 달러 규모의 이 거래는 다른 모든 주요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SAMR은 승인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결국 쉘컴은 인수를 포기했다. 2023년에는 인텔의 이스라엘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 시도가 비슷한 방식으로 무산되었다. SAMR이 정해진 마감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

으면서 거래가 자동 파기된 것이다. 이는 명시적인 거부 없이도 사실상 M&A를 무산시키는 ‘전략적 침묵’을 통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법적 대응 기반 마련: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과 ‘반외국제재법’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복 조치를 제도화하고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20년 9월 발표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규정은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거나 중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 기업, 개인, 조직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목록에 등재되면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가 제한되고 관련 인력의 입국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록히드 마틴, 레이션 등등이 등재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였다.

더 나아가 2021년 6월 제정된 ‘반외국제재법(反外國制裁法)’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관여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외국의 제재를 준수하는 기업에게 중국 내 기업이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2차 제재의 위험을 부과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겨주는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

(다) 장기적 전략: 기술 자립과 내수 중심 성장

중국의 가장 근본적인 대응 전략은 미국의 장기적인 압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제적·기술적 체질 개선에 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투자 금지 조

치와 같은 외부 압박은 중국 지도부가 추진해온 쌍순환(双循环) 전략과 과학 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強) 기조를 장기적 목표에서 시급한 국가안보 과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쌍순환 전략은 국제 시장(국제 대순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대한 내수시장(국내 대순환)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반도체, AI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확보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이다. 중국정부는 외부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미국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마) 리스트 기반 규제

미중 전략경쟁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특정 기업, 개인, 단체를 직접 겨냥하는 ‘리스트 기반 규제(List-based Regulations)’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경쟁이 첨예화되면서, 리스트 기반 규제는 특정 기업이나 품목을 명단에 올려 제재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및 안보적 연결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리스트 규제는 주로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중국 군사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특정 자산을 통제하여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不可靠实体清单)’을 제정하고 운용하며 미국의 관세나 기술 통제 조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1) 미국: 다층적 리스트 규제를 통한 대중국 압박 강화

미국은 리스트 기반 규제를 대중국 전략의 핵심 도구로 채택하여 기술, 금융, 인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본격화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의 특정 기업과 기술을 정밀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를 더욱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서 다자적 합의보다는 미국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양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행정부처별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리스트를 운영하며 다층적인 대중국 압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를, 재무부는 금융제재를, 국토안보부는 인권 및 공급망 규제를, 국방부는 정부 조달 제한을 주도하며 상호 연계된 제재망을 구축하고 있다.

상무부가 운영하는 엔티티 리스트(EL)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출통제 수단이다. 이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나 단체는 미국산 기술 및 상품을 이전받기 위해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에 가까운 ‘거부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엔티티 리스트를 적극 활용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서 언급했던 푸젠진화, 화웨이, SMIC 사례이다. 특히 미국은 2020년 5월과 8월, 화웨이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외국 기업이라 할 지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이차제재 조치이다.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금융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NS-CMIC

리스트가 있다. 이 제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20년 행정명령(EO 13959)을 통해 ‘중국 공산당 군사기업(CCMC)’ 리스트를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국방부가 리스트를 관리했으며, 미국인의 해당 기업 주식 매입을 금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행정명령(EO 14032)을 통해 이를 계승·강화했다. 리스트의 명칭을 NS-CMIC로 변경하고 관리 주체를 재무부로 이전했으며, 제재 대상을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회사까지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리스트의 핵심 목표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중국의 군산복합체 성장을 재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특정 지역의 공급망 전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경제적 수단이다. 이 법의 핵심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생산된 모든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간주하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이다. 즉,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토안보부는 UFLPA 엔터티 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4가지 유형의 기업 및 단체가 등재 대상이 된다. 첫째, 신장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상품을 채굴, 생산, 제조하는 단체, 둘째, 신장 정부와 협력하여 위구르족 등 박해받는 소수민족을 모집하거나 이전하는 단체, 셋째, 상기 1, 2번에 해당하는 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단체, 넷째, 신장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강제노동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재를 조달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UFLPA는 특정 기업이 아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들은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미국은 국방 및 정부 조달 시장에서 중국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방수권법(NDAA)」 제1260H조에 근거한 1260H 리스트이다. 국방부는 이 리스트를 통해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공개한다. 2024년 「국방수권법」은 이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국방부 조달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 효력을 부여했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리스트로 상무부가 운영하는 군사최종사용자(MEU: Military End-User) 리스트가 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기업에 특정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더욱 엄격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국방 및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하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국 리스트 기반 규제는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중복되고 연계되어 다층적인 압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수출통제(EL, MEU), 금융제재(NS-CMIC), 인권 및 공급망 규제(UFLPA), 조달 제한(1260H 등)이 결합하여 중국의 특정 산업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 같은 기업은 엔티티 리스트 등재로 첨단 반도체 등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동시에 889 리스트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만약 이 기업이 NS-CMIC 리스트에도 포함된다면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까지 막히게 된다. 이처럼 다층적 규제는 특정 기업을 기술, 시장, 자본으로부터 체계적으로 고립시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군사 현대화를 지연시키며, 특정 공급망을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표 3-11. 미국의 대중국 리스트 기반 규제

리스트 명칭	운영 부문	주요 내용
엔티티 리스트(EL)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 특정 품목 수출 시 거부 추정 원칙 적용, 경우에 따라 강력한 이차제재(FDPR) 부과
군사최종사용자 리스트(MEU)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 중국 군사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물품 공급 시 이에 대한 수출 허가에 대해 대체로 거부 추정의 원칙 적용
NS-CMIC 리스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	- 리스트 등재 중국 군산복합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증권 투자 금지
1260H 리스트	국방부(DOD)	- 미 국방부와 리스트 등재 중국 군사기업의 조달 계약 금지
UFLPA 엔티티 리스트	국토안보부(DHS) 등	- 리스트 등재 기업의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여 미국 내 수입 금지
889 리스트 (NDAA 2019)	연방조달규정 (FAR)	- 화웨이 등 중국 통신 5개사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연방정부의 거래 금지
5949 리스트 (NDAA 2023)	연방조달규정 (FAR)	- SMIC 등 중국 반도체 3개사 제품 및 서비스를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에서 금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p. 97.

(2) 중국: 법제화를 통한 대응

미국의 다층적 리스트 규제 공세에 대응하여 중국 역시 과거의 산발적인 보복 조치를 넘어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 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수동적 방어를 넘어, 역공 수단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반외국제재법’, ‘사이버보안 심사 규정’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의 맞대응 수단은 미국의 제재 방식과 목적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미국의 약점을 공략하고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은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맞대응 조치이다. 2019년 5월, 미국이 화웨이를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한 직

후 중국은 이 제도의 도입을 발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카드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했다. 제도 발표 이후 약 4년이 지난 2023년 2월에 이르러서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처음으로 목록에 등재했다. 두 기업은 중국 본토 사업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상징적인 경고의 의미가 컸다. 2024년부터 중국은 목록의 사용 빈도와 적용 범위를 눈에 띄게 확대했다. 2024년 5월, 대만 무기 판매에 연루된 보잉 등 미국 방산 기업 3곳을 추가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미국의 UFLPA를 준수하여 신장산 면화 사용을 중단한 미국 의류 기업 PVH 그룹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방위산업을 넘어선 영역으로 제재를 확장했다. 이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도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 이러한 확대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으로, 이는 경제적 압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1년 6월 제정된 ‘반외국제재법(反外國制裁法)’은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과 같은 개별 제재 조치의 상위법 역할을 하며, 중국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 법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제재를 수립하거나 이행하는 데 관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중국 내 자산 동결 및 압류, 중국 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홍콩 및 신장위구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관리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24년부터 그 사용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되며,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과 함께 중국의 핵심 이익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핵심 보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보안공실(CAC)이 주도하는 ‘사이버보안 심사’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기술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술 압박에 대한 보복 카드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Micron)에 대한 제재이다. 중국은 미국이 2022년 10월 포괄적인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보안 심사에 착수했다. 결국 CAC는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위험이 발견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중국 내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하도

표 3-12. 중국의 리스트 기반 규제 조치 및 특징

시기	주요 조치	특징 및 목적
2019. 5.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처음 작성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통제 목록(EL)에 등재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
2020. 9.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규정’ 발표	외국 기업 등재 기준(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위험, 시장 원칙 위반 등) 및 제재 수단 공식화
2023. 2.	목록 첫 사용: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방위 및 항공우주 기업 제재	목록 제정 4년 만에 첫 사용, 주로 대만 군수 무역 관련
2024. 5.	목록 등재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시사(미국 군수 부품 공급업체 Caplugs 경고 조치)	목록 활용 의도 강화 및 범위 확대 시사
2024. 9.	미국 PVH 그룹에 대해 목록 규정에 따른 조사 발표	UFLPA 준수 관련(신장 면화 사용 중단 혐의) 대만 관련 외 사안으로 목록 사용 확대
2025. 1.	미국의 AI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목록 확장	미국의 정책 조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
2025. 2.~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목록 확장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목록’ 사용
2025. 4. 4.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11개 미국기업 추가	희토류 수출통제 및 기업 제재를 병행하며 다각적 대응
2025. 4. 10.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12개 미국기업 추가	

자료: 저자 작성.

록 조치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 대응하여 중국이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미국 대표 기술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나. 자국중심주의적 글로벌 통상 기조의 강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에서 점차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기반했던 통상 질서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요국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그리고 기술 경쟁, 국가안보를 이유로 새로운 산업정책과 무역장벽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 경제안보 중심의 산업정책 심화

최근 글로벌 산업정책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책 수단 도입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와 전략경쟁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세계무역정보(GTA) 데이터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적색(Harmful)’ 등급의 산업정책 도입 건수는 201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중 갈등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⁴⁾ 신산업정책관측소(NIPO: 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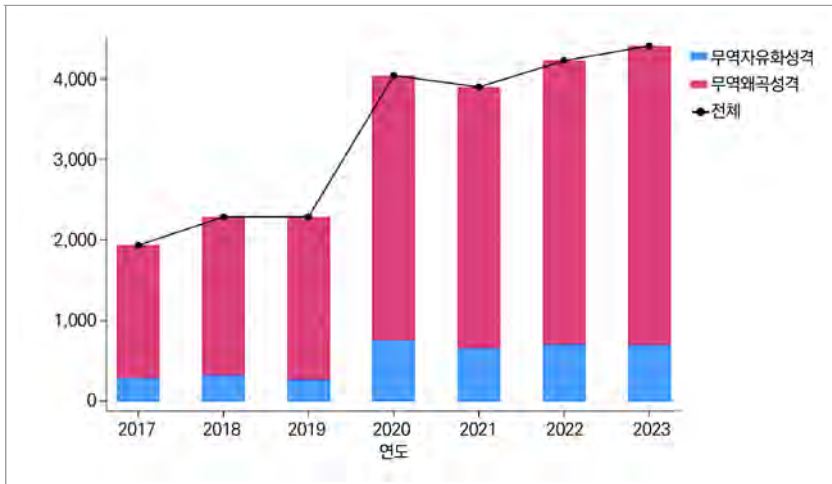
64) 조성훈 외(2025),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p. 133.

도입은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역 왜곡 성격의 정책 도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⁶⁵⁾

산업정책 도입 추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자국 보조금이 가장 많이 도입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입 장벽,⁶⁶⁾ 수출 인센티브,⁶⁷⁾ 수출 장벽,⁶⁸⁾ 현지화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산업정책 도입 건수 추이(2009~23년)

(단위: 건)



자료: 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NIPO)(검색일: 2025. 12. 3.), KIEP 내부자료 재인용.

65) 신산업정책관측소(NIPO)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기업에 차별적이며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현지 기업에 유리한 정책의 경우 '무역왜곡' 성격의 정책으로, 최혜국 대우에 따라 모든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작용하며 시장이 개방되고 투명성이 높은 정책은 '무역자유화' 성격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성훈 외 (2005),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pp. 190~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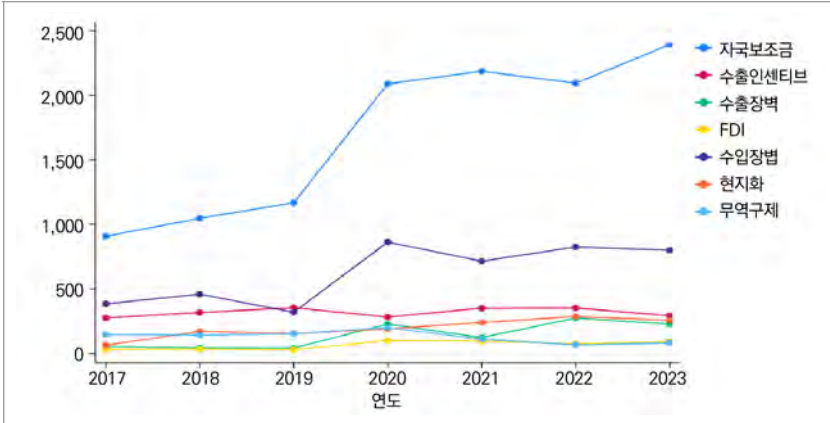
66) 수입 금지, 수입 모니터링, 수입 허가 요건, 수입 할당량, 수입 관세, 수입 관세 할당량, 수입품에 대한 내부 과세 및 수입 관련 비관세 조치가 포함된다.

67) 수출 보조금, 해외시장에서의 재정 지원, 기타 수출 인센티브, 세금 기반 수출 인센티브 및 무역 금융이 포함된다.

68) 수출 금지, 수출 허가 요건, 수출 할당량, 수출 관세 할당량, 수출세, 수출에 대한 현지 공급 요건 및 수출 관련 비관세 조치가 포함된다.

그림 3-3. 정책 유형별 산업정책 도입 건수 추이(2017~23년)

(단위: 건)



자료: 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NIPO)(검색일: 2025. 12. 3.), KIEP 내부자료 재인용.

주요국은 경제안보 가치 실현을 위해 고립주의적인 산업정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은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우위 확보와 국내 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정책을 부활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우려국(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혁신은 미국에서, 생산은 해외에서”를 추구하던 과거의 산업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과 생산 모두를 내재화하려는 의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⁹⁾

중국은 자국의 대외 의존도는 줄이면서 외부 국가의 중국 의존도는 높이는 ‘비대칭적 고립주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쌍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자립을 위해 국가 주도로 막대한 보조금을 투

69) 조성훈 외(2025),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pp. 66~67.

입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협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첨단기술 자립을 성취하겠다는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EU 역시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표방하며 역내 산업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법」 등을 도입하여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27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조정 비용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⁷⁰⁾

이처럼 주요국의 경쟁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정책 도입은 글로벌 무역을 분절화하고 왜곡하고 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국중심주의적 산업정책이 강화될수록 글로벌 제조업 수출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은 감소하는 반면, 동일 진영(선진국 간 또는 개도국 간) 내 무역은 증가하는 등 무역의 지역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¹⁾

표 3-13.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산업정책 비교

구분	미국	중국	EU
입법 형태	포괄적 입법 (IRA 등)	이슈별 규제 입법 (CRMA 등)	포괄적 계획 (중국제조 2025 등)
정책 목표	패권 유지, 첨단산업 보호	위험 회피, 역내 시장 안정	첨단산업 육성, 핵심기술 자립
특정국 대상	특정(우려국 지정)	불특정	불특정
규범 체계	원칙 중심	규칙 중심	원칙 중심

자료: 조성훈 외(2025),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70) 조성훈 외(2025),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p. 4.

71) 위의 자료.

2) 관세 전쟁과 수출통제의 일상화

자국중심주의는 관세와 수출통제라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와 안보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상호무역법」 등을 통해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대상국들의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무역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외의 국가와 지역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였고, 부속서에서 69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명시하였다.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수출 적발 시에는 상호관세 대신 40%에 달하는 관세 및 미국 법률에 따른 기타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8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⁷²⁾ 부속서에 따르면 부과된 상호관세율은 한국·EU·일본은 15%, 인도 25%, 베트남·대만 20%, 영국 10% 등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상호관세율 외에 각 국가와 지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대미 시장 개방이나 미국산 구매,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미국의 산업 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고 정책 목적에 따라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며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희토류 및 갈륨·게르마늄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면서 자원의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통

72)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5), 「주요국 상호관세 및 대미 무역합의 현황과 평가」, p. 1.

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3-14. 주요국별 대미 무역합의의 주요 내용

국가 및 지역	대미 시장 개방	미국산 구매	대미 투자 및 협력
EU	- 공산품 관련 지나친 규제 및 절차 해소 노력 - 돼지고기, 유제품 위생증명 간소화 논의 - 전자적 전송 무관세 및 망 사용료 미부과 합의	- 에너지(3년간, 7,500억 달러) - 군사장비(수천억 달러)	- 6,000억 달러 추가 투자 (3년간, 기존 연간 1,000억 달러 투자 외) - 경제안보협력 강화
일본	- 자동차, 트럭 시장 규제 해제 - 미국 자동차 표준 수용	- 쌀(수입량 75% 확대, 쿼터 확대) - 농산물(80억 달러) - 에너지, 항공기, 방산물자 등	- 전략 산업 5,500억 달러 투자 - 알래스카산 LNG 장기 구매 검토
영국	- 소고기, 에탄올 등 일부 품목 무관세 쿼터		
인도네시아	- 99% 품목 관세 철폐 - 현지부품 사용 요건 면제 -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및 의약품 FDA 인증 수용 - 농산물 수입 허가 면제 - 데이터 유통 과세 중단 -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연장 지지	- 항공기(32억 달러), 농산물(45억 달러), 에너지(150억 달러)	- 핵심광물 등 원자재 대미 수출 제한 해제 - 철강 과잉생산 해결 협력
필리핀	- 자동차 관세 철폐	- 대두, 밀, 의약품	- 군사 공조 협력
태국	- 90% 품목 관세 철폐 -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완화	- 농식품, LNG, 항공기	- 인프라 및 첨단기술 분야 공동투자 제안 - 우회수출 문제 해결
말레이시아	- 98.4% 품목 관세 인하 및 폐지 -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 - 할랄 인증 및 시설등록 요건 간소화 - 미국 SNS, 클라우드 기업 대상 국가 기부금 납부 요건 폐지	- 반도체, 항공기,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구매(1,500억 달러) - LNG(연간 34억 달러)	- 향후 5년 700억 달러 투자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5), 「주요국 상호관세 및 대미 무역합의 현황과 평가」, pp. 11~12.

3)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강화

주요국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최근 45개국 이상이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FIRRMA, EU의 FDI 스크리닝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 자본이 우려국(중국)의 첨단기술(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까지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도입하였다.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글로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는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대중국 그린필드 투자는 2018년 이후 급감하였으며 중국의 대미국 투자 역시 사실상 중단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양국 간 상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을 이탈한 투자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EU 역시 미국과의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투자는 일대일로 연선 국가나 자원 보유국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무역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중 경제 관계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가. 개요

글로벌 공급망의 확장은 그동안 낮은 국경 비용과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는 거래 비용, 시장 접근성, 제도적 환경 등 글로벌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한 정책과 제도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심화는 전통적인 통상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글로벌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는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직간접적 부담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국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시장 보호 성격의 제도적 요건이 강화될 경우, 해당 국가로 수출하거나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공급망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보호무역적 성격이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 기업은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공급망 관리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글로

별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공급망 재편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기점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통상환경은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및 국내 기업의 공급망 전략 또한 국가 및 산업 차원에서 일정 부분 재편되었다. 공급망 변화의 실질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무역통계를 활용하면 상품의 이동 경로 및 흐름을 관찰할 수 있으며,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는 국가 간 부가가치 이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무역통계는 장기간의 시계열을 보유하며 비교적 최신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다국 간 생산 경로가 일반화된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국제산업연관표는 국가 간 가치사슬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최신성이 떨어지고, 일부 주요국 중심으로만 데이터가 제공되며, 비정기적으로 작성된 국가별 산업연관표에 기초해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기존 자료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적 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간 투자 흐름은 UNCTAD, IMF, OECD 등에서 제공하지만, 산업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는 접근이 제한적이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해외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는 만큼, 그린필드 형태의 해외직접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Orbis사가 제공하는 Crossborder Investment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주요 기업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현황을 국가 및 산업 단위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나. 분석 자료

글로벌 기업의 활동 및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된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데이터는 Moody's Analytics가 전 세계 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정제하여 구축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자료이며, 정량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해석을 위한 기반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Orbis는 전 세계 수천만 개의 기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상장·비상장 여부, 산업 특성,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본 데이터는 기업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고용 현황, 소유 구조, 계열 관계, 투자 이력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간 비교 및 국가 간 산업 구조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동일한 데이터 포맷으로 각국의 기업 정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복수 국가 간의 정량 비교와 산업 분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Orbis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기업의 소유 구조와 계열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며, 이는 국내외 타 기관 보고서에서 활용한 자료와 차별점을 갖는다.⁷³⁾ 각 기업의 직·간접적 지분 관계, 최종 실소유자(Ultimate Owner), 계열사 및 자회사 정보가 연결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의 지배구조를 추적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 국가 또는 산업 내 외국인투자 자본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의 기업 단위 연결 관계를 분석하

73) UNCTAD 연례 투자보고서에서는 FDI Markets를 활용한다. FDI Markets와 Orbis Crossborder Investment는 모두 글로벌 흐름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이지만, 데이터 수집 방식과 커버리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FDI Markets는 주로 언론 보도 및 공공 소스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 발표(Announced) 단계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반면, Orbis 데이터는 언론 외에도 기업의 공식 보고서, 공시자료, 현지 정부 발표 등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고, 프로젝트의 실제 실행 여부(Completed), 중단 여부(Cancelled) 등 상태(Status) 정보까지 추적하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Orbis 자료는 기업의 최종 지배구조상의 실제 모회사(Global Ultimate Owner)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기업의 지배 기업 국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⁷⁴⁾

이외에도 Orbis Crossborder Investment는 그린필드형 신규 투자 및 M&A와 같은 국경 간 자본 이동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다. 신규 투자 정보는 다양한 뉴스 소스, 기업 보도자료, 공시자료, 정부기관 데이터 등에서 수집되며, 최소한의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 문서 또는 복수의 독립된 출처를 통해 확인된 건만 포함된다.⁷⁵⁾ M&A 거래의 경우 전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의 공시자료와 기업 발표문을 기반으로 추적되며, 거래의 구조, 지분율, 참여 주체 등 주요 세부사항이 함께 기록된다.⁷⁶⁾

본 자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석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투자 행위 및 금액에 대한 교차검증을 거쳤으나, 모든 기업의 투자 활동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본 유입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투자 발표 시점과 자금의 실질적인 이동 시점 간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투자 규모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일 연도 기준의 수치를 절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연도별 추이를 함께 살펴보고 일정 기간의 누적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루머(rumored)’ 상태나 미완료된 투자 건(incompleted)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발표되었거나 진행이 확인된 사례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 금액의 절대적 규모보다는 국가 간 혹은 기업

74) 예를 들어 해외 기업 중 국내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상 국내 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실소유 중심의 분석 진행이 가능하다.

75) 공식 문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독립된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과정을 통해 Greenfield형 FDI 데이터가 구축된다.

76) M&A 거래 정보는 가능한 한 공식 문서나 보도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기록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수의 뉴스 출처를 비교·검토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뒤 데이터를 등록한다.

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양상을 조망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동적 재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분석 결과

1)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추이

먼저,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와 금액 추이를 통해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자.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는 건수와 금액 측면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동 양상을 나타냈다. 해당 기간의 해외직접투자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 주요국의 정책 전환, 팬데믹 충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약 1만 7천~2만 건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금액 역시 1조 2,000억~1조 4,000억 달러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후 2013년을 기점으로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 뚜렷한 확대세로 전환되었다. 2013년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약 3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금액은 1,800억~2,300억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14~15년에는 투자 건수가 3만 3천 건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금액은 2015년에 일시적으로 정점을 찍으며 약 2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는 투자 건수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약 4만 2천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금액 또한 같은 해 약 2조 6,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의 세계적 확

산으로 인한 글로벌 이동 제한, 공급망 교란, 투자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해외 직접투자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금액은 약 1조 달러 수준으로 각각 급감

그림 3-4.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추이(2010~24년)



주: 본 추이는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를 포함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5.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201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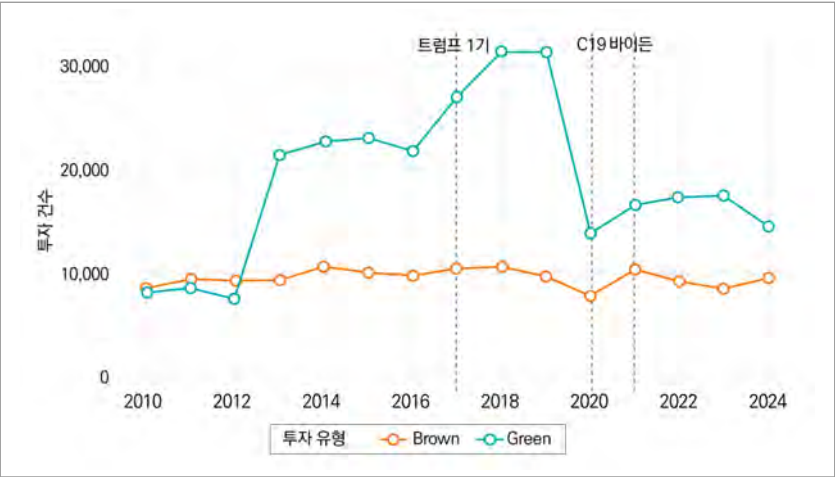


주: 본 추이는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를 포함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 중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시점이다.

그림 3-6. 투자 유형별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사업 건수 추이(201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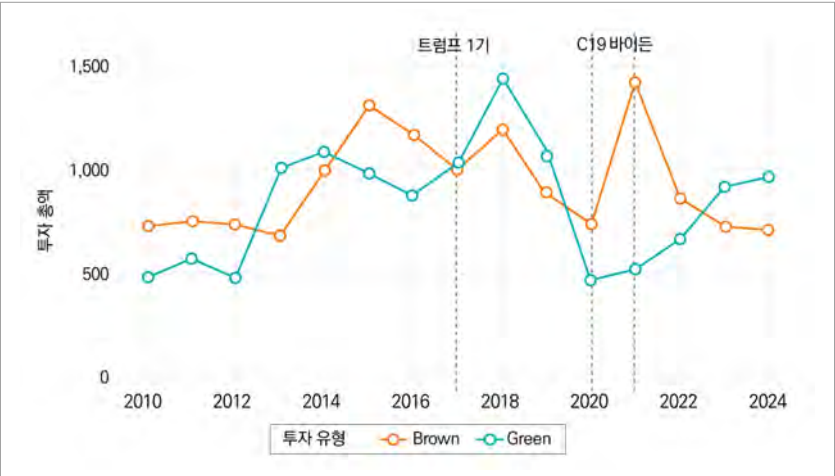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7. 투자 유형별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금액 추이(2010~24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2021년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소 회복세가 관측되었다. 투자 건수는 약 2만 6천 건으로 반등하였고, 금액도 약 1조 9,00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이후 2022년부터는 다시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고금리 기조, 글로벌 수요 둔화,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를 그린필드 투자와 브라운필드 투자로 나누어 추세를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투자 건수 측면에서는 그린필드 투자가 브라운필드 투자보다 우세한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그린필드 투자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8년에는 약 3만 1천 건에 달하며 정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공급망 구축 수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신설 투자 중심의 전략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브라운필드 투자는 같은 기간에 대체로 1만 건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수 측면에서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변화했다.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모두 투자 건수가 감소했으나, 특히 그린필드 투자에서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팬데믹 시기에 더욱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후 2021년부터는 그린필드와 브라운필드 투자 모두 일정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정체 국면 또는 소폭의 조정 흐름이 지속되는 중이다.

투자 금액 측면에서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브라운필드 투자는 특정 연도에 그린필드 투자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록한 시점들이 존재하며, 특히 2015년과 2021년에는 약 1조 4,000억~1조 5,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기존 기업 인수·합병(M&A)을 중심으로 한 대형 거래가 일부 연도에 집중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그린필드 투자는 브라운필드 투자와 비교하여 금액 변동성이 높은 모습이 확인된다. 2018년에는 약 1조 5,000억 달러

에 근접하며 정점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5,000억 달러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자.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흐름과 유사하게 팬데믹 시기에 급감했다가 이후 회복되는 패턴을 보이는 등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2010년대 초반은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직접투자는 120억~350억 달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흐름을 반영하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70억~1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년) 동안에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의 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가 한국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약 45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반영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50억~100억 달러 사이에서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의 투자가 급감하였다. 이는 국내외 기업 모두가 투자 보류와 사업 축소에 나섰던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1년 이후 공급망 재편과 미국 중심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약 800억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 시기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에서의 생산기지 확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감소하였지만, 2023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재차 증가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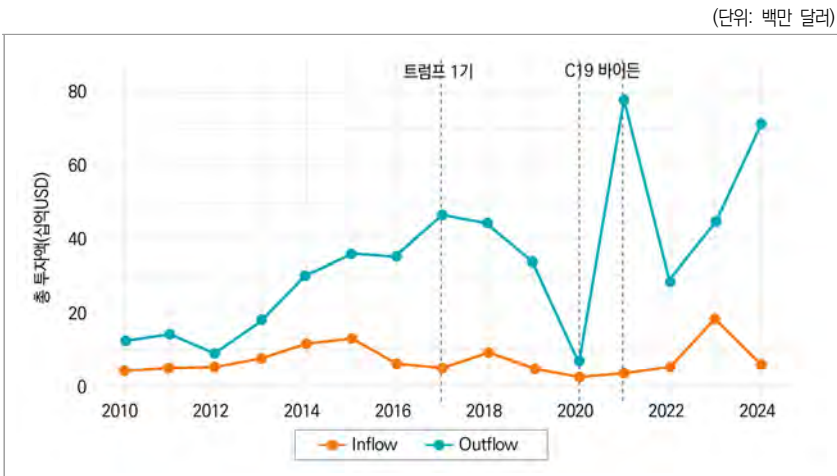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중심의 구조임이 확

인된다. 이러한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중심 구조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전략적 국가에서의 입지 확대와 현지화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 여건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및 국별 추이

다음으로 글로벌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자. 이를 위해 본 분석은 유럽, 북미, 동아시아·태평양, 중동·북아프리카 등 지역별로 구분하고, 미국과 중국은 주요 개별국가로서 별도 집계하여 해외직접투자 수혜 비중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럽, 중앙아시아, 미국, 중국 등 일부 지역과 국가가 전체 투자 유입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설비, 시설 투자 결정이 특정 지역에 구조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8.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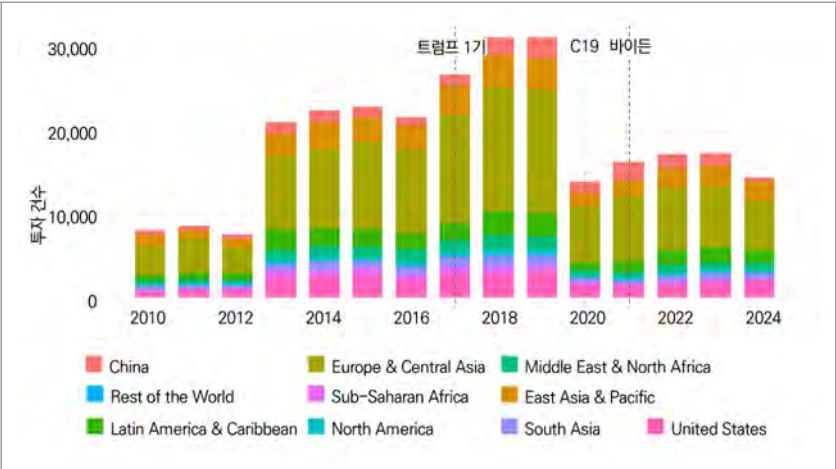
먼저 투자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럽 및 중아시아 지역이 가장 지속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다. 특히 2013년 이후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7~18년 사이에는 연간 1만 3천 건 이상을 유치하였고, 이는 전 세계 총 외국인직접투자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유럽의 풍부한 인프라, 통합시장 접근성, 제도적 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과 미국도 전체 투자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14~17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투자 건수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일부 시기의 경우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미-중 갈등, 기술 통제 강화, 규제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은 팬데믹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2021년 이후 투자 건수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기타 지역으로는 동아시아, 태평양, 북미(미국 제외), 중동·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이 중간 수준의 투자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아시아, 아프

그림 3-9. 지역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추이(2010~24년)

(단위: 건수)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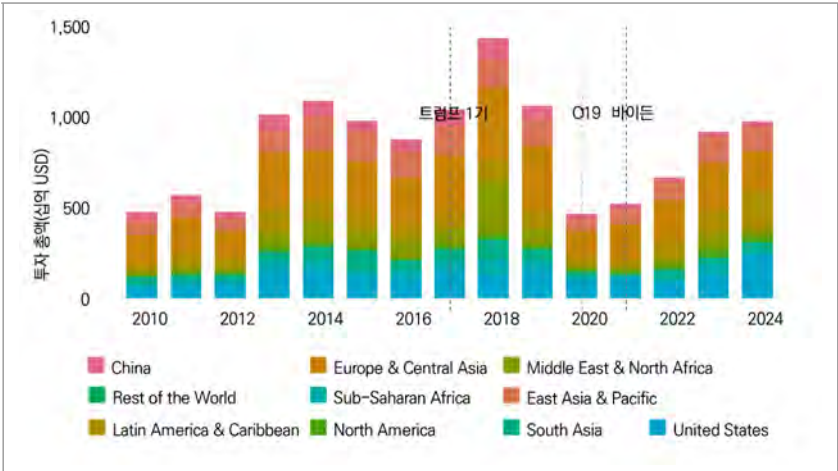
리카 지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유입 건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금액 기준에서도 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해왔으며, 중국 역시 금액 기준 유입에서도 주요 수혜국으로 확인되지만 팬데믹 이후 유입 금액은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202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할 때 첨단 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 태평양과 북미(미국 제외)는 투자 건수에 비해 투자 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동·북아프리카는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된 특정 연도에 일시적인 금액 급증이 관측된다. 이외에 남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지역의 투자 유입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⁷⁷⁾

그림 3-10. 지역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2010~24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77) 브라운필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린필드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선진국 편중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린필드 투자는 신흥국이 다수 포함된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도 확인되지만, 브라운필드 투자는 제도적 신뢰도와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부록 그림 1, 부록 그림 2 참고).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금액과 건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투자 건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2010년대 초반에는 전체 글로벌 외국인직접 투자에서 약 8~10% 내외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며 비견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중국의 투자 유입 건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미국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미국의 비중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였으며, 2024년에는 약 12%에 근접하였다. 반면 중국은 202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전체 건수 중 약 5% 수준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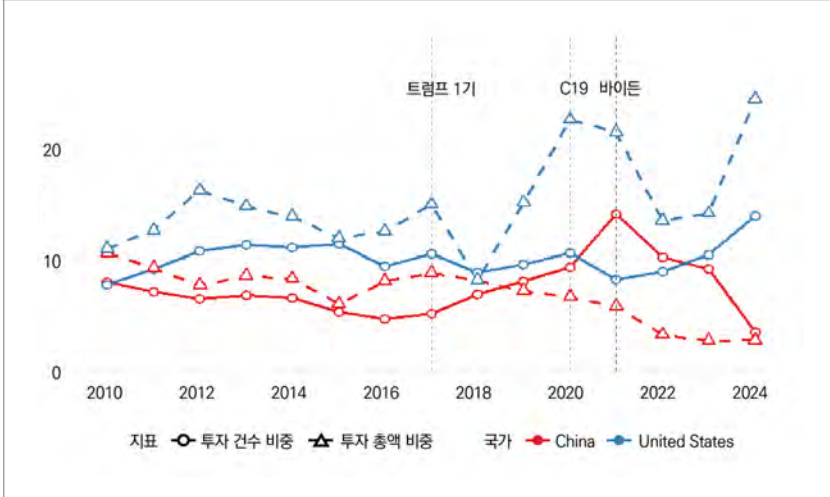
투자 금액 기준에서는 양국 간의 격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은 전 기간을 통틀어 금액 기준 비중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전체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 금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미국의 금액 기준 비중은 15~20% 사이를 유지하며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위치가 확인된다.

반면 중국의 투자 금액 비중은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10% 내외에서 유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점진적인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24년에는 3%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확인되기에,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시장 내 미국과 중국의 위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안정적이거나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최근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 환경을 고려한 글로벌 기업의 대미, 대중 투자 전략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⁷⁸⁾

그림 3-11.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추이(201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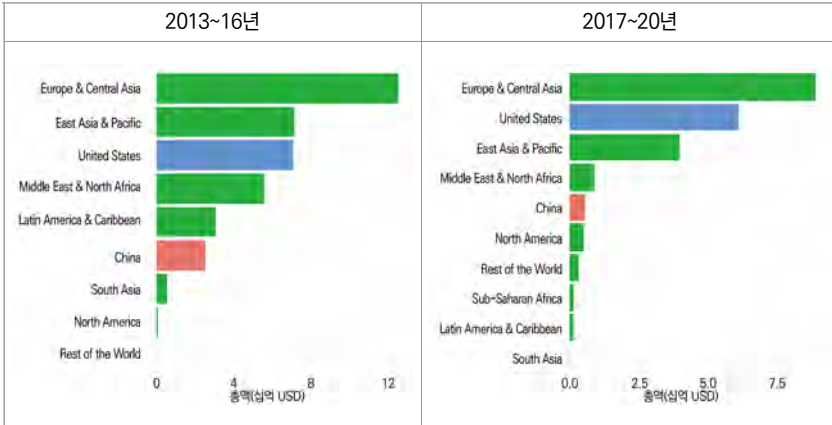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자. 먼저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럽 및 중양아시아와 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후 2017년부터 2020년 역시 유사한 추세가 확인되며, 한국에 대한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럽 및 중양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시기 유럽 및 중양아시아는 총 93억 달러를 투자하며 각 지역 중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62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며 둘째로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다.

78)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브라운필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사한 추이가 확인된다. 미국은 브라운필드 투자 유입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안정적이거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두 지표 모두에서 비중이 감소 중이다(부록 그림 3 참고).

그림 3-12. 한국의 지역별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2013~20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중국은 8억 달러를 투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36억 달러를 투자하며 셋째로 큰 투자 규모를 보였다. 이외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는 11억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억 달러, 남아시아는 1억 달러, 라틴아메리카는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였으며 이 지역들이 국내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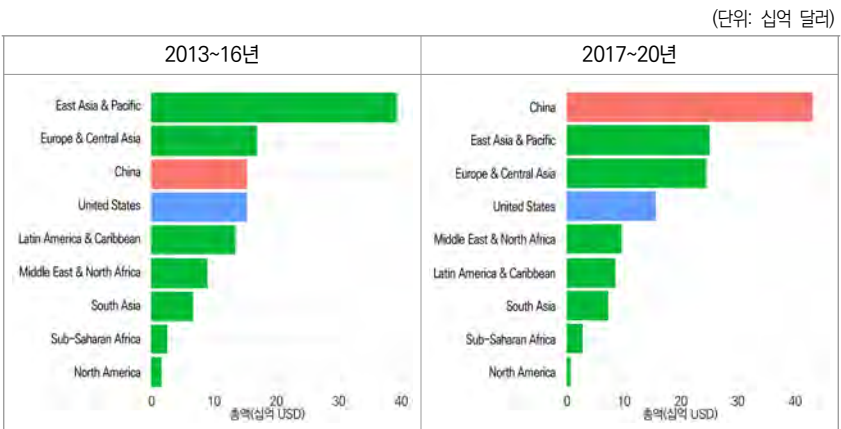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주목할 변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 중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의 투자 급증이다. 먼저 미국의 대한국 그린필드 투자는 95억 달러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해당 기간에 중국 역시 65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기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중 갈등 속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 협력이라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대한국 그린필드 투자는 72억 달러로 전기 대비 매우 큰 증가세가 확인된다.

에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하며,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하였다. 같은 기간에 한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260억 달러,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24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였다.

한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150억 달러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 외에도 한국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120억 달러), 라틴아메리카(110억 달러), 남아시아(90억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50억 달러), 북미(미국 제외, 10억 달러) 지역에도 투자를 진행하였다.

2021년부터 2024년 기간에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 흐름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로, 한국은 해당 기간 미국에 총 1,550억 달러를 투자하며 모든 지역 중 가장 많은 투자를 집중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정부의 산업정책 변화와 맞물려, 한국 대기업들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본격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 기간 한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는 210억 달러, 유럽 및 중앙아시아는 200억 달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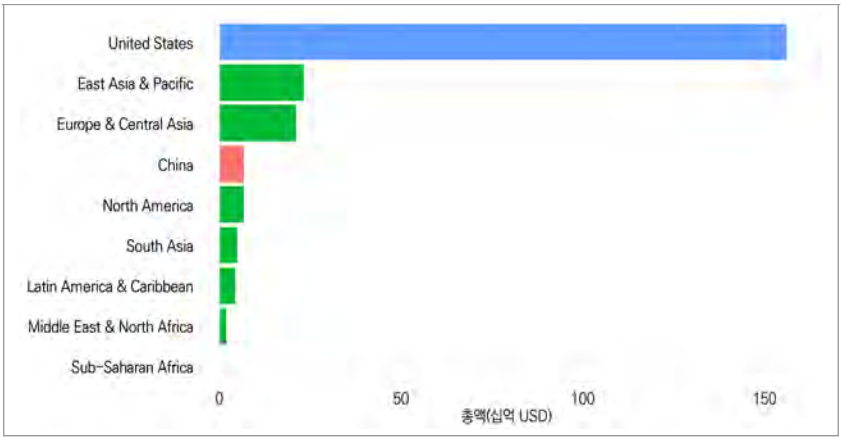
그림 3-14. 한국의 지역별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3~20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80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이는 미중 갈등의 심화, 중국 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기술 유출 우려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한국은 북미(50억 달러), 남아시아(50억 달러), 라틴아메리카(50억 달러), 중동 및 북아프리카(20억 달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20억 달러)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각각 단행하였다. 해당 지역들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이거나, 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5.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국가 및 지역(2021~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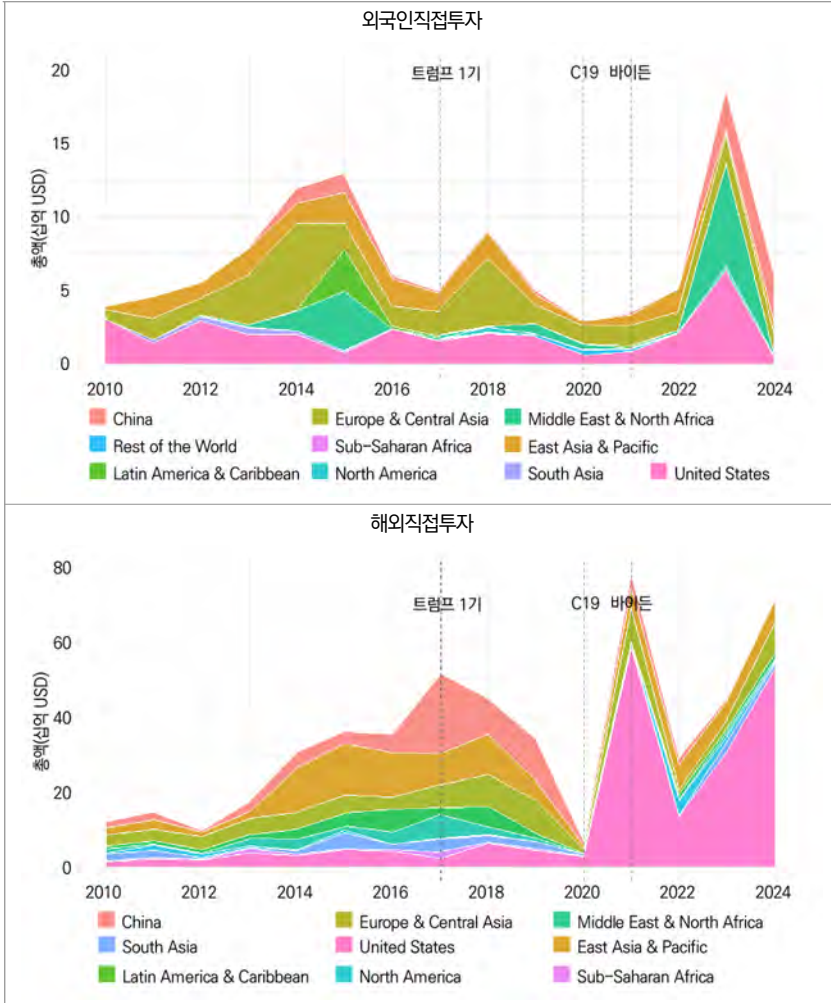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이처럼 2017~20년에는 한국기업들이 중국 및 아시아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의 투자 전략을 추진한 반면, 2021~24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3-16. 한국의 지역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앞서 분석한 시기별 한국의 그린필드 투자를 시계열 그래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에 대한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16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투자 증가가 뚜렷해지

다가, 코로나19 발생 시기인 2020년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2021년부터 미국과 중동 및 중국의 투자 급증이 두드러지며, 앞서 분석한 대로 한국에 투자하는 지역이 재편되었음을 시계열 흐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2014~17년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정점을 찍은 뒤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점진적인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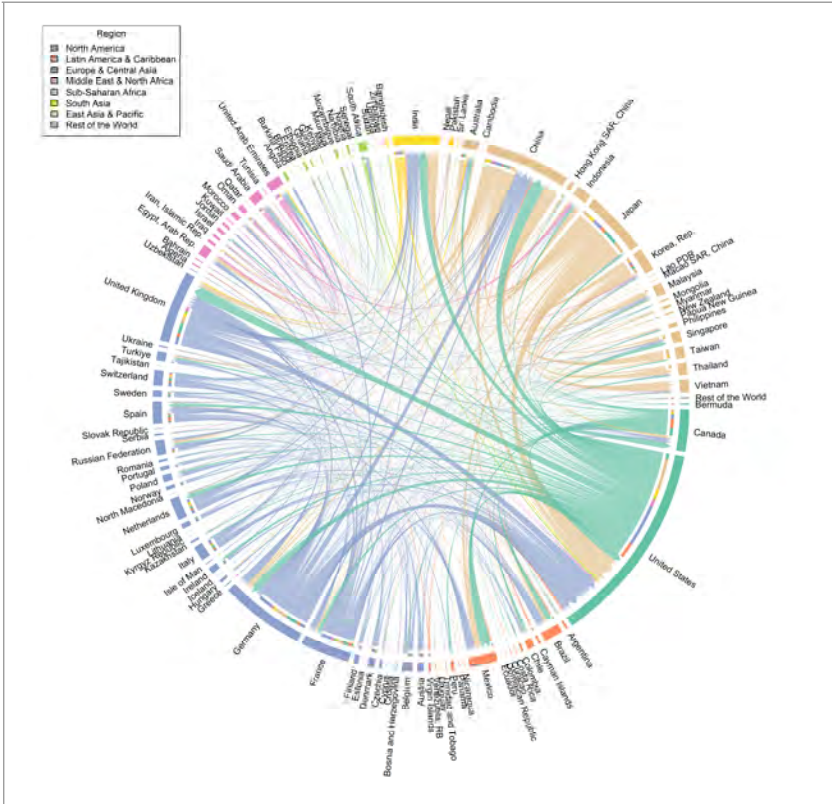
이후 2021년부터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회복세를 넘어서 급증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코로나19, 미-중 경쟁,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 등 주요 전환점을 거치며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재편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변화

다음으로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도식을 통해 살펴보자.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흐름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조로 시각화한 결과, 2013~16년과 2017~20년의 투자 네트워크는 유사하지만 2021~24년의 네트워크는 변화가 확인된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그린필드 투자에서 미국의 역할 확대이다. 미국은 2017~20년에도 주요 투자 수혜국 중 하나였으나, 2021~24년 이후 글로벌 투자 유입이 더욱 강화되었다. 아래 그림의 원은 해당 기간에 발표된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유입을 나타내는데, 해외직접투자자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유럽(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아시아, 중남미 등 국가와의 연결선이 더욱 굵어지고 다양해졌는데,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이 단순한 자본 유입지가 아닌 전 세계 투자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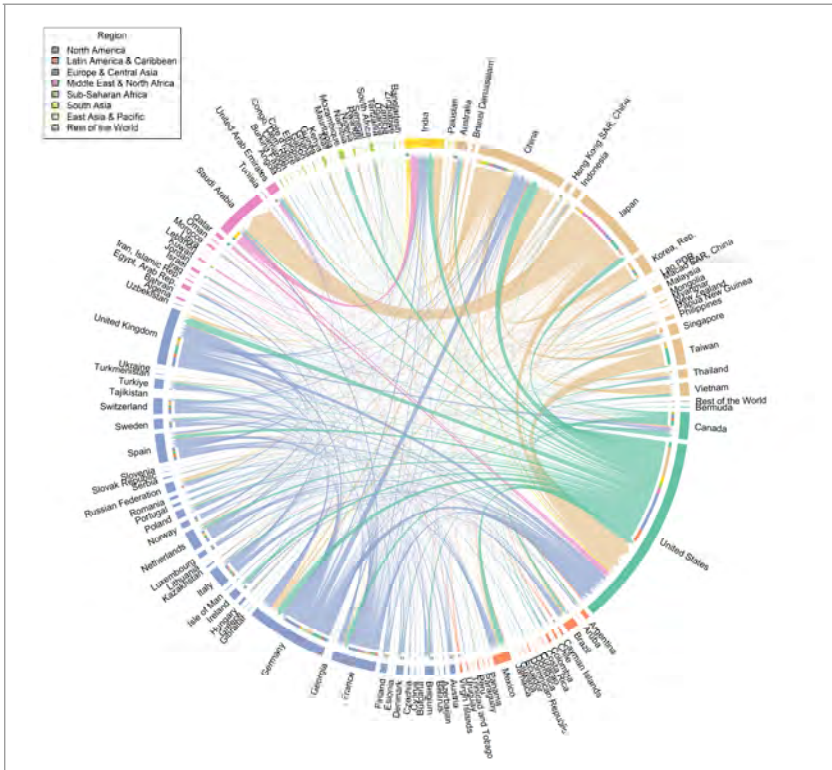
그림 3-17.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이와 비교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감소세가 확인된다. 2017~20년에는 중국으로 미국, 독일, 한국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지만, 2021년 이후 이러한 투자 흐름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며 국제 투자 네트워크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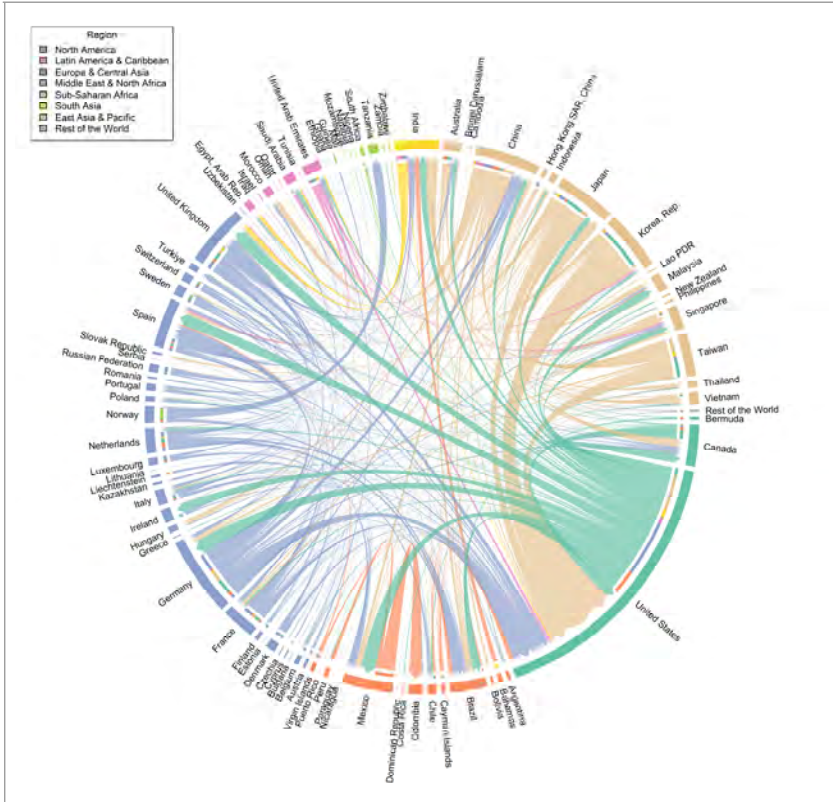
그림 3-18.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제조 국가들은 대미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의 세 국가에서 2021~24년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첨단 제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기조가 이 국가들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3-1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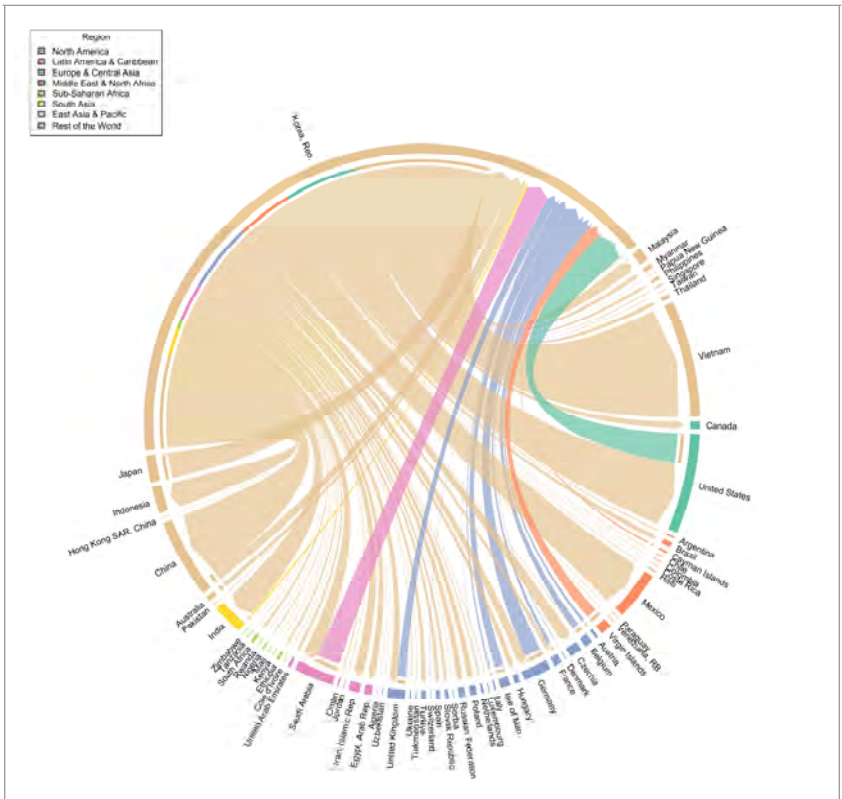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또한 멕시코,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2021~24년에는 북미 및 중남미 국가로 향하는 글로벌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니어쇼어링 전략과 북미 지역 내 경제안보 협력 강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최근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북미 지역의 생산 허브로서 위상이 강화된 모습이다.⁷⁹⁾

79) 그린필드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브라운필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중

다음으로 글로벌 추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를 살펴보자. 먼저 2013~20년 기간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 내 집중도가 높은 구조를 보였다. 이 시기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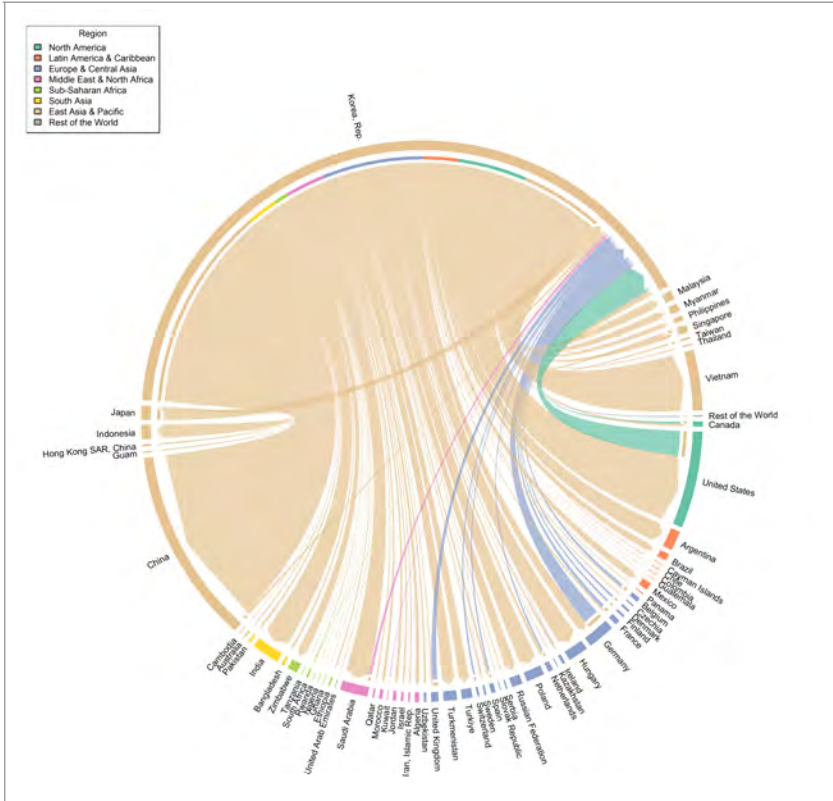
그림 3-20. 한국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은 확대되었지만, 중국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부록 그림 4, 부록 그림 5, 부록 그림 6 참고).

그림 3-21. 한국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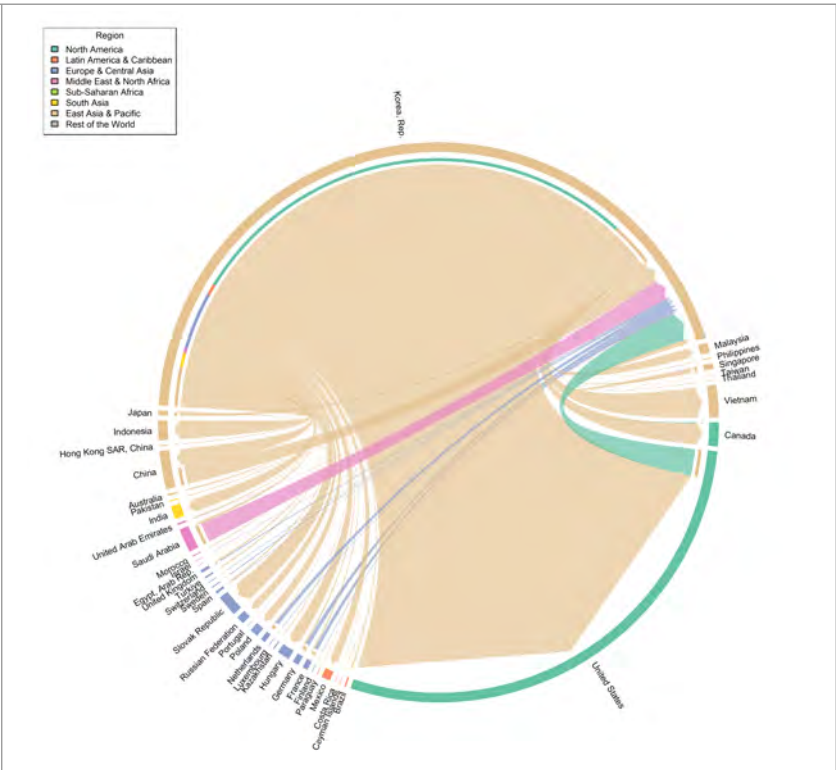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특히 중국은 독보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기존의 생산기지 역할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등 비전통권역으로의 전략적 진출도 일부 감지되며, 자원·에너지 분야 중심의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유럽의 대한민국 외국인직접투자는 독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유의미

그림 3-22. 한국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2021~24년 기간에는 한국의 투자 구조가 명확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새롭게 캐나다로의 진출도 확인되었다. 유럽 지역에서는 여전히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한 투자가 확인된다. 아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아시아 국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확인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전 시기와 달리 신규 투자처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동남아 내

새로운 생산거점 확보 흐름과 일치하는 양상이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대한민국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글로벌 모두에서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유럽·중앙아시아의 비중은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해외직접투자의 수혜지로 중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확대된 반면, 한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에서 비중이 축소된 흐름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이전 시기와 비교해 투자가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4)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변화

본 절에서는 그린필드를 중심으로 산업별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상위 10대 투자 유출 및 유입국, △글로벌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다. 본 절은 ① 자동차, ② 가전, ③ 반도체, ④ 철강·금속, ⑤ 조선, ⑥ 석유·화학, ⑦ 의약품·바이오의 총 7개의 산업을 분석한다.

가) 자동차

먼저 그린필드 유형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를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여 살펴보자.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약 300~400건의 투자와 4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유입이 유지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13~15년 사이에는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였는데, 2014년에는 약 700건의 신규 투자와 9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액이 집행되며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보호무역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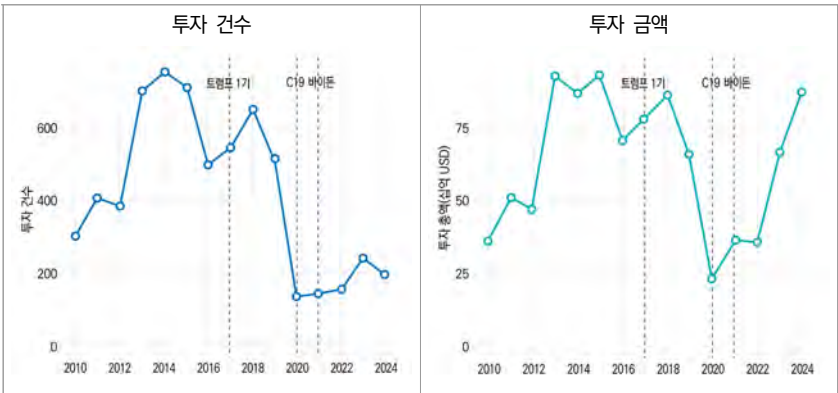
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 속에서 조정 국면이 나타났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일시적 반등이 있었으나 지속되지는 못했다. 2018년 이후에는 점진적 둔화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투자 건수와 금액 모두가 저점을 기록했다. 투자 건수는 150건 미만으로 줄었고, 금액 또한 약 25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 회복 국면에서는 건수와 금액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투자 건수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귀하지는 못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정체 또는 소폭 반등 흐름에 머물렀다. 반면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등하였고,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700억~900억 달러를 초과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대칭적 회복은 자동차 산업의 투자 구조가 다수의 소규모 설비 확장에서 선택적·전략적 대형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해외직접 투자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한 건당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EV), 배터리 생산시설, 반도체 내재화, 디지털

그림 3-23. 자동차 산업의 그린필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제조 인프라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투자 집중 확대와 연결된다.⁸⁰⁾

결과적으로 최근 자동차 산업 내 그린필드 투자 변화는 양적인 회복보다 질적인 구조 전환이 더 강하게 진행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팬데믹을 계기로 기존의 대량생산 중심 글로벌 분산 전략에서 벗어나, 친환경·디지털 전환 중심의 전략 거점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⁸¹⁾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그린필드 해외 직접투자 상위 10대 국가 순위를 비교하였다. 2013~16년 기간에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791억 달러와 645건, 771억 달러와 521건으로 압도적인 투자 규모를 보이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 중심국 지위를 확고히 했다. 미국, 프랑스, 한국, 중국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일본·독일·미국의 3강 체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에도 일본과 독일은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 글로벌 투자 유출의 중심국 위치를 유지했다. 2017~20년 기간에 일본은 전체 588억 달러, 360건의 해외 설비 투자를 통해 1위를 차지하였으며, 독일은 오히려 건수에서는 일본을 앞서 390건이었으며 금액에서도 514억 달러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21~24년 들어서는 양국 모두 금액과 건수가 다소 감소한 반면, 미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며 상위권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2021~24년 기간 중 총 367억 달러의 투자로 1위에 올랐으며, 건수는 77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와 바이든 행정부 이후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주요 부품사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 전략과 맞물리며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아웃바운드 투자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80) OECD(2024),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value chain: Implications for FDI-SME linkages," p. 37 참고.

81) McKinsey Quarterly(2022), "Transition to net zero: Road mobility"(검색일: 2025. 8. 31.).

북미와 유럽, 아시아 주요 시장에 대한 공급망 확보형 투자가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은 2021~24년 금액 기준으로 315억 달러(4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금액과 건수 모두 감소하였다. 2017~20년에는 투자 금액과 건수가 각각 185억 달러(4위), 143건을 기록했으나, 2021~24년에는 184억 달러(6위), 79건으로 감소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중국정부의 대외 투자 관리 강화와 주요 기업들의 내수시장 중심 재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15.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유출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동차 산업(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일본	79.1 (22.9)	645 (24.2)	일본	58.8 (23.1)	360 (19.5)	미국	36.7 (16.2)	77 (10.4)
2	독일	77.1 (22.4)	521 (19.5)	독일	51.4 (20.2)	390 (21.1)	일본	36.5 (16.1)	94 (12.7)
3	미국	44.2 (12.8)	387 (14.5)	미국	36.9 (14.5)	189 (10.2)	독일	36.3 (16.0)	168 (22.6)
4	프랑스	27.4 (7.9)	183 (6.9)	중국	18.5 (7.3)	143 (7.7)	한국	31.5 (13.9)	71 (9.6)
5	한국	22.0 (6.4)	153 (5.7)	한국	18.0 (7.1)	105 (5.7)	네덜란드	26 (11.4)	30 (4.0)
6	중국	18.1 (5.2)	134 (5.0)	프랑스	14.7 (5.8)	129 (7.0)	중국	18.4 (8.1)	79 (10.6)
7	캐나다	12.4 (3.6)	101 (3.8)	네덜란드	9.7 (3.8)	47 (2.5)	홍콩	9.4 (4.1)	15 (2.0)
8	네덜란드	12.3 (3.6)	52 (1.9)	이탈리아	7.5 (2.9)	58 (3.1)	베트남	8.3 (3.6)	9 (1.2)
9	인도	9.8 (2.8)	48 (1.8)	대만	5.6 (2.2)	7 (0.4)	프랑스	6.2 (2.7)	39 (5.2)
10	스페인	5.9 (1.7)	38 (1.4)	캐나다	4.7 (1.9)	54 (2.9)	캐나다	3.2 (1.4)	25 (3.4)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 외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주요국은 비교적 안정적인 유출 흐름을 유지한 반면, 홍콩, 베트남,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하며 글로벌 자동차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종합하면, 자동차 산업 내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흐름은 일본, 독일 등 전통 제조국과 함께 미국과 한국 등 전략 산업 전환 국가 중심으로 다극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을 살펴보자. 2013~16년에는 미국이 536억 달러와 447건을 기록하며 최대 수혜국이었으며, 멕시코(488억 달러, 409건), 중국(476억 달러, 245건)이 뒤를 이었다. 해당 시기에는 북미(미국·멕시코)와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FDI의 중심축이었고,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신흥 제조국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며 생산거점으로 부상하였다.

2017~20년 기간에 중국은 524억 달러와 167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1위 투자 수혜국이 되었고, 미국이 522억 달러와 272건의 투자를 수혜하며 2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는 131억 달러, 203건으로 투자 금액 기준 4위였으나, 투자 건수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인도(157억 달러, 114건)와 브라질(116억 달러, 59건)도 주요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수혜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스페인, 태국, 독일 등 전통 제조국에도 역시 안정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이루어졌다.

2021~24년에는 미국이 다시 470억 달러, 138건의 투자를 유지하며 1위 자리를 회복했고, 멕시코가 374억 달러, 145건의 투자로 2위를 차지하며 북미 지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이 확인된다. 브라질은 337억 달러, 57건으로 3위에 오르며 남

미 내 주요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캐나다(220억 달러, 18건)는 금액 기준 4위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인도(139억 달러, 47건)와 중국(116억 달러, 39건)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전 시기 대비 투자 규모와 건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이 새롭게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여, 유럽 내 전기차 및 부품 생산거점으로서의 확장세가 확인된다.

표 3-16.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동차 산업(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53.6 (15.5)	447 (16.8)	중국	52.4 (20.6)	167 (9.0)	미국	47.0 (20.7)	138 (18.6)
2	멕시코	48.8 (14.2)	409 (15.3)	미국	52.2 (20.5)	272 (14.7)	멕시코	37.4 (16.5)	145 (19.5)
3	중국	47.6 (13.8)	245 (9.2)	인도	15.7 (6.2)	114 (6.2)	브라질	33.7 (14.9)	57 (7.7)
4	인도	19.7 (5.7)	142 (5.3)	멕시코	13.1 (5.1)	203 (11)	캐나다	22.0 (9.7)	18 (2.4)
5	스페인	17.2 (5.0)	52 (1.9)	브라질	11.6 (4.6)	59 (3.2)	인도	13.9 (6.1)	47 (6.3)
6	브라질	14.8 (4.3)	89 (3.3)	스페인	11.4 (4.5)	53 (2.9)	중국	11.6 (5.1)	39 (5.2)
7	영국	14.8 (4.3)	98 (3.7)	독일	7.8 (3.1)	129 (7)	슬로바키아	8.7 (3.8)	9 (1.2)
8	태국	12.3 (3.6)	81 (3.0)	태국	7.5 (3.0)	45 (2.4)	헝가리	7.2 (3.2)	17 (2.3)
9	폴란드	8.8 (2.5)	82 (3.1)	캐나다	5.2 (2.0)	17 (0.9)	영국	4.5 (2.0)	17 (2.3)
10	인도네시아	8.0 (2.3)	39 (1.5)	러시아	5.2 (2.0)	42 (2.3)	인도네시아	4.4 (1.9)	7 (0.9)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종합하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구조는 2010년대 중반까지 북미·중국 중심의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2020년대 들어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미주권의 비중 강화와 동유럽 생산기지의 적극적인 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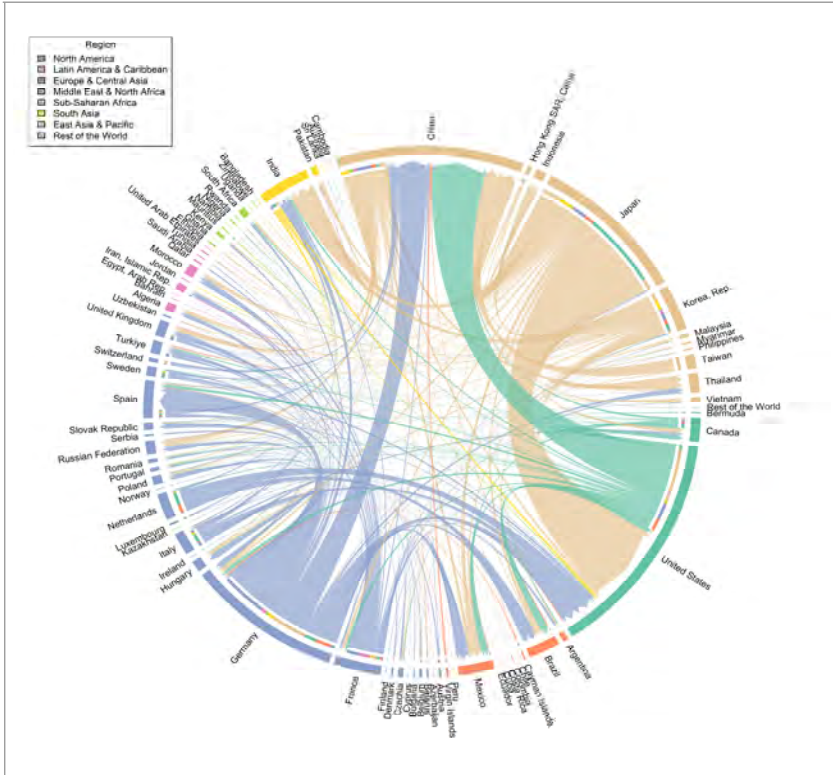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그린필드 투자 흐름을 국가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⁸²⁾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대이다. 미국은 해당 기간 내내 자동차 산업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수혜국이었지만, 특히 2021년 이후 그 비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2021년 이후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로부터의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급망 안정화 정책,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 등이 실질적인 투자 유입 흐름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자동차 산업 내 투자 네트워크에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멕시코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국과의 연결선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북미 공급망과 연계된 멕시코의 네트워크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은 북미 공급망을 위해 멕시코, 브라질뿐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자동차 해외직접투자 시장에서의 중국의 비중 감소이다. 2017~20년 중국은 독일과 미국의 주요 투자 대상 국가였으며, 중국의 투자 역시 다양한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24년 이후 독일의 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미국의 대중국 투자 흐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82) 2013년부터 2016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24.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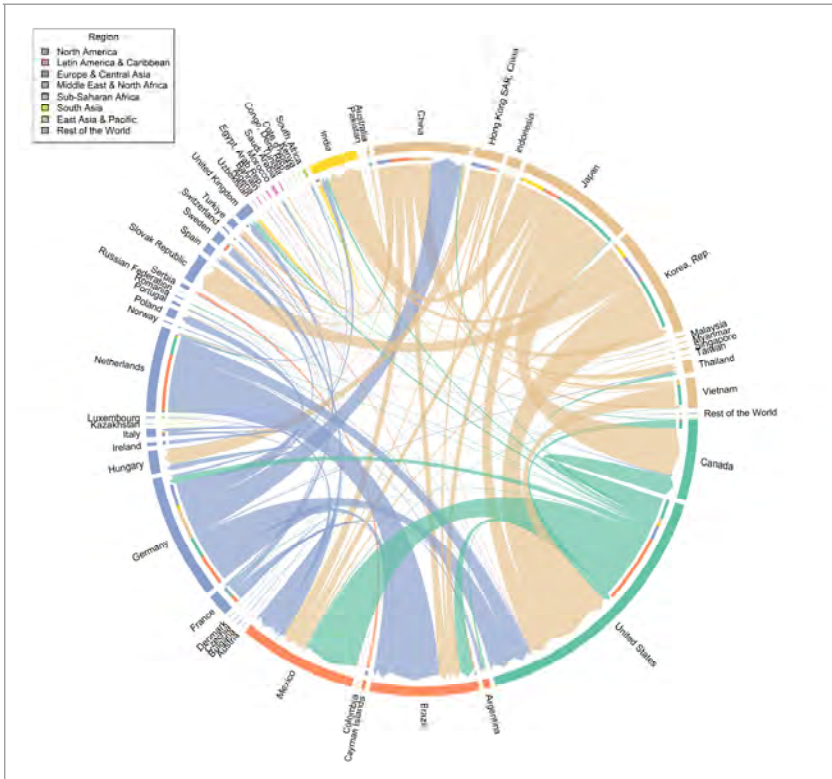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이외에 유럽 내에서는 독일, 프랑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주요 투자국이자 수혜국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이후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자동차 산업 내 글로벌 투자 흐름은 ‘지정학적 재편’과 ‘산업전략’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상대적 비중 축소, 미국·멕시코·브라질 중심의 북미 네트워크 강화, 아시아 선진 제조국들의 미주 지역 투자 확대 등으로부터 자동차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 블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림 3-25.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자동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이러한 글로벌 투자 흐름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구조를 함께 살펴보자. 먼저 2013~20년 기간의 맵을 보면,⁸³⁾ 한국은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연결이 두드러지며,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등 일부 신흥국가와의 연결도 확인된다. 다수의 저비용 생산기지 확보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양상이다.

83) 2013~16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8]에 위치함.

그림 3-26.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유출 추이(2017~24년): 자동차



주: 본 네트워크 맵은 Fruchterman-Reingold(FR)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는 투자 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투자액이 클수록 서로 가깝게 배치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이외에도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도 일정 수준의 투자가 진행되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투자 다변화가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지역에서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중심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며, 현지 완성차 조립라인 및 부품 공급망 진출이 주요 투자 목적으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산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나 2021~24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구조적 재편이 확인된다. 한국과 미국이 중심 노드로 밀착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산업 분야 투자가 미국에 집중된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전역으로의 연계도 강화되어, 미국 중심의 완성차·배터리 공급망에 대응한 전략적 진출이 본격화된 시기였음을 보여준다(글상자 3-1 사례 참고).

유럽 지역의 경우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스페인 등이 중심부로 이동하여 동·서유럽을 아우르는 투자 확대가 진행되었고, 전기차 생산, 배터리 셀 조립, 주요 부품 공급 거점 구축 등의 목적이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부 핵심국 중심의 투자로 구조가 변화되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부 가까이 위치하며, 중동권 내에서 유일하게 구조적 연결이 확대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는 사우디의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적극적 유치 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주목할 변화는 중국의 위치 변화이다. 2017~20년 기간에는 중국이 한국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 내 핵심 투자 대상국 중 하나로 존재했으나, 2021~24년 네트워크에서는 중국 노드가 후방으로 밀려나며 중심 연결망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즉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2017~20년에는 분산된 생산기지 구축 전략이 중심이었다면, 2021~24년에는 북미, 유럽, 일부 아시아 국가(인도네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한 투자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구조 변화는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구조 변화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글상자 3-1. 현대 자동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공장 및 배터리 생산시설 설립 사례⁸⁴⁾

- 2022년 5월 20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Bryan County)에 첫 전용 전기차(EV) 공장 및 배터리 제조시설을 설립하기로 주 정부와 합의함.
- 총 투자 규모는 약 55억 4천만 달러(USD 5.54 billion) 수준으로,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며, 배터리 제조시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될 예정임.

자료: 현대자동차(2022. 5. 21.), “Hyundai Motor Group to Establish First dedicated EV Plant and Battery Manufacturing Facility in the U.S.”(검색일: 2025. 9. 17.).

나) 전기·전자: 가전

다음으로 전기·전자 산업 중 가전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를 살펴보자. 우선 가전 산업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건수와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투자 건수 기준으로 연간 30~60건 수준에서 변동하였고, 투자 금액도 20억~60억 달러 내외의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가장 활발한 투자 활동은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는 투자 건수가 각각 약 60건, 투자 금액은 60억~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투자 건수는 약 15건 이하로 급락하였고, 투자 금액 또한 10억 달러 초반대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2021~24년까지의 기간에는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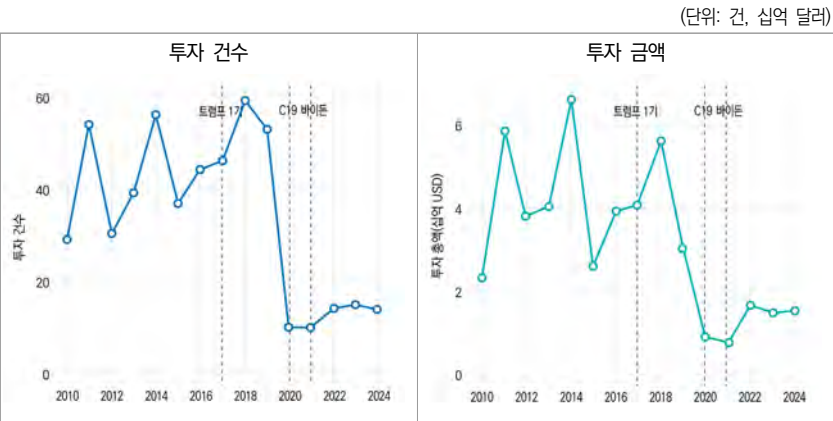
84) 현대자동차(2022. 5. 21.), “Hyundai Motor Group to Establish First dedicated EV Plant and Battery Manufacturing Facility in the U.S.”(검색일: 2025. 9. 17.).

지 못한 채 연간 20억 달러를 하회하는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투자 건수는 2021년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건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나, 투자 금액은 동일 기간 동안 뚜렷한 회복 없이 정체 또는 소폭 감소 흐름을 나타낸다.

해당 추세를 살펴볼 때, 가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전반적으로 산업 포화와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든 산업의 투자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가전, 에너지 고효율 제품, 친환경 소재 적용 등 신제품군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의 재도약 가능성이 있지만,⁸⁵⁾ 기존의 대규모 제조설비 확장은 줄어드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도화된 기술 투자 중심의 거점 형태, 혹은 소형화된 현지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가전 산업 내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국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자. 2013~16년에는 독일이 49억 달러, 56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28억 달러, 11건)과 중국(16억 달러, 13건)이 뒤

그림 3-27. 가전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85) Stellar Market Research, “Global White Goods Market: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25-2032)”(검색일: 2025. 9. 17.).

를 이었다. 당시에는 유럽·동아시아 제조국들이 균형적으로 상위권을 구성하며, 대규모 금액과 비교적 높은 건수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은 2017년 이후 금액 기준 1위를 차지하며 가전 산업 글로벌 투자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유지하였다. 2017~20년에는 약 27억 달러(1위)의 투자가 집행되었고, 2021~24년에도 17억 달러 이상(1위)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투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건수는 30건에서 1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전체 금액 또한 감소해 단위 투자 규모 확대보다는 전반적 투자 위축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는 중국 제조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조정하거나, 내수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은 2017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상위 국가 중 2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2017년 이후 그린필드 투자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17~20년 기준 10억 달러(5위)에서 6억 달러(4위)로 소폭 감소했지만 순위는 상승하였다. 이탈리아 역시 2017~20년 대비 투자 금액이 줄었음에도 2021~24년에는 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스웨덴과 스위스도 각각 6위와 7위로 올라서며 유럽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시도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탈중국 전략, 지역 분산형 생산기지 확보 측면의 글로벌 흐름과 연관된다. 반면 일본은 2017~20년에는 8억 달러 이상(8위)을 기록했으나, 2021~24년에는 순위에서 이탈하였으며, 홍콩 역시 2021년 이후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이를 종합하면 가전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대형 전통 제조국의 주도 구조 속에서 점진적인 축소 흐름을 보이며, 최근에는 한국, 이탈리아, 스웨덴 등 중견 기술국들의 제한적 부상이 관찰된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글로벌 가전 산업에서 그린필드 형태로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수혜국을 살펴보자. 먼저 2013~16년에는 베트남이 29억 달러, 9건으로 최대 수혜국이 되었으며, 인도(19억 달러,

14건), 미국(16억 달러, 14건)이 뒤를 이었다. 이 시기에는 베트남이나 인도와 같은 저비용 생산거점과 미국, 브라질 등 내수와 수출 양대 시장을 결합한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태국, 튀르키예, 중국 등에도 안정적인 그린필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확인된다.

2017~20년에는 미국이 전체 투자 금액 기준으로 1위(22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전 산업의 주요 투자를 유치하였다. 해당 기간에 인도(18억 달러), 러시아(14억 달러), 폴란드, 베트남 등도 상위권에 위치하며 내수시장 확대 또는 저비용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도를 바탕으로 투자가 집중되었다.

표 3-17.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가전(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독일	4.9 (28.7)	56 (31.8)	중국	2.7 (19.8)	30 (17.9)	중국	1.7 (31.5)	16 (30.2)
2	한국	2.8 (16.1)	11 (6.3)	독일	2.6 (19.0)	35 (20.8)	독일	1.2 (21.6)	8 (15.1)
3	중국	1.6 (9.2)	13 (7.4)	미국	1.6 (11.4)	26 (15.5)	미국	0.8 (14.7)	10 (18.9)
4	일본	1.6 (9.1)	13 (7.4)	홍콩	1.3 (9.3)	5 (3.0)	한국	0.6 (11.8)	3 (5.7)
5	스웨덴	1.4 (7.9)	15 (8.5)	한국	1.0 (7.1)	8 (4.8)	이탈리아	0.3 (6.2)	1 (1.9)
6	네덜란드	1.0 (5.6)	12 (6.8)	네덜란드	0.9 (6.3)	12 (7.1)	스웨덴	0.2 (4.5)	2 (3.8)
7	미국	0.9 (5.0)	11 (6.3)	이탈리아	0.8 (6.0)	10 (6.0)	스위스	0.2 (3.7)	1 (1.9)
8	이탈리아	0.6 (3.4)	6 (3.4)	일본	0.8 (5.6)	5 (3.0)	홍콩	0.1 (2.3)	2 (3.8)
9	튀르키예	0.6 (3.3)	6 (3.4)	스웨덴	0.7 (5.0)	7 (4.2)	튀르키예	0.1 (2.0)	1 (1.9)
10	슬로바키아	0.4 (2.5)	4 (2.3)	튀르키예	0.5 (3.6)	4 (2.4)	룩셈부르크	0.1 (1.0)	3 (5.7)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2021~24년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과 니어쇼어링 전략의 대표 수혜 국가인 멕시코가 16억 달러로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수혜국 1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은 2위로 하락(7억 달러)하였다. 이는 글로벌 가전 제조기업들이 미국 본토 생산보다는 멕시코 등 저비용 인접국을 중심으로 설비를 재배치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3위(4.5억 달러), 4위(4.3억 달러)에 올라, 중남미와 동남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표 3-18.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가전(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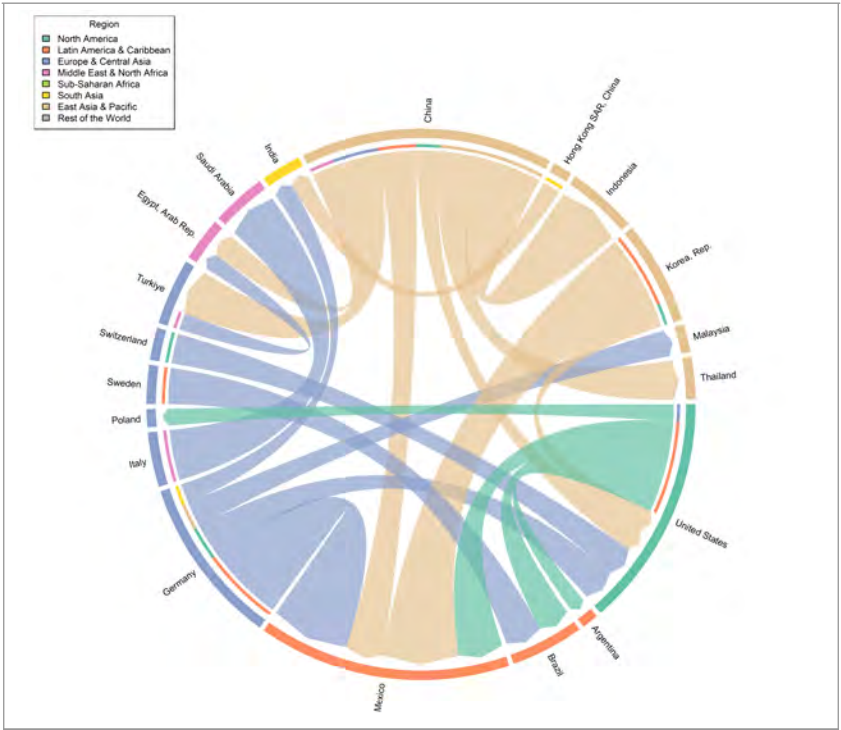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베트남	2.9 (17.2)	9 (5.1)	미국	2.2 (16.2)	23 (13.7)	멕시코	1.6 (28.9)	7 (13.2)
2	인도	1.9 (11.1)	14 (8.0)	인도	1.8 (13.6)	13 (7.7)	미국	0.7 (13.3)	9 (17.0)
3	미국	1.6 (9.3)	14 (8.0)	러시아	1.4 (10.4)	6 (3.6)	브라질	0.5 (8.4)	5 (9.4)
4	태국	1.2 (6.8)	9 (5.1)	폴란드	0.8 (5.9)	10 (6)	인도네시아	0.4 (8.1)	3 (5.7)
5	튀르키예	1.0 (5.9)	7 (4.0)	베트남	0.5 (3.7)	8 (4.8)	이집트	0.4 (6.7)	4 (7.5)
6	브라질	0.9 (5.5)	12 (6.8)	중국	0.5 (3.6)	6 (3.6)	사우디 아라비아	0.3 (6.2)	1 (1.9)
7	중국	0.9 (5.1)	5 (2.8)	이스라엘	0.5 (3.5)	2 (1.2)	튀르키예	0.3 (5.5)	1 (1.9)
8	멕시코	0.6 (3.4)	8 (4.5)	루마니아	0.4 (3.3)	9 (5.4)	태국	0.3 (4.8)	3 (5.7)
9	독일	0.5 (2.8)	10 (5.7)	멕시코	0.4 (3.1)	11 (6.5)	인도	0.2 (4.6)	2 (3.8)
10	영국	0.5 (2.8)	5 (2.8)	이집트	0.4 (2.8)	4 (2.4)	말레이시아	0.2 (3.2)	1 (1.9)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글로벌 가전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흐름을 비교해 보자.⁸⁶⁾ 먼저 중국은 여전히 주요 투자 발원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투자 방향은 과거 대비 더욱 분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그린필드 투자를 진행해왔지만, 최근 중동,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다지역으로의 투자 다변화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의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로 확인된다.

유럽 국가들의 투자 방식 또한 구조적 전환을 보였다. 과거에는 다양한 중

그림 3-2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가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86) 2013년부터 2016년 가전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음.

소 국가들이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에 골고루 분포해 있었다면, 최근에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튀르키예 등 몇몇 중견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독일은 중남미, 그중에서도 멕시코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다. 한국은 2017년부터 2020년 기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 내 생산 확충을 진행하였지만, 2021년 이후로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었다.

가전 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인도, 러시아 등 일부 아시아와 유라시아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비중 확대가 특징이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흐름의 변화 속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구조를 살펴보자. 2013~16년 한국은 베트남과의 연계성이 뚜렷이 확인되며, 이외에 이집트, 멕시코, 헝가리, 태국 등과의 연결이 확인된다.⁸⁷⁾ 이후 2017~20년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한국은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북미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베트남, 독일,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결이 포착된다. 이는 해당 시기 한국 가전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기지 분산 전략을 활용하여 아시아·유럽·중동 등 다양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장별 대응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집트와의 연결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시장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며, 독일과 중국은 기술 기반 또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보완적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21~24년의 한국 가전 산업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멕시코에 집중되는 구조로 변화했다. 이는 한국 가전 산업에 있어 북미 시장을 겨냥한 생산, 수출거점으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음을 반영한다(글상자 3-2 사례 참고).

87) 2013~16년 한국 가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0]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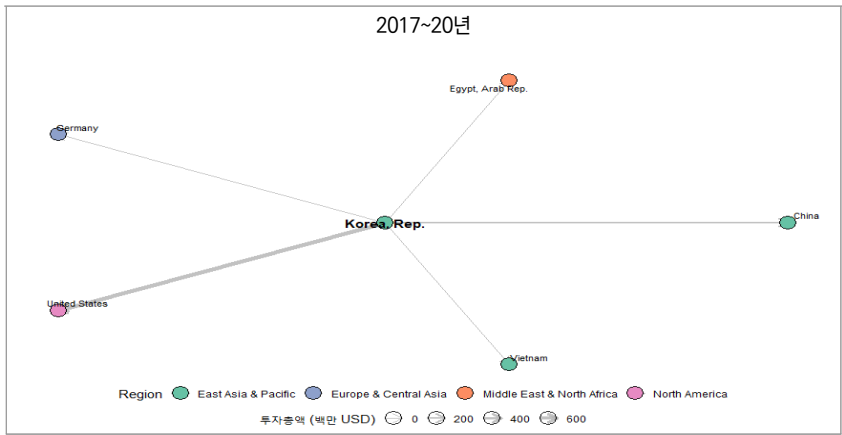
이를 요약하면 2017~20년에는 가전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역 다변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2021~24년에는 멕시코 중심의 북미 집중 구조로 명확히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글로벌 및 한국의 가전 산업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비교하면, 두 경우 모두 최근 북미·중남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멕시코 투자 비중 확대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에서는 멕시코 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등으로 투자 다변화가 진행된 반면, 한국의 경우 멕시코에 대한 집중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네트워크 구조가 단순화된 것이 특징이다.

글상자 3-2. 삼성의 멕시코 내 가전제품 생산시설 설립 사례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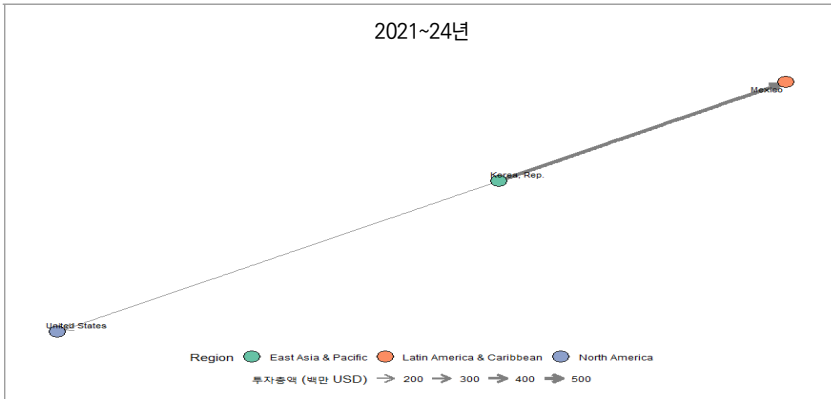
- 2022년 7월 삼성전자는 멕시코의 Querétaro 및 Tijuana에 있는 가전제품 제조공장 2곳에 5억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내 가전제품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함.
- 해당 투자 배경으로는 멕시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이 시기에 재개되었다는 점이 언급됨.

자료: “Samsung to invest US\$500 million in Mexico”(2022. 7. 13.)(검색일: 2025. 9. 18.).

그림 3-30.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7~24년): 가전



88) “Samsung to invest US\$500 million in Mexico”(2022. 7. 13.)(검색일: 2025. 9. 18.).



주: 본 네트워크 맵은 Fruchterman-Reingold(FR)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는 투자 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투자액이 클수록 서로 가깝게 배치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다) 전기·전자: 반도체

2010년부터 2024년까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린필드 형태의 해외직접 투자 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투자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60~80건 수준에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급등하며 약 125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미국 내 제조업 회귀 정책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 주요국의 산업 주도권 경쟁 격화에 따른 설비 확충 수요의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투자 건수가 다소 둔화되어 40건대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연평균 70건 내외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생산기지 확보에 나선 것이 이러한 변화를 이끈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투자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100억~300억 달러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투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2020년 투자 금액은 약 700억 달러, 2022년에는 1,000억 달러에 근접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연간 투자 금액이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금액 기준으로는 2010년 대비 20배에 달하는 성장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도체법」을 중심으로 한 국가 보조금 지원 확대, 국내 생산기지 유치 경쟁 격화, AI·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반도체 수요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 추세를 요약하면, 투자 건수는 2018년 정점 이후 급락했다가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금액은 2020년 이후 급격한 규모 확대 국면에 진입한 것이 반도체 산업의 뚜렷한 특징이다.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 전략이 전략적 거점 중심의 대형 투자 전환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31.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다음으로 2013년과 2024년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투자 상위 국가를 살펴보자. 먼저 2013~16년에는 미국이 286억 달러, 85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태국(142억 달러, 21건), 독일(36억 달러, 26건)이 뒤를 이었다. 일본, 호주, 한국, 중국 등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대만은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1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반도체 산업 투자에서의 위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7~20년 기간에 77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록했던 대만은 2021~24년 들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1,483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였다. 투자 건수는 25건에서 26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기에, 투자 사업당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SMC 등 대형 파운드리 기업의 미국, 일본, 유럽 현지 진출 프로젝트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2017~20년 기간에 241억 달러(14건)의 투자를 기록했던 한국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697억 달러(17건)로 투자 규모를 세 배 가까이 확대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해외 생산기지 투자 전략과 연계된다.

미국 역시 반도체 산업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국가로서의 위상을 기록 중이다. 2017~20년에는 144억 달러(89건)로 다소 분산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21~24년에는 921억 달러(46건)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해 해당 기간 투자 금액 기준으로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외에도 UAE와 바하마 등 비전통적 투자 국가의 부상이 주목된다. 2021~24년 기간에 UAE는 218억 달러로 4위, 바하마는 단일 건수(1건)에 불과했지만 193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기록하며 5위에 진입하였다. 이는 자본력이 있는 비제조 기반 국가들의 기술 확보 목적 전략적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기간에 중국의 투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7~20년에는 56억 달러 (46건), 2021~24년에는 144억 달러(41건)로, 건당 규모는 커졌지만 전체적인 순위는 유지되는 수준이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 유럽·아시아의 전통적인 반도체 기술 보유국들은 일정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새롭게 9위에 진입하였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투자금액 증가와 함께 해외 진출 지도를 유지 및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위 수혜국을 살펴보자. 가장 두

표 3-19.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반도체(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28.6 (46.5)	85 (31.8)	대만	77.2 (54.6)	25 (6.8)	대만	148.3 (36.1)	26 (9.4)
2	태국	14.2 (23.1)	21 (7.9)	한국	24.1 (17)	14 (3.8)	미국	92.1 (22.4)	46 (16.5)
3	독일	3.6 (5.9)	26 (9.7)	미국	14.4 (10.2)	89 (24.2)	한국	69.7 (17.0)	17 (6.1)
4	일본	2.5 (4.0)	26 (9.7)	중국	5.6 (4.0)	46 (12.5)	아랍 에미리트	21.8 (5.3)	8 (2.9)
5	호주	2.4 (4.0)	3 (1.1)	독일	3.3 (2.3)	37 (10.1)	바하마	19.3 (4.7)	1 (0.4)
6	한국	2.3 (3.7)	9 (3.4)	영국	2.5 (1.7)	11 (3.0)	중국	14.4 (3.5)	41 (14.7)
7	중국	1.4 (2.2)	15 (5.6)	네덜란드	2.2 (1.6)	14 (3.8)	독일	14. 3(3.5)	25 (9.0)
8	케이맨 제도	1.3 (2.1)	7 (2.6)	일본	2.2 (1.5)	27 (7.3)	네덜란드	8.3 (2.0)	10 (3.6)
9	캐나다	1.0 (1.6)	7 (2.6)	아랍 에미리트	2.0 (1.4)	4 (1.1)	프랑스	4.6 (1.1)	10 (3.6)
10	프랑스	1.0 (1.6)	6 (2.2)	싱가포르	1.7 (1.2)	3 (0.8)	싱가포르	4.0 (1.0)	5 (1.8)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드러진 특징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투자 수혜국 변화이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중국은 188억 달러(41건)를 기록하며 최대 수혜국이었고, 이스라엘(74억 달러), 인도(58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등 전통 제조·기술 보유국들이 고르게 분포했으나, 투자 건수 면에서는 독일(55건)과 미국(22건)이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거점 확충의 핵심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7~20년 기간에 미국은 총 665억 달러(30건)의 투자를 유치해 1위를 기록했으며, 2021~24년에는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인 1,629억 달러(61건)로 증가하였다. 이는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기지 건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회복 전략, CHIPS법 등 산업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투자 건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해, 전 세계 반도체 투자에서 미국이 중심축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2017~20년에는 362억 달러(54건)로 2위에 올랐으나, 2021~24년에는 50억 달러(15건)로 투자 유치 규모가 급감하였다.

다음으로 일본과 독일의 투자 유치 규모 증가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일본은 2021~24년 동안 504억 달러(18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2위에 올랐고, 독일도 같은 기간 466억 달러(18건)를 기록해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미국·대만·한국 반도체 기업의 유럽 내 생산거점 확보와 일본의 첨단 소재·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생산 확대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아세안 국가 말레이시아와 남아시아 국가 인도도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였다. 2017~20년에 말레이시아는 20억 달러대의 투자에 머물렀으나, 2021~24년에는 말레이시아가 349억 달러(28건), 인도가 325억 달러(11건)를 유치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의 다변화 흐름 속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역시 주목할 만한 수혜국이다. 특히 싱가포르

는 246억 달러(10건), 아일랜드는 207억 달러(3건)를 유치하며 고부가가치 패키징·후공정 중심의 투자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정밀 제조 인프라와 세제 혜택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 특징적인 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2021~24년 59억 달러),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오스트리아 등도 지역별 거점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그린필드 투자의 국가 간 연계 변화를 투자 네트워크

표 3-20.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반도체(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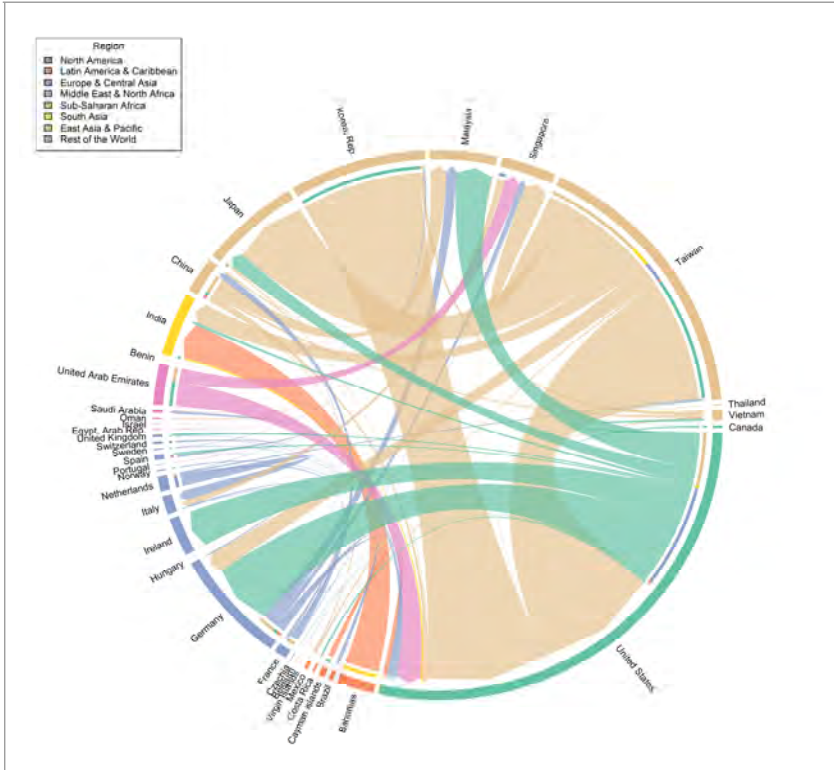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중국	18.8 (30.5)	41 (15.4)	미국	66.5 (47.1)	30 (8.2)	미국	162.9 (39.7)	61 (21.9)
2	이스라엘	7.4 (12.0)	2 (0.7)	중국	36.2 (25.7)	54 (14.7)	일본	50.4 (12.3)	18 (6.5)
3	인도	5.8 (9.4)	17 (6.4)	이스라엘	6.9 (4.9)	5 (1.4)	독일	46.6 (11.4)	18 (6.5)
4	일본	5.4 (8.9)	7 (2.6)	독일	4.8 (3.4)	72 (19.6)	말레이시아	34.9 (8.5)	28 (10.1)
5	싱가포르	4.4 (7.2)	6 (2.2)	베트남	2.6 (1.9)	8 (2.2)	인도	32.5 (7.9)	11 (4.0)
6	미국	4.4 (7.1)	22 (8.2)	캐나다	2.5 (1.8)	3 (0.8)	싱가포르	24.6 (6.0)	10 (3.6)
7	독일	2.5 (4.0)	55 (20.6)	튀르키예	2.2 (1.6)	4 (1.1)	아일랜드	20.7 (5.0)	3 (1.1)
8	말레이시아	2.2 (3.6)	9 (3.4)	말레이시아	2.1 (1.5)	12 (3.3)	이탈리아	9.6 (2.3)	6 (2.2)
9	베트남	2 (3.2)	7 (2.6)	이집트	2.0 (1.4)	1 (0.3)	베트남	5.9 (1.4)	15 (5.4)
10	영국	0.9 (1.4)	12 (4.5)	오스트리아	2.0 (1.4)	4 (1.1)	중국	5.0 (1.2)	15 (5.4)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먼저 미국은 2021년 이후 반도체 투자 유치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대만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 기술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미국은 아일랜드 등으로의 아웃바운드 투자도 병행하며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 확인된다.

89) 2013년부터 2016년 반도체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33.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반도체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중국은 2021년 이전 대만과 한국으로부터 활발한 투자를 받아왔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감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및 기술이전 제한 조치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인도를 향한 반도체 투자는 제한적이나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2021년 이전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투자 시행했으나, 2021년 이후 투자의 초점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글로벌 그린필드 반도체 투자 네트워크는 미국의 리쇼어

링 정책, 중국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주요 기술국 간 동맹 강화 기조로 인하여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2013~16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크게 확인되며, 이외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가 확인된다.⁹⁰⁾ 이후 2017~20년 기간의 네트워크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두드러진다. 이 시기 한국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대한 연결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 공급망에 기반한 후공정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 시설 확장 등 실용 중심의 투자 전략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 독일과의 연결도 확인되지만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위치에 있으며,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러시아, 튀르키예 등 기존에 한국 반도체 산업과 접점이 크지 않았던 국가들과의 연결이 확인된다.

반면 2021~24년의 네트워크 구조는 미국과의 연결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어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 현지 공장 설립 인센티브 확대, 기술안보 중심의 전략과 직결된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생산기지 구축에 나선 흐름이 명확히 반영된 구조이다 (글상자 3-3 사례 참고). 또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인도, 중국 등과의 연결도 비교적 고르게 유지되고 있어, 아시아 내 기존 생산 인프라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와 보완적 확장이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패키징·조립 기반 후공정 중심의 해외 생산기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인도는 신규 성장 시장으로서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추세다. 중국은 여전히 연결된 상태지만, 과거 대비 중심에서 다소 후퇴한 구조로 재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리스크 분산 전략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90) 2013~16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2]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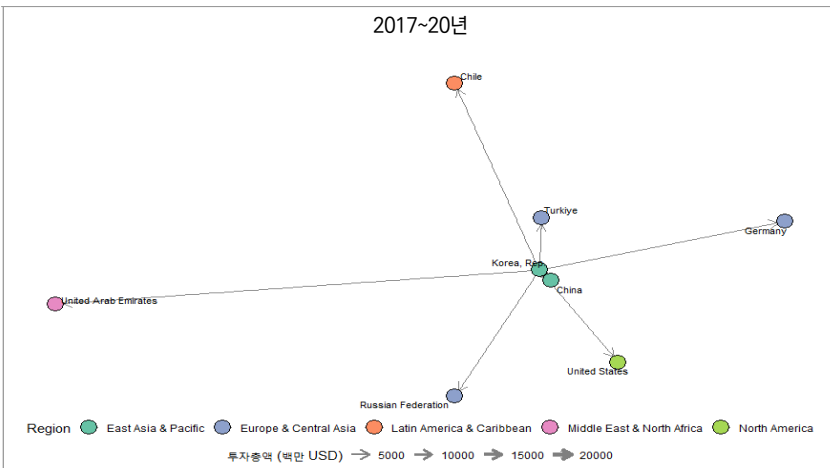
글상자 3-3.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 사례⁹¹⁾

- 2021년 11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Taylor, Williamson County) 지역에 170억 달러 (USD 17 billion) 규모의 신규 고급 반도체 팹(제조시설)을 건설하기로 발표함.
- 반도체 공장은 약 500만m² (5 millionm²) 규모의 부지에 조성되며, 생산 품목은 모바일, 5G, 고성능컴퓨팅(HPC),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논리반도체로 알려짐.

자료: 삼성전자(2021. 11. 23.), "Samsung Electronics Announces New Advanced Semiconductor Fab Site in Taylor, Texas"(검색일: 2025.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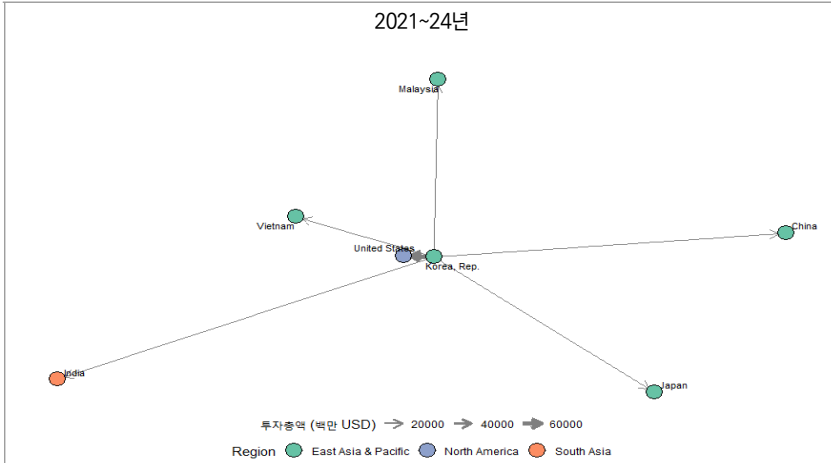
이를 종합하면 2017~20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 투자는 중국 중심의 생산기지 확대 구조였다면, 2021~24년에는 미국 중심의 전략적 집중 투자와 기존 아시아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가 병행되는 구조로 전환됨이 확인되며, 이는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 추이와 유사하다.

그림 3-34.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7~24년): 반도체



91) 삼성전자(2021. 11. 23.), "Samsung Electronics Announces New Advanced Semiconductor Fab Site in Taylor, Texas"(검색일: 2025. 9. 18.).

그림 3-34. 계속



주: 본 네트워크 맵은 Fruchterman-Reingold(FR)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는 투자 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투자액이 클수록 서로 가깝게 배치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라) 철강·금속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철강·금속 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자. 우선 투자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경 약 250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6년 이후 2019년까지는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2020년 팬데믹 발생 직후에는 연간 50건 이하로 급감하며 저점을 기록했다. 2021년 이후에는 투자 건수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약 70건 수준까지 반등하였다.

한편 철강·금속 산업 투자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투자 건수 증가에 비례하여 금액 역시 증가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약 300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2020년 팬데믹 직후에는 글로벌 투자 금액이 급락하며 연간 투자 금액이 50억 달러 이하로 축소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다

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2024년에는 약 270억 달러 수준으로 투자 규모가 회복되었으며, 투자 건수와의 차이를 감안할 때 건당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는 소수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자본집약형 투자 패턴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요약하면 철강·금속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2014년까지의 확장기 이후 팬데믹을 기점으로 극심한 위축을 겪었으며, 이후에는 수요 기반 회복보다는 전략적 생산기지 이전과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의 선택적 투자로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이후 배터리·친환경 전환·희소금속 연계 수요의 확대와 일부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⁹²⁾

다음으로 철강·금속 산업 그린필드 투자 상위 국가를 살펴보자. 최근 철강 금속 해외직접투자 국가 구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의 투자 금액 감소이다. 2017~20년 중국은 총 314억 달러(49건)의 그린필드 철강 투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2021~24년에는 그 규모가 106억 달러(26건)로 크게 축소되었다. 다만 두 시기 모두 여전히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철강 분야에서 투자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 중이다.

또 다른 특징은 철강·금속 산업 투자에서 룩셈부르크의 부상이다. 룩셈부르크는 2017~20년에는 48억 달러(49건)로 3위에 위치했으며, 2021~24년에는 100억 달러(9건)로, 단숨에 2위로 올라섰다. 이는 글로벌 철강 대기업인 ArcelorMittal의 활발한 해외 생산거점 확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³⁾ 멕시코와 인도의 부상도 주목할 만하다. 2021~24년 멕시코는 91억 달러(3건), 인도는 83억 달러(17건)의 투자를 기록하며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은 2017~20년과 2021~24년 두 시기 모두 상위 10위권을 유지했지만, 투자금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2017~20년에는 52억 달러(36건)로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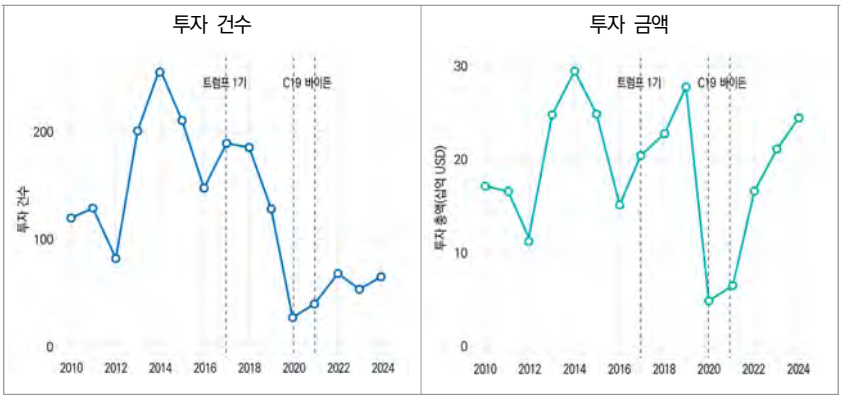
92) IEA(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검색일: 2025. 9. 18.).

93) ArcelorMittal, "Industrial sites"(검색일: 2025. 9. 18.).

에 올랐으나, 2021~24년에는 22억 달러(16건)로 10위에 머물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 내 제조 유턴 전략으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국내 투자 회귀 경향이 우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35. 철강·금속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국은 두 시기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며(2017~20년: 19억 달러, 2021~24년: 35억 달러), 전통적으로 강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외직접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21~24년에는 6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요약하면, 철강·금속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한국·중국 등 동아시아 강국 중심의 안정적 구조에서, 최근에는 여전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멕시코, 인도 등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투자국이 등장하였고,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 소형 국가의 법인 기반 투자 방식 등이 맞물리며 보다 복합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투자 구조로의 재편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철강·금속 산업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수혜국 변화를

살펴보면, 2013~16년 미국을 향한 투자는 총 167억 달러(137건)로 1위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84억 달러), 중국(81억 달러), 인도(67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멕시코, 프랑스, 오만, 스페인, 태국, 브라질 등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며 북미·아시아·유럽·중동이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7~20년 기준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UAE로, 총 128억 달러(10건)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UAE는 이 시기 중동 내 산업 다각화 및 원

표 3-21.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철강·금속(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일본	12.3 (13.1)	119 (14.7)	중국	31.4 (41.4)	49 (9.3)	중국	10.6 (15.5)	26 (11.6)
2	한국	10.4 (11.1)	43 (5.3)	미국	5.2 (6.8)	36 (6.9)	룩셈부르크	10.0 (14.7)	9 (4.0)
3	중국	8.6 (9.2)	40 (4.9)	룩셈부르크	4.8 (6.3)	49 (9.3)	멕시코	9.1 (13.4)	3 (1.3)
4	미국	8.1 (8.6)	61 (7.5)	일본	4.7 (6.3)	55 (10.5)	인도	8.3 (12.2)	17 (7.6)
5	독일	8.0 (8.5)	83 (10.2)	영국	4.1 (5.4)	19 (3.6)	영국	3.7 (5.4)	13 (5.8)
6	룩셈부르크	5.5 (5.8)	58 (7.1)	독일	2.9 (3.8)	43 (8.2)	한국	3.5 (5.1)	13 (5.8)
7	오스트리아	5.0 (5.3)	32 (3.9)	스위스	2.4 (3.2)	20 (3.8)	일본	3.3 (4.9)	14 (6.3)
8	이탈리아	4.8 (5.2)	44 (5.4)	인도	2.1 (2.8)	24 (4.6)	네덜란드	3.0 (4.3)	9 (4.0)
9	영국	4.8 (5.1)	39 (4.8)	버진 아일랜드	2.0 (2.7)	3 (0.6)	사이프러스	2.9 (4.2)	2 (0.9)
10	인도	4.0 (4.2)	32 (3.9)	한국	1.9 (2.5)	22 (4.2)	미국	2.2 (3.2)	16 (7.1)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자재 전·후방 통합 전략의 핵심 투자지로 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필리핀(84억 달러), 인도(69억 달러), 인도네시아(60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며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2021~24년에는 멕시코가 총 93억 달러(18건)를 기록하며 1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북미 생산거점화와 공급망 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멕시코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음을 반영하며, 특히 미국과의 근접성과 USMCA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역시 87억 달러(53건)로 2위에 올라, 자국 내 생산 복귀 및 녹색 인프라 수요에 따른 해외투자 유치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페루(8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1억 달러)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며 중남미와 중동 신흥국으로의 투자 분산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전략하에 산업 다각화와 자원 기반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지속하며 철강 분야 투자를 확대했고,⁹⁴⁾ 브라질, 이집트 등 자원산업 기반 국가들도 새롭게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그린필드 투자에 있어 원자재 접근성, 내수시장 규모, 수출지향 생산거점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인 투자 수혜국으로 2017~20년 상위권에 속했던 독일(27억 달러), 프랑스(23억 달러), 중국(17억 달러) 등은 이후 시기에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는 유럽 내 산업 환경 변화, 탄소중립 정책 강화,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 매력도 재조정의 결과로 풀이된다.

요약하자면 철강·금속 산업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수혜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중심의 구조였으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중남미, 북미(미국, 캐나다), 일부 아세안, 유럽 국가들(인도네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철강·금속 산업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를 살

94) Steelhub, "Steel at the Core: Driving Economic Diversification in Saudi Arabia"(검색일: 2025. 9. 18.).

펌보자.95)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의 투자 축소이다. 이전 시기에는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시기로 접어들면서 중

표 3-22.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철강·금속(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16.7 (17.8)	137 (16.9)	아랍 에미리트	12.8 (16.8)	10 (1.9)	멕시코	9.3 (13.7)	18 (8.0)
2	인도네시아	8.4 (9.0)	23 (2.8)	필리핀	8.4 (11.1)	6 (1.1)	미국	8.7 (12.7)	53 (23.7)
3	중국	8.1 (8.7)	58 (7.1)	미국	8.3 (10.9)	77 (14.7)	페루	8.5 (12.5)	2 (0.9)
4	인도	6.7 (7.1)	32 (3.9)	인도	6.9 (9.2)	23 (4.4)	사우디 아라비아	6.1 (8.9)	4 (1.8)
5	멕시코	4.8 (5.1)	72 (8.9)	인도네시아	6.0 (7.9)	8 (1.5)	인도네시아	5.8 (8.4)	5 (2.2)
6	프랑스	3.4 (3.6)	32 (3.9)	멕시코	3.5 (4.7)	39 (7.4)	캐나다	3.2 (4.7)	6 (2.7)
7	오만	2.5 (2.6)	5 (0.6)	독일	2.7 (3.5)	67 (12.8)	영국	2.8 (4.2)	8 (3.6)
8	스페인	2.4 (2.6)	11 (1.4)	베트남	2.6 (3.4)	7 (1.3)	이탈리아	2.8 (4.1)	3 (1.3)
9	태국	2.4 (2.5)	15 (1.8)	프랑스	2.3 (3.1)	35 (6.7)	브라질	2.5 (3.7)	16 (7.1)
10	브라질	2.4 (2.5)	32 (3.9)	중국	1.7 (2.2)	15 (2.9)	이집트	1.8 (2.6)	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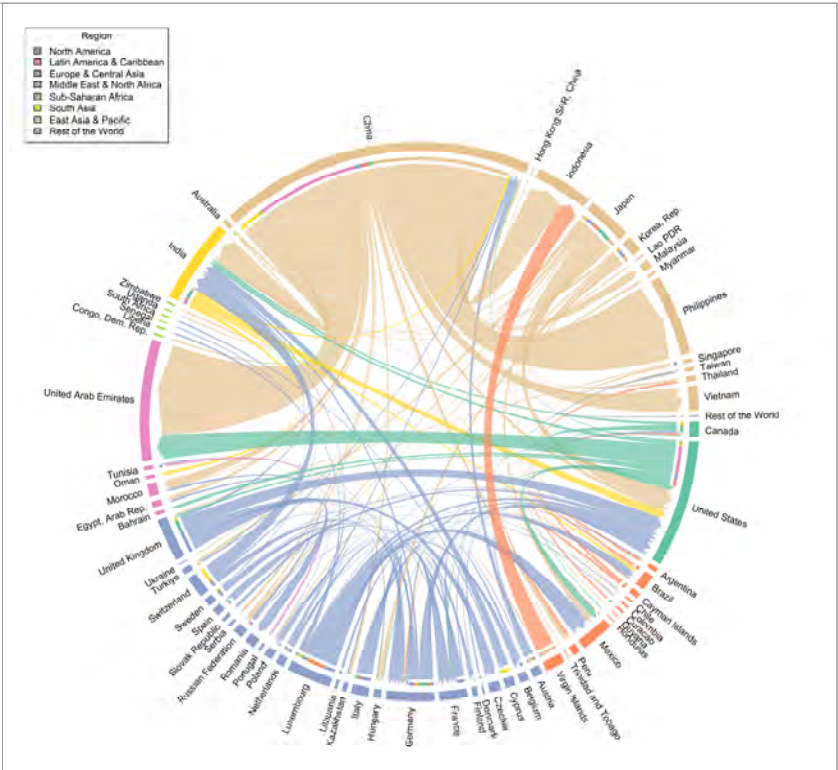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95) 2013년부터 2016년 철강 금속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의 해외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인도네시아와 이집트 정도를 제외하면 과거와 같은 활발한 투자 흐름은 관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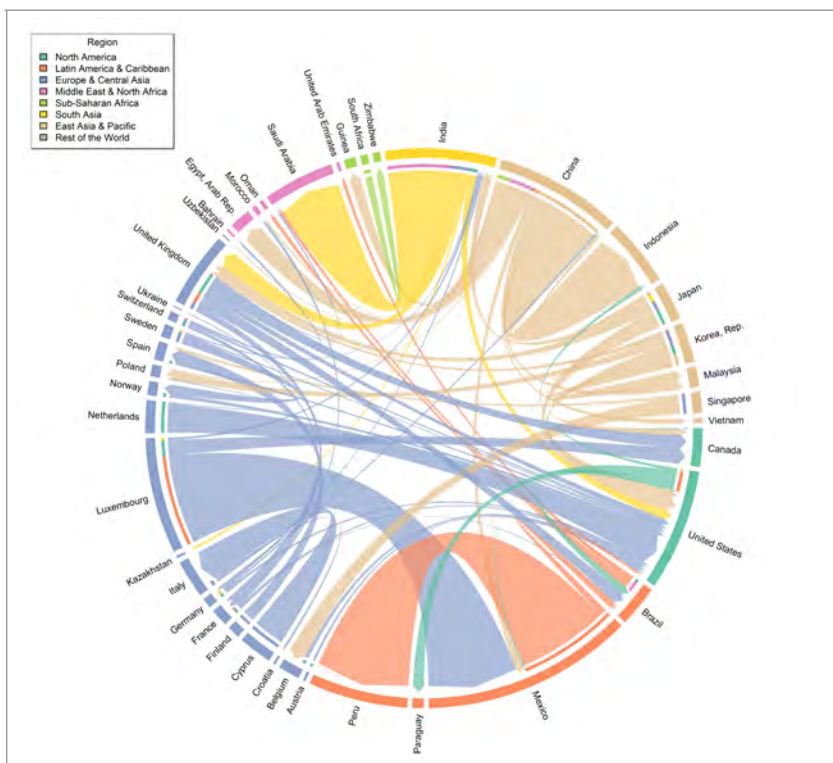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중국의 투자 축소와는 대조적으로, 남미 지역이 새로운 투자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페루, 멕시코, 브라질은 최근에 글로벌 철강 투자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진행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멕시코 기업이 페루에 투자한 사례에서 보듯이, 남미 내 국가 간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도 확인된다.

그림 3-36.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철강 · 금속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37.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철강·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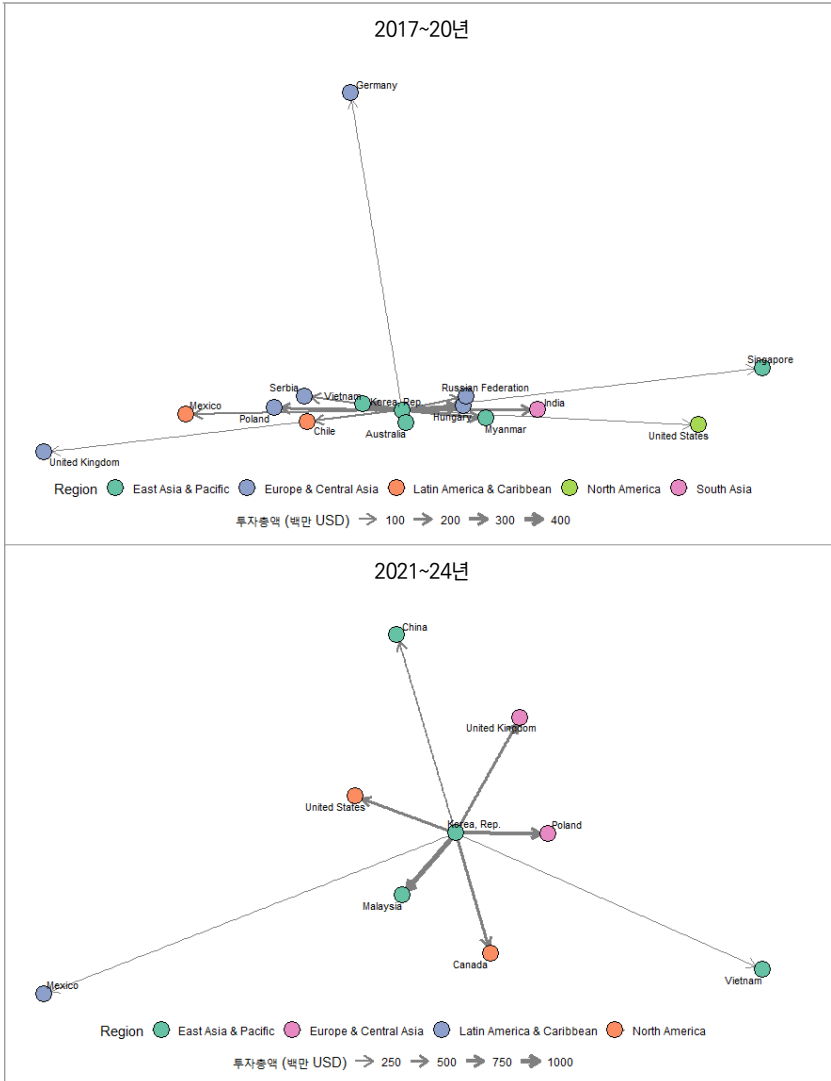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또한 과거에는 투자 수혜국의 성격이 강했던 인도가 최근에는 해외로 해외 직접투자를 시행하는 주요 투자국으로 전환된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2021년 이후 인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며 자국 철강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본격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 캐나다로의 철강 산업 투자가 관찰되며, 북미 지역이 선진국 간 기술 및 생산거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말레이시아, 폴란드, 미국에 대한 철강 투자 흐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철강 및 금속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구

그림 3-38.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4년):
철강·금속



주: 본 네트워크 맵은 Fruchterman-Reingold(FR)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는 투자 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투자액이 클수록 서로 가깝게 배치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조를 살펴보자. 먼저 2013~20년 기간의 네트워크를 보면, 한국과 연결된 국가 수가 많고 구조적으로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다.⁹⁶⁾ 이 시기 한국 철강·금속 기업들은 동남아, 유럽, 미주, 중남미, 남아시아 등 다양한 권역에 소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투자를 병렬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독일, 폴란드, 헝가리, 세르비아 등 유럽 국가를 포함해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결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미국, 멕시코, 칠레 등 미주권 국가에 대한 진출도 확인된다. 이는 철강·금속 산업의 특성상 현지 수요 대응과 물류비 절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다양한 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이 전략적으로 추진된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2021~24년의 네트워크 구조는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단순화되고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해당 시기 한국의 철강·금속 산업 투자는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소수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특히 미국과의 연결은 가장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글상자 3-4 사례 참고). 이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친환경 조달 기준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현지화 투자 확대로 해석된다. 또한 캐나다와의 연결도 강화되었으며, 북미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대응 전략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연결은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연결 강도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7~20년 네트워크에서 관찰되었던 독일, 헝가리, 칠레, 러시아, 인도 등은 2021~24년 맵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되거나 후방으로 이동하였다.

96) 2013~16년 한국 철강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4]에 위치함.

- 2024년 7월 세아 CSS는 미국 텍사스주 템플(Texas, Temple) 지역에 미국 내 신규 강재(특수금속) 제조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며, 총투자액은 약 1억 1천만 달러(USD 110 million)로 알려졌다.
- 투자의 배경으로는 항공우주, 발전, 자동차, 석유·가스 등 고성능 핵심 장비 시장 내 특수금속 수요 확대가 꼽혔으며, 북미 및 글로벌 고객 수요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생산거점 마련을 목적으로 함.

자료: Texas Governor(2024. 7. 10.), "Governor Abbott Announces New SeAH Manufacturing Facility In Temple"(검색일: 2025. 9. 18.).

요약하자면 한국 철강·금속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2017~20년 에는 다양한 권역을 대상으로 한 다원적 거점 확보 전략이 중심이었다면, 2021~24년에는 북미와 일부 아시아 중심의 선택적 집중 전략으로 구조가 전환되었다. 글로벌과 한국의 철강·금속 산업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를 비교 하면, 두 경우 모두 최근 북미(특히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과 중남미·아시아 일부 신흥국으로의 분산이라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가 멕시코,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남미, 중동으로 다변화 된 반면, 한국은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소수 핵심국에 집중하며 네트워크가 단순화되었고, 기존 유럽과 남미 거점 상당수가 투자 대상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 조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선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를 살펴 보자. 우선 투자 건수 측면에서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건 내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이후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되며 2019년에는 30건을 초과했다. 이후 2020년 팬데믹 시기에 한 차례 급락(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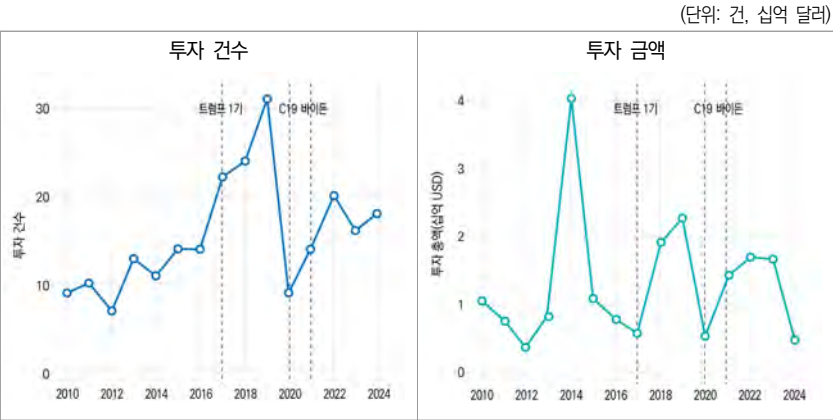
97) Texas Governor(2024. 7. 10.), Governor Abbott Announces New SeAH Manufacturing Facility In Temple"(검색일: 2025. 9. 18.).

9건)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기준 약 18건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반면 투자 금액은 2014년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며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전체적으로는 매년 10억 달러 전후의 제한된 규모로 유지되었다. 이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확장보다는 기존 인프라 활용 또는 업그레이드 형태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경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 증가, 해양 탄소 감축 기술 적용 등을 배경⁹⁸⁾으로 일부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되며 2021~22년 사이에는 연간 15억~18억 달러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여 6억 달러 수준에 그치며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24년 조선 산업 그린필드 투자 상위 투자 국가를 살펴보자. 2013~16년에는 한국이 총 30억 달러(5건)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네덜란드(10억 달러), 독일(6억 달러), 미국(5억 달러), 일본(4억 달러)

그림 3-39. 조선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98)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wins 37% of all global orders in 2022”(2023. 1. 9.)(검색일: 2025. 9. 18.), 한국 수주 사례를 참고.

등이 뒤를 이었으며, 스위스·버뮤다제도·싱가포르·이탈리아·노르웨이 등이 주요 투자국으로 확인된다. 2017~20년 기간에는 영국이 총 14억 달러(12건)의 투자로 1위를 기록했다. 일본(9억 달러), 프랑스(7억 달러), 독일(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어 상위권에 포함되며, 전통적인 조선 산업 강국들의 주도권이 유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1~24년 시기에는 폴란드가 총 17억 달러(7건)의 투자를 기록하며 새롭게 1위에 등극했으며, 네덜란드(8억 달러), 싱가포르(5억 달러), 호주(4억 달러) 등 비전통적 조선 투자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했다. 또한 영국은 2021~24년에도 4억 달러(5건)로 5위에 이름을 올리며 일정한 투자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핀란드 역시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린필드 상위 투자 국가 명단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 조선 기술 기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아시아 및 북미의 전통 조선 강국들은 상위 투자국 순위에서 다소 후퇴하거나 소규모 투자에 그친 모습이다. 특히 한국은 2017~20년에는 1억 달러(2건)로 8위를 기록했지만, 2021~24년에는 순위권에서 이탈하였고, 일본도 2021년 이후로는 상위 10대 투자국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국내 투자 집중,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사업 전환 등을 고려하여 해외 신규 투자보다 내부 생산 역량 집중 전략을 택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캐나다(2억 달러), 노르웨이(1억 달러) 등이 최근 새롭게 상위 투자 국가로 등장하는데, 이는 해양 기술·극지 운항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신시장 진출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조선 산업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수혜 국가를 살펴보자. 먼저 2013~16년에는 베트남이 28억 달러(1건)로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8억 달러, 5건), 아랍에미리트(4억 달러, 2건)가 뒤를 이었다. 프랑스,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등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독일은 9건의 투자로 건수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7~20년에는 핀란드(5억 달러), 폴란드(4억 달러), 아랍에미리트(4억 달러)가 상위 3개 수혜국으로 기록되었으며, 중국, 영국, 스페인, 필리핀, 베트남 등도 고르게 투자를 받은 국가로 나타났다.

2021~24년 기간에 아랍에미리트는 14억 달러(5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전 시기 대비 투자 규모는 4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미국은 9억 달러(16건)로 2위를 기록하며 전 시기 대비 투자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

표 3-23.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조선(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한국	3.0 (44.9)	5 (9.6)	영국	1.4 (27.1)	12 (14.0)	폴란드	1.7 (31.4)	7 (10.3)
2	네덜란드	1.0 (15.3)	10 (19.2)	일본	0.9 (16.1)	7 (8.1)	네덜란드	0.8 (15.4)	4 (5.9)
3	독일	0.6 (9.1)	5 (9.6)	프랑스	0.7 (12.7)	6 (7.0)	싱가포르	0.5 (9.5)	2 (2.9)
4	미국	0.5 (7.3)	3 (5.8)	독일	0.6 (10.9)	9 (10.5)	호주	0.4 (8.2)	6 (8.8)
5	일본	0.4 (6.0)	4 (7.7)	핀란드	0.5 (9.0)	3 (3.5)	영국	0.4 (7.6)	5 (7.4)
6	스위스	0.4 (5.5)	1 (1.9)	미국	0.4 (8.2)	5 (5.8)	프랑스	0.3 (6.3)	4 (5.9)
7	버뮤다제도	0.3 (4.9)	2 (3.8)	네덜란드	0.2 (4.5)	7 (8.1)	독일	0.3 (5.3)	6 (8.8)
8	싱가포르	0.1 (2.1)	2 (3.8)	한국	0.1 (2.7)	2 (2.3)	핀란드	0.2 (4.4)	2 (2.9)
9	이탈리아	0.1 (1.8)	4 (7.7)	호주	0.1 (2.5)	1 (1.2)	캐나다	0.2 (3.9)	4 (5.9)
10	노르웨이	0.1 (1.6)	3 (5.8)	이탈리아	0.1 (1.8)	8 (9.3)	노르웨이	0.1 (2.6)	2 (2.9)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게 증가하였다. 스페인과 영국도 각각 4억 달러를 유치하며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반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4억 달러(2017~20년)에서 3억 달러(2021~24년)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포르투갈, 튀르키예, 호주 등은 2021~24년에 새롭게 상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특히 호주는 6건의 투자 건수를 기록하며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는 작지만 활동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확장을 보여주었다. 베트남은 두 시기 모두 하위권에 위치하며 소규모 투자가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탈리아와

표 3-24.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조선(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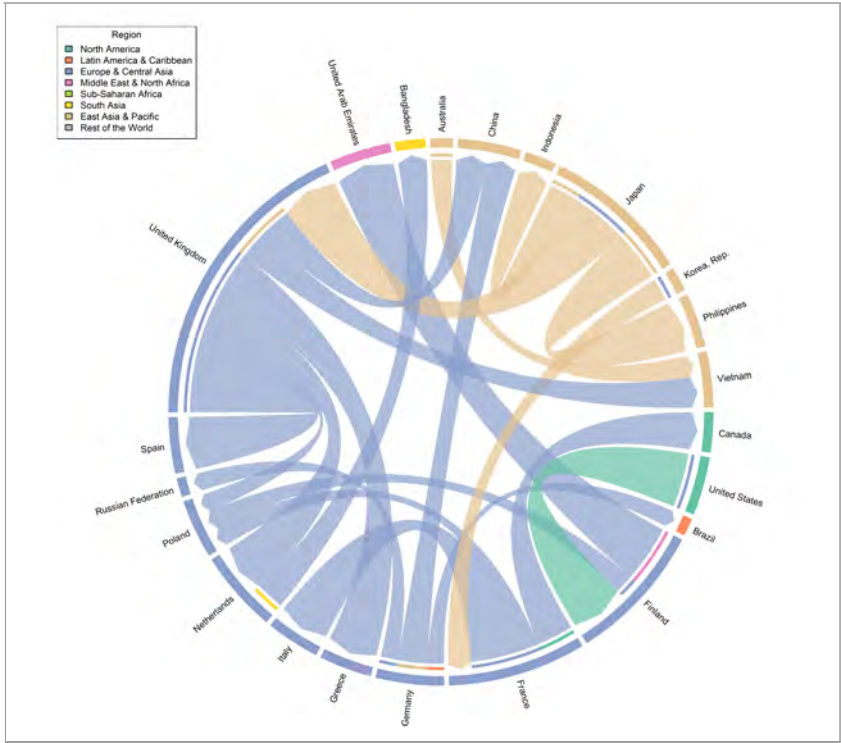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베트남	2.8 (41.6)	1 (1.9)	핀란드	0.5 (8.6)	7 (8.1)	아랍 에미리트	1.4 (27.2)	5 (7.4)
2	중국	0.8 (11.6)	5 (9.6)	폴란드	0.4 (7.3)	4 (4.7)	미국	0.9 (17)	16 (23.5)
3	아랍 에미리트	0.4 (6.4)	2 (3.8)	아랍 에미리트	0.4 (7.2)	6 (7.0)	스페인	0.4 (7.1)	7 (10.3)
4	프랑스	0.4 (5.7)	2 (3.8)	중국	0.4 (7.1)	3 (3.5)	영국	0.4 (6.7)	4 (5.9)
5	브라질	0.4 (5.5)	1 (1.9)	영국	0.4 (6.7)	5 (5.8)	중국	0.3 (6.3)	2 (2.9)
6	독일	0.4 (5.5)	9 (17.3)	필리핀	0.3 (6.4)	5 (5.8)	포르투갈	0.3 (6.2)	3 (4.4)
7	네덜란드	0.3 (4.5)	3 (5.8)	스페인	0.3 (6.4)	7 (8.1)	독일	0.3 (5.7)	2 (2.9)
8	핀란드	0.3 (4.4)	1 (1.9)	베트남	0.3 (6.0)	2 (2.3)	튀르키예	0.3 (5.3)	4 (5.9)
9	러시아	0.3 (3.7)	3 (5.8)	이탈리아	0.3 (6.0)	2 (2.3)	호주	0.3 (4.9)	6 (8.8)
10	싱가포르	0.2 (2.9)	1 (1.9)	그리스	0.3 (5.8)	2 (2.3)	베트남	0.2 (3.3)	1 (1.5)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리스는 2021~24년 시기 투자 순위에서 제외된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조선 산업의 국가 간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 양상을 살펴보자.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글로벌 조선 산업 그린필드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확인된다.⁹⁹⁾ 유럽 내에서는 조선 산업 투자 흐름의 중심축이 과거 영국에서 최근에는 폴란드로 전환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다. 2017~2020년 시기에 영국은 그리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발한 그린필드 투자를 보여주며

그림 3-40.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20년):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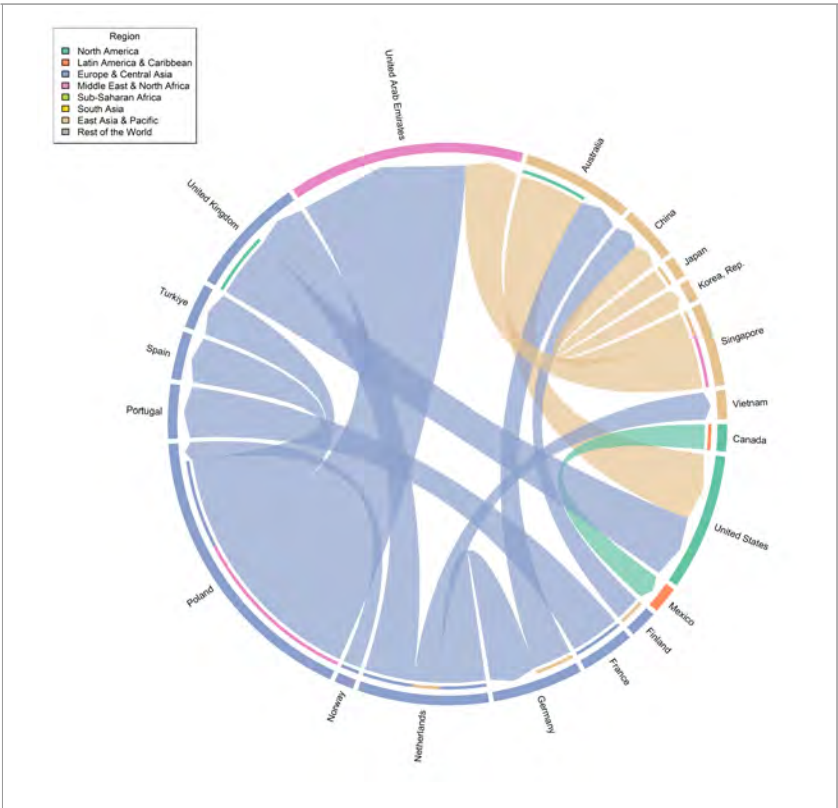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99) 2013년부터 2016년 조선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음.

유럽 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영국의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었고, 투자 대상 또한 유럽보다는 미국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반면 폴란드는 새로운 유럽의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기존의 조선 강국과는 다른 방향에서 산업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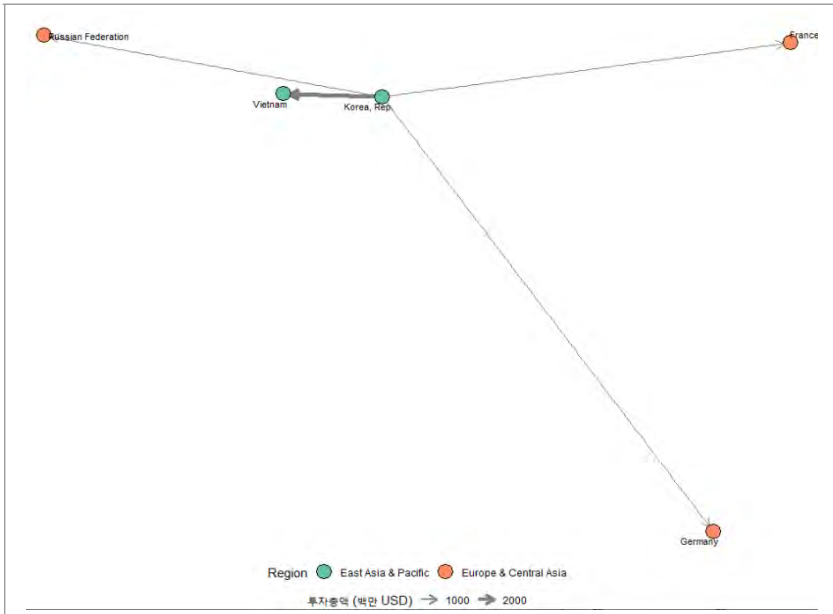
미국 역시 최근 조선 산업에서 중요한 투자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 3-41.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조선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42.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조선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2021년 이후 영국의 투자 이외에도, 호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조선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의 투자 축소가 뚜렷하다. 과거 일본은 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 조선 관련 투자를 이어오며 동남아 및 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최근 시기에는 대부분의 해외 투자 흐름이 줄어든 상태이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 자본이 한국으로 이동한 사례가 확인되어, 한-일 간 전략적 산업 연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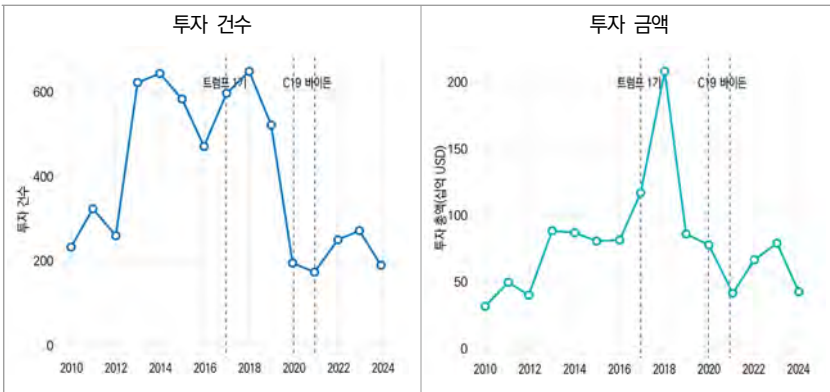
한국의 조선 산업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결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해당 시기 한국은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의 연계가 확인된다. 2017년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석유 · 화학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그린필드 형태 해외직접투자 추세를 살펴보자. 먼저 투자 건수 측면에서 보면, 2010년 초반 연간 200~300건 수준에서 출발해, 2013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4~15년에는 연간 600건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 시기는 글로벌 원유 가격 안정세와 더불어 미국 셰일가스 붐,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의 화학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고점을 유지하던 투자 건수는 2019년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팬데믹 시기에는 200건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2024년 현재도 여전히 200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3-43. 석유 · 화학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투자 금액은 더욱 뚜렷한 단기 급등과 하락 패턴을 보인다.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300~500억 달러 수준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약 2,100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석

유 수요 정체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 확대, 그리고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수요 급감이 겹치면서 2020년에는 700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1~24년에도 400억~8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흐름이 이어졌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탈탄소 기조에 따른 석유 수요 불확실성과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구조적 전환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⁰⁾

다음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투자국을 살펴보자. 먼저 2013~16년에는 미국이 509억 달러(492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457억 달러), 일본(315억 달러), 영국(249억 달러), 프랑스(191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가 이어서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2017~20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인 1,015억 달러(28건)의 투자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중국(667억 달러), 미국(530억 달러), 독일(502억 달러), 일본(261억 달러) 등도 해당 시기 해외직접투자 국가 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이후 2021~24년 미국은 303억 달러(136건)를 투자하여 1위로 부상하였다. 미국의 대세계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전 시기 대비 감소했지만 투자 건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126억 달러로 4위를 기록하며 그 역할이 소폭 조정되었다.

미국과 함께 인도(175억 달러), 영국(143억 달러), 독일(122억 달러) 등이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재진입하였다. 특히 영국은 57건의 투자를 기록하며 투자 활동성이 확대되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전 시기에는 각각 260억 달러, 240억 달러 규모로 해외직접투자 상위권에 있었으나, 2021~24년에는 순위권에서 제외되거나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네덜란드(116억 달러), 아랍에미리트(111억 달러)도 2021년 이후 해

100) IEA(2024), "World Energy Investment 2024"(검색일: 2025. 9. 18.).

표 3-25.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석유·화학(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50.9 (15.3)	492 (21.3)	사우디 아라비아	101.5 (20.9)	28 (1.4)	미국	30.3 (13.3)	136 (15.5)
2	독일	45.7 (13.8)	342 (14.8)	중국	66.7 (13.7)	84 (4.3)	인도	17.5 (7.7)	15 (1.7)
3	일본	31.5 (9.5)	224 (9.7)	미국	53.0 (10.9)	355 (18.3)	영국	14.3 (6.3)	57 (6.5)
4	영국	24.9 (7.5)	109 (4.7)	독일	50.2 (10.3)	295 (15.2)	사우디 아라비아	12.6 (5.5)	19 (2.2)
5	프랑스	19.1 (5.8)	128 (5.5)	일본	26.1 (5.4)	190 (9.8)	독일	12.2 (5.4)	116 (13.2)
6	스위스	14.9 (4.5)	142 (6.1)	프랑스	26.0 (5.3)	108 (5.6)	호주	11.9 (5.2)	9 (1.0)
7	한국	14.3 (4.3)	51 (2.2)	스위스	24.0 (4.9)	131 (6.8)	네덜란드	11.6 (5.1)	33 (3.8)
8	사우디 아라비아	12.2 (3.7)	18 (0.8)	대만	16.5 (3.4)	7 (0.4)	중국	11.2 (4.9)	45 (5.1)
9	남아프리카 공화국	10.9 (3.3)	9 (0.4)	영국	14.9 (3.1)	84 (4.3)	아랍 에미리트	11.1 (4.9)	10 (1.1)
10	네덜란드	9.1 (2.7)	79 (3.4)	한국	14.3 (2.9)	53 (2.7)	캐나다	8.6 (3.8)	19 (2.2)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외직접투자 상위국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가장 적극적인 해외 석유화학 투자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산업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수혜국 추세를 살펴보자. 2013~16년에는 미국이 679억 달러(339건)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334억 달러), 인도네시아(175억 달러), 인도(173억 달러), 러시아(142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독일(129억 달러), 한국(107억 달러), 브라질(94억 달러), 벨기에(9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83억 달러)도 상위 10위 수혜국에 올랐다.

2017~20년에는 인도가 총 1,122억 달러(78건)의 투자를 유치하며 압도적

인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1~24년에는 투자 규모가 129억 달러(59건)로 크게 감소하며 6위로 하락하였다.

미국은 두 시기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2021~24년에는 315억 달러(126건)의 투자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셰일가스 기반의 원료 경쟁력, 규제 안정성, 대규모 인프라와 기술 기반이 지속적으로 투자 매력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212억 달러), 이집트(205억 달러), 브라질(193억

표 3-26.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석유·화학(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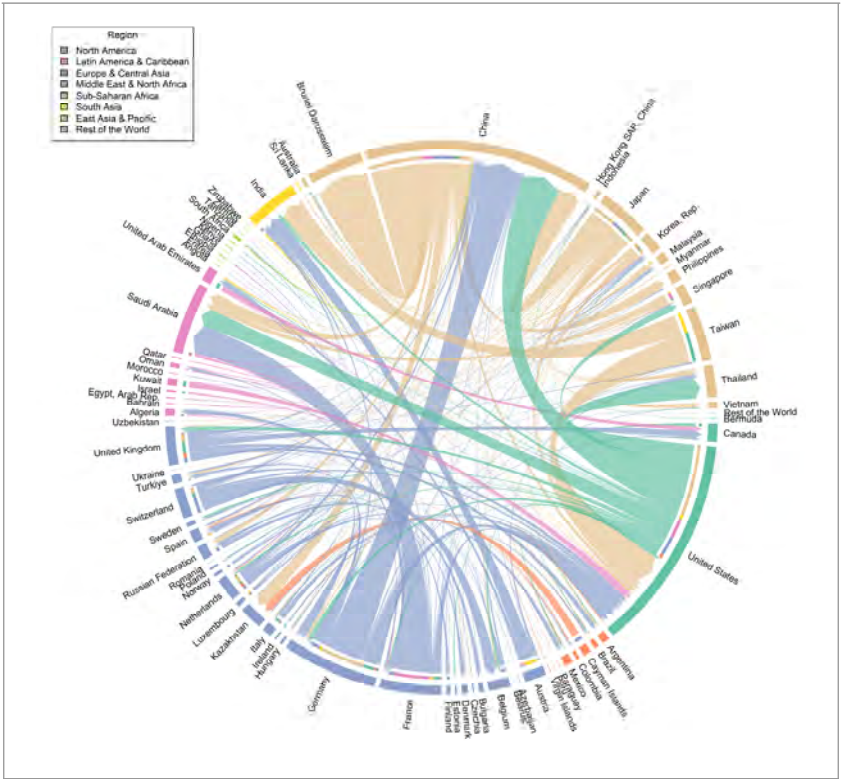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67.9 (20.4)	339 (14.7)	인도	112.2 (23.1)	78 (4.0)	미국	31.5 (13.8)	126 (14.3)
2	중국	33.4 (10.1)	240 (10.4)	미국	63.0 (13.0)	255 (13.2)	캐나다	21.2 (9.3)	17 (1.9)
3	인도네시아	17.5 (5.3)	48 (2.1)	중국	60.1 (12.4)	225 (11.6)	이집트	20.5 (9.0)	14 (1.6)
4	인도	17.3 (5.2)	99 (4.3)	브루나이	34.2 (7.0)	2 (0.1)	브라질	19.3 (8.5)	75 (8.5)
5	러시아	14.2 (4.3)	56 (2.4)	사우디 아라비아	23.9 (4.9)	14 (0.7)	스페인	16.2 (7.1)	67 (7.6)
6	독일	12.9 (3.9)	169 (7.3)	벨기에	13.0 (2.7)	31 (1.6)	인도	12.9 (5.7)	59 (6.7)
7	한국	10.7 (3.2)	41 (1.8)	태국	11.9 (2.4)	40 (2.1)	아랍 에미리트	11.9 (5.2)	11 (1.3)
8	브라질	9.4 (2.8)	110 (4.8)	호주	10.8 (2.2)	16 (0.8)	중국	9.6 (4.2)	80 (9.1)
9	벨기에	9.1 (2.7)	69 (3)	독일	10.7 (2.2)	187 (9.6)	한국	7.9 (3.5)	8 (0.9)
10	사우디 아라비아	8.3 (2.5)	18 (0.8)	캐나다	9.6 (2.0)	20 (1.0)	카자흐스탄	7.5 (3.3)	2 (0.2)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달러), 스페인(162억 달러) 등은 2021~24년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하며 북미, 남미, 북아프리카로의 석유화학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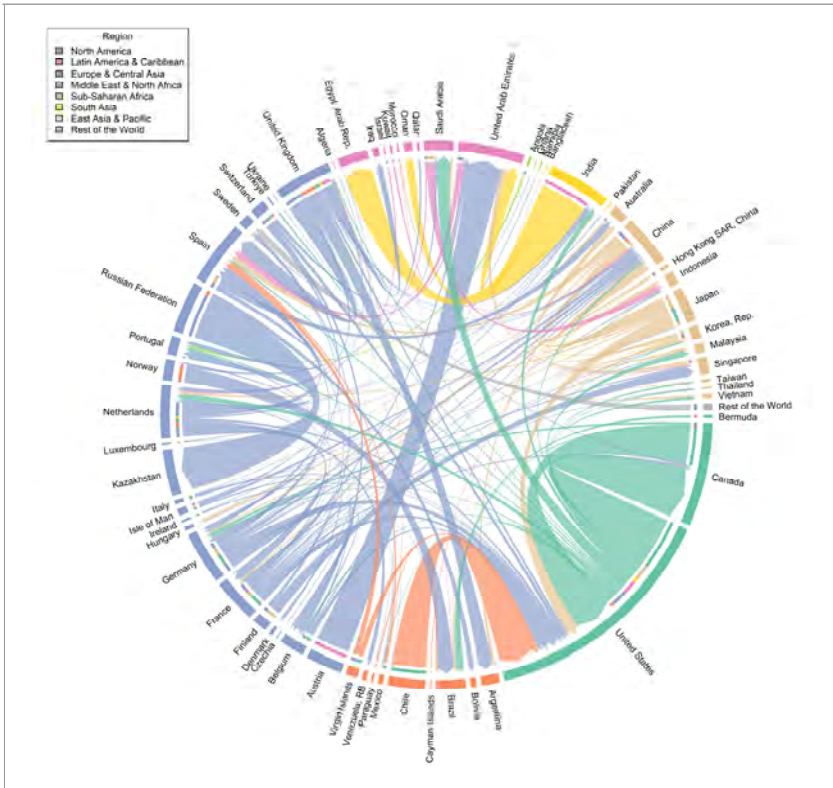
그 외에도 UAE(119억 달러), 한국(79억 달러), 카자흐스탄(75억 달러) 등 새로운 지역들이 투자 수혜국으로 부상하였다. UAE는 중동 내 화학 허브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정밀화학 생산 중심의 외자 유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 내 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유라시아 교역 거점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림 3-44.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20년): 석유·화학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45.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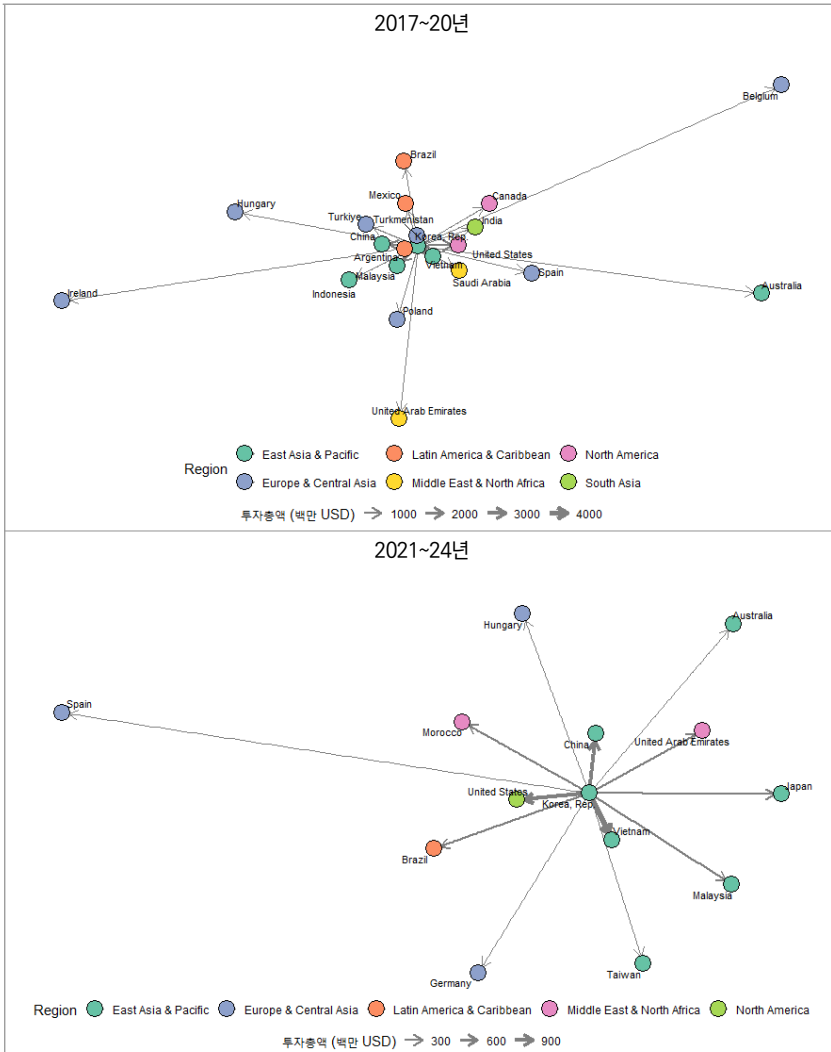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중국은 2017~20년 기간에 601억 달러(225건)의 투자 유치로 3위를 기록하며 대규모 투자 수요국 역할을 했으나, 2021~24년에는 96억 달러(80건)로 투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벨기에, 태국, 독일, 호주 등은 2017~20년 기간 해외직접투자 수혜 상위 국가에 포함되었으나, 2021년 이후 순위에서 밀려나며 투자가 재조정된 흐름이 포착된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산업 그린필드 투자의 국가 간 네트워크를 살펴보자.¹⁰¹⁾ 먼저 2013년부터 2024년의 네트워크를 비교해보면, 미국과 캐나다 간

101) 2013년부터 2016년 석유화학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6]에서 확인

그림 3-46.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석유·화학



주: 본 네트워크 맵은 Fruchterman-Reingold(FR)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는 투자 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투자액이 클수록 서로 가깝게 배치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할 수 있음.

의 투자 연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서 북미 역내의 안정적 석유화학 생산,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간의 투자 흐름 역시 구조적 전환을 겪었다. 2021년 이후 인도의 투자는 중동보다는 북아프리카 지역, 특히 이집트 쪽으로 전환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변화가 뚜렷하다. 과거 독일, 미국, 일본으로부터 활발한 석유·화학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던 중국은 최근 들어 그 비중이 급감하였다. 특히 독일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중국 자체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역시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및 산업전략이 내수 중심으로 이동하거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신중한 접근으로 바뀐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합하면 석유·화학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는 북미 국가 간의 양방향 투자 확대, 중국과 같은 기존 투자 허브의 약화, 그리고 인도-이집트 등 신흥 투자 관계의 등장 등을 나타내며 석유화학 산업이 새로운 국제 분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를 살펴보자.¹⁰²⁾ 먼저 2013~20년 기간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및 중동권 전역에 고르게 진출하고 있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등 미주권 국가들, 헝가리, 폴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유럽 지역과의 연결도 함께 나타난다.¹⁰³⁾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투자와 동남아 및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 확대, 그리고 미국과의 기초소재 부문 기술 협력형 진출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해당 시기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확

102) 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에서는 한국 석유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화학 산업 그린필드형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함.

103) 2013~16년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7]에 위치함.

산형 투자가 진행되었다.

반면 2021~24년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과의 연결이 더욱 두드러지고, 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일부 핵심국과의 연결 강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은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하며 한국과의 연결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중국 내 고부가 화학 수요 증가, 생산 협력 확대, 산업 내재화 정책 등에 대응한 현지 합작 및 증설 투자 확대의 결과로 해석된다(글상자 3-5 사례 참고). 또한 미국, 베트남 등과의 연결도 굵은 선으로 표현되며, 역내 수요 대응 및 생산 네트워크 강화 목적의 실질적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전 시기에서 확인되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과의 연결은 약화되었다.

글로벌과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하면, 두 경우 모두 북미(특히 미국) 투자 확대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가 브라질, 이집트 등 남미, 북아프리카 거점 확충이 진행된 반면, 한국은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투자 네트워크로 전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글상자 3-5. LG 화학의 중국 내 라텍스 생산시설 설립 사례(104)

- 2021년 7월 LG화학은 중국 Ningbo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NBL(니트릴 부타디엔 라텍스) 제조공장을 투자 및 가동함.
- LG화학의 궁극적 목표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의 NBL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2021년 중국 Ningbo 공장은 초기 연산 10만 톤 생산으로 시작하여 2022년 상반기 21만 톤까지 확장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자료: “LG Chem opens latex plant in Ningbo”(2021. 7. 12.)(검색일: 2025. 9. 18.).

104) “LG Chem opens latex plant in Ningbo”(2021. 7. 12.)(검색일: 2025. 9. 18.).

사) 바이오·의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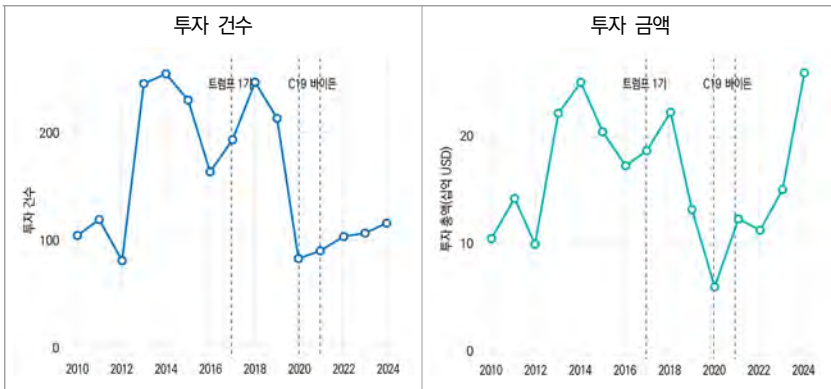
바이오 및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자. 우선 투자 건수 측면에서 보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0건 내외의 비교적 제한된 규모에서 출발하였으나, 2013~14년에는 230건 이상으로 단기 급증하였다. 이후 2015~18년까지도 200건 이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90건 수준까지 급감했으며, 이후 점진적 회복이 이어지며 2024년 기준 약 120건 내외까지 반등하였다.

투자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 100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하여 2013~14년 사이 약 2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22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발생 시기에는 투자 위축과 프로젝트 지연으로 약 7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이후에는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백신, mRNA 기술 기반의 대형 설비 투자 확산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약 27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요약하자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보건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국

그림 3-47.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 추이(2010~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가 전략과 직결되는 산업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투자 건수보다 건당 투자 규모가 커 설비 집약형·기술 기반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재편이 확인된다. 팬데믹 이후에는 백신 생산, 원료의약품(API) 국산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거점 중심의 고부가가치 투자 패턴이 강화되고 있으며,¹⁰⁵⁾ 이러한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표 3-27.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바이오, 의약품(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21.6 (25.2)	225 (25.2)	미국	14.2 (23.5)	155 (21)	미국	13.8 (21.4)	89 (21.5)
2	독일	8.1 (9.5)	82 (9.2)	독일	5.9 (9.8)	68 (9.2)	일본	10.4 (16.1)	38 (9.2)
3	영국	6.0 (7.0)	71 (8.0)	영국	5.3 (8.7)	55 (7.5)	덴마크	8.4 (13.0)	8 (1.9)
4	일본	5.9 (6.8)	80 (9.0)	캐나다	4.1 (6.8)	41 (5.6)	프랑스	7.4 (11.4)	26 (6.3)
5	인도	5.3 (6.2)	48 (5.4)	일본	3.8 (6.3)	53 (7.2)	영국	6.0 (9.3)	29 (7.0)
6	프랑스	5.2 (6.1)	45 (5.0)	스위스	3.1 (5.2)	54 (7.3)	독일	5.5 (8.5)	49 (11.8)
7	스위스	5.1 (5.9)	71 (8.0)	인도	2.7 (4.5)	43 (5.8)	스위스	2.8 (4.3)	19 (4.6)
8	벨기에	4.0 (4.7)	32 (3.6)	프랑스	2.6 (4.3)	32 (4.3)	인도	1.6 (2.4)	27 (6.5)
9	덴마크	3.4 (4.0)	19 (2.1)	중국	1.6 (2.6)	21 (2.8)	중국	1.4 (2.2)	5 (1.2)
10	아일랜드	2.8 (3.2)	18 (2.0)	한국	1.2 (2.0)	16 (2.2)	스페인	1.3 (2.1)	14 (3.4)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105) Pananond and Cuervo-Cazurra(2022), “Vaccine Global Value Chains and Regional Production Capacity in Asia and the Pacific,” p. 13.

다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상위 국가를 살펴보자. 우선 2013~16년에는 미국이 216억 달러(225건)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독일(81억 달러), 영국(60억 달러), 일본(59억 달러), 인도(53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후 미국은 2017~20년 총 142억 달러(155건), 2021~24년 138억 달러(89건)로 계속해서 1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글로벌 바이오 투자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건수가 감소하며 그만큼 평균 건당 투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진출보다는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확인된다.

2021~24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본과 덴마크의 약진이다. 일본은 2017~20년 38억 달러(53건)로 5위였으나, 2021~24년에는 104억 달러(38건)를 기록하며 2위로 상승했다. 덴마크는 2017~20년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2021년 이후 8건의 투자로 84억 달러를 기록하며 3위에 신규 진입했다. 이는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같은 대형 제약사의 생산 인프라 확장과 유럽 외 지역 진출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74억 달러), 영국(60억 달러), 독일(55억 달러)도 여전히 주요 투자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전통적인 바이오 기술 기반과 글로벌 제약사 본사를 보유한 국가로서 유럽 중심의 안정적 투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와 중국은 투자 규모가 줄어들며 순위가 하락하거나 정체되었다. 인도는 2017~20년 27억 달러에서 2021년 이후 16억 달러로 감소했고, 중국도 16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축소되었다. 그 와중에 신규 진입한 국가로는 스페인(13억 달러)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투자는 미국 중심의 대형화 전략 지속, 일본·덴마크 등 신규 기술 강국의 투자 확대,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요약되며, 전통 제조 강국보다 기술 집중도와 보

진 전략 연계성이 높은 국가들이 투자 주도국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수혜국을 살펴 보자.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13~16년에는 142억 달러(133건), 2017~20년에는 120억 달러(118건), 2021~24년에는 182억 달러(75건)를 기록하며,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투자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 주요 투자 수혜국을 살펴보면, 아일랜드와 독일은 시기별로 차이는

표 3-28.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바이오·의약품(2013~24년)

(단위: 건, 십억 달러)									
	2013~16년			2017~20년			2021~24년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국가	금액	건수
1	미국	14.2 (16.7)	133 (14.9)	미국	12 (19.9)	118 (16)	미국	18.2 (28.2)	75 (18.1)
2	중국	10.1 (11.8)	65 (7.3)	아일랜드	6.7 (11.2)	41 (5.6)	독일	5.8 (9.0)	9 (2.2)
3	독일	8.4 (9.8)	98 (11.0)	중국	4.7 (7.9)	46 (6.2)	싱가포르	5.4 (8.3)	16 (3.9)
4	아일랜드	5.5 (6.4)	36 (4.0)	독일	4.1 (6.8)	81 (11)	아일랜드	4.6 (7.1)	28 (6.8)
5	프랑스	3.6 (4.2)	36 (4.0)	스위스	2.6 (4.3)	16 (2.2)	프랑스	4.1 (6.3)	22 (5.3)
6	인도	3.2 (3.8)	29 (3.3)	프랑스	2.5 (4.1)	24 (3.3)	중국	4.0 (6.1)	30 (7.2)
7	캐나다	3.2 (3.7)	23 (2.6)	덴마크	2.1 (3.5)	26 (3.5)	캐나다	2.4 (3.8)	11 (2.7)
8	스페인	2.7 (3.2)	28 (3.1)	스페인	1.9 (3.1)	25 (3.4)	스페인	1.6 (2.5)	30 (7.2)
9	스위스	2.1 (2.5)	11 (1.2)	인도	1.6 (2.7)	15 (2.0)	덴마크	1.6 (2.5)	1 (0.2)
10	러시아	2.0 (2.4)	21 (2.4)	영국	1.6 (2.6)	23 (3.1)	스위스	1.4 (2.2)	7 (1.7)

주: 괄호 안 숫자는 비중을 의미.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한편 싱가포르는 54억 달러(16건)로 3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의 고기술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고, 프랑스는 41억 달러(22건)로 5위에 올라 제약산업 정책 강화와 유럽 내 전략적 제조 허브로의 전환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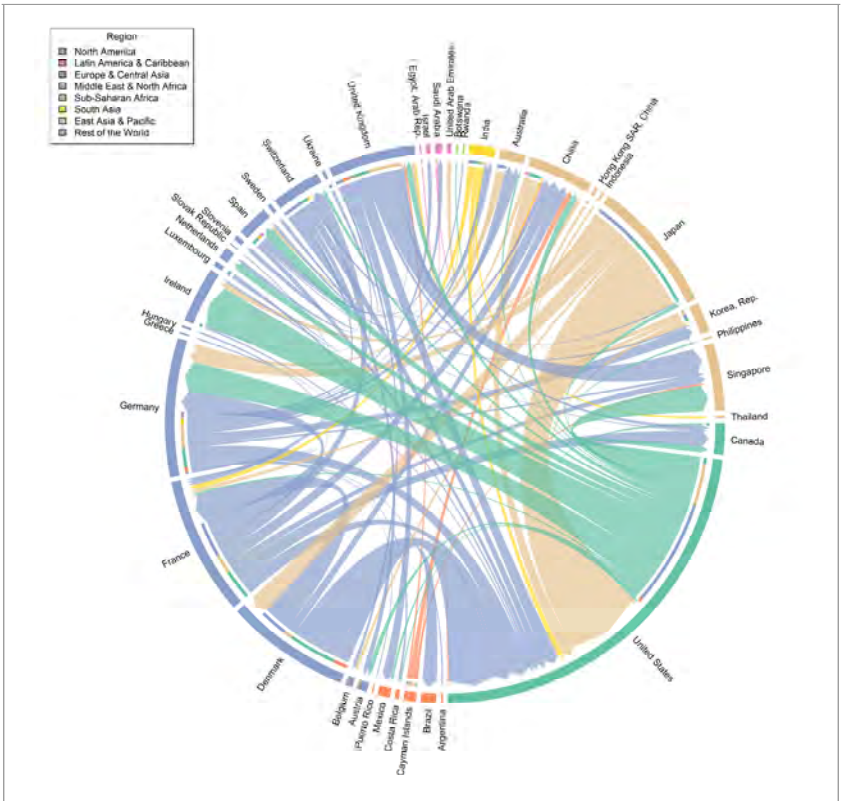
[illegible]

280 •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그 외에도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영국 등은 중위권 투자 수혜국으로 꾸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은 투자 규모가 크진 않지만 30건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덴마크는 2021~24년 단 1건의 투자로도 16억 달러를 유치하며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확인된다. 중국은 양 시기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지만, 투자 규모는 소폭 감소(47억 달러→40억 달러)했다.

이를 종합하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및 제조 집약형 집중 구조, 유럽의 고정된 생산기지의 지속적

그림 3-4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바이오·의약품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투자, 그리고 싱가포르, 프랑스 등 기술 기반 국가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에서 국가 간 그린필드 투자 흐름을 살펴보자.¹⁰⁶⁾ 가장 먼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주목할 만한 변화로, 2021년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일본의 바이오제약 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구개발 외연을 확장하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럽 내에서는 덴마크가 핵심 해외직접투자 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국과 독일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투자 흐름을 주도하는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덴마크가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외투자를 전개하며 투자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덴마크의 활발한 해외투자는 결과적으로 2021년 이후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1년 이후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확대되며 미국 내 바이오 생산 및 연구 거점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복원과 첨단 바이오 인프라 확보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위치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반적인 규모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구성은 이전 시기와 다소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다소 줄어든 반면, 프랑스와 덴마크로부터의 투자 흐름이 새롭게 확인된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주요한 바이오 생산 및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산업 연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최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는 일본, 덴마크의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전략이 미국이라는 글로벌 중심국과의 투자 파트너십으

106) 2013년부터 2016년 바이오·의약품 산업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8]에서 확인할 수 있음.

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구조를 살펴보자. 먼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의 그린필드 투자는 주로 중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⁰⁷⁾ 이후 2017~20년 기간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은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한 흐름이 확인되며, 동시에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 러시아 등 선진국 및 제조 인프라 기반 국가와의 연결도 형성하고 있다.

2021~24년 이후 연결된 국가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투자 강도가 크게 강화되며 보다 선택적이고 집중화된 투자 전략으로 전환된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의 연결은 네트워크 중심에서 두드러지며(글상자 3-6 사례 참고), 프랑스에 대한 투자도 확인된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기존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유지되고 있어, 생산기지 확보와 수요시장 대응 전략이 병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팬데믹 이후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 구조 변화와 유사하다.

글상자 3-6. Matica Bio의 미국 내 라텍스 생산시설 설립 사례¹⁰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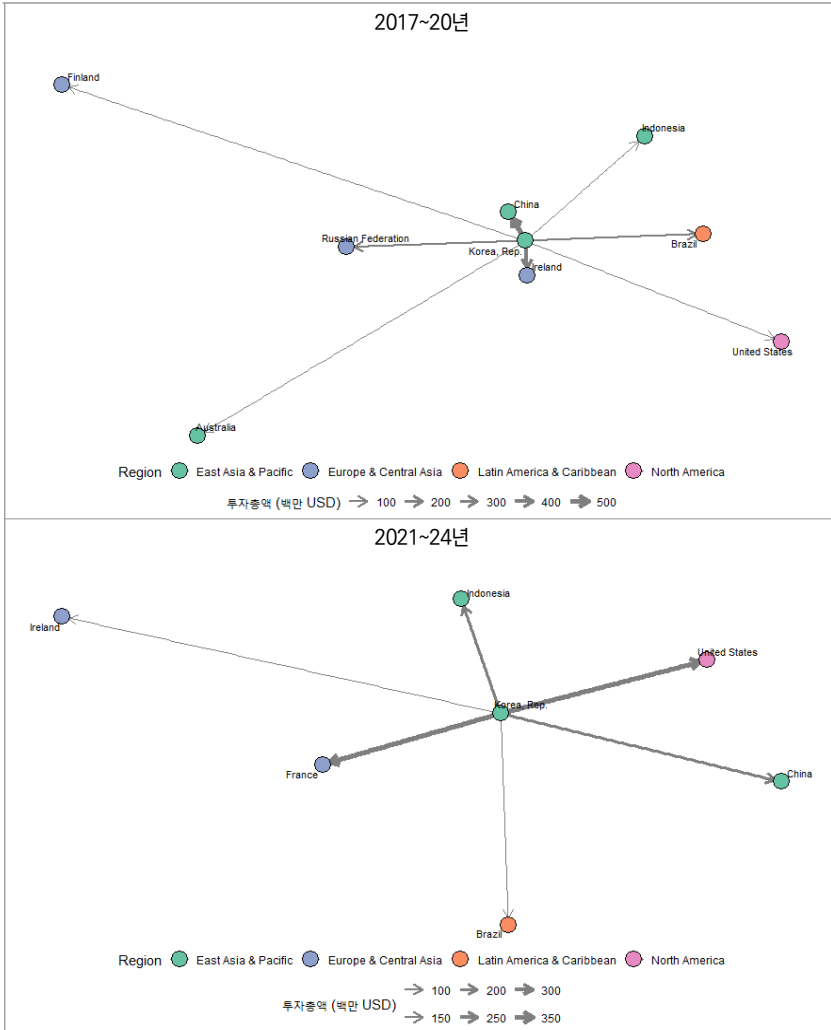
- 2022년 3월 Matica Bio는 미국 텍사스주 College Station에 45,000ft²(약 4,180m²) 규모의 세포·유전자 치료(CGT용) GMP 생산시설을 건설함.
- 해당 생산시설은 바이러스 벡터 및 세포 기반 제품을 생산하며, Texas A&M University의 Center for Innovation in Advanced Development & Manufacturing과의 연구·산업제조 가속화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 중임.

자료: Matica Bio(2022. 5. 3.), "Matica Bio Opens New Cell & Gene Therapy GMP Facility in Texas"(검색일: 2025. 9. 18.).

107) 2013~16년 한국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 네트워크는 [부록 그림 19]에 위치함.

108) Matica Bio(2022. 5. 3.), "Matica Bio Opens New Cell & Gene Therapy GMP Facility in

그림 3-50. 한국의 산업별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추이(2010~24년):
바이오·의약품



주: 본 네트워크 맵은 Fruchterman-Reingold(FR) 레이아웃 방식을 사용하여 노드 간 거리는 투자 규모에 따라 조정되며, 투자액이 클수록 서로 가깝게 배치됨.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검색일: 2025. 2.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Texas”(검색일: 2025. 9. 18.).

라. 소결

글로벌 해외직접투자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가 과거 대비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해외투자 네트워크에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참여해왔다. 이는 한국에게 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이며, 최근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인센티브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은 대미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투자 확대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금속,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중국을 향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이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물론 이러한 추세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국내 화학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연계성이 여전히 뚜렷하며, 조선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같이 적극적인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글로벌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은 산업별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 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미 중심의 투자 구조 변화는 2021년 이후 더욱 뚜렷해졌으며, 이는 미국의 인센티브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국과 투자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에, 중장기 차원의 한국 해외직접투자 구조 변화의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해당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가. 개요

본 절에서는 한국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필요성과 새로운 국제 통상환경하에서의 위기 및 기회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주요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 총 206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진출이 유망한 중요 국가와 이와 관련된 고려 사항을 식별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국제 통상환경과 세계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은 자국중심주의 및 일방주의적 기조로 점차 변모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의 교체 이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되었으며,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역시 더욱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2025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국제 통상질서와 무역환경이 더욱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은 단기적으로 밀어내기(front-loading) 물량을 확대시켜 재고 조정 리스크를 촉발했으며, 기존에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위협하였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도 국제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왜곡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입장에서조차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복합적인 위기와 재조정 압력을 고

조시키고 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공정을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시장 접근 강화, 비용 절감, 기술 개발, 자원 확보, 특정국에 대한 의존성 완화, 지정학적 위험 완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분업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특히 국내 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각 산업의 관점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즉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 요인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은 해당 산업 고유의 특성과 더불어 현재 산업의 발전 수준 그리고 여러 시대적 및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 시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아가 최근 더욱 급변한 자국중심주의 시대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주요 산업(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여러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의존성, 생산 비용 증가, 통상산업정책 변화, 수출(수입) 규제, 전략 산업 규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위기의 이면에는 동시에 한국 주요 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 이익, 신흥 시장 진출 촉진,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투자 유치 인센티브 활용, 산업 구조 재편 등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무역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은 과거와 다를 것이며,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상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향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조화의 중심지, 즉 해외직접투자가 유망한 또는 중요한 지역 및 국가를 선정하는데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각 산업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과 실행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과 관련된 주요 산업의 위기와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총 206명의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산업은 앞서 살펴본 과거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현황 및 변화를 고려하고, 동시에 최근 한국 및 세계 무역·투자의 흐름 변화와 함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한 산업들을 포함하여 10개 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 주요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제품, 조선, 의약품, 철강, 무선통신기기로 구성된다. 여기서 대부분 산업은 한국의 주요 해외직접투자 산업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요 수출 산업 혹은 유망한 수출·투자 산업이다. 일례로 자동차와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수출 산업이자 동시에 과거 및 현재에 가장 중요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산업 중 하나로서 선정되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과거까지 구축된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최근 무역 및 산업 전망 그리고 향후 해외직접투자 확대 가능성이 고려되었으며, 이차전지 역시 전기차의 부상과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의 무

역 및 투자가 매우 유망한 산업으로서 선정되었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최근 그리고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이며, 의료기기, 헬스케어, 화학 등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산업으로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 결과가 이러한 10개 산업을 포괄하면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 대상으로 산업별 최소 15명의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더해 각 산업이 한국의 무역·투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산업의 범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실무자 수 등을 고려하였다. 응답자 수가 비교적 많은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이며, 응답자 수가 비교적 적은 산업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제품, 조선 등이다. 또한 완성품 산업(자동차, 가전제품, 조선, 의약품, 무선통신기기)과 소재·부품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제품, 철강)의 비율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경우 전문가는 협회·단체 소속, 연구기관 소속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와 전문 애널리스트로 관련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설정하였다. 기업 실무자의 경우 100인 이상 규모 기업에 속하고 해당 산업 관련 근무 경력 역시 3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였다.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의 해당 산업 관련 평균 경력을 살펴보면 각각 15.2년과 13.0년으로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3년 이상인 자로 한정된 것은 특수한 산업의 경우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신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2020년대 들어서야 크게 부상한 이차전지 산업의 기업 실무자들은 평균 경력이 4.2년에 불과하다. 한편 전반적으로 전문가보다는 기업 실무자의 표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양측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33:67 비율에 가깝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경우 전문가보다는 기업 실무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해당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표 3-29.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표본 수	비중	구분		표본 수	비중
산업	자동차	32	15.5	산업	완성품 산업	115	55.8
	반도체	27	13.1	분야	소재·부품 산업	91	44.2
	가전제품	22	10.7	응답자 소속 (역할)	협회·단체 소속 전문가	21	10.2
	디스플레이	15	7.3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34	16.5
	이차전지	15	7.3		학계 전문가	5	2.4
	석유화학제품	15	7.3		전문 애널리스트	7	3.4
	조선	15	7.3		기업 실무자	139	67.5
	의약품	30	14.6	응답자	전문가	67	32.5
	철강	19	9.2	유형	기업 실무자	139	67.5
	무선통신기기	16	7.8	전체		206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설문조사의 내용은 해당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 주요 고려 사항, 기회 및 위기 요인, 해외직접투자 시 중요 지역 및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 수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¹⁰⁹⁾ 모든 문항은 각 산업에 대한 응답을 전제로 하는 만큼, 최근의 국제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교란과 같은 전반적인 이슈보다는 각 산업의 특성과 현재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문항은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객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은 일반적으로 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3순위까지 혹은 순위와 상관없이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가 중요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보충 의견으로 직접 기술(주관식)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문항은 주관식으로 구성하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응답은 본 장의 통계적 분석에서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국가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이나 국내 정책 개선 방향

109) 설문지 상세 내용은 [부록 설문조사지(초안)]을 참고.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실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전국의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CAWI: 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ing, CASI: Computer-Assisted Self Interviewing)와 전화 조사(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할 수 없는 만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문가 리스트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참여자 집단(패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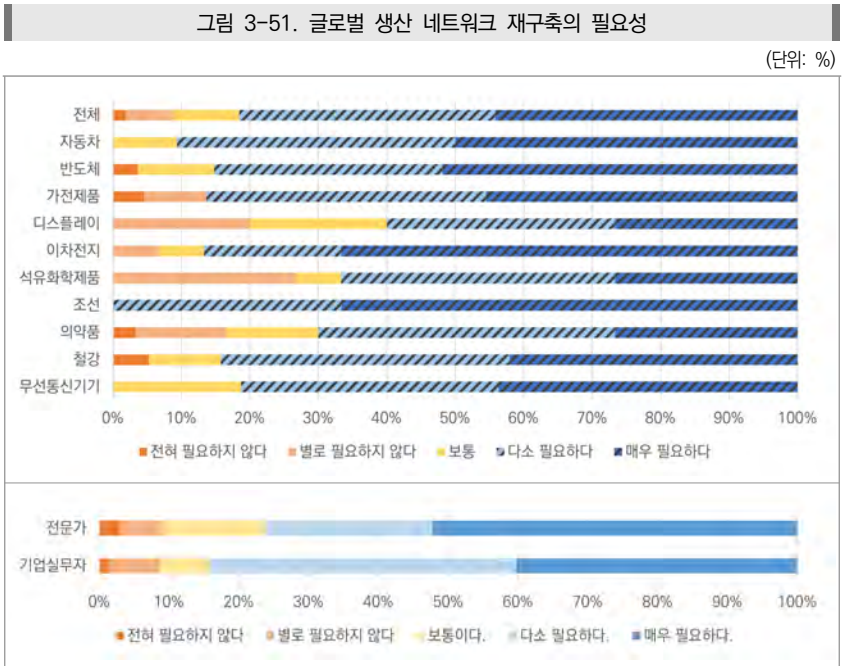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산업별로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의 81.6%에 달하는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44.2%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과 이차전지 산업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매우 높았고, 이와 더불어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철강 등에서 ‘필요하다’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및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전체적으로 소재·부품 산업보다는 완제품 산업 분야에서, 전문가보다는 기업 실무자 집단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다만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전문가 집단에서 더 많았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1순위 응답 기준)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과 ‘생산 비용 절감(20%)’이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반면 ‘주요 자원 확보(7%)’라는 응답이 가장 적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이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주요 요인이 매우 상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 비용’과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한 만큼 ‘선진 시장 접근성 강화’ 역시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혔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 확보’ 관련 응답은 상기 3개 사항에 밀려 1순위 응답에서는 비중이 적었으나, 2순위 응답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AI 기술의 발전이 핵심 사항인 만큼 ‘첨단 기술’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또한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역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지목되었다. 2순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위 응답에서도 ‘첨단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며, 다만 ‘중국 의존도’ 및 ‘주요 자원 확보’ 관련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가전제품의 경우 ‘신흥 시장 확보’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많은 것이 가장 특징적이며, 이와 더불어 ‘생산 비용’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응답도 많은 편이다. 2순위 응답 역시 1순위 응답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 상기한 3개 요인이 가장 주요한 고려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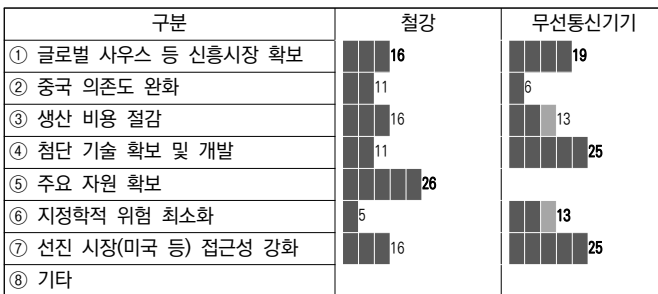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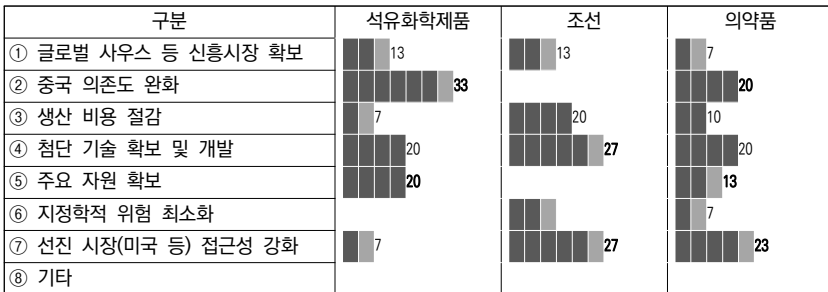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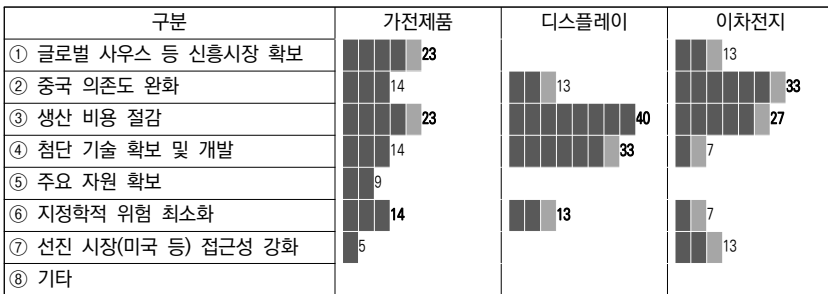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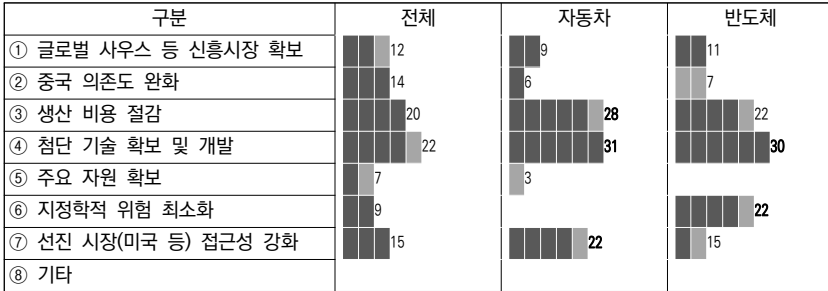
디스플레이의 경우 ‘생산 비용’과 ‘첨단 기술’ 관련 2개 응답이 70% 이상에 달해 매우 편중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가격 및 기술 경쟁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신흥시장 확보, 선진 시장 접근성, 주요자원 확보 등에 대한 응답은 전무한 것도 특징이며, 또한 2순위 응답에서는 ‘생산 비용’과 더불어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얻기도 하였다.

이차전지의 경우 ‘중국 의존도 완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현재 원료 및 소재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생산 비용 절감’에 대한 응답도 많았는데, 앞의 응답과 연결되어 탈중국 재편 시 비용 문제 그리고 중국산 이차전지와 가격 경쟁 측면 등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순위 응답에서는 ‘첨단 기술 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중국 의존도 완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역시 중국이 주요한 원재료 수급처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주요 판매 시장으로서의 의존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화학 분야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주요 자원 확보’ 응답이나, 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첨단 기술’ 관련 응답도 많았다. 한편 2순위 응답에서는 ‘중국 의존도’ 응답이 전무한 반면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관련 응답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그림 3-52.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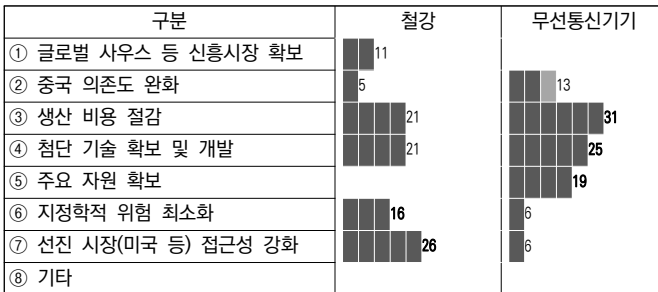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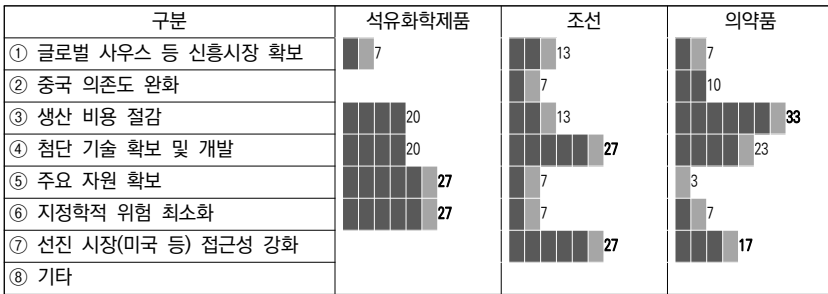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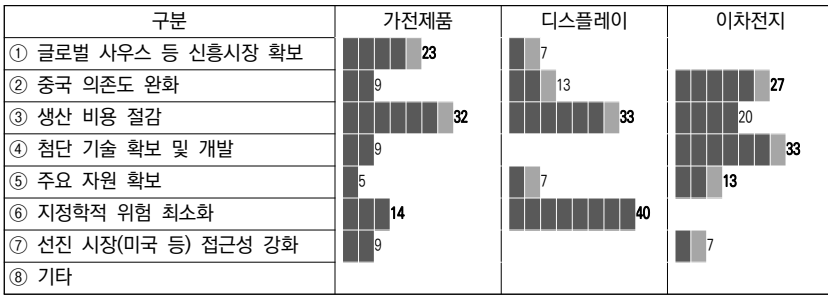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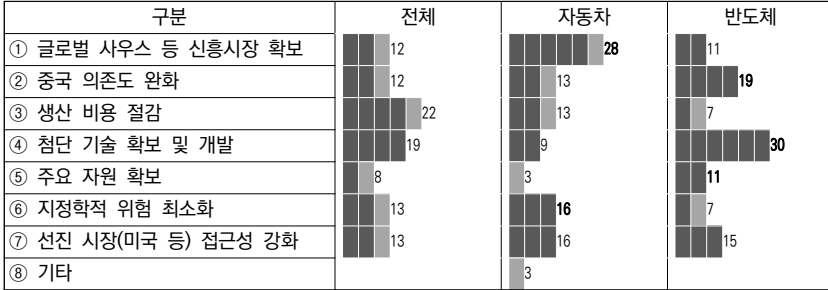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2순위)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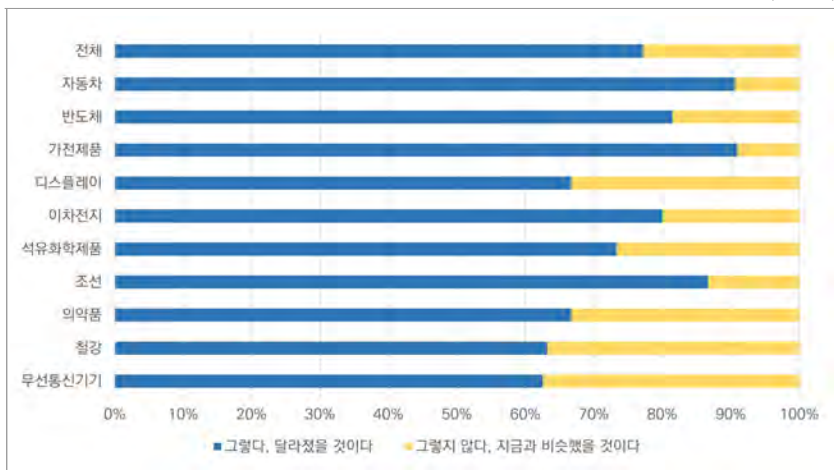
조선의 경우 ‘첨단 기술 확보’와 ‘선진 시장 접근성’ 관련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첨단 기술의 경우 스마트야드, 자율운행 그리고 핵추진 등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 시장 접근의 경우 최근 미국과의 협력 확대 및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순위 응답에서도 ‘첨단 기술’과 ‘선진 시장’ 관련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모든 응답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 접근성’, ‘중국 의존도 완화’, ‘주요 자원 확보’ 관련 응답이 많았다. 한편 ‘생산 비용 절감’의 경우 1순위 응답 비중은 많지 않았으나, 2순위 응답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인 것으로 보인다.

철강의 경우 ‘주요 자원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응답이 고르게 나타나는 양상이며, 다만 상대적으로는 ‘신흥 시장 확보’ 응

그림 3-54. 트럼프 등장 이전과 이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이 달라졌는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답도 많은 편이다. 2순위 응답 역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선진 시장 접근성’과 ‘지정학적 위험’ 관련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응답이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첨단 기술 확보’ 및 ‘선진 시장 접근성’과 더불어 ‘신흥 시장 확보’ 응답 역시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2순위 응답에서는 ‘생산 비용 절감’ 관련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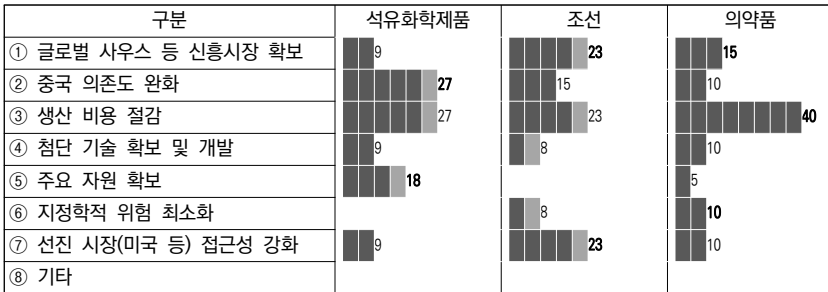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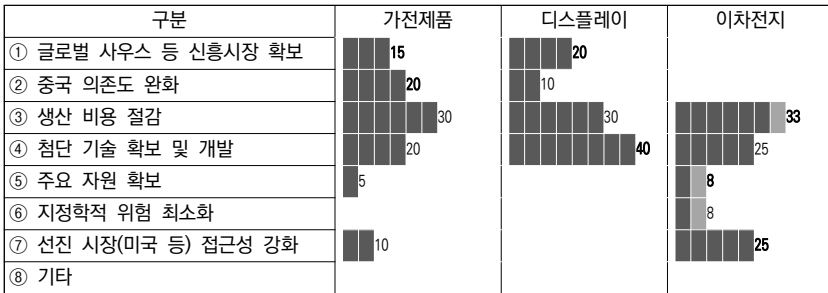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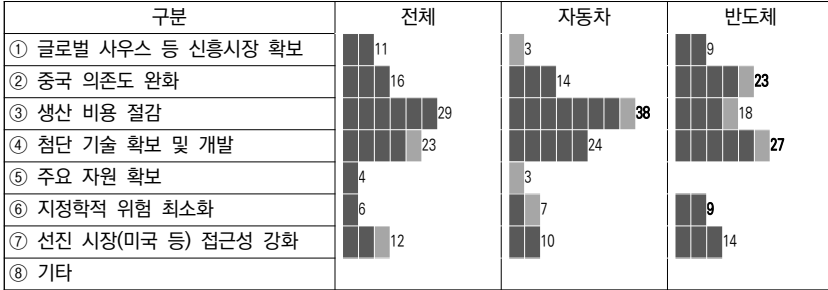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요인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전 자유무역질서가 유지되던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특히 201조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세탁기가 포함된 가전제품, 그리고 2025년 미국 관세 정책의 핵심 사항이었던 자동차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무선통신기기, 철강, 의약품, 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의 경우 70% 내외 혹은 미만으로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고려 사항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전 과거 시점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2위 응답이었던 ‘생산 비용 절감’이 과거 기준으로는 2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과거에는 가장 핵심적인 고려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현재에 비해 과거에 ‘생산 비용 절감’ 부분이 더욱 중요했던 산업으로는 자동차(+10%p), 석유화학제품(+20%p), 의약품(+30%p) 등이 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과거에는 ‘첨단 기술 확보(+25%p)’ 관련 응답이 50%에 달했으며, 반도체는 ‘중국 의존도 완화’, 디스플레이와 조선은 ‘신흥 시장 확보’가 과거에 주요 고려 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55. 과거(트럼프 이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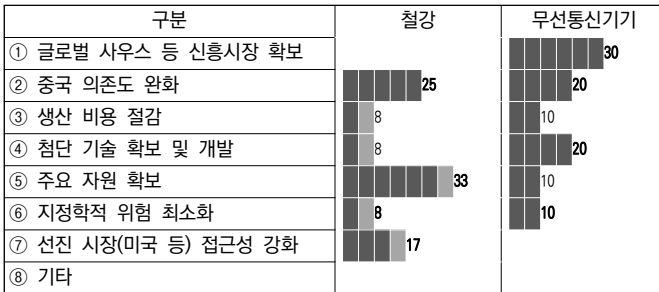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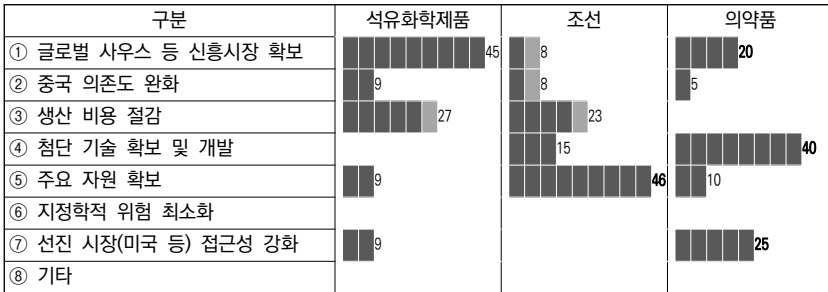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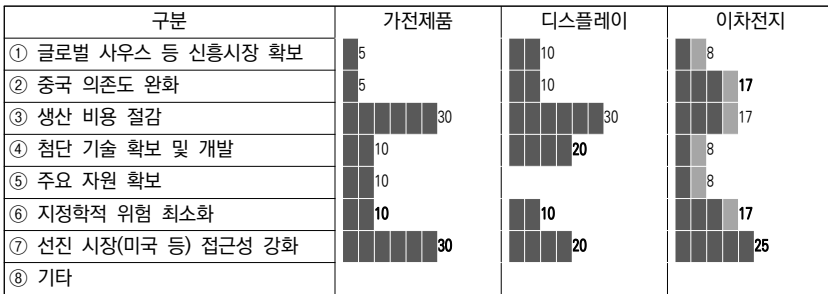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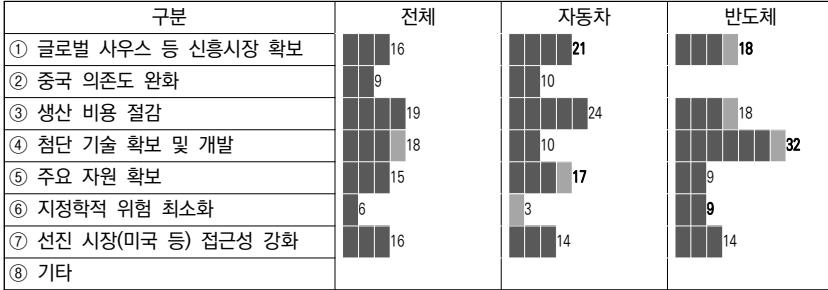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6. 과거(트럼프 이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고려 사항(2순위)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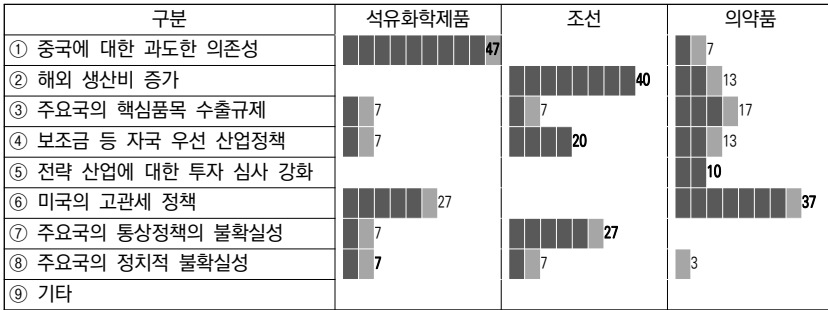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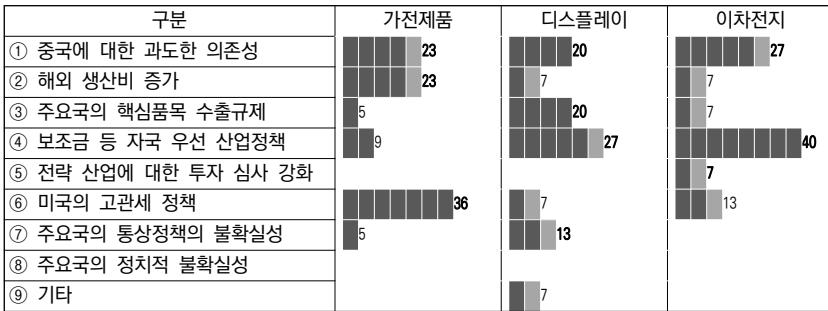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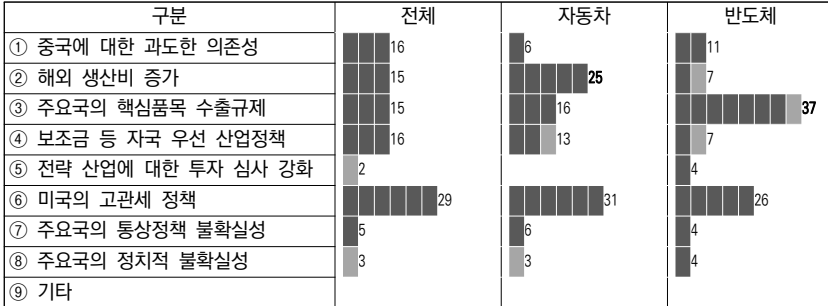
2순위까지 고려 요인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확보’와 ‘생산 비용 절감’이 가장 주요한 고려 요인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요인 간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던 ‘신흥 시장 확보’가 3순위까지 상승한 것이 두드러진다. 산업별로는 가전제품은 ‘선진 시장 접근성’, 의약품은 ‘첨단 기술 확보’ 그리고 석유화학제품과 무선통신기기는 ‘신흥 시장 확보’가 주요한 응답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련 과거와 현재의 고려 사항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먼저 ‘미국의 고관세 정책(2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자국 우선 산업정책(16%)’, ‘주요국의 핵심 품목 수출규제(15%)’, ‘해외 생산비 증가(15%)’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주요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5%)’,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3%)’,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 강화(2%)’ 등 2020년을 전후로 부상하였던 주요 이슈들의 경우 응답이 많지 않았다.

산업별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주요 고려 요인보다 더욱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응답의 경우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철강(42%), 자동차(31%), 가전제품(36%) 등 그리고 품목별 관세 조치의 조사가 진행 중인 반도체(26%), 의약품(37%), 무선통신기기(50%) 등에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디스플레이(7%), 이차전지(13%), 조선(0%) 등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위기 요인이라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2순위 응답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3개 산업 모두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한 만큼,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가 가장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57.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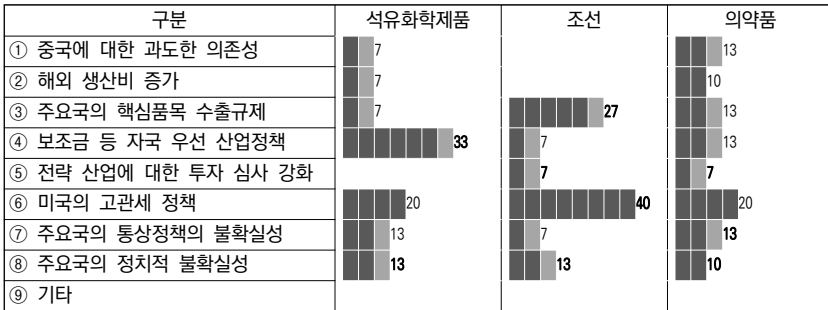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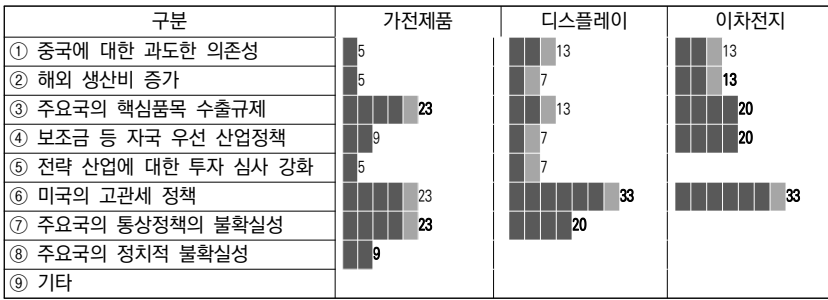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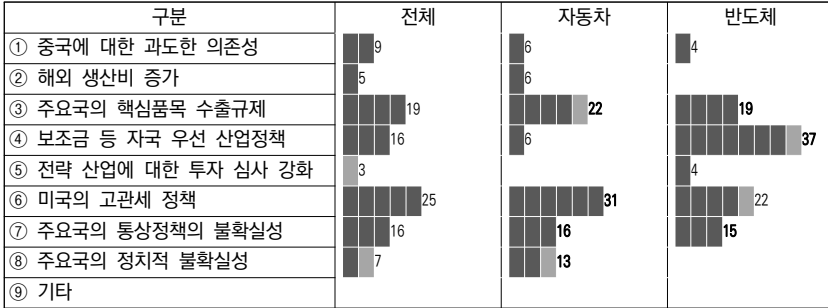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8. 현재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위기 요인(2순위)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산업별 위기 요인은 각기 상이한 시각을 보였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진출 및 생산 확대가 예고된 만큼 ‘해외 생산비 증가’ 역시 주요한 위기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핵심품목 수출규제’가 높은 응답을 보였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의 산업정책이 반영된 ‘보조금’ 관련 응답이 가장 높았고, 더불어 중국의 원료·소재·부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만큼 ‘중국 의존성’과 ‘핵심품목 수출규제’ 관련 응답도 많았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이차전지 역시 ‘보조금’ 및 ‘중국 의존성’ 관련 응답이 많았다. 석유화학제품 역시 ‘중국 의존성’ 응답이 47%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주요 생산기지 및 수요처라는 측면까지 더해져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경우 미국 현지 진출이 유력한 만큼 ‘해외 생산비 증가’ 측면이 가장 주요한 위기로 인식되었다.

한편 현재 국제 통상환경 위기의 이면에는 한국의 주요 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 역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나 국내적인 변화 등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회 요인과 관련된 설문에서 먼저 전체적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시장 확보(28%)’가 가장 주요한 기회 요인으로 꼽혔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가 많은 응답을 보였다. 국내적인 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산업 구조 재편의 계기(10%)’ 및 ‘국내 산업·통상정책 고도화 계기(9%)’는 가장 적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응답별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만큼 작은 비중은 아니다. 게다가 2순위 응답으로 한정하면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와 함께 ‘국내 산업’ 관련 두 항목의 응답이 오히려 가장 높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의 경우 ‘중국 견제’와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에 응답이 집중되었다. 최근 전기차를 중심으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되는 만큼 한국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기지 확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순위 응답의 경우 마찬가지로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와 함께 ‘중국 의존성 완화’가 주요한 기회 요인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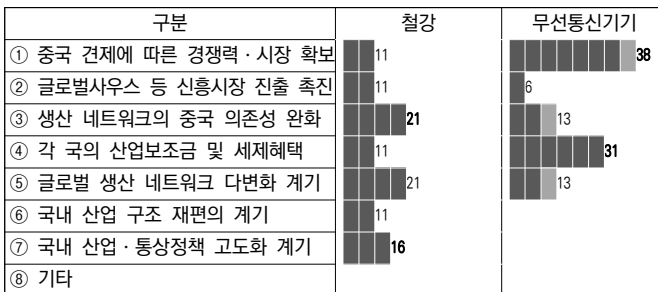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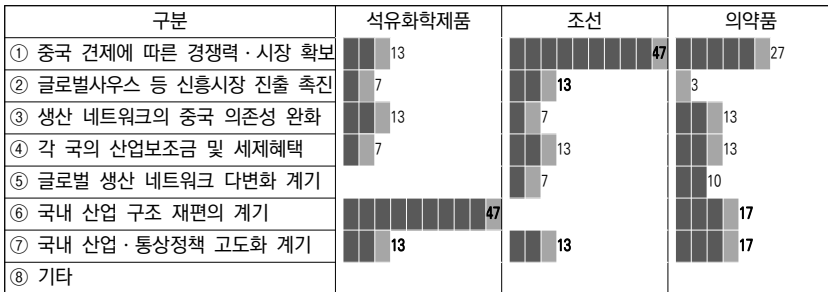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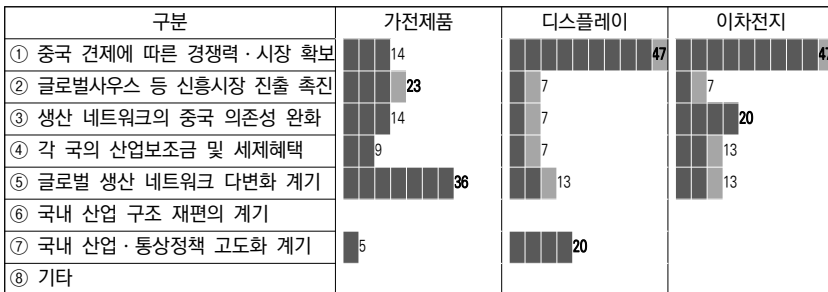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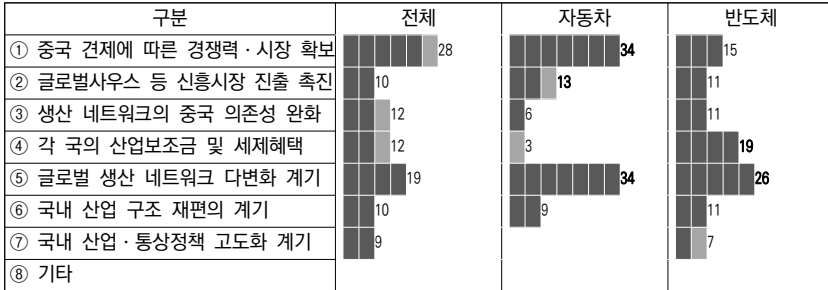
반도체와 가전제품 역시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가 가장 주요한 기회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미국 진출에 따른 ‘산업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가전제품의 경우 기존의 미국 시장에서 벗어난 ‘신흥시장 진출’이 주요 응답으로 선정되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2순위 응답의 경우 반도체는 ‘중국 의존성 완화’와 ‘국내 산업’ 관련 2개 항목의 응답도 많은데, 특히 후자의 경우 최근 기술 경쟁이 과열된 반도체 산업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중국 견제’가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 산업들은 중국과의 기술 및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로, 아직까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반면,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반사 이익이 가장 기대되는 산업들이다. 이어서 ‘중국 견제’를 제외하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내 정책 고도화’ 관련 응답이 많았고, 비슷한 맥락에서 2순위 응답에서는 ‘국내 산업 구조 재편’이 많았다. 이차전지의 경우 ‘중국 의존성 완화’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조선의 경우 2순위 응답으로 한정하면 ‘국내 정책 고도화’와 ‘네트워크 다변화’ 관련 응답이 많았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중국 견제’ 못지않게 ‘산업보조금 및 세제혜택’ 관련 응답도 많았으며, 2순위 응답의 경우 ‘네트워크 다변화’가 가장 많았다.

반면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국내 산업 재편(47%)’ 관련 응답이 많아 앞서 살펴본 산업들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인 자본집약형 산업인 석유화학 분야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조정이 제한적인 만큼 국내의 구조 재편

그림 3-59. 현재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기회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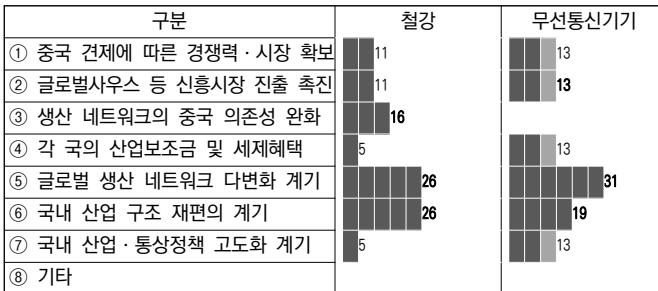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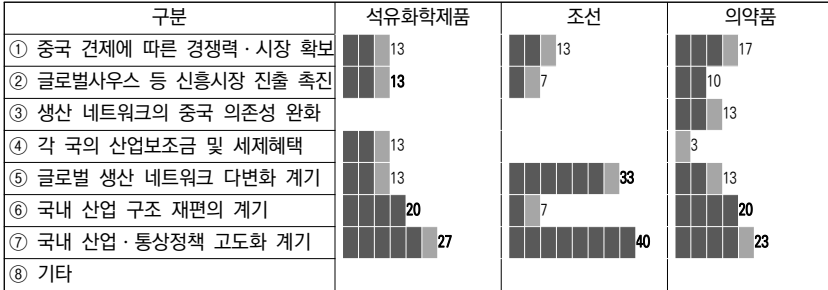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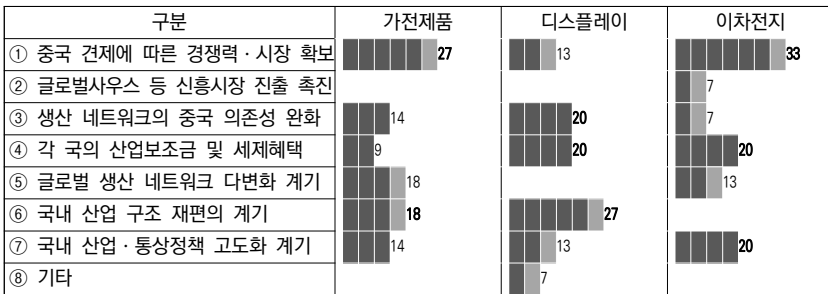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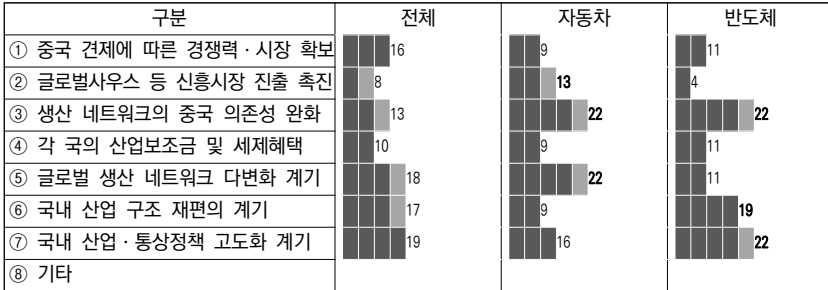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0. 현재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기회 요인(2순위)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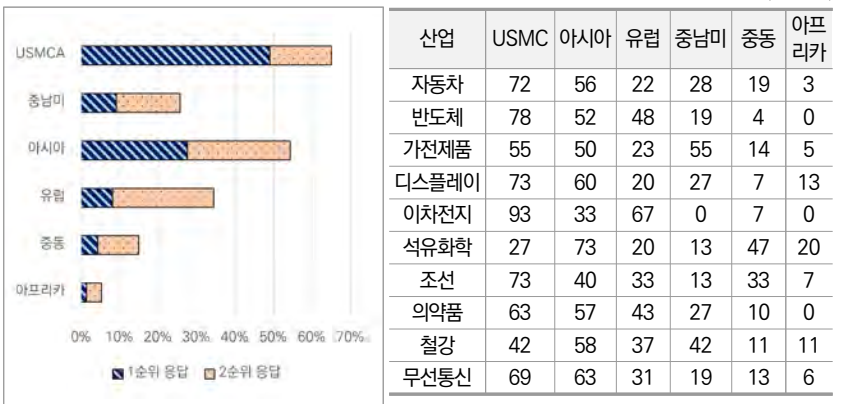
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순위 응답에서도 ‘국내 정책 고도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면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약품의 기회 요인은 산업 평균적인 응답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중국 견제’가 가장 많았다. 다만 ‘국내 산업 구조 재편’ 및 ‘국내 정책 고도화’ 응답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2순위 응답에서도 ‘국내 산업’ 관련 2개 응답이 가장 많은 기회 요인으로 꼽혔다.

철강 산업의 경우 모든 기회 요인에 대해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다만 산업 평균을 고려한다면 ‘중국 의존성’과 ‘국내 정책 고도화 계기’ 관련 응답이 많은 편이다. 2순위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국내 산업 구조 재편’과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인들을 종합하였을 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미국을 포함한 USMCA(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선정되었다. 1순위 응답 기준 USMCA가 전체 응답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가 28%로 뒤를 이었다. 2순위 응답에서는 USMCA를 선택한 비율이 16%로 높지 않았으나, 아시아는 27%로 거의

그림 3-61.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확대 중요 지역·국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비슷하게 높았으며, 1순위와 달리 유럽과 중남미(멕시코 제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총 200%)하는 경우 USMCA(65%)와 아시아(54%)가 크게 높고, 이어서 유럽(34%), 중남미(26%) 순으로 집계되었다.¹¹⁰⁾ 산업별로 1순위 및 2순위 합산 선정 지역을 살펴보면, 역시 USMCA와 아시아가 대부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그중에서도 USMCA는 이차전지(93%) 산업에서 1순위 응답이 8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았고, 아시아는 석유화학제품(73%)과 가전제품(50%)에서 1순위 응답이 각각 53% 및 41%에 달하는 등 높았다. 유럽의 경우 이차전지(67%), 반도체(48%), 의약품(43%) 산업에서, 중남미의 경우 가전제품(55%), 철강(42%) 등에서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 역시 미국이 1순위 기준 4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을 제외하면 1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베트남(10%)과 인도(9%)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미국을 선정한 응답은 1순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2순위의 경우 인도, 베트남, 브라질, 중국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총 200%)하여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55%)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도(21%), 베트남(20%), 브라질(16%), 중국(12%) 순이며, 이외에 USMCA에 속한 멕시코(7%)·캐나다(6%) 그리고 인도네시아(6%) 등이 상위 8개국(주요국)을 구성했다.¹¹¹⁾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확대 우선순위 국가를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의 경우

110) 실제 설문조사는 중동·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선택되기 어려운 지역들도 포괄하기 위해 3순위까지 3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중요하게 식별될 만한 차이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2순위까지 선정된 지역 및 국가를 분석하였다.

111) 중요 2개 국가 선정에 앞서, 지역별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만한 국가 2개(최대 6개국)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국가들이 모두 중요 국가로 선정되지는 않은 만큼 여기에서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지만, 주요 응답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독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또한 산업별로도 조선에서는 파나마, 반도체에서는 일본, 네덜란드, 무선통신기기에서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차전지에서는 헝가리, 석유화학제품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전제품에서는 튀르키예 등이 투자를 확대할 만한 국가로 언급되었다.

미국이 1순위 및 2순위 합산(총 200%) 53%(50%+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도(25%), 브라질(22%), 멕시코(16%), 베트남(13%) 등 산업 전체적으로도 순위가 높았던 국가들이 중요 국가로 선정되었다. 특히 1순위 응답의 경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멕시코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2순위에서는 인도,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주요국을 제외하면 체코(9%)가 중요한 국가로 꼽혔다.

반도체 역시 미국이 합산 7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국(22%) 그리고 인도(11%), 브라질(11%), 베트남(11%) 등 주요국이 대부분 선정되었다. 주요국 외에는 아르헨티나(11%)와 일본(11%)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가전제품의 경우 역시 미국이 합산 50%로 가장 높았으나, 베트남(36%), 브라질(32%), 인도(23%)에 대한 응답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비주요 국가로는 중남미 지역의 페루(9%)에 대한 2순위 응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도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이 1순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1~2순위 합산으로도 미국(47%)과 함께 4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외에는 인도(27%)와 멕시코(20%)를 비롯한 주요국이 대부분의 응답을 차지했다.

이차전지는 1~2순위 합산 미국(7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캐나다(33%)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선정 이유 역시 1순위에서 ‘선진 시장 접근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외 비주요국 중에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헝가리(20%)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미국을 선정한 응답은 많지 않은 반면, 인도가 1~2순위 합산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베트남(27%), 말레이시아(20%) 순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미국(13%)의 경우 합산 응답 비율은 높지 않지만 모두 1순위 응답으로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이와 비슷하게 브라질(13%)도 모두 1순위 응답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3-62.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확대 우선순위 국가 및 선정 이유

(단위: %, ■: 1순위-5%, ▨: 2순위-5%)

(단위: %, ■: 5%(또는 4~6%), ▨: 2~3%)

국가	전체	선정 이유	1순위	2순위
미국	55	① 신흥 시장 확보	17	21
인도	21	② 중국 의존도 완화	11	12
베트남	20	③ 생산 비용 절감	18	25
브라질	16	④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	10	9
중국	12	⑤ 주요 자원 확보	10	13
멕시코	7	⑥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15	10
캐나다	6	⑦ 선진 시장 접근성 강화	19	9
인도네시아	6	⑧ 기타		
기타*				

* (합산¹¹²) 2% 이상) 일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 콜롬비아, 독일, UAE,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국가	자동차	선정 이유	1순위	2순위
미국	53	① 신흥 시장 확보	24	21
인도	25	② 중국 의존도 완화	9	11
브라질	22	③ 생산 비용 절감	20	26
멕시코	16	④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	6	2
베트남	13	⑤ 주요 자원 확보	3	8
인도네시아	9	⑥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17	8
체코	9	⑦ 선진 시장 접근성 강화	20	9
기타*		⑧ 기타	2	

* (응답 수 2개 이상) 말레이시아, 독일, 튀르키예

국가	반도체	선정 이유	1순위	2순위
미국	70	① 신흥 시장 확보	12	15
중국	22	② 중국 의존도 완화	11	9
인도	11	③ 생산 비용 절감	11	20
브라질	11	④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	21	12
베트남	11	⑤ 주요 자원 확보	12	14
아르헨티나	11	⑥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17	14
일본	11	⑦ 선진 시장 접근성 강화	17	5
기타*	52	⑧ 기타		

* (응답 수 2개 이상) 독일, 대만, 캐나다, 네덜란드

국가	가전제품	선정 이유	1순위	2순위
미국	50	① 신흥 시장 확보	18	8
베트남	36	② 중국 의존도 완화	10	16
브라질	32	③ 생산 비용 절감	24	27
인도	23	④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	4	6
멕시코	9	⑤ 주요 자원 확보	12	10
페루	9	⑥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14	2
기타	41	⑦ 선진 시장 접근성 강화	16	8
		⑧ 기타		

112) 1순위 및 2순위 응답을 단순 합산한 값[예: '미국' 응답은 합산 55.3%(= 1순위 48.5% + 2순위 6.8%)].

그림 3-62. 계속

(단위: %, ■: 1순위-5%, ▨: 2순위-5%)

(단위: %, ■: 5%(또는 4~6%),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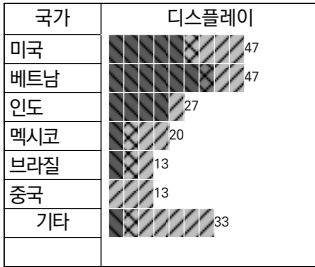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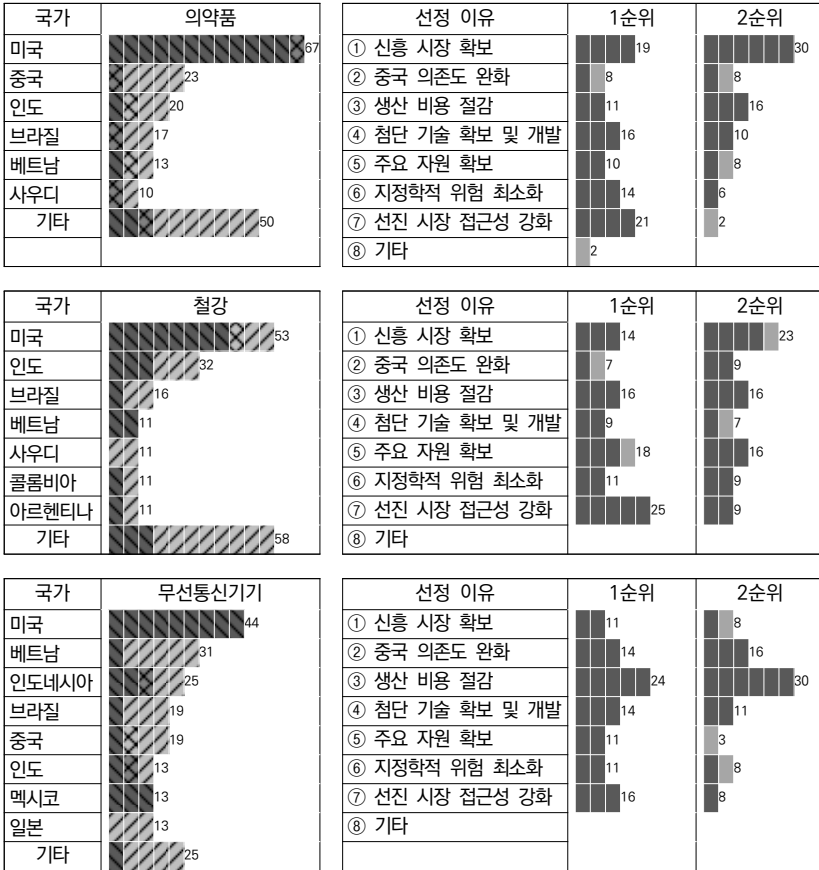


그림 3-62. 계속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조선의 경우 미국이 1~2순위 합산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베트남(20%), 캐나다(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3개국을 제외하면 폴란드(13%), 태국, 필리핀, 영국 등 비주요국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의약품 역시 미국에 대한 응답이 1~2순위 합산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23%), 인도(20%), 브라질(17%) 등 주요 신흥국에 대한 응답이 2순위를

중심으로 많았다. 주요국 외에는 사우디(10%)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선정 이유는 ‘신흥 시장 확보’와 ‘선진 시장 접근성’ 등 시장을 고려한 응답이 많았다.

철강 역시 미국에 대한 응답이 1~2순위 합산 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인도(32%), 브라질(16%)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한 주요국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11%),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 대한 응답이 많은 편이다. 선정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 시장(미국)과 신흥 시장 모두를 고려한 응답이 많았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주요 시장인 미국이 1순위 응답으로만 44%에 달해 가장 많았으나, 한국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베트남에 대한 응답도 1~2순위 합산 31%로 많았다. 더불어 인도네시아(25%), 브라질(19%)에 대한 응답도 많았으며 중국(19%)과 일본(13%)에 대한 투자 진출 역시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정 이유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모두 ‘생산 비용 절감’ 측면이 가장 크게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¹¹³⁾ 재정 지원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보조금 그리고 M&A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재정 지원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 R&D 강화, 인력 양성 등 다른 여러 수단들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정 지원을 제외하면 정부의 전략적인 산업정책, 관세 등 리스크에 대응하는 통상정책 및 외교적 대응 그리고 해외 진출과 리쇼어링을 포함한 공급망 재배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역시 주요한 지원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응답들은 미국 관

113)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는 객관식에 기초한 정량적 응답이 아닌 주관식 형태의 정성적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응답들을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하여 정량적인 결과로 도출하였으나, 실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지원방안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키워드별로 정리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본 연구자의 해석이 많이 개입된 만큼 정확하지 않으므로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정책의 여파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 건수는 많지 않으나 노사 관계 개선, 국내 규제 간소화 그리고 환경 문제 대응 등 역시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영역으로 언급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경우 ‘재정 지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외교·통상 대응과 함께, 국내 생산 유지와 해외 생산 확대를 병행하기 위한 관련 여러 정책방안들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반도체의 경우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그리고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산업화가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더불어 설비 투자, R&D, 첨단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통해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가전제품도 재정 지원과 미국 관세 대응이 중요한 정책 지원으로 언급되었으나, 국내 생산 측면에서의 지원과 동시에 해외 생산거점 확대와 관련 정책이 강조되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비슷한 양상이나, 미국 등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 중심의 해외 진출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재정 지원에 대한 응답이 80%에 달하는 만큼 매우 편중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래에도 중국과의 양강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고급 인력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역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기술적 우위 유지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산업과 연계되어 해외 진출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석유화학제품은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업황 부진 속에서 구조 조정, 해외 이전,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전환 등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으로는 업황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 재편 및 연구 개발이 중요하겠다.

조선은 과거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재정적 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더불어 국책사업과 같은 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최근 부상한 미국과의 협력에서 정부의 외교적 역할 역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또한 국내 숙련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의 정책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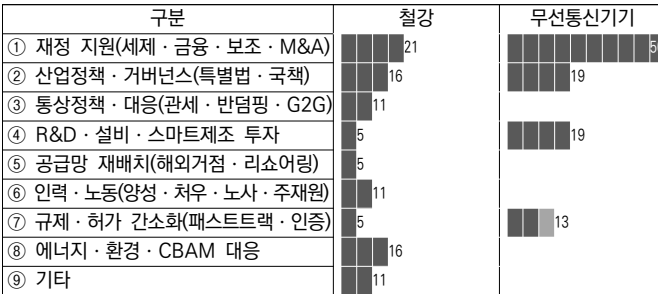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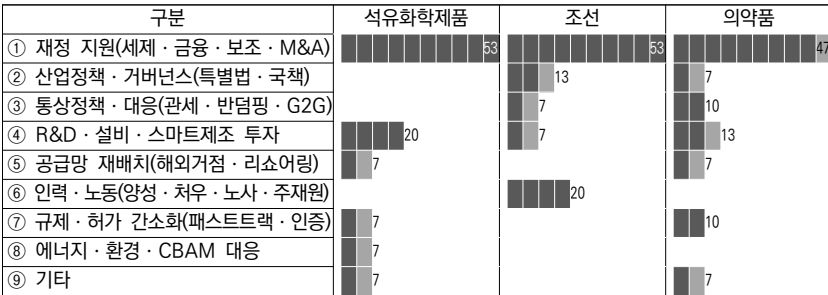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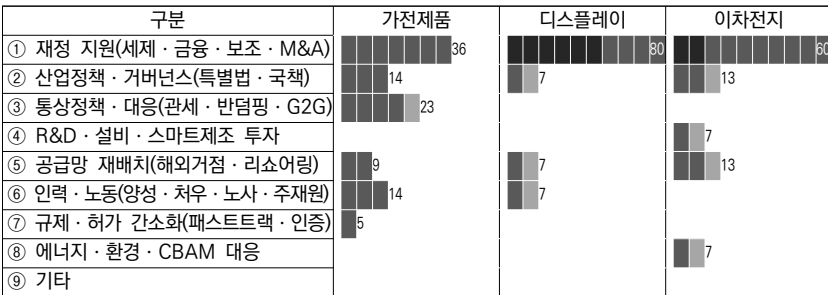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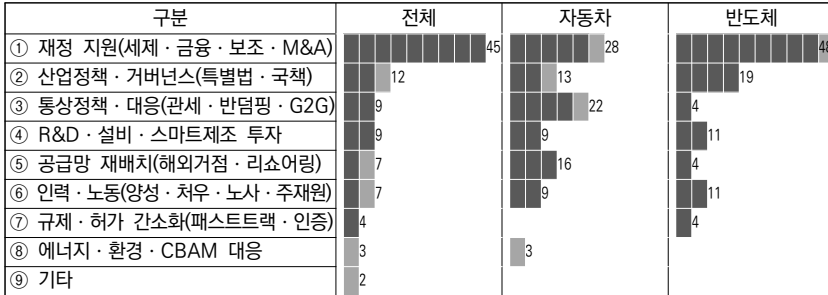
의약품 역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나 이와 더불어 R&D 지원, 인력 양성, 관세 대응, 해외 진출 지원, 비관세 장벽 해결, 국내 규제 완화 등 매우 다양한 정책 지원이 요구되었다.

철강은 재정 지원에 대한 응답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집계되었으며, 매우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 진출 지원, 미국 관세 및 반덤핑 관세 대응, 가격 경쟁력 제고, 국내 시장 활성화, 국내 규제 완화, 인력 양성, 구조 조정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EU CBAM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한 정책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 관련 분야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지원, R&D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3-63.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

(단위: %, ■: 5%(또는 4~6%), ▒: 2~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소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별 위기 및 기회 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핵심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산업 전체를 포괄하면서 동시에 각 산업별 응답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였으며, 문항 역시 해당 산업에 대한 응답을 전제로 하여 각 산업의 특성과 최근 직면한 상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 비용 및 첨단 기술 관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선진 시장(미국) 접근성 역시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상했다. 위기 요인 역시 미국 현지 생산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한국 수출에서의 관세 영향이 지목되었고,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 이익, 생산 네트워크의 다변화 등이 지목되었다. 해외직접투자 우선순위 국가는 미국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인도·브라질·멕시코·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과 함께 유럽의 체코가 중요한 국가로 꼽혔다.

반도체 산업은 최근 AI 기술의 발전이 반영된 만큼 첨단 기술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대만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중국 의존도와 주요 자원 확보 등이 주요한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위기 요인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와 연계된 핵심 품목 수출규제가 부각되며, 기회 요인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와 함께 미국 진출에 따른 산업보조금 및 세제혜택 관련 응답이 많았다.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 역시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며, 중국·인도·브라질·베트남·아르헨티나·일본 등도 중요 국가로 선정되었다.

가전제품 산업은 신흥 시장 확보의 중요성이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며, 생산 비용과 지정학적 위험도 주요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기 요인에서는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는 만큼 미국의 관세가, 기회 요인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와 더불어 신흥 시장 진출이 주요 응답으로 나타난다. 해외직접투자 중요 국가 선정에서는 미국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베트남·브라질·인도 역시 상당히 높고, 비주요국 중에는 페루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 비용과 첨단 기술 관련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위기 요인에서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반영된 보조금이 응답 중 가장 많고, 더불어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수출규제 역시 지적되었다. 기회 요인에서는 주요국의 중국 견제와 더불어 국내 정책 고도화 및 산업 구조 재편 관련 응답이 많다. 해외직접투자 우선순위국 선정에서는 베트남과 미국에 대한 응답률이 동일하게 높았다.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원료·소재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 완화가 가장 주요한 고려 사항이며, 또한 중국과의 가격 경쟁 측면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위기 요인에서는 중국의 보조금과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결합된 위협 인식이 강하며, 기회 요인에서도 중국 견제에 따른 이익과 중국 의존성 완화가 마찬가지로 강조된다. 해외직접투자 우선순위 국가에서는 미국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캐나다 그리고 유럽 시장의 헝가리에 대한 응답이 눈에 띈다.

석유화학제품 산업은 중국이 주요 원재료 수급처이자 판매 시장이라는 점을 반영해 중국 의존도 완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주요 자원 확보와 고부가가치제품 전환을 위한 첨단 기술 관련 응답도 많았다. 위기 요인에서도 중국 의존성에 대한 응답이 거의 절반에 달하며, 기회 요인에서는 국내 산업 재편이나 국내 정책 고도화와 같은 응답이 많아 다른 산업과는 다소 상반된 양상이다. 해외직접투자 중요 국가 선정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높지 않은 유일한 산업이며, 대신 인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베트남·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이 주요 우선순위 국가로 나타났다.

조선 산업은 첨단 기술 확보와 선진 시장 접근성 관련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미국과의 협력 확대 및 시장 공략 기대가 반영되었다. 위기 요인에서는 미국 현지 진출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기회 요인에서는 중국 견제에 따른 이익이 강조되었다. 해외직접투자 우선순위 국가로는 역시 미국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캐나다 그리고 폴란드·태국·필리핀·영국 등 다른 산업에서는 주목받지 않았던 국가들도 많이 선정되었다.

의약품 산업의 경우 선진 시장 접근성, 중국 의존도 완화, 주요 자원 확보, 생산 비용 절감 등 여러 요인이 고려 사항으로 꼽혔다. 위기 요인에서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핵심품목 수출규제, 기회 요인에서는 중국 견제와 더불어 국내의 산업 구조 재편 및 정책 고도화 관련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해외직접투자 중요 국가로는 역시 미국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중요한 국가로 꼽혔다.

철강 산업에 대한 고려 사항은 주요 자원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의 중요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위기 요인에서는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산업으로써 미국의 관세가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나 기회 요인은 여러 요인이 고르게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우선순위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지만,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에 대한 응답도 상당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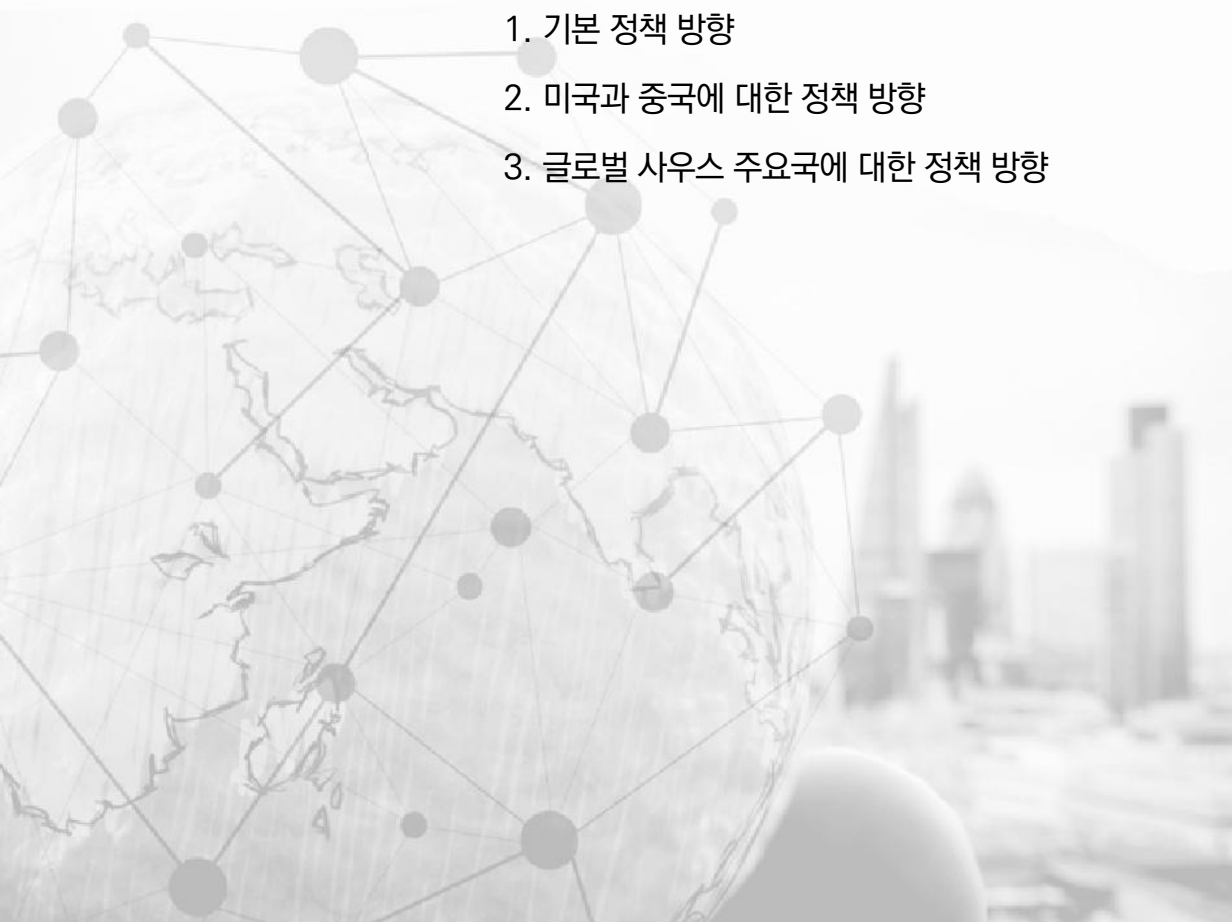
무선통신기기 산업 역시 첨단 기술 확보, 선진 시장 접근성, 신흥 시장 확보, 생산 비용 절감 등 여러 요인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위기 요인에서는 품목별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회 요인에서는 중국 견제에 따른 이익과 산업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중요한 항목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우선순위 국가로는 미국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지만, 다른 산업에 비하면 베트남·인도네시아·브라질·중국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은 편이다.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1. 기본 정책 방향

앞선 분석 결과와 다수의 산업 및 지역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4가지 기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이 기본 정책 방향을 토대로 추후 주요 국가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정책과제와 관련 국내 정책 수립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본 정책 방향 1: 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확대 및 고도화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경쟁력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왔다. 해외직접투자를 활용한 해외 생산 및 판매/제3국 수출거점 마련은 투자 도착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산업의 생산 효율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를 효율화시켰으며 수출 판로를 확대시켰다. 저부가가치 공정의 아웃소싱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생산 단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한 국내 기업의 고용과 매출의 평균적인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즉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부작용보다 해외 생산 파트너 국가와의 효율적인 생산 분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고용과 성과도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순작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국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펼치는 일련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위와 같은 한국의 전통적인 Win-Win 전략에 위협을 가한다.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미국 내 첨단산업 생산시설을 만

들고자 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다.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일부 생산 공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범위의 생산 공정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고부가가치 공정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할 유인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새로운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생산하던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위험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는 최근 큰 폭의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대다수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선 제3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문가/기업인들 대다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49%에 달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로서 미국 본토가 조명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따라서 높아진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 계속 국내에 남아 수출을 위한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고 고부가가치 공정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즉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할 때 감수해야 하는 무역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산업의 핵심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단계를 여전히 국내에 집중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R&D 예산 확대, 그린에너지 인프라 확대, 혁신적인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주요 산업별/핵심 기술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본 정책 방향 2: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신흥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기업들은 선진국에 대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혁신의 채널을 확보해왔다. 예를 들어 김종덕 외(2023)은 200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미국기업을 인수합병한 이력이 있는 거의 전수에 가까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기술 업종의 미국기업을 인수합병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특허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아울러 이 특허 성과의 향상은 수년 후 국내 모기업, 더 나아가 모기업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유의미한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국 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EU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제도(FDI Screening System)」, 중국의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¹⁴⁾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통상정책 관련 현상 변경 요구에 따라 일련의 양자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경쟁국 대비 최소 불리하지 않은 시장 접근 조건을 얻어내는 것 외에도 미국 첨단산업 기업과의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문가 및 기업인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련 제1순위 고려 사항으로 ‘첨단 기술의 개발 및 확보’를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미국을 1순위 해외직

114) 구경현 외(2025).

접투자 확대국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 관련 한미 양국 간 협력 플랫폼의 설치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미중 전략 경쟁 시대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신뢰와 상호호혜적 구조를 탄탄하게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심화, 그리고 중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강화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이 매우 협소해진 것도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또 다른 혁신 통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종덕 외(2025)에 따르면 특히 기술의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중국은 2016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혁신 추격국에서 혁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대 후반부로 올수록 특히 기술 공급망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제약 아래서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모색하고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시기에 우리 정부가 대중국 전략 재정립 시 유념해야 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기본 정책 방향 3: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 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국제통상환경하에서 우리 주요 산업의 기회요인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주요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확보’였다.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무선통신기기와 같은 산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해당 항목을 기회요인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이 주요 전략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경쟁력 높은 제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 실제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국내 제조 생태계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수출 경쟁력을 견인한 주요 원동력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에 다양한 국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상당히 컸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 증거들을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랜 기간 20%에 못 미쳤고 이것이 중소기업 성장 한계를 드러내는 사실로 종종 지적되어오곤 했다. 그러나 간접수출(국내 수출 기업의 수출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납품하는 경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상회하며 증가율 측면에서도 대기업을 앞지르고 있다.¹¹⁵⁾ 비슷한 맥락에서 제2장 1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산업 수출에서 국내 생산 부가가치가 기여하는 비중 또한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전략적/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 향상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넘어 각 주요 산업 제조 생태계 핵심 역량의 보호 및 고도화라는 더 큰 틀의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재무적 관점에서 한계기업 혹은 영세기업이라 할지라도 제조 생태계 핵심 역량의 보존과 발전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뿌리 산업 및 핵심 소부장의 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생산 기술 자동화 및 AI 기술 활용 지원, 국제화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제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주요 산

115) 구경현 외(2023), pp. 17~18.

업의 제조 생태계 구성 및 육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민관 역량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글로벌 사우스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국가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정책 방향 4: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

‘수출 지역 다변화’는 우리나라 수출 관련 정책 목표를 말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더 많은 곳에 우리의 상품을 파는 것은 수익의 관점에서나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목표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의미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핵심적인 선행 조건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한시적으로 수출 지역을 늘리는 정책 수단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고 전략적인 해외직접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유무형의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현재와 같은 국제통상질서하에서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효과적인 시장 확대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장래성 있는 신흥 개도국에 선제적인 해외직접투자로 그들의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돕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동시에 꾀하는 전략적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 관찰되고 있는 미국으로의 투자 쏠림 현상은 미래 유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과소 투자를 우려하게 한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 부분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투자를 확대해야 할 1순위 국가로 무려 49%의 응답자가 미국을 꼽고 있다. 이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 생산 협력 파트너로서, 또 우리 미래의 시장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가 당분간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글로벌 사우스 신흥 대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투자 기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더 균형 잡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을 대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설 채널을 확립하고 그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국가들과의 질적 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 외교 과제 우선순위 상단에 놓아야 하며, 각 지역별 전문 공공/민간 인력의 육성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 진출 기업들의 현지 경영 여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정부가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내 자체적인 제조업 기반 마련 및 기술 습득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ODA 정책 등 기존의 다양한 정책 플랫폼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확장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가. 미국

1) 정상·고위·실무·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앞서 본 연구 정량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미국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법·제도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 가능성은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운영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은 동일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국의 시기별로 상이한 규범과 인센티브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재조정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인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임 이후 감세 법안이 등장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국 정책 상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은 앞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우리 기업은 트럼프 2기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의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지적하였고,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에서 미국 관세 정책을 최대 리스크로 인식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기업의 대미 진출과 생산 전략이 미국의 통상 혹은 산업정책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한 미국 정책 및 제도 이슈의 상

시 관리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즉, 이러한 불확실한 대미 투자 환경 속에서도 대미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동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부 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미국 내에 안정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과 조달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기업이 생산비용 절감과 국내 중간재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한국에게 선순환적 성장의 주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되는 중간재와 부가가치가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통관과 원산지 규정, 표준과 인증, 데이터와 보안, 수출통제 등 한국과 미국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서로 조화되지 못하면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내 기업은 다양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간에는 공급망과 산업, 경제와 에너지, 과학기술과 전략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의 채널이 운영되어왔다.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함께 하는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 Commercial Dialogue),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대표적인 대화 채널이다. 이외에도 한-미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체제 속에서도 공급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 채널은 양국의 공조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해왔으나, 한-미 협의 의제의 이행이 일관되게 관리되며 민간 기업의 의견이 한-미 공급망 협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진행된 주요 원인은 한-미 정상 및 고위급 대화채널의 긴밀성이 부족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가 상위급 의제로 승

화되지 못하며, 상위급 합의가 양자 실무 이행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 고위, 실무,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다층 정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급에서 전략 방향과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고위급에서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며, 실무급에서 규정과 절차의 구체적 해석과 개선안을 마련하고, 민간이 상시적으로 현장의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버넌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 중인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전략 산업에 있어 한-미 간 통관과 원산지 관련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화, 기술 표준과 인증의 상호 협력 확대, 제조 데이터의 안전한 이전과 원격 유지보수 협력, 물류 거점의 병목 완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의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앞 장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으로 ‘재정 지원(세제·금융·보조·M&A)’과 함께, ‘산업정책·거버넌스(특별법·국책)’, ‘통상정책·대응(관세·반덤핑·G2G)’ 등을 필요로 하고 있어, 대미 협상, 조정 기능을 갖춘 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이 기업이 체감하는 핵심 지원 수단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한-미 정부 간 정례 거버넌스는 이러한 산업계 수요를 제도적으로 흡수하여 현장의 애로가 상위급 통상 및 산업정책 협의에 직결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미 생산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개별 이슈에 대한 단편적 대응을 넘어 다층 정례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 고위, 실무, 민간이 상시적으로 연결되면 미국 내 제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관리 가능 범위로 줄어들고, 한국과 미국 간 중간재와 부가가치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다. 정상·고위·실무·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며,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앞 장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제조 국가의 대미 투자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역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 이 같은 최근 한국의 대미 생산 네트워크 확대는 단순한 생산거점 분산을 넘어, 기술·표준·수요가 집중된 미국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는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경쟁력 제고보다 미국의 신기술, 혁신 생태계, 대형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미 간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대미 생산 네트워크 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한-미 혁신 통로 설계’가 필요하다.

앞 장의 설문조사에서 확인되듯이, 국내 핵심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은 ‘인력·노동(양성·처우·노사·주재원)’ 관련 지원 수요를 공통적으로 제기 중이며, 특히 조선과 의약품 산업에서는 숙련 인력 부족과 해외 현장 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양성, 처우 개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는 한-미 공동 교육과정, 현지 인턴십, 기술자 파견·어프런티스십(Apprenticeship)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대형 반도체 투자에서는 공정별 전문 인력의 지역 내 수급 문제로 인해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¹¹⁶⁾ 해당 반도체 기업은

116) Manufacturing Dive(2023. 7. 27.), “TSMC delays Arizona facility opening, citing a lack of specialized labor”(검색일: 2025. 10. 1.).

현장 숙련 인력 충원을 위해 본국 기술자 파견과 ‘수습(어프렌티스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내 바이오 기업과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대미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한-미 간 원활한 인력 이동과 지역 커뮤니티·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협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미 간 인력 이동과 현장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비자 및 체류 자격과 관련된 행정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훈련·자격 인증의 상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소재·설비 등 숙련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기업, 지역 정부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현지 고용시장과 원활히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협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의 대미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미국 혁신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미국에서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 중인 우리 기업이 실리콘밸리 등 주요 테크 허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미 공동의 실무형 인턴십과 산학 공동 프로그램의 정례 운영과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3)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2025년 10월에 완료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품목별 관세 인하와 투자 집행을 결합한 패키지에 합의했다.¹¹⁷⁾ 구체적으로 한국 측의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¹¹⁸⁾며, 해당 투자의 단계적 집행을 위해 국회는 2026년 3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¹¹⁸⁾ 관세와 전략 산업 투자 합의를 결합

117)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2025. 10. 29.)(검색일: 2025. 10. 30)

하는 이러한 방식은 앞서 살펴본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와의 협력이 단순 관세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전략 산업 가치사슬 전반과 연계된 투자 조정까지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상호 합의에 따라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집행이 예상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미 생산 네트워크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한-미 생산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 전략 산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필요한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 등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서 안보적 중요성을 부여해온 분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생산 네트워크 확장은 기술 개발-중간재 생산-시장 납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양국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시장 접근과 리스크 분산을 모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

조선 분야는 이번 패키지의 협력 트랙에 포함되어 한국과 미국 조선 산업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친환경 연료 전환과 항만 에너지 인프라 확충, 고효율 선박 기술 상용화 등에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할 경우, 선박, 기자재, 연료 가치사슬 전반에서 상호 보완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재정 지원 및 정부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 투자 패키지에 정책금융을 포함하고 양국 조선 관련 정부 실무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관련 규제·안전 기준의 정합성 확보와 인증·검사 절차에 대한 한-미 간 선제적 협의는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한-미 간 전략 산업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절한 인프라

118) 한-미 투자 집행에는 연간 상환과 분산 투입 원칙이 적용되어 외환 및 실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으며, 세부 집행 기준과 일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내 한-미 전략 투자 공사에 의해 추후 확정 및 운영될 예정이다.

형성은 필수적이다. 전력, 용수, 송전과 같은 기반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는 미국에 투자 진출하여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 특히 대규모 제조시설의 전력 수요와 공정용수, 변전, 송전망 증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므로, 인프라 구축을 투자 패키지 안에 구조화하여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 전력 설비, 수처리, 송·변전 장비, 배관·밸브, 제어시스템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다양한 기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량을 미국 현지의 인프라 확충 수요와 연계할 경우, 생산 네트워크 구축의 '대미 투자-현지 인프라 구축-한국산 설비·부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은 한-미 간 중장기 생산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이번 한-미 관세·투자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화학,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와 기술 협력을 확장하되 한국의 인프라·설비 공급 역량을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미 투자가 한국 품목 수출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로 환류되는 구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나. 중국

과거 상호 보완적 분업 구조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던 한중 경제협력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중국의 급격한 산업 고도화로 인해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양국 간 산업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 더불어 대중국 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전략적인 산업 협력에 기반한 선별적 투자와 기구축된 현지 생산설비의 효율적 전환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단순한 대

중국 투자 정책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대중국 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중국은 1980년 이후 누적 기준으로 한국의 2대 투자 대상국이다. 과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화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해왔으며, 그 결과 중국 내 생산 능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을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현지 시장을 겨냥한 현지 완결형 생산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 내수시장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구매자들의 니즈와 중국의 규제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내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제3국 시장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기존의 사업 부문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범용 제품 생산 공장을 매각하거나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량을 축소해 제품별 생산 비중을 조정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범용 제품군을 생산하는 대신에 중국 기업이 아직 기술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고부가가치의 정밀 제품군 생산으로 전환하여 중국 시장을 지속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석유화학산업은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면서 친환경 플라스틱, 고기능성 폴리머(High Performance Polymer),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 소재, 산화방지제, 페인트 첨가제, 친환경 타이어 소재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내수시장의 변화 방향에 맞는 사업 부문으로 생산을 조정·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중국 내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활용하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 일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수요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현지 완결형 생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지 시장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는 자동차(완성차 및 부품) 산업 역시 중국 내 설비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과거 내수시장에 대한 공급 위주 사업에서 내수 시장 공급과 해외 수출시장에 대한 공급을 병행하는 생산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중국과 무역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들의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일대일로와 연계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내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¹¹⁹⁾ 중동 이외에 중앙아시아 등으로 지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 아울러 현지 기업과의 R&D 및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과거 내연기관 중심의 시장 진출 전략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확대하고 선진적인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사업 차원에서 생산과 공급의 효율을 제고하고 중국 내 생산설비의 활용도를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서 지정학적 민감도가 낮고 양국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과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후변화 대응(그린 전환)과 신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

1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12. 2.), 「15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의 지역별 발전전략과 한중 협력」 세미나.

소피크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분야와 신에너지 분야에서 관련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의 2030NDC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할 예정이다. 그린 전환 · 친환경 · 신에너지와 같이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정책적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대중국 협력 기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소에너지는 양국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영역 중 하나이다. 최근 한국의 앞선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중국의 상용차 제조 역량 및 중국정부의 지원 정책이 결합된(한국의 기술 + 중국의 시장 및 제조의 결합) 협력 모델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HTWO)을 해외 최초로 건설하고, 중국의 주요 상용차 생산 기업인 카이위(开沃)와 8.5m급 수소연료전지 버스를 공동 개발했으며, 광저우시 수소 버스 구매 입찰에 성공하였다.¹²⁰⁾ 이는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및 핵심부품(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카이위 그룹의 하드웨어(버스)에 탑재해 현지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협력 모델이다. 현재 중국은 수소차 굴기를 통해 세계 최대의 수소차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에서도 수소차 굴기를 위한 정책이나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분야도 기존 자동차 외에 최근에는 열차와 드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지만 앞선 기술력(주입 및 활용 기술)과 중국의 우위(생산, 시장)를 접목시켜 현지 업체와 협력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유망하며, 이러한 협력 모델은 중국의 녹색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도 유망하다.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 분야에서의 협력이 하나의 예시가 된다. 중

120) 「현대차-中 카이위그룹 수소버스, 광저우시 달린다」(2025. 11. 18.)(검색일: 2025. 11. 25.).

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이라는 우위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국제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전기협회(CEC)는 일본의 전기차 급속 충전 표준(CHAdeMO)을 활용해 차세대 DC 급속 충전 표준(ChaoJi)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과의 기술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 표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는 양국 모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2060년 중국의 수소 수요량은 1억 3,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²¹⁾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와 중국표준협회는 2006년 ‘수소에너지 표준화 공동대응 MOU’를 체결하고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연료전지 시스템 등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기술 표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한국 울산시, 중국 장저우시와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HTWO)을 건설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이 연계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소 관련 인프라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한중 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한중 양국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야에서의 협력과 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는 위치(fast-follower)에서 벗어나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중국의 혁신 능력을 흡수하거나, 우리의 우위에 기반해 관련 틈새 시장을 활용해 해당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5. 11. 28.), 「한중 수소에너지산업 협력 전략 연구」.

인공지능 기반 의료(의료 AI) 분야는 첨단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중국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발전시키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존의 의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저효율·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 분야이다. 최근 중국은 고질적인 의료 서비스 공급의 문제를 민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의료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¹²²⁾ 인공지능 기반 의료는 한중 간 보완관계가 비교적 뚜렷한 분야이다.¹²³⁾ 한국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ICT 기술의 결합, 의료영상 기반의 진단 보조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협소한 내수시장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중국은 방대한 인구에 힘입은 압도적인 의료 빅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독자적인 기술력, 빅테크 기업 주도의 시장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별·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표준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양국 간 보완관계를 고려하면, 인공지능 기반 의료 분야는 한국의 고품질 의료 인프라와 ICT 융합 기술, 중국의 대규모 임상환경과 글로벌 인증 노하우를 상호 접목하는 협력의 기회가 존재한다. 따라서 고품질 의료 데이터 연합학습 협력, 기술 라이선싱 및 상호 이전, 의료 데이터 표준화 공동연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논의 등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의료 AI 생태계에 융합할 수 있는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 중국 현지의 지역 거점 병원과 한국의 영상진단 솔루션 기업의 합작법인(JV)을 통한 규제 우회방안(한국의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기술 + 중국의 현지 데이터 수집, 서버 운영, 인허가), △ 하드웨어 결합형 진출(중국의 대형 의료기기 제조사의 장비에 한국의 AI 판독 솔루션 탑재), △ 플랫폼 연계 전략(중국의 빅테크기업이 구축한 헬스케어 플랫폼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의 진단 및 분석 모듈을 공급)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22) CSF(2025), 「중국 'AI+' 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p. 1.

123) 이상훈(2026), 「한중 의료 인공지능(AI) 발전과 협력 방안, 디지털 전환 분야 한중 공동연구」(발간 예정), p. 276.

다. 소결

1) 미국

미국은 기술, 표준, 시장 수요가 결합된 주요 거점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핵심 축이다. 미국 내 생산 확대는 비용 절감보다는 첨단 기술과 혁신 생태계, 대형 내수시장, 글로벌 표준 형성 과정에 직접 접근하려는 선택에 가깝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은 설계, 소재, 장비, 데이터 등 고부가 공정이 모여 있는 허브이고,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는 이러한 상위 가치사슬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주요 채널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정책 및 제도 리스크의 출처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 수출통제, 글로벌 국가를 향한 고관세 정책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미국의 정책은 자국 중심적 성격이 크며 변동성이 높아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트럼프 2기 하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지적되었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 국내 주요 대미 수출 산업에서 미국의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최대 리스크로 인식 중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층 정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불확실성 관리, △미래 신산업 중심의 기술·인재 협력을 통한 혁신 통로 구축, △대규모 대미 금융투자를 활용한 전략 산업·인프라 패키지 협력의 세 가지 대미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최근 미국의 통상, 산업, 안보 정책은 행정부 교체에 따라 빈번히 조정되며, 우리 기업은 시기별로 상이한 규범과 인센티브 체계에 발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면, 정상-장관-실무-민간이 상시적

으로 연결되는 **‘한-미 정례 협의체’**를 구축해 미국 정책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통관, 원산지, 표준, 수출통제 등 핵심 이슈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가 고위급 의제로 직접 연계되고, 상위급 합의가 실무 차원의 규정 및 절차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미국 내 ‘예측 가능하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한국의 대미 생산 네트워크 확대는 단순히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혁신 생태계와 전략적으로 연결’**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공동 교육 과정, 현지 인턴십, 기술자 파견·어프렌티스십 등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비자, 체류 자격, 자격 및 교육 이수 상호 인정 체계 등을 정비하여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실리콘밸리 등 미국 주요 테크 허브와 한국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 산학 협력, 스타트업 연계를 확장하여 대미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곧 한-미 혁신 네트워크 강화로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관세 인하-투자 결합 패키지와 2026년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배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전력, 용수, 송전망, 항만, 물류 등 기반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선박, 연료, 항만 에너지 인프라, 첨단 공정용 설비 조달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은 전력 설비, 수처리, 송전, 배관, 밸브, 제어시스템 등 인프라 관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미 투자-미국 내 인프라 구축-한국산 설비 및 부품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중국

과거 상호 보완적 분업 구조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듭했던 한중 경제협력

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중국의 급격한 산업 고도화로 인해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양국 간 산업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재편과 대중국 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상황에서는 중국에 대한 막연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전략적인 산업 협력에 기반한 선별적 투자와 기 구축된 현지 생산설비의 효율적 전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국 투자 정책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대중국 경제협력에 초점을 두고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 국제분업의 심화라는 흐름 속에서 대중국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며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왔다. 그 결과 한국기업은 중국 내에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중국 현지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을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한 현지 시장을 겨냥한 현지 완결형 생산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 내 수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구매자들의 니즈와 중국의 규제에 맞는 제품을 현지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지 내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제3국 시장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이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로서 지정학적 민감도가 낮고 양국의 정책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그린 전환)

과 신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이 대표적이다. 그린 전환 · 친환경 · 신에너지와 같이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대중국 협력 기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 생태계 연계에 기반한 대중 협력 공간의 확대이다. 중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과 자립자강을 통해 공급망과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빠르게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 경쟁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은 리스크가 크지만, 한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에 진입하여 거대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가. 개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중요성

최근 국제통상 질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및 주요 선진국들이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글로벌 사우스는 중요 협력 대상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협력을 유지하려 하는 미국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EU, 한국, 일본 등도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전략을 수립 · 실행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세계화의 새로운 전환기(a new era of globalization)’¹²⁴⁾에 통상 측면에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를 맞아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생산기지이자 핵심광물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 교역 파트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지정학·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나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고 있다. 요컨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비교적 낮은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이미 구축된 생산기지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주요 소비시장 근처에 위치한 지리적 요인과 전략적 핵심광물 보유라는 요건을 갖추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거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국가들은 대체로 젊고 풍부한 인구 구조와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아래 선진국 이외에 새로운 소비시장을 찾아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주목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외에 국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의 글로벌 질서가 다극 체제로 재편될 것인지,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양극 체제로 재편될 것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미국과 중국 외에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와 제도적 플랫폼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관찰된다. 예컨대 2024년과 2025년에 걸친 브릭스(BRICS)의 외연적 확장,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아세안-GCC 협력 강화, 아세안-아프리카 협력 확대¹²⁵⁾ 등을 통해 글로벌

124) World Economic Forum(2023. 1. 20.), “Green Energy and Global Integration Will Sustain Positive Economic Outlook”(검색일: 2025. 4. 8.).

125) ISEAS, “2025/8 “Catalysing ASEAN-Africa Relations and South-South Cooperation” by

별 사우스는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모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 개입이 없는 이러한 협력 플랫폼이 정착할 경우 글로벌 사우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대안적 협력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방안 마련은 장기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절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제3장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중 생산 비용 절감,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확보,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 접근성 강화 등이 상위 항목에 포함되었다. 특히 트럼프 이전과 달리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신흥시장 확보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현재 국제 통상 환경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술한 글로벌 사우스 5개국은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주요 제조업에서 해외 직접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국가로 선택되었다. 예컨대 자동차,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국가로 상위 5개국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 이외에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이 해외직접투자 확대 시 고려되어야 할 국가로 지목되었다.

이하에서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각 국가에 대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에 있어서 중요성, 산업 생태계, 정책과제 및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Christophe Dorigné-Thomson and Joanne Lin”(검색일: 2025. 4. 8.).

나. 인도

1) 배경 및 중요성

인도의 GDP는 2019년 프랑스, 2021년 영국을 추월하며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2023년 기준 인도의 GDP는 3조 5,700억 달러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5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성장률이 4.75%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의 경제성장은 단연 돋보인다.¹²⁶⁾

이러한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배경으로는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 시장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인도를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2023년 기준 인도의 총인구는 14억 3,800만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¹²⁷⁾ 2022년 인구 감소세에 들어선 중국과 달리 인도는 총인구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⁸⁾¹²⁹⁾ 뿐만 아니라 2023년 기준 인도의 중위 연령은 28.1세로 아시아의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젊은 노동력 및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¹³⁰⁾ 이와 같은 인구 구조는 인도에 인구 보너스기(demographic dividend)를 제공해 향후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¹³¹⁾

인도경제의 고성장세와 함께 향후 인도의 소비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도 소비시장 규모는 2027년에 한국 소비시장 규모의 약 세 배,¹³²⁾ 2050년에 전 세계 소비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¹³³⁾ 특히

126) World Bank, WDI(검색일: 2025. 4. 9.) 바탕으로 저자 계산.

127)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검색일: 2025. 4. 1.).

128)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검색일: 2025. 4. 7.).

129) ILOSTAT data explorer, "India-Annual"(검색일: 2025. 4. 8.).

130) 중국(39.1세)은 물론, 베트남(32.4세), 인도네시아(29.8세), 말레이시아(30.1세), 태국(39.7세)보다 낮은 수준이다.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검색일: 2025. 4. 7.).

131)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검색일: 2025. 4. 21.).

132) 가계지출(household spending) 기준. 국가별 BMI Consumer & Retail Report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BMI(Q1 2025), "South Korea Consumer & Retail Report," p. 12; BMI(Q1 2025), "India

인도의 소비시장은 젊은 인구, 중산층 비중 확대, 소비시장 접근성 향상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도는 2030년경 30세 이하의 소비층이 3억 5,7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젊은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¹³⁴⁾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중산층의 비중 또한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¹³⁵⁾ 여기에 더하여 도시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 접근성 향상 또한 인도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한다.

한편 대외적인 측면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이라는 흐름 속에서 생산기지의 대안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서 인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와 현지 생산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인센티브 및 각종 인프라 지원이 맞물리면서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물류 및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인도의 강화된 외교적·전략적 지위 또한 인도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외교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전략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G20, BRICS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국제 거버넌스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Counsumer & Retail Report,” p. 12.

133) McKinsey Global Institute(2025), “Dependency and depopulation?: Confronting the consequences of a new demographic reality,” p. 20.

134) “China and India: The future of the global consumer market”(2023. 4. 14.)(검색일: 2025. 7. 5.).

135) PRICE, “The Rise of India’s Middle Class, Executive Summary,” p. 7(검색일: 2025. 7. 10.).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¹³⁶⁾에도 적극 참여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외교와 유연한 외교를 추구하며 자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전략적 지위 강화는 글로벌 기업과 주요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투자·무역 개방도를 높여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 인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풍부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대규모 소비시장, 비즈니스 환경의 급속한 개선, 외교적 위상 강화 등은 생산 및 수출기지이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인도의 매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핵심축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인도 시장은 한국기업에도 소비재와 첨단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인도가 중점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반도체, 전자기기,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도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기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략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외교적 위상이 높아진 인도와의 전략·외교·안보 연대 강화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 네트워크 확장성을 높이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¹³⁷⁾

136)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2022년 공식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미·중 전략경쟁,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관세 제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력을 목적으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IB(2023. 11. 17.),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IPEF) Supply Chain Agreement signed by the 14 IPEF Partners”(검색일: 2025. 7. 16.).

137) 김정곤 외(2023),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p. 165.

2) 산업, 무역, 투자 구조 변화 및 특성

가) 산업

인도의 산업 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과 비교해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주도 경제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표 4-1]에 따르면 제조업 비중은 2016년 16.8%에서 2023년 14.3%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26.2%)이나 베트남(23.9%) 제조업 비중의 절반 수준으로,¹³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정부의 계획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표 4-2]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별 고용 비중은 농업이 4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도시 일자리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기된 일자리 부족에 따른 농업으로의 고용 역이동 현상은 농업의 고용 비중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제조업 고용 비중은 12.0%에 머무르고 있다.

표 4-1. 인도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임업·수산업	18.0	18.2	17.7	18.0	20.6	18.9	18.1	17.9
광업·채굴	2.2	2.3	2.2	2.0	1.8	2.0	2.1	2.0
제조업	16.8	16.4	16.5	15.2	14.9	15.9	14.5	14.3
전기·가스·수도	2.6	2.7	2.7	2.7	2.8	2.7	2.5	2.7
건설업	7.8	7.6	7.8	7.6	7.0	8.4	8.8	8.8
무역, 호텔, 운송, 통신·방송	18.1	18.5	18.6	18.8	16.1	16.7	17.9	17.6
금융, 부동산, 전문 서비스	21.1	20.4	20.5	21.1	22.1	21.6	22.5	22.8
공공행정, 국방, 기타 서비스	13.4	13.8	13.9	14.6	14.7	13.9	13.7	13.9

자료: CEIC(검색일: 2025. 7. 15.).

138) World Bank, WDI(검색일: 2025. 4. 9.) 기준으로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12.9%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2023년 기준 인도의 노동참여율은 57.9%로 중국(75.0%)이나 세계 평균(6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¹³⁹⁾ 낮은 노동참여율은 일자리 부족, 낮은 교육 수준, 직업훈련 시스템 부재 등과 맞물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88.8%가 비공식 부문에 속해¹⁴⁰⁾ 사회보장이나 법적 보호 없이 저숙련 및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동 생산성을 정체시키고 산업 고도화 및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중요한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힘입어

표 4-2. 인도의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임업·수산업	43.2	42.3	41.3	40.7	44.7	44.1	42.9	43.5
광업·채굴	0.5	0.4	0.4	0.3	0.3	0.3	0.3	0.3
제조업	12.7	12.6	12.5	12.3	11.3	11.5	11.7	12.0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	0.6	0.6	0.6	0.6	0.7	0.6	0.6	0.6
건설업	11.4	11.6	11.8	12.0	11.4	12.0	13.5	12.1
도·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판매	10.5	10.7	10.9	11.6	11.1	10.9	11.0	11.0
운송·보관, 통신업	5.8	6.0	6.1	6.3	5.5	6.0	6.0	5.9
숙박·음식점업	1.8	1.9	1.9	1.9	1.7	1.8	1.8	2.0
금융·보험업	1.1	1.2	1.2	1.2	1.1	1.1	1.0	1.1
부동산, 사업·행정서비스	2.0	2.2	2.3	2.2	2.0	2.0	1.9	1.9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1.8	1.8	1.8	1.6	1.8	1.6	1.6	1.5
교육	3.8	3.9	4.1	4.0	3.4	3.2	3.1	3.3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2	1.2	1.3	1.4	1.5	1.5	1.4	1.3
기타	3.6	3.6	3.7	3.9	3.4	3.3	3.3	3.3

자료: Labour Force Survey(검색일: 2025. 4. 1.).

139) ILO stat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참여율은 75.0%, 세계 평균은 67.1%로 나타남. ILO Modeled Estimates(검색일: 2025. 4. 1.).

140) ILO stat(검색일: 2025. 4. 9.).

자동차, 전자, 의약품 등 제조업 고용 증가하고 있다. 2025년 5월 제조 기업들의 투자 확대, 내수 및 수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용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반도체, 엔지니어링, ICT 등 일부 첨단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고속련 인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IIT(인도공과대학), NIT(국립공과대학) 등에서 매년 250만 명 이상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¹⁴²⁾ 미국의 고학력·고속련 외국인 취업비자 H-1B의 70% 이상을 인도인이 차지할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높다. 이처럼 질적 수준이 높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및 진출 결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정 첨단산업에서의 고학력·고속련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인도는 자동차, 전자제품, 제약, 철강, IT 등 핵심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의 잠재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힘입어 자동차와 전자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2047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전력, 도시 인프라를 중심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성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인프라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순위가 상승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인프라 경쟁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접근성, 에너지 인프라, 물류 인프라, 도시 내 기업환경 등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141) “India’s Manufacturing PMI Moderates to 57.6 in May but Remains on Growth Path” (2025. 6. 2.)(검색일: 2025. 6. 10.).

142) Patil(2024. 6. 16.), “The Semiconductor Talent Demand in India”(검색일: 2025. 6. 10.).

표 4-3. 인도의 기본 인프라 국제경쟁력 순위: 인도 vs. 한국

구분	인도		한국	
	2024	2019	2024	2019
수자원 접근성과 관리 정도	58	58	5	22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 운영	50	51	4	17
도로 네트워크(km/km ²)	10 ⁸⁾	16 ⁷⁾	28 ³⁾	26 ⁵⁾
철도 네트워크(km/km ²)	31 ⁴⁾	34 ⁶⁾	18 ⁴⁾	23 ⁶⁾
주요 항공사 탑승객 수	3 ²⁾	5 ⁶⁾	10 ²⁾	14 ⁶⁾
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항공 수송의 질	41	48	4	11
상품과 서비스 유통 인프라 효율성	46	49	3	16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39	52	12	27
국내생산 총에너지 ¹⁾	3 ³⁾	5 ⁵⁾	27 ³⁾	26 ⁵⁾
총에너지 필요량 중 국내생산 비중 ¹⁾	31 ³⁾	31 ⁵⁾	59 ³⁾	56 ⁵⁾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64 ³⁾	61 ⁵⁾	59 ³⁾	55 ⁵⁾
1인당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4 ³⁾	2 ⁵⁾	55 ³⁾	53 ⁵⁾
공업용 전력 비용(\$/kwh)	-	-	15 ⁴⁾	10

주: 1) 생산량이 높을수록, 국내 생산 비중이 클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2) 소비량이 낮을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3) 2021년 기준. 4) 2022년 기준. 5) 2016년 기준. 6) 2017년 기준. 7) 2015년 기준. 8) 각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2024년의 경우 전 세계 67개국 대상, 2019년 또는 이전 연도는 전 세계 63개국 대상 등수임.
 자료: IMD(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 pp. 481-489; IMD(2019),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 pp. 448-457을 토대로 작성.

인도정부는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된 도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주요 거점 간 연결성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설비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에 대한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나) 무역

인도는 독립 이후 높은 관세율, 수입대체 산업 육성, 현지 생산 유도 등 보호 무역 기조를 지속해오며 따라 현재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인도의 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세계 무역에서 인도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6~23년 사이 인도의 무역은 코로나 19 팬데믹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등락을 반복했으나, 전체적인 추이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4-4]의 수출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석유제품, 휴대전화(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의 수출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의류나 식물, 귀금속 및 보석류(기타 제조품) 등 전통 제조업 부문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였다. 또한 의약품과 자동차는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절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위 수입 품목에서는 전기기기 및 부품,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금속 광물 제품은 수입 비중과 절대 금액 모두 감

표 4-4. 인도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비철금속	10.7	석유 및 관련 제품	13.5	석유 및 관련 제품	20.2
2	석유 및 관련 제품	10.5	비철금속	8.4	비철금속	6.1
3	의류 및 액세서리	6.9	기타 제조품	5.7	의약 및 약학 제품	5.4
4	기타 제조품	6.5	의약 및 약학 제품	5.5	도로용 차량 (자동차 포함)	4.6
5	방적사, 식물 및 관련 제품	6.2	방적사, 식물 및 관련 제품	5.3	기타 제조품	4.4
6	의약 및 약학 제품	5.5	의류 및 액세서리	5.3	유기화학제품	4.2
7	도로용 차량 (자동차 포함)	5.4	유기화학제품	5.2	방적사, 식물 및 관련 제품	4.2
8	유기화학제품	3.9	도로용 차량 (자동차 포함)	5.2	통신기기·음향 재생 장비	3.8
9	철강	3.2	철강	3.7	의류 및 액세서리	3.6
10	기타 금속 제품	2.5	동력 기계 및 장비	2.7	철강	3.5
	계	61.4	계	60.5	계	59.9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소하는 추세이다.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장비의 수입 비중은 감소했으나 절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인도의 교역은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류와 식물 등 전통 제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5. 인도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석유 및 관련 제품	18.6	석유 및 관련 제품	23.3	석유 및 관련 제품	23.7
2	비금속 광물 제품	7.0	비통화용 금 (금광석 제외)	6.5	전기기기 및 부품	7.3
3	비통화용 금 (금광석 제외)	6.4	전기기기 및 부품	5.9	비통화용 금 (금광석 제외)	6.4
4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5.4	비금속 광물 제품	5.5	석탄, 코크스 및 브리켓	5.8
5	전기기기 및 부품	4.2	석탄, 코크스 및 브리켓	4.9	유기화학제품	3.9
6	유기화학제품	3.9	통신기기·음향 재생 장비	4.3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3.7
7	석탄, 코크스 및 브리켓	3.8	유기화학제품	4.1	통신기기·음향 재생 장비	3.5
8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3.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3.6	비금속 광물 제품	3.3
9	특수 거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3.0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3.0	금속광석 및 고철	2.9
10	식물성 유지 (원유·정제유 포함)	2.9	비철금속	2.4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2.9
	계	58.7	계	63.6	계	63.3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표 4-6]에 따르면 인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UAE, 네덜란드 등으로 2016~23년 동안 미국과 유럽(네덜란드)으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UAE로의 수출은 비중과 절대 금액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국 수출 증가는 석유제품, 휴대전화, 전기기기 및 부품, 산업 기계류 및 부품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며, 대UAE 수출 감소는 귀금속 및 보석류, 비통화용 금, 의류 부문에서의 큰 폭의 감소세가 견인하였다. 한편 2016~23년 사이 대네덜란드 수출 급증은 대부분 석유제품의 수출 금액이 열 배 이상 증가한 데 기인하였으며,¹⁴³⁾ 동 기간 휴대전화, 전자 기기 및 부품, 유기화학제품의 수출 또한 상당히 확대되었다.

2016~23년 기간 수입에서는 중국, 러시아, UAE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상위 3개 수입국의 비중이 2016년 37.4%에서 2023년 45.7%로 크게 확대되었다. 동 기간 대중국 전기기기 및 부품 수입이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외에도 휴대전화 및 통신기

표 4-6. 인도의 상위 수출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16.1	미국	16.8	미국	17.6
2	UAE	11.5	UAE	9.1	UAE	7.7
3	홍콩	5.1	중국	5.3	네덜란드	5.4
4	중국	3.4	홍콩	3.6	중국	3.8
5	영국	3.3	싱가포르	3.3	영국	2.9
	계	39.5	계	38.2	계	37.2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143) 네덜란드는 유럽의 에너지 허브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제한에 따른 대체재로 인도의 정제된 석유제품을 대량 수입했다. Inventiva(2023. 1. 30.), “India’s exports to the Netherlands are growing rapidly as petrol product shipments rise in 2023”(검색일: 2025. 7. 14.).

표 4-7. 인도의 상위 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17.0	중국	14.3	중국	18.4
2	미국	5.7	미국	7.3	러시아	10.1
3	UAE	5.4	UAE	6.3	미국	6.3
4	사우디아라비아	5.2	사우디아라비아	5.6	UAE	5.7
5	스위스	4.2	이라크	4.6	사우디아라비아	5.2
	계	37.4	계	38.2	계	45.7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기, 유기화학제품, 사무기기 및 컴퓨터, 산업 기계류 및 부품 등에서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표 4-8]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류 부문 평가 순위를 제시한다. 화물 흐름 최적화와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주요 거점 간의 연결성 강화를 목적으로 철도 부문에서는 지난 10년간 전철화 및 복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운송 능력과 물류 효율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동·서부 전용화물회랑(DFCs: Dedicated Freight Corridors)의 개통으로 여객열차의 간섭 없이 화물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열차의 속도와 정시성이 크게 향상되었다.¹⁴⁴⁾

항공과 항만 부문 또한 주요 제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SEZ) 등과 연결되는 복합물류 인프라 강화, 철도·도로와의 연계,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항만 부문에서는 현대화, 내륙 연결성 강화, 연안운송 및 내륙수로 활성화 전략에 따라 지난 10년간 주요 항만의 화물 처리 능력이 47% 증가했다.¹⁴⁵⁾ 항공 부문에서는 신공항 건설, 공항 현대화 및 자동화에 힘입어, 공항 수가 2014년 74개에서 2024년 159개

144)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2024-25," p. 167.

145) "India's major ports set record in FY 2024-25, cementing a decade of maritime growth" (2025. 5. 13.)(검색일: 2025. 6. 26.).

표 4-8. 인도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구분	인도			한국		
	2023	2018	2016	2023	2018	2016
LPI 종합 순위	38	44	35	17	25	24
통관	47	40	38	7	25	26
인프라	47	52	36	9	22	20
국제선적	22	44	39	26	33	27
물류 경쟁력	38	42	32	20	28	25
화물 추적	35	38	33	25	22	24
정시성	41	52	42	23	25	23

주: 2016, 2018년 수치는 160개 국가 중 순위, 2023년 수치는 139개 국가 중 순위.

자료: World Bank(2023, 2018, 2016),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¹⁴⁶⁾ 항공화물 처리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인프라 개선 결과는 ‘국제 선적’ 부문에서 2016년 39위에서 2023년 22위로, ‘정시성’ 부문에서 2018년 52위에서 2023년 41위로 순위가 상승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 인프라, 물류 경쟁력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인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관세율 변경이 이루어지며, 품목, 사용자,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적용되어 매우 복잡하고 행정 재량에 취약하다.¹⁴⁷⁾ 또한 통관 절차나 서류 요구사항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상이해 통관 처리 지연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다) 투자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모디 정부의 투자 규제 완화와 기업투자 환경 개선,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에 기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146) PIB(2025. 4. 22.), "India's Aviation Revolution"(검색일: 2025. 6. 26.).

147) USTR(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p. 198.

표 4-9.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단위: 억 달러, %)

순위	2015/16~2019/20			2020/21~2024/25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네덜란드	462	8.2	미국	984	14.8
2	미국	385	6.8	네덜란드	512	7.7
3	일본	380	6.7	UAE	439	6.6
4	영국	155	2.8	일본	280	4.2
5	독일	130	2.3	영국	194	2.9
6	프랑스	79	1.4	프랑스	90	1.3
7	UAE	79	1.4	사우디아라비아	74	1.1
8	홍콩	75	1.3	독일	71	1.1
9	한국	74	1.3	캐나다	65	1.0
10	캐나다	46	0.8	벨기에	63	1.0
	계	1,865	33.2	계	2,770	41.6

주: 지분 투자(equity capital) 기준. 싱가포르, 모리셔스, 스위스, 케이만제도, 사이프러스는 조세회피처로 순위에서 제외.
네덜란드는 조세우회처로 자주 이용됨.
자료: CEIC(검색일: 2025. 7. 30.).

인해 2020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64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7위를 기록했다.¹⁴⁸⁾ 지난 10년간 국가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2015/16~2019/20년에서 2020/21~2024/25년 사이 일본과 독일의 대 인도 투자는 감소한 반면, 미국은 6.8%에서 14.8%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디지털 부문(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컨설팅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데 기인하며,¹⁴⁹⁾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의 부문에서 투자 의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⁵⁰⁾

[표 4-10]의 산업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세를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

14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검색일: 2025. 6. 12.).

149) 정영식 총괄책임(2024. 11. 14.), 「2025년 세계경제 전망」, p. 80.

150) 인도 재무부가 발표한 Economic Survey에서 필수 라이선스나 토지 확보, 자금 조달 등이 완료되기 전의 프로젝트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투자 의향(investment intentions)'을 해석했다. 위의 자료, p. 80.

표 4-10.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분야	2016		2019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서비스(금융·보험·R&D)	10,184	21.9	9,092	19.1	7,335	17.7
2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2,412	5.2	7,768	16.3	4,743	11.5
3	건설·인프라 활동	2,258	4.9	1,784	3.7	4,323	10.5
4	무역	3,129	6.7	4,947	10.4	3,308	8.0
5	신재생에너지	870	1.9	1,499	3.1	2,982	7.2
6	전력	1,180	2.5	435	0.9	1,590	3.8
7	자동차 산업	2,200	4.7	3,047	6.4	1,540	3.7
8	병원·진단센터	826	1.8	630	1.3	1,323	3.2
9	해상 운송	688	1.5	294	0.6	1,184	2.9
10	의약품·제약	1,090	2.3	462	1.0	1,154	2.8
11	화학(비료 제외)	1,056	2.3	1,024	2.1	1,105	2.7
12	전기장비	2,228	4.8	665	1.4	934	2.3
13	정보·방송	1,709	3.7	1,209	2.5	878	2.1
14	전자	88	0.2	320	0.7	824	2.0
15	컨설팅 서비스	74	0.2	808	1.7	732	1.8
-	소계	29,991	64.6	33,984	71.3	33,955	82.2

주: 지분 투자(equity capital)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5. 9. 12.).

(금융, 보험, R&D 등)에 이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건설 인프라, 무역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또한 인도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부문에도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23년 약 30억 달러, 2024년에는 약 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2016~19년 사이 주요 통신사들의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가 집중되었던 통신 부문은 그 이후 최근까지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¹⁵¹⁾

151) CEIC(검색일: 2025. 9. 12.).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도로 투자·진출하는 가운데, 애플(Apple)의 행보는 단순한 생산지 다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전환을 시사한다. 애플은 2017년 대만의 위탁생산 업체 위스트론(Wistron)을 통해 인도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했다. 진출 초기에는 주로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구형 모델(legacy handset)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아이폰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인도는 세계 3대 아이폰 제조 허브로 부상했다. 2023년 기준 인도 내 애플 협력 생산업체는 총 14곳으로, 이 중 11개가 인도 남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¹⁵²⁾ 특히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형성된 생산 클러스터는 인도 내 아이폰 생산량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¹⁵³⁾ 2024년부터는 프리미엄 모델의 생산에 착수하면서 인도 내 애플의 제조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이폰 및 맥북의 애프터서비스(A/S)를 타타그룹에 전면 위임하면서 공급망 현지화 전략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¹⁵⁴⁾ 2024~25년 애플은 인도에서 전년 대비 60% 확대된 약 220억 달러 규모의 아이폰 제품을 생산했으며, 이 중 174억 달러를 수출했다.¹⁵⁵⁾ 이는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¹⁵⁶⁾ 애플은 2025년 글로벌 생산량의 25%를 인도에서 충당하고 202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연간 6천만 대의 아이폰을 전량 인도에서 조달할 계획으로,¹⁵⁷⁾ 생산거점의 탈중국화 및 인도 중심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52) Apple, "Supplier List"(검색일: 2025. 4. 14.).

153) Kotra 해외시장뉴스(2024. 10. 23.), 「글로벌 기업, 인도에서 제조업·산업업 투자 확대 지속」(검색일: 2025. 4. 14.).

154) "Apple's Contract Manufacturers and Component Suppliers in India"(2025. 6. 5.)(검색일: 2025. 6. 20.).

155) "Apple, Foxconn Boost iPhone Output in India as US Tariffs Reshape Supply Chains"(2025. 4. 7.)(검색일: 2025. 4. 14.).

156) "Apple India Produces \$22 Billion of iPhones in Shift From China"(2025. 4. 13.)(검색일: 2025. 4. 14.).

157) 「[초점] 트럼프 경고에도 애플, 인도에 15억달러 투자 강행... "아이폰 전량 인도 생산 목표"」(2025. 5. 27.)(검색일: 2025. 6. 20.).

설계 중심에서 제조로 가치사슬을 확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미국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의 투자로, 인도 최초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 유치 사례이자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첫 프로젝트이다. 마이크론은 구자라트주 사난드(Sanand)에 2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 시설을 2단계에 걸쳐 조성하고 있으며, 2025년 내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⁵⁸⁾ 마이크론의 프로젝트는 인도 반도체 미션(ISM: Indian Semiconductor Mission)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첫 사례로,¹⁵⁹⁾ 후공정 중심이지만 인도 반도체 산업에서 공급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촉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¹⁶⁰⁾

한국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인도 진출 사례로 손꼽힌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두 개의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나 EV의 조립·생산을 시작하면서 인도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2023년에는 제너럴모터스(GM)의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공장을 인수했으며,¹⁶¹⁾ 2024년 10월에는 인도 증권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단행해 확보한 자금을 신규 생산시설 확충 및 차세대 전기차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158) Invest in India - Guide(2025. 4. 11.), "Micron Technology's \$2.75 billion ATMP plant in India" (검색일: 2025. 4. 15.).

159)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인도 연방정부(50%)와 구자라트 주정부(20%)가 보조하는 형태로, 마이크론의 투자액은 8억 2,500만 달러이다.

160) 여기에 마이크론을 핵심 고객사로 둔 한국의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 전문 기업 심텍(Simmtech)이 사난드에 30에이커 규모 부지를 확보해 공장 설립에 착공했으며, 인도 내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단독] 반도체 기업 심텍, 인도에 2000억원 투자 마이크론 지원사격」(2024. 1. 12.); 「반도체 기업 심텍, 인도 구자라트 투자 '초읽기'..신임 CEO 첫 행보」(2024. 1. 11.)(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6. 13.).

161) 2025년 하반기 본격 생산 가동 예정이다. 「현대차, 인도 푸네 공장에서 '2세대 베뉴' 양산...110만대 체제 가속」(2024. 12. 23.)(검색일: 2025. 4. 16.).

3) 주요 산업 · 통상 정책 변화 및 특성

인도는 제조업 육성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모디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이 정책은 당시 제조업 GDP 비중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생산 확대와 내수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조 기반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에는 인도를 핵심 생산기지이자 수출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략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통합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20년 발표된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또는 Self-Reliant India)’ 정책은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이크 인 인디아가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생산 유치에 방점을 둔다면, 자립 인도는 이를 토대로 국내 부품 및 소재 조달,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전략 산업의 국산화, 내재화,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인도정부는 2025년 메이크 인 인디아의 연장선에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 정책인 ‘국가 제조업 미션(National Manufacturing Mission)’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제고, 첨단 및 청정(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 기술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¹⁶²⁾

외국인직접투자 한도 향상 및 자동 승인 제도 확대, 법인세 인하 등 간접 지원 위주로 추진되었던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전략은 2020년 이후 산업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메이크 인 인디아와 자립 인도

162) IMPRI(2025. 3. 30.), “The Manufacturing Mission (2025-26): Furthering ‘Make in India’” (검색일: 2025. 7. 28.).

정책의 교차점에서 2020년 발표된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는 생산 실적(매출)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자립을 장려하고 있다.¹⁶³⁾

PLI는 2020/21 회계연도에 전자제품, 의약품,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23년 회계연도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백색가전, 특수강, ACC 배터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총 14개 핵심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¹⁶⁴⁾ 2025/26 회계연도에는 전자 및 IT 하드웨어 부문에 900억 루피가 배정되었으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약, 섬유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생산기지 설립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산업에서 인도를 생산거점화하려는 인도 정

표 4-11. 인도의 PLI 예산 배정액

(단위: 천만 루피, %)

산업	2023/24 지출	2024/25 지출(추정)	2025/26 예산	
			금액	증감률 (전년대비)
전자·IT 하드웨어	4284.40	5,777.00	9,000.00	5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63	346.87	2,818.85	712.5
의약품	1604.42	2,150.50	2,444.93	13.7
섬유	4.13	45.00	1,148.00	2,451.1
백색가전(에어컨, LED)	74.20	213.57	444.54	108.1
특수철강	2.35	55.00	305.00	454.6
고급전자(ACC 배터리·저장장치)	7.73	15.42	155.76	910.2

자료: PIB(2025. 3. 3.), “Government Scales Up PLI Budget to Accelerate Manufacturing”;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xpenditure Profile 2025–2026(Feb 2025)”(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6. 16.)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63) 이는 기준 연도(base year) 대비 국내 매출 증가분에 대해 평균 5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산업별로 보조금 예산 규모, 집행 기간, 지급 조건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훈(2024),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참고.

164) △모바일 제조 및 지정 전자부품, △핵심시작물질(KSM)·의약 중간체·주요 활성약물(API), △의료 기기 제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의약품, △특수강,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전자기기, △백색가전, △식품 가공, △섬유제품, △고효율 태양광 모듈, △고급화학 전지(ACC 배터리), △드론 및 드론 부품.

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LI와 별도로 대규모 산업 보조금 정책인 ‘Semicon India’는 2021년 출범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과 진입장벽이 높은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방정부는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는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체 생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인도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와 물류를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인프라 지출 규모는 2016/17 회계연도와 2024/25 회계연도 사이 10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며,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3.4%로 대폭 증가했다.¹⁶⁵⁾ 인도정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인프라계획(NIP: 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을 추진 중이며,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 인프라 통합 전략과 물류 효율화 전략 등 다양한 후속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인프라 전략을 전개 중이다.¹⁶⁶⁾ 2021년 출범한 통합 인프라 개발 마스터플랜 ‘가티 상티(PM Gati Shakti National Master Plan)’를 통해 기획, 집행, 관리 전 과정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처 및 기관별로 분절된 인프라 개발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한다.

가티 상티와 함께 인도의 공급망 및 물류 인프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정책인 ‘국가물류정책(NLP: National Logistics Policy)’은 2022년 출범했으며 물류비 절감, 통관 절차 간소화, 디지털 물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밖

165) India.gov.in; CRISIL “India Infrastructure Coming of Ag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6. 25.).

166) 2019년 출범한 111조 루피(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2025년 종료되었다. 도로, 철도, 도시 인프라, 전력 등 4대 부문이 투자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NIP, “Report of the Task For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검색일: 2025. 6. 17.).

에도 해운, 항만, 해상물류 부문의 ‘사가르말라(Sagarmala)’, 도로 부문의 ‘바랏말라(Bharatmala Pariyojana)’, 광대역 통신망 부문의 ‘바랏넷(BharatNet)’ 등 다양한 분야별 인프라 개발 정책들이 가티 삭티의 통합적 체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더해 브라운필드 인프라 자산¹⁶⁷⁾을 민간에 임대 및 운영하게 하고 그 수익을 신규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는 ‘국가자산활용계획(NMP: National Monetisation Pipeline)’을 통해 도로, 철도, 전력 등 핵심 인프라 분야에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¹⁶⁸⁾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2019/20 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인도정부가 글로벌 가치사슬 내 위상 제고를 목표로 제조업 육성, 인프라 및 물류 개선,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9/20 회계연도 예산이 주로 농촌 개발과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 내수 진작과 포용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략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2025/26 회계연도 예산에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투자가 2019/20 회계연도 대비 세 배 이상 확대되었고, 도시 개발, 수자원, 항만 및 항공 물류 개선, 디지털 인프라 등에도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¹⁶⁹⁾

한편 인도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왔다.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전후 관세 인상과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미·중 갈등을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되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인도는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수출 절차의 디지털화 및 간소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수출 포용성 제고 등

167) 신규 건설이 아닌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 중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존 인프라 자산을 의미한다.

168) 2021/22년부터 2024/25년까지 6조 루피 규모의 자산 유동화 계획이 달성률 약 96.7%로 종료되었으며, 2025/26년 연방예산을 통해 2029/30년까지 5년간 10조 루피 규모의 NMP 2.0 계획을 발표했다. Money control(2025. 5. 26.), “Govt closes FY22-25 asset monetisation programme slightly short of target at Rs 5.8 lakh crore”(검색일: 2025. 7. 29.).

169) PIB(2025. 2. 1.), “Highlights of Union Budget 2025-26”(검색일: 2025. 6. 17.).

표 4-12. 인도 부처별 예산 배정액

(단위: 백억 루피, %)

분야	2019/20 지출		2024/25 지출 (추정)		2025/26 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국방	453	16.9	610	13.7	681	13.4	50.4
도로교통 · 고속도로	78	2.9	276	6.2	287	5.7	267.2
철도	70	2.6	246	5.5	255	5.0	265.1
내무	135	5.0	197	4.4	233	4.6	72.8
소비자 · 식량 · 공공배급	117	4.4	232	5.2	216	4.3	84.3
농촌개발	124	4.6	164	3.7	190	3.8	54.0
화학 · 비료	82	3.1	191	4.3	162	3.2	97.4
농업 · 농민복지	102	3.8	118	2.7	138	2.7	35.4
교육	89	3.3	123	2.8	129	2.5	43.8
통신	44	1.6	111	2.5	108	2.1	146.0
보건 · 가족복지	64	2.4	83	1.9	100	2.0	55.4
수자원	26	1.0	95	2.1	100	2.0	287.4
주택 · 도시개발	42	1.6	69	1.5	97	1.9	130.1
기타	1,260	46.9	1,928	43.4	2,369	46.8	88.0
종합	2,686	100	4,443	100	5,065	100	88.6

주: * 2019/20년 대비.

자료: PRS India(검색일: 2025. 6. 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이하 FTP 2023)¹⁷⁰⁾을 도입하여 무역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FTP 2023은 기존의 수출 실적 기반 인센티브 정책을 세금 및 관세 환급제도(RoDTEP: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 Products Scheme)로 전환하고,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국제무역의 신뢰성 확보와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를 꾀했다. 이로써 불공정 수출보조금에 따른 국제 분쟁 리스크를 해소하고, 수출업자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70)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존의 FTP 2015-20이 2023년 3월까지 연장된 이후 발표된 FTP 2023은 무기한 유효 정책 체계(open-ended)로 무역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했다.¹⁷¹⁾ 또한 글로벌 공급망 통합과 다변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중개무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첨단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SCOMET¹⁷²⁾) 관리 기준을 강화해 글로벌 기술무역 파트너로서 신뢰도를 제고했다. 아울러 수출 유망 산업 밀집 지역을 지정해 맞춤형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수출 허브(District Export Hubs) 이니셔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수출 진흥을 위한 포용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FTP 2023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인도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통해 225억 루피 규모의 수출 촉진 프로그램이자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제고 프로그램인 ‘수출 진흥 미션(Export Promotion Mission)’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흥시장 수출 기회 및 무역금융 지원,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대상 수출 신용 담보 지원, △국내외 물류 창고 지원, △글로벌 브랜딩 지원 등이 포함되고, 무역 행정 및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BharatTradeNet(BTN)’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 관세 등급 단순화,¹⁷³⁾ △단일 세금 체계 도입을 통한 중복 부과 방지, △전기차, 스마트폰·전자제품, 조선, 섬유와 같은 산업의 원자재·부품 관세 인하 및 완제품 관세 인상¹⁷⁴⁾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¹⁷⁵⁾

아울러 인도는 무역협정 다변화와 공급망 전략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 글로벌 노스 국가들과의 양자

171) “View| New Foreign Trade Policy has a clear focus on the need for trade facilitation” (2023. 4. 4.)(검색일: 2025. 7. 7.).

172) 민간과 군사 양쪽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물품으로 Special Chemicals, Organism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ies의 약자다.

173) 과거 품목별로 0~150% 수준에서 세밀하게 구분되었던 기초 관세(BCD: Basic Customs Duty)에서 2023/24년 예산안과 2025/26년 예산안을 통해 각각 7개 단계를 추가로 폐지하여 8단계 0~70%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조치이다.

174) 핵심광물(코발트, 납, 아연 등), 섬유 직기, 리튬이온 배터리용 자본재, 선박 제조 부품, TV용 오픈셀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면세, 디스플레이나 편직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175) PIB(2025. 2. 1.), “Highlights of Union Budget 2025-26”(검색일: 2025. 6. 19.).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흥시장과의 협상도 병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도의 역할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2022년 UAE 및 호주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EFTA 4개국 및 영국과의 FTA도 2025년 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EU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 역시 2025년 내 타결 및 서명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뉴질랜드, 칠레, 오만, 카타르 등과 FTA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협정 이외에도 인도는 일본, 호주와 함께 ‘공급망 회복력 이니셔티브(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를 출범하였고, 미국, 일본, 호주 등 14국이 참여하는 ‘IPEF 공급망 회복력 협정(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Supply Chain Resilience Agreement)’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진출 기업 애로사항

모디 정부의 비즈니스 및 투자 친환경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의 인도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장벽은 정부 및 제도 리스크, 인프라 미비, 노동시장 제약 등이다.

첫째로, 인도의 잦은 정책 및 규제 변경, 불투명한 인허가 절차, 주(州)별로 상이한 법령과 규제, 복잡한 세제 구조 및 과세 강화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애로사항이다. 특히 인도정부의 일방적이고 빈번한 정책 변화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며, 인허가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지역 간 법령 상이성은 기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PLI를 비롯한 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복잡한 자격 요건과 행정 절차를 수반하며, 인센티브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¹⁷⁶⁾

176) “PLI: On the Way to Another Failed Incentive Scheme?”(2024. 1. 10.); ET Manufacturing (2025. 7. 14.), “Electronics and pharma corner 70% of FY25 PLI disbursement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7. 28.).

이에 따라 정책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액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데, PLI의 경우 2024/25 회계연도 기준 예산 집행률은 약 11%에 불과하다.¹⁷⁷⁾

여기에 더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세금 분쟁 사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5년 초, 12년간의 세무조사 끝에 14억 달러 규모의 납세를 요구받으며 인도 세무 당국과 법적 분쟁에 돌입했으며,¹⁷⁸⁾ 보다폰(Vodafone)과 케언 에너지(Cairn Energy)는 각각 약 20억 달러와 12억 달러에 달하는 소급 과세 통보를 받아 국제 투자자 분쟁으로 이어졌다.¹⁷⁹⁾ 삼성전자는 기지국 장비 수입과 관련된 관세 분류 문제로 5억 2천만 달러의 세금과 8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통보받았고,¹⁸⁰⁾ 기아는 부품 수입 후 현지 조립 과정의 세율 회피 혐의로 1억 5천만 달러의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¹⁸¹⁾ 이처럼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세무조사와 대규모 세금 부과는 글로벌 대기업마저 수년간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둘째로, 인도정부의 인프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인프라 부족은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전력, 도로, 항만 등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인도정부에 따르면 인도의 물류비는 GDP의 13~14%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약 1.5배에 달한다.¹⁸²⁾ 전력수급 불안 또한 생산에 직접적

177) Money control(2025. 6. 25.), "Incentives worth Rs 21,534 crore disbursed till March under PLI schemes for 12 sectors"(검색일: 2025. 7. 28.).

178) 14개 차종 부품을 여러 차례 나눠 수입 후 조립한 폭스바겐의 전략에 대해 세무 당국이 고세율의 CKD 수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9) 이는 보다폰과 케언 에너지의 국제중재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180) "Samsung India executives seek to quash \$81 million penalty over tax evasion"(2025. 5. 28.) (검색일: 2025. 7. 22.).

181) "Exclusive: India accuses Kia of evading taxes of \$155 mln in VW-like dispute"(2025. 2. 5.) (검색일: 2025. 7. 22.).

인 차질을 야기하며 인력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높은 자발적 이직률은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¹⁸³⁾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이 타사나 국외로 이직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 역량 축적과 인력 양성에 대한 기업의 동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 내 인건비는 연간 9~10%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로 기업들의 진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¹⁸⁴⁾

자금 조달의 어려움, 높은 세율, 비공식 부문 관행, 통관 및 무역 규제, 부패 또한 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으로 지목된다. [그림 4-1]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인도에서 활동한 9,376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⁸⁵⁾에서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부족(21.5%), 높은 세율(16.5%), 비공식 부문 관행(11.2%), 통관 및 무역 규제(10.9%), 부패(8.6%) 등을 인도 기업환경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인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외국 기업 대상 법인세율은 35%, 유효세율¹⁸⁶⁾은 최대 38.22%로, 중국(25%), 베트남(20%), 인도네시아(22%) 등 아시아 신흥국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¹⁸⁷⁾ 부가가치세는 0~28%의 복수세율 구조를 가지며,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에 표준세율 18%가 적용된다. 이 역시 중국(6~13%), 인도네시아(12%),

182) "Logistics cost will be cut to 8-9 percent of GDP by 203: DPIIT Secretary"(2022. 9. 19.) (검색일: 2025. 7. 22.).

183) "Attrition in India has dropped from 18.7 to 16.9%"(2024. 10. 4.)(검색일: 2025. 7. 22.).

184) "Salaries in Asia Pacific continue to rise amid tight labor market and growin inflation, Mercer survey finds"(2022. 11. 21.); WTW(2024. 10. 15.), "India to maintain 9.5% salary increase in 2025, WTW survey find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7. 28.).

185) 직원 수 5인 미만 또는 100% 국영기업을 제외한 대·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또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 부문으로는 △도소매, △자동차 수리, △호텔 및 식당, △운송, 창고, 통신, △건설, △정보통신을 포함한다. World Bank Group, Enterprise Surveys - India 2022, *Country Profile*(검색일: 2025. 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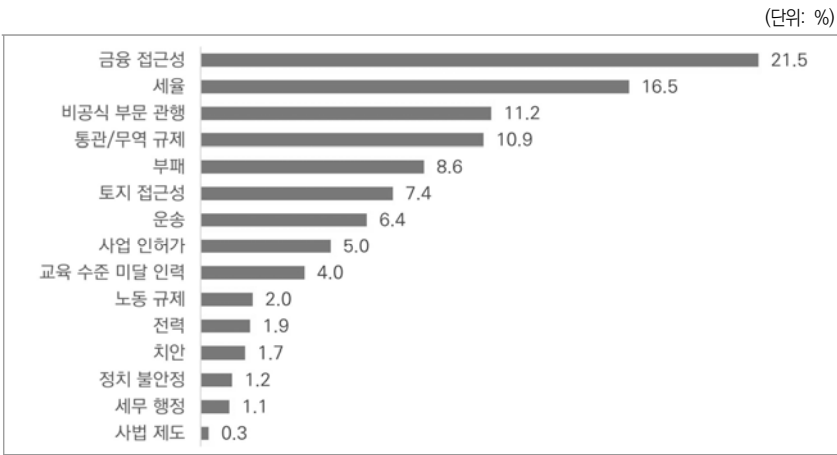
186) 할증세와 보건교육세를 포함한 실질 부담률을 의미한다. India briefing, "Corporate Income Tax in India"(검색일: 2025. 7. 22.).

187) PwC, "Corporate income tax (CIT) rates"(검색일: 2025. 7. 22.).

베트남(10%), 싱가포르(9%) 등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현저히 높다.¹⁸⁸⁾¹⁸⁹⁾

또한 인도는 수출입 통관 및 수입 라이선스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길다. 통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가 요구되며, 절차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공식적 금전 요구가 빈번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의 통관 적체와 지연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정부 계약 수주,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뇌물이나 편의 제공이 요구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어 기업의 운영 비용과 리스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림 4-1. 인도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2년 기준)



주: 해당 수치는 각 항목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임.
자료: The World Bank,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검색일: 2025. 7. 21.).

5)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 방향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가속되면서, 인도가 새로운 생산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부상

188) “GST: Where does India’s tax model stand against other prominent countries?”(2018. 12. 24.)
(검색일: 2025. 7. 22.).

189) PwC, “Value-added tax (VAT) rates”(검색일: 2025. 7. 22.).

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와의 긴밀한 전략적 연대를 통해 대외 네트워크 확장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기지의 주요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 시대에서 인도는 한국의 대외 네트워크 강화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수적 파트너로서 의미가 크다.¹⁹⁰⁾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 풍부한 생산 가능 인구, 세계 최대의 젊은 소비시장, 도시화·디지털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 인센티브, 물류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주요국과의 통상협정 진전, 외교적 위상 강화가 맞물리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한국의 기간 산업[전기·전자·반도체, 자동차(EV 포함), 조선 등]과 인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 간 정합성을 높여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 형성에 유리하다. 전기·전자 부문은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클러스터 확대와 관련 정책 예산 증액에 따라 현지화 전환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는 정책 추진력과 마이크론 투자에 힘입어 연계 공급망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과 주요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로 생산거점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동화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인도의 항만 현대화와 연계 물류 강화 정책에 따라 조선·항만·물류 분야의 프로젝트형 협력 기회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인도의 ICT, 항공우주, 인공지능 역량은 한국의 제조 및 하드웨어 강점과 결합해 산업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에 기여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인도 시장은 한국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할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2010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경제협력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차례의 개선 협상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 필요성만 재확인하는 등 가시적 성과

190) 김정곤 외(2023),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p. 176.

는 제한적이었다. 무역 불균형과 투자 부진이 해소되지 않는 한, CEPA 조항 개선만으로는 체감할 만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인도가 전략 산업의 내재화와 자립을 강조하는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단순 수출 중심 접근으로는 인도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¹⁹¹⁾

따라서 한국은 CEPA 개선 협상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투자,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 교류 등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협력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인도의 실용적 대외전략과 조응하며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고,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동시에 진전시키는 현실적 경로가 될 것이다.

가)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이 인도와의 협력에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첫째, 정상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정례 대화체를 제도화해 행정 및 제도 장벽을 해소하고, 공급망, 첨단 기술, 인력 이동을 포괄하는 정책적 소통 통로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장기적인 대인도 협력 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 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신뢰 형성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기반이다.¹⁹²⁾

실제로 양국은 정상급 대화를 통해 여러 차례 분기점을 만들었다. 2004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 채택 후 CEPA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2010년 CEPA 발효와 함께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과학기술 공동기금과 차관급 외교정책안보대화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재격상하고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를 출범시켜 투자 애로 해소 기능을 제도화했으며, 2018~19년에는 연속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허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정상 및 장관급 접

191) 김경훈 외(2023),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pp. 160~162.

192) 김정곤 외(2023),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p. 182.

축의 공백이 길어지며 가시적인 진전이 제한적이었고,¹⁹³⁾ CEPA 개선 협상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는 2019년 이후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으로 안보 및 공급망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양국 모두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열강과의 외교 및 협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인도 간 정상 및 장관급 교류의 추진력이 약화된 데 기인한다.

양국 관계 심화에 다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 연례 정상회의를 제도화하여 양국 간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CEPA 업그레이드와 비관세 장벽 해소의 타임라인을 정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를 확장해 재정경제부[(인) 재무부], 산업통상자원부[(인) 상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과학기술부]의 상설 참여를 보장하고 상시 점검 체계로 고정하며, 이를 차관 및 고위 실무급 플랫폼으로 뒷받침해 공급망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연례 정상회의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정상-장관-차관·고위 실무급의 3단계 정기 협의 체계 아래 인도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심화하며 ‘일본 산업타운(Industrial Townships)’, JICA 인프라 개발 사업 등 현장 플랫폼으로 구체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제도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참고 모델이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외교라는 기조 아래 다자 및 양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움직임은 한국에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회에 맞춰 정상급 주도 고위급 정례 대화체가 제도화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책 일관성과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3) 양국 정상회의는 2019년 이후 2023년 G7과 G20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외교장관 공동위원회는 2018년 이후 2024년에 개최되었다.

나)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인도의 산업 수요와 한국의 기술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형 협력모델을 구축해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전략 산업 발굴이나 인프라 연계형 형태의 협력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인도 협력은 대부분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어 왔으며, 산업,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형 접근은 부재했다.

운송, 에너지, 도시 개발 등 인도의 인프라 수요는 매우 높으며,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인도는 대규모 수요와 제조 및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이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시장 및 규제 정보 비대칭과 높은 수준의 초기 진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독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도의 주(州)정부별로 상이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는 기업들의 진출 초기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흡수해 줄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흡수하고 중소기업의 현지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인프라 연계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EDCF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 발굴에 더해 현지 인력 관리 플랫폼과 기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결합할 수 있다. 전략 산업의 범위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높으며 동시에 인도의 수요가 높은 △해양·항만·물류, △그린 인프라, △도시·산업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전용 타운십과 회랑-산업도시 결합 모델¹⁹⁴⁾을 참고해, 주요 주(州)에 한국 전용 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 토지, 인허가, 인프라 패키지를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은 인프라와 공용설비를 담당하며, 민간은 단지 개발과 앵커 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194) 델리-मुंबай 산업회랑(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이 대표적인 사례로, 약 1,500km 구간에 산업철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구축하는 정부 간 협력 사업이다.

인도의 국가물류정책(NLP)과 가티샷티에 정렬되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전용 필지 구역을 확보하고, 공용설비와 윈스톱 인허가 데스크를 단지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훈련센터를 설치해 표준화된 한국형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품질, 안전 및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 수요 연계형 기술 훈련 플랫폼을 운영해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산업 발굴과 인프라 연계형 협력의 추진은 한국기업의 안정적인 인도 진출을 촉진하며, 양국 간 상호 보완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공급망 재편 속에서 산업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 신산업 분야 고속권 인력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양국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고속권 인력 교류와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첨단 제조 및 기술 경쟁력과 인도의 우수한 ICT 인력, 거대한 내수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과 인도는 전략적 기술 협력이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는 대부분 단기적인 연구 교류나 기관 간 MOU 체결에 머물렀을 뿐, 고급 기술인력 교류나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의 확장은 제한적이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흥 시장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양국은 단순한 연구 협력 수준을 넘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협력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 개최된 인도-일본 정상회의에서 향후 5년간 50만 명의 인력 교류와 주(州)-현(県)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사례는 정부 차원의 인적 및 지역 교류가 국가 간 기업 협력의 촉매임을 보여준다.¹⁹⁵⁾

이를 위해 첨단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합법적인 고속권 인력 이동을 확대해 양국 간 인재 교류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단기 방문 위주의 교류를 넘어 장

195) 윤지현(2025),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을 참고할 수 있다.

기 체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제도적 경로는 현장의 기술 이전과 협업 속도를 높이고 현지화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텔리 중심의 직항 체계를 단계적으로 뭍바이, 벵갈루루, 첸나이 등 주요 산업 거점으로 확대해 인재 교류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표 4-13.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인도

업종	배경	정책 목표 또는 과제
자동차 (EV 포함)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수출 허브 잠재력 - 부품 밸류체인 - 정부의 전략적 육성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관리 - 생산 비용 절감
반도체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정부의 전략적 육성 - 글로벌 투자 본격화 - 설계 · SW 인력 풍부	- 설계 · 패키징 · 납품 밸류체인 구축 -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관리 - 생산 비용 절감
전기전자 (가전)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부품 · EMS 클러스터 - 정부의 전략적 육성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관리 - 생산 비용 절감
디스플레이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정부의 전략적 육성 - 휴대전화 · TV 클러스터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생산 비용 절감
화학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클러스터 집적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확보 -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관리 - 생산 비용 절감
조선	- 물동량 증가 - 정부의 해양 · 항만 투자 확대 - 그린 · 디지털 전환 수요	- 현지 시장 선점 - 생산 비용 절감
의약품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세계적 생산 및 수출거점 - 풍부한 인력 · 인프라 생태계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관리 - 생산 비용 절감
철강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원료 및 수요 산업 풍부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확보 - 생산 비용 절감
무선통신기기	- 거대 · 성장형 내수시장 - 정부의 전략적 육성 - 디지털 공공 인프라 확산 - R&D · SW 인력 풍부	- 현지 시장 및 수출거점 확보 - 공급망 다변화로 리스크 관리 - 생산 비용 절감

자료: 저자 작성.

더불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산업 연계를 병행하는 형태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상 지역(산업)으로 △카르나타카 벵갈루루(반도체, 디지털·AI), △타밀나두(조선·항만, 자동차·이차전지), △우타르프라데시 노이다(전기·전자, 디지털·AI), △마하라슈트라(전기·전자, 자동차·이차전지), △텔랑가나 하이데라바드(제약), △구자라트(반도체)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의 공동 R&D와 인재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 협력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는 양국 간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 속도를 높이고, 한국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인도 진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 베트남

1) 배경 및 중요성

가) 베트남의 부상 배경

베트남이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으로는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전략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베트남 자체가 가진 내부 요인으로 △적극적인 개혁·개방(Doi Moi) 및 세계경제로의 편입(WTO 가입, FTA 체결 등) 추진, △인구 1억 이상의 큰 내수시장 보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 추진, △전략 산업 육성, △정치적·사회적 안정 등이 있다.

베트남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외부 요인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 등이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는 베트남을

글로벌 제조거점과 수출 대국으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외자기업은 베트남 총수출의 73.0%(2023년)와 총수입의 64.1%를 담당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¹⁹⁶⁾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의 경제통합 확대와 심화 역시 베트남의 고성장과 부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에 가입한 이후 더욱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제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장 많이 향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아세안이 체결한 ASEAN+1(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홍콩) FTA의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이 자리 잡은 전략적 위치 또한 베트남의 고성장과 신흥시장으로의 부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바로 세계 최대의 제조거점이자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육로를 통해 단시간 내에 연결된다는 장점과 함께, 미중 전략경쟁 이후에는 중국 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생산거점이나 공급망을 이전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등장 이후 대만계 EMS(전자제품수탁생산서비스) 기업과 중국기업이 베트남 북부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이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베트남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국은 대베트남 투자 상위 10개국 중 8개, 베트남 수출대상국 상위 10개국 중 6개,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중 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중·일은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 지원국이다.

196)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24),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24*, p. 727, p. 737.

나) 베트남의 중요성

베트남은 21세기 들어 신흥시장의 대표 주자이자 동아시아 공급망의 허브로 부상했다. 아세안 경제통합의 최대 수혜국 지위를 넘어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시장으로 부상하였다는 의미이다. 베트남은 또한 통신기기, 가전제품, 섬유·봉제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뒤를 이을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은 물론, 중국에 진출했던 다국적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전자기업은 물론 폭스콘(Foxconn), 페가트론(Pegatron), 위스트론(Wistron), 콤파(Compal), 콰타(Quanta) 등 주요 EMS 기업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베트남 북부는 스마트폰, 가전제품, 노트북,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 부품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거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베트남은 중간재 교역에서도 동아시아 역내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경쟁 확대 및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은 글로벌 환경 변화의 어부지리 효과를 바탕으로 중국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상호관세로 20%(2025년 8월 기준)를 부과했음에도 베트남, 더 나아가 아세안의 소비시장 및 생산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은 지속되거나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은 경쟁국과의 미미한 상호관세율 차이, 저렴한 투자비용,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대상지로서 계속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¹⁹⁷⁾

197) 石川幸一(2025. 4. 14.), 「投資先としてのASEANの評価と相互関税」(검색일: 2025. 9. 11.).

현재 베트남이 중장기적으로 중소득국 함정과 미성숙 탈공업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2024년 후반부터 토람(To Lam) 총비서 주도로 행정·경제·법제도 등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체제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도이머이(1986년) 이후 가장 혁신적인 경제 개혁인 정치국 결의안 제68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과 한국형 대그룹 육성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최근 빠른 시간 내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원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급증하는 중국의 디플레 수출에 따른 제조업 붕괴 우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선발가입국 모두가 밟았던 전철(중소득국 함정과 미성숙 탈공업화)을 베트남이 조기에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거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 베트남의 중요성은 우선 베트남이 이미 한국의 교역, 투자, 개발 협력 등에서 최대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했고 한국의 주력 해외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3위 교역 상대국이며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최대 지원 대상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금액과 신규 법인 수 모두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은 이미 자동차, 가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섬유·봉제, 신발 등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최대 거점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통해 양국 모두 특정국(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베트남의 중요성은 크다. 셋째, 베트남에 대

한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구조 개편을 앞당기거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2) 산업, 무역, 투자 구조 변화 및 특성

가) 산업

최근 베트남의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9년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농림수산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이는 최근의 고도성장을 2차 산업이 견인하고 있음과 동시에 여전히 농업국가라는 특징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4. 베트남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업	13.82	12.93	12.31	11.78	12.66	12.60	11.96	11.86	11.86
광업 및 채석업	3.33	3.28	3.51	3.00	2.40	2.49	2.93	2.90	2.50
제조업	21.49	22.63	23.37	23.79	23.95	24.46	24.58	24.05	24.43
전기, 가스, 수증기, 공기 공급	3.28	3.41	3.46	3.66	3.90	3.94	3.97	4.02	4.20
수자원, 하수도, 쓰레기 관리	0.49	0.49	0.50	0.50	0.50	0.51	0.49	0.49	0.49
건설업	5.52	5.58	5.71	5.86	6.00	5.99	6.21	6.12	6.02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9.20	9.17	9.15	9.34	9.59	9.38	9.65	9.76	9.75
수송 및 보관	5.07	4.88	4.95	5.03	4.81	4.45	4.66	4.94	5.17
숙박 및 식료품 공급	2.92	2.94	2.90	2.94	2.26	1.73	2.26	2.45	2.53
정보통신	3.93	3.80	3.69	3.65	3.62	3.60	3.48	3.50	3.37
금융 및 보험	4.46	4.40	4.35	4.39	4.45	4.73	4.78	4.83	4.83
부동산	4.49	4.29	4.02	3.91	3.84	3.65	3.48	3.56	3.44
전문, 과학, 기술	2.39	2.31	2.23	2.18	2.25	2.24	2.13	2.12	2.06
행정 및 지원 서비스	1.55	1.51	1.49	1.49	1.17	0.93	1.10	1.20	1.21
공공행정 및 국방	2.22	2.15	2.15	2.15	2.18	2.18	2.02	2.04	2.02
교육	3.32	3.42	3.51	3.65	3.84	3.87	3.76	3.90	3.91
보건 및 사회활동	1.75	2.18	2.24	2.24	2.42	3.24	2.68	2.57	2.65
예술 및 오락	0.68	0.68	0.68	0.68	0.64	0.56	0.58	0.62	0.62
기타 서비스 등	0.86	0.85	0.83	0.82	0.76	0.69	0.74	0.67	0.67
순(net) 생산세 및 수입세	9.21	9.10	8.98	8.94	8.77	8.75	8.55	8.26	8.14

주: 2024년은 추정치.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검색일: 2025. 9. 1.).

산업을 세분화하면, 2024년(추정치)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제조업이며, 2016년보다 비중이 상승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증기·공기 공급,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등인데, 이 업종들은 활발한 외국인투자자와 경제 개발을 바탕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특히 제조업은 식음료 가공, 전기·전자, 섬유·의류, 금속가공,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미성숙 탈공업화를 겪고 있는 아세안의 많은 선발 개도국과는 다른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조업(23.2%),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14.8%)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빠르게 산업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은 2016년 41.7%에서 가파르게 감소한 반면, 활발한 외국인투자자로 제조업의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16.9%에서 23.2%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로 인해 급격히 늘어

표 4-15.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림수산업	41.65	40.04	37.57	34.37	33.02	29.06	27.54	26.94	25.97
광업 및 채석업	0.38	0.37	0.37	0.37	0.37	0.36	0.39	0.33	0.34
제조업	16.89	17.69	18.42	20.66	21.08	22.84	23.25	23.31	23.22
전기, 가스, 수증기, 공기 공급; 수자원, 하수도, 쓰레기 관리	0.56	0.56	0.55	0.73	0.56	0.65	0.64	0.59	0.61
건설업	7.32	7.64	7.92	8.41	8.77	9.26	9.17	9.25	8.71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12.76	12.85	13.44	13.35	13.62	14.68	15.60	15.14	14.77
수송 및 보관	3.00	3.17	3.31	3.66	3.73	3.78	3.77	3.94	3.98
숙박 및 식료품 공급	4.69	4.66	4.97	4.94	5.04	5.08	5.31	5.71	5.92
정보통신	0.56	0.56	0.55	0.55	0.56	0.58	0.62	0.66	0.63
금융 및 보험	0.75	0.74	0.74	0.91	0.93	0.99	0.97	0.96	0.94
부동산	0.38	0.37	0.55	0.55	0.56	0.63	0.72	0.70	0.64
기타	11.26	11.36	11.60	11.33	11.75	12.08	12.03	12.46	12.49

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검색일: 2025. 9. 1.).

난 농촌 출신 노동자의 활용은 베트남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고용 구조에서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을 세분화해 보면, 베트남의 산업 구조가 점차 단순 조립 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6]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식료품 분야 고용 비중이 16.4%로 가장 높고,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가공금속제품, 자동차 등의 순으

표 4-16. 베트남의 제조업 세부 분야별 고용 비중

(단위: %)			
구분	2016	2019	2021
식료품	8.2	9.9	16.4
음료	0.7	1.8	0.8
담배	0.2	0.1	0.1
섬유	4.1	4.0	5.2
의류	21.1	19.5	5.4
가죽	17.9	15.2	2.0
목재 및 제품	2.0	4.4	3.5
종이 및 제품	1.7	1.7	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	1.0	1.4
코크 및 정유제품	0.1	0.1	0.4
화학 및 화학제품	1.9	1.6	2.4
기초의약품 및 제약	0.8	0.6	1.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5	3.9	11.0
기타 비금속광물	4.4	3.8	4.0
기초금속	1.3	1.3	1.6
가공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5.0	6.5	7.8
컴퓨터, 전자 및 광학제품	9.1	8.1	2.5
전기장비	2.6	2.3	9.9
기계 및 장비	1.1	1.0	3.0
자동차	1.9	1.6	7.3
기타 수송장비	1.8	1.3	1.2
가구	5.2	6.6	2.3
기타 제조업	2.5	2.9	9.1
기계와 장비의 수리 및 설치	0.8	0.9	0.0
제조업 전체	100	100	100

자료: ASEAN Secretariat(2018), p. 241; ASEAN Secretariat(2021), p. 231; ASEAN Secretariat(2023), p. 284를 토대로 저자 계산 및 작성.

로 나타난다. 이들은 예외 없이 2016년보다 고용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업종이자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이다. 반면 가죽과 의류 분야의 고용 비중은 동 기간 각각 15%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머이(Doi Moi, 刷新)를 통해 개혁개방과 성장을 본격화한 베트남이지만 인프라 분야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국가경쟁력 평가(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서 베트남의 인프라 분야는 세계 141개 국가 중 77위를 기록해 중위권에 머무르며 국가 전체 경쟁력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¹⁹⁸⁾ 수송 인프라가 유틸리티(utility) 인프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아세안 선발 개도국인 인도네

표 4-17. WEF 인프라 분야 비교: 베트남, 동아시아 주요국(2019년 기준)

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전체 경쟁력(141개 국가 중 순위)	67	50	68	13
인프라 분야	77	72	70	6
수송 인프라	66	55	28	5
- 도로 연결성	104	109	72	26
- 도로의 수준	103	60	48	9
- 철도 밀도	58	85	39	23
- 철도 서비스 효율성	54	19	30	4
- 공항 연결성	22	5	4	16
- 항공수송서비스 효율성	103	56	59	8
- 해상운송 연결성	19	36	25	3
- 항만서비스 효율성	83	61	49	11
유틸리티 인프라	87	89	103	22
- 전력 접근성	84	95	105	2
- 전력 공급 수준	62	54	108	7
- 위험 식수에 대한 노출 정도	95	98	106	26
- 물 공급 신뢰성	81	74	96	28

자료: Klaus Schwab editor(2019) 데이터를 통해 저자 작성.

19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의 분석 대상 69개 국가에는 베트남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2020년부터는 발표되지 않고 있어 가장 최근인 2019년 평가를 인용하였다.

시아나 신흥대국으로 부상 중인 인도와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 무역

베트남의 수출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 2017년에는 태국을 추월해 아세안 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1위 국가인 싱가포르가 재수출(re-export)을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세안의 실질적인 최대 수출국이라 할 수 있다.¹⁹⁹⁾ 이러한 급격하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는 개혁개방에 더해 미국과의 정상교역관계(NTR, 2000) 구축과 WTO 가입(2007. 1.)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확대된 것, 베트남 정부가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 실제 외자기업은 베트남 총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베트남의 수입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수입 규모는 2016년에 말레이시아, 2019년에 태국을 추월해 아세안의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제조업 기반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베트남의 경우 수출품 가공을 위해 많은 원부자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60% 중반에 이를 정도로 높다.²⁰⁰⁾

베트남의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품목별 수출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8]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의 상위 수출 품목은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전자기기 및 부품, 사무기기 및 컴퓨터, 정밀 및 과학용 기기 등이 1, 2, 4, 5위를 차지하였고, 과거 2위와 4위

199) 싱가포르의 총수출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총수출은 3,922억 달러로 싱가포르 총수출(5,057억 달러)의 78%에 육박한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sets(검색일: 2025. 7. 30.) 참고.

200) *Ibid.*

자리를 차지하던 의류 및 액세서리와 신발류는 3위와 6위로 내려앉았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전기 분야의 수출 비중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전자업체들의 진출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10대 수출품에 포함되었던 농림수산업 관련 품목이 모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대신 정밀 및 과학용 기기, 철강 등이 새로 10위권으로 진입하였다.

표 4-18. 베트남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23.4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25.7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19.7
2	의류 및 액세서리	13.0	의류 및 액세서리	11.7	전기기기 및 부품	12.1
3	전기기기 및 부품	8.5	전기기기 및 부품	10.7	의류 및 액세서리	8.8
4	신발류	7.6	신발류	7.2	사무기기 및 컴퓨터	6.8
5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동물과 그 제품	4.0	방적사, 직물 및 관련 제품	3.4	정밀 및 과학용 기기	6.2
6	사무기기 및 컴퓨터	3.8	가구 및 그 부품, 침구류	3.4	신발류	5.9
7	방적사, 직물 및 관련 제품	3.5	사무기기 및 컴퓨터	3.3	기타 제조품	3.2
8	채소 및 과일	3.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동물과 그 제품	3.2	가구 및 그 부품, 침구류	3.1
9	가구 및 그 부품, 침구류	3.1	기타 제조품	3.0	방적사, 직물 및 관련 제품	2.8
10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그 제품	2.9	채소 및 과일	2.6	철강	2.7
	소계	73.0	소계	74.1	소계	71.3

주: SITC Rev.4의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베트남의 10대 수입 품목 구성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수입 품목이 다변화되고, 전자·전기 분야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중간재의 수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서 2019년을 거치면서 10대 수입품은 극히 일부에서 순위가 바뀌고, 도로용 차량이 빠지고 기타 금속제품이 새로 진입하였을 뿐 큰 변화는 없었으며 2023년 역시 같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표 4-19 참고).

[표 4-20]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의 상위 5대 수출 대상국은 2019년까지 4위였던 한국이 3위 일본을 추월했고, 네덜란드가 홍콩을 대신해 5위로 진입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상위 5개국의 비중과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표 4-19. 베트남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전기기기 및 부품	17.5	전기기기 및 부품	21.3	전기기기 및 부품	24.2
2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9.5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8.9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	4.8
3	방직사, 직물 및 관련 제품	7.6	방직사, 직물 및 관련 제품	6.8	방직사, 직물 및 관련 제품	5.1
4	철강	5.1	석유 및 관련 제품	4.2	석유 및 관련 제품	5.1
5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4.0	철강	4.1	철강	3.6
6	특정 산업용 기계	3.8	플라스틱 원형 형태	3.6	플라스틱 원형 형태	3.0
7	플라스틱 원형 형태	3.6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3.2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2.5
8	석유 및 관련 제품	3.5	특정 산업용 기계	3.0	특정 산업용 기계	2.0
9	비철금속	2.8	비철금속	2.5	비철금속	2.4
10	도로용 차량 (자동차 포함)	2.6	기타 금속 제품	2.5	기타 금속 제품	2.7
	소계	60.1	소계	60.0	소계	55.4

주: SITC Rev.4의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비중은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이 동아시아의 제조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 역시 거대한 내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베트남의 대중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3위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베트남의 5대 수입 대상국은 2016년 5위였던 태국이 2019년부터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1위에서 4위까지인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순위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전체 수입 비중 역시 베트남 전체 수입의 2/3를 유지하고 있다(표 4-21 참고). 특히 수출품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를

표 4-20.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1.8	미국	23.2	미국	27.4
2	중국	12.4	중국	15.7	중국	17.3
3	일본	8.3	일본	7.7	한국	6.6
4	한국	6.5	한국	7.5	일본	6.6
5	홍콩	3.4	홍콩	2.7	네덜란드	2.9
	소계	52.4	소계	56.8	소계	60.7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20, 2024)를 통해 저자 계산.

표 4-21.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28.6	중국	29.8	중국	33.9
2	한국	18.4	한국	18.5	한국	16.1
3	일본	8.6	일본	7.7	일본	6.6
4	대만	6.4	대만	6.0	대만	5.6
5	태국	5.1	미국	5.7	미국	4.2
	소계	67.1	소계	67.7	소계	66.5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20, 2024)를 통해 저자 계산.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최상위 4대 수출입 대상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구조 추이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수출 구조가 첨단 제조업 위주로 교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¹⁾ [표 4-22]에 따르면 최대 수출 대상국 미국에 대한 수출은 5대 품목의 순위만 변동되었다.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의류 및 액세서리는 2016년 30.2%에서 2023년 15.2%로 낮아져 2위로 하락하였고, 2016년 2위였던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와 5위였던 전기기기 및 부품은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2위 수출 대상국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새롭게 상위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된 정밀 및 과학용 기기와 사무기기 및 컴퓨터가 각각 26.2%와 9.1%로 1위와 4위를 차지하였고,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전기기기 및 부품은 2위로 자리바꿈했다. 채소 및 과일의 수출 비중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5대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는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사무기기 및 컴퓨터와 정밀 및 과학용 기기가 5대 수출 품목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4위인 일본에 대한 수출은 큰 변화는 없으나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장비가 새롭게 5대 품목 중 3위로 진입한 가운데 수산물(SITC 3)이 여전히 5대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201) 최상위 4대 수출입 대상국을 살펴보는 이유는 베트남의 2016년, 2019년, 2023년 상위 수출입 대상국 중 1~4위까지는 모두 동일한 국가인 데 반해, 5위 대상국만 변동(수출은 홍콩에서 네덜란드로, 수입은 태국에서 미국으로)되었기 때문이다.

표 4-22. 베트남의 최상위 4대 수출입 대상국별 수출입 품목 및 비중 추이

(단위: %)

수출						수입					
2016		2019		2023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 1위: 미국 〉						〈 1위: 중국 〉					
84	30.2	84	24.5	76	23.1	76	17.9	77	16.9	77	22.5
76	14.0	76	20.0	84	15.2	65	13.4	76	15.9	76	11.3
85	11.7	85	10.9	77	14.1	77	11.9	65	13.1	65	9.6
82	7.6	82	9.3	82	8.6	67	9.6	67	5.0	67	5.7
77	5.4	77	8.4	85	7.4	72	4.4	72	4.3	69	5.4
소계	68.9	소계	73.1	소계	68.4	소계	57.2	소계	55.2	소계	54.5
〈 2위: 중국 〉						〈 2위: 한국 〉					
77	14.1	76	26.4	87	26.2	77	29.9	77	34.8	77	35.6
5	10.8	77	18.5	77	13.0	76	14.4	76	16.4	87	24.5
76	10.7	5	7.4	76	12.6	65	7.4	87	5.4	33	6.7
65	8.4	65	6.8	75	9.1	72	3.8	65	5.2	57	3.8
33	6.8	85	4.6	5	7.5	57	3.7	33	4.4	65	3.6
소계	50.8	소계	63.8	소계	68.4	소계	59.3	소계	66.2	소계	74.2
〈 3위: 한국 〉						〈 3위: 일본 〉					
76	31.9	76	35.0	76	21.1	77	22.0	77	28.7	77	38.3
84	19.4	84	16.7	84	12.8	67	8.4	67	7.6	67	7.1
77	8.1	77	9.4	75	12.6	72	6.8	72	5.5	65	4.1
3	5.3	65	4.1	77	12.5	78	5.5	65	5.5	72	3.8
65	5.2	3	4.0	87	4.9	65	5.5	89	3.9	28	3.4
소계	69.9	소계	69.2	소계	64.0	소계	48.1	소계	51.2	소계	56.7
〈 4위: 일본 〉						〈 4위: 대만 〉					
84	18.9	84	18.7	77	17.2	77	28.1	77	35.8	77	53.9
77	16.7	77	16.2	84	16.8	65	16.4	65	13.4	65	9.0
3	7.5	3	7.1	76	8.0	57	8.4	57	8.0	57	5.8
89	5.9	76	6.3	3	6.5	67	6.7	67	6.4	88	3.2
85	4.7	89	5.7	89	6.3	72	4.6	51	4.8	67	3.2
소계	53.6	소계	54.2	소계	54.7	소계	64.2	소계	68.4	소계	75.1

주: 1) SITC Rev.4의 2단위 기준이며, 순위는 2023년 기준.

여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생 무척추동물과 그 제품(SITC Rev.4의 3), 채소 및 과일(5), 금속광석 및 고철(28), 석유 및 관련 제품(33), 유기화학제품(51), 플라스틱 원형 형태(57), 방직사, 직물 및 관련 제품(65), 철강(67), 기타 금속 제품(69), 특정 산업용 기계(72), 사무기기 및 컴퓨터(75),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76), 전기기기 및 부품(77), 도로용 차량(자동차 포함)(78), 가구 및 그 부품, 침구류(82), 의류 및 액세서리(84), 신발류(85), 정밀 및 과학용 기기(87), 광학기기, 시계 등(88), 기타 제조품(89)

2) UN Comtrade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대만을 공식 국가 코드로 표기하지 않고 'Others Asia, nes'로 대체하고 있고 실제 'Other Asia, nes' 항목은 거의 대부분 대만 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대만 통계로 같음함.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베트남의 4대 수입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전기기기 및 부품의 순위가 3개 연도와 4개 국가 모두에서 1위 (예외로 중국에서 2016년에는 3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의 수출 구조가 전기·전자제품 위주로 첨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4대 수입 대상국 모두에서 1~2개 품목만 교체되었을 뿐 5대 품목 구조는 동일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4대 국가 모두 베트남이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이 국가들의 대베트남 수출이 각국의 최대 투자업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²⁰²⁾

베트남의 물류성과지수(LPI)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도 후발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선적에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대외무역이 활발하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반면 베트남은 물류의 질적 수준

표 4-23. 베트남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구분	베트남				한국		
	2023		2018	2016	2023	2018	2016
	세계	아세안					
LPI 종합 순위	43	4	45	64	17	25	24
통관	43	4	51	64	7	25	26
인프라	47	4	54	70	9	22	20
국제선적	38	4	45	50	26	33	27
물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53	5	40	62	20	28	25
화물 추적	59	5	44	75	25	22	24
적시성	41	4	47	56	23	25	23

주: 2016, 2018년 수치는 160개 국가 중 순위, 2023년 수치는 139개 국가 중 순위, 2023년 아세안에 대한 수치는 아세안 10개국 중 순위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23, 2018, 2016),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202) 2023년 기준 베트남에 대한 투자(등록자본금 및 허가 기준)는 한국이 1위이고 일본이 3위, 대만이 4위, 중국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24 참고).

및 경쟁력과 화물추적 부문에서 전체 순위보다 낮은 순위로 평가받았다. 베트남의 항구가 대부분 하천 부근에 자리잡고 있어 소규모 선박 위주로 운행할 뿐만 아니라 화물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심해항이 부족해 대부분 해상에서 다시 환적한다는 점, 현지 물류기업이 영세하다는 점, 도로에 비해 철도 인프라의 개선이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관련이 깊다.

다) 투자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등록자본금 및 승인 기준)는 누적 기준으로 최대 투자국인 한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중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표 4-24]에 따르면 2023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중 동아시아 외 국가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표 4-24.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단위: 억 달러, %)												
순위	2016			2019			2023			누적(~2023)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한국	79.7	29.6	한국	83.4	21.4	싱가포르	77.7	19.7	한국	865.1	18.4
2	일본	30.4	11.3	홍콩	81.8	21.0	일본	67.5	17.1	싱가포르	749.0	15.9
3	싱가포르	24.1	9.0	싱가포르	44.2	11.3	한국	51.3	13.0	일본	738.9	15.7
4	대만	21.9	8.2	일본	41.7	10.7	홍콩	48.1	12.2	대만	393.6	8.4
5	중국	21.4	7.9	중국	41.2	10.6	중국	45.9	11.7	홍콩	341.9	7.3
6	홍콩	16.8	6.3	대만	18.8	4.8	대만	29.6	7.5	중국	271.3	5.8
7	말레이시아	9.4	3.5	버진아일랜드(영)	14.1	3.6	사모아	11.0	2.8	버진아일랜드(영)	228.7	4.9
8	버진아일랜드(영)	8.7	3.3	사모아	9.4	2.4	네덜란드	9.7	2.5	네덜란드	143.7	3.1
9	태국	7.3	2.7	태국	9.3	2.4	태국	8.9	2.3	태국	140.1	3.0
10	케이맨제도	6.5	2.4	네덜란드	8.4	2.2	미국	6.5	1.7	말레이시아	131.1	2.8
	합계 (기타 포함)	269	100	합계	390	100	합계	394	100	총누계	4,702	100

주: 베트남에 대한 FDI는 승인 및 등록자본금 기준이며, 최근 5년 간 실제 투자금은 등록자본금의 약 60%를 기록함.
합계는 기타 포함.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17, 2020, 2024)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드와 유럽의 네덜란드뿐이다. 2019년까지는 연도별 1위 투자국이 한국이었으나 2020년 이후로는 싱가포르가 매년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 한국, 홍콩, 중국, 대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중국이 꾸준히 투자해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홍콩을 포함하면 2016년에는 2위, 2019년에는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 2021년부터 연도별 순위에서 10위 안에 진입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²⁰³⁾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표 4-25]에 따르면 2023년까지의 투자를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수로는 43.2%, 금액으로는 60.3%가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자와 IT를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산업, 재생가능에너지, 식품가공 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전기·가스·수증기·공기 공급 등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제조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베트남이 최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추세를 견인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띠며 제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미중 경쟁 이후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및 중국기업이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부동산과 전기·가스·수증기·공기 공급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은 누적 기준보다는 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도소매 및 자동차수리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열악한 물류 인프라, 규모가 작은 자동차 시장, 자국 산업에 대한 강한 보호 기조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203)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22, 2023, 2024) 참고.

표 4-25.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구분	2016	2019	2023	누적(~2023)			
				프로젝트		투자금액(승인 기준)	
				건수(개)	비중(%)	등록자본금 (억 달러)	비중(%)
농림수산업	0.5	0.3	0.2	534	1.4	38.7	0.8
광업 및 채석업	0.3	0.1	0.0	107	0.3	48.9	1.0
제조업	63.0	64.7	64.2	16,900	43.2	2,836.9	60.3
전기, 가스, 증기, 공기 공급	1.2	2.6	6.0	194	0.5	406.5	8.6
수자원, 하수도, 쓰레기 관리	1.8	0.6	0.3	86	0.2	31.6	0.7
건설업	2.4	2.6	0.9	1,815	4.6	108.9	2.3
도소매 및 자동차 수리	7.3	6.7	3.4	7,012	17.9	110.3	2.3
수송 및 보관	3.4	0.9	1.2	1,097	2.8	61.7	1.3
숙박 및 식료품 공급	1.8	1.3	0.2	986	2.5	143.5	3.1
정보통신	1.4	1.4	1.1	2,932	7.5	51.1	1.1
금융 및 보험	2.2	3.0	4.0	97	0.2	9.3	0.2
부동산	8.8	9.9	13.5	1,137	2.9	685.3	14.6
전문, 과학, 기술	3.5	4.7	3.7	4,488	11.5	54.3	1.2
행정 및 지원 서비스	0.7	0.3	0.2	620	1.6	10.7	0.2
교육 및 훈련	0.2	0.2	0.1	685	1.7	46.2	1.0
보건 및 사회활동	0.2	0.5	0.9	158	0.4	17.6	0.4
예술 및 오락	1.2	0.2	0.0	144	0.4	32.3	0.7
기타 서비스 등	0.3	0.1	0.1	159	0.4	7.8	0.2
전체	100	100	100	39,151	100	4,702	100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24)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의 러시로 이어졌다. 우선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해 있던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새로운 투자지를 모색하던 중국 현지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표 4-26]은 미중 통상마찰 이후 중국에 진출해 있던 대만계 전자기기수탁생산서비스(EMS) 기업을 비롯해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일본과 미국계 기업, 베트남을 수출품 제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투자 진출한 중국기업들을

표 4-26. 미중 통상마찰 이후 베트남으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 및 중국 기업(2016~24년)

일본계 기업	미국계 기업	중국계 기업(계속)
○ 샤프(PC, 노트북, 복합기, LCD 디스플레이) ○ 닌텐도(게임기) ○ 교세라(복사기, 프린터) ○ 미츠바(자동차부품) ○ 파나소닉(가전제품) ○ 시티즌시계(시계) ○ 카시오계산기(시계) ○ 아식스(신발, 스포츠용품) ○ 올림푸스(광학기기) ○ 요오코(자동차안테나) ○ SMC(기압기) ○ 유니클로(의류) ○ 마루베니(골판지 원지)	○ 스케쳐스 운동화 ○ 퀄컴(스마트폰 모뎀칩) ○ HP(데스크톱, 노트북) ○ DELL(PC) ○ Home Depot(가정용품) ○ Hasbro(장난감) ○ 구글(스마트폰) ○ Brooks Sports(신발) ○ MS(PC, 노트북) ○ Lovesac(가구) ○ 아마존(Echo 스피커 등) ○ Nike(신발, 스포츠용품)	○ ACTR ○ Sunny Optical(카메라부품) ○ Victory Giant Technology(전자부품) ○ Shanghai Guangwei Electric Group(전자부품) ○ Hainan Drinda New Energy (전자부품) ○ Luxshare ICT(전자부품) ○ Guangdong Suqun New Material (전자부품) ○ GoodWe(전자부품) ○ Trina Solar(태양광 모듈) ○ BOE Technology Group(디스플레이제품) ○ Sunny Optical Technology (광학렌즈, 카메라 모듈) ○ Hongrida Technology(정밀금형) ○ Black Peony Group(생지, 의류) ○ Xielong Group(섬유) ○ Zhejiang Hailide New Material(섬유) ○ Zhongwang Fabric(생지) ○ Qingxin County Xiaofeng Shoe Materials(신발재료) ○ Zhejiang Xinao Textiles(생지, 실) ○ EON Helmet(헬멧 설계/제조) ○ Zhejiang Yongyi Furniture(가구) ○ Henglin(의자 및 가구 제조/판매) ○ Universal Scientific industrial (전자회로기판) ○ Guoxuan(배터리) ○ Chery(전기차)
대만계 기업	중국계 기업	
※ EMS(전자기기수탁생산서비스) ○ Quanta(맥북) ○ Compal(i-pad) ○ Pegatron(스마트폰) ○ Foxconn(스마트폰, 애플워치) ○ Foxconn(TV) ○ Inventec(아이패드&에어팟) ○ Wistron(스마트폰)	○ Goertek(에어팟) ○ Luxshare(에어팟) ○ TCL集團(TV) ○ 敏華控股(가구) ○ 巨星科技(공구) ○ 國光電氣(전자부품) ○ 永芸家具(가구) ○ 菜克電氣(가전) ○ 健盛集團(의복재료) ○ 賽輪集團(타이어) ○ 華孚時尚(섬유) ○ 長城科技(어댑터) ○ 顧家家居(가구) ○ Sunwoda(리튬배터리) ○ 海信(TV)	

주: 생산설비를 이전했거나 이전 계획을 발표한 기업 기준.

자료: 각성일 외(2022), p. 76 재구성; 日本貿易振興機構(2025a), pp. 132~135를 통해 수정 및 보완.

표 4-27. 삼성과 LG의 탈중국·베트남으로의 생산라인 이관 사례

삼성			LG		
시기	내용	이관지역	시기	내용	이관지역
2018	선전 통신장비·휴대폰 공장 폐쇄	베트남, 인도	2020	쿤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공장 청산	베트남
2018	텐진 스마트폰 공장 폐쇄	베트남, 인도	2021	쑤저우 차대 인포테인먼트 부품 공장 폐쇄	베트남
2019	냉장고 10만 대 생산 분량 태국 공장 이전	태국	2023	엔타이 카메라 모듈 라인 단계적 축소	베트남
2019	광둥성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폐쇄	베트남, 인도			
2020	쑤저우 PC 공장 생산 종료	베트남			
2020	쑤저우 LCD 공장 생산 종료	베트남			

자료: 최지원, 양평섭(2024. 5. 7.), p. 15; 日本貿易振興機構(2025b), pp. 53-54를 통해 재작성.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한국의 대표적 전자기업인 삼성과 LG도 가담하고 있다. 삼성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냉장고는 물론 PC와 LCD 공장을 대부분 베트남으로 이관하였고 LG 역시 3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을 발표하였다(표 4-27 참고).

중국에 있던 생산설비의 베트남 이전과 함께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2020년대 들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과 EU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투자 진출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 행렬에는 Amkor, Lam Research, NVIDIA, Intel, Qualcomm 등을 비롯해 한국의 삼성과 Hana Micron은 물론 일본의 Renesas Electronics과 Murata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투자 규모 역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4-28. 미국과 EU 주요 제조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2020~24년)

기업	세부 분야	투자 시기	투자액	기업	세부 분야	투자 시기	투자액
Amkor	반도체패키징	2024	16.0	Kine SIC	SiC 디바이스	2024	2.0
Lam Research	반도체 제조장치	2024	10.0	Semi			
Kine SIC Semi	SiC 반도체 디바이스	2024	2.0	Maxwood Furniture	가구	2022	비공개
NVIDIA	설비 구축	2023	2.5	Henkel	접착제 등	2024	비공개
	GPU, API, SoC	2024	2.0				
Marvell	반도체 솔루션	2024	비공개	tesa	접착제	2023	0.58
Uniquify	ASIC 반도체	2024	비공개	Fuchs SE	윤활유	2023	0.1
Intel	프로세스, GPU	2023	2.4	Kärcher	청소기기 및 세정기	2024	0.02
Synopsys	칩설계, 검증용 EDA 툴	2023	비공개	Schmalz	진공자동화 및 핸들링	2024	비공개
Hayward Quartz Technology	반도체	2021		Viessmann	난방, 냉각, 기후제어, 정수시스템	2023	비공개
Pepsico	음료 및 식품	2024	4.0	Vermes	자동판매기/ 자동지급기	2023	비공개
Qualcomm	반도체 R&D	2020	비공개				
Australis Aquaculture	양식	2023	1.0	Arburg	사출성형기 등	2023	비공개
Coca Cola	탄산음료	2022	1.3	3M	문방구 및 산업용	2024	비공개
Molson Coors Beverage	맥주 및 알콜음료	2021	비공개	Procter & Gamble	소비재	2023	1.0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2025a), pp. 129-137; ASEAN Secretariat and UNCTAD(2024), pp. 120-122를 통해 저자 작성.

3) 주요 산업통상정책 변화 및 특성

베트남은 2021년 개최한 제13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설립 100주년(2030년)까지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21-2030)과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21-2025)을 수립

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SEDS 2021-2030의 중점 내용으로 고성장 지속과 더불어 제조업 고도화, 혁신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물류 및 IT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개발, 투자환경 개선, 수출입 다변화와 글로벌 경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 등을 강조하였다.

우선 베트남은 트럼프 1기 등장 전후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원산업(supportive industry), 자동차 산업,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등 전략 및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²⁰⁴⁾ 베트남이 2007년부터 지원산업 육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정책이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2016년에 발효된 정부령 제111호(Decree No. 111/2015/ND-CP)부터이다. 이는 단순 조립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확대에 따라 증가 일로에 있는 중간재 수입 의존도 감소, 자국 기업의 GVC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했다.

한편 시행령 제111호는 지원산업의 적용 범위와 주요 지원 및 우대조치 등을 규정하고 부속서를 통해 우선 발전 지원산업 대상 분야로 섬유·봉제, 가죽·신발, 전자기기, 자동차, 기계공학, 하이테크 산업 등을 지정하였다.²⁰⁵⁾ 베트남이 지원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주요 분야로는 R&D, 기술 응용 및 이전, 인재 육성, 국제협력, 시장 개척, 개발센터, 진흥 프로그램 등이 있고 주요 우대조치로는 법인세, 수입세, 용자, 부가가치세, 환경보호, 중소기업용 투자비용, 토지 임차 등을 들 수 있다.²⁰⁶⁾ 코로나 직후인 2020년에는 향후 10년(2020~30년) 동안의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결의안 제115호(Resolution No. 115/2020/NQ-CP)도 수립했다. 결의안 제115호는 시행령 제111호에 적시된 지원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국내 가치사슬 개발, 관리의 디지털화 등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⁰⁷⁾

204) 베트남이 육성하는 '지원산업'이란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 부품, 부분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한국의 풀부리 산업이나 소부장 산업과 유사하다.

205) 日本貿易振興機構(2025c), p. 2.

206) 日本貿易振興機構(2025c), pp. 2~3.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협소한 국내 시장, 발전이 미흡한 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의 특성인 규모의 경제 미실현, 일본계를 중심으로 한 인근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의 무관세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및 지원산업에 대한 투자 우대, 부품 제조 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국내 미생산 부품에 대한 자동차 업체의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은 자동차 국산화율을 7~10%(2022년)에서 20~30%(2024년)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수입관세율을 여전히 높게 유지(32%, 2025년 3월 기준)하고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대해 특별소비세(35~150%)를 추가로 부과할 정도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²⁰⁸⁾

이에 더해 수입차에 대한 품질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 생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국산차 우대 정책도 추진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탈탄소 차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어 2040년 내연기관차의 국내 생산과 수입 중단, 2050년 내연기관차의 운행 제로 등을 목표로 하는 총리 결정 제876호(No. 876/2022/QĐ-TTg)를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가솔린차에 비해 파격적인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조치 속에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 빈패스트(VinFast)를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지리(Geely)와 BYD가 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은 고부가가치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주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베트남은 삼성과 인텔, 폭스콘 등 다국적 기업에 의한 조립 및 패키징 분야에서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최

207) Nguyen(2020. 8. 26.), "Vietnam Approves Resolution 115 on Promoting Supporting Industries"(검색일: 2025. 8. 5.).

208) 박정호(2025. 6. 26.), p. 2.

근 반도체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총리 결정문 제1017호(Decision No. 1017/2024/QD-TTg)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과 2050년 비전을 담고 있고, 총리 결정문 제1018호(Decision No. 1017/2024/QD-TTg)는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2030과 비전 2050을 규정하고 있다(표 4-29 참고). 또한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지원기금(ISF) 및 현금 보조금 제도, 세제 혜택, 토지 및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둘째, 베트남 역시 최근 디지털 대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베트남은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과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총리 결정문 제749호(Decision No. 749/2020/QD-TTg)를 발표해 전 국토와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베트남의 능동적인 ICT 산업 발전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디지털 혁신 우선 분야로 보건, 교육, 금융, 농업, 교통과 물류, 에너지, 천연자원

표 4-29.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 로드맵

분야		1단계 (2024~30년)	2단계 (2030~40년)	3단계 (2040~50년)
외국인투자 유치	설계 기업(개)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
	소규모 반도체 칩 제조 플랜트(개)	1	2	3
	패키징 테스트 플랜트(개)	10	15	20
규모	산업 매출(revenue)	250억 달러 이상/연	500억 달러 이상/연	1,000억 달러 이상/연
	부가가치율(%)	10~15	15~20	20~25
인적자원	엔지니어 및 졸업생(명)	50,000	100,000	풍부
단계별 특징		특화된 제품 개발	자립적인 설계 및 생산 역량 확보	R&D 분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

자료: Pham Minh Chinh(2024. 9. 21.); 박정호(2025. 6. 26.)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및 환경, 제조 등 8개를 선정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디지털 기술 기업 10만 개 육성과 디지털 기업의 GDP 기여율 30%를 목표로 설정하였다.²⁰⁹⁾ 베트남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인 공산당 정치국(politburo) 역시 2024년 결의안 제57호 (Resolution No. 57/2024/NQ-TW)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베트남은 트럼프 등장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 정책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2021~30년 기간의 외국인투자 협력전략에 관한 총리 결정문 제667호(No. 667/2022/QD-TTg)’와 ‘외국인투자 유효성 향상을 위한 총리 지시 제14호(No. 14/2023/CT-TTg, 2023)’를 통해 외자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를 확대하였다.²¹⁰⁾ 최근에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IT와 전자), 지원산업, 물류, 하이테크 농업 등에 세제 우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4년 1월부터 발효되어 대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의 법인실효세율이 15%로 인상됨에 따라 이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예, 투자 지원기금 조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²¹¹⁾

트럼프 1기 이후에도 베트남은 경제 다변화를 위해 다자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하고 있다.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세안은 최근 홍콩(2019년 발효)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RCEP 체결 및 발효(2022년)를 주도하였고, 2021년부터는 캐나다와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GCC와도 FTA 체결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에 더해 아세안은 중국과 2년간 집중 협상을 통해 2025년 5월 기존 ACFTA 2.0을 CAFTA 3.0으로 개정했다. CAFTA 3.0은 기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그린(친환경), 공급망, 영세·중소기업(MSMEs), 경쟁과 소비자 보호, 표준 및 인증, 세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검역(SPS), 경제·기술협력 등

209) Kotra(2024a), p. 22.

210) Ernst, Young, and FIA(2024), pp. 20-21.

211) Kotra(2024a), p. 61.

의 분야를 새로 추가하거나 고도화하였다.²¹²⁾ 이는 아세안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협력 확대를 지지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공급망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독자적으로도 CPTPP(2019년 발효)에 가입하고 EU(2020년 발효) 및 EEU(2016년 발효)와도 다자 FTA를 발효시켰다. 베트남은 미국이 주도해 2024년부터 발효한 IPEF(무역 필라 제외)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영국과 FTA를 체결(2021년 발효)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는 2023년, UAE와는 2024년 FTA 협상을 완료하고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넷째, 베트남 역시 최근 ESG 강화, 환경 규제, 기후변화 대응 등의 글로벌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개정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과 「개정노동법(Law No. 45/2019/QH14)」을 통해 ESG 실천 방안이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법(No. 50/2010/QH12)」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에 에너지 절약 계획이나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No. 06/2022/ND-CP)을 통해 배출량 보고와 배출량 거래 제도를 정비하였다(표 4-30 참고). 또한 베트남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COP 26)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것을 천명하였고, COP 28을 통해서도 국제 파트너 그룹과 함께 JEPT(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동원계획(RMP)도 발표하였다.²¹³⁾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토림 공산당 총비서 중심의 신지도체제 등장과 이로 인한 대대적인 일련의 개혁 및 개편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은 2023년 이후 공산당 정치국원(국가권력서열 1~18위로 구성)의 연이은 사임과 권력서열 1위 응우옌푸쑹(Nguyen Phu Trong) 총비서의 사망(2024년 7월) 등 정치지형 변화를 겪은 후 2024년 8월 토림을 총비서로 선택하였다. 2024년

212)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2024. 10. 10.), pp. 3-5.

213) Ernst, Young, and FIA(2024), pp. 22-24.

표 4-30. 베트남의 환경 규제 주요 내용(2024년 기준)

건물 및 공장 에너지절약 규제	온실가스(GHG) 배출량 보고제도
【법규】 에너지절약법(No. 50/2010/QH12) 【대상】 No. 1011/QD-TTg에 기재된 3,491개 시설 【내용】 - 에너지 절약 관련 연차 계획 및 5개년 계획 작성 - 에너지관리사 배치 - 3년마다 에너지 진단 실시 - EMS 적용 - 신축 및 개보수 시 규정 준수	【법규】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No. 06/2022/ND-CP) 【대상】 No. 13/2024/QD-TTg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내용】 2년마다 다음 의무(제11조) - 활동 데이터 제공(2023년 이후) - 온실가스 재고목록(inventory) 작성 및 보고서 제출(2025년 이후)
국내 배출량 거래제도	탄소세 제도
【법규】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정부령(No. 06/2022/ND-CP) 【대상】 No. 13/2024/QD-TTg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내용】 총배출량과 최신 재고물량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자원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매년 배출량 할당(제12조, 2026년 시작)	- 존재하지 않음 - 관련 제도로서 ‘환경보호세법(57/2010/QH12)’이 가솔린, 디젤, 석탄 등을 대상품목으로 설정. 현재는 가솔린·오일 등의 세율이 50% 감액(42/2023/UBTVQH15)

자료: 環境省(2025), p. 10.

5월에는 전타잉만(Tran Thanh Man)이 국회의장에 선임되었고, 2024년 10월에는 르엉끄영(Luong Cuong) 서기국 상무위원이 국가주석에 올라 기존의 팜밍징(Phạm Minh Chính) 총리와 함께 신지도체제가 완성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짧은 기간 동안 전임 응우옌푸쫑 총비서와 당시 공안부 장관이었던 토럼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 당내 권력 다툼, 최근 도입된 사퇴 문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주석 3명, 국회의장, 서기국 상무위원 등 정치국원 10여 명이 교체되는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겪었다.²¹⁴⁾ 토럼 신지도체제는 반부패 캠페인으로 혼란했던 정국을 안정시키고 행정 간소화와 효율화를 증진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적을 배제하고 특히 공안관계자 중심의

214) 당시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재완(2024)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히 해 2026년 1월로 예정된 제14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또렷 총비서의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지도체제를 구축한 또렷 총비서는 2025년 들어 △정부, 국회, 당 등 중앙 통치기구 재편(3월) △지방행정조직 재편(63개 성·시를 34개 성·시로 통합하고 제2급 행정 폐지) △공무원 대폭 감축(2025년 10만 명, 최종적으로 200만 명 중 20% 감축 예정) △민간 부문 중심의 국가 발전, 과학기술과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 국제통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또렷 총비서가 2025년 5월 발표한 민간 부문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68호(Resolution No. 68/2025/NQ-TW)는 가장 주목받는 경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의안 제68호는 베트남이 건국 100주년(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1인당 GDP 18,000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 대신 민간 부문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민간 부문이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및 디지털 대전환의 선구자가 되기 위한 2030년까지의 단기 목표와 2045년까지의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단기 목표는 민간 기업 수 200만 개 육성(인구 1,000명당 20개), GVC 참여 대기업 수 20개 이상, 민간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 10~12% 이상, GDP 55~58% 및 국가예산 수입 35~40% 기여, 총고용창출의 84~85% 담당, 연간 노동생산성 8.5~9.5% 개선, 아세안 3대 및 아시아 5대 기술·혁신능력·디지털 대전환 수준 달성 등으로 설정하였고, 장기 목표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 300만 개 이상 육성과 GDP의 60% 기여 등을 제시하였다.²¹⁵⁾ 이에 더해 재정 및 세제 우대, 자금 조달 확대, 토지 및 부지 제공, 절차 간소화, 1만 명의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임도 강조하였다.²¹⁶⁾

215) "Resolution 68 benefits both domestic and FDI enterprises, expert says"(2025. 5. 20.)
(검색일: 2025.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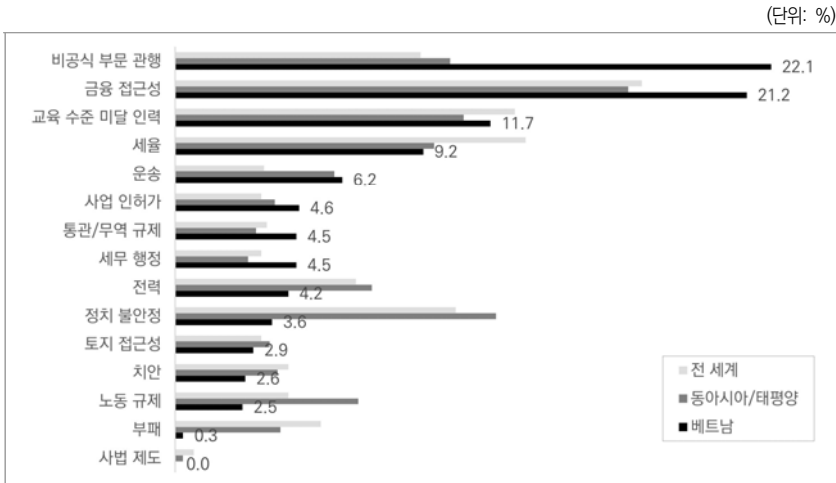
곧이어 베트남 국회는 민간경제 개발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에 관한 결의 제198호(198/2025/QH15)를 승인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 제198호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에 대한 우대 조치,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재 교육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결의안 제68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럼 신지도체제는 정치국 결의안 제68호 발표 이후로 과학기술의 발전, 혁신,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국 결의안 제57호(Resolution No. 57/2024/NQ-TW),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는 국제통합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국 결의안 제59호(Resolution No. 59/2025/NQ-TW), 개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국 결의안 제66호(Resolution No. 68/2024/NQ-TW)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북고속철도를 포함한 물류 인프라 개발을 재개한 데 이어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 8)을 개정해 원자력 개발을 재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지도체제의 일련의 경제개혁은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진출 기업 애로사항

베트남에서는 주로 비공식 부문 관행, 금융 접근성, 근로자 교육 부족, 세율, 수송 등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내 기업주나 최고 경영자의 22.1%와 21.2%는 각각 비공식 부문 관행과 금융 접근성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근로자 교육 부족에 대해서도 11.7%가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4-2 참고). 이러한 설문 결과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금융산업의 발전이 경제성장 속도에 못 미치며, 개발도상국으로서

216) 緒方亮介(2025), p. 16.

그림 4-2. 베트남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3년 기준)



주: 1)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 판매 및 수리, 도소매, 호텔 및 레스토랑, 수송 및 보관, IT 분야 기업(5명 미만 고용 기업이나 100% 국유기업 제외)의 기업주나 최고 경영자 1,02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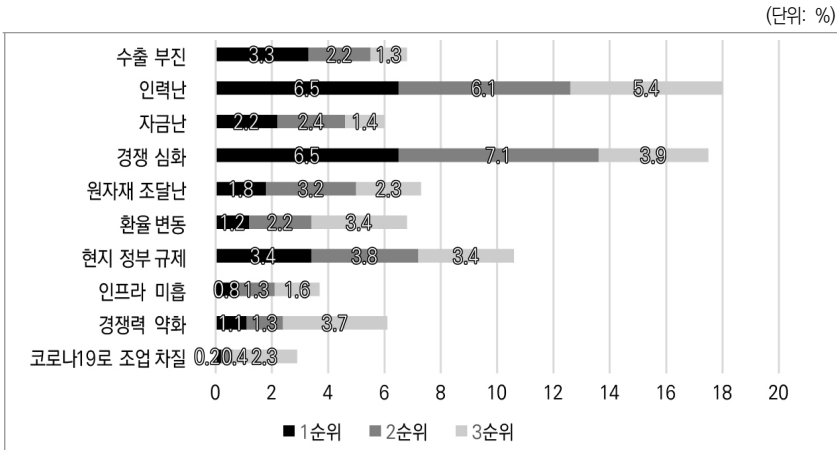
2) 해당 수치는 각 항목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임.

자료: The World Bank,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검색일: 2025. 7. 29.).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더딘 것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1순위 응답 기준으로 현지 수요 부진(전체의 7.7%), 인력난(6.5%)과 경쟁 심화(6.5%), 현지 정부 규제(3.4%), 수출 부진(3.3%)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1~3순위까지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면 인력난(18.0%), 경쟁 심화(17.5%), 현지 수요 부진(14.3%), 현지 정부 규제(10.6%), 원자재 조달난(7.3%), 수출 부진(6.8%)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느린 내수시장 발전 속도, △숙련 노동력 부족, △활발한 외자기업 진출에 따른 특정 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 및 빈번한 외자기업 간 경쟁적 채용, △최근 탈중국 다국적 기업 및 중국계 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른 경쟁 심화, △정부 규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규제 중 인허가, 세무 부담, 소방 안전, 환경, 불투명한 관행 등을 가장 민감하고 영

그림 4-3.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주: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업 186개, 서비스업 143개, 광업 4개 등을 포함한 총 33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7~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박병열, 최영미(2024), p. 50.

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¹⁷⁾

베트남 정부가 최근 FDI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점 역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법인세와 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으나 최근 FDI 유입이 활발하고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첨단업종이나 소재·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업종, R&D나 혁신 프로젝트 또는 대규모 투자, 최소 산업단지 임대면적 등의 투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²¹⁸⁾ 베트남 역시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시행하기 위한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와 소득산업규칙(IIR)을 도입함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한 일정 조건 이상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은 최소 15% 이상으로 높아졌다.²¹⁹⁾

217) 박병열, 최영미(2024), p. 52.

218)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24), pp. 191~192.

219) 2024년 이전까지 베트남에 대규모나 첨단 분야 투자를 실시하는 다국적기업은 4년간 법인세 면제와 추가 9년간 법인세율 5% 적용 등의 혜택을 받았다. 위의 자료, p. 198.

5)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 방향

한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중요성과 전략적 활용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베트남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최대 해외생산거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와 신발 등 주요 업종별로도 이미 글로벌 생산 허브나 동아시아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은 해외 생산 네트워크 구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생산비용이 저렴하다.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통해 양국 모두 특정국(특히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관리할 수도 있다. 베트남에 구축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이 대베트남 생산 네트워크 확장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유망 업종들을 [표 4-31]에 정리하였다. 이 업종들은 전문가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KIEP의 설문조사(2025년 7~8월, 제3장 제3절)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었다. 이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구축된 업종(가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와 신발)에 더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베트남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의약품 등이 새로운 유망한 업종으로 제시되었다. 이 분야들은 베트남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출선 다각화, 현지조달률 향상, 산업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트남 내수시장에서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베트남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표 4-31.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베트남

업종	배경	정책 목표 또는 과제
자동차	- 풍부한 성장 잠재력(내수+수출) -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진행 - 베트남 정부의 전략적 육성	- 현지 시장(1억 명) 및 아세안 시장(6.8억 명) 진출거점화 - 중국 견제 및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반도체	- 베트남 정부의 전략적 육성 - 다국적기업 및 한국기업의 투자 시작	- 첨단분야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다변화 - 미중 전략경쟁 대비 리스크 관리
전기전자 (가전)	- 베트남 정부의 전략적 육성 - 글로벌 생산 허브로 부상 -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2025년 3월, 누적 기준) 중 최대 투자 업종(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 포함) ○ 한국 주요 기업이 아시아 총괄 생산 허브로 활용 중	- 글로벌 생산거점화 전략 강화 - 중국 보완/대체 생산 네트워크 구축 - 내수 및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디스플레이	- 동아시아 생산 허브로 부상 - 전후방 분야로 한국기업 진출 활발	- 중국 보완/대체 생산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구조 개편
석유화학	- 풍부한 성장 잠재력(내수+수출) - 베트남 정부의 적극 육성	- 내수 및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 국내 구조 개편
조선	- 풍부한 성장 잠재력(내수+수출) - 베트남 정부의 적극 육성	- 현지 시장 및 아세안 시장 진출거점화 - 국내 구조 개편
의약품	- 풍부한 성장 잠재력(내수+수출) - 베트남 정부의 적극 육성	- 내수시장 및 아세안 시장 진출거점화 - 국내 구조 개편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생산 허브로 부상 - 대만계 EMS 및 중국기업의 진출 가속화	- 글로벌 생산허브 강화 - 중국 보완/대체 생산 네트워크 구축
섬유·의류, 신발	- 베트남 정부의 업종 고도화 - 글로벌 생산 허브로 부상 - 한국의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 중 약 20% 차지	- 글로벌 생산허브 강화 -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및 고도화 - 국내 구조 개편

자료: 저자 작성.

가)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최근 베트남은 단순 조립 위주의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중간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핵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며,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비하고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니즈를 결합하여 베트남의 제조업 생태계 조성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을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대체지이자 보완지로 육성하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베트남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를 비롯한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표적인 협력 모델인 한·베 기술대학과 한·베 산업기술대학의 규모를 키우거나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현지 인력의 기술 및 숙련도 향상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정착과 현지화를 돕고 베트남 민간 기업의 가치사슬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한국 베트남 양국 간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디스플레이 수출 확대와 중·아세안 FTA(CAFTA) 3.0 체결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 확대로 베트남 제조업이 위축되고 현지 기업이 폐쇄되는 등 고용과 생산 측면의 타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베트남의 지원산업 육성 정책과 같이 베트남의 중간재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국의 대중국 의존도 감축과 공급망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셋째, 이미 구축된 베트남 내 주력 생산기지를 바탕으로 공급망의 범위를 다변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전기·전자, 섬유·의류,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량, 에너지(원자력·신재생), 핵심 광물자원, 디지털, 넷-제로, 방산 등으로 협력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정비, 디지털 전환(DX), 그린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여 공급망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베트남 정부가 중소기업 함정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치국 결의안 제68호'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및 한국형 대기업 육성 정책을 양국 공급망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정치국 결의안 제68호는 베트남 정부가 아세안의 많은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 함정과 미성숙 탈공업화를 극복하고 고소득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도이머이에 버금가는 제2의 개혁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한국은 대기업 육성에 필요한 성장 노하우 전수, 세부 로드맵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 대기업과 베트남 민간 기업 간의 기술 이전, 인력 교류, 벤처캐피탈(VC) 연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 민간 부문의 성장을 돕는 이와 같은 파트너십은 궁극적으로 현지 가치사슬을 더욱 끈끈하게 연결하여 양국 공급망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나)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국의 최대 ODA(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인 베트남에 유무상 공적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과거 소규모 ODA 지원 시절에는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통상환경 정비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한국의 ODA 규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일찍이 대규모 ODA로 자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지원해 온 일본의 사례처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서비스 연계 비용(SLC)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직간접적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적자금 투입 방안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베트남의 민간경제 육성과 제조업 고도화 분야에 ODA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지원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고

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성장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책 컨설팅, 전문가 파견,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제공하여 베트남의 산업 전환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 경제의 취약점인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ODA를 통한 전문 기술 전수와 직업훈련은 베트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현지 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셋째, 베트남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략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DX)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같은 물류 인프라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의 재원과 기술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참여함으로써, 베트남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넓혀야 한다.

넷째,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서비스 연계 비용(SLC) 절감과 직접 연계된 분야에 ODA를 집중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밀집한 거점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통상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규제 완화를 ODA 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對)베트남 ODA 확대는 현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의 투자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고도의 경제 협력 전략이다. 이는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촉진하고 비즈니스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베 양국 간의 공급망을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견고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 한·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한·베트남 공급망을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역내 공급

망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시급하다. 아세안은 풍부한 인구 구조와 투자 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²²⁰⁾ 소득 증대와 중산층 확대로 거대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이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를 통해 경제통합 심화와 역내 교역·투자 확대를 본격화함에 따라, 한·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전역으로 확장할 최적기를 맞이했다.

또한, 정부의 아세안 협력 기조 역시 강력한 배경이다. 과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심이던 한·아세안 협력은 베트남과의 성공적인 경제협력을 거치며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현재 베트남은 한·아세안 무역과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해외 생산기지이다. 현 정부 역시 신남방정책(NSP)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성과를 계승하며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확대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베트남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를 아세안으로 확장하는 것은 한·베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세계 5대 경제권으로 도약할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는 다각적 리스크 분산 전략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은 이미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한 상태이므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아세안 역내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충족과 비관세장벽 해소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가 아세안 회원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및 제도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지 우리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디지털 통상 환경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 아세안 경제통합의 핵심 축인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디지털 결제 및

220) 石川幸一(2025. 4. 14.), 「投資先としてのASEANの評価と相互関税」(검색일: 2025. 9. 11.).

데이터 인프라 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베트남 공급망이 아세안의 디지털 가치사슬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 통관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원산지 세탁 방지를 위한 단속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제3국 우회수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대미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동시에 통관 효율화를 통해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의 신뢰도를 결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 인도네시아

1) 배경 및 중요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변화와 안정성 차원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인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리더이자 대표적인 신흥 성장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 세계 4위(약 2억 7천만 명)의 내수시장, 중위연령 30세의 젊은 노동력, 아세안 최대 천연자원 보유국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다양한 제도 개혁을 활용하며 FDI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의 편입을 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내생적인 장점과 개혁 정책 외에도 미중 경쟁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요인들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구도하에서 인도네시아는 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아태지역의 리더 국가이자 대표적인 전략적 중립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탈중국 현상이 시작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과정에서 풍부한 인력과 자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노동집약

적 제조업은 물론 EV,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서도 자원 및 시장 확보를 위한 한·중·일의 경쟁이 심화되는 무대라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은 이미 한국과 높은 수준의 생산 네트워크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 국가 중 생산 네트워크를 가장 성공적으로 구축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과 투자의 약 40%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베트남 간 생산 네트워크는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와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으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양국의 생산 네트워크는 대체로 우회수출기지 역할에 집중되어 있어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향후 한국과 글로벌사우스 국가 간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은 기존의 우회수출 기지 확보는 물론 신규 시장 선점까지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베트남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최대 시장, 젊은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요구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모두 갖춘 인도네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인도네시아는 시장, 노동력, 자원 등 풍부한 생산 요소 이외에도 한국의 글로벌 경제외교 파트너로서의 잠재력도 갖추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리더, G20, BRICS 회원국, 이슬람권 최대 민주국가 등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인 헤징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향후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구축할 경제외교 파트너십이 미중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도를 확보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급 혹은 고위급 대화 채널 기반의 경제협력위원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에너지 포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이슈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지속 운영해왔다. 이러한 경제대화체는 신남방정책, 한아세안연

대구상(KASI) 등 한국의 주요 대외전략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 간의 상호보완적 매칭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협력 기반 위에서 실행된 양국의 적극적인 경제외교 협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상 최대 투자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2023년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를 발효하고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승격시키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한-인도네시아 생산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우회수출기지 확보를 위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물론, 한국의 주력 중후장대형 산업(철강·화학)과 미래형 신산업(배터리·전기차)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선점, 산업 고도화 및 아세안 역내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 산업, 무역, 투자 구조 변화 및 특성

가) 산업

[표 4-32]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조업(18.7%)이 최대 산업이며, 도소매·자동차 수리(12.9%), 광업업(10.5%), 건설업(9.9%), 농수산업(9.2%)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6~23년간 가장 큰 등락을 보인 산업은 광업업으로, 2016년 7.2%에서 2020년 6.4%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2년 12.2%까지 급증한 후 2023년 10.5%에 이르렀다.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 및 대내외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광업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2022년 러-우 전쟁 발발로 원자재 공급망 부진이 발생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자재 공급 여건이 양호한 인도네시아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 광업업의 세부 업종은 ① 원유·천연가스·지열, ② 석탄, ③ 철강, ④ 기타 광업업 등 네 분야로 구성된다. 2016년에는 원유·천연가스·지열이 약 41%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24%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석탄은 2016년

표 4-32.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수산업	10.2	9.9	9.6	9.4	10.2	9.9	9.2	9.2
광업	7.2	7.6	8.1	7.3	6.4	9.0	12.2	10.5
제조업	20.5	20.2	19.9	19.7	19.9	19.2	18.3	18.7
전력 · 가스	1.1	1.2	1.2	1.2	1.2	1.1	1.0	1.0
수도 · 폐기물	0.1	0.1	0.1	0.1	0.1	0.1	0.1	0.1
건설업	10.4	10.4	10.5	10.7	10.7	10.4	9.8	9.9
도소매 · 자동차 수리	13.2	13.0	13.0	13.0	12.9	13.0	12.8	12.9
운송 · 창고	5.2	5.4	5.4	5.6	4.5	4.2	5.0	5.9
숙박 · 식음료	2.9	2.8	2.8	2.8	2.6	2.4	2.4	2.5
정보통신	3.6	3.8	3.8	4.0	4.5	4.4	4.1	4.2
금융 · 보험	4.2	4.2	4.2	4.2	4.5	4.3	4.1	4.2
부동산	2.8	2.8	2.7	2.8	2.9	2.8	2.5	2.4
사업서비스	1.7	1.8	1.8	1.9	1.9	1.8	1.7	1.8
공공행정 · 국방	3.8	3.7	3.7	3.6	3.8	3.5	3.1	3.0
교육	3.4	3.3	3.2	3.3	3.6	3.3	2.9	2.8
보건 · 사회사업	1.1	1.1	1.1	1.1	1.3	1.3	1.2	1.2
기타 서비스	1.7	1.8	1.8	2.0	2.0	1.8	1.8	1.9
GDP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5. 9. 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26%에서 2023년 51%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국제 석탄 가격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업종인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기계, 전기 ·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아닌 식음료와 석탄 · 석유 관련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표 4-33 참고). 이는 현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육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4-33.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식음료	29.1	30.5	31.5	32.5	34.5	34.3	34.5	35.1
석탄 · 석유	11.3	11.3	11.3	10.8	10.0	9.8	10.1	10.3
화학 · 의약품	8.8	8.6	8.1	8.5	9.7	10.4	9.9	9.4
전기 · 전자	9.5	9.2	8.7	8.5	8.2	7.9	7.9	8.4
운송장비	9.3	9.0	8.9	8.3	6.8	7.7	7.9	8.0
섬유 · 의류	5.6	5.5	5.7	6.4	6.1	5.5	5.6	5.2
기초 금속	3.5	3.6	3.8	3.7	3.9	4.2	4.7	5.0
담배	4.6	4.5	4.5	4.5	4.4	4.1	3.8	3.8
제지	3.5	3.5	3.5	3.5	3.6	3.5	3.6	3.6
비금속 광물	3.5	3.3	3.2	3.0	2.8	2.7	2.5	2.5
고무	3.1	3.1	3.1	2.8	2.7	2.7	2.4	2.2
목재	3.1	3.0	2.8	2.6	2.6	2.3	2.2	2.1
기계류	1.6	1.6	1.6	1.5	1.4	1.5	1.5	1.4
가족 · 신발	1.4	1.4	1.4	1.4	1.3	1.3	1.3	1.3
가구	1.3	1.2	1.2	1.3	1.3	1.3	1.2	1.1
기타 제조업 및 수리	0.8	0.8	0.7	0.7	0.8	0.7	0.7	0.6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5. 9. 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표 4-34]의 산업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28.2%) 내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크고, 도소매 · 자동차 수리(19.0%), 제조업(13.8%), 숙박 · 식음료(7.7%) 순으로 나타난다.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은 다수 동남아 국가들의 공통적 현상으로,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 농림수산업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의 노동 이동이 가능한 여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농림수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2016년 31.9%에서 2019년 27.5%로 감소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6년 13.1%에서 2019년 14.9%로 소폭 증가했으며, 숙박 · 식음료 및 도소매 · 자동차 수리 부문 근로자 비중은 2016년 22.5%에서 2019년 25.5%로 제조업보다 증가폭이 더 컸

표 4-34.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림수산업	31.9	29.7	29.0	27.5	29.8	28.3	28.6	28.2
광업	1.2	1.1	1.2	1.1	1.1	1.1	1.1	1.2
제조업	13.1	14.1	14.7	14.9	13.6	14.3	14.2	13.8
전기·가스	0.3	0.3	0.3	0.3	0.2	0.2	0.2	0.2
상수도·폐기물	-	-	0.4	0.4	0.4	0.4	0.4	0.4
건설업	6.7	6.7	6.7	6.7	6.3	6.3	6.3	6.6
숙박·식음료	22.5	23.3	6.1	6.7	6.7	7.0	7.1	7.7
도소매·자동차 수리	-	-	18.6	18.8	19.2	19.6	19.4	19.0
운송·창고	4.7	4.8	4.3	4.4	4.4	4.2	4.3	4.4
정보·통신	-	-	0.7	0.7	0.7	0.8	0.7	0.7
금융·보험	3.0	3.1	1.4	1.4	1.2	1.2	1.2	1.2
부동산업	-	-	0.3	0.3	0.3	0.3	0.3	0.3
기업서비스	-	-	1.3	1.5	1.4	1.5	1.7	1.7
행정·국방·사회보장	16.4	16.9	3.8	3.8	3.6	3.7	3.6	3.5
교육서비스	-	-	4.9	5.0	4.7	5.0	4.8	4.9
보건·사회활동	-	-	1.5	1.5	1.6	1.7	1.7	1.6
기타 서비스업	0.0	0.0	4.8	4.9	5.0	4.4	4.5	4.6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까지는 10개 업종, 2018년부터는 17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었음.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5. 9. 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다.221) 이 중에서도 업종 특성상 숙련·정규직 비중이 높은 도소매·자동차 수리 부문의 근로자 비중 변화는 크지 않지만, 비정규 미숙련 비중이 높은 숙박·식음료 부문 근로자 비중은 2018년 6.1%에서 2023년 7.7%까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의 기본 인프라는 전체 조사 대상 67개국 중 22위로 중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항목별로는 국내생산 총에너지(6위), 1인당 최종에너지 총소비

221) 동 업종은 2017년까지는 '도소매 및 숙박'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부터 '숙박·식음료'와 '도소매·자동차 수리'로 세분화되었다.

량(6위), 공업용 전력 비용(9위) 등에서 상위권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에너지 부문에서 인도네시아가 에너지의 국내 생산 비중이 높으며 1인당 소비량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최종에너지 총소비량(57위), 철도 네트워크(54위), 도로 네트워크(42위) 등에서는 하위권 순위를 기록했는데,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이 크고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밀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대체로 모든 지수의 순위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 운영, 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항공수송의 질, 상품과 서비스 유통 인프라 효율성,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등에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표 4-35. 기본 인프라 국제경쟁력 순위: 인도네시아 vs. 한국

(단위: %)

구분	인도네시아		한국	
	2024	2019	2024	2019
수자원 접근성과 관리 정도	40	50	5	22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 운영	18	37	4	17
도로 네트워크(km/km ²)	42 ³⁾	44 ⁵⁾	28 ³⁾	26 ⁵⁾
철도 네트워크(km/km ²)	54 ⁴⁾	54 ⁶⁾	18 ⁴⁾	23 ⁶⁾
주요 항공사 탑승객 수	11 ²⁾	8 ⁶⁾	10 ²⁾	14 ⁶⁾
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항공 수송의 질	29	41	4	11
상품과 서비스 유통 인프라 효율성	29	51	3	16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25	47	12	27
국내생산 총에너지 ¹⁾	6 ³⁾	7 ⁵⁾	27 ³⁾	26 ⁵⁾
총필요량 중 국내생산 비중 ¹⁾	11 ³⁾	10 ⁵⁾	59 ³⁾	56 ⁵⁾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57 ³⁾	54 ⁵⁾	59 ³⁾	55 ⁵⁾
1인당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6 ³⁾	6 ⁵⁾	55 ³⁾	53 ⁵⁾
공업용 전력 비용(\$/kwh)	9 ⁴⁾	10	15 ⁴⁾	10

주: 1) 생산량이 높을수록, 국내생산 비중이 클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2) 소비량이 낮을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3) 2021년 기준. 4) 2022년 기준. 5) 2016년 기준. 6) 2017년 기준. 7) 각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2024년은 전 세계 67개국 대상, 2019년 또는 이전 연도는 전 세계 63개국 대상 등 수임.
자료: IMD(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 IMD(2019),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를 토대로 작성.

표 4-36. 인도네시아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식물성 유지	11.8	석탄, 코크스 및 브리켓	13.0	석탄, 코크스 및 브리켓	16.8
2	석탄, 코크스 및 브리켓	10.0	식물성 유지	9.8	철강	10.7
3	의류 및 액세서리	5.2	의류 및 액세서리	5.1	식물성 유지	9.6
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4.9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4.9	금속광물 및 고철	6.7
5	기타 제조품	4.5	도로용 차량	4.8	도로용 차량	4.3
6	석유 및 관련제품	4.4	철강	4.7	전기기기 및 부품	3.6
7	도로용 차량	4.0	전기기기 및 부품	3.7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3.4
8	전기기기 및 부품	3.8	금속광물 및 고철	3.3	기타 제조품	3.3
9	금속광물 및 고철	3.6	유기화학제품	3.3	의류 및 액세서리	3.2
10	유기화학제품	3.3	기타 제조품	2.8	유기화학제품	3.1
	계	55.6	계	55.4	계	64.6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표 4-37. 인도네시아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석유 및 석유제품	12.7	석유 및 석유제품	11.5	석유 및 석유제품	14.6
2	전자제품	6.3	일반 산업 기계	6.7	전자제품	6.8
3	기계류	6.2	철강	6.4	일반 산업 기계	6.1
4	철강	5.1	전자제품	5.9	철강	5.9
5	전문 기계류	4.4	통신 및 음향기기	4.8	도로용 차량	4.5
6	통신 및 음향기기	4.4	전문 기계류	4.2	전문 기계류	4.3
7	섬유·직물	4.3	섬유·직물	3.9	통신 및 음향기기	4.0
8	도로용 차량	3.7	도로용 차량	3.9	섬유·직물	2.8
9	플라스틱	3.5	플라스틱	3.4	곡물	2.8
10	유기화학품	3.3	유기화학품	3.3	유기화학품	2.8
	계	54.1	계	54.2	계	54.7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나) 무역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10대 수출 품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철강과 석탄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석탄은 2016~23년간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2016년에는 상위 10대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인 포스코-크라카타우의 조강 능력 향상으로 인해 2019년부터 10대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2023년에는 전체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2위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 2016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식물성 유지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 팜유(Palm Oil)로 추정되며, 2023년 기준 수출 비중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출 품목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류 및 액세서리는 동남아 개도국의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나 수출 비중은 2016년 5.2%에서 2023년 3.2%로 감소해 인도네시아의 수출 구조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상위 수입 품목에는 석유·전자·기계·철강 등 산업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대다수 품목의 수입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 비중 증가와 섬유·식물의 수입 비중 감소가 주목할 만하다. 최대 수입 품목인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비중은 2019년 11.5%에서 2023년 14.6%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비해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또한 섬유·식물의 수입 비중이 2016년 4.3%, 2019년 3.9%, 2023년 2.8%로 감소했는데 이는 의류 수출 비중 감소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국별 수출 비중은 상위 5대 수출 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2016년 상위 수출 대상국은 중국 11.6%, 미국 11.2%, 일본 11.1%로 유사한 수준이었

으나, 이후 대중 수출 비중이 2019년 16.7%, 2023년 25.1%로 크게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 증가는 상위 수출 품목인 석탄, 철강, 식물성 유지, 금속광물 및 고철의 대중 수출 비중이 각각 66.6%, 34.5%, 17.0%, 4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23년간 인도네시아의 5대 상위 수입 대상국의 비중은 50%대 중반을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위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물류성과지수(LPI)는 2016년 63위, 2019년 51위, 2023년 61위로 중위권 수준에서 소폭 등락해왔다. 상대적으로 물류 경쟁력이 높은 편인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일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LPI 순위가 51위로 향상되었던 시기에 국제선적(71위→51위), 정시성(61위→49위) 등 지수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주목을 끄는데, 이는 2018년 인도네시아의 대외무역이 전년대비 약 13.4% 증가한 점과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상 국제선적 부문은 양호한 순위를 기록한 반면, 상대적으로 물류 질적 수준 및

표 4-38.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11.6	중국	16.7	중국	25.1
2	미국	11.2	미국	10.7	미국	9.0
3	일본	11.1	일본	9.5	일본	8.0
4	싱가포르	7.8	싱가포르	7.7	인도	7.8
5	인도	7.0	인도	7.1	싱가포르	4.9
	계	48.7	계	51.6	계	54.8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경쟁력과 정시성 부문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대외무역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류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39.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22.7	중국	26.2	중국	28.4
2	싱가포르	10.7	싱가포르	10.3	싱가포르	8.3
3	일본	9.6	일본	9.1	일본	7.4
4	태국	6.4	태국	5.5	미국	5.1
5	미국	5.4	미국	5.4	말레이시아	4.9
	계	54.8	계	56.6	계	54.1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표 4-40. 인도네시아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구분	인도네시아				한국		
	2023		2018	2016	2023	2018	2016
	세계	아세안					
LPI 종합 순위	61	6	51	63	17	25	24
통관	59	6	62	69	7	25	26
인프라	59	6	61	73	9	22	20
국제선적	57	6	51	71	26	33	27
물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65	6	48	55	20	28	25
화물 추적	59	6	45	51	25	22	24
정시성	65	6	49	62	23	25	23

주: 2016, 2018년 수치는 160개 국가 중 순위, 2023년 수치는 139개 국가 중 순위, 2023년 아세안에 대한 수치는 아세안 10개국 중 순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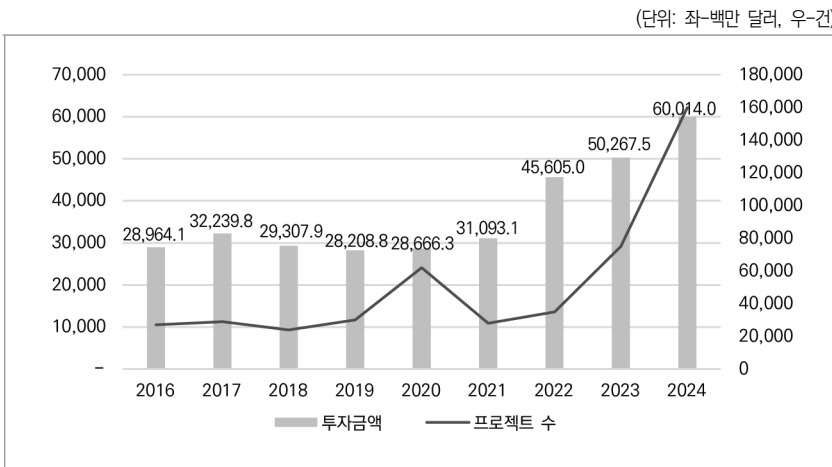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2023, 2018, 2016),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다) 투자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행액(Realization)은 [그림 4-4]와 같이 연간 300억 달러 내외에서 등락해왔으나, 2021년부터 연평균 약 20% 증가해 2024년 기준 프로젝트 수 약 16만 건, 투자액 약 6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투자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표 4-41]과 같이 싱가포르,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상위 5대 투자 국가가 전체 투자 유치액의 약 77%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투자국인 싱가포르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투자 허브 국가로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 혹은 간접투자 경유지 역할을 수행하며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부동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연평균 15% 증가해 2016년 3위에서 2023년

그림 4-4.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5. 9. 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며, 2016년 2위 투자국이었던 일본의 투자 규모는 연평균 5% 감소해 투자 순위가 4위로 하락했다. 중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증가는 일대일로 정책을 활용한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최근 니켈 광산 개발 및 제련 시설 관련 투자의 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최대 투자 업종인 금속·장비에 대한 투자는 2020년부터 크게 증가했는데, 동 시기 인도네시아가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와 제련소 설치 의무화를 통한 다운스트림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운송·창고·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는 인도네시아가 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점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부가가치 제조업인 기계·전자 부문이나 자동차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3~4%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규모에 머물러 있고, 최대 투자 업종이었던 광업의 비중은 2017년 13.6%에서 2023년 9.4%로 소폭 감소했다.

표 4-41.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2016		2019		2023		2024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싱가포르	31.7	싱가포르	23.1	싱가포르	30.5	싱가포르	33.5
2	일본	18.6	중국	27.1	중국	27.7	중국	27.2
3	중국	17.0	일본	15.3	일본	9.2	미국	6.2
4	네덜란드	5.1	네덜란드	9.2	미국	6.5	일본	5.8
5	미국	4.0	한국	3.8	한국	5.1	한국	5.0
-	계	76.4	계	78.4	계	79.1	계	77.6

주: 중국은 홍콩을 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5. 9. 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표 4-42.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단위: %)

업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식량작물, 조림 및 가축	4.9	5.9	3.4	4.1	3.1	3.9	3.9
임업	0.1	0.1	0.1	0.1	0.1	0.2	0.2
어업	0.2	0.1	0.2	0.2	0.1	0.1	0.1
광업	13.6	10.4	8.0	7.0	12.3	11.3	9.4
식품	6.1	4.5	4.5	5.6	7.5	5.3	4.5
섬유	1.2	1.0	0.8	1.0	1.0	1.4	0.9
가죽 · 신발	1.1	0.8	0.7	0.7	1.6	1.4	1.6
목재	1.2	0.9	0.3	0.3	0.2	0.5	0.3
제지 · 인쇄	1.9	2.3	1.6	3.3	3.1	3.6	6.8
화학 · 제약	8.0	6.6	5.3	6.1	5.3	9.9	9.6
고무 · 플라스틱	2.0	1.5	1.0	1.0	0.8	0.8	1.1
비금속광물	2.1	1.6	1.7	0.9	1.1	1.2	1.0
금속 · 장비(기계 제외)	9.2	7.6	12.6	20.8	22.4	24.0	23.4
기계 · 전자 · 정밀 · 광학 기계	2.5	4.6	1.8	2.1	2.2	1.7	2.9
차량 · 기타운송	3.9	3.3	2.7	3.3	4.8	3.3	4.1
기타	1.6	0.6	0.9	1.0	0.8	0.9	0.8
전기 · 가스 · 수도	13.2	15.0	21.0	16.1	9.5	8.3	5.5
건설	0.7	0.8	0.6	0.7	0.3	0.4	0.6
무역 · 배상	4.0	2.1	1.5	1.5	1.5	1.6	1.9
호텔 · 레스토랑	3.4	3.0	2.2	1.5	1.4	1.1	1.6
운송 · 창고 · 통신	5.9	10.3	16.8	12.5	10.2	9.0	11.2
주택 · 산업단지 · 빌딩	10.0	14.7	10.2	7.6	7.0	6.6	5.1
기타서비스	3.1	2.4	2.2	2.6	3.8	3.4	3.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2017년부터 23개 업종 분류를 제공하며, 실현액(Realization)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검색일: 2025. 9. 25.)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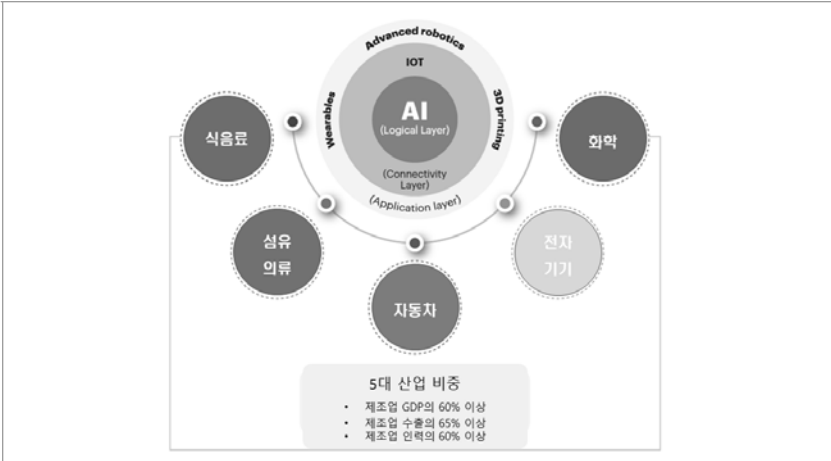
3) 주요 산업 · 통상 정책 변화 및 특성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 해온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1970~80년대 오일머니로 획득한 수익을 내수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980년대 중반 오일붐 종료 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구조 조정과 수출 정책을 개선했으나 성과는 단기에 그쳤다. 2000년대에는 아세안 차원에서 다수의 FTA를 체결한 무역 자유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면서 자원민족주의적인 원자재 수출 통제가 시작되었다. 유도요노 정권(1기 2004~09년, 2기 2010~14년)에는 경제특구(SEZ) 설치를 통한 수출 제조업 육성을 본격 추진했으나, 기존 석유 ·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후임 조코위 정권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조코위 정권(1기 2014~19년, 2기 2020~24년)은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및 인프라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특히 전략 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전략인 'Making Indonesia 4.0'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광물 수출통제를 통한 다운스트림 육성책(Hilirisasi), 국산부품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의무화, 수입사전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 등 다양한 정책을 이행 중이다. 현재 프라보워 1기 정부(2025~29년)는 대체로 전임 조코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ing Indonesia 4.0은 ① 식음료, ② 섬유 · 의류, ③ 자동차, ④ 전기 · 전자, ⑤ 화학을 5대 전략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GDP 기여 60% 이상, 제조업 수출의 60% 이상, 제

그림 4-5. 인도네시아의 Making Indonesia 4.0 기본 개념도



자료: Kementerian Perindustrian(2018), p. 4 발췌·인용.

조업 고용의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2030년경 인도네시아 순수출의 GDP 기여율 10% 달성, 생산성 2배 확대, GDP 2% 수준으로 R&D 예산 증액 등을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다.

Making Indonesia 4.0의 전략 산업별 주요 정책을 [표 4-43]에 정리하였다. 인도네시아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 부문의 경우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수출 산업으로의 육성도 꾀하고 있다. 섬유·의류 산업은 전통적으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업종으로 기존의 하류 부문 단순 봉제 역할에서 벗어나 상류 부문의 원료 및 원사 생산 역량도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은 주요 부품의 국내 생산을 통해 현지 자동차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수출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화학 부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부진한 분야로 수입대체를 위한 생산 능력 확충과 효율적인 생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

며, 세계 최대 팜유(Palm Oil) 생산 국가인 점을 활용한 바이오 화학 육성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 부문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기술 이전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부품 현지화를 통해 단순 조립 역할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위해 TKDN과 같은 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정책은 물론 인적 역량 강화와 국내 우수 기업 육성과

표 4-43. Making Indonesia 4.0의 7대 전략 산업별 주요 정책 내용

전략 육성 산업	주요 정책
식음료	① 첨단기술 도입 및 투자, 농업 생산성 향상
	②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SME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
	③ 포장 식품 부문 지원
	④ 아세안 역내 식음료 수출 허브로 육성
섬유·의류	① 고부가가치 원자재 상류 부문 역량 강화
	② 노동생산성 및 효율적 산업단지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③ 기능성 의류 및 혁신
	④ 국내외 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양적 성장
자동차	① 원자재 및 주요 부품의 국내 자급자족
	② 밸류체인 단계별 생산성 최적화
	③ 자동차 수출 허브로 육성
	④ 역내 전기차 생산 리더
화학	① 기초 화학제품 발전
	② 가스전 인근 산업단지 구축을 생산 최적화
	③ 밸류체인 단계별 생산성 향상
	④ 바이오화학 제조업 육성
전자	① 글로벌 기업 유치
	② 단순 조립 이상의 제조업 역량 강화
	③ 숙련 및 혁신 인력 양성
	④ 혁신 및 기술 이전 챔피언 기업 선정
의료기기	① 국산 비용 확대(마스크, 검사키트, 모니터링 장비 등)
	② CE, ISO 등 인증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
	③ 공공조달 국산 우대
	④ 헬스케어 제품 개발 지원
제약산업	① 국산 원료의약품(API) 생산 역량 확대
	② 백신, 바이오 의약품 국산화
	③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간소화
	④ 글로벌 기업과 기술 협력 지원

자료: Kementerian Perindustrian(2018), pp. 4-9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같은 정책도 추가하였다. 의료기기 및 제약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규로 추가된 분야로 국내 생산 역량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2025년 프라보워 행정부는 Making Indonesia 4.0을 잇는 신국가산업화 전략(SBIN: Strategi Baru Industrialisasi Nasional)을 발표했는데, 동 계획은 기존 Making Indonesia 4.0의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산업 고도화, 지속가능성,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4대 축을 구성했다. SBIN의 4대 축은 ① 천연자원 다운스트림 개발(Natural Resource Downstreaming), ② 디지털 및 첨단기술 추진(Digital & Advanced Tech Drive), ③ 녹색 및 순환 산업(Green & Circular Industry), ④ 인적 역량 및 중소기업 강화(Human Capital & SME Upgrade)로 구성된다. 첫째 축인 천연자원 다운스트림 개발은 기존 니켈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다운스트림 개발 정책을 26개 전략 원자재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 품목들의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정제·가공 및 완제품 생산까지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둘째 축인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부문은 기존 Making Indonesia 4.0에서 추진해온 AI 도입, IoT 연결 등 스마트 제조 지표를 확대하고, AI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슈퍼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가했다. 셋째 축인 녹색 및 순환 산업 부문은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간 부산물 순환 등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추구한다. 넷째 축인 인적자원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는 직업학교 및 폴리텍 확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B2B 플랫폼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광물 부문의 다운스트림 육성(Hilirisasi)을 통한 광업 분야의 국내 부가가치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는 기존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가공을 위한 제련소 및 기타 가공 공장 건설을 의무화해 국내 부가 가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유도요노 행정부 시절 추진된 「신광업법(2009년)」

을 시작으로 조코위 정권에서 시행한 원광 수출 금지 조치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2020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니켈 원광 수출이 금지되자 니켈 제련소가 50개 이상 건설되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까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졌다. 2024년 출범한 프라보워 정부는 규제 범위를 총 8개 섹터(광물, 석탄, 오일, 천연가스, 선박, 수자원, 플랜테이션, 삼림)와 28대 품목까지 확대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최대 20년 면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국부펀드 지분 투자 등)를 제공해 다운스트림 개발은 물론 광산 탐사 및 개발 관련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동 정책을 통한 다운스트림 육성에 성공할 경우 GVC에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기존의 원료 공급처에서 반제품·완제품 생산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부품 의무화 정책인 TKDN(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은 “국산 구성요소 비율”로 직역되며, 국내에서 생산·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부품, 기술, 노동력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정책이다. 동 정책은 인도네시아가 제조업 GVC에서 기존의 단순 조립 중심 다운스트림에서 벗어나 부품, 서비스, 기술 등 보다 상류 부문을 내부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정부 조달 사업, 통신, 인프라, 자동차, IT,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화를 요구한다. 국산화를 TKDN과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의무에 대한 평가인 BMP(Bobot Manfaat Perusahaan)를 합산해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통상 TKDN+BMP 형태로 40% 이상을 요구한다. TKDN은 일부 원자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적용되어왔으나, 2023년 3월부터는 규제 범위를 화장품, 가방, 철강 제품 등 18개 품목까지 확대했다.²²²⁾ 최근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륜차에 대한

222) TKDN을 적용받는 18개 업종: ① 농업 보조자재, ② 농업 기계·설비, ③ 석유·가스 기계·설비, ④ 광산 기계·설비, ⑤ 공장 기계·설비, ⑥ 건설·건자재, ⑦ 의약·의료(자재·장비), ⑧ 금속 및 화학, ⑨ 전자기기, ⑩ 전기설비·부품, ⑪ 통신장비, ⑫ 작업복·보호구, ⑬ 체육·교육 장비, ⑭ 중장비·건설·

TKDN 요건을 2026년 40%로 발표했으며, 2030년에는 80%로 인상할 계획이다.²²³⁾ TKDN은 국산화 정책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비관세 장벽으로도 인식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애플의 iPhone16이 TKDN 40%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입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애플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 협상을 통해 일부 제품 생산공장 투자 및 3억 달러 규모의 R&D 투자를 약속한 후 2025년 4월에 공식 판매가 허용되었다.²²⁴⁾ 이렇게 TKDN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자 2025년 7월 양국 상호관세 무역합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TKDN 완화 및 예외를 적극 요구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해 TKDN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²²⁵⁾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부터 일종의 수입 쿼터 제도인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를 시행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수입 품목을 자유 품목, 제한 품목, 금지 품목으로 구분하고 제한 품목에 대해 PI를 요구한다. PI 총량은 해당 품목의 연간 국내 수요-공급 물량을 집계해 그 부족분을 수입 필요 물량으로 산출하는 상품수급표제도(Neraca Komoditas)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상품수급표는 매년 해당 품목 수입 업체들의 신청에 기반해 작성되며 물량이 기준이 된다. PI는 태생적으로 수입 총량을 규제하고 배분하는 성격으로 인해 쿼터 형태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상품수급표에 기반한 국내 생산분 우선 소비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자국 산업 보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초 제도 도입 당시 PI 규제 품목이 약 3,000개에 달하자 업계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도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와 절차를 축소·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추세이다.

자재취급, ⑮ 운송장비, ⑯ 국방 장비, ⑰ 기타, ⑱ 해양.

223) Kotra(2024b), p. 5 참고.

224) “Apple’s iPhone 16 Series to Launch in Indonesia on Friday After Regulatory Delay” (2025. 4. 10.)(검색일: 2025. 7. 28.).

225) “Indonesia eases TKDN rules for select US tech, medical imports”(2025. 7. 24.)(검색일: 2025. 7. 28.).

지금까지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산업 및 통상정책을 정리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Making Indonesia 4.0을 통해 7대 전략 육성 산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육성해왔으며, 여타 주요 경제 정책들도 Making Indonesia 4.0을 직간접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2024년 출범한 프라보워 신정부의 경제 정책 또한 조코위 행정부 시절의 주요 정책들을 계승·발전시키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한편 광업 부문에서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자국의 입지를 기존 원자재 공급처에서 부품·완제품 공급처로 확대하고자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다운스트림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제조업의 경우 기존 단순 조립처로서의 입지를 벗어나 소재·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스트림 부문 육성을 목적으로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정책인 TKDN, 수입 쿼터 제도인 PI 등을 운영 중이다. 동 제도들은 산업 육성 정책이자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당국 간 협의에 따라서 적용 범위 축소 및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개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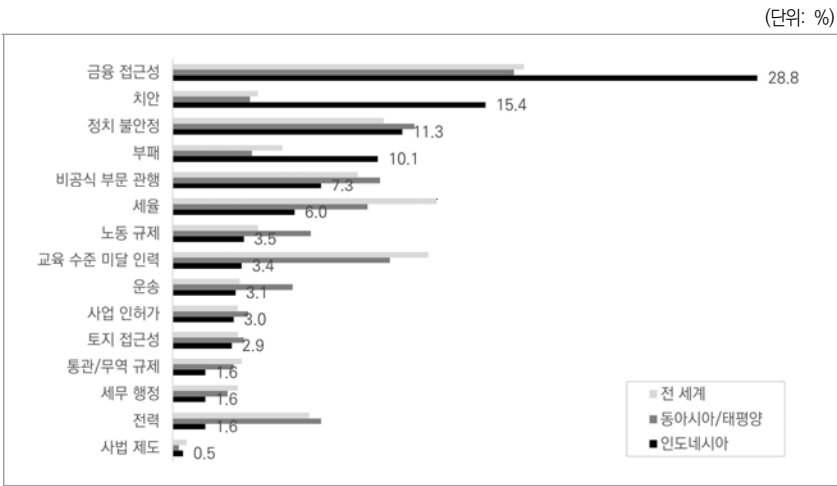
4) 진출 기업 애로사항

[그림 4-6]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은 자사의 경영상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자금 조달(28.8%), 치안(15.4%), 정치 불안정(11.3%), 부패(10.1%), 비공식 부문 관행(7.3%) 등을 꼽았다. 아태지역 및 전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금융 접근성, 치안, 부패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접근성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은 물론 아태지역이나 전체 평균과의 격차도 제일 크다.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된 경우 자본 조달을 포함한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기 용이한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업의 고정자본 취득을 위한 자본 소싱처에 대한 조사에서 내부 조달(79%)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으

며, 은행(14%)의 비중은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²²⁶⁾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생산 네트워크 및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은 수입 규제인 PI와 국산화 비율인 TKDN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표면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제조업 육성 정책이지만 인도네시아 제조업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대안 없는 비관세 장벽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다수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제도 적용 범위 및 비율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일부 요구를 수용해 제도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²²⁷⁾ TKDN 또한 일부 완화되거나 자국산 부품 사용을 투자로 대체한 사례도 있음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2023년 기준)



주: 해당 수치는 각 항목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임.

자료: The World Bank,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검색일: 2025. 7. 29.).

226) World Bank(2023), p. 7 참고.

227) 2025년 7월 미국과의 관세협상 중 ‘2025년 무역부장 관련 16호’를 통해서 10개 품목군 382개 HS-Code 품목에 대한 PI 적용을 완화한 바 있음.

5)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 방향

제3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지역은 1~2순위를 모두 합할 경우 USMCA(미국, 캐나다, 멕시코) 65%, 아시아 54.4%, 유럽 34.5%, 중남미(멕시코 제외) 25.7% 순이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 21.4%, 베트남 20.4%, 중국 11.7%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5.8%를 차지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아시아의 대표적 거대시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인 베트남을 이을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네시아를 꼽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선정한 대인도네시아 주요 정책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한-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유망 협력 업종으로는 철강과 자동차(이차전지 포함)를 꼽을 수 있다. 이 업종들은 제3장의 설문에서도 주요 협력 대상 업종으로 언급되었으며, 한-인도네시아 경제 협력 채널에서 주된 협력 분야로 꾸준히 다뤄져 왔다. 여기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유망 협력 업종으로 추가 제안하고자 한다. 석유·화학은 인도네시아의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인 전후방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은 각각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분야이면서, 동시에 향후 상호 연계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이다. 먼저 철강 산업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의 상징적인 사례다. 한국의 포스코와 인도네시아의 PT. Krakatau가 합작 설립한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는 인도네시아 기초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철강 산업의 특성상 가치사슬은 최근 자동차, 조선, 배터리, 부품 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특히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을 통한 고품질 철강 생산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부산물 활용 탄소포집저장(CCUS), 수소 공급 인프라, 이차전지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 등 그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데, 이는 단순한 다각화를 넘어 미래형 그린 산업으로의 확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기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로 선정하고 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연간 약 15만 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가동 중이다. 또한 배터리 생산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까지 현지에서 조달하면서 전기차 밸류체인을 성공적으로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기지 구축은 한국에게는 아세안 전체를 향한 공급망과 시장 확보를 의미하며, 인도네시아에게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윈-윈(Win-Win) 사례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강판 및 부품 공급과 관련하여 철강 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전기차를 매개로 향후 이차전지 산업과의 협력 관계 역시 크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약 4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구축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세안 내 전략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출 및 다수 협력사의 동반 진출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조차 석유화학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수입대체, 친환경 인프라 확충, 하류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인도네시

아 산업 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철강·자동차 중심에서 화학 및 기초 소재 산업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상과 같은 철강, 전기차, 석유·화학 부문의 투자 진출은 개별 산업의 시장 확보라는 단편적 의미를 넘어선다. 이들 세 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은 현지에서 ‘자원 → 소재 → 제조 → 그린’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통합형 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대표적 경협 플랫폼인 경제협력위원회의 산업 협력 분과에서는 여전히 주요 업종별 단편 의제만 채택하고 있을 뿐, 산업 간 연계 발전에 대한 복합 의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경협위에서는 이들 3개 산업이 상호 보완적인 축을 형성하며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간 상호 연계 발전 어젠다’를 신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업종 간 연계 협력은 소재-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현지 공급망을 다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산업 확대에 화학·배터리·특수강 간의 연계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3개 업종 간 협력은 전기차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운스트림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여 양국 산업 협력과 진출 기업의 현지 사업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차전지·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니켈, 보크사이트 등 주요 핵심광물의 최대 생산국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공급망 협력은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아세안 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인도네시아는 핵심 원자재 시장에서 자국의 입지를 기존 원자재 수출국에서 중간재·부품·최종재 생산국으로 전환하고자 원광 수출 금지 및 제련 시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내재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한국기업들도 이에 대응해 현지에서 제련 가공시설 투자를 통한 공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원광 수입을 통한 공급망 운용 여건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기존의 수입 중심 공급망 전략에서 벗어나 현지 투자를 활용한 장기적 공급망 파트너십 형성으로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상류 단계에서는 직접 투자와 장기 계약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류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공유형 협력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 중인 제련 및 제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한국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현지 생산 및 수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책을 지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류 부문의 경우 투자 논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적 금융 지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하류 부문에는 채굴-제련-생산 등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지원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각종 표준·인증·물류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도 양국간 협력 이슈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은 단순한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 한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제력 강화, 인도네시아의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투자를 활용한 장기 계약은 주요 광물 확보 안정성 강화, 대중국 의존도 감소 및 공급선 다변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산업 가치사슬 내재화에 기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입지 확대는 물론, 역내 배터리 가치사슬 및 공급처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한 ‘광물-제련-가공-배터리’ 형태의 가치사슬을 주변 아세안 국가로 확장해 ‘아세안 역내 핵심 광물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시키면서 한국기업이 공급망의 기술 및 표준을 선점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요 규제 개선 협력

인도네시아는 국산화 및 산업 내재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산부품사용비율(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품 수입 및 활용을 규제하는 동 제도들은 산업 현장에서 외국 기업들의 현지 조달 및 생산 활동을 제약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안정적인 조달 및 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규제 개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TKDN은 인도네시아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국산 부가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할 것을 의무화한 규제이다.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제조업에서 TKDN이 주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국산 부품의 무 사용 비율이 2025년 40%에서 2030년 이후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일부 부품에 대한 TKDN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한시적인 조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TKDN 확대 기조를 감안해 현지 공장 설립, 현지 기업과의 합작법인(JV), 기술 이전 등의 방안을 고려한 현지화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TKDN 적용 시기 관련 단기에 현지화가 용이한 부품과 그렇지 못한 첨단 부품의 현지화 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인도네시아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자국 산업 육성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현지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계적인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협력업체를 육성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 가능한 접근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수입 쿼터 제도인 PI 또한 한국기업의 수입 조달과 생산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한 일부 완화 혹은 예외 적용이 필요한 분야이다. PI는 수입 쿼터 형태로 약 400개 품목의 기업별 수입

규모를 승인하는 제도로,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자본재나 중간재를 정기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한국기업들이 PI 승인 지연으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 납기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또한 예고 없는 품목 지정 및 해제 고시, 관련 부처 간 기준 차이, 현지 기업과의 역차별 등 제도 운영상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TKDN, PI와 같은 규제들은 단순한 비관세 장벽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산업 내재화 정책이 반영된 규제로 신속한 규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동 사업은 지원센터의 애로사항 발굴부터 실험·인증기관 협력, 컨설팅, 전파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신속한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기업들의 규제 파악과 대응을 위한 일종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사업으로서의 미를 가지나, 궁극적으로는 규제 자체의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상이 요구된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시행 중인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 간 대표 경제협력 플랫폼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의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CEPA 이행위원회, TBT Working Group 및 기타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규제 완화 혹은 철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위원회에서

그림 4-7. FTA TBT 종합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개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2024), p. 4 발췌·인용.

기본적인 규제 개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CEPA 이행위원회 혹은 TBT Working Group 등 현안 관련 조직에서 조율하는 형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한국의 표준·기술·디지털 행정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인도네시아 규제 개선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양국 간 규제 개선 협력은 일방적인 인도네시아의 무역장벽 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형성한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인도네시아 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양국 협력하에 지속적인 규제 발굴과 해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4.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인도네시아

업종	배경	정책 목표 또는 과제
자동차	- 아세안 자동차 시장 진출 교두보 - 인도네시아 정부 육성 정책	- 글로벌 사우스 등 미래 시장 확보
이차전지	- 핵심 원자재 최대 생산국 - 인니 정부의 밸류체인 구축 정책	- 생산비용 절감 - 주요 자원 확보
철강	- 한·인니 제조업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 - 동남아 유일의 일관제철소 구축	- 주요 자원 확보 -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석유·화학	- 최근 대규모 투자로 협력 관계 구축 - 인도네시아 핵심 제조업 역량 강화 의지 高	- 기초 산업 역량 강화 협력

자료: 저자 작성.

마. 멕시코

1) 배경 및 중요성

최근 몇 년 사이 글로벌 통상에서 멕시코가 급부상한 것은 멕시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 부과, 2020년 USMCA 발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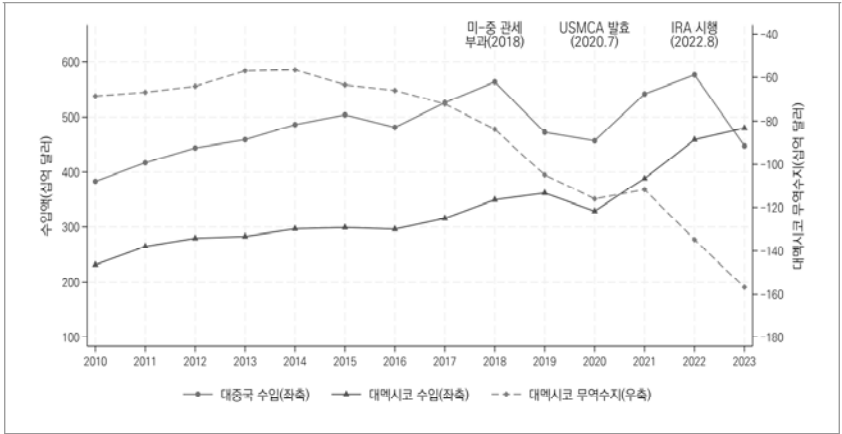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수많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멕시코가 미국 수출을 위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급부상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는 중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USMCA와 IRA는 북미 3개국 간 교역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이 대중국 수입을 추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는 약 1,58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멕시코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멕시코를 주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이지만, 멕시코의 내부적 요인도 멕시코의 부상을 뒷받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 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은 생산 측면에서 장점을 제공한다.²²⁸⁾ 여기에 더해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

그림 4-8.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대멕시코 수입액 및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홍성우, 김진오, 박미숙(2024), 「멕시코 대선의 주요 이슈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p. 7.

228)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 기준 502달러로 중국의 807달러(2022년)보다 상당히 낮고, 베트남의 330달러(2023년)를 상회한다. ILOSTAT data explorer, “Average monthly earnings of employee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Annual”(검색일: 2025. 9. 29.).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멕시코 내 제조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약하면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낮은 임금, 어느 정도 구축된 제조업 기반 위에 2018년 이후 발생한 미-중 간 보복관세, USMCA 발효, IRA 시행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가 더해지며 멕시코에 대한 급격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멕시코를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측면에서 멕시코는 전 세계 타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현재 트럼프 2기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트럼프 2기에서 멕시코가 타 국가와 비교해 미국과의 경제 통합 수준이 상당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모든 중간재와 최종재를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전제하면, 멕시코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여전히 상대적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외국인직접투자과 교역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려온 멕시코이지만, 트럼프 2기의 다양한 불확실성은 멕시코가 대미국 의존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2025년 1월 완료된 멕시코-EU 무역협정 개정, 멕시코-브라질 간 경제보완협정(ACE: Accord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개선 논의 등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멕시코의 전략이 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멕시코가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 역내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경우,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국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로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 게 멕시코의 중요도는 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고자 멕시코는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및 교역을 축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5년 9월 멕시코 세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의 부문에서 약 1,400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면서 중국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유일한 국가는 아님을 발표하였다.²²⁹⁾ 이는 2026년 7월 USMCA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우회수출 이슈를 염두에 둔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이밖에 세인바움 정부 출범 시기인 2024년 10월 이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졌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종료,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IMMEX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수출 제조·마킬라도라·서비스 산업 프로그램) 내 특정 품목 수입 금지, △국제 택배 관세 부과 등을 꼽을 수 있다.²³⁰⁾

2) 산업, 무역, 투자 구조 변화 및 특성

가) 산업

[표 4-4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GDP 비중은 도소매업, 자동차 등 수리업, 숙박·음식점업이 21.0%, 제조업이 20.3% 등으로 나타나 멕시코 산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금융 및 부동산 임대업이 잇고 있다. 연도별 비중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

229) 한국도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멕시코의 일괄적인 조치로 인해 한국기업들도 피해가 예상된다.

230)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우 외(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인데, 브라질의 경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 아르헨티나 16.3%, 칠레 9.41%, 콜롬비아 10.9%, 페루 12.6% 등으로 나타났다.²³¹⁾

멕시코의 산업별 고용 비중은 산업별 GDP 비중과 유사하게 2023년 기준 도·소매업, 자동차 수리 및 판매업 종사자의 비중이 20.2%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16.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남미 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동 산업 부문에서 멕시코의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2023년 기준 제조업 고용 비중은 브라질 11.8%, 아르헨티나 11.2%, 칠레 9.8%, 콜롬비아 10.5%, 페루 8.4% 등으로 멕시코보다 낮은 수준이다.²³²⁾ 또한 산업별 GDP 비중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연도별 고용 비중도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광업 및 채굴 분야 고용 비중은 2023년 기준 0.7% 수준으로

표 4-45. 멕시코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임업·수산업	3.2	3.3	3.3	3.3	3.7	3.8	3.9	3.8
광업·채굴	3.5	3.9	3.9	4.1	3.7	3.8	3.5	3.3
제조업	19.9	20.2	20.2	19.9	20.2	20.8	21.5	20.3
전기·가스·수도	1.4	1.9	1.9	2.1	1.9	1.6	2.0	2.1
건설업	5.9	6.0	6.0	5.7	5.2	5.8	6.1	6.7
도·소매업, 자동차 등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20.8	20.9	21.1	20.7	19.9	20.9	21.9	21.0
운송·보관, 통신업	8.2	8.2	8.4	8.4	7.6	8.0	8.5	8.6
금융, 부동산 임대업	18.7	18.3	18.0	18.2	19.3	17.5	16.0	16.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12.3	11.9	11.8	11.9	12.4	12.0	11.7	11.7

자료: CEPALSTAT(검색일: 2025. 6. 2.).

231) CEPALSTAT(검색일: 2025. 6. 2.).

232) Labour Force Survey(검색일: 2025. 4. 1.).

표 4-46. 멕시코의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임업·수산업	13.6	13.7	13.4	13.0	13.2	13.3	12.7	12.0
광업·채굴	0.5	0.5	0.5	0.5	0.5	0.7	0.7	0.7
제조업	16.9	17.2	17.3	17.2	16.9	16.9	16.9	16.9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	0.4	0.4	0.4	0.4	0.4	0.5	0.9	0.9
건설업	6.7	6.7	6.7	6.4	6.3	6.3	6.4	6.6
도·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판매	19.6	19.2	19.4	20.0	19.7	19.9	20.1	20.2
운송·보관, 통신업	5.3	5.3	5.4	5.3	5.5	5.2	5.4	5.6
숙박·음식점업	6.8	6.8	6.9	7.3	6.3	6.8	7.2	7.2
금융·보험업	1.2	1.2	1.3	1.3	1.4	1.3	1.4	1.3
부동산, 사업·행정서비스	8.5	8.5	8.6	8.4	8.4	8.8	8.5	8.6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	4.5	4.3	4.3	4.3	5.4	4.4	4.0	4.0
교육	5.1	5.2	5.1	4.9	5.1	5.2	5.0	4.9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3.1	3.1	3.1	3.1	3.3	3.4	3.4	3.3
기타	8.0	7.9	7.7	7.9	7.8	7.3	7.5	7.8

자료: Labour Force Survey(검색일: 2025. 4. 1.).

2016~23년간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멕시코의 산업별 GDP 비중 및 고용 비중을 종합하면 도·소매업, 자동차 수리 및 판매업, 제조업을 멕시코의 주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표 4-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자원 접근성 및 관리, 비즈니스 친화적 도시 관리, 유통 인프라 효율성,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등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순위를 보더라도 여전히 유사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수자원 접근 및 관리, 에너지 인프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멕시코 내 첨단 제조시설이 단기간에 형성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로, 철도 등과 같은 물리적 운송 네트워크는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통망 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와 현 세인바움 정부는 멕시코 남동부를 중심으로 철도 인프라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양적 측면에서 철도 인프라 네트워크는 과거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는 제조업에서 중요한 운송 네트워크, 에너지 생산 등과 같은 인프라 자체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관리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인프라 관리 및 효율성이 단기간 안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7. 기본 인프라 관련 국제경쟁력 순위: 멕시코 vs. 한국

구분	멕시코		한국	
	2024	2019	2024	2019
수자원 접근성과 관리 정도	65	57	5	22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 운영	62	55	4	17
도로 네트워크(km/km ²)	38 ³⁾	47 ⁵⁾	28 ³⁾	26 ⁵⁾
철도 네트워크(km/km ²)	41 ⁴⁾	39 ⁶⁾	18 ⁴⁾	23 ⁶⁾
주요 항공사 탑승객 수	7 ²⁾	20 ⁶⁾	10 ²⁾	14 ⁶⁾
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항공 수송의 질	61	58	4	11
상품과 서비스 유통 인프라 효율성	59	55	3	16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61	58	12	27
국내생산 총에너지 ¹⁾	14 ³⁾	13 ⁵⁾	27 ³⁾	26 ⁵⁾
총필요량 중 국내생산 비중 ¹⁾	24 ³⁾	17 ⁵⁾	59 ³⁾	56 ⁵⁾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51 ³⁾	50 ⁵⁾	59 ³⁾	55 ⁵⁾
1인당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11 ³⁾	7 ⁵⁾	55 ³⁾	53 ⁵⁾
공업용 전력 비용(\$/kwh)	18 ⁴⁾	39	15 ⁴⁾	10

주: 1) 생산량이 높을수록, 국내 생산 비중이 클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2) 소비량이 낮을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3) 2021년 기준. 4) 2022년 기준. 5) 2016년 기준. 6) 2017년 기준. 7) 각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2024년은 전 세계 67개국 대상, 2019년 또는 이전 연도는 전 세계 63개국 대상 등수임.
자료: IMD(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 pp. 479-533; IMD(2019),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 pp. 447-500을 토대로 작성.

나) 무역

[표 4-48]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2016~23년간 상위 10개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 전기기기 및 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순위 변동 없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로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구성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석유 및 관련 제품, 채소 및 과일을 제외하면 멕시코의 수출 상위 품목은 모두 도로용 차량, 각종 부품과 같은 제조 분야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48. 멕시코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도로용 차량	23.3	도로용 차량	26.0	도로용 차량	25.7
2	전기기기 및 부품	11.1	전기기기 및 부품	10.3	전기기기 및 부품	11.8
3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9.5	사무기기 및 컴퓨터	7.5	특수 거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6.8
4	사무기기 및 컴퓨터	6.1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7.0	사무기기 및 컴퓨터	5.5
5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4.8	석유 및 관련 제품	5.3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5.5
6	석유 및 관련 제품	4.8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4.7	석유 및 관련 제품	5.4
7	특수 거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4.5	동력 기계 및 장비	4.1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5.2
8	동력 기계 및 장비	4.1	특수 거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4.1	정밀 및 과학용 기기	3.8
9	정밀 및 과학용 기기	3.8	정밀 및 과학용 기기	3.6	채소 및 과일	3.5
10	채소 및 과일	3.6	채소 및 과일	3.6	동력 기계 및 장비	3.5
	계	75.6	계	76.3	계	76.6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멕시코의 상위 수입 품목도 수출 품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016~23년 사이 상위 10개 수입 품목이 멕시코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 내외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전기기기 및 부품과 자동차는 계속해서 상위 수입 품목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철강이 새롭게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상위 수입 10개 품목의 구성도 변화가 없었다.

멕시코의 상위 수출입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멕시코의 교역은 주로 도로용 차량, 각종 기계 및 부품과 같은 제조 분야의 상품을 수출하고 동시에 수입도 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수입 품목이 수출 품목 분류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중간재들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49. 멕시코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전기기기 및 부품	13.6	전기기기 및 부품	13.9	전기기기 및 부품	13.7
2	도로용 차량	9.3	도로용 차량	9.1	도로용 차량	9.6
3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6.7	석유 및 관련 제품	6.7	특수 거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8.9
4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6.4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5.9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5.9
5	특수 거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4.8	특수 거래 및 기타 분류되지 않은 상품	5.4	석유 및 관련 제품	5.3
6	석유 및 관련 제품	4.8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5.2	통신기기 및 음향 재생 장비	4.2
7	사무기기 및 컴퓨터	4.6	동력 기계 및 장비	4.9	동력 기계 및 장비	4.1
8	동력 기계 및 장비	4.2	사무기기 및 컴퓨터	4.7	사무기기 및 컴퓨터	3.8
9	기타 제조품	3.6	기타 제조품	3.5	기타 제조품	3.4
10	기타 금속 제품	3.5	기타 금속 제품	3.2	철강	3.1
	계	61.4	계	62.6	계	62.1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다음으로 [표 4-50]은 멕시코의 상위 5개 수출 대상국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약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그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51]의 주요 수입 대상국에서도 미국이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멕시코의 수출입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멕시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니지만, 멕시코의 수입에서 차

표 4-50. 멕시코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81.0	미국	77.9	미국	80.0
2	캐나다	2.8	캐나다	3.1	캐나다	3.0
3	중국	1.4	독일	1.5	중국	1.6
4	독일	1.1	중국	1.5	독일	1.5
5	일본	1.0	브라질	0.9	브라질	0.7
	계	87.3	계	84.9	계	86.8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표 4-51. 멕시코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46.5	미국	45.3	미국	42.8
2	중국	18.0	중국	18.2	중국	19.1
3	일본	4.6	일본	3.9	독일	3.6
4	독일	3.6	독일	3.9	일본	3.5
5	한국	3.5	한국	3.9	한국	3.3
	계	76.2	계	75.0	계	72.3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지하는 비중이 18%를 상회해 미국과 함께 멕시코의 주요 수입국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6~23년간 멕시코의 대미국 수입 비중은 46.5%에서 42.8%로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은 18.0%에서 19.1%로 증가해 멕시코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증해왔다는 점이다.

멕시코의 대미국 주요 수입 품목은 도로용 차량(27.4%), 전기기기 및 부품(13.7%), 사무기기 및 컴퓨터(6.3%),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6.0%) 등 도로용 차량 및 제조 부문 중간재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멕시코의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금속광석 및 고철(50.6%), 도로용 차량(13.3%), 전기기기 및 부품(8.6%) 등으로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²³³⁾ 그러므로 멕시코의 대중국 수입은 제조 부문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대미국 수입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멕시코의 주요 수출 품목은 도로용 차량 및 제조 관련 중간재로,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 역시 도로용 차량 및 제조 분야의 중간재인데,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일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다만 주요 수입 품목인 철강, 금속제품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류 부문에 대한 평가는 [표 4-52]에 제시되어 있다. 동 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멕시코의 LPI 종합 순위는 160개국 중 66위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물류 부문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다. 특히 통관에 대한 순위는 84위로 타 항목과 비교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멕시코의 경우 △통관 절차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부족, △국경 검문소마다 규제 요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멕시코 표준 및 라벨링 규칙의 국경 집행 시 일관성 결여, △멕시코의 관세법 161조에 근거한 세관 기관 소속이 아닌 통관사의 활동 항구 수 제한 등이 통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²³⁴⁾

233)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234) USTR(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표 4-52. 멕시코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구분	멕시코			한국		
	2023	2018	2016	2023	2018	2016
LPI 종합 순위	66	51	54	17	25	24
통관	84	53	54	7	25	26
인프라	63	57	57	9	22	20
국제선적	75	51	61	26	33	27
물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61	52	48	20	28	25
화물 추적	46	62	42	25	22	24
적시성	62	49	68	23	25	23

주: 제시된 수치는 160개 국가 중 순위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23, 2018, 2016),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다) 투자

[표 4-5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전체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23.4%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고, 그 뒤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이 잇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16~23년간 투자액 및 멕시코 내 비중의 변동이 상당하였으나,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캐나다의 경우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인도, 일본의 경우 비중은 높지 않으나, 미국과 유사하게 동 기간 투자액과 비중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해 투자액 및 비중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2016~23년 동안 멕시코에 한 번이라도 투자했던 기업의 수는 미국이 단연 높다. 2023년 기준 대멕시코 투자를 실시한 미국기업은 1,925개로 타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본기업이 209개, 독일기업이 185개, 캐나다 기업이 150개로 미국의 뒤를 잇고 있다. 중국기업의 경우 2023년 기준 138개로 미국기업 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대멕시코 투자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pp. 262-268.

표 4-53.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단위: 억 달러, %)

국가	2016			2019			2023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미국	4,594	22.8	2,059	2,299	13.3	2,412	3,109	23.4	1,925
중국	1,337	6.6	67	1,412	8.2	79	1,633	12.3	138
싱가포르	675	3.3	7	975	5.6	12	1,597	12.0	39
홍콩	1,174	5.8	21	737	4.3	17	1,127	8.5	38
브라질	537	2.7	42	654	3.8	59	659	5.0	56
캐나다	361	1.8	169	505	2.9	231	503	3.8	150
프랑스	239	1.2	153	204	1.2	179	420	3.2	92
독일	227	1.1	235	527	3.0	253	367	2.8	185
인도	445	2.2	8	506	2.9	19	282	2.1	20
일본	194	1.0	269	138	0.8	262	214	1.6	209
한국	121	0.6	95	96	0.6	100	152	1.0	78

주: 기업 수는 해당 기간 멕시코에 한 번이라도 투자했던 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2026. 1. 26.)(검색일: 2025. 7. 28.).

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기업 1개당 투자액은 미국기업의 투자액을 압도하고 있어 투자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2023년 기준 78개로,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2023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제조업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50.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수도 1,784개를 기록해 투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다음으로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3년 기준 19.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업에 대한 투자는 시간에 따라 증가해왔는데, 금융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이 금융 중개업 및 외환 거래업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²³⁵⁾ 이러한 사실은 금융업 부문에서의 대멕시코 투자는

235) "Secretaría de Economía,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2023)(검색일: 2025. 7. 28.).

미국-멕시코 간 교역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와 같은 운송 관련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금속 제품, 컴퓨터 및 통신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가 기계 관련 제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에 대한 투자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투자 비중은 대체로 2016~23년간 소폭의 변동 수준에서 유지되어왔으나, 금속제품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당히 증가해온 반면, 석유 및 화학 제품 분야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 금속 제품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진 철강 및 알루미늄의 USMCA 역내 생산 강

표 4-54.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단위: 억 달러, %)

산업	2016			2019			2023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농업	1.8	0.6	37	1.2	0.3	50	3.4	0.9	32
광업	12.7	4.1	103	20.7	6.0	155	34.9	9.7	66
전기·수도	8.0	2.6	133	8.9	2.6	143	-1.2	-0.3	93
건설업	14.0	4.5	227	10.6	3.1	201	2.5	0.7	100
제조업	183	58.7	2,105	166	47.9	2,207	181	50.1	1,784
도매업	10.3	3.3	420	16	4.6	492	9.2	2.6	426
소매업	7.7	2.5	124	12.8	3.7	139	4.4	1.2	90
운송업	16.8	5.4	87	11.4	3.3	109	22.8	6.3	80
정보통신업	7.7	2.5	103	16.0	4.6	142	-2.4	-0.7	88
금융업	33.8	10.8	174	56.8	16.4	303	71.9	19.9	194
부동산업	5.9	1.9	209	9.3	2.7	254	4.0	1.1	155
전문 서비스업	2.4	0.8	352	2.4	0.7	547	5.3	1.5	436

주: 기업 수는 해당 기간 멕시코에 2,000만 페소 이상을 한 번이라도 투자했던 기업 수를 의미함.
 자료: "Secretaría de Economía,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2023);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2026. 1. 26.)(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7. 28.).

표 4-55.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세부 제조업별

(단위: 억 달러, %)

산업	2016		2019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식료품	25.0	8.0	27.0	7.8	31.8	8.9
섬유 및 의류	2.5	0.8	1.3	0.4	0.20	0.1
석유 및 화학 제품	40.1	12.9	20.2	5.8	14.5	4.0
플라스틱, 고무, 비철금속 제품	10.0	3.2	8.1	2.3	4.7	1.3
금속 제품	5.8	1.9	5.9	1.7	24.4	6.8
기계 및 장비류	10.2	3.3	2.1	0.6	0.21	0.1
컴퓨터 및 통신 장비	12.4	4.0	7.6	2.2	15.7	4.4
발전 관련 제조	7.4	2.4	9.0	2.6	8.3	2.3
운송 관련 제조	58.3	18.7	77.6	22.4	73.8	20.6

자료: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2026. 1. 26.)(검색일: 2025. 7. 28.).

화의 영향이며 석유 및 화학 제품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는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에서 지속된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은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확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주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전자기기, 건설 장비, 기계 부문에서도 중국기업이 대멕시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2024~25년 사이에 중국기업 77개가 멕시코에 신규로 진출할 예정이며, 이는 2018~22년 평균과 비교할 때 10% 이상 증가한 숫자다.²³⁶⁾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의 대멕시코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며,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멕시코를 압박해왔다. 멕시코는 2024~25년에 걸쳐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종료, △섬유·의류 품목에 대

236) Kotra 해외시장뉴스(2024. 3. 28.),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동향」(검색일: 2025. 7. 29.).

표 4-56. 중국기업의 대멕시코 투자

기업	업종	투자액	발표 시점
Noah Itech	공장 자동화	1억 달러	2023. 1.
Jetour	자동차	30억 달러	2023. 3.
Xusheng	자동차 부품	3억 5,000만 달러	2023. 5.
Asiaway	자동차 부품	3억 7,200만 달러	2023. 6.
Bestune	자동차	3억 5,800만 달러	2023. 7.
LGMG	건설 장비	50억 달러	2023. 10.
Time Interconnect Technology	자동차 부품	5억 달러	2023. 11.
Solarever	전기 자동차	2억 달러	2024. 1.
Daimay	자동차	4,500만 달러	2024. 1.
BYD	전기 자동차	140억 달러	2024. 1.
Minth	자동차 부품	1억 7,300만 달러	2024. 3.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4. 3. 28.),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동향」(검색일: 2025. 7. 29.).

한 관세 부과, △수입금지 품목 설정 등을 시행했는데, 멕시코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나, 관련 품목의 대 중국 수입과 최종 수출국(미국)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²³⁷⁾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과거와 달리 감소할 여지도 있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3) 주요 산업 · 통상 정책 변화 및 특성

세인바움 정부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은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18. 12.~'24. 9.) 정책의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멕시코는 2018년부터 10년 이상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 현 정부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의 방향은 2025년 1월 발표된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에 반영되어 있으며, 향후 도입될 산업 및 통상 관련 각종 법안과 정책은 플랜 멕시코에 근거

237) 홍성우 외(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p. 8.

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플랜 멕시코는 향후 5년 안에 달성할 13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략 산업별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내 다양한 산업 기반 구축, △이 과정에서 멕시코 기업의 참여도 적극 제고,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자본 적극 유치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²³⁸⁾ 또한 정책 수단으로는 관세 및 수입대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외국인집적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랜 멕시코는 △섬유 및 신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농업, △반도체, △내연차 및 전기차, △화학 및 석유화학, △소비재, △항공우주 산업 등을 8개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내연차 및 전기차의 경우 내수용 차량 생산 및 국산 부품 비중 확대, 제조 관련 교육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수입대체와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 및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 달성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는 장비 제조 분야에서 국내 공급 및 관련 품목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공급업체

글상자 4-1. 플랜 멕시코의 주요 목표

- 경제 규모(GDP) 기준 세계 10위 달성
- GDP 대비 투자 비율 25% 이상으로 제고
- 신규 일자리 150만 개 창출
- 섬유, 신발, 가구, 장난감 등 품목에서 공급 및 국내 소비의 50%를 국산으로 전환
- 공공 조달의 50%를 국산으로 할당
- 투자 관련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2.6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매년 15만 명의 전문가 및 기술인력 양성
- 30%의 중소기업에 금융 접근성 개선

자료: 홍성우 외(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p. 7.

238) 홍성우, 김진오, 손은아(2025),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 p. 9.

를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집권 3년 차부터 연간 10% 성장률 달성 및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두 배 확대를 목표로 세우고, 국내 생산량 확대와 140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를 목표 달성 방안으로 밝히고 있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범용 중간재의 국산 비중 증대, 매장 내 디지털 결제 비율 제고, 수출 부가가치 10% 향상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법안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표 4-57. 플랜 멕시코: 주요 전략 산업별 내용

산업	주요 목표	방안 및 조치
내연차 및 전기차	· 내수용 차량 생산 10% 확대 · 국산 부품 비중 15% 확대 · 열차 및 관련 부품 국내 제조 · 이론 및 실습 교육 실시	· 자동차용 전자 부품 수입대체 · 전기차용 배터리셀 생산 및 개발 · 국내 부품 공급망 육성 프로그램 마련 · 전기차 충전소 및 충전기에 대한 규정 마련 ·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자동 통보 · 멕시코 최초의 미니 전기차 생산 기업 Olinia 설립
반도체	· 장비 제조 분야에서 국내 공급과 관련 품목 수출 두 배 확대	·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용 센서, 액추에이터(actuator), 스마트 컨트롤러, 시스템 및 구성 요소 국내 공급업체 육성 ·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반도체 동맹, 국제 기술 및 보안 혁신 펀드, 반도체 및 인적 자본 개발에 관한 미국 기술 대표단 파견 등 추진
화학 및 석유 화학	· 집권 3년 차부터 연간 10% 성장 · 민간 부문 투자 프로젝트 두 배 확대 · 140억 달러 규모의 수입대체	· 에탄 유도체 생산량 확대 · 각종 화학소재 및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 · 최근 2년간 수입량이 10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소비재	· 범용 중간재의 국산 비중 20% 증대 · 매장 내 디지털 결제 비율 35% 상향 · 소비재 생산 25% 확대 · 수출 부가가치 10% 증대 · 중소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소비재에 대한 공공조달 40% 증대	· 가전 및 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 또는 재제조(reconditioning) 의무화 계획 · 연 매출 20만 페소 미만 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 관련 행정적 부담 해소 · 완구 및 가구 산업 강화를 위한 5개년 쿼터 정책 추진

자료: 홍성우, 김진오, 손은아(2025),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플랜 멕시코 발표 이후 멕시코 정부는 다양한 조치와 법 개정을 실행하며 플랜 멕시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관세 회피 방지, 위조 등록증을 이용한 수입 방지, 국내 생산자 보호,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1,062개의 철강 수입 업체와 IMMEX(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를 악용한 섬유 부문 8개 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다.²³⁹⁾ 또한 플랜 멕시코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2024년 12월 20일부터 FTA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의류 및 섬유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고, IMMEX를 통해 수입이 가능했던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생산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하고자 한다. 새로운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최소 65%가 국내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급금 · 신속 지급 · 제한경쟁 입찰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공공사업에서 국내 기업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술한 플랜 멕시코와 이에 따른 각종 조치들은 향후 멕시코의 산업 및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내 산업 육성과 중국의 우회수출 방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해당 조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전술한 섬유 및 의류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입 금지 조치는 공정경쟁과 국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취해졌으나, 수입, 가공, 수출 경로를 검토할 때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²⁴⁰⁾

239) 코트라(2007)에 따르면 IMMEX는 수출산업 진흥 프로그램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중간재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멕시코 내 제조 · 서비스 수출 기업이 수혜 대상이며, 동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240) 홍성우 외(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p. 8.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상 조치는 FTA 비체결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이에 대한 멕시코의 대응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대체 등의 통상정책은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 즉 섬유, 의류, 완구와 같은 저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멕시코 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가 전임 오 브라도르 정부에서 시행된 '니어쇼어링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법령'을 유지·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²⁴¹⁾

셋째,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은 중국의 우회수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인 동시에 자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USMCA가 자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협정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USMCA 재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우회수출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중국에서 북미로 수출되는 상품의 10%를 북미 지역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멕시코의 GDP가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²⁴²⁾ 그러므로 국내 생산 확대는 중국 우회수출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미국의 우려를 일부 완화하고, 멕시코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멕시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랜 멕시코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책, 특히 정부의 각종 지원과 재정 투입에 기반한 정책의 지속성은 향후 USMCA 재협상 결과 및 미국의 통

241) 동 법령은 멕시코 내 어느 지역에서든 반도체, 전자 부품, 배터리, 의료기기, 제약, 농업 기계류 등의 부문과 관련된 수출 기업이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출로 달성하는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우 외(2023),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pp. 43~44.

242) 홍성우 외(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p. 10.

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임 오브라도르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된 가운데,²⁴³⁾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USMCA 개정으로 인한 멕시코의 대미 수출 감소 등은 정부 재정, 외국인직접투자, 순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플랜 멕시코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4) 진출 기업 애로사항

세계은행의 Enterprise Surveys는 전 세계 각국에서 경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한다. 멕시코의 경우 2023년 기준 1,3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 기업 중 제조 관련 기업이 2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업 17.1%, 소매업 12.9%, 건설업 11.7%, 숙박업 10.1%, 식품품 8.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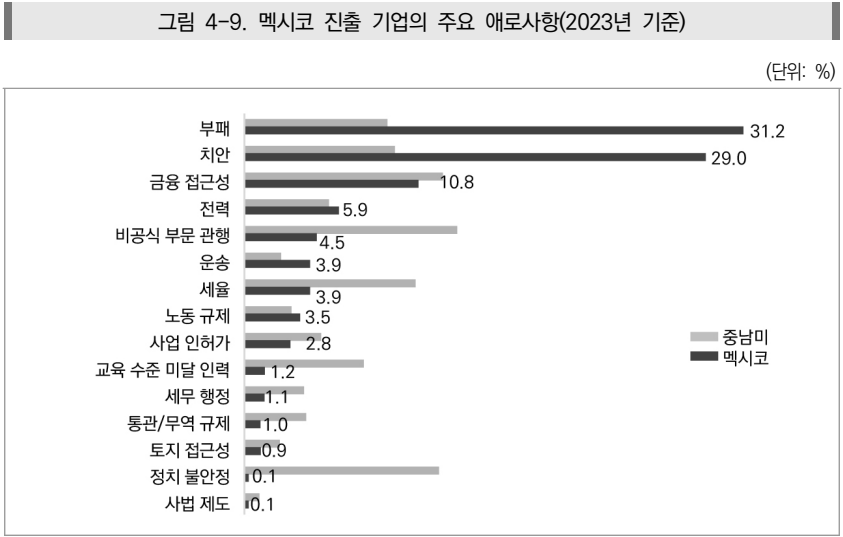
[그림 4-7]은 설문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동 그림에 따르면 멕시코 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설문 대상 기업의 31.2%가 부패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치안 이슈(29.2%)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하였다. 부패와 치안을 경영상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중남미 전체 응답 평균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멕시코 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10.8%), 전력(5.9%), 비공식 부문 관행(4.5%), 운송(3.9%), 세율(3.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법 제도, 통관 및 무역 규제, 정치적 불안정, 세무 행정, 교육 수준 미달 인력 문제 등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남미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우수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운송 부문을 경영상 주요 어려움이라고 꼽은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지

243) 윤상하 총괄책임(2025),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p. 104.

244) The World Bank,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검색일: 2025. 7. 29.).

는 않았으나, 중남미 평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멕시코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고, 수출의 약 80%가 대미국 수출이기 때문에 운송 부문이 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 해당 수치는 각 항목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중임.
 자료: The World Bank,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검색일: 2025. 7. 29.).

5)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 방향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서 멕시코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은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타 지역 및 국가에 비해 월등히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여전히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즉 니어쇼어링 최적지로서 그 가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멕시코는 브라질, EU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중남미 또는 역외 국가로의 수출을 염두에 둔 거점국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니어쇼어링 기지 또는 거점국으로서 멕시코를 바라본다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가전) 분야에서 멕시코를 고려한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동 분야는 멕시코 내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미국으로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향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시 멕시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현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자국 전기차 기업 육성과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출 및 멕시코 내수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생산이 확대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USMCA가 북미 3개국의 역내 가치사슬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배터리의 가치사슬이 역내에 구축될 필요가 있어 멕시코를 고려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전술한 분야에서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내연차 및 전기차 가치사슬 상류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멕시코 내 공급망에서 중국산 대체 수요에 대응한 전략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가)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최종 수출시장에 따라 멕시코 내 한국기업은 생산 네트워크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 시장과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 각각의 특성상 주 생산 모델 또는 품목이 이질적이고 운송 경로가 다르며,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와 USMCA 간 무역협정 세부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중간재 조달 방법, 제조 및 조립 과정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멕시코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은 미국과 중남미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라인 및 거점 지역을 따로 구축함으로써 생산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수출시장을 고려한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통한 현지 생산 및 판매와 제3국으로의 수출거점 마련, 즉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역내 신흥시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외 국가로 수출 확대를 꾀하는 멕시코의 중남미 역내 수출을 위한 제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함으로써 한국과 멕시코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일종의 윈-윈 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를 이원화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USMCA 발효 및 IRA 시행에 따른 북미 공급망 강화와 생산에서 멕시코의 비교우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강화 또는 유지하는 멕시코의 대외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및 글로벌 통상질서의 급변으로 멕시코의 생산 비교우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멕시코가 교역 파트너 다변화로 대외정책을 수정하면서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가 요구되는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나)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한국 기업은 멕시코 내 타국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 제조업 공급망으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북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분산시켜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멕시코 주 정부 간 또는 한국 정부-멕시코 산업계 간 협력 공고화는 이러한 기업 네

트위크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다.

멕시코 내에는 이미 수많은 글로벌 OEM 기업 및 Tier 1 부품업체들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신규 진입 기업은 이러한 기업들과의 공동 투자, 합작 기업(JV)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에 기반할 때 제조업 부문 내 공급망 편입이 용이할 수 있다. 또한 향후 USMCA 재협상에서 미국산 중간재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 협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미국 시장과의 네트워크 및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 타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Tier 1 업체들의 각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도 한국 OEM 기업 이외에 고객사를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Tier 1 업체들은 한국 OEM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와 같이 특정 OEM 기업이 미국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을 경우 미국 내 리스크 발생이 멕시코 내 생산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유희 설비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멕시코 내 한국기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멕시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과 관계가 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Tier 1 기업은 수익성 리스크 분산 및 변동성 완화, 미국을 겨냥한 공급망으로의 편입 가능성 확대와 인지도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OEM 기업도 멕시코 내 생산 및 조달 비중을 높이려는 멕시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인해 현지 로컬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멕시코에서의 협력 확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멕시코의 통상환경, △멕시코 진출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 △한국기업의 수직적 계열화와 구조화된 기업 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상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 1기 출범 이전까지 멕시코는 미국 수출을 위한 니어쇼어링 기지로 꾸준히 그 역할을 수행해왔고, 과거 멕시코 정부들도 이러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미국 수출을 유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에 특화된 안정적인 통상환경이 유지되었고 글로벌 기업은 멕시코 내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불필요했을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은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멕시코 진출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적인 제조업 생태계,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후발주자로서 높은 진입 장벽에 직면하였다. 이와 함께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와 Tier 1 기업들의 안정적 수익 극대화 추구 성향이 멕시코 내 로컬 기업 및 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협력 대상의 범위가 협소해져 멕시코 내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

멕시코 내 글로벌 또는 로컬 기업과의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멕시코 주 정부와 특정 산업계를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멕시코의 누에보레온(Nuevo Leon) 주와 같이 니어쇼어링 과정에서 외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주를 중심으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멕시코 산업계 모두가 한국의 대멕시코 진출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진출이 멕시코 현지 기업의 역량을 보완해 새로운 공급망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협력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와 산업계는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바,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멕시코 산업계 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과정에서 멕시코를 염두에 둔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내연차 및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단순 조립 단계 외에 상류 부문에 대한 멕시코 내 투자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중국기업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의 채굴부터 핵심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현 정부는 장기 성장계획이자 핵심 산업정책인 ‘플랜 멕시코’를 통해 내연차 및 전기차를 포함한 제조업을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를 멕시코 내에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소위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멕시코를 염두에 둔 글로벌 기업이 중장기적 공급망 전략 수립 시 저부가가치 단계가 아닌 고부가가치 단계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단순 제조 및 조립 단계의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멕시코의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크다. 하지만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핵심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멕시코 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을 대체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에서 한국의 입지를 제고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멕시코는 USMCA 유지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매우 우려하는 중국의 우회수출 문제에 멕시코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중국 간 협력이 고도화되고 교역이 확대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한바, 최근 생겨난 소위 틈새 시장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공략해 미국 중심 공급망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를 공고히 해야 한다.

중국의 우회수출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이슈로, 트럼프 1기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 이후 중국의 대미국 직접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국이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은 중국 우회수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중국 간 협력 약화에 따라 멕시코 시장 확보

표 4-58.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멕시코

업종	배경	정책과제
자동차 및 부품	- 미국 수출을 위한 니어쇼어링 제조 기지로서 여전한 가치 ○ 북미 3개국 중 저렴한 생산 비용 ○ USMCA 활용 및 미국과의 물리적 접근성으로 미주 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점 - 멕시코의 통상전략 변화로 장기적 관점에서 중남미 역내 수출 확대와 신흥 시장 확보 가능성 - 타 지역에 비해 멕시코 내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제한적	-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확대 및 공고화 - 미국과 중남미 역내 수출을 각각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 신흥시장 확보 및 미국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멕시코 및 중남미 로컬 부품기업과의 협력 확대 - 멕시코 내 공급망에서 중국산 중간재 대체
전기전자 (가전)	- 미국 수출을 위한 니어쇼어링 제조 기지로서 여전한 가치 ○ 북미 3개국 중 저렴한 생산 비용 ○ USMCA 활용 및 미국과의 물리적 접근성으로 미주 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점	-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확대 및 공고화
배터리	- 내연차 이외에 전기차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미래 시장 및 미국 수출을 위한 니어쇼어링 제조 기지로서 주목 ○ USMCA 활용 및 미국과의 물리적 접근성으로 미주 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점 - 전략광물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 가치사슬을 구축하려는 정책 의지	-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확대 및 공고화 -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물 채굴, 핵심소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생산 네트워크 구축

자료: 저자 작성.

와 생산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틈새 시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바. 브라질

1) 배경 및 중요성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은 2018년 미국과 중국 간 보복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각국의 중요 자원 확보 및 교역 다변화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주목을 받아왔다. 미-중 갈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재편과 교역 다변화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 급증에 따라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는 다국적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브라질은 내부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브라질이 보유한 약 2억 1,000만 명의 인구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한 생산기지 이상의 가치를 갖게 한다. 또한 철광석, 니켈, 리튬과 같은 자원의 풍부한 매장량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며, 중남미 지역 내에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은 기업들의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국가를 찾도록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브라질이 가진 상대적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브라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브라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관세 부과는 최근 브라질과 중국 간 경제협력 강화, EU와의 교역 확대 노력, 캐나다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의 통상정책 변화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역외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개방화 움직임은 과거의 폐쇄적 정책 기조로부터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글로벌 기업이 브라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거대한 내수시장, 중요 광물의 풍부한 매장량, 메르코수르(MERCOSUR)²⁴⁵와 역외 국가 간 교역 확대 가능성 등은 최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과정에서 브라질이 부상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향후 이에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소비시장은 안정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기반형 생산기지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안정적인 대규모 수요는 브라질 수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바, 다국적 기업의 브라질 진출은 내수시장이 작은 국가로의 진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단순히 내수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를 넘어서 생산 및 수출거점국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브라질 역시 교역 파트너 다변화를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체결, 메르코수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무역협정 협상 타결, 브라질-멕시코 경제보완협정 개선 논의, 메르코수르-캐나다 무역협정 재협상 개시와 같은 행보는 브라질을 포함한 각국의 교역 다변화 노력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역외 국가에 대한 개방을 꺼려왔던 브라질이 역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브라질의 비교우위 산업에서 수출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브라질 정부는 과거 폐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일부 영역에서 개방적 기조로 전환함으로써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어 거점국으로서 브라질의 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5)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정회원국으로 하는 관세 동맹으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를 채택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 간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경제 공동체이다.

주요 핵심광물의 풍부한 매장량도 글로벌 기업, 특히 첨단 제조분야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미-중 갈등을 위시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으로 자원 확보가 지정학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은 철광석,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의 주요 매장국이기도 하므로 원자재 및 이를 가공한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은 브라질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다.

2) 산업, 무역, 투자 구조 변화 및 특성

가) 산업

브라질의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이 1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18.0%), 제조업(13.1%), 도소매업,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11.1%) 등이 브라질의 주요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브라질의 산업은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광업의 비중은 2023년 기준 3.7%로 주변국인 콜롬비아(5.7%), 칠레(10.5%), 아르헨티나(4.0%), 페루(11.5%)에 비해 상당히 낮다.²⁴⁶⁾ 2016~23년간 대부분의 서비스업 비중이 감소해온 반면 광업·채굴, 제조업 비중이 점증하고 있어 산업 구조의 변화가 관찰된다.

[표 4-60]에 따르면 도소매업, 수리 및 판매업 고용 비중이 2022년 기준 19.4%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이 11.7%, 농업·임업·수산업 8.7%, 부동산, 사업·행정서비스 8.4%를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산업별 비중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46) CEPALSTAT(검색일: 2025. 6. 2.).

표 4-59. 브라질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임업·수산업	4.9	4.6	4.4	4.2	5.7	6.6	5.8	6.0
광업·채굴	0.9	1.4	2.3	2.5	2.5	4.7	4.7	3.7
제조업	10.8	10.7	10.5	10.3	10.7	11.9	13.1	13.3
전기·가스·수도	2.3	2.4	2.4	2.6	2.7	2.5	2.1	2.2
건설업	4.4	3.7	3.5	3.4	3.5	3.1	2.9	3.0
도·소매업, 자동차 등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13.2	13.4	13.3	13.3	12.4	12.2	11.1	-
운송·보관, 통신업	6.6	6.7	6.7	6.8	6.7	6.3	5.7	6.0
금융, 부동산 임대업	21.0	20.6	20.1	20.4	20.5	18.4	18.2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22.4	22.6	22.6	22.6	21.9	19.9	18.0	-

자료: CEPALSTAT(검색일: 2025. 6. 2.).

멕시코와 달리 브라질의 경우 일부 산업에서 GDP 내 비중과 고용 비중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또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수리·판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비중은 약 25%에 이르고 있으나, 동 산업의 GDP 기여 비중은 약 11%에 그치고 있어 타 산업과 비교해 GDP 기여 비중과 고용 비중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 산업 분야가 고용 창출은 많으나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GDP 내에서는 도소매업, 수리·판매업의 비중이 2016~23년간 감소한 반면, 고용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은 동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브라질의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브라질의 인프라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이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 접근성 및 관리, 비즈니스 친화적 도시 관리, 유통 인프라 효율성 등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및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최근

표 4-60. 브라질의 산업별 고용 비중

(단위: %)

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업 · 임업 · 수산업	9.8	9.2	9.1	8.9	9.3	9.5	8.7	8.2
광업 · 채굴	0.5	0.5	0.5	0.5	0.5	0.5	0.5	0.5
제조업	11.7	11.8	11.7	11.6	11.8	11.8	11.7	11.6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 하수	0.9	1.0	0.9	1.0	0.9	0.8	0.8	0.8
건설업	8.3	7.7	7.5	7.3	7.1	7.7	7.6	7.3
도 · 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 판매	19.5	19.6	19.4	19.2	19.0	19.0	19.4	19.1
운송 · 보관, 통신업	6.4	6.5	6.5	6.7	6.9	6.9	7.0	7.3
숙박 · 음식점업	5.2	5.7	5.8	5.9	5.1	5.1	5.5	5.5
금융 · 보험업	1.4	1.4	1.4	1.4	1.5	1.5	1.6	1.6
부동산, 사업 · 행정서비스	7.8	8.1	8.1	8.3	8.7	8.7	8.4	8.8
공공행정 · 국방, 사회보장	5.7	5.5	5.5	5.3	5.9	5.4	5.3	5.1
교육	6.2	6.0	6.3	6.3	6.7	6.3	6.2	6.3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5.2	5.4	5.5	5.6	6.1	6.1	6.1	6.6
기타	11.5	11.7	11.9	11.9	10.7	10.6	11.4	11.3

자료: Labour Force Survey(검색일: 2025. 4. 1.).

5년간 대부분의 항목에서 경쟁력이 악화되었다. 다만 국내 에너지 생산량과 비중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송배전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비교할 때 브라질의 기본 인프라 경쟁력은 멕시코와 유사하거나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기본 인프라는 대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브라질은 오랜 기간 재정적자에 직면하고 있어 단기간 내 인프라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집권 정부에 따라 정부 지출에 대한 방향성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프라 개선 시점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표 4-61. 기본 인프라 관련 국제경쟁력 순위: 브라질 vs. 한국

구분	브라질		한국	
	2024	2019	2024	2019
수자원 접근성과 관리 정도	63	56	5	22
비즈니스 발전을 지원하는 도시 운영	63	60	4	17
도로 네트워크(km/km ²)	45 ³⁾	45 ⁵⁾	28 ³⁾	26 ⁵⁾
철도 네트워크(km/km ²)	51 ⁴⁾	52 ⁶⁾	18 ⁴⁾	23 ⁶⁾
주요 항공사 탑승객 수	6 ²⁾	10 ⁶⁾	10 ²⁾	14 ⁶⁾
비즈니스 발전과 관련된 항공 수송의 질	57	56	4	11
상품과 서비스 유통 인프라 효율성	64	61	3	16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45	56	12	27
국내생산 총에너지 ¹⁾	8 ³⁾	9 ⁵⁾	27 ³⁾	26 ⁵⁾
총필요량 중 국내생산 비중 ¹⁾	18 ³⁾	16 ⁵⁾	59 ³⁾	56 ⁵⁾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62 ³⁾	58 ⁵⁾	59 ³⁾	55 ⁵⁾
1인당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²⁾	14 ³⁾	10 ⁵⁾	55 ³⁾	53 ⁵⁾
공업용 전력 비용(\$/kwh)	42 ⁴⁾	38	15 ⁴⁾	10

주: 1) 생산량이 높을수록, 국내생산 비중이 클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2) 소비량이 낮을수록 높은 순위로 기록됨.
 3) 2021년 기준. 4) 2022년 기준. 5) 2016년 기준. 6) 2017년 기준. 7) 각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2024년은 전 세계 67개국 대상, 2019년 또는 이전 연도는 전 세계 63개국 대상 등수임.
 자료: IMD(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 pp. 479-533; IMD(2019),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 pp. 447-500을 토대로 작성.

나) 무역

브라질의 상위 10개 수출 품목은 농업 관련 품목, 원자재, 자동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23년간 동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4%에서 73.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를 이끈 품목은 유지종자, 유지과실, 석유 및 관련 제품인데, 이는 트럼프 1기에서 촉발된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당시 미-중 간 보복관세로 인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상당히 늘리는 한편, 브라질산 원유 수입을 늘리며 수입을 다변화하였다. 따라서 2016~23년간 브라질의 상위 수출 품목 비중 증가는 외부적 요인, 즉 미-중 간 보복관세 및 갈등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표 4-62. 브라질의 상위 수출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유지종자, 유지과실	10.9	석유 및 관련 제품	13.7	석유 및 관련 제품	16.1
2	금속광석, 고철	10.3	금속광석, 고철	13.0	유지종자, 유지과실	15.9
3	육류, 육류제품	7.8	유지종자, 유지과실	11.9	금속광석, 고철	11.3
4	석유 및 관련 제품	6.4	육류, 육류제품	7.4	육류, 육류제품	6.8
5	도로용 차량	6.0	철강	5.2	설탕, 설탕제품, 꿀	4.7
6	설탕, 설탕제품, 꿀	5.9	도로용 차량	4.0	철강	4.6
7	철강	4.6	곡물, 곡물 제품	3.6	곡물, 곡물 제품	4.5
8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관련 제품	3.5	펄프, 폐지	3.4	동물 사료	3.7
9	펄프, 폐지	3.1	동물 사료	2.9	도로용 차량	3.6
10	동물 사료	3.1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관련 제품	2.6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관련 제품	2.6
	계	61.4	계	67.8	계	73.8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판단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브라질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를 하회해 타 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표 4-59 참고), 수출 상위 품목의 대부분이 농업 관련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 제품이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서 소비됨을 시사한다.

브라질의 상위 수입 품목 구성은 수출 품목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상위 수입 품목 대부분은 제조 분야 품목 및 화학제품 등이 차지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원유 정제 기술이 부족한 이유로 정제유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브라질은 1차 산품 및 원자재를 수출하고 제조 및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교역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의 이러한 교역 구조는 멕시코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멕시코의 교역

표 4-63. 브라질의 상위 수입 품목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석유 및 관련제품	7.6	석유 및 관련제품	9.7	석유 및 관련제품	11.6
2	전기기기 및 부품	7.3	전기기기 및 부품	7.8	전기기기 및 부품	8.3
3	도로용 차량	7.0	도로용 차량	7.6	도로용 차량	7.4
4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6.4	유기화학제품	5.9	비료	6.3
5	유기화학제품	5.9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5.3	범용 산업 기계 및 부품	5.6
6	의약 및 약학 제품	5.0	비료	5.1	유기화학제품	5.4
7	비료	4.4	동력 기계 및 장비	4.8	동력 기계 및 장비	4.9
8	동력 기계 및 장비	4.4	의약 및 약학 제품	4.3	의약 및 약학 제품	4.8
9	통신기기, 음향 재생 장비	4.2	통신기기, 음향 재생 장비	4.1	기타 화학제품	3.1
10	기타 화학제품	2.9	기타 운송장비	3.2	특정 산업용 기계	2.9
	계	55.2	계	57.9	계	60.4

주: SITC Rev4 2단위 기준.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4. 24.).

은 주로 도로용 차량, 각종 기계 및 부품과 같은 제조 분야의 상품을 수출하고 동시에 수입도 하는 구조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중간재들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수출을 염두에 둔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들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 4-65]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브라질의 수출에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지만, 2016~23년 간 대중국 수출 비중이 19.6%에서 30.7%로 급증한 반면, 대미국 수출은 동기간 2% 포인트 감소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

수출 품목을 검토해보면 2023년 기준 브라질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유지종자·유지와실(37.3%), 금속 광석 및 스크랩(20.0%), 석유 및 석유제품(19.3%) 등인 반면, 동 기간 대미국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19.0%), 석유 및

표 4-64. 브라질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중국	19.6	중국	28.7	중국	30.7
2	미국	13.0	미국	13.5	미국	11.0
3	아르헨티나	7.5	아르헨티나	4.4	아르헨티나	4.9
4	네덜란드	3.9	네덜란드	3.2	네덜란드	3.6
5	독일	2.7	일본	2.5	멕시코	2.5
	계	46.6	계	52.3	계	52.8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석유제품(16.9%), 특정 산업용 기계(5.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⁷⁾ 이처럼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농산품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대미국 수출 품목은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 이외에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도 브라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나, 2016~23년 동안 이 국가들로 향하는 수출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대 아르헨티나 주요 수출 품목은 도로용 자동차(23.9%)로 브라질의 자동차 수출의 상당 부분은 아르헨티나로 수출되고 있다.²⁴⁸⁾

수출과 달리 브라질의 수입은 대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2016~23년간 대미국 수입 비중은 감소해왔으나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를 하회하고 있다. 대미국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18.6%), 발전용 기계 및 장비(14.8%), 산업용 기계·장비·부품(5.2%), 대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 기계·장치(19.9%), 유기화학제품(7.9%), 산업용 기계·장비·부품(7.7%)으로 수입 품목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도 브라질의 주요 수입 대상국인데, 브라질은 양국으로부터 주로 전기 기계·장치, 도로용 차량과 같은 제조 관련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²⁴⁹⁾

247)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248) *Ibid.*

표 4-65. 브라질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순위	2016		2019		2023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46.5	미국	45.3	미국	42.8
2	중국	18.0	중국	18.2	중국	19.1
3	일본	4.6	일본	3.9	독일	3.6
4	독일	3.6	독일	3.9	일본	3.5
5	한국	3.5	한국	3.9	한국	3.3
	계	76.2	계	75.0	계	72.3

자료: WITS_UN Comtrade(검색일: 2025. 7. 14.).

종합하면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은 농산물, 원자재, 원유로 농산물은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면, 원자재와 원유는 주로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과는 달리 브라질의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으며, 주 수입 품목은 정제유, 제조 관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용 자동차도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데, 대부분이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로 수출된다.

다음으로 브라질의 물류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류성과지수(LPI)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브라질의 LPI 종합순위는 139개국 중 51위를 기록해 물류 부문의 경쟁력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순위는 2016~23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평가 항목 중 국제선적에 대한 순위는 68위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통관도 타 항목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관과 관련된 문제로는 증장비와 같은 특정 유형의 상품 수입 시 서류 요건이 일관적이지 않고, 타 국가로 수출될 예정으로 임시로 수입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된다.²⁵⁰⁾

249) Ibid.

250) USTR(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pp. 29-34.

표 4-66. 브라질의 물류 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구분	브라질			한국		
	2023	2018	2016	2023	2018	2016
LPI 종합 순위	51	56	54	17	25	24
통관	56	85	70	7	25	26
인프라	47	51	49	9	22	20
국제선적	68	65	68	26	33	27
물류 질적 수준 및 경쟁력	46	46	45	20	28	25
화물 추적	46	49	46	25	22	24
적시성	54	53	57	23	25	23

주: 2016, 2018년 수치는 160개 국가 중 순위, 2023년 수치는 139개 국가 중 순위를 의미함.

자료: World Bank(2023, 2018, 2016),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다) 투자

[표 4-6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브라질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케이맨제도, 바하마,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조세회피처 또는 중개국으로 알려진 국가를 통한 투자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들을 통한 투자는 해당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²⁵¹⁾

상기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2023년 기준 미국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5.1%를 차지해 제1의 투자국이었고, 그 뒤를 오스트리아, 파나마, 스페인, 영국 등이 잇고 있다. 2023년 기준 미국기업은 주로 금융업 및 보험업(75.0%), 부동산업(11.9%), 제조업(4.5%) 등에 투자하였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도소매업 및 수리업(41.6%), 제조업(11.8%), 금융업 및 보험업(15.2%)에, 파나마의 경우 금융업 및 보험업(80.0%),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리업(5.3%)에, 스페인의 경우 정보통신업(40.1%), 제조업(28.7%), 금융업 및 보험업(12.1%) 등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²⁵²⁾

251) UNCTAD(2024), "2024 World investment report," p. 3.

표 4-67.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단위: 억 달러, %)

국가	2016			2019			2023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409	13.0	10,470	577	15.0	13,300	781	17.9	10,662
케이만제도	658	20.9	7,940	857	22.3	1,693	763	17.4	1,660
바하마	320	10.2	1,675	430	11.2	2,828	589	13.5	3,105
룩셈부르크	222	7.0	152	247	6.4	176	360	8.2	160
미국	125	4.0	7,940	220	5.7	9,824	221	5.1	2,962
오스트리아	360	11.4	77	112	2.9	77	98	2.2	41
파나마	111	3.5	2,210	102	2.6	1,850	94	2.2	1,119
스페인	128	4.1	740	75	1.9	773	77	1.8	305
영국	40	1.3	645	51	1.3	639	75	1.7	316
우루과이	42	1.3	1,050	40	1.0	1,119	45	1.0	592
칠레	46	1.5	248	38	1.0	270	44	1.0	140
아르헨티나	41	1.3	803	34	0.9	860	38	0.9	355
포르투갈	40	1.3	1,939	38	1.0	4,055	36	0.8	1,671
캐나다	4	0.1	161	9	0.2	199	21	0.5	88

자료: Banco Central Do Brasil, “Relatório de Investimento Direto”(검색일: 2025. 7. 31.).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기업의 대브라질 투자는 2016~23년간 투자액 및 비중 높아졌으나, 타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이와는 달리 투자액 및 비중이 감소해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동 기간 중국의 대브라질 투자가 매우 적어 상위 국가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세와 대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68]에 따르면 2016~23년간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금융업으로 2023년 기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중 61.2%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수도 16,369개로 투자의 대부분이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조세회피처 또는 중개국을 통한 대브라질 투자가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케이맨제

252) Banco Central Do Brasil, “Relatório de Investimento Direto”(검색일: 2025. 7. 31.).

도, 바하마의 대브라질 해외직접투자 중 금융업에 투자된 비중은 각각 90.6%, 95.9%, 97.2%를 차지하고 있다.²⁵³⁾

금융업을 제외하면 주로 석유·천연가스 시추(13.5%), 음료·식품 제조(5.2%), 금속 광물 채굴(5.0%), 부동산업(2.9%), 도소매업(2.0%) 등의 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졌다.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압도적인 가운데,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 원자재 채굴 분야에 대한 투자도 상당하

표 4-68. 브라질의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산업별

(단위: 억 달러, %)

산업	2016			2019			2023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금액	비중	기업 수
석유·천연가스 시추	287	9.1	16	419	10.9	17	590	13.5	10
금속 광물 채굴	231	7.3	20	258	6.7	16	219	5.0	15
농업, 축산업	16	0.5	174	28	0.7	235	20	0.5	189
음료·식품 제조	187	5.9	55	172	4.5	82	228	5.2	56
화학제품 제조	4	0.1	51	32	0.8	53	63	1.4	3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69	2.2	14	2	0.1	10	37	0.8	8
금속 제련	70	2.2	14	50	1.3	21	31	0.7	14
섬유제품 제조	4	0.1	34	8	0.2	36	11	0.2	26
차량 제조	5	0.2	19	7	0.2	21	8	0.2	20
의약·관련제품 제조	0.9	0.0	14	3	0.1	19	8	0.2	23
전기 기계·장비 제조	3	0.1	21	1	0.0	25	5	0.1	17
금융업	1,643	52.2	13,169	2,392	62.1	18,724	2,674	61.2	16,369
부동산업	88	2.8	16,300	114	3.0	19,499	126	2.9	5,698
도소매(자동차 제외)	70	2.2	534	63	1.6	531	88	2.0	288
기업간설팅	145	4.6	1,722	103	2.7	1,007	57	1.3	464
정보통신서비스	4	0.1	150	0.1	0.0	212	30	0.7	134
건설업	0.4	0.0	60	23	0.6	87	20	0.5	39
R&D	0.2	0.0	14	4	0.1	21	18	0.4	17
과학·기술 서비스	110	3.5	976	46	1.2	260	13	0.3	79

자료: Banco Central Do Brasil, "Relatório de Investimento Direto"(검색일: 2025. 7. 31.).

253) Ibid.

고, 제조업 중에서는 음료·식료품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압도적인 멕시코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석유·천연가스 시추 부문에 대한 투자는 브라질 국영석유평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이외에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 기업 Equinor는 2024년 7월 브라질 하이아(Raia) 시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²⁵⁴⁾ 중국의 Sinopec과 합작투자를 통해 브라질에서 하루 11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포르투갈 기업 Galp는 바칼라우(Bacalhau) 해상 유전에서 생산량을 약 40% 늘릴 것임을 발표하였다.²⁵⁵⁾ 음료·식료품 제조 분야 투자 사례로는 네슬레가 대표적인데, 브라질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슬레는 2022년 브라질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말까지 60억 헤알을 투자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²⁵⁶⁾ 2025년 6월에는 주요 품목의 확장과 프랜차이즈 도입을 위해 2028년까지 70억 헤알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²⁵⁷⁾

3) 주요 산업·통상 정책 변화 및 특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브라질 정부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브라질 현 툴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및 통상정책의 방향은 시장 개방, 교역 파트너의 다변화, 탈산업화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브라질 산업 경쟁력 강화, 브라질 내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시장 개방 및 교역 파트너 다변화 노력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54) "Equinor picks Valaris for \$500 million drilling in Brazil"(2024. 7. 22.)(검색일: 2025. 7. 31.).

255) "Portugal's Galp eyes 40% oil output rise in Brazil with new field"(2025. 5. 29.)(검색일: 2025. 7. 31.).

256) "Nestle to invest \$1.2bn in Brazil by 2025"(2023. 11. 29.)(검색일: 2025. 7. 31.).

257) "Nestle raises investment in Brazil to \$1.3 billion by 2028"(2025. 6. 19.)(검색일: 2025. 7. 31.).

브라질은 1991년 출범한 관세 동맹인 메르코수르²⁵⁸⁾의 정회원국으로 폐쇄형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메르코수르 역내 간 교역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역외 국가에 대한 개방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1999년 시작되어 20년이 지난 2019년에 이르러서야 협상이 완료되었던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은 메르코수르 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의 폐쇄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협상 완료 후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던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둔 12월에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협상을 개시한 지 25년 만에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향후 각 국가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지만, 동 무역협정 시행 시 브라질은 농축산업 부문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EU의 고부가가치 산업군 제품이 과거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브라질에 수입되면 브라질 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역외 국가에 폐쇄적이었던 메르코수르가 최근 들어 EU와의 무역협정을 빠르게 추진한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급변에 대비한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특히 브라질 산업정책의 일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코수르의 시장 개방을 추진했다는 점은 향후 지속될 통상 불확실성하에서 브라질의 통상정책 방향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체결로 EU는 향후 브라질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비해 브라질은 중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대미국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2025년 5월 개최된 제4차 라

258)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관세 동맹으로, 메르코수르 개별 국가가 역외 국가와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중국 장관급 포럼 기간에 개최된 브라질-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대표적으로 △약 92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신용한도 제공, △인프라 신규 투자, △중남미산 제품 수입 확대, △정부 장학금 제공 및 인적교류 확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자동차·광업·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 및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²⁵⁹⁾

또한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은 2025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5년 4월 개최된 제9차 CELAC 정상회의에서 브라질과 멕시코 양국은 정부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경제보완협정(ACE) 53과 55를 개정해 양국 간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2025년 9월 브라질 부통령은 멕시코를 방문해 ACE 53 및 ACE 55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하

표 4-69. 브라질의 소버린 계획

핵심 축	주요 내용
생산 부문 강화 (Fortalecimento do setor produtivo)	- 300억 헤알의 수출보증기금 확보 - 수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원자재·부품·중간재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면제·환급·유예하는 drawback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세금 유예 및 수출 기한 추가 연장 - 중소기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비율 상향 - 수출 보증 규정 확대를 통한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 보호 (Proteção para o trabalhador)	- 고용 모니터링 및 유지 기구 설치
무역 외교 및 다자외교 (Diplomacia comercial e multilateralismo)	- 해외 시장 확대, 대미국 수출 의존도 완화 - UAE,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과의 협상 진행 및 추진

자료: “Governo lança Plano Brasil Soberano para proteger exportadores e trabalhadores de sobretaxas dos EUA”(2025. 8. 13.)(검색일: 2025. 9. 25.).

259) 홍성우, 박미숙(2025), 「美 상호관세 및 불법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한 중남미의 대응」, p. 7.

표 4-70. 브라질 산업정책 미션과 목표

미션	주요 목표 및 내용
지속가능하고 디지털화된 농산업(agro-industry) 가치사슬	-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50% 달성 - 가족 농업의 기계화 70% 달성 -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최소 95%를 국내에서 생산
강력한 경제 및 산업 보건 복합단지	- 의약품, 백신, 의료 장비 및 기기, 재료, 기타 보건용품 및 기술에 대한 국내 수요의 70%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
지속가능한 인프라, 위생, 주택, 이동	- 도시 인프라와 모빌리티 체계 개선 - 도시 내 이동 시간 감소 - 지속가능한 공공교통 체계 강화
산업의 디지털 전환	- 브라질 산업의 90%를 디지털화 - 신기술 부문의 국내 생산 비중을 세 배로 확대
바이오경제, 탈탄소화, 에너지 전환	- GDP 부가가치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 - 바이오연료 비중을 50%로 확대
국가 주권 및 방위 관련 기술	- 방위 산업, 전략 기술 및 자립 역량 강화, 핵심 기술 확보

자료: “Nova Indústria Brasil”(검색일: 2025. 9. 25.).

였다.²⁶⁰⁾

미국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 외에도 2025년 7월 발표된 갑작스러운 미국의 대브라질 관세 부과²⁶¹⁾는 브라질의 통상 및 산업정책의 방향을 개방, 협력 및 교역 파트너 다변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향해 가속화할 수 있다. 동 관세 부과로 브라질 내 수출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이에 대응한 긴급 대책으로 소버린 계획(Plano Brasil Soberano)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브라질의 수출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외 충격으로부터 경제 주권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고용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브라질은 미국의 대브라질 관세 부과와 같은 통상 압박에 대응해

260) “Joint Statement on the Visit to Mexico by the Vice President of Brazil, Geraldo Alckmin”(2025. 9. 1.)(검색일: 2025. 9. 25.).

261) 미국은 2025년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EU에 대한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과 멕시코를 위시한 역외 국가와의 교역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는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진 정책 방향이며, 향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브라질 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2024년 1월에 발표된 브라질 신산업정책(NIB: Nova Indústria Brasil)에 잘 드러나 있다. 동 정책은 브라질이 1980년대 이후 조기 탈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산업 기반이 쇠퇴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입된 산업정책으로, 2033년까지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표 4-70]에 제시된 바와 같이 6개의 미션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²⁶²⁾

동 정책의 핵심은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참여도 제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전략과 마찬가지로 브라질도 글로벌 통상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참여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산업정책하에서 금융 지원, 공공 조달 시 국내 생산 제품 우대, 지적재산권 등 제도 정비,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같은 다양한 지원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4) 진출 기업 애로사항

브라질 내 기업 경영 시 대표적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조세 제도, △비관세 장벽, △물류 비용 및 지연, △불투명한 공공 조달 절차 등이 지적된다.²⁶³⁾ 일반적으로 메르코수르(MERCOSUR)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높은 세금과 관세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러 단계의 세금과 여러 주(state) 간의 조세 분쟁으로 인한 복잡한 브라질의 조세 제

262) "Brazil's new industrial policy plan: three sources of optimism and three words of caution"(2024. 3. 4.)(검색일: 2025. 9. 25.).

263) "Brazil Country Commercial Guide"(2025. 8. 21.)(검색일: 2025. 9. 25.).

도는 브라질 내 기업 및 브라질로 수출하는 기업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세제 개혁을 추진해 2026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5개의 연방세 및 주정부·지자체세 PIS(사회통합기여금), Cofins(사회복지기여금), IPI(공업제품세), ICMS(주 유통세), ISS(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세) 등을 2개의 새로운 세금인 CSB(재산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기여세)와 IBS(재산 및 서비스세)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 그리고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액 공제제도 운영이다.²⁶⁴⁾

비관세 장벽 또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특히 미국에서 사용되는 표준 및 기술 요건과는 다른 요건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이미 미국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기술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했다라도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기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다시 테스트하고 재인증해야 할 수도 있다.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공공 조달 절차는 많은 글로벌 기업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영기업은 국내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만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 기업은 자격을 갖춘 브라질 기업이 없는 경우에만 기술 서비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²⁶⁵⁾

한편 한국기업의 경우 대브라질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브라질 정부가 글로벌 충격에 반응해 발표하는 관세 인상 예측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²⁶⁶⁾ 2024년 1월 발표한 ‘신산업정책(Nova Indústria Brasil)’ 내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 프로그램인 Mover 프로그램은 친환경차량의 브라질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보

264) 세계법제정보센터(2025. 7. 31.), 「브라질, 세제 개혁 추진 중」(검색일: 2025. 8. 4.).

265) USTR(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pp. 29-34.

266) 홍성우 외(2024),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pp. 153~154.

호무역주의 기조하에서 친환경 완성차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철강제품이 저가로 중남미에 수입됨에 따라 브라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고 11개 압연강판 제품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5) 주요 정책과제 및 대응 방향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서 브라질이 갖는 가장 큰 이점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최근 브라질 대외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거점국으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교역 파트너 다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래 시장을 확보하고 중남미 역내 및 유럽 일부 국가로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브라질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고려한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필요하다.

중남미 지역 내 최대 소비시장으로서 브라질을 바라본다면, 자동차(전기차 중심), 자동차 부품, 농기계, 의약 등의 분야에서 브라질을 고려한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남미 지역 중 제조업 생태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특히 최근 브라질 정부가 급격한 탈산업화 속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되면서 각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환경이 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더해 전술한 일부 제조 분야는 브라질 내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수요가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은 과거부터 친환경 차량 생산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는데, 최근 Mover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려고 하는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ICT를 접목한 농기계 부문도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중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기계화율 제

고 수요²⁶⁷⁾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민감한 브라질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농기계 장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의약 부문의 내수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통합공공보건시스템인 SUS(Sistema Único de Saúde)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커 공조달 시장의 비중이 높으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한국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브라질의 대규모 내수시장 외에도, 향후 수출거점국으로서 브라질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브라질에 주목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다. 최근 브라질 산업·통상 정책의 방향, 중남미 역외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 및 협상 노력, 메르코수르 이외에 타 중남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공급망 구축 및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시 브라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급속도로 추진된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남미 4개국과 유럽 경제권이 연결되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하는바, 이에 대응할 생산 네트워크 및 공급망 재구축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브라질을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에 중요한 플레이어로 참여시키기 위해 △브라질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수출거점화 기반 생산 네트워크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은 대외경제정책 측면에서 높은 수입 관세 부과, 현지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전통적으로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지역주의를

267) Market Data Forecast, “Latin America Farm Mechanization Market Report”(검색일: 2025. 9. 25.).

유지해왔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과거의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현지 생산 강화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단순한 직접 수출에 기반한 현지 진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브라질을 활용한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시 역내 교역의 중심이면서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 브라질의 제도적 특수성과 방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과 방향성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이 신흥시장 확보를 위해 진출한 분야 모두에서 현지 생산 강화와 로컬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출 분야별로 현지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 체계 마련은 브라질을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MOVER 프로그램과 같은 로컬 콘텐츠 확보 또는 현지 조달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진출 시 단순 조립 이외에 전·후공정을 포함한 생산라인을 브라질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로컬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현 시점에서 공공조달을 염두에 둔 현지 진출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생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부 기술 이전을 포함해 현지 기업들과 생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타 제조 분야인 농기계 부문은 우선 브라질의 농업 현대화 정책과 연계해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농업용 기계 현대화 프로그램인 Moderfrota(Programa de Modernização da Frota de Tratores Agrícolas)과 같은 다양한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지 제조시설을 구축하거나 현지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 지역주의하에서 추진해왔던 수입대체산업화와 같은 각종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소형 및 보급형 농기계 생산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은 넓은 영토에 농가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은 현지 진출 시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주요 농산물 생산 지역인 브라질 남부 및 동남부, 중서부를 중심으로 사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브라질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수시장 집중형 현지 생산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강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입 관세를 회피하고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어 직접 수출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달 및 유통 시스템에 편입되고, 브라질 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출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 내 판매 및 유통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현지 생산 강화는 브라질의 제조업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의료기기와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의 현지 생산은 일부 영역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을 용이하게 만들며, 로컬 기업이 브라질 내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가치사슬을 내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생산 강화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브라질의 복잡한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일부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브라질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제도 변화와 규제 강화 시 진출 기업들의 대응 채널이 확대·강화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은 과거 브라질의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지 못 했던 바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중남미 외

타 지역에 집중하면서 브라질 내수시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폐쇄적인 브라질의 통상환경 및 복잡한 세제 구조 등을 현지 진출 리스크이자 높은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브라질 진출 비용을 낮추고, 브라질의 폐쇄적인 환경 하 현지화를 통한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 체계 강화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나)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한국 기업은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브라질을 역내·외 수출거점국으로 설정하고 브라질의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역내·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을 거점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브라질 정부는 전략적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일부 영역에서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은 브라질을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할 인센티브가 있다. 브라질 내수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한 후 메르코수르 역내 공급망 참여와 메르코수르-EU FTA 발효 이후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브라질 내 현지 생산 강화를 바탕으로 메르코수르 역내 혜택을 활용해 타 회원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메르코수르 이외에 중남미 역내 국가로의 수출 확대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와 같이 브라질이 경제보완협정(ACE: Acuerdos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려는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무역협정 발효 시 역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메르코수르 역내 교역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한 국가 내에서의 생산은 특정 품목 또는 산업

에서 RVC(regional value content) 충족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은 역외 국가로의 수출 측면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산지 기준 충족과 역내 생산 분담 전략은 메르코수르를 활용한 EU 수출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브라질을 중남미 역내·외 수출거점국으로 활용할 경우 우선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역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출 다변화 및 신흥시장 확보를 넘어 향후 정치적 불안정, 환율 변동 등과 같은 중남미 단일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 및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EU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수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브라질 진출의 이점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물류 및 운송 제한, 지정학적 위험 및 불확실성과 같은 변수에 대응할 선택지가 늘어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메르코수르와 EU 간 교역 확대 가능성은 수출거점국으로서 브라질의 가치를 높이고, 브라질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통상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산업 표준, 환경 기준, 노동 규정, 지적권 등 EU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메르코수르 내 제도적 개선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출거점화 전략은 브라질이 포함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새로운 공급망 참여와 안정화,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브라질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 정부 및 기업이 브라질을 거점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지척한 바와 같이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브라질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는 점,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국가로 제조 거점을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남미 외 지역에 비해 브라질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거점화 전략은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부가가치 제조업 분야가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동함에 따라 타 대륙에서 미국향 수출을 겨냥한 수출거점을 제외한 거점 마련 전략은 부재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한국정부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브라질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를 체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폐쇄적 지역주의 성격의 제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산업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파트너십 기반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에 무역협정 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의 협상 타결에 걸린 시간이 20년임을 고려하면,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 체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브라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야 한다. 이는 브라질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브라질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홍성우 외(2024)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중남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²⁶⁸⁾ 브라질과는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이미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어 이 협의체들을 재가동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것

268) 홍성우 외(2024),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이 한국의 진출 유망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MOU 체결로 이어진다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기업과 브라질 정부 또는 공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한국정부와 브라질 정부 간 협력 모델 등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과 브라질 공공부문의 기관 간의 공공조달을 위한 공동 생산이나, 한국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수요가 높은 그린산업, 스마트 농업 부문에서의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중장기에 걸친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면 한국기업은 브라질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비차별적 대우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브라질 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영향력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민간 기업 단독으로 현지 진출이 어려운 의료, 농업 분야는 정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과 이와 연계한 기업-브라질 공공기관 및 정부 간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기업 진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미 구축된 다양한 양자 간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된다. 본 절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최근 점진적 변화가 관찰되지만 전통적으로 브라질의 통상환경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타 지역 및 국가와의 교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브라질 간 협력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정부는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4-71. 한국과의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유망 분야: 브라질

업종	배경	정책 목표 또는 과제
자동차 (전기차 중심) 및 부품	- 중남미 역내 가장 큰 내수시장이자,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 예상 -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교역 및 협력 파트너 다변화 노력, 수출거점국으로서의 가치 증대 ○ 중남미 역내국과의 교역 확대 노력 ○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발효 가능성 ○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무역협정 협상 추진 -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각종 인프라 개선 노력	- 신형시장 확보를 위해 폐쇄적 지역주의 특성을 지닌 브라질 맞춤형 수출 및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모색 ○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로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현지화 수준 제고 -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기반한 협력 강화 플랫폼 마련 - 브라질 시장 진출 이후 수출거점국으로서 브라질을 활용하는 공급망 구축 -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기반한 협력 강화 플랫폼 마련
기타 제조 (농기계)	- 중남미 역내 가장 큰 내수시장이자,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 예상 -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교역 및 협력 파트너 다변화 노력, 거점국으로서의 가치 증대 ○ 중남미 역내국과의 교역 확대 노력 ○ 메르코수르-EU 무역협정 발효 가능성 ○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무역협정 협상 추진 -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각종 인프라 개선 노력	- 신형시장 확보를 위해 폐쇄적 지역주의 특성을 지닌 브라질 맞춤형 수출 및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모색 ○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현지 로컬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현지화 수준 제고 ○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보급형, 중소형 품목 모색 ○ 현지 AS 네트워크 확보 및 기술인력 양성 -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기반한 협력 강화 플랫폼 마련 - 브라질 시장 진출 이후 수출거점국으로서 브라질을 활용하는 공급망 구축 -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기반한 협력 강화 플랫폼 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중남미 내 가장 큰 내수시장이자 향후 꾸준한 수요 발생 예상 -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각종 인프라 개선 노력	- 신형시장 확보를 위해 폐쇄적 지역주의 특성을 지닌 브라질 맞춤형 수출 및 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모색 ○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공공조달과 연계 -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국 우선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이에 기반한 협력 강화 플랫폼 마련

자료: 저자 작성.

사. 소결

1) 인도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젊은 소비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제조 및 소비 거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물류 및 디지털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FTA 및 다자협력 참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접근성과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비동맹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G20, BRICS, IPEF 등 주요 소다자 협력체에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파트너로서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제조 중심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중장기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프라 개발과 기술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대인도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정례 대화체를 제도화해 관세·비관세 장벽, 공급망, 첨단기술, 인력 이동 등 핵심 의제를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인도와의 정상급 대화는 여러 차례 협력의 분기점을 만들어 왔으나, 2020년대 들어 접촉 공백이 발생하며 가시적 진전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연례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장·차관급 상시 점검 체계를 고정해 양국 협력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인도는 운송, 에너지, 도시 개발 등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州)별 규제와 정보 비대칭으로 우리 기업의 단독 진입이 어렵다. 이에 공적자금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인프라 연계형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인도의 정책 우선 지역에 전용 필지를 확보하고 공용설

비, 윈스톱 데스크, 훈련센터 등을 구축해 인력 수급과 품질·안전 표준 대응을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반도체, 디지털·AI, 자동차·이차전지, 제약 등 신산업에서 고속련 인력 이동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연계를 병행한 공동 R&D 및 인재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벵갈루루(반도체, 디지털·AI), 타밀나두(조선·항만, EV), 노이다·마하라슈트라(전기·전자), 하이데라바드(제약)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민간 협력의 속도와 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2) 베트남

베트남은 이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 탈중국 다국적기업과 중국계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이 확대·심화되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개방과 전략 산업 육성은 베트남의 성장 전망을 밝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지속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게 있어 베트남의 중요성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베트남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은 한국의 최대 해외 생산기지이자 주력 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신발 등이 있다. 베트남은 또한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나 특정국(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국가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하다. 베트남은 성장성과 내수시장(인구 6.8억)이 큰 데다가 거대 경제통합체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회원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베트남에서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은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 개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베트남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더해진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대베트남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베트남을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베트남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조립 수준 제조업 탈피, 소재 및 지원 산업 육성, 첨단산업 육성 등이 불가결하며, 한국 역시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육성과 함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현지 기업과 진출한 한국기업 간의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하고 베트남과 한국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첩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기술 이전 확대, 인적자원 훈련 및 인재 양성 지원 강화, 시험·인증 지원 △중국의 디플레 수출 확대에 공동 대응 △한·베트남 간 기존에 구축된 공급망 확대와 안정화는 물론 고도화 지원 △포럼 서기장 주도의 경제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양국 간 공급망 확대 및 심화와 연계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양국 간 공급망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유무상 ODA)을 활용해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경제 혁신, 제조업 고도화와 전략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ODA 자금 규모가 확대되어 독자적으로 베트남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원해 줄 수 있고, 특히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의 개발과 ODA를 연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ODA를 통해 베트남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연계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서비스 연계 비용 절감,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VC 구축 등)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베트남과의 공급망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베트남 정부가 집중하는 민간경제 육성과 제조업 고도화 지원 △최대 아킬레스건인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 개발 지원 △전략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서비스 연계 비용 절감이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 등에 ODA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한·베트남 공급망을 경제통합 확대 및 심화를 추구하는 아세안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세안이 이미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베트남이 한·아세안 협력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자, 교역, 시장, 생산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의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과 경제통합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베트남을 한·아세안 공급망 구축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비관세장벽(NTB) 철폐 지원 △아세안의 디지털 통상 환경 구축 지원 △아세안 국가의 통관 절차 투명성 확보와 원산지 세탁 방지를 위한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규모와 중위연령 30세의 젊은 노동력, 아세안 최대의 천연자원 부존을 기반으로 생산요소 공급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최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로 통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싹튼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내생적 조건과 더불어 미중 경쟁, 탈중국화 흐름 등 외생적 요인도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중립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미중 경쟁 심화 국면에서 공급망 리

스크 분산과 헤징을 필요로 하는 한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외교 파트너로 인식된다. 한국의 대아세안 생산 네트워크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우회수출기지 기능에 편중된 구조로 미중 통상 갈등,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아세안 공급망 전략은 우회 수출기지 확보를 넘어 신규 시장 확보 및 산업 협력까지 고려한 형태로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감안할 시 인도네시아는 시장, 자원, 노동력 등 핵심 생산요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지정학적 헤징 여건까지 갖춘 주요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주목되는 국가이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대인도네시아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양국은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간 연계 발전을 전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동 산업들은 각각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장기적으로 자원-소재-제조-그린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산업 협력 생태계를 형성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철강-자동차-배터리로 이어지는 전기 자동차 가치사슬 연계와 석유화학 산업의 아세안 전략거점화는 양국 모두에 시장 확대, 기술 이전, 공급망 안정화 등 윈-윈 효과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개별 산업 협력에 더해 세 산업 간 상호보완적 연계 발전을 논의하는 협력 어젠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현지 투자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니켈·보크사이트 등 핵심광물의 세계적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대중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다변화에 필수적인 파트너이지만, 원광 수출 금지·제련 의무화 등 내재화 정책 강화에 따라 기존의 원광 수입 중심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상류 단계의 장기 투자와 하류 제조 단계의 연계를 결합한 가치사슬 공유형 협력 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류 부문에는 투자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공적 금융 지원을, 하류 부문에는 채굴-제련-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연계형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에는 표준·인증·물류 등 제도적 지원도 양국 협력 이슈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한 ‘광물-제련-가공-배터리’ 가치사슬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할 경우, 한국은 역내 핵심광물 공급망의 기술과 표준을 선도할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다.

셋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TKDN·PI 등 산업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제도 개선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사용 의무(TKDN)가 2030년 이후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점을 고려해 한국기업은 현지 생산·합작법인(JV)·기술 이전 등 구조적 현지화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TKDN 적용 관련해서 현지화가 용이한 부품과 그렇지 못한 첨단 부품의 현지화 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인도네시아측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 또한 승인 지연과 기준 불일치 문제가 반복되는 사전 수입승인제도(PI)는 CEPA 이행위원회와 TBT Working Group을 통한 체계적 완화 협상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한국의 표준·기술·디지털 행정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생산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도네시아의 산업역량 강화라는 윈-윈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4) 멕시코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전 세계 타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예외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가 타 국가와 비교해

미국과의 경제통합 수준이 상당함을 방증한다. 향후에도 멕시코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비해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상대적 이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미국경제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외국인직접투자와 미국과의 교역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려왔지만, 글로벌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멕시코 역시 대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1월 완료된 멕시코-EU 무역협정 개정, 멕시코-브라질 간 경제보완협정 개선 논의 등은 멕시코가 미국 이외 국가와의 교역을 위한 새로운 수출거점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로 장기적 관점에서 멕시코 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제한적일 수 있다.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멕시코로 하여금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및 교역을 축소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멕시코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더욱 중요한 신흥시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멕시코 우선 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수출시장에 따라 멕시코 내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를 이원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과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 각각의 특성상 주 생산 모델 또는 품목이 이질적이고 운송 경로가 다르며,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와 USMCA 간 무역협정 세부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중간재 조달 방법, 제조 및 조립 과정 등을 차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최종 수출시장을 고려한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통한 현지 생산 및 판매와 제3국으로의 수출거점 마련, 즉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역내 신흥 시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멕시코 내 타국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 제조업 공급망으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북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확대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내연차 및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단순 조립 단계 외에 상류 부문에 대한 멕시코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국기업을 대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의 채굴부터 핵심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한바, 최근 생겨난 소위 틈새 시장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공략해 미국 중심 공급망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멕시코 내 생산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야 한다.

5) 브라질

브라질이 보유한 약 2억 1,000만 명의 인구는 안정적인 수요 기반으로서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단순한 생산기지 이상의 가치를 갖게 한다. 핵심광물의 풍부한 매장량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직결되며, 중남미 지역 내에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은 기업들의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은 브라질과 중국 간 경제협력 강화, EU와의 교역 확대 노력, 캐나다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의 통상정책 변화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역외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와 개방화 움직임은 과거의 폐쇄적 정책 기조로부터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향후 수출거점국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브라질 우선 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과거의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현지 생산 강화에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단순한 직접 수출에 기반한 현지 진출은 한계가 있다. 내수시장 집중형 현지 생산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강화 전략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입 관세를 회피하고 각종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어 직접 수출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현지 조달 및 유통 시스템에 편입되고, 브라질 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브라질을 역내·외 수출거점국으로 설정하고 브라질의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남미 역내·외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브라질 내수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한 후 메르코수르 역내 공급망 참여와 메르코수르-EU FTA 발효 이후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중남미 역내외 국가로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수출 다변화 외에도 향후 정치적 불안정, 환율 변동 등과 같은 중남미 단일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 및 경제적 리스크 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브라질과의 협력 체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브라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구축된 자원협력위원회, 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기업과 브라질 정부 또는 공공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 간 협력 모델 등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의 통상·산업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제조 산업이 적응해온 글로벌 생산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전략 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핵심 기술과 산업을 자급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강대국의 정책 방향은 한국기업이 구축해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반에 다음과 같은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국내 주요 제조업 생산 기반을 일정 수준 미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법안과 수출통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와 232조 관세, 그리고 이것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미투자 약정 등은 우리 주력 제조 기업의 고부가 기능이 북미로 이전되고 북미 중심의 공급망이 재구축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국내 생산의 역할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의 제조 기반 전반에 실질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미국의 전략 산업 보호 기조 속에 나타나는 대중국 견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기술·산업 자급화 노력은 한국과 중국의 생산 분업 구조 및 기술 협력의 공간을 축소시킨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생산업체가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구조 재편을 시도하였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중 간 전략적 상호작용의 지속은 글로벌 생산업체가 중국 이외의 생산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중 양국 간 수출통제, 투자 심사 강화와 같은 안보적 조치가 개입되는 빈도가 높아진다면 기술 공급망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과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은 미국과

중국 두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제3국 기업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부과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 수출을 하는 모든 나라들의 수출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 내에 제조 기반을 둔 생산업체의 대미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자국 중심 온쇼어링 확대는 선도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참여해 기술 습득과 생산성 증가를 꾀하기 용이했던 우리 수출기업의 전방 연계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그간 생산성 증가의 수혜를 입었던 기업의 혁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정부가 자급화 노력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과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명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으나, 이미 2010년대 이후로 내수시장에서 소구력을 갖춘 중국의 브랜드 보유 기업이 혁신과 디자인, 기획을 리드하고, 중국의 글로벌 OEM이 로컬 소싱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ODM/OEM 제조사를 자국 기업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글로벌 기업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미국의 수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제3국 시장의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의 경쟁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기업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비용 절감 노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입지를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제조 산업은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 및 생산성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을 유지하고 생산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생산지이자 소비시장의 역할을 할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에 대해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우리 제조 산업이 제조 생태계 핵심 역량을 보호하고 기술 및 생산성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 중심 공급망을 주도하는 기업, 다시 말해 여러 기업에 걸쳐 복잡하고 분업화된 생산 시스템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리더 기업의 핵심적 기술 역량이 국내에 보존되어야 한다.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핵심적 기술 역량이 단기간에 이전될 가능성은 적으나,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SW 중심의 기업경쟁력 강화가 강조된다면 이러한 제약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R&D 활동이 국내 제조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산업에서 고급 R&D 인력의 수급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정렬된 민관의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고급 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 산업 생태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OEM/ODM 공급사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증가로 인한 수출 비용 증가로 거래 관계가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순히 규격화된 중간재를 생산하는 OEM의 경우, ODM보다 생산 활동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관세 증가에 따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공급자를 해외 생산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만약 국내 뿌리 기업이 도산하여 국내 제조 생태계에서 배제되고 해외에 있는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던 생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어 후일 국내에 효율적인 제조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에 국내 생산자가 계속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북미 역내 수출을 위한 무역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기반한 OEM/ODM 공급사가 공정(process) 혁신과 제품 혁신을 이루어냄으로써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고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AI와 산업용 로봇 도입을 위한 투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분야에서 대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산, 거버넌스, 대화 채널을 고도화해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은 Technology Prosperity Deal(이하, 한미 기술번영 협정)을 통해 첨단분야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협력 체계를 마련하자는 원칙에 합의하였는데, 내년도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은 기초 연구나 초기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실증과 상용화 단계로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협력은 궁극적으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첫째,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둘째,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셋째,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 넷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국 간 첨단전략산업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먼저 해외 생산거점의 산업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과 상반되는 정책으로서 인식될 소지가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 국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해내는 전략적인 개발정책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정부는 우리 제조 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을 새롭게 기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재편 압력을 받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글로벌 사우스 생산 거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함께 산업정책과 ODA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간 별개로 취급되었던 ODA 정책과 공급망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해외 생산거점에 진출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은 국가에서 해당 기업이 수요하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 드러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인재 확보 노력이 정부의 역량 강화 ODA 사업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지 생산 네트워크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 거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 현지국 고급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가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식별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정책과제를 산업정책, 대외·통상정책,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세 가지 분류로 재정렬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산업정책

가.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²⁶⁹⁾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직종을 포함하는 공학전문가·기술직과 정보통신전문가·기술직 직종에서 산업기술인력의 부족 인원²⁷⁰⁾이 각각 6,964명 및 6,825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조사 대상 직종의 부족 인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산업 현장은 전체적인 인구 감소와 동시에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력 업종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공급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원인과 이공계 연구·개발 직종의 낮은 처우, 경력 전망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운데 양질의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족한 연구·개발 인력을 해외로부터 수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 출신의 연구·개발 인력마저도 국외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²⁷¹⁾ 최근 전문 인력 해외 순유출 인원이 2019년 기준 7.8만 명에서, 2021년 8.4만 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269)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 및 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270)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 주문 대응을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력.

271) 김천구(2025. 6. 18.),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brain drain)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검색일: 2025. 9. 25.).

확인된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두뇌 유출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이후 두뇌 유출 지수가 30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다른 국가에 뒤처지고 있음이 드러난다.²⁷²⁾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 유출 현상은 특히 첨단기술인 AI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ICT 분야 박사 배출 5위, AI 관련 종사자 수 10위로 연구·개발 인력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분야 인재 유출입수지는 2024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5위를 차지하며 AI 인재 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AI 관련 국내 연구·개발 역량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육성 및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 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에 의거 2023년부터 시행된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고시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분야에서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특성화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학사급 인력 공급 및 석·박사급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특성화 전공을 운영하면서 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운영해야 하며, 분야별 최소 25~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28개 사업단에 2025년 기준 1,16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한 석·박사 연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연간 30억

272) 위의 자료.

원 규모의 기금 지원을 대학에 5년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해당 기금을 인건비, 교육환경 구축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에 쓸 수 있게 되었다.²⁷³⁾

한편 2025년부터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인재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AI최고급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신진연구자(박사후연구자 또는 최초 임용 7년 이내) 중심의 산학 프로젝트를 초기 10억 원, 2차 연도부터 20억 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부터 ‘대학원생 우수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과 중심의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이외에 새롭게 시행되는 연구생활장려금의 경우 매달 80만 원(석사)과 110만 원(박사)의 지원금을 보장받도록 하였다.²⁷⁴⁾ 해당 제도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과제 학생 인건비와 BK21 연구장학금에 더하여 지원되는 금액으로, 2030년까지 지원 규모를 늘려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대상자를 약 1만 명, 연구생활장려금 대상자를 약 7만 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2025년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이 약 9.6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수혜자 비율은 50.7%로 나타나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총 83.2%까지 확대될 예정이다.²⁷⁵⁾

우수 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해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개편한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2023년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을 시작으로 해당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들이

273) 「첨단산업 이공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검색일: 2025. 9. 25.).

274)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검색일: 2025. 9. 25.).

275) 「[보도설명] '이공계 장학금 수혜율 2% 불과... R&D 예산 무색' 기사 관련(SBS)」(검색일: 2025. 9. 25.).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 자격 비자(F-2)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경력 및 실적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영주 자격 비자(F-5)를 부여하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특별귀화를 허용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꾀하였다. 2025년 확대 적용된 ‘K-STAR 비자트랙’은 동 제도를 20개 일반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²⁷⁶⁾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더해 2025년 11월 정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통해 향후 추진할 중점 과제로서 국가과학자 선정 및 육성,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 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해당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국내 이공계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 해외 우수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 친화적 연구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제시되는데, 기존의 인재 육성 및 인재 유치 정책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⁷⁷⁾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이 연구·개발 인력 공급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담고 있다면, 확보된 연구·개발 인력을 산업의 수요와 긴밀히 연계하여 기업들이 해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²⁷⁸⁾ 해당 법은 구체적으로 산업계 주도의 사내 교육, 업종 및 기술별 교육, 대학교육 참여 지원, 해외인재에 관한 수요조사, 입국 및 체류특례, 정주 여건 종합지원, 여성·청년,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 인재정보 관리, 인력 부족 위기업종

276)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2025. 9. 23.)(검색일: 2025. 9. 25.).

277)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검색일: 2025. 9. 25.).

27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검색일: 2025. 9. 25.).

지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에 근거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행할 때 정부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우수인재의 '활용' 방안에 더욱 무게를 두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과 균형을 맞추는 정책 조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이 특정 기술이나 산업 내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업 방향은 반드시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실행하는 사업과 대상 업종, 지원 시기, 지원 규모 측면에서 유기적 연결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조업 전반의 연구·개발 자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공급이 단기적인 유량(flow)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저장(stock)의 문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술 분야의 단기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한시적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반복하기보다, 연구·개발 인력과 이들의 역량이 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장기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력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수요와 빠르게 괴리될 수 있으며, 기업 간 인재 확보 경쟁도 치열하여 양성된 인력이 국내 산업 생태계 내부에 안정적으로 축적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인력 양성 규모 확대만으로는 국내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개발 인력이 축적한 기술 역량이 기술이전과 기술창업을 통해 사업화되고, 그 성과가 연구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연구·개발 인력이 축적한 기술 역량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검증되도록 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갱신할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한시적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내부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10월 발표된 ‘U.S.-ROK Technology Prosperity Deal’(이하, 한미 기술
번영 MOU)²⁷⁹⁾과 2025년 11월 확정된 「한미 정상 간 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
시트」²⁸⁰⁾ 및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²⁸¹⁾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은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 그리고 기술·안보 파트너십의 교환을 통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투자 및 공급망과 관련하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딜
을 통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첨
단기술 및 한국의 주력 제조산업 분야의 대미투자를 확장하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15% 적용을 이끌어 내
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투자 대상 분야를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분야로 명시함으로
써 한국의 대미투자가 갖는 의의를 경제적 이익 증진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는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의 가치가 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
한 심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아래 나타난다는 한미 기술
번영 MOU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 한미 기술번영 MOU는 의료, 첨단 제
조, 교육 등 분야에서의 AI 도입 및 혁신의 가속화와 6G, 바이오, 양자
(Quantum), 우주 탐사 협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

27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U.S.-ROK Technology Pros-
perity Deal”(2025. 10. 29.)(검색일: 2025. 10. 30.).

280)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025. 11. 13.)(검색일: 2025. 11. 14.).

281) 「(참고자료)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2025. 11. 14.)(검색일: 2025. 11. 15.).

십 확립을 골자로 한미 공동의 장기 협업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를 꾀한다.

한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을 활용한 미국의 제조업 재건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구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대외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간주될 때,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구도를 적극 활용하여 규정된 투자 및 협력 분야 안에서 미국이 가진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에 윈-윈이 되는 협력의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기초적 연구 교류 및 협력뿐 아니라 실증 및 상용화 단계에서 양국의 산학연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한미 기술번영 MOU의 후속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인 공동위원회 회의(Joint Committee Meeting)는 내년 개최 예정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실질적 추진체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⁸²⁾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1992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재체결된 이후인 1993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2년마다 정례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2004년 제6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터 한국 측 과기부 장관과 미국 측 백악관 과학기술정책 실장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로 격상되었고, 지난 2023년 제11차 한-미 과기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관련 협력 현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회의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핵융합·핵물리학,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에서의 양국 정책 공유 및 협력 계획이 수립되었고, 인력 교류·연구윤리·표준에서의 연대 강화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2023년 4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내 과학기술 분야 성과와 관련된 후속 협력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²⁸³⁾

새로이 체결된 한미 기술번영 MOU의 이행 체계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은 기존 정례 협의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성

282)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2025. 10. 29.)(검색일: 2025. 10. 30.).

283) 「‘한-미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2023. 5. 19.)(검색일: 2025. 9. 25.).

과 안정성이 담보되는 측면이 있지만, 기존 과기공동위원회의 외연을 넘어서는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에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의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은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공동연구 수행 및 지원 방식, 공동연구 결과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배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 기술번영 MOU 중 AI 정책 및 수출이나 첨단 무선 접속망 및 6G 공급망 구축, 양자 공급망 확보 등의 의제는 순수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나 원천 기술 협력을 넘어 기술 실증과 상용화 단계까지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전제하므로, 민간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조정할 지속적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미 과기공동위 활동에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는 제도화 된 한-미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부 분야별 부속 협정(중국 등) 마련, 공동기금 설치(이스라엘), 과학기술 협력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무관세 조치(영국, 이스라엘 등) 등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앞두고 한미 간 산업 및 과학 기술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미과학기술협력재단’과 ‘한미산업협력기금’의 설립 및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²⁸⁴⁾

한미 기술번영 MOU 중 수출, 국제 표준 등 통상 관련 협력 사안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통상을 연계한 전례 없는 새로운 방향 또한 모색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EU와 미국 간에 구축된 TTC(EU-US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구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U-US TTC는 핵심 ·

284) 「클린틴방한계기 한미 과학기술협력재단.산업협력기금추진」(1993. 7. 8.)(검색일: 2025. 9. 25.).

신흥 기술의 거버넌스·표준·공급망을 다루는 고위급 플랫폼과 분야별 워킹 그룹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급 채널의 경우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같이 정례적인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현안에 관련된 큰 틀의 정책 조율에 이바지하고 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통상·산업 유관부처, 산업계, 학계, 정출연 등이 과기공동위원회 채널을 통해 해외 카운터파트와 보다 밀접하게 협력한다면 첨단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국내 제조기업이 기술 개발과 이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 역량을 보전하고 특히 국내에 소재한 협력사가 기술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AI와 로봇 기술에 기반한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AI 팩토리는 AI 기반 로봇·장비 등을 제조공정 전 과정에 결합시키는 개념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⁸⁵⁾

2025년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AI 팩토리 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와 탄소 중립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 팩토리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²⁸⁶⁾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업종별 앵커기업 중심의 AI 팩토리를 확산시키고, 2027년 이후에는 업종별 특화 제조 AI 모델을 확산시켜 2030년까지 제조기업 AI 도입률을 40% 이상

285) 「올해부터 전국에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본격 확산한다」(2024. 6. 17.)(검색일: 2025. 9. 25.).

286)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AI 팩토리 분야-」(2025. 9. 19.)(검색일: 2025. 9. 25.).

으로 높이는 것을(2025년 현재 5% 미만) 목표로 한다.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는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AI 팩토리 특화 AI 혁신거점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 각 부처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2025년 10월 세 부처가 ‘산업 전반의 성공적 인공지능 전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제조전담팀(TF)을 구성하여 AX 협력 거버넌스를 구체화하였다.²⁸⁷⁾

산업부는 2024년도에 시작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선도 프로젝트 26개를 선정하고 AI 도입 컨설팅, 기술 개발 및 실증, 금융(무역 보험 · 대출 · 펀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²⁸⁸⁾ 2024년도 사업의 경우 10개 사업과제 모집에 213개 수요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을 26개로 확대한 바 있고, 2025년도에는 26개 사업과제에 519개 수요가 접수되어 주력 선도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²⁸⁹⁾

산업부는 2025년 기존 ‘AI 자율제조’ 사업을 ‘AI 팩토리’ 사업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면서 12개 업종별 선도 기업을 선정하고 공급망 단위의 대 · 중견 ·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주축으로 연간 100개 사업을 통해 핵심공정 제조 AI 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주요 산업에 대한 AI 팩토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선도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재조정 압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적시성 높은 대응이며, 특히 공급망 단위에서 핵심 공정을 보유한 대표기업 및 협력사를 발굴해 제조공정 AI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

287) 「중기부-과기부-산업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제조 · 산업 인공지능(AI) 대전환 협력 본격화」(2025. 10. 15.)(검색일: 2025. 10. 30.).

288)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한다...정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2025. 5. 26.)(검색일: 2025. 9. 25.).

289) 「산업부, AI 팩토리 본격 추진」(2025. 5. 26.)(검색일: 2025. 9. 25.).

라 할 수 있다. 다만 업종별 핵심 공정을 보유한 대표기업 및 협력사의 경우 단순 부품 생산 및 납품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사에 비해 대체가 어려운 공급망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급망상 뿌리기업으로 연결되는 소재·부품 기업이 AI 팩토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보완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부의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부 해당 사업의 경우 2017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공정에 IoT, 5G,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방면의 고도화 사업을 지원해왔다. 현재 ICT 융합 스마트공장이 포괄하는 신기술 적용 범위가 넓고 고도화 수준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도 그만큼 복잡해진 실정이다. 따라서 AI 팩토리 전환에 대한 지원이 전체 사업의 일부로서 분절화되어 있는 구조로 나타나 전면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업종별 핵심 공정을 보유한 대표기업 및 티어 1, 2 협력사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사의 해외 이전에 따른 공급망 분리 가능성과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AI 팩토리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내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령 ICT 융합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지원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지원하기에 적절한 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시 가점의 형태로 고객사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면 AI 팩토리 전환 사업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중기부 간에 업종별 얼라이언스 공급망 참여 소재·부품 기업에 관한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하는 것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외 · 통상 정책

가.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멕시코는 북미 시장 접근을 위해 필요한 중요 생산거점이다. 멕시코는 미국에 비해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 USMCA를 통해 멕시코산 상품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미국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다는 점 등 북미 역내 주요 생산거점으로서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에 의해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확장하거나 이전 중이며, 특히 중국의 Jetour, BYD, SAIC, CATL 등 자동차 업계 기업들 또한 멕시코에 대한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²⁹⁰⁾²⁹¹⁾

다만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대멕시코 투자 흐름은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정책 공조하에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멕시코를 통한 중국산 상품의 우회수출을 막고자 멕시코를 압박하였고,²⁹²⁾ 자국 산업의 보호를 요청하는 산업계 요구와 맞물려 멕시코는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멕시코 세인바움 행정부는 2026년 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인도를 비롯한 모든 FTA 비체결 국가로부터 17개 분야 1463개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올리는 (일부 품목의 경우 50%) 관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및 화학 물질, 신발 및 가죽 제품, 섬유 및 의류, 강철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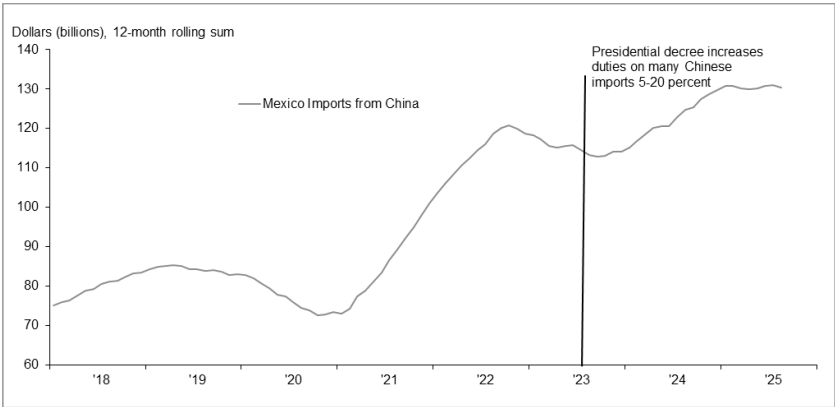
290) "The Shifting Dynamics of Nearshoring in Mexico"(2024. 9. 5.)(검색일: 2025. 9. 25.).

291) "A Closing Back Door? China's Evolving FDI Presence in Mexico"(2024. 10. 10.)(검색일: 2025. 10. 30.).

292) "Mexico has proposed matching US tariffs on China, Bessent says"(2025. 3. 1.)(검색일: 2025. 9. 25.).

그림 5-1. 멕시코의 중국산 상품 수입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주: 2025년 8월까지의 데이터.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재인용: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알루미늄, 가구, 목재 제품, 종이 및 판지, 장난감, 스포츠용품, 가정용품 등이 있으며, 국내 산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²⁹³⁾

멕시코의 FTA 비체결 국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지난 2년 동안 줄곧 이루어져왔으나, 이번 발표에서 그 수준과 범위가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기업과 대멕시코 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1위 품목인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의 자동차 생산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²⁹⁴⁾²⁹⁵⁾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내년도 USMCA 검토에 앞서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²⁹⁶⁾ 내년 2026년 7월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USMCA 공동 검

293) "Mexico Proposes Significant Customs and Tariff Reforms as Part of the 2026 Economic Package"(2025. 9. 11.)(검색일: 2025. 9. 25.).
294) "Mexico to raise tariffs on cars from China to 50% in major overhaul"(2025. 9. 12.)(검색일: 2025. 9. 25.).
295) 「멕시코, 한국과 '최대 50% 관세 부과' 관련 협의 중」(2025. 9. 13.)(검색일: 2025. 9. 25.).
296) "Higher tariffs in U.S., Mexico part of global response to China export surge"(2025. 10.

토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회의에서 USMCA 협정의 유효기간 16년 연장(2026~42년) 여부가 결정된다. 현지 산업계와 상공회의소들은 역내가치비율 요건 강화, 노동가치 조항 강화,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규제 공조를 주요 협상 의제로 예상하고 있으며,²⁹⁷⁾ 멕시코가 원산지 규정 강화와 중국 견제 동참 등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부품 25%)의 철회 또는 조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한다.

대중국 규제의 확대와 원산지 규정 준수 요구가 늘어나는 경우 멕시코 내 보호무역주의적 기조는 그에 편승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서 멕시코로 연결되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은 FTA라는 보호장치가 없을 경우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멕시코 수출 및 투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투자기업의 북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한국과 멕시코 간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한-멕시코 FTA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양자 간 FTA를 체결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멕시코 FTA 추진 방안에 관한 논의는 2000년에 처음 이루어졌고, 제1차 한-멕시코 FTA 협상이 2007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8년 제2차 한-멕시코 FTA 협상 이후 멕시코의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가 피해를 우려하여 한국과의 FTA를 반대한 뒤로 멕시코 정부는 그간 한국과의 FTA 협상에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²⁹⁸⁾ 이후 2022년 3월 1일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멕시코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²⁹⁹⁾

현재 정부는 CPTPP의 가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³⁰⁰⁾

31.) (검색일: 2025. 11. 3.).

297) 「2026년 USMCA 개정 쟁점」(2025. 11. 4.) (검색일: 2025. 11. 5.).

298)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 현황 및 FTA 체결의 방향성」(2022. 7. 29.) (검색일: 2025. 9. 25.).

299) 「[동향세미나] 멕시코,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합의」(2022. 3. 17.) (검색일: 2025. 9. 25.).

300) 「여한국 통상본부장 “CPTPP 가입 전략적으로 추진”」(2025. 9. 2.) (검색일: 2025. 9. 25.).

협상의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고려할 때, 한-멕시코 양자 간 FTA보다 협상의 난이도는 높지만,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누적원산지 기준을 통해 회원국 간 공급망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자 FTA에 비해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더욱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의 개시와 추진 과정에서 멕시코에 대한 시장 접근 수준을 높이는 것을 전략적 목표 중 하나로 삼고,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해 우리 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안보와 지정학적 전략 측면에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국내 여론에 환기한다면, CPTPP 추진에 대한 내부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해외 동반 진출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협력사들이 고객사인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을 계속 공급할 목적으로 대기업의 요구 또는 자의에 의해 해외에 진출해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반 진출의 장점 중 하나는 자산특유적 관계인 국내 고객사와 협력사 간 관계가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여전히 이어져 거래 관계가 바뀔 때 나타나는 품질 관리의 문제나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빠르게 생산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가 협력사들과 선단식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면서 해외 동반 진출 모델의 장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한국 완성차 업체와 전자 업체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도 이러한 동반 진출 모델이 활용되었다.³⁰¹⁾

301) 오중산(2013).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선제적으로 생산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은 정보, 자금, 인력, 리스크 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 이 경우 해외 생산거점에서는 현지 조달, 서비스, 부품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후방생태계의 국제화가 뒤따르지 못해 불완전한 해외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협력사는 국내에 잔류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고객사에 대한 수출 물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고객사가 낮은 조달 비용을 지불하는 해외 조달선을 확보할 경우 기존의 생산 관계가 단절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대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조생태계를 해외에 구축할 수 있고, 중소기업 협력사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고객사를 확보하여 수출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생산품이나 공정을 혁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내 고객사와 협력사의 해외 동반 진출 과정에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검토하는 리스크 수준이 해외 생산거점 내 집적효과와 시장 선점으로 인한 추가적 이익을 고려하여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후생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에 대한 정당성은 원론적으로 확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관계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해외투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이미 다수 제도화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은행은 2011년 도입 이후 계속 운영 중인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투자자금과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출을 포함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은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해외 진출 기업(대기업, 중견 기업, 공공기관)

과 동반 진출한 협력 중소·중견 기업에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L사는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16개 협력사에 해외 동반 진출 자금 약 1,10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⁰²⁾ 동반 진출 관련 보증으로는 2023년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이 신설되어 대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협력사에 최대 200억 원(보증 비율 100%)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주력 업종의 선도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해외 동반 진출을 선호하면서 동시에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므로 정책금융의 지원 여부가 대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및 재무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거래선 유지를 위해 대기업이 진출하려는 해외 생산거점에 함께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다른 성격의 정부 지원을 찾아야 한다.

관련하여 올해 도입된 정책으로 2025년 3월 발표된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에 따르면, 주요 변경사항으로 '해외 진출 기업 정책자금'의 신규 추진계획이 발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항목에서 직·간접 수출 규모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하에서 원하청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간접수출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³⁰³⁾ 지원 대상 기업을 판단할 때 수출 실적 요건을 고수하기보다는 전략적 생산거점을 지역단위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의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정책 금융 또는 자금의 직접지원 이외에도 해외 동반 진출을 고려하는 중소·

302) 「LG전자 “작년 보다 2배 이상 감면된 특별 금리로 협력사 지원”」(2023. 3. 14.)(검색일: 2025. 9. 25.).

303) 「수출기업 분명한데...재하청 제조업 ‘실적 공백’」(2018. 9. 12.)(검색일: 2025. 9. 25.).

중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과 같이 해외 진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와 실제 투자 시 입지 선정 및 투자 대상국 규제 대응을 위한 경영적, 법률적 조력에 관한 서비스 영역 지원을 확대하여 내부 역량이 미진한 기업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조정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위와 같은 지원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생산지 이동이 국내 하도급 관계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거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늘리되, 기존에 연결된 국내 하도급 기업과의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이들 기업이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르는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개발협력 정책

가.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

글로벌 사우스는 한국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전략적 자원 공급지이며,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은 저렴한 생산비용과 풍부한 노동력, 지

정확적 요충지로서의 입지, 핵심 자원 보유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가 최근 브릭스(BRICS) 확대, EU-메르코수르 협정, 아세안-GCC 협력 등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중장기 공급망 및 개발협력 전략에 있어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ODA를 통한 한국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은 개별 공장 건설이나 단발성 프로젝트 수주 위주로 진행되어, 현지에서 부품·소재, 물류, 인력, 금융, R&D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독일·일본 등 산업 ODA 상위 공여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경제 인프라 및 생산 부문에 대한 ODA 절대 규모와 비중에서 한국을 상회하면서, ODA-무역-투자 연계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의 산업 ODA는 통신, 에너지, 교통 인프라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 종합 전략이 아직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³⁰⁴⁾

또한 독일, EU, 일본 등은 산업 ODA와 개발금융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현지 제조 기반을 다지고 자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은 기후·에너지 전환, 녹색인프라, 기술협력 등에 중점을 두면서, KfW·GIZ 등 국책금융·집행기관을 통해 ODA·OOF(공적 기타 자원)를 혼합해 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은 인프라 대형 투자와 더불어 유럽지속가능개발기금 플러스(EFSD+)와 같은 리스크 분담 기구를 활용해 자국 기업의 현지 가치사슬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개발협력대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개정(2023년)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공급망·경제안보, 디지털·녹색

304) 임소영(2023).

전환 등을 ODA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위치시키고, JICA, JBIC, NEXI를 활용
해 ODA, 수출금융, 투자보증을 결합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ODA 규모와 구조 측면에서 이들 상위 공여국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①
국가전략·산업정책·대외전략을 포괄하는 최상위 차원의 ‘정합적 내러티브’
와 ②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적·제도적 수단 조합(ODA-EDCF-수출금융-
민간투자)의 체계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된다.³⁰⁵⁾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도 산업 ODA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개발금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산업 ODA 분야의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최상위 전략 문서에서부터 하위 실행 계획까지 일관된 정렬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 성과나 인
도적 지원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예산 확보 및 산업 특화 평
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원 조달의 경우 ODA가 민간 자본투자와
이어지는 혼합금융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ODA 자금
을 투입하거나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 용자를 통해 프로젝트의 신용도를 보
강하는 등 PPP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
별로 정부와 참여 기업 간의 리스크 분담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부족이나 복잡한 행
정 절차로 인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국기업
의 투자 성과를 약화시키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산업 ODA는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수원국 정부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상설 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규제, 통관, 인허가, 산업표준 등 제
도적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한국기업이 직면한 리스
크를 완화하고 투자 수익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요 생산거점 국가별 특성에 맞춘 ‘중장기 산업 ODA

305) 정지원 외(2023).

로드맵'이 실행되어야 한다. 먼저 각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정밀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전자·IT 중심의 조립과 중간재 가공, 인도네시아는 광물·소재 산업과 자동차·배터리 밸류체인, 필리핀은 IT 서비스 및 반도체 후공정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적 분화는 산업 ODA가 국가마다 다른 기초 조건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유형의 인프라 지원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생산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제도, 인력, 산업 생태계를 각각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전자, IT 조립 중심의 생산 기능은 항만, 전력의 안정성과 함께 표준, 통관의 효율성과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물·소재 기반 산업은 물류·에너지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자원정책·투자규제에 대한 제도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산업 ODA의 1단계 설계는 각국 생산 네트워크 기능을 기준으로 필요 기반의 유형과 수준을 다르게 정의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수원국 산업정책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재편 수요를 서로 교차시켜 공통된 전략 공간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아시아 주요 수원국은 제조업 고도화(베트남), 광물·전기차 가치사슬 확장(인도네시아), 디지털 서비스 강화(필리핀)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 ODA는 단순히 수원국이 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원국의 산업정책 방향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필요가 정합적으로 겹치는 지점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에서는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인력·제도 기반 강화가 한국기업의 전자·IT 생산 안정성과 직결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광물·소재 산업정책이 한국 배터리·전기차 공급망과 직접적 연계를 갖는다. 필리핀에서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한국기업의 IT 서비스 다변화 필요성과 일치한다. 산업 ODA 전략의 2단계는 바로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두고

사업 방향을 조직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ODA를 개별 사업 단위로 나누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 인프라, 제도·규제 기반, 기술·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부터 제도·규제 개선, 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한국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확장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나.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

현지 기업 인터뷰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살펴본바, 현재 우리 해외투자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투자국 내에서 원활하게 생산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기존 ODA 사업을 활용한 고급인력 육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지국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통상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의 ODA 사업 중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우리 진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TASK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시행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를 한국의 산업기술과 노하우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섬유 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기술 지도(19.95억 원), 베트남 전자전기 분야 생산기업
현 장애로기술 지도(18.8억 원)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형 ODA 및
사후관리와 함께 산업통상부 ODA의 3대 축을 구성한다.

TASK의 사업 수행 주체는 해당 국가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개발협력 성과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 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이다. 특히 사후관리 사업의 경우 영리기관인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은 단독 또는 컨소시
엄 형태로 수행 가능하며, 이는 기업이 단순한 재원 제공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TASK가 다른 ODA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핵심적 특징은 생산현장 중심 접
근에 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면하는 품질 불량, 공정 비효율, 설비 문제 등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즉
각적 해결을 제공한다. 한국 전문가팀이 현지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어 문제
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현지 인력과 함께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추상적인 역량 강화
가 아니라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전수한다는 점에서 우리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TASK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인력 수급을 위해 활용하는 것
이 다른 ODA 프로그램 대비 갖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현장과의 연계가 긴밀하다. 우선 여타 민관협력 개발 프레임워
크와 달리, TASK는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작동하므로 기업
참여의 정당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는 KIAT는 조직
구조상 ‘국제협력단’과 ‘산업기술 ODA전략실’, ‘산업기술 ODA실’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베트남사무소와 같은 해외 거점을 통해 현지 밀착형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둘째, 산업별 특화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TASK는 섬유, 전자전기,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산업 분야별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어, 해당 산업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과 ODA 사업이 자연스럽게 매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자전기 분야 TASK는 삼성전자, LG전자의 베트남 생산기지 및 협력업체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스리랑카 섬유 분야 TASK는 우리 섬유·의류 기업들의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

셋째, 기업이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TASK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사후 관리 사업에서 기업 주도가 권장된다. 이는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필요한 인력의 역량을 직접 정의하며, 교육 과정에서부터 잠재적 채용 대상을 발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기존 프로그램과 예산을 활용한 점진적 확장이 가능하다. TASK는 이미 매년 국가별·산업별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 연계성 및 특화 가능성, 기업 참여의 용이, 기존 TASK 사업의 축적된 경험 등을 고려할 때, TASK를 ODA 수원국 내 고급 생산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TASK 사업에 체계적인 인재 발굴 및 교육 모듈을 추가한 ‘TASK+’ 모델을 제안한다.

인재 발굴 및 교육 모듈은 현장 기술지도와 인재 양성을 통합하여, 단기적으로는 생산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력 풀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본의 JICA가 2014년부터 시행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교육 이니셔티브(African Business Education Initiative for Youth, 이하 ABE Initiative)와 유사성을 갖는다.

ABE Initiative는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일본 대학에서의 석사학위 과정과

일본기업에서의 인턴십을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최대 3년의 프로그램 기간에 참가자들은 6개월의 연구생 과정, 2년의 석사 과정, 그리고 6개월의 기업 인턴십을 경험하게 된다. ABE Initiative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구조에 있다. 단순히 교육 재원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료생들을 잠재적 인력풀로 관리한다.³⁰⁶⁾ 2024년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은 54개국에서 약 1,900명을 교육했으며, 약 1,6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Kakehashi Africa'라는 동문 조직이 48개 이상의 국가에서 일본-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JICA 산하 오가타 사다코 평화 개발 연구소는 이집트,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4개국 졸업생에 대한 심층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장기적 성과를 추적하고 있다.³⁰⁷⁾

TASK 사업에 인재 발굴 및 교육 모듈을 추가한 TASK+ 모델은 3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 1단계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핵심 인재 발굴을 결합한 단계로, 한국 전문가팀이 현지 생산기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TASK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협력 과정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는 현지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 TASK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업체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 인력을 TASK+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발굴된 인력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해당 산업에 관련된 기초 지식 및 한국기업의 생산관리 기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기업의 부담을 낮추도록 정부에서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2단계는 한국 내 전문 교육 과정 이수 및 기업 인턴십이다. 우선 1단계에서

306) JICA, "Master's Degree and Internship Program of African Business Education Initiative for Youth (ABE Initiative)"(검색일: 2025. 10. 10.).

307) JICA, "Making Japan's Business Africa's Business: Exploring the Impacts of the ABE Initiative"(검색일: 2025. 10. 10.).

발굴된 우수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산업 특화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교육 기관과 우수 기업의 사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단계의 기업 인턴십은 교육과 채용을 연결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인턴 기간 동안 TASK+ 참여 기업은 해당 인력의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조직 적응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들을 채용 가능한 풀로서 관리할 수 있다.

3단계는 현지 복귀 또는 한국 내 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들은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장기지속적인 네트워킹 대상이 된다. 2단계에서 훈련된 인력은 세 가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지 복귀 후 한국기업에 채용되어 전문성에 따라 생산 관리자, 품질 관리자, 기술 지원 엔지니어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본사와 현지 생산기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1단계 TASK 사업 대상이었던 협력업체로 복귀하여 기술 책임자가 되며, 한국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협력업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TASK+ 참여한 한국기업의 국내 법인에 남아 계속 커리어를 쌓는다.

훈련받은 인재들의 장기지속적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TASK+ 동문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행사에 이들을 참여시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술 관련 Q&A, 채용 정보, 협력 기회를 등을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년 단위의 추적 조사를 시행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TASK+ 사업을 고도화한다.

TASK+ 사업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TASK 사업의 근거법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TASK 사업에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TASK+ 사업의 경우 일반 TASK 사업 대비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단계별 사업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TASK+ 사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모듈을 전담할 인력 및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KIAT의 국제협력단 내에서 TASK+ 사업 기획 및 관리, 한국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문 네트워크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관리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또한 해외 거점 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여 현지 인재 발굴부터, 1단계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TASK+ 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1, 2단계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3단계 인재 채용 시 기업 채용 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신청 간소화 혜택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정부가 미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TASK+ 수료 인원에 대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장기 연수나 순환 근무가 가능하도록 이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관 교육기관에 TASK+ 전용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산업별 특화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기업 실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기업과 교육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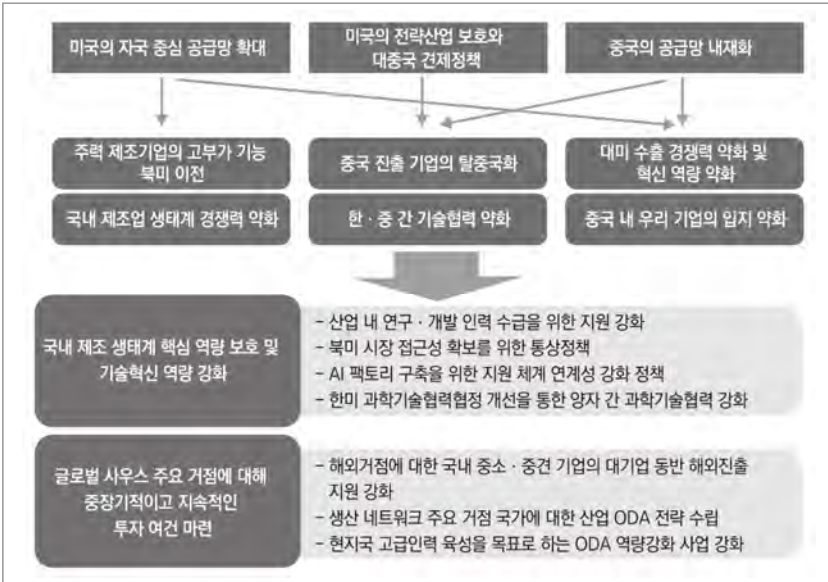
다섯째, 성과 측정 및 환류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한다. TASK 본 사업 성과와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과정의 성과를 통합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5년 단위 장기 추적 조사를 의무화 한다. 우수 사례의 경우 차기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참여 기업 만족도와 현지 정부 평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면서 동시에 개도국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미국과 중국의 통상·산업정책 변화는 한국 제조업이 구축해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반에 구조적 흔들림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기조 하에 전략 산업 보호, 보조금 법안, 수출통제, 상호주의 관세, 232조 관세, 대미투자 약정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한국기업의 생산 기능이 북미로 이동하도록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생산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역시 기술·산업 자급화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간의 생산 분업 구조와 기술 협력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중국 외 지역의 생산거점 확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미중 양국의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강화로 기술 공급망의 분리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기업의 대미수출 비용을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온쇼어링 확대는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던 선도 기업과의 전방 연계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위험을 낳는다. 중국 시장에서도 로컬 브랜드의 부상과 중국 글로벌 OEM의 로컬 소싱 강화로 인해 한국기업이 시장에서 대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필요한 대응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을 보호하고 기술·생산성 수준을 고도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중심 공급망을 조직하는 리더 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이 국내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많은 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 수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OEM·ODM 공급사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증가에 따라 해외 생산자로 대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북미 역내 수출과 관련된 무역비용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AI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그림 5-2.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내 정책 방향



자료: 저자 작성.

공정 혁신을 통해 국내 기반 OEM·ODM 공급사가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제조기업이 핵심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생산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미 기술번영 MOU와 전략적 대미 투자를 통해 마련된 협력 기반을 토대로 미국과의 전략적 과학기술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응전략은 글로벌 사우스 주요 생산거점 국가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 공급망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 진출 경험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은 정보, 자금, 인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

축해 동반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정책금융, 대출·보증 지원, 간접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생산거점의 산업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한국 기업의 핵심 생산거점이자 잠재적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ODA를 통한 한국기업의 글로벌 사우스 진출 방식은 개별 공장 건설이나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로 이루어져 완결형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 ODA 전략을 재정립하여 각 국가의 산업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재편 수요가 맞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현지 고급 생산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SK 사업과 같은 산업통상협력 ODA 사업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연계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이 제시하는 정책적 접근은 형식상 산업정책, 대외·통상정책, 국제개발협력정책,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는 각각의 정책이 따로 집행되기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으로 재편될 때 진정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통해 한국의 제조업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변동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경로와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구상, 김혁중, 김종혁, 권혁주, 박은빈. 2025. 「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5-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곽성일, 정재완, 신민금, 김제국. 2022.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 지역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구경현 외. 2023.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 추정 및 정책 제언 용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구경현 외. 2025. 『해외 신무역장벽 및 통상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연구 용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발간예정).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 「주요국 상호관세 및 대미 무역합의 현황과 평가」. Trade Brief, No. 12. 한국무역협회.
- 관세부처 합동. 2022.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2-2』.
- 기업활동조사 SDC 자료. 2006~22.
- 김경훈, 김정곤, 한형민, 노윤재. 2023.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3-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훈. 2024.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귀, 강준구, 김혁황, 현혜정. 2011.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1-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식. 2023.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의 양상과 쟁점: 규범 경쟁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정곤, 김경훈, 백종훈, 남유진, 조원득. 2023. 『인도태평양 시대 한·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 2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덕, 강구상, 최원석, 이현진, 엄준현, 박보영. 2025.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 경제적 함의와 통상정책방향 연구』. KIEP 연구보고서 25-18.
- 김종덕, 구경현, 강구상, 김혁황. 2023.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KIEP 연구보고서 23-22.
- 김혁황, 현혜정. 201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16권 제3호, pp. 1~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 _____. 2025. 「15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의 지역별 발전전략과 한중 협력」 세미나. (12월 2일)
- _____. 2025. 「한중 수소에너지산업 협력 전략 연구」. 전문가간담회. (11월 28일)
- 박병열, 최영미. 2024.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산업연구원.
- 박정호. 2025. 「베트남의 산업 기반과 공급망 협력」. KIEP 전문가간담회. (6월 26일)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24. 『2024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 양의식, 김아름, 김비아. 2017. 「미국 LNG 수출능력 확대와 해외시장 확대 전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0호. 에너지경제연구원. (9월 4일)
- 양평섭, 김영귀, 김혁황, 박민숙, 권혁주. 2019. 「최근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의 주요 내용과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19-21.
- 오중산. 2013. 「해의 동반진출, 성공의 조건은?」. *Dong-A Business Review*, Issue 1, No. 124. 동아일보사.
- 윤상하 총괄책임. 2025. 「2025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오늘의 세계경제*, Vol. 2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지현. 2025. 「트럼프 상호관세 이후 인도의 대응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상훈. 2026. 『한중 의료 인공지능(AI) 발전과 협력 방안. 디지털 전환 분야 한중 공동연구』. KIEP · CAMR(출판 예정).
- 이수영, 최혜린, 김혁황, 박민숙, 남시훈. 2018.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연구보고서 18-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은창, 홍성인, 남상욱. 2019. 『한국 조선산업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9-915. 산업연구원.
- 이홍식, 강준구. 2010. 「국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무역수지」. 『경제분석』, 제16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홍식, 김혁황, 박가희. 2020.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의 이질적 수출효과」.

- 『국제통상연구』, 제25권 제3호, pp. 53~78.
- 임소영. 2023. 「산업 분야 ODA의 진화와 전략적 추진 과제」.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2호, 2023-7.
- 정민현, 김경민, 김혁황, 정동연, 김원기. 2024.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연구보고서 24-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영식 총괄책임. 2024. 「2025년 세계경제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Vol. 24, No.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월 14일)
- 정재완. 2024. 「베트남의 정치체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30. (7월 29일)
- 정지원, 정지선, 송지혜, 유애라, 박소정, 김지현, 김은주. 2023. 『대외정책과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ODA 추진방식 개선방안 연구』. KIEP 연구보고서 23-12.
- 조성훈, 한형민, 최원석, 홍진희, 윤형준, 김현정. 2025.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4-06.
- 지 혜, 김경돈, 유하영. 2025. 「주요국 대베트남 진출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5-025. KOTRA.
- 최지원, 양평섭. 2024.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19. (5월 7일)
- 한국수출입은행. 2019. 『2018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_____. 2022. 『2021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_____. 2024. 『202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한국은행. 2008. 『2005년 산업연관표』.
- _____. 2009. 『2006년 산업연관표』.
- _____. 2014a. 『산업연관표해설』.
- _____. 2014b. 『2010년 산업연관표』.
- _____. 2019. 『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및 통계편』.
- _____. 2023.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 _____. 2024.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 홍성우, 김성환, 김진오, 강준구, 박미숙, 박진희, 김승현. 2024.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4-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우, 김진오, 박미숙, 손은아. 2025.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합의」.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우, 김진오, 박미숙, 이승호. 2023.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우, 김진오, 박미숙. 2024. 「멕시코 대선의 주요 이슈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7, No.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우, 김진오, 손은아. 2025.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로 본 향후 멕시코의 경제 정책 방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우, 박미숙. 2025. 「美 상호관세 및 불법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한 중남미의 대응」.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 8, No.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연서. 2024. 「미, 첨단반도체, 양자, AI 분야의 해외투자 제한」. 수출통제 Issue Report 2024-88. 무역안보관리원.

CSF. 2025. 「중국 ‘AI+’ 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rnst & Young and FIA. 2024. 「Doing Business in Viet Nam 2024」(한글).

Kotra. 2024a. 「2025 베트남 진출전략」.

_____. 2024b. 「2025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중문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2. 「习近平：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在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_____. 2025.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的建议」.

[일문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2025a. 『非日系企業のASEAN 戦略調査』.

_____. 2025b. 『韓国企業の海外展開の今と新たな挑戦』.

_____. 2025c. 『ベトナム裾野産業実態調査』.

環境省(日本). 2025. 「アジア各国の環境規制に関する最新動向」.

緒方亮介. 2025. 「ベトナムのスタートアップ, エコシステム概況」. MRIV International. (6月 6日)

[영문자료]

- Alfaro, L. and Chor, D. 2023. "Global supply chains: The looming "great reallocation". (No. w316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SEAN Secretariat. 2018.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8*.
- _____. 2021.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1*.
- _____. 2023.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3*.
- ASEAN Secretariat and UNCTAD. 2024. ASEAN Investment Report 2024.
- Baldwin, R., R. Freeman, and A. Theodorakopoulos. 2023. "Hidden exposure: Measuring US supply chain relianc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23(2), pp. 79-134.
- BMI. 2025. "South Korea Consumer & Retail Report," Q1.
- _____. 2025. "India Counsumer & Retail Report," Q1.
- Desai, Mihir A., C. Fritz Foley, and James R. Hines Jr. 2009.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 pp. 181-203.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7.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16*.
- _____. 2020.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19*.
- _____. 2022.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21*.
- _____. 2023.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22*.
- _____. 2024. *Statistical Yearbook of Viet Nam 2023*.
- Hasebe, Yuichi and Nagendra Shrestha. 2005.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 View from Interdependency in Intermediate Input Goods." Center for International Trade Studies Working Paper, 2005-12.
- IMD. 2019.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
- _____. 2024.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Navigating Global Divergences*. Washington, D.C. (October)
- Kementerian Perindustrian. 2018. "Indonesia'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Making Indonesia 4.0." (presented at INNOFEST- Building Innovation)

- (July 24~27), Jakarta.
- Klaus Schwab editor. 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World Economic Forum.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5. "Dependency and depopulation?:
Confronting the consequences of a new demographic reality."
(January)
-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2024-25."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of Singapore. 2024. "Singapore Substantially
Concludes The Asean-China Free Trade Area 3.0 Upgrade Negotiations."
Press Release. (October 10)
- Miroudot, S., R. Lanz, and A. Ragoussis. 2009.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 OECD Trade Policy Papers, No. 93.
- OECD. 2024.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value chain: Implications
for FDI-SME linkages."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Papers,
No. 64.
- Pananond, Pavidia and Alvaro Cuervo-Cazurra. 2022. "Vaccine Global
Value Chains and Regional Production Capacity in Asia and the
Pacific." ARTNeT Working Paper Series, No. 217. October 2022,
Bangkok, ESCAP.
- Pham Minh Chinh (Prime Minister of Vietnam). 2024. "Quyết định
1017/QĐ-TTg ngày 21/09/2024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Phát triển
nguồn nhân lực ngành công nghiệp bán dẫn đến năm 2030, định
hướng đến năm 2050" do Thủ tướng Chính phủ ban hành."
- The MITRE center for Techonolgy & National Security. 2019. "5G and
The Front Lines of the U.S.-China Great Power Competition."
MITRE.
- UNCTAD. 2024. *2024 World Investment Report*.
- USTR. 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 Wang, Z., S. J. Wei, and K. Zhu. 2013. "Quantifying International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2018.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orld Bank. 2016.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_____. 2018.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_____. 2023. “Connecting to Complete: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

_____. 2023. “Enterprise Surveys: Viet Nam 2023 Country Profile.”

WTO. 2023. “Re-globalization for a secure,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World Trade Report.

「2026년 USMCA 개정 쟁점」. 2025. FTA 강국, KOREA. (11월 4일). <https://fta.motir.go.kr/ftamain/promo/news/trend/view/index.jsp?seqno=145537>(검색일: 2025. 11. 5.).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 확대」. 2025. 『조선일보』. (9월 23일).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23/6ID6ZRGNFJB2VCN62WFGYBO4IU/(검색일: 2025. 9. 25.).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https://www.hrstpolicy.re.kr/kistep/kr/policy/policyPlanKorDetail.html>(검색일: 2025. 9. 25.).

김천구. 2025.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brain drain)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6월 18일). https://www.korcham.net/new_pdf/target/%5BSGI%20%BA%EA%B8%AE%C7%C1%5D%20%C7%D1%B1%B9%C0%C7%20%B0%ED%B1%DE%C0%CE%B7%C2%20%C7%D8%BF%DC%C0%AF%C3%E2%20%C7%F6%BB%F3%C0%C7%20%B0%E6%C1%A6%C0%FB%20%BF%B5%C7%E2%B0%FA%20%B4%EB%C

- 0%B9%E6%BE%C8.pdf(검색일: 2025. 9. 25.).
- 「내달부터 29개 대학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월 25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442>(검색일: 2025. 9. 25.).
- 「[단독] 반도체 기업 신탁, 인도에 2000억원 투자 '마이크론 지원사격」. 2024. *The Guru*. (1월 12일).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5164>(검색일: 2025. 6. 13.).
- 「동향세미나」 멕시코,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합의. 2022. EMERiCs. (3월 17일).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No=328352&mid=a10200000000&systemcode=06>(검색일: 2025. 9. 25.).
- 「멕시코, 한국과 '최대 50% 관세 부과' 관련 협의 중」. 2025. 『한겨레』. (9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18427.html> (검색일: 2025. 9. 25.).
- 「미중 무역전쟁 9개월 만에, 한국서 '휴전' 합의」. 2025. 『중앙일보』. (10월 31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351>(검색일: 2025. 11. 25.).
- 「반도체 기업 신탁, 인도 구자라트 투자 '초읽기'..신임 CEO 첫 행보」. 2024. *The Guru*. (1월 11일).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5049>(검색일: 2025. 6. 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8733&viewCls=lsRvsDocInfoR#>(검색일: 2025. 9. 25.).
- 「[보도설명] '이공계 장학금 수혜율 2% 불과... R&D 예산 무색' 기사 관련(SBS)」.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월 4일).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093>(검색일: 2025. 9. 25.).
- 「산업부, AI 팩토리 본격 추진」.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26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0795> (검색일: 2025. 9. 25.).
-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본격 가동」. 2014.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5월 9일).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EC%A4%91%EA%B5%AD-%EC%8B%9CEC%95%88-%EB%B0%98EB%8F%84EC%B2%B>

4%EA%B3%B5%EC%9E%A5-%EB%B3%B8%EA%B2%A9-%EA%B0%80%EB%8F%99(검색일: 2025. 11. 17.).

삼성전자. 2021. “Samsung Electronics Announces New Advanced Semiconductor Fab Site in Taylor, Texas.” (November 23). <https://semiconductor.samsung.com/sas/local-news/samsung-electronics-announces-new-advanced-semiconductor-fab-site-in-taylor-texas/>(검색일: 2025. 9. 18.).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브라질, 세제 개혁 추진 중」. (7월 31일).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CTS_SEQ=55539&AST_SEQ=40&nationReadYn=Y&ETC=3&searchNtnl=BR(검색일: 2025. 8. 4.).

「수출기여 분명한데...재하청 제조업 '실적 공백」. 2018. 『충청투데이』. (9월 12일).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535>(검색일: 2025. 9. 25.).

「여한구 통상본부장 “CPTPP 가입 전략적으로 추진”」. 2025. 『서울경제』. (9월 2일). <https://www.sedaily.com/article/14112180>(검색일: 2025. 9. 25.).

「올해부터 전국에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본격 확산한다」. 2024. 산업통상자원부. (6월 17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6033>(검색일: 2025. 9. 25.).

인도네시아 통계청. <https://www.bps.go.id>(검색일: 2025. 9. 25.).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한다...정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 2025. 『머니투데이』. (5월 26일). <https://www.mt.co.kr/economy/2025/05/26/2025052610222254527>(검색일: 2025. 9. 25.).

「중기부-과기부-산업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제조·산업 인공지능(AI) 대전환 협력 본격화」. 202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10월 15일).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2478>(검색일: 2025. 10. 30.).

중소기업벤처부. 2025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3월 31일).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57665&parentSeq=1057665>(검색일: 2025. 10. 10.).

「(참고자료)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25. 산업통상부. (11월 14일).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196/view#>(검색일: 2025. 11. 15.).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20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20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327>(검색일: 2025. 9. 25.).
- 「[초점] 트럼프 경고에도 애플, 인도에 15억달러 투자 강행…“아이폰 전량 인도 생산 목표」. 2025. 『글로벌 이코노믹』. (5월 27일).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5/2025052618024987429a1f309431_1 (검색일: 2025. 6. 20.).
- 「클린턴방한계기 한미 과학기술협력재단.산업협력기금추진」. 1993. 『한경』. (7월 8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3070802391>(검색일: 2025. 9. 25.).
- 「트럼프 “무역협상 연내 타결”…시진핑 “보복 악순환 안돼”」. 2025. 『매일경제』. (10월 31일). <https://www.mk.co.kr/news/world/11456054>(검색일: 2025. 11. 25.).
-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 현황 및 FTA 체결의 방향성」. 2022. FEALAC. (7월 29일). https://blog.naver.com/fealac_korea/222833657340(검색일: 2025. 9. 25.).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검색일: 2025. 6. 5.).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10월 29일).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418>(검색일: 2025. 10. 1.).
- 「‘한-미 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 대표 한자리에 모이다」. 2023.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5월 19일). <https://www.msit.go.kr/bbs/view.do?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83075>(검색일: 2025. 9. 25.).
-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 20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월 29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3906&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33&startDate=2024-12-03&endDate>

- te=2025-12-03&srchWord=%EA%B8%B0%EC%88%A0%20%EB%B2%88%EC%98%81&period=year(검색일: 202. 10. 30.).
- 현대제철 역사관. <https://www.hyundai-steel.com/kr/company/history> (검색일: 2025. 11. 4.).
- 「현대차-中 카이워그룹 수소버스, 광저우시 달린다.」. 2025. 『조선비즈』. (11월 18일).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5/11/18/CLNF55PJ4JCYNFZL7SKZK35KWA/>(검색일: 2025. 11. 25.).
- 「현대차, 인도 푸네 공장서 ‘2세대 베뉴’ 양산...110만대 체제 가속.」. 2024. 『전자신문』. (12월 23일). <https://www.etnews.com/20241223000246>(검색일: 2025. 4. 16.).
- 현대자동차. 2022. “Hyundai Motor Group to Establish First dedicated EV Plant and Battery Manufacturing Facility in the U.S.” (May 21). <https://www.hyundai.com/worldwide/en/newsroom/detail/hyundai-motor-group-to-establish-first-dedicated-ev-plant-and-battery-manufacturing-facility-in-the-u.s.-0000000068>(검색일: 2025. 9. 17.).
-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AI 팩토리 분야-」. 2025. 관계부처 합동. (9월 19일). <https://www.korea.kr/docViewer/skin/doc.html?fn=c44a4d071e9b1ffa5c5c4f8c66b58102&rs=/docViewer/result/2025.10/27/c44a4d071e9b1ffa5c5c4f8c66b58102>(검색일: 2025. 9. 25.).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4. 「글로벌 기업, 인도에서 제조업 · 신산업 투자 확대 지속.」. (10월 23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pNttSn=221080(검색일: 2025. 4. 14.).
- _____. 2024.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 동향.」. (3월 28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13367(검색일: 2025. 7. 29.).
- 「LG전자 “작년 보다 2배 이상 감면된 특별 금리로 협력사 지원”」. 2023. 『아시아경제』. (3월 14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1408425688280&mobile=Y>(검색일: 2025. 9. 25.).

-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확장팩(C2F) 준공」. 2019. 『SK HYNIX NEWSROOM』.
(4월 18일). <https://news.skhynix.co.kr/completed-wuxi-expansion-fab-in-china/>(검색일: 2025. 11. 17.).
- 「SK하이닉스, 중국 충칭 후공정 생산법인 준공」. 2014. 『SK HYNIX NEWSROOM』.
(9월 26일). <https://news.skhynix.co.kr/completed-chongqing-post-processing-production-corporation/>(검색일: 2025. 11. 17.).
- 石川幸一. 2025. 「投資先としてのASEANの評価と相互関税」. (4월 14일).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3792.html>(검색일: 2025. 9. 11.).
- “A Closing Back Door? China’s Evolving FDI Presence in Mexico.” 2024. China Cross-Border Monitor. (October 10). <https://cbm.rhg.com/research-note/closing-back-door-chinas-evolving-fdi-presence-mexico>(검색일: 2025. 10. 30.).
- ADB. 2025.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 (August). <https://www.adb.org/publications/key-indicators-asia-and-pacific-2025> (검색일: 2025. 9. 1.).
- Apple. “Supplier List.” https://s203.q4cdn.com/367071867/files/doc_downloads/2024/04/Apple-Supplier-List.pdf(검색일: 2025. 4. 14.).
- “Apple India Produces \$22 Billion of iPhones in Shift From China.” 2025. *Bloomberg*. (April 1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4-13/apple-aapl-india-iphone-output-leaps-to-22-billion-in-china-shift?sref=QbgqEltZ>(검색일: 2025. 4. 14.).
- “Apple, Foxconn Boost iPhone Output in India as US Tariffs Reshape Supply Chains.” 2025. *India Briefing*. (April 7). <https://www.india-briefing.com/news/apple-foxconn-boost-iphone-output-in-india-36817.html>(검색일: 2025. 4. 14.).
- “Apple’s Contract Manufacturers and Component Suppliers in India.” 2025. *India Briefing*. (June 5). <https://www.india-briefing.com/news/apple-contract-manufacturing-india-new-suppliers-getting-clearance-26947.html>(검색일: 2025. 6. 20.).
- “Apple’s iPhone 16 Series to Launch in Indonesia on Friday After Regulatory

- Delay.” 2005. *Jakarta Globe*. (April 10). https://jakartaglobe.id/tech/apples-iphone-16-series-to-launch-in-indonesia-on-friday-after-regulatory-delay#goog_rewarded(검색일: 2025. 7. 28.).
- Asian Development Bank(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 <https://www.adb.org/publications/key-indicators-asia-and-pacific-2025>(검색일: 2025. 9. 1.).
- ArcelorMittal. “Industrial sites.” <https://luxembourg.arcelormittal.com/en/arcelormittal-in-luxembourg/industrial-sites>(검색일: 2025. 9. 18.).
- Autor, D., D. Dorn, G. Hanson, and Kaveh Majlesi. 2020. “Importing Political Polarizati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Rising Trade Exposure.” *American Economic Review*, 110(10).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aer.20170011>(검색일: 2025. 8. 20.).
- “Attrition in India has dropped from 18.7 to 16.9%.” 2024. *Hrkatha*. (October 4). <https://www.hrkatha.com/research/attrition-in-india-has-dropped-from-18-7-to-16-9/>(검색일: 2025. 7. 22.).
- BANCO CENTRAL DO BRASIL. “Relatório de Investimento Direto.” <https://www.bcb.gov.br/publicacoes/relatorioid>(검색일: 2025. 7. 31.).
- “Brazil Country Commercial Guide.” 2025.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ugust 21).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brazil-market-challenges>(검색일: 2025. 9. 25.).
- “Brazil’s new industrial policy plan: three sources of optimism and three words of caution.” 2024. Cambridge Industrial Innovation Policy. (March 4). https://www.ciip.group.cam.ac.uk/reports-and-articles/brazil-new-industrial-policy-pla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25.).
- Boullenois, Camille, Malcolm Black, and Daniel H. Rosen. 2025. “Was Made in China 2025 Successful?” Rhodium Group. (May 5). <https://rhg.com/research/was-made-in-china-2025-successful>(검색일: 2025. 7. 30.).
- Bown, Chad P. 2025.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PIIE. (September 25).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

- /2019/us-china-trade-war-tariffs-date-chart(검색일: 2025. 11. 15.).
- “China and India: The future of the global consumer market.” 2023. *Brookings*. (April 14). <https://www.brookings.edu/articles/china-and-india-the-future-of-the-global-consumer-market/>(검색일: 2025. 7. 5.).
-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2025. “Recommendation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for Formulating the 15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ctober 23). <https://english.news.cn/20251028/efbfd0c774fd4b1c8daeb741c0351431/c.html>(검색일: 2025. 10. 31.).
- CRISIL. “India Infrastructure Coming of Age.” https://www.eaaa.in/wp-content/uploads/2024/12/India_Infrastructure_Coming_of_Age.pdf (검색일: 2025. 6. 25.).
- ET Manufacturing. 2025. “Electronics and pharma corner 70% of FY25 PLI disbursements.” (July 14). <https://manufacturing.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dustry/electronics-and-pharma-corner-70-of-fy25-pli-disbursements/122427216>(검색일: 2025. 7. 28.).
- “Exclusive: India accuses Kia of evading taces of \$155 mln in VW-like dispute.” 2025. *Reuters*. (February 5).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india-accuses-kia-evading-taxes-155-mln-vw-like-dispute-2025-02-05/?utm>(검색일: 2025. 7. 22.).
- “Equinor picks Valaris for \$500 million drilling in Brazil.” 2024. *Reuters*. (July 22).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equinor-picks-valaris-500-mln-drilling-brazil-2024-07-22/>(검색일: 2025. 7. 31.).
-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2025. “Higher tariffs in U.S., Mexico part of global response to China export surge.” <https://www.dallasfed.org/research/pubs/25trade/a3>(검색일: 2025. 10. 10.).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2025. “Expenditure Profile 2025-2026(February).” <https://www.indiabudget.gov.in/doc/eb/vol1.pdf>(검색일: 2025. 6. 16.).

- “Governo lança Plano Brasil Soberano para proteger exportadores e trabalhadores de sobretaxas dos EUA.” 2025. gov.br. (August 13). <https://www.gov.br/planalto/pt-br/acompanhe-o-planalto/noticias/2025/08/governo-lanca-plano-brasil-soberano-para-proteger-exportadores-e-trabalhadores-de-sobretaxas-dos-eua>(검색일: 2025. 9. 25.).
- “GST: Where does India's tax model stand against other prominent countries?” 2018. *India Today*. (December 24). <https://www.indiatoday.in/business/story/gst-india-tax-model-comparison-with-canada-australia-china-uk-us-1416488-2018-12-24>(검색일: 2025. 7. 22.).
- Havrén, Sari Arho. 2025. “China's Xi is Seizing the Moment while the US is in Transition.”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anuary 27).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chinas-xi-seizing-moment-while-us-transition>(검색일: 2025. 9. 26.).
- “Higher tariffs in U.S., Mexico part of global response to China export surge.” 2025.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October 31). <https://www.dallasfed.org/research/pubs/25trade/a3>(검색일: 2025. 11. 3.).
- IEA. 2024. “World Energy Investment 2024.” <https://www.iea.org/reports/world-energy-investment-2024>(검색일: 2025. 9. 18.).
- _____. 2025.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https://www.iea.org/reports/global-critical-minerals-outlook-2025>(검색일: 2025. 9. 18.).
- IMPRI. 2025. “The Manufacturing Mission (2025-26): Furthering ‘Make in India’.” (March 30). <https://www.impriindia.com/insights/manufacturing-mission-2025/>(검색일: 2025. 7. 28.).
- India briefing. “Corporate Income Tax in India.” <https://www.india-briefing.com/doing-business-guide/india/taxation-and-accounting/country-wise-tax-structure/corporate-income-tax>(검색일: 2025. 7. 22.).
- India.gov.in. <https://www.india.gov.in/spotlight/union-budget-2024-25> (검색일: 2025. 6. 25.).

- “India’s major ports set record in FY 2024-25, cementing a decade of maritime growth.” 2025. DD News. (May 13). <https://ddnews.gov.in/en/indias-major-ports-set-record-in-fy-2024-25-cementing-a-decade-of-maritime-growth/>(검색일: 2025. 6. 26.).
- “India’s Manufacturing PMI Moderates to 57.6 in May but Remains on Growth Path.” 2025. *knn India*. (June 2). <https://knnindia.co.in/news/newsdetails/sectors/manufacturing/indias-manufacturing-pmi-moderates-to-576-in-may-but-remains-on-growth-path>(검색일: 2025. 6. 10.).
- “Indonesia eases TKDN rules for select US tech, medical imports” 2025. Antara. (July 24). <https://en.antaranews.com/news/368689/indonesia-eases-tkdn-rules-for-select-us-tech-medical-imports>(검색일: 2025. 7. 2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Datasets. https://data.imf.org/en/Datasets#t=coveo117bcfc4&sort=%40data_publication_date%20descending (검색일: 2025. 7. 30.).
- Inventiva. 2023. “India’s exports to the Netherlands are growing rapidly as petrol product shipments rise in 2023.” (January 30). <https://www.inventiva.co.in/stories/indias-exports-to-the-netherlands/>(검색일: 2025. 7. 14.).
-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2026. *Gobierno de Mexico*. (January 26). <https://www.gob.mx/se/acciones-y-programas/competitividad-y-normatividad-inversion-extranjera-directa?state=published>(검색일: 2025. 7. 28.).
- Invest in India - Guide. 2025. “Micron Technology’s \$2.75 billion ATMP plant in India.” (April 11). <https://mutualfundsguide.substack.com/p/indias-chip-dreams-take-shape?utm>(검색일: 2025. 4. 15.).
- ISEAS. “2025/8 Catalysing ASEAN-Africa Relations and South-South Cooperation.” By Christophe Dorigné-Thomson and Joanne Lin.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iseas-perspective/2025-8-catalysing-asean-africa-relations-and-south-south->

- cooperation-by-christophe-dorigne-thomson-and-joanne-li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4. 8.).
- JICA. “Making Japan’s Business Africa’s Business: Exploring the Impacts of the ABE Initiative.” https://www.jica.go.jp/english/jica_ri/research/human/1568588_24196.html(검색일: 2025. 10. 10.).
- _____. “Master’s Degree and Internship Program of African Business Education Initiative for Youth (ABE Initiative).” <https://www.jica.go.jp/english/africahiroba/business/detail/03/index.html>(검색일: 2025. 10. 10.).
-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025. The White House. (November 1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검색일: 2025. 11. 14.).
- “Joint Statement on the Visit to Mexico by the Vice President of Brazil, Geraldo Alckmin.” 2025. *Goierno de México*. (September 1). https://www.gob.mx/sre/prensa/joint-statement-on-the-visit-to-mexico-by-the-vice-president-of-brazil-geraldo-alckmin?idiom=en&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25.).
-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wins 37% of all global orders in 2022.” 2023. *The Korea Post*. (January 9). <http://www.koreapos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49>(검색일: 2025. 9. 18.).
- “LG Chem opens latex plant in Ningbo.” 2021. *Korea JoongAng Daily*. (July 12).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1/07/12/business/industry/lg-chem-nbl-latex/20210712182107719.html?detailWord=>(검색일: 2025. 9. 18.).
- “Logistics cost will be cut to 8-9 percent of GDP by 203: DPIIT Secretary.” 2022. *The Print*. (September 19). <https://theprint.in/economy/logistics-cost-will-be-cut-to-8-9-per-cent-of-gdp-by-2030-dpiit-secretary/1135004/>(검색일: 2025. 7. 22.).
- Lucas, Edward. 2020. “A China Strategy.” CEPA. (December 7). <https://cepa.org/comprehensive-reports/a-china-strategy>(검색일: 2025. 5. 20.).

- Manufacturing Dive. 2023. "TSMC delays Arizona facility opening, citing a lack of specialized labor." (July 27). <https://www.manufacturingdive.com/news/tsmc-deal-arizona-labor-union-chip-factory/704890/>(검색일: 2025. 10. 1.).
- Matica Bio. 2022. "Matica Bio Opens New Cell & Gene Therapy GMP Facility in Texas." (May 3). <https://www.maticabio.com/news-events/newsroom/matica-bio-opens-new-cell-gene-therapy-gmp-facility-in-texas/>(검색일: 2025. 9. 18.).
- McKinsey Quarterly. 2022. "Transition to net zero: Road mobility." <https://www.mckinsey.com/capabilities/sustainability/our-insights/spotting-green-business-opportunities-in-a-surging-net-zero-world/transition-to-net-zero/road-mobility>(검색일: 2025. 8. 31.).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U.S.-ROK Technology Prosperity Deal." 2025. The White House. (October 29).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10/u-s-korea-technology-prosperity-deal/>(검색일: 2025. 10. 30.).
- "Mexico has proposed matching US tariffs on China, Bessent says." 2025. *Reuters*. (March 1).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mexico-has-proposed-matching-us-tariffs-china-bessent-says-2025-02-28/>(검색일: 2025. 9. 25.).
- "Mexico Proposes Significant Customs and Tariff Reforms as Part of the 2026 Economic Package." 2025. LEXOLOGY. (September 11).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c81dc01-d1d4-4ca0-ad54-1cd89033793f>(검색일: 2025. 9. 25.).
- "Mexico to raise tariffs on cars from China to 50% in major overhaul." 2025. *Reuters*. (September 12).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mexico-raise-tariffs-cars-china-50-major-overhaul-2025-09-10/>(검색일: 2025. 9. 25.).
-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https://www.indiabudget.gov.in/budget2019-20/economicsurvey/>(검색일: 2025. 4. 21.).

- Money control. 2025. "Govt closes FY22-25 asset monetisation programme slightly short of target at Rs 5.8 lakh crore." (May 26).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economy/govt-closes-fy22-25-asset-monetisation-programme-slightly-short-of-target-at-rs-5-8-lakh-crore-13046140.html#goog_rewarded(검색일: 2025. 7. 29.).
- _____. 2025. "Incentives worth Rs 21,534 crore disbursed till March under PLI schemes for 12 sectors." (June 25).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incentives-worth-rs-21-534-crore-disbursed-till-march-under-pli-schemes-for-12-sectors-13176460.html> (검색일: 2025. 7. 28.).
- National Security Council. 20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6).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articles/united-state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검색일: 2025. 7. 22.).
- Naughton, Barry. 2021. *The Rise of China's Industrial Policy: 1978 to 2020*. Lynne Rienner Publishers.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docs.dusselpeters.com/CECHIMEX/Naughton2021_Industrial_Policy_in_China_CECHIMEX.pdf(검색일: 2025. 7. 5.).
- "Nestle raises investment in Brazil to \$1.3 billion by 2028." 2025. *Reuters*. (June 19).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nestle-raises-investment-brazil-13-billion-by-2028-2025-06-18/>(검색일: 2025. 7. 31.).
- "Nestle to invest \$1.2bn in Brazil by 2025." 2023. *Investment Monitor*. (November 29). <https://www.investmentmonitor.ai/news/nestle-to-invest-1-2bn-in-brazil-by-2025/>(검색일: 2025. 7. 31.).
- New Industrial Policy Observatory(NIPO). <https://globaltradealert.org/reports/new-industrial-policy-observatory-nipo>(검색일: 2025. 12. 3.).
- Nguyen, Trinh. 2020. "Vietnam Approves Resolution 115 on Promoting Supporting Industries." *Vietnam Briefing*. (August 26). <https://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approves-resolution-115-promoting-supporting-industries.html/>(검색일: 2025. 8. 5.).

- NIP(National Infrastructure Pipeline). “Report of the Task Force,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https://www.indembassy-to-kyo.gov.in/public_files/assets/pdf/NIP_railways.pdf(검색일: 2025. 6. 17.).
- “Nova Indústria Brasil.” gov.br. <https://www.gov.br/fazenda/pt-br/acao-a-informacao/acoes-e-programas/transformacao-ecologica/programas-em-destaque/nova-industria-brasil>(검색일: 2025. 9. 25.).
- Patil, Chetan Arvind. 2024. “The Semiconductor Talent Demand in India.” (June 16). <https://www.chetanpatil.in/the-semiconductor-talent-demand-in-india/>(검색일: 2025. 6. 10.).
- PIB. 2023.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Supply Chain Agreement signed by the 14 IPEF Partners.” (November 17). <https://www.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77529>(검색일: 2025. 7. 16.).
- _____. 2025. “Government Scales Up PLI Budget to Accelerate Manufacturing.” (March 3). <https://static.pib.gov.in/WriteReadData/specificdocs/documents/2025/mar/doc202533511601.pdf#:~:text=PLI%20for%20Pharmaceuticals%20150,00>(검색일: 2025. 6. 16.).
- _____. 2025. “Highlights of Union Budget 2025-26.” (February 1). <https://static.pib.gov.in/WriteReadData/specificdocs/documents/2025/feb/doc202521492701.pdf>(검색일: 2025. 6. 17., 6. 19.).
- _____. 2025. “India’s Aviation Revolution.” (April 22).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23537>(검색일: 2025. 6. 26.).
- “PLI: On the Way to Another Failed Incentive Scheme?” 2024. *The India Forum* (January 10). <https://www.theindiaforum.in/public-policy/pli-way-another-failed-incentive-scheme>(검색일: 2025. 7. 28.).
- “Portugal’s Galp eyes 40% oil output rise in Brazil with new field.” 2025. *Reuters*. (May 29).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portugals-galp-eyes-40-oil-output-rise-brazil-with-new-field-2025-05-29/>(검색일: 2025. 7. 31.).
- PRICE. “The Rise of India’s Middle Class, Executive Summary.” https://price360.in/Executive_Summary_Middle_Class.pdf(검색일: 2024. 7. 10.).

- PRS India. <https://prsindia.org/budgets/parliament>(검색일: 2025. 6. 17.).
- PwC. “Corporate income tax (CIT) rates.”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corporate-income-tax-cit-rates#anchor-C>(검색일: 2025. 7. 22.).
- _____. “Value-added tax (VAT) rates.” <https://taxsummaries.pwc.com/quick-charts/value-added-tax-vat-rates#anchor-G>(검색일: 2025. 7. 22.).
- _____. 2024.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s tariff hikes on Chinese imports.” <https://www.pwc.com/us/en/services/tax/library/pwc-biden-administration-announces-tariff-hikes-on-chinese-imports.html>(검색일: 2025. 7. 23.).
- “Resolution 68 benefits both domestic and FDI enterprises, expert says.” 2025. *Vietnam Law Magazine*. (May 20). <https://vietnamlawmagazine.vn/resolution-68-benefits-both-domestic-and-fdi-enterprises-expert-says-74246.html>(검색일: 2025. 7. 15.).
- “Salaries in Asia Pacific continue to rise amid tight labor market and growing inflation, Mercer survey finds.” 2022. *Mercer*. (November 21). <https://www.mercer.com/en-sg/about/newsroom/tight-labor-market-and-growing-inflation/>(검색일: 2025. 7. 28.).
- “Samsung India executives seek to quash \$81 million penalty over tax evasion.” 2025. *Reuters*. (May 28). <https://www.reuters.com/business/media-telecom/samsung-india-executives-seek-quash-81-million-penalty-over-tax-evasion-2025-05-28/?utm>(검색일: 2025. 7. 22.).
- “Samsung to invest US\$500 million in Mexico.” 2022. *Mexico Now*. (July 13). <https://mexico-now.com/samsung-to-invest-us500-million-in-mexico/>(검색일: 2025. 9. 18.).
- “Secretaria de Economía, Comisión Nacional de Inversiones Extranjeras.” 2023. https://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915793/Informe_Congreso_2023-4T.pdf(검색일: 2025. 7. 28.).
- Steelhub. “Steel at the Core: Driving Economic Diversification in Saudi Arabia.” <https://www.steelhub.com/steel-economic-diversification-on-saudi-arabia/>(검색일: 2025. 9. 18.).

- Stellar Market Research. “Global White Goods Market: Industry Analysis and Forecast (2025–2032).” <https://www.stellarmr.com/report/Global-White-Goods-Market/261>(검색일: 2025. 9. 17.).
- Sutter, Karen M. 2024. “Made in China 2025 and Industrial Policie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12).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964>(검색일: 2025. 8. 18.).
- Texas Governor. 2024. “Governor Abbott Announces New SeAH Manufacturing Facility In Temple.” (July 10).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announces-new-seah-manufacturing-facility-in-temple>(검색일: 2025. 9. 18.).
- “The Shifting Dynamics of Nearshoring in Mexico.” 2024. BCG. (September 5).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4/shifting-dynamics-of-nearshoring-in-mexico?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 9. 25.).
- U.S. Department Homeland Security. “UFLPA Entity List.” <https://www.dhs.gov/uflpa-entity-list>(검색일: 2025. 7. 7.).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FINAL.PDF>(검색일: 2025. 8. 25.).
- Vietnam Law Magazine. 2025. “Resolution 68 benefits both domestic and FDI enterprises, expert says.” (May 20). <https://vietnamlawmagazine.vn/resolution-68-benefits-both-domestic-and-fdi-enterprises-expert-says-74246.html>(검색일: 2025. 7. 15.).
- “View| New Foreign Trade Policy has a clear focus on the need for trade facilitation.” 2023. *VNBC TV18*. (April 4). <https://www.cnbctv18.com/views/view—new-foreign-trade-policy-has-a-clear-focus-on-the-need-for-trade-facilitation-16332631.htm>(검색일: 2025. 7. 7.).
- Wikipedia. 2025. “China–United States trade war.” https://en.wikipedia.org/wiki/China%E2%80%93United_States_trade_war(검색일: 2025. 8. 20.).

- World Economic Forum. 2023. "Green Energy and Global Integration Will Sustain Positive Economic Outlook." (January 20). https://www.weforum.org/press/2023/01/green-energy-and-global-integration-will-sustain-positive-economic-outlook/?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4. 8.).
- WTW. 2024. "India to maintain 9.5% salary increase in 2025, WTW survey finds." (October 15). <https://www.wtwco.com/en-in/news/2024/10/india-to-maintain-9-point-5-percent-salary-increase-in-2025-wtw-survey-finds>(검색일: 2025. 7. 28.).
- Zhao, Suisheng, Simon X. B. Zhao, and Zhen Zhang. 2021. "US-China Rivalr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ost-Pandemic World." *COVID-19 Pandemic, Crisis Responses and the Changing World*. Springer.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981-16-2430-8_2 (검색일: 2025. 7. 8.).

[통계DB]

- CEIC(검색일: 2025. 7. 15., 7. 30., 9. 12.).
- CEPALSTAT. https://statistics.cepal.org/portal/databank/index.html?lang=en&indicator_id=2215&members=21168,21170,21167,21165,21171,21173,21176,21174,21117,216(검색일: 2025. 6. 2.).
- ILO Modeled Estimates. https://rshiny.ilo.org/dataexplorer50/?lang=en&segment=indicator&id=EAP_2WAP_SEX_AGE_RT_A(검색일: 2025. 4. 1.).
- ILO stat. <https://ilostat.ilo.org/data/>(검색일: 2025. 4. 9.).
- ILOSTAT data explorer. "Average monthly earnings of employees by sex and economic activity-Annual." https://rshiny.ilo.org/dataexplorer29/?lang=en&id=EAR_4MTH_SEX_ECO_CUR_NB_A(검색일: 2025. 9. 29.).
- _____. "Inida-Annual." https://rshiny.ilo.org/dataexplorer16/?region=R_OAP&lang=en&segment=ref_area&id=IND_A(검색일: 2025. 4. 8.).
- Labour Force Survey. https://rshiny.ilo.org/dataexplorer38/?lang=en&id=EMP_2EMP_SEX_ECO_NB_A(검색일: 2025. 4. 1.).

Market Data Forecast. “Latin America Farm Mechanization Market Report.”
<https://www.marketdataforecast.com/market-reports/latin-america-farm-mechanization-market>(검색일: 2025. 9. 25.).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https://www.moody.com/web/en/us/capabilities/company-reference-data/orbis.html>”(검색일: 2025. 2. 1.).

The World Bank. “World Bank Enterprise Surveys.” <https://www.enterprisesurveys.org/en/enterprisesurveys>(검색일: 2025. 7. 21., 7. 29.).

UN Comtrade API. <https://comtradedeveloper.un.org/signin?returnUrl=%2F>(검색일: 2025. 4. 17.).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https://unctad.org/topic/investment/world-investment-report>(검색일: 2025. 6. 12.).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folder=Standard%20Projections&group=Most%20used>
 (검색일: 2025. 4. 1., 4. 7.).

WITS_UN Comtrade. <https://wits.worldbank.org/>(검색일: 2025. 4. 24., 7. 14.).

World Bank. WDI. <https://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5. 4. 9.).

World Bank Group. *Enterprise Surveys-India 2022 Country Profile*. <https://www.enterprisesurveys.org/content/dam/enterprisesurveys/documents/country/India-2022.pdf>(검색일: 2025. 7. 3.).

[기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조사연구소. 2025.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요인과 과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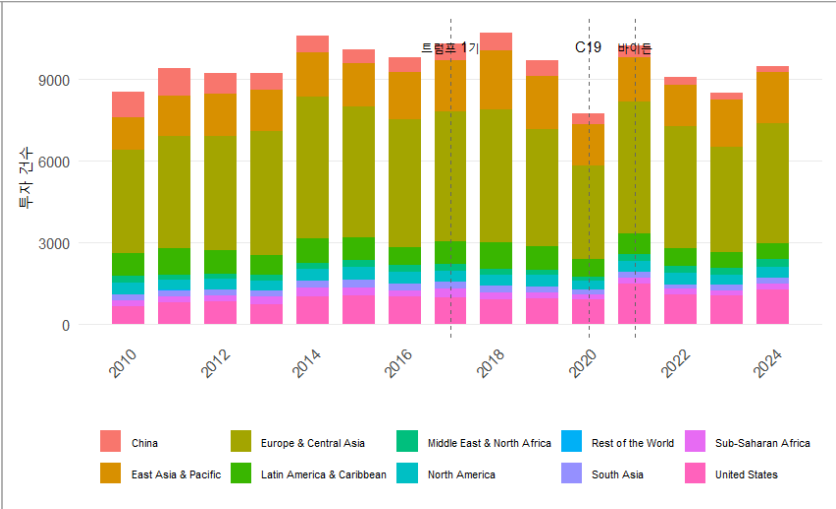


부록



부록 그림 1. 지역별 브라운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추이(201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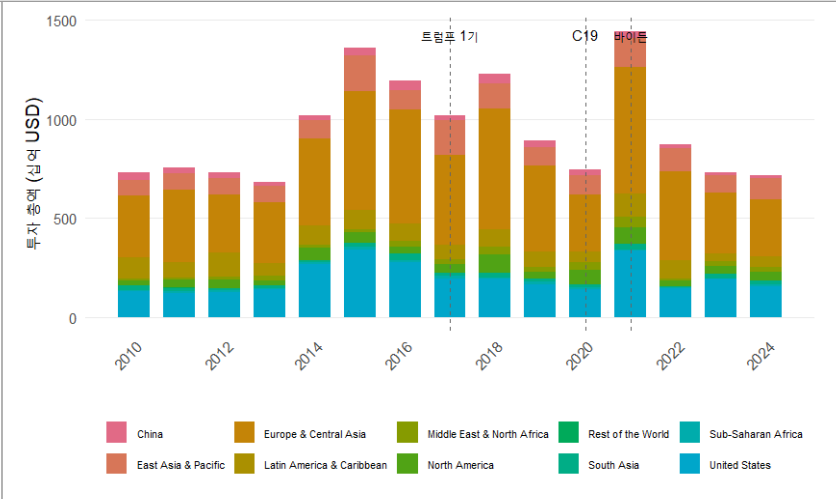
(단위: 건수)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2. 지역별 브라운필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201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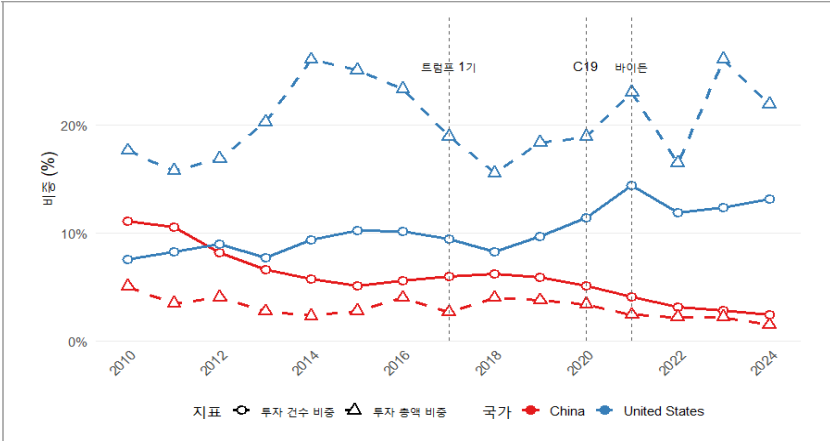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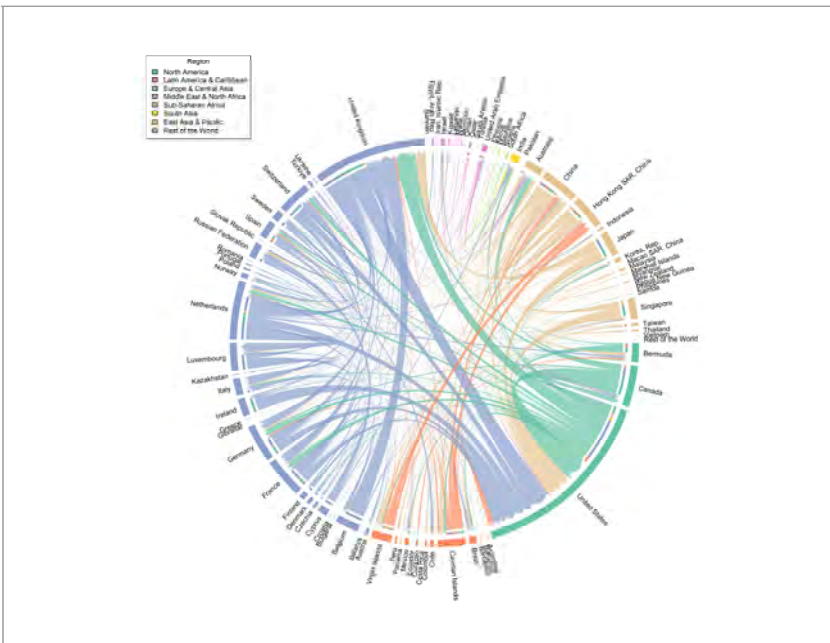
부록 그림 3.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브라운필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비중 추이(201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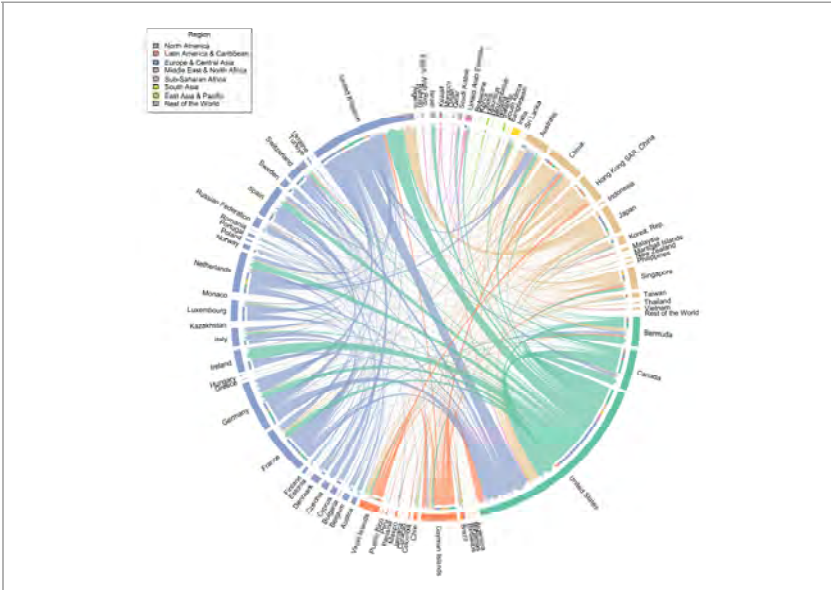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4. 글로벌 브라운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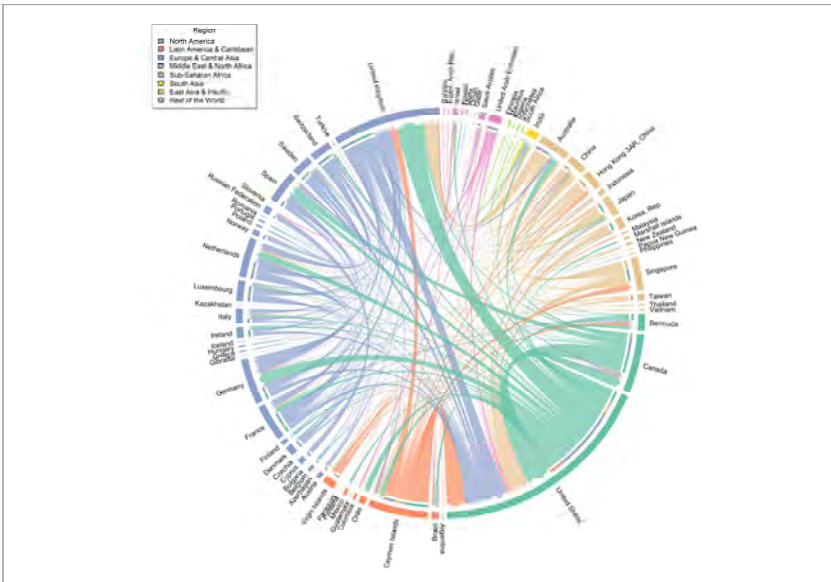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5. 글로벌 브라운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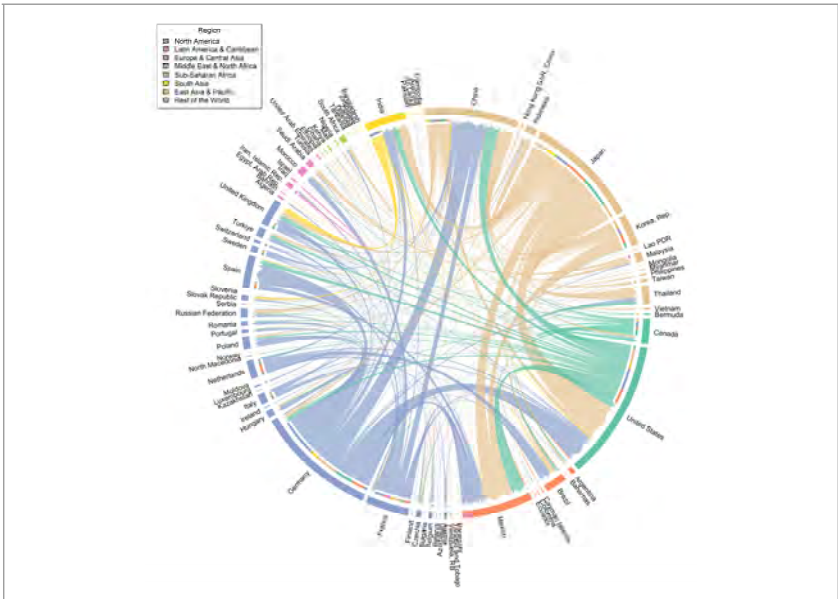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6. 글로벌 브라운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21~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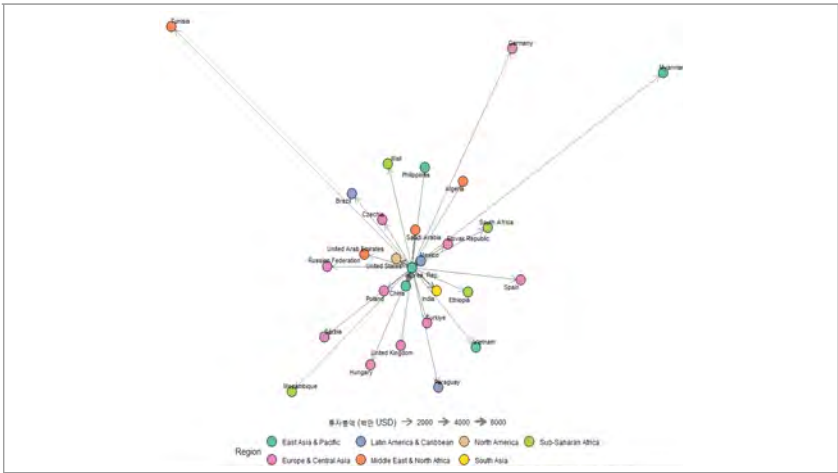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7.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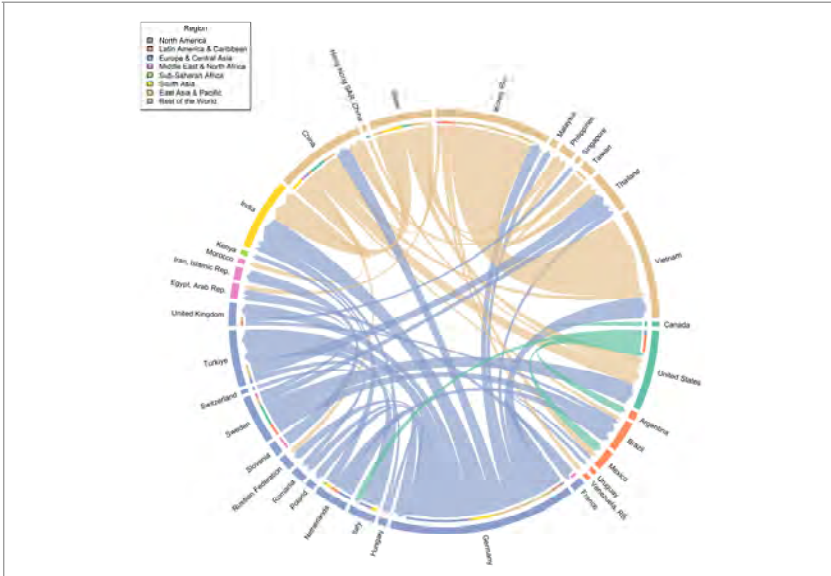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8.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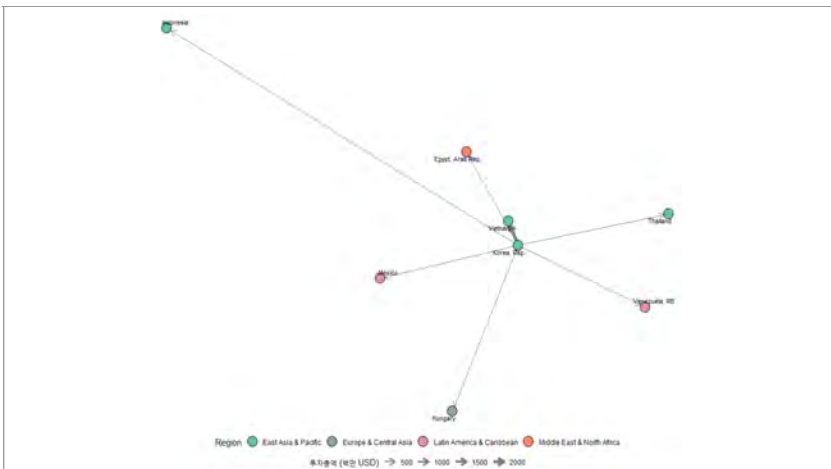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9.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가전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0.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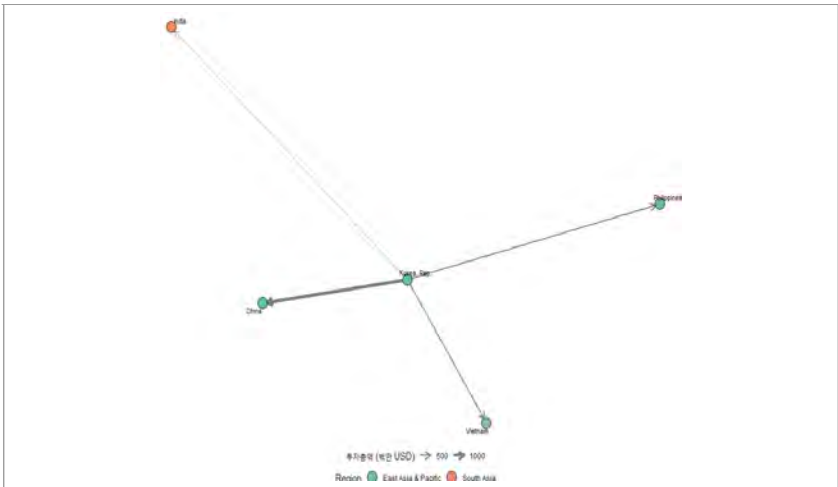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1.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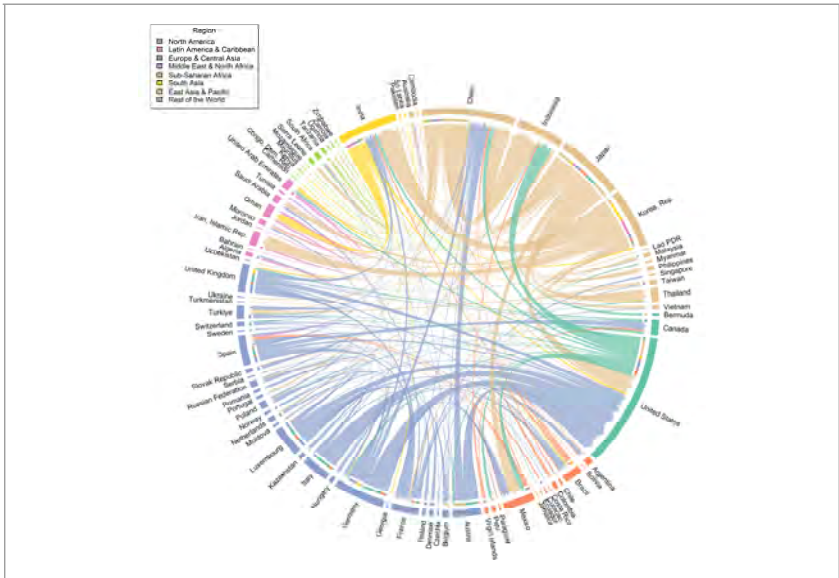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2.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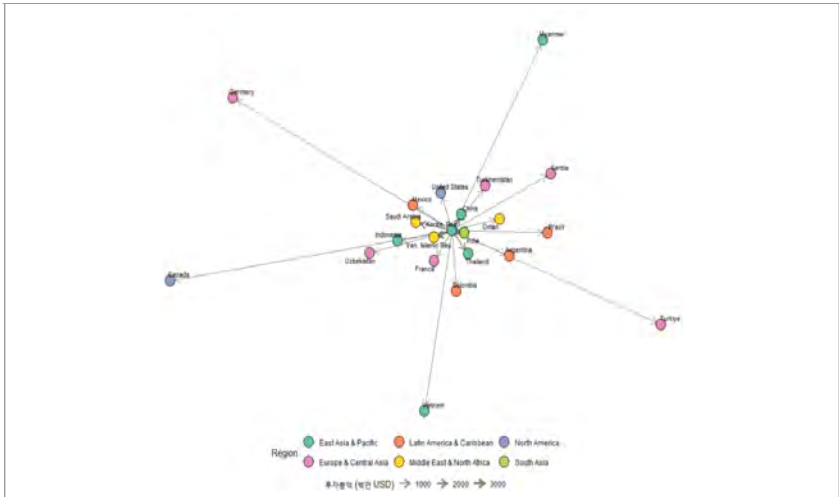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3.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철강,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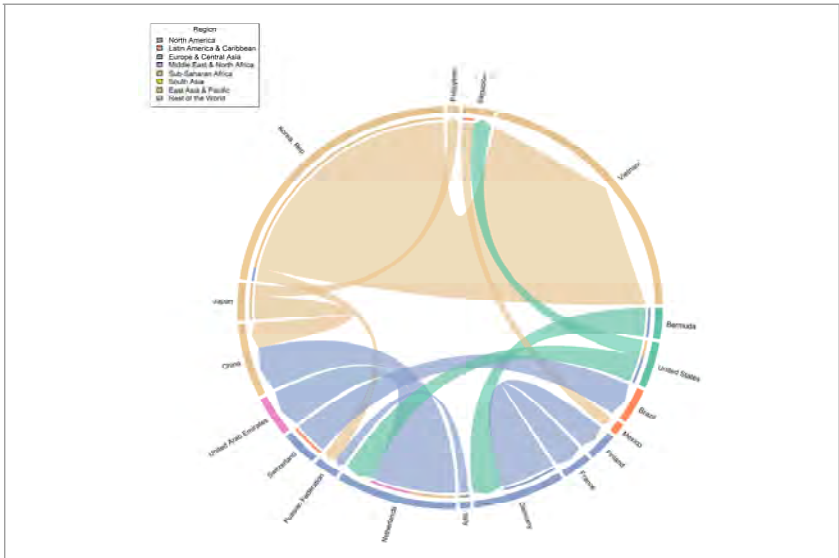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4.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철강 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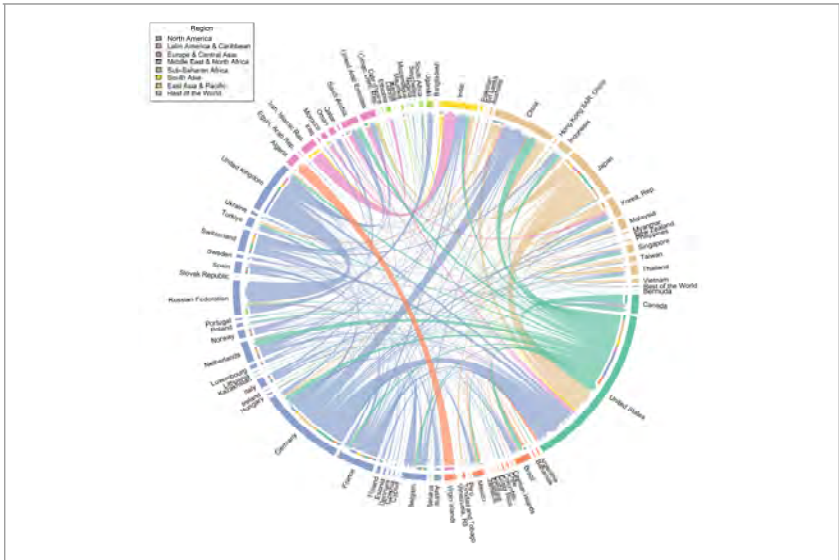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5.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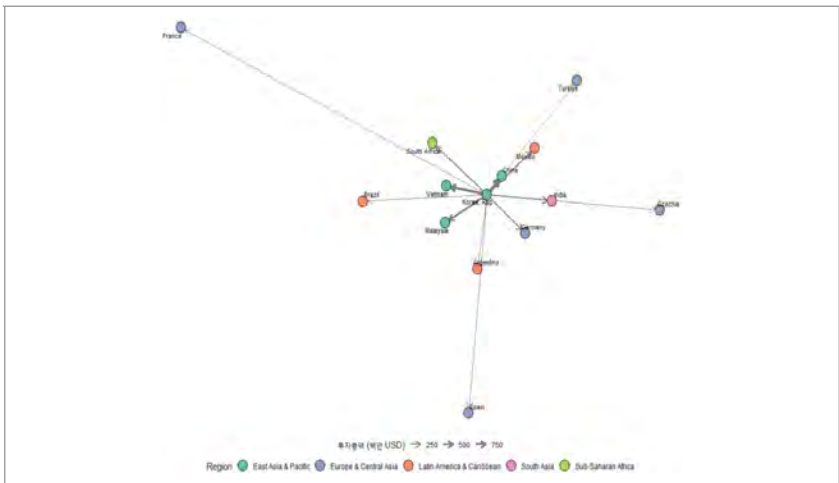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16.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석유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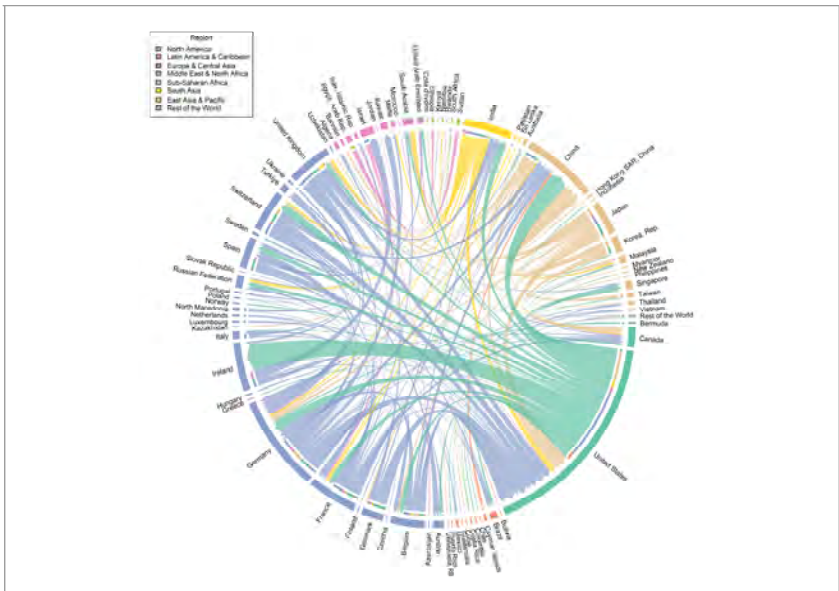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7.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석유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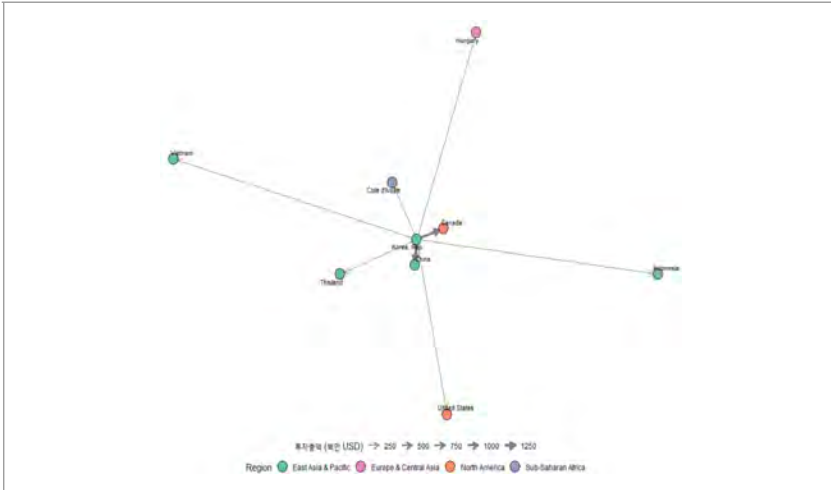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8. 글로벌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바이오 의약품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그림 19. 한국의 그린필드 해외직접투자 네트워크(2013~16년): 바이오 의약품



자료: Orbis Crossborder Investment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함.

[부록] 설문조사지(초안)

안녕하십니까? 0000000000 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련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 등 대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인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의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단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뿐 여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 기초 정보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SQ1. 귀하께서 가장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 분야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자동차
- ② 반도체
- ③ 가전제품
- ④ 디스플레이
- ⑤ 이차전지
- ⑥ 석유화학제품
- ⑦ 조선
- ⑧ 의약품
- ⑨ 철강
- ⑩ 무선통신기기

SQ2. 귀하의 현재 소속 및 역할 기준으로,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SQ1 응답> 산업의 협단체 소속 전문가 →SQ3-1로 이동
- ② [SQ1 응답> 산업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SQ3-2로 이동
- ③ [SQ1 응답> 산업의 학계 전문가 →SQ3-3로 이동
- ④ [SQ1 응답> 산업 전문 애널리스트 →SQ3-4로 이동
- ⑤ [SQ1 응답> 산업의 기업 실무자 (100인 이상 규모 기업) →SQ3-5로 이동

SQ3-1. 귀하의 [SQ2 응답> 관련 지원 또는 실무 활동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3년 미만 → 조사종료>

SQ3-2. 귀하의 [SQ2 응답> 관련 연구 또는 정책 분석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3년 미만 → 조사종료>

SQ3-3. 귀하의 [SQ2 응답> 관련 학술 연구 또는 교육 활동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3년 미만 → 조사종료>

SQ3-4. 귀하의 [SQ2 응답> 관련 시장 분석 또는 산업 리서치 활동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3년 미만 → 조사종료>

SQ3-5. 귀하의 [SQ2 응답> 관련 근무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3년 미만 → 조사종료>

B.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에 대한 의견 [OO 산업>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등장 이후 국제통상질서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심화·발전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산업통상정책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OO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공정을 다수의 국가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체계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국내 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음

B1.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격화된 미중 전략 경쟁 구도 및 자국중심주의적 국제 통상 질서 기조 하에서 우리나라 [SQ1 응답>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B2. 향후 [SQ1 응답> 산업 내 국내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축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확보
- ② 중국 의존도 완화
- ③ 생산 비용 절감
- ④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
- ⑤ 주요 자원 확보
- ⑥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외교적 갈등, 전쟁 등)
- ⑦ 선진 시장(미국 등) 접근성 강화
- ⑧ 기타(직접 입력:_____)

**B3-1.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전, 즉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가 비교적 잘 유지 되
 었던 2000~2010년대 초반이었다면 귀하의 고려 요인과 선택은 지금과 달라
 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달라졌을 것이다

→B3-2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지금과 비슷했을 것이다

→B4로 이동

**B3-2.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요하게 고려했을 요인을 1~2순위로 다시 선
 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확보
- ② 중국 의존도 완화
- ③ 생산 비용 절감
- ④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
- ⑤ 주요 자원 확보
- ⑥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외교적 갈등, 전쟁 등)
- ⑦ 선진 시장(미국 등) 접근성 강화
- ⑧ 기타(직접 입력:_____)

**B4. 미중 전략 경쟁 시대,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 [SQ1 응답> 산업이 글
 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 ② 해외 생산비 증가
- ③ 주요국의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 ④ 보조금 등 자국 우선 산업정책
- 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심사 강화
- ⑥ 미국의 고관세 정책
- ⑦ 주요국의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 ⑧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 ⑨ 기타(직접 입력:_____)

B5.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SQ1 응답> 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회 요인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미국, EU 등 주요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 및 시장 확보
- ②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 진출 촉진
- ③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국 의존성 완화
- ④ 각국 산업보조금 및 세제혜택 활용
- 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다변화 계기
- ⑥ 국내 산업 구조 재편의 계기
- ⑦ [SQ1 응답> 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 산업통상정책 고도화 계기
- ⑧ 기타(직접 입력:_____)

B6. 향후 우리나라 [SQ1 응답>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축을 위한 해외 직접투자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1~3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② 중남미 (멕시코 제외)
- ③ 아시아
- ④ 유럽
- ⑤ 중동
- ⑥ 아프리카

B7. 위에서 선택하신 각 지역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만한 국가를 최대 2개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	국가				
USMCA	1)미국	2)캐나다	3)멕시코		
중남미 (9)	4)브라질	5)아르헨티나	6)페루	7)칠레	8)콜롬비아
	9)과테말라	10)코스타리카	11)파나마	12)기타()	
아시아 (15)	10)중국	11)일본	12)대만	13)인도	14)베트남
	15)인도네시아	16)필리핀	17)말레이시아	18)태국	19)라오스
	20)미얀마	21)캄보디아	22)방글라데시	23)파키스탄	24)기타()

지역	국가				
유럽 (19)	25)영국	26)프랑스	27)독일	28)네덜란드	29)벨기에
	30)아일랜드	31)스페인	32)이탈리아	33)러시아	34)우크라이나
	35)오스트리아	36)스위스	37)폴란드	38)체코	39)헝가리
	40)벨라루스	41)루마니아	42)불가리아	43)기타()	
중동 (10)	44)사우디아라비아	45)아랍에미리트	46)이라크	47)요르단	48)쿠웨이트
	49)카타르	50)이스라엘	51)이란	52)튀르키예	53)기타()
아프리카 (19)	54)이집트	55)알제리	56)모로코	57)리비아	58)튀니지
	59)나이지리아	61)가나	62)세네갈	63)콩고	64)카메룬
	65)에티오피아	66)케냐	67)탄자니아	68)우간다	69)르완다
	70)남아프리카공화국	71)잠비아	72)말라위	73)기타()	

B8. 앞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할 만한 국가를 지역 별로 복수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하신 국가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1~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B8-1. 상기 질문에서 [B8의 1순위 응답>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를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미래 시장의 확보
- ② 중국에 대한 의존성 완화
- ③ 생산 비용 절감
- ④ 첨단 기술의 확보 및 개발
- ⑤ 주요 자원의 확보
- ⑥ 외교적 갈등,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 ⑦ 미국 등 선진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 ⑧ 기타(직접 입력:_____)

B8-2. 상기 질문에서 [B8의 2순위 응답>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를 아래 보기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글로벌 사우스 등 새로운 미래 시장의 확보
- ② 중국에 대한 의존성 완화
- ③ 생산 비용 절감
- ④ 첨단 기술의 확보 및 개발
- ⑤ 주요 자원의 확보
- ⑥ 외교적 갈등,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최소화
- ⑦ 미국 등 선진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 ⑧ 기타(직접 입력:_____)

B9.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SQ1 응답> 산업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재구축해 나가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정책 수단이 효과적일지 (예: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 해당 정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배경, 현재 문제점 등)
- 그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키워드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

끝까지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Restructuring South Korea's Global Production Networks: Policy Recommendations

Kyong Hyun Koo, Sanghun Lee, Hyoungmin Han, Sangjun Yea,
Sungwoo Hong, Nam Seok Kim, Jaewan Cheong, Hyuk-Hwang Kim,
Jaeho Lee, ChiHyun Yun, and Minchirl Chung

This study explores policy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 of South Korea's major industries in response to the escalating U.S.-China strategic rivalry and the worldwide expansion of protectionist, inward-looking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fer to cross-border production systems in which various stages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required to produce final goods are distributed across multiple countri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analyzing GPNs formed through a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y Korean companies.

This study has four main research objectives. First, it empirically analyzes how Korean companie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DI) has shaped the overseas sourcing structure of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 patterns through 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 formation, and further examines its effects on firm performance and employment (Chapter 2). Second, it examines the

trends and underlying factors driving GPN reorganization through shifts in OFDI by Korean and glob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amid the intensify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inc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Chapter 3). Third, it assess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Global South as key hubs for Korea's future GPN realignment, and proposes country-specific policy directions by analyzing their characteristics as production cooperation partners (Chapter 4). Fourth, building on these findings, it recommends industrial, trade, and ODA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GPN restructuring efforts (Chapter 5).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global supply chain (GSC) research by examining Korea's supply chains through the len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GPNs) developed through long-term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alyzing the necessity and key factors for restructuring, and identifying priority policy tasks. The specific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empirically demonstrates that GPN formation through OFDI substantially explains changes in both the overseas sourcing structure and (intermediate goods) export patterns of Korea's major industries (Chapter 2, Sections 1 and 2).

Second, using long-term firm-level panel data (2006-2023) and instrumental variables, it shows that OFDI significantly increased both firms' domestic sales and employment (Chapter 2, Section 3).

Third, by analyzing cross-border investment data from glob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documents shifts in industry-specific OFDI flows from the 2010s to the present (2024) and identifies key

characteristics of the ongoing GPN restructuring (Chapter 3, Section 2).

Fourth, through surveys of experts and business leaders across ten major industries of South Korea, it compiles assessments of GPN restructuring needs, key risks and opportunities, and policy demands, providing foundational data for analyzing the drivers of current GPN restructuring trends (Chapter 3, Section 3).

Fifth, drawing on literature reviews, statistical and econometric analyses, overseas field research, surveys, and expert consultations, it presents priority policy tasks for GPN restructuring with respect to the United States, China, and five key Global South countries (Chapter 4).

Sixth, it proposes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roadmap for Korea to effectively restructure its GPNs during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y organizing domestic policy directions into three categories: industrial policy, trade policy,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Chapter 5).

〈책임〉

구경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장

(現, E-mail: khkoo@kiep.go.kr)

저서 및 논문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3)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공저, 2024) 외

〈공동〉

이상훈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장

(現, E-Mail: s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공저, 20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공저, 2019) 외

한형민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IHEID) 국제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경제안보팀장

(現, E-mail: hmhan@kiep.go.kr)

저서 및 논문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공저, 2024)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공저, 2024) 외

예상준

연세대학교 수학, 경제학 학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現, E-mail: sjyea@kiep.go.kr)

저서 및 논문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4)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공저, 2024) 외

홍성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University at Buffalo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現, E-mail: swh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공저, 2024)
『일본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와 시사점』(공저, 2025) 외

김남석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Syracus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現, E-mail: ns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2024)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공저, 2024) 외

정재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EAS) 객원연구원
(前)ASEAN-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인도네시아) 객원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jwch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공저, 2023)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23) 외

김혁황

숭실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hh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공저, 2024)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공저, 2024) 외

이재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 박사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jh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남아 주요 5개국의 통상전략과 경제성장 경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의 평가와 전망』(공저, 2024)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공저, 2024) 외

윤지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chyun@kiep.go.kr)

저서 및 논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공저, 2021)

『인도의 인프라 정책 및 수요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공저, 2024) 외

정민철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mcch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공저, 2024)

『공급망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방법론 연구: 핵심광물에 대한 적용』
(공저, 2025)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5년

- 25-01 무형자산 기술확산의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
윤정은 · 송하윤 · 이병준
- 25-02 트럼프 2기 대만 정책과 동아시아 경제 · 산업에 대한 영향 /
김선진 · 이홍배 · 서창배 · 이혁구
- 25-03 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 /
박정호 · 강부균 · 정동연 · 김경민 · 김석환 · 염동호
- 25-04 인도 첨단전략산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
김경훈 · 한형민 · 강반다 · 김민희 · 남유진 · 박병열
- 25-05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연구 /
강문수 · 최인아 · 문지영 · 박미숙 · 유광호 · 이지은 · 이다운
- 25-06 북합위기 이후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연구 /
최장호 · 김다울 · 최유정 · 김범환
- 25-07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 /
최원석 · 오수현 · 조성훈 · 홍진희 · 박보영
- 25-08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
강구상 · 김혁중 · 김종혁 · 권혁주 · 박은빈
- 25-09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한국의 협력 방안 /
오지영 · 노윤재 · 박지현 · 송지혜 · 김민희 · 장한별
- 25-10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윤상하 · 김효상 · 연지흠 · 윤정은 · 송예나 · 이지윤 · 최상엽 · 허진욱
- 25-11 글로벌 고부채 동향 및 거시경제적 함의 /
최홍석 · 박지원 · 송하윤 · 이병준 · 신평비
- 25-12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전망과 성장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
문지영 · 송하윤 · 김홍원 · 최지원 · 조고운
- 25-1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구조 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김규판 · 김혁중 · 이형근 · 이보람
- 25-14 공급망 재편 시대 뱅골만 산업 클러스터 분석과 활용전략 /
김경훈 · 신민금 · 김도연 · 윤지현 · 김소은 · 지연정

- 25-15 주요국의 신흥제조기지 진출 현황과 시사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 한선이 · 신민금 · 김예진 · 김소은 · 황인정
- 25-16 지속가능한 중장기 개발재원 규모 확대 방안 연구 / 정지원 · 윤정환 · 정원혁 · 윤혜민 · 박소정
- 25-17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영욱 · 라미령 · 노윤재 · 김윤정 · 이영준 · 강준구 · 이현진 · 김제국 · 이정은 · 이종관 · 이승호
- 25-18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와 통상 정책방향 연구 / 김종덕 · 강구상 · 최원석 · 이현진 · 엄준현 · 박보영
- 25-19 중국의 해외 생산 · 공급 거점 다변화와 한중 경쟁력 분석 / 정지현 · 정재완 · 이철원 · 나수엽 · 김진오 · 김혁황 · 이효진 · 최재희
- 25-20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조문희 · 이규엽 · 김현수 · 금혜윤 · 강민지 · 정민철
- 25-21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 이은석 · 오지영 · 정지선 · 이예림 · 김유리
- 25-22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과 정책 시사점: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 박정호 · 강부균 · 정동연 · 민지영 · 김경민 · 강태호 · 제성훈
- 25-23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및 시사점 / 정지현 · 이효진 · 이한나 · 김영선
- 25-24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구경현, 이상훈, 한형민, 예상준, 홍성우, 김남석, 정재완, 김혁황, 이재호, 윤지현, 정민철
- 25-25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 정형곤, 김부용, 김용석, 윤여준

■ 2024년

- 24-01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 장영욱 · 이철원 · 강부균 · 김초롱
- 24-02 인도의 국영기업 주도 경제개발전략과 한국-인도 협력 방안 / 김경훈 · 김도연 · 김소은 · 남유진 · 백종훈
- 24-03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강문수 · 유광호 · 이지은 · 김영선 · 이다운
- 24-04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 문진영 · 나승권 · 김은미 · 장한별

- 24-05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
윤상하 · 김성환 · 최홍석 · 송예나 · 백인걸 · 오준석
- 24-06 자국 중심의 경제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방안 연구 /
조성훈 · 한형민 · 최원석 · 홍진희 · 윤형준 · 최재희 · 김현정
- 24-07 무형자산 투자와 경제성장: 글로벌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윤상하 · 윤정은 · 조성훈 · 이지윤 · 백예인 · 손녕선
- 24-08 일방주의적 공급망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과제와 정책 시사점 /
이천기 · 박혜리 · 오테현 · 이주형
- 24-09 일본의 핵심광물자원 확보전략과 한·일 협력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김승현 · 손원주
- 24-10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 과제 /
홍성우 · 김성환 · 김진오 · 강준구 · 박미숙 · 박진희 · 김승현
- 24-11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허재철 · 정지현 · 김효상 · 김홍원 · 이한나 · 최지원 · 최재희
- 24-1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 장영욱 · 한형민 · 오테현 · 윤형준
- 24-13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연구: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석 · 주재우 · 신민이 · 김제국
- 24-14 ODA 평가의 활용 현황과 유용성 제고 방안 연구 /
이은석 · 오지영 · 정지선 · 유애라 · 이예림
- 24-15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파급효과와 경기안정화 정책 분석 /
최홍석 · 송새랑 · 한원태 · 김준형 · 이용대
- 24-16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과 시사점 /
문지영 · 나수엽 · 박민숙 · 오종혁 · 김홍원 · 문익준
- 24-17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강준구 · 금혜윤 · 심경보
- 24-18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 분석 /
정형곤 · 김혁중 · 김정현 · 최진백
- 24-19 아세안의 대외협력 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에 대한 함의 /
최인아 · 김경훈 · 배기현 · 이재호 · 김소은
- 24-20 북미 3개국 주요 산업별 공급망 연계 강화 정책과 시사점 /
김혁중 · 강구상 · 홍성우 · 김종혁 · 민보람 · 김용기

- 24-2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전망과
한-중앙아 협력 시사점 / 정민현 · 김경민 · 김혁황 · 정동연 · 김원기
- 24-22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
최장호 · 김다울 · 이정균 · 이희선
- 24-23 전략적 투자보조금 정책이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예상준 · 김혁황 · 엄준현 · 신은철 · 이진혁
- 24-2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사점 /
노윤재 · 김경훈 · 김민희 · 남유진 · 박지원
- 24-25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
한선이 · 조성훈 · 김예진 · 김주혜 · 서상현
- 24-26 북한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
윤정환 · 장영옥 · 오지영 · 김윤정 · 윤혜민 · 박소정
- 24-27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연지흠 · 정민철 · 류기락
- 24-28 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
이승신 · 최원석 · 나수엽 · 김영선 · 서봉교
- 24-29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연구 /
이주관 · 조문희 · 박지현 · 박혜리 · 김민성
- 24-30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
예상준 · 정원혁 · 오종혁 · 엄준현 · 이대은 · 연원호
- 24-31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비전 2050 /
허재철 · 정성춘 · 김규판 · 오수현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김승현 · 손열 · 전재성 · 한준 · 이정환 · 임은정 · 백서인 · 박지수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estructuring South Korea's Global Production Networks: Policy Recommendations

Kyong Hyun Koo, Sanghun Lee, Hyoungmin Han, Sangjun Yea,
Sungwoo Hong, Nam Seok Kim, Jaewan Cheong, Hyuk-Hwang Kim,
Jaeho Lee, ChiHyun Yun, and Minchirl Chung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 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미중 전략 경쟁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